

2008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0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권)

권 택 기 의원	1
김 동 철 의원	253
김 영 선 의원	323
김 용 태 의원	511
박 상 돈 의원	523
박 선 숙 의원	567
박 종 희 의원	625
신 학 용 의원	695

(Ⅱ 권)

이 사 철 의원	1
이 석 현 의원	163
이 성 남 의원	189
이 성 현 의원	229
이 정 희 의원	285
이 진 복 의원	315
이 한 구 의원	449
이 한 정 의원	589

(Ⅲ 권)

조 경 태 의원	1
조 문 환 의원	399
조 윤 선 의원	579
허 태 열 의원	721
현 경 병 의원	799
홍 재 형 의원	889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조경태 의원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 요구서	3
	2. 최근 3년간 본부감사 결과 보고서	6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6
	4.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6
	5.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
	6.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6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6
	8.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8
	9. 최근 3년간 소송 패소 현황	9
	10. 최근 3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10
	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1억원이상)	11
	12. 최근 3년간 기관소유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내역	12
	13. 금융위원회 과장급 이상 최근 3년간 전결 문서 목록	13
	1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4
	15. 최근 3년간 외부 용역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1억원이상)	17
	16. 최근 3년간 추진사업 관련 사업시행합의서 일체	18
	17. 최근 3년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내역 (MOU포함)	18
	18. 최근 3년간 각 기관 추진 사업별 내부시행지침서	
	19. 05년 이후 해외사업 진출(계획) 현황	18
	- 해외 기술이전 및 지원사업, 해외 진출 개발사업, R&D협약 관련 포함	1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조경태 의원	20. 예산 낭비 신고 내역	18
	21. 최근 3년간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19
	22. 각 기관별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201
	23. 각 기관 산하 연구기관 관련	203
	- 현황자료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현황 및 투입 예산	
	- 연구사업 실용화 현황	
	24.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204
	25. 최근 5년간 임원 개별연봉/ 급수별 평균연봉, 최저, 최고 연봉(산하기관)	224
	2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230
	27. 컨퍼런스 콜을 통한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 점검 결과(08년)	334
	28.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제금융국의 금융위 이관에 대한 금융위 입장	335
	29. 금융허브정책 추진 현황	336
	3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구성원 이력	383
	3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차별 회의내용 및 참석자	384
	32. 금융중심지 평가단 구성원 및 구성원 이력	387
	33. 금융중심지 평가단 내부평가지침	387
	3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인원	388
	35. 외부전문가 충원 현황(3년간)	390
	36. 감독서비스 수준에 대한 외부 평가 실시 결과	391
	37. 외부평가 실시 기관 또는 인원 현황(이력 포함)	392
	38. 지난 3년간 금융위 출신의 금융기관 재취업현황	393
	3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 중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체결 보험 계약의 상품 내용	394
	40.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	395
	41.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396
	42. 리먼 인수에 대한 산업은행과의 논의 여부 및 관련서류 일체	397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조문환 의원	1.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401
	2. 2008년 인건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402
	3.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404
	4-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423
	4-2.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423
	4-3. 위 자료가 없을 경우 질의 응답서, 사실 확인서	423
	4-4. 감사원을 제외한 상급기관 감사결과 자료사본	423
	5-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26
	5-2. 최근 5년간 산하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	426
	5-3. 최근 5년간 산하 단체(기관)나 산하 단체장(기관장)에 대한 경고, 주의 현황	426
	6. 최근 3년간 기관, 기관장의 상벌자료	428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이 경고·주의 받은 내역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의 수상 내역	
	7. 2008년 각종 민원 처리사항	429
	8.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과 금융위원회 규정집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30
	9.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 고유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정보화 관련 수준 평가, 설문조사, 모니터링 자료	454
	10. 최근 5년간 소송에 관한 사항	455
	11. 최근 3년간 과장급(4급)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현황	458
	12. 최근 5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459
	- 각 위원회 별 위원명단 : 성명/성별/현 직책/주요 경력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율), 서면회의 개최횟수, 각 위원회별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소요예산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조문환 의원	13. ‘9월 금융위기설’ 관련 ① 일자별 대책회의 현황 및 ② 위원장의 일자별 각종회의 참석 주요 발언 내용 및 언론 등에 발언내용	461
	14. 2008.3 퀵-히트 과제 사본 및 추진현황	462
	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467
	15-1) 선진국의 사례 및 장단점	467
	15-2) 인터넷 사고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468
	15-3) 도입 세부 계획	469
	16. 소액서민금융재단 사업 계획(6개 복지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등)	470
	17. 채무자에 대한 악성추심행위 근절 대책	480
	18.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관련(보증도입, 펀드신용평 가제도, 4대부문 18개 과제 등 세부추진 계획)	481
	19.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관련	503
	- 지역선정 추진 계획 및 부처 및 지자체 협의내용	
	- 현 수도권 금융중심지와의 문제점	
	20. 금융사 등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① 도입 배경 및 반대의견, ② 국책은행 및 공사에 대 한 제도 시행의 견해	505
	21. 새로운 금융상품(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에 대한 시장전망 및 관리대책	506
	22. 금산분리 완화 관련 선진국의 사례	519
	23-1. 생보사 상장위원회 위원 명세	522
	23-2. 위원회의 생보사 상장에 관한 보고서	523
	23-3. 최근 생보사 안건 회의 경과	532
	23-4. 상장 가능한 생보사별 현황	535
	23-5. 생보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주요 논점별 정리	536
	24. ‘08년 공매도 거래내역 (내국인, 외국인 거래대금 상위 5위까지 거래자 명단 및 금액)	572
	24-1. 공매도 제도 보완 경과	57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조운선 의원	1.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인력 개편 현황, 계획	581
	2. 금융위 출신 금융회사 이직 현황	591
	3. 금산분리(은행주식 보유규제 개선) 관련 액션플랜	592
	4. '신성장 금융산업 섬기는 금융행정' 보고서 사본	593
	5.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실태, 민원처리 사례	594
	6. 최근 3개월 시장점검회의 회의록 사본 일체	595
	7. 이슬람금융 작업반 현황 및 활동 계획	596
	8. 금융위 홈페이지 '신용회복제도 안내' 오류 관련 해명, 후속 대책	597
	9. 최근 3년간 자산취득 현황	598
	10. AML체계 도입 준비상황, 모니터링 자료, 인력충원계획	599
	11.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보고서 일체	606
허태열 의원	1.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시 신용조회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723
	2. 손해보험 중복가입 방지대책	724
	3.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이행조치 관련	725
	4. 최근 3년간 금융위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726
	5. 4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현황 및 인적사항	727
	6. 모기지 보험 관련 현황, 운용방안 및 향후 계획	728
	7. 공직자 재취업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재취업 현황	730
	8. 9. 10.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등	732
	12.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일지, 추진 경과, 향후 추진 일정	735
	13.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접수한 의견 및 건의내용, 조치사항	737
	14. 최근 3년간 타 기관 및 업체파견자 현황	749
	15. 최근 3년간 타기관, 타 업체로부터 금융위에 파견 근무자 현황 및 법적 근거	751
	16.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 관련 금감위, 금감원의 그간 경과 및 논의내용. 재정부	764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허태열 의원	및 기타 기관과 협의진행 및 협의내용(업무협조 등 관련 문서 사본), 향후 계획	
	17. 최근 3년간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및 잠익처리 현황	765
	18. 각 시도별 대부업자 관리 현황(관리부서, 직급, 인원 등)	768
	19.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769
	20.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현황	773
	21. 서민금융활성화 T/F조직 구성 내역	775
	22.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776
	23.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요구 강압적인 추심 등 불법 행위 만연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	777
	24.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778
	25. 07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779
	26. '07년-08년 8월말 현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 ○ 사건명, 사건내용, 승패소(일부 승·패소 구분), 담당 법무 법인명 및 변호사명, 소송비용 명기요망	782
	27. '08.8월말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 현황 (사건명, 사건내용, 담당법무법인명 및 변호사명, 진행내역)	785
	28.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관련예산, 주요활동내역, 위원 인적사항)	788
	29. 07년~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내역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790
	30.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내부규정	793
	31. 05년 ~ 08년 8월말 현재, 임직원 훈포상 내역 (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훈포상규정	794

조 경 태 의 원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 요구서

☐ 첨부 참조

□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 내역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처분요구 내용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펀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 최근 3년간 본부감사 결과 보고서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5.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 관계 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 해당사항 없음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 2008년 자체감사 계획

<붙임>

2008 자체감사 실시계획

1. 목적

- ☐ 청사 이전비용 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 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2. 감사방법

- ☐ 일부 부서의 업무를 선정하여 표본감사로 실시
- ☐ 수감부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류점검 위주로 실시

3.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08.6.23(월)~6.27(금) (5일간)
-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 ☐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관실 전원 (과장1, 5급3, 6급2명)
- ☐ 점검 대상
 -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 ◆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 ◆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등

**8.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
종 모니터링 자료**

-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위원회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보고서, 금융
감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책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별첨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도 제출

9. 최근 3년간 소송 패소 현황

□ 최근 3년간 소송 패소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종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 결과	법무법인 (소송비용)
2006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플러스저축은행 외 1명이 경영개선명령처분은 부당(2005구합13247)	1심: 패 2심: 패 (종결)	한빛 (900만원) 세종 (1,000만원)
2007	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김OO가 외감법 위반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제한(1년) 부당함을 주장(2003구합3529)	1심: 패 2심: 패 3심: 패	화우 (2,000만원)
200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기술이전계약 허위 공시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에이디칩스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2003구합20098)	1심: 승 2심: 패 3심: 패	태평양 (3,400만원)
2007	경영관리개시 처분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플러스저축은행 외 1명이 동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처분이 부당함을 주장(2005구합24018) ※ 영업정지 처분만 금융위 승소	1심: 패 (일부) 2심: 패 3심: 패	세종 (600만원)
2008	손해배상(기)	강OO 외 7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배상(2006가합95350)	1심: 승 2심: 패 (일부) 3심: 패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0. 최근 3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 금융위원회의 최근3년간(05년 ~ 08년 8월말 현재) 손비처리현황은 없고 불납결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2005년	—	—	
2006년	—	—	
2007년	10	177	과징금 소멸시효 완성
2008년 현재	—	—	

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1억원이상)

☐ 2006연도, 2008연도 : 해당 없음

☐ 2007연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71	7.31~12. 3	(주)신세계아이엔씨	경쟁입찰

**12. 최근 3년간 기관소유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내역**

☐ 소유 건축물 없음

13. 금융위원회 과장급 이상 최근 3년간 전결 문서 목록

☐ 별도 제출

1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2006연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서민금융활성화방안	25	-	5.30~8.29	한국금융연구원	수의
성과관리시스템 확대개편	26	-	5.30~7.14	(주)다산이앤이	수의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위한 발전방안	20	-	9. 8~12.15	보험개발원	수의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	28	12.11~2.28	한국금융연구원	수의
홈페이지개편	30	-	8.21~10.22	(주)사이버 이미지네이션	수의
홈페이지 메뉴신설 및 디자인변경	2	-	5.18~5.31	(주)사이버 이미지네이션	수의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지식관리시스템구축)	69	-	7. 2~10. 2	(주)핸디소프트	경쟁입찰
정보화기본계획(ISP)수립	25	-	11.10~12.20	(주)넥스젠 테크놀러지	수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간 연계용역	17	-	12. 1~12.30	(주)이넥션	수의
합계	214	28	-	-	-

□ 200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금감위 홈페이지 개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30	8.1~9.30	(주)코리즌	수의
정책홍보 관련 KTV 방송프로그램 제작 용역	15	12.7~12.20	한국정책방송	수의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22	7.24~10. 8	한국증권연구원	수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19	2. 6~12. 6	한국개발연구원	수의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21	9. 7~12.2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15	10.19~12.20	한국증권연구원	수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71	7.31~12. 3	(주)신세계아이엔씨	경쟁입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53	10.22~12.20	삼성에스디에스(주)	경쟁입찰
합 계	346			

□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집행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30	7. 4~10. 3	한국금융연구원	수의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40	7.21~12.2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용역 계약	9	8. 1~8.15	(주)코리즌	수의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40	8. 1~12.24	법무법인(유) 태평양	수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감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37	8.13~12.12	언스트앤영어브 바이저리(주)	수의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22	9. 2~11.2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쟁입찰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46	8. 6~11. 4	(사)국제금융센터	경쟁입찰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0	7.28~10.26	한국금융연구원	경쟁입찰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19	7.11~8.29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경쟁입찰
합계	273			

15. 최근 3년간 외부 용역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 (1억원이상)

☐ 2006연도, 2008연도 : 해당 없음

☐ 2007연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71	7.31~12. 3	(주)신세계아이엔씨	경쟁입찰

- | |
|----------------------------------------------------------------------------------------------------------------------------------------------------------------------------------------------------------------------------------------------------------------------------------------|
| <p>16. 최근 3년간 추진사업 관련 사업시행합의서 일체</p> <p>17. 최근 3년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내역
(MOU포함)</p> <p>18. 최근 3년간 각 기관 추진 사업별 내부시행지침서</p> <p>19. 05년 이후 해외사업 진출(계획)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기술이전 및 지원사업, 해외 진출 개발사업,
R&D협약 관련 포함 <p>20. 예산 낭비 신고 내역</p> |
|----------------------------------------------------------------------------------------------------------------------------------------------------------------------------------------------------------------------------------------------------------------------------------------|

☐ 위 요구 자료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1. 최근 3년간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위원회 혁신관리 실적보고서를 별첨(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05년 혁신관리 실적보고서

2005. 10. 21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I . 혁신역량

1. 혁신리더십
2. 학습과 역량

II . 혁신과제

1. 고유과제
2. 공통과제
3. 기본과제

I . 혁신역량

1. 혁신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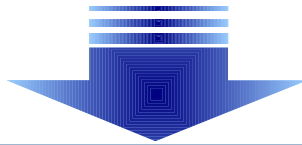
《요약 : 감독기구 비전·혁신 목표 및 전략맵》

금융환경의 변화 진단

- 금융의 국제화 및 규제완화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디지털화 및 금융의 정보화
- 대형화 및 겸업화

감독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리스크 중심의 감독 (Risk Based Supervision, RBS)
- 동북아 허브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과 감독서비스 체계 개편
- 묵은 제도와 감독기구 전직원의 업무방식, 의식과 관행의 변화
- 조직구성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비전 :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 최고의 금융서비스,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

감독기구 미션의 달성

-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교육 강화

Soft Issues

-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감독행정서비스
- 기관장의 혁신리더쉽 및 혁신문화
- 혁신동기부여를 통한 성과관리

혁신목표

- ◆ 「전문성·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독기구」
- 혁신참여형 조직문화 및 성과관리 시스템
 -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시스템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감독행정

Hard Factor

- 로드맵 및 과제관리
- 혁신추진체계의 재정립 등 역량 제고
- 전략적 혁신노력과 감독조직개편

평가분야	기관 비전 · 미션 · 혁신전략의 타당성
평가지표	○ 비전 · 미션의 타당성 ○ 혁신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1. 비전 · 미션의 타당성

05년도 금융감독의 환경변화와 감독행정 패러다임

- **국제화 및 규제완화** :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의 증가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의 규범화 및 시장참가자들의 위험노출 증가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증권화** : 제조업 지원 →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접 금융의 역할 확대
 - *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의 도약 지향 : 금융산업이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 **디지털화 및 금융의 정보화** :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확대로 효율성제고와 동시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고객과의 접촉 확대
- **대형화 및 겸업화**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금융산업내의 경쟁구도 변화 및 신종금융상품 · 금융서비스의 도입



감독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 역동적 금융환경 변화는 감독기구에게 과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출 것을 요구
 - *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은 변화하고 있는 데, 감독기구가 시장의 변화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으로부터의 외면과 본연의 감독 업무 미완수
 - ⇒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금융환경변화 흐름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인 선진 금융감독서비스 제공
- ◆ 금융불안정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 위험의 확산이전에 불안요인을 제거하도록 금융감독시스템을 개선
 - ⇒ 리스크 중심의 감독(RBS : Risk Based Supervision)을 통해 금융회사가 유발하는 리스크 중 과도한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치하여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에 감독에 초점을 두는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

◆ 그러나, 우리 금융회사들은 아직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서의 위상은 불충분

* '03.12월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 Global Network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과 감독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등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

◆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감독제도와 감독행정서비스 정착은 단순히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묵은 제도와 감독기구 전직원의 업무방식 변화, 나아가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의해 결정

⇒ 새로 도입된 제도가 외형적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구성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청



비 전

◆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최고의 금융서비스,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



- 감독기구는 금융회사 및 시장참여자가 경쟁촉진의 틀내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
- 금융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적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선정배경)

- 금감위·금감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전을 공모, 비전선포식을 통해 전직원의 **기관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역량을 결집(04.7.23)**
- **고객만족도 서베이**(삼성경제연구소), **검사모니터링**(232개 금융회사 본·지점) 등 외부 의견수렴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 '**신뢰성제고**'였다는 점
- 국정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동북아금융허브시장육성 정책**과 국정원리 중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등에 가장 부합되고,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상**의 임무가 가장 축약되어 상징화 될 수 있다는 점 고려

금융감독비전·미션 달성도

- 감독기구 전직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토대로 비전과 기관미션을 달성하고 성과측정

추구하는 가치	미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성과지표사례 (성과의 계량화 및 상시점검)
전문성 (Profession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에 대한 예측·분석능력 등 고도의 업무역량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자기자본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10%이상 - 저축은행 5%이상 ■ 영업용순자본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400%이상 ■ 영업용순자본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210%이상 - 손보 280%이상
책임성 (Accoun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결과에 대한 책임과 도덕성에 기초한 직업윤리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율 (처리건수/대상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1%이상 ■ 시세조종 등 중대범죄 처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3년 평균치 57.0%이상 ■ 보험사기 적발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114건)대비 5%이상 증가 ■ 공시위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6%이하
고객존중 (Resp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금융거래자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부여 및 권익보호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 시장참여자와의 의사소통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별 현장 금융교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도(실적/계획) 100% (계획은 과거 3년 평균치 수준인 100회로 설정) ■ 국무조정실 민원인 만족도 자체 민원인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15% 향상

2. 혁신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혁신목표의 탐색과 설정

◆ 비전·미션 달성 장애요인 진단과 반성

- 감독기구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감독기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권위적·경직적)이 잔존 → “신뢰받는 금융감독” 비전과 미션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옴
- 기다리고 지시하는 감독 → 찾아가서 해결하는 감독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의 정착은 미흡
- 04년 혁신관리업무 평가결과, 단순업무혁신 단계(3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마인드 형성 단계(2단계)”라는 진단
 - * 전직원이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혁신추진체계 구축과 혁신성고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노력이 미진

05년도 혁신목표의 설정

「권위적·경직적」 감독기구 ⇨ 「전문성·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독기구」로 전환

* 04년:혁신기반 구축기 → 05년:혁신이 내재화되는 도약기 → 06년: 변화관리와 성장기

<세부혁신목표>

◆ 혁신저변 확대를 위한 의식변화와 조직문화의 형성

- 전조직구성원이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혁신성과관리 시스템 가동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혁신수준 도약을 위한 중점혁신분야의 설정·관리

- ① 전문성을 갖춘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시스템 정립
- ② 업무방식개선과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③ 금융시장 참여자 및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감독행정 구현

⇒ 감독행정의 품질제고, 금융감독 신뢰성 확보 및 동북아허브 추진 인프라구축

혁신 로드맵

- ◆ 변화와 혁신이 내재화되도록 장단기 혁신과제의 균형 있는 배치(Positioning)와 혁신주도그룹에 대한 획기적 보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05.2, 05.4)

혁신추진체계 재정립과 혁신성과관리

- 과별 혁신리더(과장) 및 변화요원(CA: Change Agent)지정, 금감위·금감원간 합동추진체계 구성 등 혁신추진체계 구축 → 일관된 업무혁신 및 금융수요자와 금융회사의 편익 제고 → 고객만족도 제고와 연결되도록 H/W, S/W개혁
- 업무혁신추진과 정책성과가 연계되고, 부서별·개인별 업무혁신 및 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전조직구성원에 혁신 내재화



단기과제의 달성 : 고유과제 및 공통과제

- 감독행태개선, 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 인사혁신 및 성과관리 등 3개 **고유혁신과제**와 정보의제관리, 규제개혁, 민원제도개선 등 3개 **공통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집행
- 부조리 유발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개선 등 17개 **기본과제** 추진

중·장기과제 :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

- 금융회사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 → 감독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감독서비스 제공
- 전담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 제도 →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 검사품질관리시스템 도입 → 검사의 질적 수준 향상
- 정책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Consultation Paper**제도 활성화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금융회사 등에 **자문서비스** 제공 강화 → 리스크 관리, 법규, 회계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요구에 대응

전직원의 혁신참여에 기반한 혁신학습

- 업무혁신학습 T/F 구성·학습동아리, 직무교육 및 E-learning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문제해결형 혁신학습을 촉진하고, 외부위탁교육(현대인재개발원) 및 자체워크숍 활성화

05년도 혁신전략맵

- 그간의 미흡했던 감독기구 혁신수준을 감안, 혁신인프라 구축과 고객중심의 혁신 과제 추진을 병행



05년도 비전·미션달성도 및 혁신수준관리 총괄지표

성과지표 1 : 정책과제 및 혁신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 ☐ 4대 정책목표에 대한 14개 이행과제별 계량·비계량 성과지표 및 고유·공통혁신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 BIS자기자본비율, 선제대응조치율, 구조조정달성율 등 정책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성과지표 2 : 감독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수준

- ☐ 감독기구의 주요정책 만족도 및 민원만족도 목표수준을 각각 (04년) 49.1점, 57.6점 → (05년) 56.7점, 64점으로 설정

* 정책과제 및 민원서비스에 대해 외부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자체만족도 조사 시행중

성과지표 3 :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수준

- ☐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절차의 명료성, 접대·금품요구 등 도덕성 등에 대해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목표수준을 70점 이상으로 설정

성과지표 4 : 행정자치부 혁신진단수준

- ☐ 감독기구의 혁신관리수준을 변화와 혁신노력이 조직전체로 확산되는 4단계 수준으로 향상 (04년 2단계)

* 1단계 : 혁신미착수, 2단계 : 마인드 변화, 3단계 : 단순업무혁신, 4단계 : 변화노력 조직내 확산, 5단계 : 혁신문화 정착시작, 6단계 : 혁신문화정착

성과지표 5 : 세계적 금융시장 구현도 수준

- ☐ 성과지표 : 동북아 금융허브 핵심과제인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수준

* 간접투자수탁고 규모(주요지표) 및 전체수탁고중 주식형 펀드비중 (보조지표)

평가분야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미션 및 혁신목표와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 시키려는 의지 ○ 비전·미션 및 전략의 달성 노력도 ○ 기관장의 혁신적인 행동과 능력

1. 비전·미션 및 혁신목표와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 시키려는 의지

변화촉진형(Facilitator)·학습형 리더십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감독정책여건에 따라 감독기구 전직원에게 새로운 시각과 문제해결 방식을 주문하되, 자유로운 토론(brainstorming)과 의사소통 환경조성 ■ Global standard에 맞는 감독기준 등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감독기구 직원의 창의성 발현을 유도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 <p>* 기관장의 혁신학습 :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 변화관리, 체인지몬스터, 블루오션 등 민간 기업의 혁신성공사례와 혁신저항관리에 대해 선도적으로 학습하고 직원들과 공유</p>



혁신내재화를 위한 기관장의 접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태(As it is)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문제점의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 전직원의 참여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혁신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무엇이 걸림돌이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05.2 혁신워크숍) ■ 금융환경과 감독기구 혁신수준에 부합하는 혁신과제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가능하면서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감독행태개선 등 3개 고유과제와 규제개혁, 정보의체관리 등 3개 선도공통과제를 금년도 감독기구가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설정 ⇒ <u>현재 시급한 문제에 대응</u> (05.2~3) - 검사품질관리시스템 구축, Consultation Paper제도, 경영컨설팅 제도 등 탐색형 개선과제를 별도로 제시 ⇒ <u>잠재적 감독서비스 수요에 대응</u> (05.4) ■ 감독프로세스·고객서비스 운영의 표준화 및 유지관리 체계화 등 매뉴얼화를 통한 혁신관리의 안착 (고객접점 관리체계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이용자서비스헌장,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RM업무가이드라인, 민원사무처리세칙 등을 제정·운용함으로써 고객 제공서비스를 표준화 ■ 기관장과 간부진의 솔선수범(Commitment)과 금감위·금감원 협력체계에 기반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간부회의시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원고객 상담실시 등 간부진이 직접 혁신실행에 참여 (계속) - 혁신목표와 현상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금감위·금감원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혁신실천(05.1) ■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프로그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민원대표전화 1332 운영 및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급학교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p>* 보험사기 관련정보를 종합분석 사기혐의자를 자동추출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개발, 금융허브추진과제로서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p>



비전·미션 및 혁신목표에 대한 이해도	비전·미션 및 혁신목표에 대한 공유 노력도
<p><input type="checkbox"/> 감독기구 혁신주도그룹에 대한 철저한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행정의 근본적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에 기여도가 큰 부서와 개인에 보상이 뒤따름 (2005.5월 감독기구 전직원 혁신메시지) <p><input type="checkbox"/> 과거 수십년간 공공기관은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어 변화흐름을 읽지 못하고 방관자처럼 행동하였음. 타성에 젖은 업무태도는 기존의 존립 가치마저 잃어 버리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몇 가지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변화하려는 인식의 전환 (2005.4월 간부직원 연찬회)</p> <p><input type="checkbox"/>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은 변화하고 있는 데 감독감독기구가 시장의 변화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본연의 감독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외면 받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에 선진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2005.4월 FSS 변화혁신 전진대회) <p>* 감독기구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시장참여자를 돕는 하나의 금융주체</p> <p><input type="checkbox"/> 이번 혁신은 제도도입을 넘어서 감독기구가 금융회사 경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고민하고 계기가 되어야 함 (2005.5월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의 자기혁신)</p> <p><input type="checkbox"/> 감독기구 홈페이지에 ‘여의도 컬럼’코너를 신설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감독정책 등 주요사안에 직접 집필하여 대국민 홍보 (2005.9월 홈페이지 개편)</p>	<p>① 내부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 전직원의 참여기반 마련</p> <p><input type="checkbox"/> 금감위·금감원 직원 변화혁신연찬회 개최 (2005.1.14~15, 2.4, 4.1~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금감원 합동 자체혁신연찬회 및 금감원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연수기관이 주관하는 변화혁신연찬회 개최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선진화를 위한 보고대회 개최 (2005.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RM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p><input type="checkbox"/> 변화혁신다짐대회 개최(2005.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하반기 첫날 변화혁신 의지를 다지고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 → 혁신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한편 기관장의 변화혁신 메시지를 직원에게 전달 <p><input type="checkbox"/> HappyHour 실시(2005.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후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하면서 조직문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 기회 가짐 → 간부와 직원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직원사기 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 도모 <p>② 외부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 유관기관으로의 혁신리더십 전파</p> <p><input type="checkbox"/> FSS 변화혁신 전진대회 개최(2005.4.27)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 협회장(총 10명)을 초청하여 변화와 혁신 의지를 대외에 천명</p> <p><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장 조찬 모임(2005.5.13) : 선진 금융감독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혁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혁신을 설명하고 홍보</p> <p>※ 매주 화요일 정기적 모임 등 40여회 개최</p>

2. 비전·미션 및 전략의 달성 노력도

기관장의 실천의지(혁신필요성 강조)

□ 혁신선도그룹/혁신우수자에 대한 획기적 보상 및 혁신 성과관리

- 05년 혁신관리추진체계를 정립 등에 기여한 금감위 혁신행정과장에 대해 민간휴직 기회 부여 및 희망부서 우선배치 (05.2, 05.7)
- 혁신관리추진을 가속화한 혁신행정과장에 대해 부이사관 승진 발령 (05.10)
- 금감위·금감원 직원중 정책과제평가 및 업무혁신에 기여도가 큰 직원을 선발하여 4회에 걸쳐 위원장 표창 시행 (05.4.30, 05.7.1, 05.8.30, 05.10.30 예정)
 - * 금감위 기획과, 금감원 보험조사실 등 11개 혁신우수부서 표창, 8명 혁신우수자 표창
- 전직원의 혁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혁신마일리지 제도 재설계(05.4)

□ 감독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05.5.30) 등 전직원 앞 이메일 혁신 메시지 전송(총8회, 05.5 ~)

□ 전자게시판을 통한 “변화혁신메시지” 발송

- 조직내 변화혁신 마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변화혁신 우수사례, 혁신관련 양서 요약, 경구 등을 매주 전직원에게 발송(10월 현재 총 56회 발송)하여 혁신사례학습



혁신추진상황 모니터링

□ 혁신전략회의 및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 전략회의 구성 : 의장(금감위 위원장), 위원(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실국장 4인 금감원 부원장3인, 부원장보 8인), 혁신행정과장

※ 제1차 혁신전략회의 개최 (위원장 주제, 05.8.25) : 하반기 성과관리 및 혁신관리추진상황 점검

※ 제2차 혁신전략회의 개최 (위원장 주제, 05.10.6) : 하반기 업무평가 및 혁신평가 대응점검

- 합동대책반 구성 : 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실국장 및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보

※ 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부위원장 주제) : 상반기 2회 및 하반기 1회

□ 소속기관간부회의, 티타임, 확대연석회의 등을 통한 조직의 비전/미션/혁신목표/전략 등 공유 및 추진동향 매주 상시 점검

* 매주 월요일 09:00,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국장(금감위), 부원장(금감원), 혁신행정과장 등 참석

비전·미션 및 혁신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실적

- 인적자원 전략관리 : 금융감독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기구 인적자원 재배치와 Outsourcing 등을 통한 역량 제고

가. 외부전문성의 적극 수용 (Outsourcing)

- 05.3월 감독정책2국 조사기획과에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3명 채용
※ 현재 총 정원 74명 중 6명의 외부 민간전문가가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 금감원은 '99년 설립 이후 '05.9월 현재까지 269명의 외부전문가를 채용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현황(신입직원 제외)

(단위: 명)

변호사	CPA	보험 전문가	외환 국제	조사 연구	리스크 관리	전산 전문	상호 채용	검사 인력	계
28	67	14	35	37	18	13	10	47	269

* 금융회사와 상호파견('01.1.),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02.9.), 한국은행과 인사교류('05.3.)(기관별 3명씩), 퇴직 직원 재고용('05.5.) 실시

나. 내부 경쟁을 통한 조직역량의 확대 (경쟁적 Sourcing)

- 금감위 : 혁신행정과장, 은행감독과장, 자산운용감독과장 전보시 대내 공모를 통해 지원자중 적임자를 보하여 조직의 유연성 제고(05.2)
- 금감원 : 능력있는 직원에게는 직급파괴형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등 직위·직급의 분리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적극 수용(하위직급 직원을 상위직급에 보임)

'05년도 직위공모 실적

	대내 (6명)	대외 (17명)	
임원	—	부원장, 국제담당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3명
국실장	거시감독국장	국제협력실장	2명
팀장	경영지도팀장(은행·증권·보험), 자산운용총괄팀장, 지주회사팀장	홍보팀장, 리스크감독팀장(보험), 기업회계팀장, 거시감독팀장, 조기경보팀장	10명
팀원	—	리스크관리전문가, 금융산업·시장 전문가, 조기경보팀원	8명

※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 부과(근무성적평가, 리더십평가 등에서 일정기준 이하인 직원 중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팀장은 보임해지하고 미보임직원은 업무추진역 발령 가능)

- 전자정부 및 정보공동이용 확대 : 금감위·금감원간의 연계강화로 업무효율화 및 시스템 공동이용 활성화

- 사무자동화시스템과 내부 인트라넷의 공동이용 및 금감위·금감원간의 금융감독정보 시스템(ISIS)의 공동 활용(계속)

□ 장애인보험상품개발, 검사매뉴얼 공개,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유형의 감독서비스 개발 (신규업무영역의 창출)

-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영보험의 가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과 보험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05.10)
- 은행 등 각권역별 **검사매뉴얼을 발간**, 공개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시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 (05.6)
- 금융교육시 **금감위·금감원 간부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일일명예교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을 제고(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2005.9월 현재 10회 실시)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간부진의 참여 및 민원조직 재설계

가. 일일민원상담제도입 : 금감위 과장급 이상, 금감원 임원이 소비자보호센터내에 설치된 민원상담실에서 **내방민원인과 직접상담** 실시 → 간부진이 직접 민원인을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서비스 품질제고 계기 마련

* 운영시간 : 매주 화~금요일 오후 14시~15시

나.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일괄처리체계의 구축

- 점증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센터 내에 **민원처리파트를 증설**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홈페이지상에 인터넷 민원 일괄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원클릭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대표전화 1332** 운영

다. 인터넷민원평가시스템 구축과 활용

- 감독기구와 민원인간 실시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불편, 불만 사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 ⇒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민원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부여**

□ 혁신기획관실 인사운영

- 혁신행정과장은 원칙적으로 **3급 과장**중에서 선발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참석권한을 부여(4급과장에 대해서는 **혁신관리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승진조치<05.10>)
- 업무혁신 총괄담당 실무자 등에 대해서도 **근평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를 통해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05.1)

3. 기관장의 혁신적인 행동과 능력

◆ 혁신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및 솔루션범 사례

□ 고유혁신과제의 착안 및 과제추진 지시

-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금융Ombudsman), 금융업계·소비자 패널설치 등 금년도 감독기구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고유혁신과제**를 제시
 - * 고충처리팀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및 협회 등에 **고충처리창구**를 개설(05.7)하고 감독행태만족도 조사를 실시(05.10),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금융업협의회(Practitioner Panel)**와 개인 및 기업소비자를 대표하는 **금융이용자협의회(Consumer Panel)**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규정 마련(05.9)

□ 금융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정책과제 제시 및 규제방식의 전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 마련,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 시장친화적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제시
 - *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주체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친화적인 감독제도 운영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 질의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신)
- 사례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비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업무위탁(Outsourcing)을 할 수 있는 하는 규제방식의 전환 (**Positive규제방식→Negative규제방식**)



지속적 혁신추진을 위한 혁신조직 후원 등 혁신몰입

□ 금감위·금감원 혁신추진조직의 상설화

- 금감위 **혁신행정과**를 신설하고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혁신을 총괄할 기획혁신팀·조직예산팀·홍보팀을 새로이 신설 (05.1)
- 금감위·금감원간 **실무혁신T/F**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 (과제의 공동발굴 및 혁신추진 계획 집행 등)하고 금감원은 다음의 '비상설 T/F조직'을 별도 운영

<비상설 T/F조직>

	변화혁신총괄단	
변화혁신1팀(국·실장)	팀장1, 간사1	(6명) 당연직: 기획, 총무, 총괄, 추천직: 부원장 추천 3
변화혁신2팀(팀장)	팀장1, 간사1	(10명) 당연직: 기획, 총괄, 소보, 추천직: 부원장보7
변화혁신3팀(2·3급)	팀장1, 간사1	(10명) 추천직: 총무3, 총괄7
변화혁신4팀(4·5급)	팀장1, 간사1	(10명) 당연직: 공채동기회장 5, 추천직: 공채3, 총무2
	10명	36명

<상설조직>

기획혁신팀(기획조정국) : 3명

□ 감독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가. 검사품질제고 시스템 구축

-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국내 팀 조직을 기관별 **전담조직체계(RM)**로 전환(금융회사별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통합 운영)
 - * **리스크 관리, IT 등 전문검사역 그룹**을 검사지원국으로 편성, 운영하여 **고위험분야에 검사자원을 집중**

나. 감독조직 조직개편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일환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에 자산운용감독과**를 신설하고 감독정책 2국의 비은행감독과를 감독정책1국으로 소속 변경(감독정책1국의 시장조사와 폐지)

지속적 혁신추진을 위한 혁신조직 후원 등 혁신몰입(계속)

- A.T.Kearney 조직진단에 따라 감독/검사부서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통합하여 총괄조정국을 신설(총괄조정기능 강화)
- 거시경제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장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감독국**을 신설하고 **조직경량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검사부문으로 전진 배치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 등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신설

□ 혁신학습지원과 자기개발 지시 : 혁신학습단, 정책과제 학습동아리 후원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개최**(05.10) 등 학습단 후원 및 실무직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을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지원(*직원의 직무능력개발 학습기회부여를 저해하는 부서장은 **불이익**을 줄 것임을 강조)할 것을 지시 (05.2)
- 혁신행정과장이 혁신학습 **총괄 반장**을 맡도록 하여 정책학습과 혁신학습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05.2)



혁신추진을 위한 갈등 조정

□ 정부혁신위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혁신적 수행과 대외홍보

- **정부혁신위원회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재경부/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간 갈등 해소
- ⇒ 금감위-금감원간 관련부서를 그룹핑하여 **실무자 간담회(월 2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감독 정보 교환 및 양기관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현안을 논의토록 함으로써 기관협조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기관장 Initiative로 상설화**)
- 기관장은 통합감독기구의 설치, 감독기구내 상호 견제와 균형 등 **통합 감독체제에 대한 효율성과 발전과제**에 대해 각국 감독당국 책임자 면담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

□ 정보의제관리·규제개혁 등 공통혁신과제 추진시 갈등조정

- 정보의제관리 구축시 금감위·금감원간 정보노출부담에 따른 소극적 자세를 양기관 **정보의제관리 협력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조정
-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시 질의→검토→답변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관련 부서간 논쟁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소
- **규제개혁시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업권간, 부서간 이해상충을 미리 방지하고, 금융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혁신추진을 위한 갈등 조정(계속)

□ 직원·간부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직급별, 권역별 갈등조정

- 격식 없이 대화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사무자동화시스템상에 “ 대화방”을 개설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
 - 간부직원이 직급별, 권역별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혁신추진의 장애요인 및 갈등 조정
-



혁신성공을 위한 대외관계 조성 및 혁신커뮤니케이션 등 공감대 형성

○ 금융감독정책과 혁신전파 대외홍보를 위한 대내외 강연 (05년도 28회)

- 국회금융정책 연구회,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벤처 리더tm 조찬 강연 등 → 공공기관, 금융회사, 협회 등 설득과 새로운 혁신영역 모색

※ 감독기구의 업무혁신의 중국적 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정착과 서비스의 제공이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적극적인 위험관리형(risk taking)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요청하고 예외없는 법과 원칙의 실천을 강조

-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FSS 변화혁신 전진대회」를 개최(4.27)함으로써 감독기구의 변화혁신 의지를 각 금융계에 전파하고, 금융계의 혁신노력과 협조를 요청

※ 금융회사 중견간부 등을 초청하여 감독기구의 변화혁신추진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추진중인 ‘FSS 혁신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

□ 혁신커뮤니케이션

○ 금감위·금감원 전직원앞 혁신메시지 전송(총8회)

- ① 감독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05.5.30)
- ② 감독행태 고충처리제도 신설 등 감독마인드 개선(05.6.1)
- ③ 금융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05.6.13)
- ④ 변화혁신 성공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사명(05.7.1)
- ⑤ 규제개혁, 민원제도 개선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17개 과제 이행을 통한 감독정책품질제고(05.7.13)
- ⑥ 업무성과 관리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05.8.10)
- ⑦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후속조치 당부(05.9.9)
- ⑧ 혁신학습과 교육의 중요성 강조(05.10.7)

○ “변화혁신의 날” 지정 행사 및 포상

- 감독기구 자체적으로 ‘변화혁신의 날’을 제정(매월 15일)하고 부서별 여건에 따라 ‘자유복출근’을 허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변화혁신마인드 제고
-

평가분야	성과관리 및 정책품질 구현 노력도
평가지표	○ 성과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도 ○ 기관장의 정책품질 구현 노력도

1. 성과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도

성과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한 감독기구의 전략적 성과지표를 외부민간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개발토록 제안(04.12)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성과관리에 대한 자체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컨설팅을 통해 검증할 것을 지시(04.9)



성과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노력도 : 단계별 추진 및 과학적 지표개발

가. 성과지표 개발 (1단계)

- 전략지표 개발 : 4대 정책목표에 대해 14개 이행과제별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마련 (05.3, 민간컨설팅사<IBS consulting>와 공동개발지원)
 - * 성과지표(예시) : 선제대응조치율(%) = 선제대응조치건수 /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위기상황이라고 경보한 건수 + 위기상황건수) × 100
- 관리/운영지표 개발 : 직무성과계약제상의 개인별·부서별 성과지표 마련 (05.4)
 - 위원장-국장간, 국장-과장간 직무성과계약제를 체결하고 개인별 성과지표 개발 (총277개)
 - * 성과지표(예시) : 가계대출 및 연체율 모니터링 실적 (정량지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내용의 적정성 (정성지표)

나. 직무성과계약제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 (2단계)

- 금감위는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자체구축 (05.9)
 - 기개발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결과지표와 과정지표의 충분성 검토, 계량과 비계량 지표 구성의 균형성 등을 검증 (Review) (* 콕앤문비즈니스컨설팅)
- ※ 금감원은 “금감원Software 개혁을 위한 FSS혁신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균형성과기록표 (BSC : Balanced Scorecard) 도입 추진
 -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T/F팀(3명) 구성 ('05.7월) → 용역업체(콕앤문비즈니스컨설팅) 선정 ('05.8월) → 성과지표 개발 ('05.9월~10월) → 전산시스템 개발 ('05.11월~'06.1월)

성과지표의 인사·보상연계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 ☐ 보상이 이루어져야 정책품질과 성과관리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인식과 전파 (05.6~ , 전직원 혁신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
- ☐ 금감위 업무성격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전략수립 지시
 - 목표달성도 평가시 사전에 성과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개인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따라 평가하되, 동태적 성과평가(상황대응성 제고)를 강조
 - 금융감독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빈도는 작으나 금융시장안정 등 정책실패를 예방한 경우(critical severity)에는 평가자가 별도로 가점부여 성과평가의 동태성 확보 필요)

⇒ ① 목표달성도, ② 업무의 중요도 ③ 상황대응력을 종합하여 평가

- ☐ 업무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객관성 검증(Pretest)후 즉시 시행 (05.11월말 예정)
- ☐ 통합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인사부문】

- ① 평가결과를 경력개발제도(CDP) 보직관리와 연계 : 전보 및 파견시 통합성과평가결과 우수직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훈련 대상자 선정시 통합성과평가결과 우수인력에 대하여 가점부여
- ② 승진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시 통합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통합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입력하여 인사관련자료로 활용

【조직부문】

- ① 통합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직 측면의 원인 분석 : 통합성과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 진단실시
- ②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추진 : 평가결과 새로이 제시된 정책수요 또는 문제사업 해결을 위해 금감위/원 합동임시조직(T/F)을 운영

【업무개선부문】

- 통합성과평가 결과 추진지연 및 성과지표 미달성 과제에 대해서는 사유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등 별도 관리하고 다음 분기(또는 차년도) 업무개선 및 성과지표 개선에 활용

성과지표 모니터링 정도 및 구체적 실적

□ 전략지표 점검

- 4대 정책목표에 대해 14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전략지표)를 중간 점검(05.6)하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05.6)
 - * 일부 성과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략지표 목표치를 달성

[정책과제 부문]

■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제고 ⇒ 전략지표 초과달성

- *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12.05%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 430.0%
- *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 230.4% * 손보사 지급여력비율 : 291.8%
- * 선물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 282.2%

■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 조사 및 제재 강화 ⇒ 전략지표 부분달성

- *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율¹⁾은 당초 목표치인 과거3년간(1~5월중) 평균처리율(42.3%)에 미달한 34.9%(05.1~5월중 처리율)로서 82.6% 달성

1) 지표의미 : 불공정거래조사 대상 건수 대비 처리건수로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증시투명화에 기여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

※ 목표미달 사유분석 : 금년의 경우 전년 이월건수가 170건으로 과거 3년 평균(120건)보다 140% 높은 데 기인(전년 이월건수 제외시에는 102.6% 초과달성)

- * 시세조종 등 중대범죄 처리비율²⁾은 당초 목표치인 과거3년간(1~5월기간중) 중대범죄 평균처리율(43.2%)대비 05.1~5월중 중대범죄 처리율(47.2%)로서 목표치 달성

2) 지표의미 : 불공정 조사처리 건수중 투자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고 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세조종, 미공 개정보이용 등 중대범죄 부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

- 보험사기 조사(적발) 실적은 당초 목표치인 과거3년간(1~6) 42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함으로써 전년(상반기) 대비 23% 증가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전년대비 5%이상) 달성

[민원서비스 부문]

- '05년 상반기중 감독당국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9.6%(3,123건) 감소 (29,461건)

* 민원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금감위(원)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6년간 금융 민원은 매년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동기간 중 민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0.0%에 달함

- '05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04년 하반기 50.5점에서 53.9점으로 상승

□ 관리/운영지표 점검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정책 성과지표 점검예정 (총277개)

2. 기관장의 정책품질 구현 노력도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참여

-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05.7~) : 대손충당금 제도개선 등 10개 과제를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로 지정하고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등 중점관리할 것을 지시
- 새로운 감독환경에 맞는 조직개편(05.1) : 전통적 미시감독에서 거시변수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변화와 점업화추세에 대응하여 거시감독국 및 복합금융감독실 신설
- 정책정보시스템(05.1~) :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제관리시스템 및 ISIS 등 내부정보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감독정책정보수집의 체계화
- 정책모니터링시스템 강화(05.1~) : 세부정책과제별로 책임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등 분기별 자체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활성화
- 직원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화(계속) : 감독기구 전직원에 대한 직무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한 감독정책품질의 향상



정책수요자에 대한 균형적 접근노력

- 고객중심의 정책의제설정 채널
 - 업계·소비자 패널 운영, 건전성 자문회의 등 고객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제도화(05.9)
 -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제도 등 업계와 정책수요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업계·민간전문가그룹과의 합동 정책 T/F 구성·운영 (계속)
 - 금융소비자모니터단 등을 통한 일반 금융수요자와의 의사소통(계속)
- 장애인의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금융수요자 이해에 부합하는 과제발굴
 - 민영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 및 기존 장애로 인한 장애 판정 곤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사실상 기피
 → 민영보험 가입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욕구충족, 민영보험의 공공적 역할 제고
- 정책·민원만족도 서베이 활성화
 - 업무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70%) 및 전문가(30%)의 정책 품질 만족도 조사 및 활용 (05.9~10)
 - 민원서비스에 대한 자체만족도 조사 (05년도 상·하반기 2회)
- 감독규정 변경 사전예고제 금감위·금감원 홈페이지에 변경내역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 은행감독규정 개정 등 209회 (누계기준)

정책품질향상 장애요인 제거사례

- 기업공시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질의사례가 04년의 경우 20여만 건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 제정·보급
- 민원사무처리표준안 마련
 - 인터넷 민원의 폭증 등 민원발생이 크게 증가 → 금융회사의 민원사무에 대한 내부통제 지침인 표준안 마련·보급
- 상장유지비용경감방안 마련
 - 거래소 상장기업수와 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이 위축 → 기업공개, 공시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감방안을 마련
- 단계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방안
 - 주택담보대출 관련 불안요인 잔존 →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대책을 마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실업자·신용불량자의 발생 등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보험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보험사기 유발 (보험사기적발현황 : 03년 9,315건, 606억원 → 04년 16,513건, 1,290억원)
 →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시장의 안정과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호



정책품질관리 내부체계 구축

■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가동

○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의 관리카드화 현황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과제	진행상황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대비	작성중
대손충당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완료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착륙지원	작성중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완료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	완료
보험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도입	완료
펀드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작성중
민원처리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품질제고	완료
금융산업 진입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작성중

-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 <의장(금감위 위원장), 위원(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실국장 4인 금감원 부원장3인, 부원장보 8인)> 운영

※ 제1차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 주재, 05.10.6)

- 정책품질관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활용: 금감위 전자결재시스템상의 공유게시판에 정책품질관리 코너를 마련하여 전직원의 학습 및 공유 (최근 정책추진현황 자료 ☞ 정책담당자가 직접 입력)

■ 감독정책 이중심사(double check) 시스템의 정착

- 감독규정 제·개정·인허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금감위·증권위 합동간담회」를 거침으로써 위원-실무진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

* 284개 안건 사전검토

■ 정책모니터링, 자체평가시스템 및 정책/서비스 만족도조사의 활성화

- 매분기별로 업무계획상의 전체 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종합 자체평가 실시 (각 이행과제별로 과정평가기준 및 성과지표<전략지표>에 따라 정밀평가하고 하반기 평가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여 업무성과를 계량화할 예정)
- 일반국민 및 관련전문가의 감독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관내부평가를 보완 → 정책추진의 반응성 제고 → 중점홍보사항 발견 등 피드백을 통해 활용 (05.10)
- 또한, 감독행태만족도조사와 검사모니터링을 통해 감독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파악하고 정책평가 및 정책만족도 조사를 보완 → 검사행태 개선 등 감독서비스 향상에 Feedback (계속)

2. 학습과 역량

기관명	평가부문	평가요소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역량	학습과 역량

1. 혁신조직 · 문화 분야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도출을 위하여 **강력한 혁신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조직내 다양한 **장애 · 갈등요인**을 **통합 · 조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
- ⇒ 혁신피로감을 최소화하여 **자발적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내부 업무처리과정· 대외 감독행태· 조직문화 등 조직내에 **전방위적으로 혁신문화가 확산 · 체질화**

평가지표명	혁신관리부서장의 역할
-------	-------------

□ 혁신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부서장 역할 정립

- 금감위·원 간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joint steering committee)***」 (05.1) 및 실무자 중심의 「**혁신 실무 T/F**」를 구성(05.3)하여 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 금감위 부위원장 및 금감원 부원장(공동단장) 등 간부 총 16명
- 「**혁신추진전략회의**」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본격 가시화
-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혁신에 대한 품질관리 기본 전략 수립 및 대상과제의 품질관리현황 점검
- **혁신관리 부서장의 기본역할**
 - (기획행정실장) : 합동대책반, 혁신추진전략회의, 정책품질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감독당국 혁신전략을 구체화하는 실행리더 역할 수행
 - (혁신행정과장) : 혁신 실무T/F 장으로서 혁신관리 및 혁신과제 실행 총괄
- ※ **혁신행정과장은 기관장으로부터 혁신추진의 전권을 부여받아** 각종 과제 추진, 혁신교육 실시 등 모든 혁신활동을 주관하고, 기관내 혁신 장애요인 제거, 외부 혁신네트워크와의 연계, 정부혁신방향과의 부합도 배가 등의 역할을 수행

□ 비전 · 미션 · 전략의 전직원 공유

- * **혁신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혁신행정과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혁신비전·목표 및 전략의 공유 활동 전개

전 략	주요 내용
구성원과의 대화	▶ 혁신 다짐대회, 실무자외의 정기적 간담회, 혁신메시지 발송, 포스터 부착,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통한 비전 제시 ▶ 혁신비전 간판설치 등 시각·청각 효과를 극대화
혁신 워크숍	▶ Brain-storming을 통한 혁신공감대 형성 및 목표 선정 ▶ 외부강사 강연(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명형 윈스케어 대표, 최양식 정부혁신본부장 등)을 통하여 정부의 혁신방향을 이해
혁신기법 학습	▶ 전문기관(현대, 삼성 등)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수준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3개 기관, 9차에 걸쳐 참여)
성과창출 및 대외의지 확산	▶ 금감위·금감원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8.30)'를 통해 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을 실시하여 혁신성과를 홍보하고 혁신 확산 유도 ▶ '변화와 혁신 전진대회'를 개최(4.27)하여 권역별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당국의 혁신추진배경 및 방향을 대외에 선포하고 명예금융감독원장을 위촉

□ 갈등·저항·애로사항 관리 및 제거

*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저항관리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피드백

단계	요 인	관리전략	효 과
1	냉담·무관심	위기감조성, 솔선수범	공감대형성, 혁신집화
2	전통과 타성	끊임없는 대화	참여확산, 몰입강화
3	성공에의 확신결여	단기성과 창출	자신감 강화, 가속화
4	업무과중	업무와 혁신의 연계	프로세스 개선
5	과거로의 회귀	성과관리 구축	혁신의 내재화

* ‘합동대책반’ 및 ‘혁신 실무T/F’가 혁신관리 전반 및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함으로써 단계별·과제별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며

- 특히, 혁신행정과장은 CA와의 간담회 혁신학습단 토론 등 대부분의 혁신활동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간부회의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금감위 분석결과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혁신에 대한 열정은 높으나 업무과중으로 구성원의 참여가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 혁신을 통한 업무방식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정책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혁신을 업무에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혁신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험사기 조사 업무 혁신, 검사업무 혁신을 통한 임점검사 감소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

○ 한편, 언제든 전통 및 과거로의 회귀가 일어날 수 있음에 경계심을 갖고

⇒ 다양한 방식의 부서장·기관장과 구성원간 끊임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내재화를 위하여 혁신관리와 성과관리를 연계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간부층의 갈등조정·애로사항 극복 사례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전면 재정부 추진시,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카드사태와 같은)을 우려하여 실무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 기관장이 직접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실무진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토록 지시

▶ 정보의제관리 구축과 관련하여, 금감위·금감원간에 모든 정보가 노출·공유되는 부담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 양기관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금감위 금감원 양기관에 각각 정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dual system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정

▶ 비조치의견서* 도입시, 처리·답변 절차 등과 관련한 금감위·원간, 권역별 실무부서간 많은 논쟁과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 상임위원 주재의 T/F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

* 질의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주체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서신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평가의 객관성·공평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적지않은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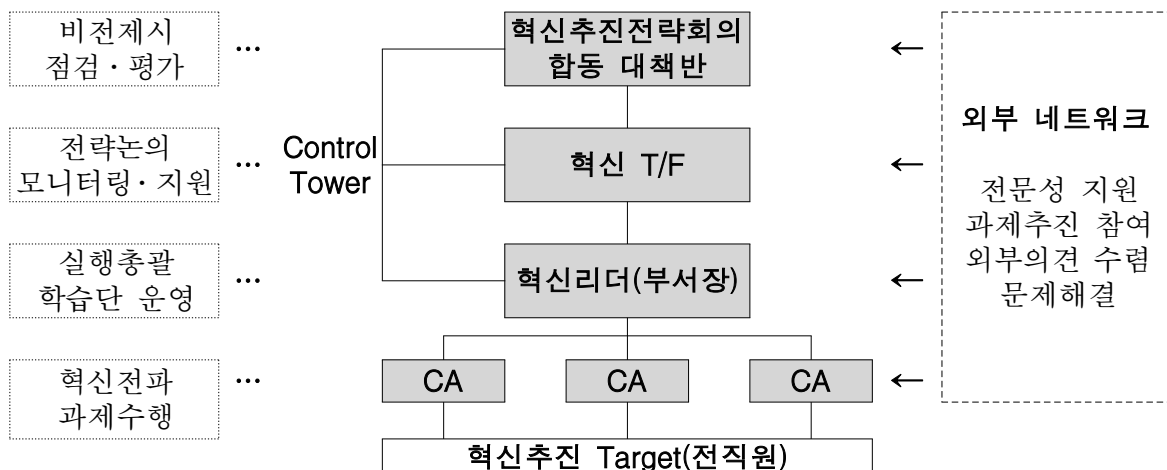
⇒ 성과관리에의 반영은 혁신 내재화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여 시물레이션 및 전직원 토론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도입

□ 혁신담당부서 및 담당관에 대한 권한부여

- 혁신행정과를 기획행정실내의 주무부서로 운영하고 혁신행정과장은 위원회 전체의 선임과장(부이사관급)을 보하도록 하고 과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혁신행정과장만 간부회의에 참석
 - * 금감원은 04년에 비상설이었던 변화혁신/F를 '기획혁신팀'으로 상설화하고 조직 전체의 주무부서로 운영하여 감독당국의 혁신을 본격화
- 혁신부서 인력보강(05.1) : '04년 4명(사무관2, 주사2) → '05년 7명(사무관3, 주사2, 주사보, 파견)
- 04년 혁신담당과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민간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내 공모를 통하여 혁신행정과장을 영입함으로써 혁신의 활력을 제고(05.2)

□ 금감위·금감원 합동의 혁신추진체계 형성

-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합동대책반*」(05.1)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실무 T/F**」 구성(05.3)하여 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하반기에는 위원장 주도의 「혁신추진전략회의」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본격 가시화
 - 부서별로 혁신리더(금감위 과장·팀장, 금감원 국장급)를 선정하여 혁신활동의일선지휘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요원(CA : change agent)을 지정하여 조직 전체로의 혁신확산 유도
- ⇒ 금감위·금감원 합동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기관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과 확산을 위한 「혁신과제 학습단」 구성

- * 감독행태개선학습단 인사제도및성과관리학습단 비조치의견서학습단 정보의제관리학습단, 규제개혁학습단 정책품질관리학습단 민원·제도개선학습단 등 7개
- 과제별 담당 혁신리더를 단장으로 하고, 감독당국내 혁신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위원 합동으로 구성

< 혁신추진조직 주요 활동내역 >

구분	개최수	주요 활동내역(05.9월말 현재)
합동대책반	4	· 05년 혁신관리 기본계획 확정: 05년 목표 및 역점(고유)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정비 · 분기별 혁신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점검 · 금융회사 고충처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마련 · 업계 및 소비자 패널 구성 및 활용방안 검토 등
혁신추진 전략회의	2	· 상반기 혁신과제 종합평가· 분석 및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혁신 T/F	12	· 05년 위·원 합동 혁신체계 운영방안 수립 · 혁신과제(고유, 공통, 기본) 및 혁신학습체계 총괄 관리 · 금감위·원 홈페이지 개편 정책홍보강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방안 도출 등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혁신네트워크 형성노력 >

- * '04년에는 민간위원 위주의 혁신서포터즈를 구성, 내부T/F와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금년에는 혁신과제별로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지원

□ 민간전문가에 의한 '혁신컨설팅' 운영 : 혁신역량 / 고유·기본과제

- 민간 혁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혁신컨설팅단을 통하여 위원회 혁신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혁신과제 추진 장애요인 해결 역할 수행(총 5회)
- 민간 혁신기법을 적극 학습,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하고 금감위·원 통합성과관리 도입방안 논의 등 통해 구체적인 모형 구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혁신수준 진단 및 교육 실시 : 혁신역량

- 금감위·금감원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혁신문화와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혁신교육을 총 7차에 걸쳐 진행

- * 기타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오피니언 리더들에 주요정책 혁신과제에 대한 자료 발송 및 의견수렴 등 기관외부와의 네트워크를 견고화하는 노력 강화

□ 열린 금융감독 구현을 위한 '업계 및 소비자 패널(각 12명)' 구성 : 고유과제

-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금융이용자가 감독정책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열린 금융감독 구현
- * 기존의 비정규적인 제도와는 달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정규화하고 법적구속력을 부여

□ 감독·검사행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신고제도 도입 : 고유과제

- 은행연합회·증권연합회 등 11개 협회간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금융회사 및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충처리 접수창구 개설 및 운영방안을 도출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공통과제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민간위원 비율 : 66.7% → 75%)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

□ 민원·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확대 개편 : 공통과제

- 개별민원 해소를 넘어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대(소비자단체, 업계 등 외부위원9명 참여)

...현 단계에서는 ... 금감위와 금감원이 먼저 감독행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할 시점이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 및 행태가 관료주의적인 틀을 벗어나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사설>

□ 혁신의 공감대 형성 : “감독행태의 근원적 개선”(Plan)

- 기관장 주재로 금감위·금감원 전직원이 함께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감독 당국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
 - * 04.11~05.2월중 기관장의 지시로 위·원 합동 혁신워크숍4회 실시(대생·산은 연수원)
- 부단한 제도개선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꾀도 감독행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은 소원해진다는 데에 공감
 - ⇒ 감독·감사행태가 권위적·고압적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감독행태 및 조직문화의 근원적 개선”을 05년 주요 혁신목표로 선정

□ 그간의 노력과 성과

①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 “관료주의적 문화요소 제거” (Input)

- 간부층의 ‘솔선수범’ : 상명하복의 지시문화에서 벗어나 정책수립 추진시 직원의 아이디어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함께 토론하여 결정하는 문화 정착
 - * 슬림화된 부처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상·하관·차관·1급) 직접 보고 등을 통해 의사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관행을 정착
 - * 모든 정책결정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정기적인 간부회의 외에 티타임을 가져, 수평적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모색
 - * 권역별·부서별 금감위·금감원 실무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양기관 업무협조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화합과 토론문화 정착 유도
- 간부가 먼저 혁신에 나서서 다양한 혁신 토론을 주도하고, 혁신교육에 참가
- 홈페이지에 ‘여의도칼럼’ 코너를 신설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감독정책 등 금융전반에 관해 직접 집필하여 일반인에 소개
-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하의상달(下意上達)방식의 정책형성 관행 정착
 - 금융이용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탁상행정이 아닌 실무진의 경제현황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결정집행
 - * (예) 05.4~5월중 일반중소기업(3,853개)과 워크아웃기업(106개) 및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8개 은행의 워크아웃 성공·실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현황을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감위·원 T/F(상임위원 등 19명)의 6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활성화 방안(VIP 보고, 6.23) 마련
- 06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기관·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05.9~10월)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
- 불필요한 관행과 문화는 제거
 - 금감위 등 주요회의를 노트북으로 진행하여 안건을 알일이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제거(05.10)
 - 불필요한 자료작성을 줄이고구두·요약보고를 최대한 활용

② 대외 이미지 제고 : “친절하고 봉사하는 감독행태 · 문화 확립”(Process)

- ‘고충처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감독 검사행태에 대한 고충을 접수 · 처리하는 별도의 창구를 on-off line으로 개설
-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 양대 정책 이해자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감독행태를 구현하고자 ‘업계 및 소비자 패널’을 구성
 - * 기존의 비정규적인 각종위원회제도와 달리 상시 · 정규화 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도입
- 금융민원 해결 의지 천명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고위 간부가 직접 민원창구에서 상담하는 ‘일일민원상담제’ 운영

③ ‘05년 성과 : 수평적 · 탈권위적 조직문화 정착과 대외 이미지 개선(Outcome)

- 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 그리고 간부층의 솔선수범으로 구성원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위기 확산
- 금감위 · 원간, 은행 · 증권 · 보험 등 권역간, 감독 · 검사국간 존재하던 상호불신감을 해소하고 부서별 정보공유를 최대한 확대하여 **통합감독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 조기경보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05.3), ISIS 활용도 제고(05.8),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부서별 실무자간 정보공유 브리핑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05.1~) 등
- 감독당국의 감독 · 검사행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봉사하는 감독기관으로의 개선노력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마련
 - * 05.6월 협회간 회의시 모협회 기획부장은 ‘금감원의 행태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 졌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다고 평가
- **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여러 언론이 높이 평가
 - “이번 규제 재정비 방안은 과거처럼 건수에 얽매이기 보다 기업외국인 관련 협회등의 수요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8.9일자 한국경제 사설)

□ 혁신문화 확산에 대한 점검 · 평가 · 피드백(Feedback)

- 민원서비스*, 감독행태, 정책과제(실시중) 등에 대한 정기적 만족도 조사 실시 · 분석
 - * 05년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04년 하반기에 비해 상승
- 기타 사안별 · 과제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 분석후 개선
 - * (예시)금융규제 전면재정비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산하기관*으로의 혁신참여 의지 확산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 · 자율 경영혁신 체제 구축 및 대고객서비스 제고를 통한 내부혁신마인드가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자산관리공사 경영환경에 맞는 혁신과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경영 혁신의 효율적 달성과 운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추진 전담조직**을 구성
 - 기관내에 혁신문화가 자발적으로 촉진되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및 각종 **혁신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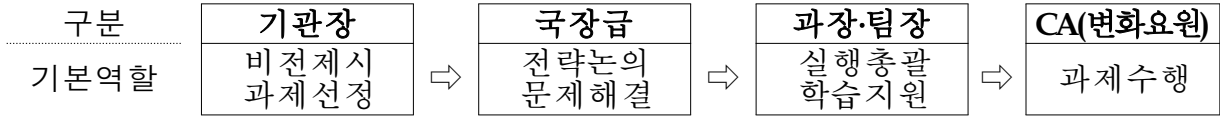
⇒ ‘05. 5월 예산처에서 발표한 산하기관 혁신수준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혁신활동의 제도화가 잘 추진되고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혁신수준 4단계*)

* 1단계(40개, 19%), 2단계(64개, 30%), 3단계(74개, 35%), 4단계(26개, 12%), 5단계(6개), 6단계(2개) (총 212개 산하기관)

※ 2004년에는 윤리경영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윤리경영대상에서 공기업 최초로 대상 수상

평가지표명	간부층의 혁신추진 참여
--------------	---------------------

(직급별 기본역할)



< 합동대책반 주요역할 및 활동내역 >

주요역할	주요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미션 및 목표 전략 총괄 ○ 정책과제 및 혁신관리 추진 총괄 ○ 감독정책의 품질관리 총괄 ○ 감독당국 성과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미션에 따른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도출(05.2) ○ 정책과제 및 혁신 추진현황 점검 관리(분기)·평가(반기) ○ 감독당국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혁신, 정책과제 만족도,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05.10) 및 분야별 내부 평가위원 역할 수행

< 각 부서장(국장)의 역할 및 혁신성과 >

기획행정실장(혁신·평가총괄)	홍보관리관(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과제 선정·추진,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감독행태의 근원적 해결 토대 구축(고충처리제도) ▶ 민원·제도개선의 활성화 정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신·외국인 대상 정책홍보체계 활성화 - 외신대변인 및 외신전담 조직운영 등 ▶ 홍보전략을 다각화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감독정책1국장(시장전반, 은행·비은행)	감독정책2국장(자본시장, 보험, 불공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치의견서(고유과제) 제도 도입 ▶ 최근 수년간 미결과제였던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추진 ▶ 영국 FSA를 벤치마크하여 업계 소비자패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 -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 마련 차별화된 공사·회계 제도 구축,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등 ▶ 혁신 우수사례 창출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등

□ 금감위·금감원 합동 「혁신 실무T/F*」를 구성하고 이를 정점으로 부서별 「혁신리더**」를 지정하여 혁신활동을 일선에서 지휘

* 혁신행정과장·기획조정국장(공동단장) 및 과제담당 실무자등, ** 금감위 과장·팀장급 금감원 국장급

○ '혁신 실무T/F'는 감독당국의 혁신관리 및 혁신과제의구체적인 수행을 총괄하고 혁신리더를 지원하며,

- 위원회 전체의 혁신문화 확산 및 혁신역량 강화 활동을 총괄 (학습동아리·혁신과제 학습단 활동 지원·관리 포함)

○ '혁신리더'는 담당 혁신과제 추진을 총괄(혁신과제 학습단의 장)하며 각 부서의 혁신활동을 일선지휘

* 성과관리, 민원·제도개선(공동과제), 감독행태 개선(고유과제, 혁신행정과장), 정책품질(감독정책과장), 정보의제 관리·규제개혁(공동과제, 기획과장), 전자정부(의사국제과장), 비조치의견서·패널(고유과제, 감독정책과장) 등

□ 금융민원 해소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현장 체험」 실시

- 간부가 직접 민원창구에서 상담하는 「일일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급증하는 금융민원 해소 의지를 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
 - * 금감위 참여간부 : 상임위원(2), 국장급(4), 과장·팀장(11) 등 17명
-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 금융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시 간부가 「일일 명예교사」로 직접 참여
- 개별 민원해결 차원을 넘어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는 「민원·제도개선」 추진에 기관장·부기관장 등 간부 참여
 - * 기관장 주재 '민원해소 대책회의, 부기관장 주재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등

□ 혁신과제 학습단, 학습동아리 등 조직내 학습활동 지원

- 다양한 혁신과제의 해결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
 - 국장급 이상이 학습동아리 대표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월1회)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 과장급은 혁신리더로서 여건조성·자료제공·예산지원 등 학습동아리 활동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간부의 정책결정에 활용토록 가교역할 수행

□ 간부층의 교육 등 혁신활동 참여정도

- 자체 혁신학습 및 워크숍을 주관하여 전직원이 함께 혁신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 각종 혁신학습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부서장으로서 구성원의 혁신활동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구분	주요내용	참여간부
자체 워크숍	· 혁신공감대 형성 및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분임토의 외부 전문가 강연 등(05년중 3회)	전 간부
혁신리더자 과정	· 혁신의 실행 및 가속화에 필요한 혁신관리능력 교육	국장, 과장 3
전문기관 혁신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하여 민간혁신기법을 학습 하고 조직의 혁신역량과 리더십을 고취(3개기관 9회)	전 간부
토요 혁신학습	· 혁신관련 외부강사 특강 및 토론회(총10회, 9월말현재)	전 간부
혁신과제 학습단	· 혁신과제 추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과제담당 과장
학습에 대한 평가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	국 과장급
공통과제 포럼	· 공통선도과제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여하여 과제추진 및 문제해결(포럼별 주관부처 및 선도부처)	담당 국·과장
금융포럼	·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전 간부
혁신 컨설팅	· 성과관리 혁신과제 수행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 지문·토론	혁신행정과장

○ 기타 각종 혁신토론회, 발표대회 등에 기관장 이하 간부층 적극 참여

- * 2005년 정부혁신토론회(1.29, 위원장),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3.5, 부위원장 혁신행정과장), 2차 정부혁신 추진토론회(4.2, 위원장), 정부혁신세계포럼(5.24, 위원장 혁신행정과장), 정부혁신관계관 워크숍(7.7, 혁신행정과장), 지식관리 토론회(8.19, 위원장),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9.29, 부위원장 혁신행정과장), 혁신현장 이어달리기(9.9, 10.20, 혁신행정과장),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워크숍(6.29~30, 홍보팀장),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워크숍 및 컨테스(9.29~30, 홍보관리관)등

< 구성원의 혁신몰입행동 및 조직의 혁신분위기 확산 >

□ 강력한 혁신추진체계를 통한 비전·미션·전략의 공유

- 금감위·금감원 공동의 '합동대책반' 및 '혁신 T/F' 등 혁신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05년 정책목표·이행과제, 05년 혁신관리 목표 및 역점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직원이 공유
- 혁신강연, 외부전문기관 교육 등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및 혁신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교육훈련 활발히 전개
- 혁신 전진대회, 혁신 다짐대회, Happy Hour 행사 개최, 위원장 혁신 메시지 전송 등 기관장과 구성원간 끊임없는 대화로 혁신공감대 형성

□ 혁신과제의 실행과 확산

- 05년 역점(고유) 및 공통(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실행을 가속화
 - '합동대책반' 및 '혁신 실무T/F'를 통하여 과제관리 및 문제해결
- 'FSS 변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의 중장기 변화 로드맵을 제시 (3대 목표 14개 혁신과제, 9개 혁신동력 확보·홍보전략 과제 수립)

□ 혁신학습 활동 참여

- 고유과제 및 공통선도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제별 혁신 리더를 단장으로 「혁신과제 학습단(7개)」을 새로이 구성
- 주요 이슈 및 관심사별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크게 확산(21개)되어 학습성과물 공유 및 발표대회 개최를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

* 혁신과제 학습단 및 학습동아리에 학습지원비 및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우수 학습사례에 대해 포상 실시

구분	'04년	'05년
동아리수	6	21
참여인원	184	410
연구자료 게시건수	203	509

- 직원들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실제업무에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변화혁신제안제도'를 운영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9월
제안건수(A)	25건	82건	105건	153건	248건
채택 건수(B)	3건	11건	4건	70건	62건
채택률(B/A)	12.0%	13.4%	3.8%	45.8%	25.0%

* '05년중 우수제안 사례 : 법인등록번호 등을 활용한 예금잔액확인 개선방안금융거래정보요구서 관리방법개선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통보 방식 개선 등

□ 혁신성과의 창출·확산·내재화

- '2005년 금감위·금감원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우수사례의 창출 및 조직내 확산을 가시화

* ①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혁신 ②비조치의견서 제도도입 ③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소 ④조기정보시스템의 본격 가동 ⑤간접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 보호인프라 개선 ⑥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등6개 사례

○ **업무 표준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방식의 근원적 변화 정착**

- 공통과제(정보의제관리 민원·제도개선) 자체 매뉴얼을 개발·제작하여 각종 정책이슈의 체계적인 관리 민원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도출 추진 시스템 구축
-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조기정보모형'을 본격 가동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감독정책에 적극 활용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감독방식의 선진화 도모
 - * 금융회사별 주치의제도인 'RM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 검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검기관의 부담도 경감
- 기존의 업무경험을 통한 적발이 아닌 보험사고 및 계약정보의 자동적 검색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자와 관련자를 포착 단서를 제공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하여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대폭 증대

□ **혁신 내재화를 위한 성과관리 정착**

- 변화된 제도와 업무방식이 조직내에 정착 체질화될 수 있도록 부서 및 개인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 *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홍보'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각 부문에 대한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통해 인사·조직·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 **혁신수준에 대한 외부인의 반응도** >

□ **각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이용자의 체감도를 측정**

- 감독당국의 주요정책 감독·검사행태, 민원서비스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
-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

□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금융이용자 만족도 분석**

- 금융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5.7)이후의 효과를 분석
 - 방문자 수는 9.3%p 증가, 방문 후 콘텐츠 이용은 3배 이상 크게 증가
 - * 금융시장 동향뉴스 감독정책브리핑 동영상 등 신설 홈페이지 사이즈 확대 및 청소년금융교실 등의 콘텐츠 보강과 방문자 관심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콘텐츠 배치 등이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저시력자나 노인 색맹·색약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friend.fss.or.kr) 방문자 수도 월평균 1,822명(일평균 58명)으로 반응이 양호
 - 민원신청·인터넷증권범죄신고 불법펀드신고 등의 콘텐츠(26개) 방문 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문자의 개인 신용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번호·성명 등의 암호화를 추진

□ **금융규제 전면재정비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모든 위원이 재정비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금감위가 마련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매우 크다 32%, 어느정도 있다 64%), 외부 전문가의 의견반영 정도도 높히 평가(어느정도 반영 73%, 대부분 반영 18%)

□ **'05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가 '04년 하반기 50.5점에서 53.9점으로 상승**

2. 학습과 활동분야

- ◇ 금융감독당국이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 ⇒ '학습없이 혁신도 개선도 없다'는 인식하에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운영

평가지표명	학습여건 조성 정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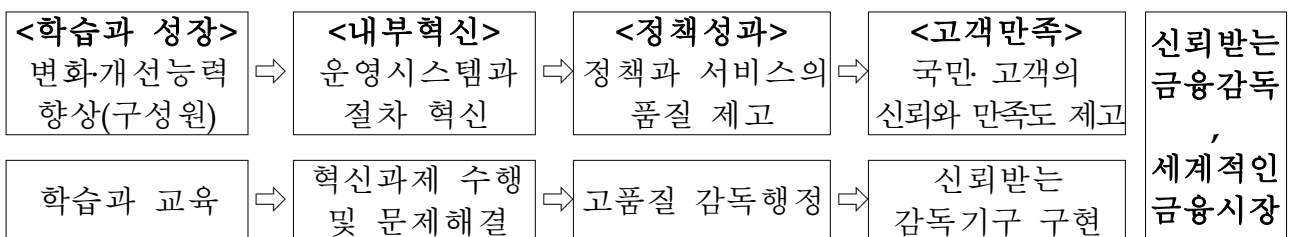
□ 04년 금감위 학습역량 분석(05.1)

- 혁신행정과 주도로 혁신토론회 토요 혁신학습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비전·목표와 연계성은 약하여 조직의 성장과 발전으로 구체화하는 데에는 미흡
- * 04년 행자부 평가단의 평가결과 학습모임과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토론문화가 정착되어가나 금감원과의 업무 효율화 및 지식 정보공유 측면에 대해 상호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 혁신학습·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05년 추진방향 수립(05.2)

- 혁신학습담당관(혁신행정과장)을 지정하고 혁신행정과는 전체 교육과정(계획수립·운영 및 관리)을 총괄·지원하는 한편
 - 금감위·원 「혁신실무 T/F*」를 통해 양기관 공동의 학습체계 구축
 - * 혁신행정과장 교육담당 사무관(금감위), 기획조정국장 변화혁신팀장 인력개발실장(금감원)
- 학습과 교육훈련 목표체계를 조직의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성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과관리와 연계되도록 설계
- * 다양한 학습 활동 및 성과를 통합성과관리에 반영하여 인사조직운영에 활용

(성과관리 측면)



(혁신관리방향)

※ 학습유형별 주요내용 및 실적

유형	명칭	내 용	교육방식	주요실적
일 자체를 잘 하기 위한 학습	업무능력 개발 연수	금감원, 증권연수원 금융연수원 등 각종 연수기관 교육을 통하여 소관업무 전문성 제고	강연·토론, E-learning	22명

	금융포럼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집합교육·토론	3회
혁신이론·사례 등 혁신을 잘 하기 위한 학습	내부 워크숍	혁신방향 공유를 위한 전직원 토론회,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우수혁신사례 발표 등	강연, Brainstorming, 발표 등	3회(전직원)
	전문기관 혁신학습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하여 민간혁신기법을 학습하고 조직의 혁신역량과 리더십을 고취	위탁교육	3개기관 총9회
	중공교 혁신교육	5급이상 간부급에 혁신의 실행 및 가속화에 필요한 혁신관리능력 교육	위탁교육	8명(국장2, 과장3, 사무관3)
채택된 업무 혁신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혁신과제 학습단	혁신과제 추진 및 문제해결	과제해결을 위한 brainstorming	7개
	혁신학습 동아리	주요 이슈 및 전문영역에 대한 토론·학습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에 반영	토론·연구활동	20개
	토요 혁신학습	혁신관련 외부강사 특강 및 토론	강연 토론	10회(전직원)
개인의 역량과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	직무관련 전문학습	직급 및 직책에 맞는 전문학습 (비상대비 실무자과정 facilitator 역할과 스킬과정 등)	교육·강연, 사이버연수	16명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은 제외

□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혁신의 내재화” 구현

- 각 동아리별 토론회, 연구주제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총500여건의 결과물(연구자료)을 사무자동화시스템에 게시 전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조직역량 강화

* 총 21개 학습동아리에 400여명의 직원이 참여중임(04년에는 6개 184명)

- 문제해결 중심의 **Action-Learning** 학습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학습노력이 업무성과 및 개선으로 구현

* 예시 : 권역별 실무자가 대거 민원제도개선 혁신동아리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착안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자민원 효율화를 위한 혁신안 도출

⇒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05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04년 하반기 대비상승(50.5→53.9))

- 혁신학습이 업무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학습을 통한 혁신의 내재화**” 정착

* **PEF 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성공적PEF의 핵심키워드인 “SLIM”은 위원장의 외부 기조연설에도 활용되어 언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음(10.13, 서울경제·한국경제 등)

* SLIM : ①Sourcing & Specialty(투자대상 발견능력 및 특정산업 전문성), ②Long & Leveraged Investment(장기 및 차입투자), ③Incentive & Integrity(운용자 인센티브 및 도덕성), ④Management(우수한 경영진)

□ 학습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

○ 혁신카페(Innovation Cafe) 개설

- 각종 혁신서적 및 전문서적을 비치하고 24시간 개방하여 혁신과제 학습단 학습동아리 및 기타 토론회 등에 자유로이 활용

* 학습여건개선 전담자(기록관리사)를 지정하여 공간배정·서적정리·학습비지원 등을 전담

○ 학습동아리 및 혁신과제 학습단에 연간 학습지원비 제공

○ 간부가 참여하는 ‘학습 동아리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국장급 이상이 학습동아리 대표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월1회)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혁신행정과장 등 과장급은 혁신리더로서 여건조성 자료제공·예산지원 등 학습 동아리 활동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간부의 정책결정에 활용토록 가교역할 수행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개최(연1회)

- 학습동아리 주요성과에 대해 직원이 공유·토론하여 조직의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한편 조직내 학습분위기를 고취
-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학습결과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학습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 최근 3년간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03	‘04	‘05	‘06
편성액	16,350	13,950	63,850	68,201
1인당 교육비	233	199	862	922
증가율		14.7% ↓	350% ↑*	7% ↑
집행액	5,500	12,832	57,000	
집행률	33.6%	92%	90%(12월 예상)	

※ 각종 교육훈련비, 강사료, 교육여비, 혁신교육 지원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비는 포함하지 않음

○ ‘05년에 전문기관 위탁 혁신교육을 위한 예산(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교육비(44,800천원))를 추가 편성하여 조직의 학습역량을 대폭 강화

- 금감위·금감원 혁신문화와 수준을 진단한 후‘맞춤형’ 혁신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삼성인재개발원 LG인재리움 현대인재개발원 등3개기관 총9회)

○ '05년부터는 '금감위·금감원 합동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성장 차원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①일 자체를 잘 하기 위한 학습, ②혁신이론·사례 등 혁신을 잘하기 위한 학습
③채택된 업무혁신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④개인의 역량과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 전문성 강화 교육(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등) 및 혁신능력 개발교육(현대, LG 등) 등 외부교육은 현 예산상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1인당 교육비 20~50만원)

⇒ 인터넷을 이용한 E-learning, 금감원 업무능력개발연수 공공부문 교육(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 예산수준에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운영중임

□ 학습활동에 따른 인사반영 정도

○ 05년 전반기까지는 '혁신 마일리지'를 통하여 분기별로 학습활동 참여 및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포상 실시

○ 05년 하반기부터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관리(30%)를 포함한 각 부문에 대해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인사·조직·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 평가주체 : 합동대책반, 혁신 실무T/F,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

- 학습실적은 '혁신관리(30%)'를 통하여 평가하며, 혁신관리 평가는 '과정 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

< 혁신관리 중 학습과 역량 평가방법 >

	과정평가(30)	성과평가(70)
평가방법	· 학습 참여도에 따라 혁신마일리지 부여	· 학습성과 및 부서별 혁신역량에 대해 정성/정량 평가
주요지표	· 각종 학습(전문성, 혁신 등)참여, 혁신 공유방 및 제안방 등록 혁신관련 토론회 참여, 학습활동 실적 보고, 행자부 혁신포털 등록시 획득점수 등 건별로 개인별 마일리지 부여	· 혁신문화 확산정도 학습여건 조성정도, 학습결과 활용정도 등에 대해 부서별 평가후 개인별 기여도 평가

평가지표명

학습결과 활용노력

□ '혁신과제 학습단'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정책품질 개선

- 05년 고유과제 및 공통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제담당 부서의 **혁신리더(과장급)**를 단장으로 하는 학습단(7개)을 구성·운영
 - 구성원간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사례조사 도입방안 및 원활한 정착방안 모색 장애요인 및 문제점 해결 등의역할수행(**문제해결형 학습방법(Action-Learning)** 구현)

학습단 명칭	단 장	혁신학습 주요활동 및 성과
감독행태개선	혁신행정과장	· 감독당국의 검사·감독행태에 대한 불만접수 처리 창구 개설(05.6), 활성화 방안 마련(익명문제 등 05.9), · 금융산업의 확대·변형 발전 및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업계 및 소비자패널 구성하여 균형적인 감독행정문화 기반 조성(05.6)
성과관리	혁신행정과장	· 조직의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 개발(05.2) · 정책과제·혁신과제의 공정한 평가 및 결과의 활용방안 모색(연중) · 다양한 평가의 통합·개선 및 개인·부서 목표와 조직목표간 연계방안 강구(05.10)
비조치의견서	감독정책과장	· 외국사례 조사(05.1~2), 제도도입시 금감위·원 역할 분담방안 마련(05.4), 운영규정 마련 및 도입(05.7)
정보의제관리	기획과장	· 타부처 우수사례 조사(05.2), 시스템 구축(05.4), 조직내 활성화 방안논의(연중), 정보의제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05.11) · 각 국 소관 정책정보를 상황실로 통보하고 상황실은 이종합·피드백하여 위원회내 정보공유의 핵심가고 역할 수행
규제개혁	기획과장	·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 실무검토'(05.4~8)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심사범위 확대를 위한 훈령개정
정책품질관리	감독정책과장	· 감독당국 특성에 맞는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도입방안 논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점검·평가방안 논의
민원제도개선	혁신행정과장 소보센터국장	·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 발(05.4) 및 개선방안 검토(연중) · 과제발굴 모니터단 신설 등 민원 제도개선 운영체계 확대 개편(05.5)

□ 혁신활동 및 지식공유 활성화 노력

< 내부 정보공유 및 혁신확산 활동 >

- 금융정보교환망 콜센터, 홈페이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입수된 각종 고객 기업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에 가공·축적하여 감독당국의 지식역량을 극대화
 - * 전권역 금융회사의 경영정보사업보고서 금융시장 통계분석 조기정보 관련 정보 등을 통합관리
- 연구논문, 조사연구자료, 이슈해설, 법규정보, 업무편람 등을 포함한 지식 공유방을 통하여 직원간 정보 교류·공유를 확대하고 조직역량을 강화
- 직원들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이를 실제업무에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변화혁신제안제도'를 운영
- '혁신공유방'을 운영하여 혁신관련한 각종 자료 및 서적을 공유하고타기관 또는 외국 혁신사례 학습 등 혁신학습의 장으로 활용
- '검사지식공유마당' 및 'RM정보마당'을 시스템 구축·활용하여 새로이 도입된 RM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검사원간의 정보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 '정책품질관리자료실'을 개설하여 품질관리대상과제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기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공유 및 토론의 방으로 활용
- 각 동아리별 토론회, 연구주제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총 500여건의 결과물(연구자료)을 '학습자료방'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공유
 - * 학습 동아리별 세미나를 지속 개최하고 학습동아리 발표대회(10.13)를 통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우수활동에 포상 실시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혁신·지식 공유노력 >

-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업계 및 소비자 패널(각12명)** 구성
 - ⇒ 금융이용자가 감독정책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열린 금융감독 구현
 - * 기존의 비정규적인 제도와는 달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상시정규화하고 법적구속력을 부여
- 감독당국이 시행한 주요정책에 대해 외부인들의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금융감독정책영향평가제도’**, 업계대표와 감독기관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한 **‘건전성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
- 매년 **‘금융이용자 모니터단(약250명)’**을 선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편사항 법규위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우수 사안별로 포상금 지급
- 오피니언 리더층을 중심으로 **정책고객을 확보**,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정책, 혁신과제에 대해 차별적인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자체평가위원회’**를 확대 개편(업계·학계 전문가 확충)하여 금감위 주요 정책 및 혁신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평가작업 수행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민간위원 비율 : 66.7% → 75%)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 규제개혁 관련 업무매뉴얼규제개혁 편람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편람을 작성·배포(On-Off line)하여 지식공유 활동 강화

□ 문제해결형 혁신학습(Action-Learning)방식을 확산하여 업무능력 향상 및 정책품질 개선 구현

학습동아리	직무에의 활용	학습동아리	직무에의 활용
신BIS협약 연구회	· 외부강연초청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신BIS자기자본산출기준(안)의 보완 및 세부지침 마련시 반영	외환국제 금융포럼	· 외환·국제금융관련 정보·지식 교류의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통하여 외환·국제금융부문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등에 기여
파생 금융상품 스터디그룹	· 외국 선진 감독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규제정비사항 마련	금융분쟁 포럼	· 금융분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검토·건의
FSS 파이낸셜 포럼	· 금융산업관련 감독·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금융소비자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 국내외 금융경제 교육단체의 교육활동을 연구분석하여 금융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등
IT연구회	· IT리스크 실무 및 이론 학습 심화 IT 신기술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관리 공유를 통한 IT 부문 감독 및 감사역량 확충	민원사례 연구팀	· 민원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민원 상담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
거시금융감독 연구회	· 거시금융감독 연구 및 세미나 외부 인사초청 강연 등으로 최신이론 및 동향을 습득하여 거시금융감독 정책 수립에 기여	민원제도개선 혁신동아리	· 민원예방 및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토론 및 연구
신용리스크 연구회	· 신용평가모형 신용리스크측정모형, 여신검사사례 등에 대해 스터디 등을 통해 검사업무에 지원	외국감독제도 연구회	· 외국의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연구를 통해 부서기능조정 제도개선에 활용
시장리스크 연구회	· 토론 및 학습 등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의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	금융지주회사 연구회	· 권역별 담당자 토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도출

3. 혁신성과관리 분야

◇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부서간·직원간 혁신경쟁(innovation competition)을 촉발하고

⇒ 혁신관리를 조직의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의 내재화·정착을 유도

평가지표명

혁신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04년의 상황) 부서·개인의 혁신활동과 노력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분기별 포상을 실시하는「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04.9)하여 혁신참여의 유인체계를 구축

⇒ 혁신확산 및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수동적 혁신참여도에 마일리지비중이 높아 구체적 성과측정에는 미흡하고, 조직전체 성과관리와의 연계도 부족

□ 혁신추진 조직을 정비하여 「혁신관리·평가체계」 마련

○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합동대책반*」(05.1)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실무 T/F**」를 금감위·원 합동으로 구성(05.3)

⇒ 금감위·금감원 전체의 혁신 추진방향 장애요인 극복, 문제해결, 과제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혁신수행의 내부 평가역할 수행

□ 구체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혁신 마일리지 제도」개편(05.4)

○ 혁신 토론회·혁신학습 참여,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개별과제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 행자부 혁신포털과 연계하여 정부전체 혁신관리체계와의 부합도를 배가

□ 「통합성과관리시스템」도입(05.10)을 통해 혁신관리와 성과관리간 연계체계 확립

○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관리를 성과관리와 연계

* 9월 내부안을 마련하고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10월중 외부용역을 통하여 11월중 최종확정하여 본격 가동할 예정

※ 혁신활동 및 혁신과제의 평가·관리체계

○ '통합성과관리시스템내의' '혁신관리체계'를 통해 주요 활동지표 및 성과 지표에 따라 부서·개인별 혁신활동과 혁신과제를지속 점검하고 평가

- 혁신 참여 및 과제수행 활동은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상시적인 평가를 하고, 혁신문화 확산도 및 역량 혁신과제 진척도 및 성과는 반기별 평가 실시

· 반기별 성과평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

· 혁신과제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통해 반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

(통합성과관리체계 개요)

□ 기본방향 : ①조직목표와 부서별·개인별 성과목표를 연계 ②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객관적 평가체계를 확립 ③위원회 미션과 목표의 체계적인 관리, ④성과주의 조직문화 확립

□ 주요내용

-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홍보' 등 각종평가를 통합
-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이를 과별·개인별 성과지표와 연계
- 분야별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직급별·부서별로 각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통합성과평가에 대한 인사·조직·예산상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직내에 성과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혁신 성과관리체계 주요내용(통합평가중 30%(과정10, 성과20)반영)

- 통합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조직의 비전·미션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혁신추진의 기틀 마련
- 마일리지를 통한 과정평가(상시평가)와 주요성과를 종합평가하는성과평가(반기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인 혁신추진과 구체적 성과창출을 유도
- 통합평가와는 별도로 혁신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확산과 혁신문화 정착을 적극 유도

□ 혁신 성과평가 분야 및 평가방법

구분	분야	주요 성과지표	평가방법
과정평가	혁신포탈, 학습, 과제	활동별 마일리지	· 혁신참여 및 활동노력에 마일리지 부여(상시)
성과평가	혁신역량, 혁신과제	· 부서별 혁신비전·미션·목표의 체계도와 추진역량 · 과제별 목표대비 달성도 등	· 주요성과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반기)

□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실시

※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국제화로의 진전 및 금융시장 구조의 정교화복잡화 등 금융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므로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 04년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확정(04.8)된 이후, **A.T.Kearney**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감독역량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 **신규 감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현정원 수준에서 조직을 개편**

* 금감위 정원은 70명에서 74명으로 4명 증가

① 국정과제 추진에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직제개정

○ 금융감독당국의 혁신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담당 실무인력 증원(05.1)**

* 금감원은 04년에 비상설이었던 변화혁신/F를 ‘기획혁신팀’으로 상설화하고 주무부서로 운영하여 감독당국의 혁신을 본격화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의 토대가 되는 **증권 및 자본시장의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감독과를 신설(04.12)**하고

- 시장조사과를 폐지하여 동 기능을 타과로 이관하고 **비은행감독과** 업무를 감독정책1국으로 이관하여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제고

○ 기관의 **대외 이미지 강화** 및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하고 **정책홍보팀**을 신설(05.4)

○ 위원회 주요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공유와 지식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사 신규채용(05.6)

② 리스크 중심의 선진금융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혁신(RM제도 도입)**

○ 종전 상시감시팀, 검사기획팀, 검사팀으로의 검사업무 분산 상시감독업무 취약에 따른 임점검사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 **금융회사별로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을 두어 상시감시, 검사 계획, 현장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 등 검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 경영분석·리스크 및 IT 등 전문인력이 RM활동을 지원(상시감시인력을 80명에서 282명으로 늘리고, 검사지원인력 96명을 신규 배치)

○ 이를 통해 상시평가를 통한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체제**를 구현하고 금융회사 임점검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검사지식공유마당·RM정보마당 시스템 등 검사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감독기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 주요성과 >

- ▶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적인 상시감시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상시감시활동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 확인 등을 위해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을 적극 활용**
 - * 면담 및 조사출장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각각 62%, 338% 증가
- ▶ 상시감시활동 강화로 **현장검사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
 - * 종합검사는 전년 동기대비 51%, 부문검사는 26% 감소

③ 기타 주요사항

- 감독·검사 기능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통합하고 금융의 겸업화·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금융감독실 설치
- 거시경제/금융산업 등의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감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시감독국 신설

□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05.3)

- 04.12.31. 직제개정으로 조직 및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권한을 하부로 대폭 위임(위원장→부위원장, 11%, 05.3.9.)

□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적정성 도모

-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정원 중 8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04.12)**
 - 감독정책국 조사기획과에 증권·선물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3명 채용(05.3)**
 -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인력이 감소에도 조사처리건수가 증가하여 신속한 조사처리 효과가 가시화
 - * 조사인력 : (03) 112명 → (04) 104명 → (05.9) 86명
 - * 조사처리(1~9월) : (03) 152건 → (04) 165건 → (05) 209건
 - 위원회의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홍보팀을 신설하고 정책홍보팀장 및 정책홍보담당을 **홍보분야 유경험자 등 외부 민간전문가 2명 채용(05.6)**
 - 포털 사이트와의 전략적 제휴, Vision PR 구축, LED 전광판 홍보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 및 시작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
 - 전자정부의 실현 정보화 업무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전산전문 인력 1명을 확보(05.6)**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 계기 마련
 - 행정직렬로만 되어 있는 금감위 직제를 기술직렬이 보임 가능토록 하여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에 효율성을 기함

□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금융감독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법규에 따른 단순 반복적인 집행업무 등을 금감위원장에게 위임 →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2004. 5.14/11.12/11.24, 2005.5.13.)
 - * 안전처리 현황 : 2000~2002년중 평균 683건에서 2003~2005년중 858건으로 증가

* (04년의 상황) 「혁신 마일리지 제도(04.9)」를 도입하여 부서·개인의 혁신활동과 노력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분기별로 우수 직원 및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

→ 혁신확산 및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혁신과제에 대한성과평가체계는 미흡하고, 위원회 전체 성과관리와의 연계도 부족

⇒ '05년에는 혁신담당관 및 혁신실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및 보상과 더불어 혁신 우수자에 대한 유인체계를 확고히 함

※ 혁신담당관 및 혁신담당자에 대한 보상실적

- ▶ '04년 혁신추진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하여 혁신담당관에인간휴직 기회를 부여(05.2)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배치(05.7, 증권감독과장 보임)
- ▶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부이사관 승진(05.10)
- ▶ 혁신 우수자에 런던시청과의 협의로 실시된 영국 금융감독기(FSA) 및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선진 금융감독체계 학습기회를 우선부여하여 혁신추진에 참(05.2)

□ (상반기) 「혁신 마일리지 제도」 개편(05.4)

○ 혁신 토론회·혁신학습 참여,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 행자부 혁신포탈과 연계하여 정부전체 혁신관리체계와의 부합도를 배가

⇒ 혁신활동과 참여를 넘어“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평가시스템” 마련

(상반기 포상실적)

- 1분기 우수부서 및 직원(2) 포상(4.30)
- 상반기 금감위·금감원 혁신활동 우수부서(3) 및 직원(7) 포상(7.1)

* 정보의제관리 규제개혁 등 혁신과제의 원활한 추진,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위원장상 및 포상금을 지급

※ 혁신보상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

○ 기존의 업무방식을 변경하는 혁신노력에고통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여“일한만큼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부여

⇒ 혁신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 행자부의 중간진단시 많은 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작년 대부분 D등급이던 기본과제가B~C수준으로 향상되고 고유·공통과제도 대부분 B등급 이상 획득

□ (하반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05.10)

-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홍보’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포괄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관리를 성과관리와 연계
 - * 9월 내부안을 마련하고 시물레이션 과정을 거쳤으며 10월중 외부용역을 통하여 11월중 최종확정하여 본격 가동할 예정
 - 혁신관리(30%)를 포함한 각 부문에 대해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인사·조직·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 ⇒ 기관의 비전·미션 및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부서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평가결과의 활용)

① 인사분야

- 통합성과관리 점수를 기준으로 5, 6급 일반 승진자 결정
-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 특별승급을 실시하고 우수·모범 공무원 추천
- 유학시험 대상자중 통합성과관리 우수자에 시험자격을 부여
- 통합성과관리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② 조직·예산분야 (소규모 비사업 부처로서 활용범위가 제한적임)

- 직원 결원시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에 우선배치
- 혁신공로가 인정되고 혁신부서에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희망부처 우선배치
- 일반경비중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에 대해 최하위실국 예산의 5%를 최우수실국에 배정하고, 차하위실국 예산 3%를 우수실국에 배정

③ 혁신평가에 의한 별도의 인센티브

- 상반기 혁신마일리지 및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우수직원예위원장 시상 및 포상
- 연간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과장) 및 직원에 위원장 시상 및 금강산 여행권 증정

※ 시물레이션 결과(3개부서)에 대한 직원의 반응

- 평가지표 및 기준의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나와 부서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할 것’이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냄

□ 기타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 금감위·원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상 시상 및 포상(8.30)
 - * 장애인보험가입 차별해소 보험사기 조사 혁신 금융규제 전면재정비 등 6개 사례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 포상실(10.13)

평가지표명	혁신성과 활용 및 확산 노력
-------	-----------------

< 혁신의 장애요인분석과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적용을 통한 정책품질관리 >

□ 금감위·금감원 **합동 혁신추진체계**를 통하여 혁신관리 전반 및 혁신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는 한편 **혁신의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개선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과 부서의 정책과제 수행 혁신노력 및 성과 홍보활동을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종합 평가**함으로써 **감독정책의 질을 지속 개선**

◆ 장애요인 분석 및 대응체계

구분	항목	대응체계
혁신역량	내부저항	· 기관장 혁신메시지 전송 ·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하여 혁신필요성과 혜택 강조 · 혁신성공사례의 창출 및 우수부서 직원에의 포상
	피로감	· 혁신 다짐대회 및 Happy Hour 행사를 통하여 기관장과 직원간 대화 · 혁신부서 및 혁신과제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 마인드 부족	· 토요 혁신학습(외부강사 강연) 및 외부기관 연수 실시 · 직급별 혁신 교육과정 참여(중공교 등)
	업무과다	· 5급이하 과별 인사권을 국장에 부여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 · A.T.Kearney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개편 재설계
	전문성 부족	· 업무능력 개발연수 실시(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등 전문교육 참여)
혁신과제	고유	· 과제담당 혁신리더가 총괄하고 합동대책반을 통하여 문제해결 · 외부용역 및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공통(선도)	· 선도부처별 포럼과 내부 학습단의 지속적 토론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Action-learning 학습방법 구현)
	기본	· 위·원 실무 T/F를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방안 논의

◆ 혁신과제 수행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사례

과제명	05년 초	05년 말
성과관리	· 다양한 평가제도의 분리운영 · 조직의 비전·미션과의 연계미흡	· 정책, 혁신, 홍보 등 평가를 통합하고 비전·미션과 연계하여 조직발전 도모
고충처리·패널	· 감독·감사행태에 대한 고충처리 부재 · 소비자·업계 공식 의견수렴 창구 부재	· 감독행태의 근본적 개선과 객관적·균형적 감독행정 추진기반 마련
비조치 의견서	· 금융회사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가능성으로 창업적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	·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 감독행정 구현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시 정책 수혜자에 대한 의견 반영노력 미흡	· 국민편의적 수요자 중심적 상시 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운영
정보의제 관리	· 다양한 통로로 제기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부재	· 정책정보 수집·공유·의제화·사후관리에 관한 정보의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민원·제도 개선	· 개별민원 해결에만 급급하고 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추진·관리하는 운영체계 정착

□ 감독정책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전개

- 위원장 등 간부로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품질개선 방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대상과제 총괄 점검
- 실무자를 중심으로 「정책품질관리 학습단」을 구성하여 감독정책 품질개선을 위한 세부전략 및 각 과제에 대해 착안사항별 관리방법 토론
- 주요정책과제 10개*에 대해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정책상황을 점검·관리

* ①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대비 ②대손충당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③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착륙지원 ④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등

< “책임있고 봉사하는” 감독당국 이미지 강화 및 혁신성과의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전략 다각화 노력 >

□ 올바른 정책홍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채널 개선

- (온라인 부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참여 확대 유도
- *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뉴스 실시간 제공홍보전문사이트「VISION PR」구축, '한국의 금융시장 역사·'해외의 금융감독 코너 등 신설
- (오프라인 부문) 금감위·금감원 청사 외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금융 소비자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홍보채널 마련

□ 다양한 외부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조선일보 LED전광판을 통한 금융감독정책 홍보실시(05.4부터)
- 대구 및 광주지하철의 역사 및 전동차내 전광판을 통한 금융감독정책홍보실시(05.5부터)

□ 홍보대사와 홍보영상물 활용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 개선

- 강직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텔러(양미경, 대장금 한상궁)를 홍보대사로 위촉(05.4.27)하여 감독당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생성
- 금융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05.10말 제작완료 예정)

□ 금융이용자의 정책홍보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간 정책브리핑 이슈화되는 감독정책포럼 등을 자체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금융이용자가 감독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감독관련 자료가 음성으로 제공되는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감독 정책 수요의 저변 확대(주요 단축키만을 이용한 손쉬운 정보검색 방식 채택)
- 포탈 사이트(네이버)와의 전략적 홍보 제휴 및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후원을 통하여 각종 금융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추진중)

□ 정책고객 대폭 확충 및 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PCRM) 강화

- 정책고객을 양적으로 확대(전년대비 43%증가)하는 한편 변호사·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층의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동영상 자료 탑재 등 발송자료를 질적으로 개선

* 감독정책, 혁신과제 및 성과 소개·홍보·의견수렴(04년 87건→05년 9월말 현재132건)

II . 혁신 과제

〈 소 목 차 〉

1. 고유과제

- ① 책임있고 봉사하는 감독행정문화 창달
- ② 인사·보상 및 성과관리체계 혁신
- ③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 도입

2. 공통과제

- 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구축
- ②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 ③ 기관내 정책정보 수집공유·의제화에 대한 프로세스 마련
- ④ 기관간 정보·의제관리 네트워크 구축
- ⑤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 ⑥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3. 기본과제

- ② 부조리 유발제도 개선
-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 ⑦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 ⑨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⑰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1. 고유과제

기관명	유 형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 위원회	고객관리	책임있고 봉사하는 감독행정문화 창달 (감독행태개선 및 금융업·금융소비자 패널제도 도입)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금감원 직원의 감독·검사시 발생된 고충 또는 불만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처리해 주기 위하여 고충처리 신고시스템을 마련 ⇒ 잘못된 감독행태를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고쳐나가려는 의지와 업무처리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금융회사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파악감독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 ○ 비공식의견수렴절차에 기인한 의견표명의 단편성과 제기된 의견의 선별수용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객의 의견이 감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와의 전적·능동적 참여제도가 정착되고 감독정책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린 금융감독 구현
기 존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행태에 대한 만족도 ■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 패널제도 도입여부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행태 고충처리신고시스템 도입 및 운영 (감독·검사행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 <survey>는 진행중) ○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 패널제도 도입 및 회의 개최를 통한 고객의견(voice) 청취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 수행으로 패널위원 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면이 있음

2. '05년 추진실적

① 추진 내용 및 성과 (과제목표 달성도)
가. 감독행태 개선 <input type="checkbox"/> 감독행태 고충처리신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행태 고충처리팀 운영방안 확정('05.5.31) : 3회에 걸친 금감위·금감원간 합동 혁신실무 T/F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장주요내용 : 고충처리팀 구성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 금융감독위원장 혁신메시지 공지('0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시행에 앞서 금감위·금감원 전직원에 동 제도의 목적 및 당부사항 발송 ○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권역별 협회 회의('05.6.8)를 통해 고충접수 시스템 구축방안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직원이 쉽게 불만사항(Complaints)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및 홍보방안

⇒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창을 마련하고 각 협회별로 on/off-line 방식의 접수 창구 설치

⇒ 임점검사시 고충처리 안내문을 검사원이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키로 함의

- 각 협회가 금융회사 홍보시 활용할 고충처리표준안내문 작성, 발송 (6.10)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고충신고코너(정책참여마당)를 설치(05. 7. 5)하고 시험운용후 금감원 홈페이지(위원장과의 대화방)에 링크 (On-line방식)

- 금감위 혁신행정과 및 금감원 감사실에서면신고, 방문 등 Off-line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 설치

- 각 협회 및 감독당국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에 대해 보도 자료 배포(05.7.13) 등 대외홍보 → 05.7.14부터 본격시행

- 검사착수시 검사반장이 수검기관 임직원에게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별 검사매뉴얼에 반영 (05.8.31)

⇒ 상시홍보 및 감사원의 불합리한 감독행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거양

※ 7월 개설이후 9월말 현재 '퇴사시 적립수당 관련 분쟁 등 14건을 민원이첩 처리

□ 감독·검사행태 만족도 조사

- 업무처리절차, 검사과정 및 금년에 새로이 도입된 RM제도 등 감독행정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여론평가를 통한 객관적 진단 실시(05.10)

※ 조사항목 : 업무담당자의 친절도, 업무처리절차의 명료성, 도덕성, RM(전담검사역제도)

* 조사결과의 대내외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뢰

- 조사대상 : 권역별 금융회사 임직원(300명)

* 은행 40%, 보험 28%, 증권/자산운용 22%, 비은행(중금, 상호저축, 여전) 10%

- 응답자의 응답편의를 고려하여 설문항목을 최소화하고 개방형 조사설문을 포함하여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의 설명신고를 보완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의견을 청취

⇒ 조사결과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검사행태 및 제도개선에 활용 예정

나. 금융업 및 소비자 패널설치

- 양 패널기능 : 금융업 패널은 감독정책 및 규제개혁과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 패널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개선과제를 제시

- 패널제도 도입방안 마련 경위: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 완(05.5)

*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통한 해외사례 연구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 패널제도 도입→ 제도화를 통한 구속력 제고를 위하여 패널 운영규정 별도 제정(05.8.24)

* 금융감독위원회의 훈령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규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하도록 하여 금감위 및 금감위 실무부서에 건의에 대한 응답의무 부과

-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패널 위원 구성→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패널 위원 각 12명 위촉 (05.9.30)

- 금융업패널 : 금융권역별 12개 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계전문가 위촉(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별로 1명씩 배정)

- 금융소비자패널 : 금융모니터요원, 금융소비자 및 사업자(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 금융업 및 금융소비자패널회의 개최 → 1차 회의 개최(05.9.30)

- 패널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동시 개최

② 성공 사례 제시

가. 감독행태 고충처리신고제도

- 임점검사시 검사전에 검사원이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를 사전에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각 금융권역별 검사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상시홍보**하고 검사원으로 하여금 **비합리적 검사행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 (**매뉴얼화**)
-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 임직원이 원활하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익명으로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고충을 제기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feedback**이 곤란한 점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감독당국에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협회 명의로** 감독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처리건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노력으로 감독행태를 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기관장 및 고충처리팀장**이 전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거양
- 또한 감독기관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고충뿐만 아니라 고충을 유발하다는 검사제도 왜선도 필요하다는 은행연합회 등에 의견에 따라 **감독·검사관련 제도개선사항**도 고충처리대상에 추가 (**계획일부수정**)

나. 금융업 및 소비자 패널

- 패널위원 위촉을 위한 인선 작업시 인센티브 결여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어려움 발생
→ 위원들이 패널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기존의 비정규적인 각종 위원회제도와 달리 **상시·정규화** 하는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도입
→ **임기를 지정하고(2년) 위촉장 수여식** 등을 통한 책임감과 소속감 부여
→ 인센티브를 위하여 혁신예산을 적극 활용
- 부처 내 유사 제도를 통폐합하여 **다중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참여 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
→ 패널도입으로 이해관계자의 감독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 외에 현재 새로이 구성이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의 업무를 패널에 위임함으로써 부처내 외부의견 수렴장치의 효율성 극대화(금융업패널이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감독혁신분과위원회 겸직)

③ 타 기관 성과 전파·확산 정도

- ※ 동 과제는 **금융감독기구**라는 **업무 특성**에 따라 금년 새로이 도입한 부처 고유 과제로서
- 제도 도입시부터 유관기관간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과정을 거쳐 **유관기관간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였고,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론 및 PCRM**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각 **협회별로 online 및 offline 방식의 고충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하였고, 금융업패널·소비자패널 등 제도가 보다 활성화된 이후 유사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을 적극 전파 예정

담당자

혁신행정과 최유삼 사무관 감독정책과 서재홍 사무관

기관명	유 형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성과관리	인사·보상 및 성과관리 체계 혁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p>가.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촉진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급여 차등화 등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공모인력의 수: 과거 2년 평균치(20건) 이상 * 차등급여 지급대상 인원비율: 과거 3년 평균치(30%) 이상 <p>나. 성과관리체계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혁신업무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관리하고 그 결과를 직무성과 계약 등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당년도 목표: 직무성과 계약제 실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등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 성과지표	○공모인력의 수 차등급여 지급대상 인원 비율
최종 성과지표	<p>가.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 혁신 : 공모인력의 수 차등급여 지급대상 인원비율</p> <p>나. 성과관리체계 혁신 : 성과관리 대상범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결과 활용도</p> <p>※ '성과관리체계 혁신이 동과제에 포함됨으로써 관련지표를 추가</p>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23명(당초목표 20명 대비 15.0% 초과달성) 및 차등급여 지급대상 인원비율 40% 확대(당초목표 30%) 등 당초 목표 달성 ○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 홍보'를 종합 평가하여 인사·조직 운영에 활용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애로사항	○ 대외 직위공모시 해당 전문 인력(pool)자체가 크지 않고, 시장의 기대만큼 대우를 해줄 수 없어 시장에서 검증받은 최우수 지원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움

2. '05년 추진실적

① 추진 내용 및 성과 (과제목표 달성도)
<p>가.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 혁신</p> <p>① 목표설정 및 추진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확정(04.8)된 이후, 감독역량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사 조직 혁신 추진 ○ 전문기관(A.T.Kearney)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별도의I/F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04년말) ○ 조직·인사혁신 기본방향 확정 및 추진(05.1) * 인사·보수체계 혁신 기본방향 및 목표: 외부 전문성 수용확대 내부 경쟁촉진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폭 확대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 및 조기정착⇒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서비스 제공

② 주요 추진성과

○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 폭 확대

- 성과급 차등지급 인원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05.1)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의 차등폭을 $\pm 10\%$ 에서 $\pm 15\%$ 로 확대(05.1월 규정에 반영 목표 달성)

○ 인사개방을 통한 외부 전문성 수용 확대

- 선호도가 높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직위를 우선적으로 공모하여 실질적인 내부경쟁 촉진
- ▶ 집행간부(3명), 국·실장(2명), 팀장(10명), 리스크전문가등(8명) 총 23명에 대해 대내외 공모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 20명 초과달성

○ 직위와 직급의 분리운영을 확대하여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 확대

- 능력있는 직원에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위직급 직원을 상위직위에 보임
- * 3급 13명을 senior 팀장에, 2급 팀장 7명을 junior 팀장에 보임하는 등 직위·직급분리원칙에 입각한 승진·승급인사 실시
- 성과평가 우수자에 대하여 희망보직배치 승진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급부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급부여 세부실행방안'을 마련

나. 성과관리체계 혁신

① 목표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05년 금감위 업무계획 수립(05.3)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4대 정책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연두업무보고 실(05.3)
- 금감위·금감원 공동의 '합동대책반' 구성(05.1) * 금감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공동단장
 - 정책과제, 혁신관리 등의 이행상황을 총괄점검하고 성과관리 구축전략 논의

② 성과지표 개발

- 전략지표 개발 : 4대 정책목표에 대해 14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마련 (05.3, 민간컨설팅사<IBS consulting>와 공동개발지원)
 - * 성과지표(예시) : 선제대응조치율(%) = 선제대응조치건수 /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위기상황이라고 경보한 건수 + 위기상황건수) × 100
- 관리/운영지표 개발 : 직무성과계약제상의 개인별·부서별 성과지표 마련 (05.4)
 - 위원장-실국장, 실국장-과장, 과장-서기관간 직무성과계약제를 체결하고 개인별 성과지표를 개발 (총 277개)
 - * 성과지표(예시) : 가계대출 및 연체율 모니터링 실적(정량지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내용의 적정성 (정성지표)

③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정책, 혁신관리, 정책홍보,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05.10)

- 업무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금감위 전직원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
- 기개발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하여 결과 지표와 과정지표의 충분성 검토 계량과 비계량 지표 구성의 균형성 등을 **검증(Review)** (과엔문비즈니스컨설팅 05.9~11월중순)
- 금감위 미션에 의한 전략체계의 연계 전략적 성과와 핵심업무성과의 설정 평가군 및 평가주기 등의 평가 기본항목의 정의 등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정교화**
- ※ 금감원은 균형성과기록표(BSC : Balanced Scorecard) 도입 추진

④ 주요성과

-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개인별 점수 산정**(11~12월),
- **평가결과를 인사·조직·예산에 활용**하고 평가결과 새로이 제시된 정책수요 또는 문제사업 해결을 위해 금감위/원 합동 임시조직(T/F)을 운영하고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분석하여 학습교재로 활용** (06년초 예정)

② 성공 사례 제시

가.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 혁신

- 외부전문가 수용 및 대내외 공모 확대를 통해 **경쟁분위기를 확산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
- 성과급 차등지급 인원비중 및 성과에 따른 급여의 차등폭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토대 마련**

나. 기관업무특성을 내재화한 성과관리체계 혁신

- 기관업무성격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전략수립** : 목표달성도 평가시 사전에 성과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개인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따라 평가하되, **동태적 성과평가(상황대응성 제고)**를 강조
- 금융감독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빈도는 작으나 금융시장안정 등 **정책실패를 예방한 경우(critical severity)**에는 평가자가 별도로 가점부여 성과평가의 동태성 확보 필요)
⇒ ① 목표달성도, ② 업무의 중요도 ③ 상황대응력을 종합하여 평가
- ‘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다면평가’, ‘정책홍보’ 등 **각종평가를 통합**하고,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이를 **과별·개인별 성과지표와 연계**
- 분야별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직급별·부서별로 각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③ 타 기관 성과 전파·확산 정도

- 직위·직급분리제 다면평가제도, 대내외 공모제도 및 연봉제 등 인사·보상시스템 혁신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서울보증보험) : 05. 8월
-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방법에 관한 실무자 토론회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KBS, 농업기반공사 등) : 05. 9월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이보현 서기관 최유삼 사무관 박재훈 사무관

기관명	유 형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고객 관리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 도입

1. '05년 과제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이 금융감독 당국의 향후 제재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인지 예측하는데 애로 상존 <p>⇒ 금융회사 등이 추진하려는 특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재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히는 것을 제도화하여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안정성 해소 촉진</p>
기존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치 의견서 제도 도입 여부 <p>* 신규제도 도입시기인 만큼 감독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측면에서 제도도입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활성화 여부는 보완지표로 활용</p>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 의결을 통해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05.6.24일)하고,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본격 시행(05.7~) <p>※ 동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음</p>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2. '05년 추진실적

① 추진 내용 및 성과 (과제목표 달성도)
<p>가. 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치의견서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실무검토(05.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SEC, 미국FTC, 일본금융청 등 주요국 유사제도 및 국내 관련제도 조사연구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동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한 여론수렴 - 제도도입이 우리나라 행정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비조치의견서 도입 추진방안(초안) 마련 · 보고(05.3.9일)

나. 계획 수립

-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을 위한금감위·금감원 실무부서간 협의 진행(05.3~4월)
 - 금감위·금감원 실무부서 의견수렴을 토대로 2차례 실무회의 개최(05.3.28일, 4.6일)
 - ※ 검토과정에서 비조치의견서의 법적효력 및 회신주체에 대한금감위·금감원 및 개별 실무부서간 참여한 이견이 제기되어 실무협의를 지연됨
 - 금감위·금감원 합동 T/F(금감위 상임위원 주재)를 구성하고 재협의 추진(05.5월)
 - 2차례 T/F 회의 협의(05.5.9일, 6.1일)를 바탕으로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05.6.3일)
 - ※ 합동 T/F 논의를 통해,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의 편익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및 회신방식
 - (i) 감독당국의 확정적 효력을 갖는 회신이 요구되는 규제불명확정책적 판단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 논의를 거쳐 금감위원장 명의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
 - (ii)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회신이 요구되는 규정해석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실무부서장 명의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
- ⇒ 이러한 2원적 처리절차(two-track system) 도입을 통해 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

다. 제도 도입

- 금감위·증권위 합동간담회에서「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규칙(안)」을 최종적으로 논의(05.6.17일)
- 금감위 본회의에서 동 운영규칙(안) 의결(05.6.24일)
- 금감위·금감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감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법규 항목에 이를 등재하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제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중

라. 성과 산출

- 제도시행 이후 05.9월말까지 1건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공개되었음
- 현재 증권회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문의·협의를 진행되고 있음

② 성공 사례 제시

< 성공 사례 : 교보생명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 >

- 교보생명은 교보문고에 대한 추가출자가 금융법규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해당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05.7.6일)
- 금감위는 해당 행위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영업행위에 속하는 것으로,향후 이에 대해 제재 등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비조치의견서를 회(05.8.22일)
- 교보생명은 법규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추가출자를 추진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공개(9.28일)되어 시장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전망

< 사례 평가 >

- 규제공백, 법규 불명확 등에 기인한 법적 불안정성으로 금융주체의 역동적·창의적 영업행위가 위축될 수 있으나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용을 통해 교보생명은 안정적으로 자회사출자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금융회사들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비의도적인 법규위반 등에 따른 제재가 대폭 축소되고 금융주체의 역동적·창의적 혁신행위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③ 타 기관 성과 전파·확산 정도

- 보도자료 배포 및 PCRM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을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감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법규 항목에 이를 등재하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제도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민간 금융주체들의 감독당국에 대한 규정질와 유권해석 등의 요청에 대해 금감위·금감원 실무자들이 고압적·위협기피적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일선 실무부서 직원들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도입취지 및 처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이동훈 사무관

2. 공통과제

기관명	유 형	과제 구분	세 부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	선도과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구축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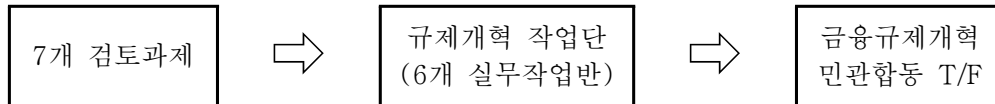
추진목표	○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체계를국민편의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체계로 전환
성과지표	1)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재정부 추진을 통하여200건 이상의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 훈령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정비시스템 구축·운영 3) 금융규제개혁 학습동아리 활동 10회 이상 4)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 추진 백서 발간 5) 실효성 있는 금융규제개혁업무편람 작성 및 전문가 교육 실시 등
'05년도 목표달성도	1)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를 통해1,453건의 금융규제를 재검토하고 이중 26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05.8) 2) 상시 수요자중심 규제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금융업패널 및 금융소비자패널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05.8) 3) 금융규제개혁 학습동아리 모임을18회 개최(05.10 현재) 4)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 추진 백서 발간(05.6, 05.8) 5) 금융규제개혁 매뉴얼 작성 및 전문가 초빙 직원교육 실(05.10)
애로사항	○ 개선과제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법령담당 부처인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절차 등으로 지연 가능성

2. '05년 추진실적

<p><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 추진></p> <p>○ 금감위(원)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감독당국위주로 이루어져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에 어려움</p> <p>○ 규제개혁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1차적으로 금융 수요자가 규제개혁 작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부 방안”을 마련(05.4)하여 추진</p> <p>- 모든 금융규제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건의과제 등록규제, 행정지도, 유사행정규제 등 7가지*로 분류하여 '05.1~5월 기간중 건의과제 316건을 포함한 총 1,453건의 검토과제를 선정</p> <p>* ①국민건의, ②기업건의, ③외국인건의, ④협회건의, ⑤등록규제, ⑥ 행정지도, ⑦유사행정규제</p> <p>- 검토대상 과제의 실무검토 단계에서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금융회사 및 기업종사자 등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참여(05.4~7)</p>

- 금융회사 임직원 등 21명이 참여한 “규제개혁 작업단”을 설치하고 과제별 실무검토 진행
- 대학교수, 금융관련 연구원 등 10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실무작업반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방안 확정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추진체계



- 약 5개월에 걸쳐 총 1,453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총 269건의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확정(05.8)
- 특히, 금융회사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금융회사 등이 건의한 과제 316건 중 157건을 개선(수용률 약 50%)
- 규제개혁 학습동아리 모임 백서발간, PCRM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혁신활동 및 성과를 적극 공유
-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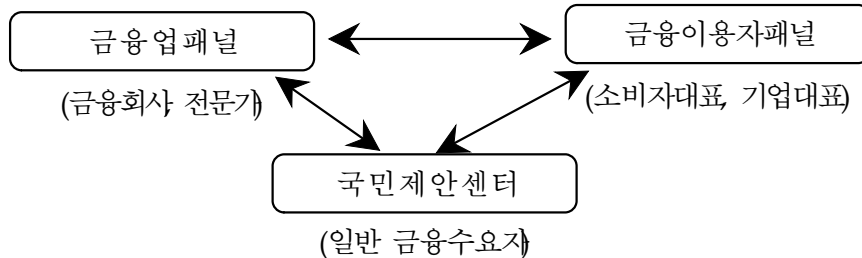
- “이번 규제 재정비 방안은 과거처럼 건수에 얽매이기 보다 기업·외국인, 관련 협회 등의 수요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8.9일자 한국경제 사설)
- “금융업계도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감독당국이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전반적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이 상당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8.9일자 머니투데이 4면)

<상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구축·운영>

- 앞서 추진한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노하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정비시스템으로서 “금융업패널 및 금융소비자패널” 제도를 도입(05.8)
- “금융업패널”은 금융회사 종사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주로 금융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반영
- “금융소비자패널”은 소비자대표, 중소기업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주로 금융이용자측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반영
- * 영국 FSA의 산업위원회(Practitioner Panel)와 소비자위원회(Consumer Panel) 등
- “금융업패널 및 금융소비자패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24명을 위촉(05.9)
- 상시적으로 패널위원들로부터 금융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칙적으로 분기 1회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예(05.9, 금융업패널 1차 회의 개최)

- 아울러, 패널제도가 전문가 및 금융회사 기업종사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금융수요자(국민)들도 금융규제개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감위 원내에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On-Off Line)도 설치(05.4)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체계



<학습,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규제개혁 혁신성과 확산>

- 활발한 규제개혁 학습동아리 모임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진 원동력 확보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규제개혁에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규제개혁이냐”는 냉소주의도 있는 것이 사실
 -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금감위(원) 규제업무 실무자(10명내외)로 “금융규제개혁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10월 현재 18회의 모임을 갖고 규제개혁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실시
 - 아울러, 금감위원장은 혁신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05.7, 05.9)
- 업무편람 발간, 규제개혁 전문가 특강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내부역량을 제고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추진과정 및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백서 발(05.6, 05.8)
 - 규제개혁 절차 및 실무자 유의사항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대폭 반영한 “금융규제개혁 업무편람”을 발간(05.10)
 - 자체규제심사위원 및 각부서 등에 업무편람을 배포
 - 각부서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초빙하여 특강 실시(05.10)
- 규제개혁 추진과정 및 결과를 PCRM을 통해 대외에 적극 홍보하는 등 혁신성 성과를 공유(05.5, 05.8)
 - * PCRM 대상은 약 1만명이며,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

담당자

기획행정실 기획과, 송현도 사무관

기관명	유 형	과제 구분	세 부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	선도과제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 부처내 규제 신설·강화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자체 규제심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총량제 도입·운영,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제고에 주력
성과지표	1)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비율 : 50% 이상 2)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 70% 이상 3)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범위 확대 5)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및 규제총량제 도입·운영 6) 규제영향분석서 시범작성 의뢰 : 2건 이상 7) 규제영향분석 업무편람 작성 및 전문가 교육실시 등
'05년도 목표달성도	1)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비율(10월 현재) : 57%(04년의 경우 9%) 2)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10월 현재) : 75%(04년의 경우 66.7%) 3) 민관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05.9)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범위를 유사행정규제규제개혁업무 전반으로 확대(05.9) 5)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05.7) 및 규제총량제 도입·운영(05.8) 6) 규제영향분석서(2건) 시범작성을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05.10) 7)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및 전문가 교육실(05.10)
예로사항	○ 법률 제·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독규정상의 규제가 증가할 경우 규제총량제 적용에 어려움 발생 ○ 규제영향분석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체계적·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단기간내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 예상

2. '05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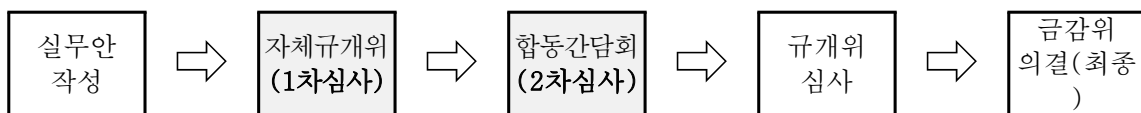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 개최비율을 높여 신설강화규제의 자체규제심사 내실화
-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폐지하고 중요·비중요 규제 전체에 대하여 월1회 정례적 대면심사를 개최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05.3)
- 04년의 경우 11회 회의중 대면심사는 1회에 그쳤으나, 05.10월 현재 7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중 4회를 대면심사(57%)
- * 12월까지 대면심사를 2회 추가 개최할 경우 대면심사 비율은 66.7%에 이를 전망

-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높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자체규제심사를 유도
 -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이외에 자산운용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추가 위촉하여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66.7%(4/6)에서 75%(6/8)로 제고(05.9)
-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여 민간위원 주도의 자체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위촉(05.9)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범위를 대폭 확대
 - 동북아금융허브 관련 규제완화 및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획 등을 논(05.1, 05.4)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범위예유사행정규제 및 "규제개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05.9)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 결과규제심사 과정에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7차 회의(05.10)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안전에 대한 지적·권고 사항이 제기

<이중 규제심사시스템 실질적 운영>

-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후 증선위금감위 합동간담회를 통한 추가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중심사시스템(double-checking system) 운영
- 실제로, 7차 회의(05.10)후 간담회 논의과정에서 퇴직연금신탁 자산운용 규제를 추가검토토록 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위험자산운용 한도 40%를 삭제)



<규제총량제(Ceiling System) 도입·운영>

- 사전예방적·총량적 규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총량제 도입방안 마련(05.6)
 - 규제 신설·강화시 동일 수만큼의 기존 규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전 심사시 논의
 - 총량관리는 원칙적으로 동일 감독규정내 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 부서내 관련 감독규정에서도 규제정비를 가능케 하여 경직적인 제도운용에 따른 문제점 보완
- 규제총량 관리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품질 제고에 기여

<사전 규제영향분석(Pre Regulatory Impact Analysis) 내실화를 통한 품질제고>

- 규제신설·강화시 BC 분석, 규제대안 발굴 경쟁제한성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및 심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감독 정책의 품질제고
-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관련 전문가 교육(05.10)

담당 실무자(3명)가 참여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05.7)

- 체계적·전문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시범작성 용역의뢰(05.10)
 - 보험회사 표준이율 및 표준해약환급금 관련 2개 안건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업무편람 작성
 - 규제개혁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토의 및 학습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업무편람” 발간(05.10)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영향분석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자 교육 실시(05.10)
- 연중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혁신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매뉴얼 발간 학습 및 토론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실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한 환류(feed-back)시스템 운용>

- 금융감독규제의 인지도 준수율 및 효과성 등 전반적인 규제순응도를 파악하여 규제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규제개혁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규제 선정(05.3) : ①유가증권 일임매매 계약체결 의무화 ②신용카드 가맹점 관리기준
 - * 04년 조사대상 규제 : ①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②신탁재산운용에 대한 제한
-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피규제집단 집행담당집단, 제3차 집단을 대상으로 순응도 조사 실시(05.5~05.6),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마련(05.7) 및 규개위 보고(05.10)

<학습,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혁신성과 확산>

- 규제개혁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이해와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규제영향분석은 요식적인 첨부자료가 아니라 특정한 규제대안의 효과들을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전달 이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이해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규제의 특성상 일정한 규제완화는 곤란하나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및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작성지침 작성요령 및 활용사례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 업무편람”을 발간(05.10)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전문화, 체계화 유도
 - 관련부서 배포 및 담당자 교육실시를 병행하여 업무편람을 배포확산
- 민간전문가 특강 실시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내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 국무조정실 주관 교육참여 자체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등
- “규제개혁 포럼” 등에 참석하여 규제영향분석 업무편람 및 구체적 운용사례 등을 규제개혁 선도부처 등에 전파하는 등 혁신성과를 공유

담당자	기획행정실 기획과 송현도 사무관
-----	-------------------

기관명	유형	과제 구분	세부 실행 과제명
금융감독위원회	정보·의제 관리	선도과제	기관내 정책정보 수집·공유·의제화에 대한 프로세스 마련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 - 정보수집 전담부서의 정보 발굴 및 정보의공유체계 마련 - 정책의제화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여부 검토 - 정보의제관리 활성화를 위한인센티브 방안 마련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 확보 및 정책상황실 설치 ○ 정책정보의 수집·발굴 및 공유 실적 ○ 정책의제화·의제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체의 구축·운영 ○ 정책의제화 실적 및 정책의제 조치시한 대비 실제정책 완료율 ○ 정보의제관련 인센티브 부여 실적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원내 정책정보 수집·공유·의제화·사후관리에 관한 정보의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완료 및 정착화 단계 * 주요실적 : 정보발굴 877건, 정책현안 점검회의 구성·주기적 개최, 의제화 건수(32건, 10건 완료, 22건 정상 추진중), 완료된 의제(10건)의 조치시한 대비 완료율 100%, 전담직원 추가확보, 학습동아리 개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조직 특성상 정보 발굴 의제관리, 사후 관리 등 정보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실무담당자들의 업무과중

2. '05년 추진실적

① 전담인력 확보 및 전담부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제관리를 위해2차례에 걸쳐 3명의 전담직원 확보(2월, 6월) ○ 금감위/금감원 각각 정책상황실 설치(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인원으로 운용되는 금감위는 별도 조직 설치가 곤란하여 기획행정실 기획과에 정책상황실 설치
② 정보의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기 정보의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금감위/금감원 조직의 특성을 살려 정보의제관리 구축 방안을 마련(15, 3.18) - 정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운영하는 등 정보수집 의제화, 사후관리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정보의제관리의 흐름을 포함한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한 일정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협조하여 포괄적인 의제관리시스템 구축

- 최적의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위해 **시범운영 실시(3월)**
 - 시범운영기간인 3월 한달간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 등 정책의제 4건을 발굴하여 등록·관리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
- 시범운영기간동안 파악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금감위·금감원 정보의제관리 시스템 **本格 운영(4월)**

— < 2005년 금감위(원) 정보 수집, 공유, 의제 발굴 상세 실적 > —

- 금감위/원 정보수집 : **877건(10. 7현재)**
- 정보 보안등급에 따라 정보등록 내용을 전직원에게 통보하여 **공유**(내부 메신저로 발송)
- 일일 정보·상황 보고를 통해 언론 등 **주요정보 사항**을 매일 위원장, 부위원장께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6.1부터)
- **정책현안 점검회의 개최 : 32회**
 - 금감위 16회: (5.26, 6.2, 9, 16, 23, 30, 7.7, 14, 21, 28, 8.4, 11, 19, 9.1, 22, 10.13), 금감원 : 16회(5.27, 6.3, 10, 17, 24, 7.1, 8, 22, 29, 8.5, 12, 19, 26, 9.2, 16, 30)
- **총 의제화건 수 : 65건** (금감위: 32, 금감원 : 33)
- **사후관리(의제 17건 완료)**
 - 일일 정보·상황 보고서(매일) 및 정책현안 점검회의 개최(주1회)
 - 월간사후관리회의(매월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에 정보의제관리현황 보고)

③ 정보의제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 각 과별 담당 실무자 13명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 10월 현재 총 5회에 걸쳐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의제관리 운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정보의제관리 동아리 1차~3차 모임(4.29, 5.16, 6.21)
 - 정보의제관리의 내용 설명·향후 운영방안 논의
 - 정책현안 점검회의 안건 양식을 확정하는 등 정보의제 관련 국조실 지침을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정보의제관리 확대실시를 위한 국조실 지침(17) 및 학습동아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의제관리시스템 보완방안” 작성]
 - * 당초 금감위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며 적시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학습동아리의 지적에 따라 **금감원과 공동으로 최종방안 마련**
 - * 일일점검회의 개최, 실·국별 정보의제전담팀 운영 등
- 정보의제관리 동아리 4차 모임(6.30) 및 5차 모임(10.19)
 - 6.28 위원장 결재후 시행된 “정보의제관리 보완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정보의제관리 시행(6.29, 국조실)” 관련 프리젠테이션 개최
 - 금감위(원)의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설명 및 활용방안에 대해 토의

④ 국조실 지침을 반영한 『금감위 정보의제 관리 보완 방안(6.28)』 마련·시행

- 정보의제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정책상황실) 실·국별 **정보의제 관리팀**을 설치 및 운영함과 동시에 **일일점검회의**를 구성·운영
- 정보·의제관리의 **조기 정착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정책상황실이 정보·의제관리 총괄업무를 수행
- **국별 정보의제 관리팀**을 구성하여 주무과장이 국 정보의제관리팀장을 겸임토록 하고 **각 과별로 사무관 1인**을 정보·의제관리 담당자로 지정

- 주무과장 주재로 매일 오전 10:00시 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보 및 정책의제 대상과제를 발굴
- 또한 기획행정실장(주재), 혁신행정과장, 감독정책과장, 증권 감독과장, 정책홍보팀장, 정책상황실장(간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구성매일 17:00시 기획행정실장실에서 개최하여 日단위로 수집되는 정보의 시급성·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의제화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즉각조치가 필요한 의제의 처리방향 등을 결정

⑤ 우수 부서 및 부원 인센티브 부여

- 2005년 정보의제관리 추진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마련(10월)
 - 정책의제 대상과제 통보시 혁신마일리지에 일정점수 부여
 - 자체 발굴·통보 3점, 정책상황실에서 통보 2점, 단순 정보통보시 1점 등
 - 최우수 부서 및 직원에 위원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12월)

⑥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FIMS*) 구축

*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FIMS) 구축방안 마련(8.24)
 -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위한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소프트웨어공학(주)에 금감위 전산시스템을 구축 의뢰(예산 990만원 소요)하고 계약을 체결(9.9)
 -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10.24)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FIMS) 구축관련 진행 경과>

- 2005.8.16. 정보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정보·의제를 수록·관리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쉽게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 2005.9.1.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FIMS) 구축 용역 계약 체결 의뢰(혁신행정과)
- 2005.9.9. 정보·의제관리 전산시스템(FIMS) 구축 용역 계약 체결
 - 계약대상자 : 소프트웨어공학(주)
 - 계약기간 : 2005.9.9~10.24
 - 계약금액 : 금9,900,000원
- 2005.10. 현재 진행상황
 - 정보의제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그룹웨어와의 연동설계를 마치고 그룹웨어와의 사용자 정보 연계와 권한설정시 그룹웨어 직위 코드 연동부분을 설계중에 있음
- 2005.10.24. 전산시스템(FIMS) 구축 완료

⑥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 정보의제관리 선도부처 공통 매뉴얼과 별도로 금감위 자체 매뉴얼 작성(10월)
 - 규범적 성격이 강한 공통 매뉴얼과는 별도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감위 자체 정보의제관리 매뉴얼 발간 예정
- 정보의제관리 사례집 발간(12월)
 - 금감위/금감원 합동으로 정책의제화된 사례중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

담당자

기획행정실 기획과 윤병원 사무관

기관명	유 형	과제 구분	세 부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정보·의제 관리	선도과제	기관간 정보·의제관리 네트워크 구축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 정책의제관리 네트워크 구축 ○ 부처간 정보공유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 정보의제관리 네트워크 활용도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상에 주요 정책 일정 등을 통보하여 전 부처에 정보를 공유 ○ 재경부, 금감원 등 관련부처와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이슈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 하였으나 전부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 - 향후 국조실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기관간 정보 의제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할 예정

2. '05년 추진실적

① 국무조정실 차원의 기관간 네트워크

- 총리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교육 참석(1. 26, 행자부 정보화교육센터)
 - 시스템 운영취지 체계 설명
 - 시스템 프리젠테이션 실습 및 매뉴얼 배포
- 국조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상에서의 정책의제1건 등록·관리('04. 8월 이후)
 - 내용 : 신흥부실문제 사전 점검 및 대비 필요청와대 검토 요청사항
- 국조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상에 주요현안 및 정책일정은라인 입력·관리 ('05. 2월이후 주 1회)
 - 향후 4주간의 주요일정 및 정책내용의 추진일자 입력
- 기관간 정보의제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부처에 통보(6. 15, 국조실)
 - 전부처 '일일 정보·상황'의 총리실 제출
 - 향후 국조실에정보·의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정보·상황과 의제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 기관간의 정보·의제관리 관련 역할분담 체계를 매뉴얼화

- 국조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 입력관련 협조 요(8.12)
 - 국무조정실 정보의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금감위 주간업무계획의 내용을 충실화하고 내용누락 또한 없도록 적극 협조
-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의정보의제관리 강의(5.20)
 - 청와대 국정상황실 정보의제관리 담당자의정보의제관리에 대한 혁신 교육 실시
-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수집 정보에 대한 금감위 대응방책 통보(10.7.)
 - 국정원 등에서 수집된 금감위 관련 시장동향정보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와대-금감위간 시장정보 공유 및 feedback

② 선도부처 차원의 기관간 네트워크

- 선도부처 과장급 혁신포럼 자료 제출(1.18)
 - 혁신포럼 운영계획에 대한 토의 및 기관별 사례 발표
- 선도부처 실무자혁신포럼 자료제출(3.10)
 -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우수사례 발표(해경청의 PIMS 성공 구축 사례)
 - 정보의제관리 매뉴얼 작성 향후 추진일정 및 기관별 추진 현황 토의
-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해경청, 업체와의 협의(3.14)
 - 해경청의 정보의제 관리시스템인PIMS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구축방법 범위, 업무프로세스, 소요예산 등 파악(해경청 시스템 구축업체인 큐브테크 등과도 협의)
- 정보의제관리 구축을 위한국방부와의 협의(3.15)
 - 정보의제관리를 선제적으로 도입·활성화한 국방부로부터 ①정책상황실의 구성·운영 ②정책현안점검회의의 구성·운영 ③정보발굴, 의제화, 사후관리 현황 파악 ④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벤치마킹
- 전산시스템 구축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처와의1차 협의(3.21)
 -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과학환경예산과 등과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람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운영으로 정보의제관리의 효율적 추진 달성
- 선도부처 국장급 혁신포럼 자료제출(4.19)
 - 청와대 정보의제관리 계획 및 부처별 사례 발표와 토의
- 선도부처 국장급 혁신포럼 자료제출(6.17)
 - ① 정보의제관리 상반기 추진현황 평가 및 향후 계획② 국방부 자체 정보의제관리 매뉴얼

소개, ③ 정보의제관리 연구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 정보의제관리 공통 매뉴얼 작성을 위한 선도부처 실무자 포럼 참(10.7)
 - 상반기의 추상적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매뉴얼 초안을 가지고 각 부처 사례 삽입 등 실무 토의**
- 정보의제관리 공통 매뉴얼 작성을 위한 1박2일 workshop 참석(10.13~14)
 - 매뉴얼 수록 내용의 확정을 위해 각 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최종 실무 협의**
-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과장급 혁신포럼」 개최(10.19(수), 15:00, 정부중앙청사 1006호)
- 정부혁신포럼 매뉴얼 **공청회 개최**(10.27)
 - 2005년 공통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보의제관리과제에 대한 매뉴얼 발표회를 주관부처 및 다른 선도부처와 함께 열어'정보의제관리'의 기본 열개 및 운영방법에 대한 마인드 제고

③ 금융감독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인 의제관리를 위하여 금융정책법령입안권을 가진 재경부와 의상시 협조체계 구축
 - 정보 수집 및 의제 관리 등에 있어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상시 기관간 협조
 - 9. 15.부터 시작된 재경부 금감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1급 정책간담회(매주 목요일)**를 정례화하여 **관련 기관간 수시 현안 협조체계 구축**(9.15, 22, 29, 10.6, 13)
 - 논의안건 : 신용평가업 시장의 규제완화 방안 실험 부실 처리 문제 등

④ 금감위/금감원간 네트워크

- 금감원과의 정보의제관리 구축방안 1차, 2차 협의(3.18, 25)
 - 효율적인 금감위/금감원 정보의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마련을 위한 협의
 - 금감위, 금감원이 각각 정보의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Dual System 형태로 운영**
- 금감위, 금감원 간 매일 수집 정보 공유 및 의제 관리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양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업무 수행을 피하고** 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고객인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 차단**

담당자

기획행정실 기획과 윤병원 사무관

기관명	유 형	과제 구분	세 부 실 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제도 개선	선도과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1. '05년 과제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제도개선 업무 추진에 전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의 운영이 활성화된 사례를 참조 ○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제도개선 자체 매뉴얼 개발
성과지표	○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여부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처 참여가능한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확산 ○ 부처 특성을 반영한 민원·제도개선 자체 매뉴얼 개발
애로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05년 추진실적

① 공통과제 추진체계 구축

- 행자부 주관의 민원·제도개선 **포럼 구성 완료(1월)**
 - 7개 선도부처(금감위, 건교부, 복지부, 식약청, 고충위,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참여
- **‘민원·제도개선 학습단’ 구성(3월~)**
 - 민원·제도개선 활성화와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혁신행정과장 및 금감위·원 실무자로 구성된 자체 학습단을 구성
 - 기타 ‘민원·제도개선 혁신동아리’, ‘민원사례 연구팀’이 구성되어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지원

② 간부층 관심유도 및 학습여건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제도개선’ 책자 배포 및 학습**
 - 행자부에서 발간한 ‘04년 각 부처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집을 직원에 배포하여 감독당국 제도개선시 참조토록 하고 학습단 회의를 통하여 벤치마킹하도록 여건 조성
 - * 금감위(원) 사례 “자동차 보험약관 개선 포함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 참석(행자부, 3.5)**
 - 금감위 부위원장 및 혁신행정과장이 참석하여 민원제도개선 의의 및 추진현황과 타부처(건교부, 병무청 등)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통합성과관리 모형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

③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 2차에 걸친 포럼 회의를 통하여 **세부실행과제 확정(05.3)**
 - 정부 전체에 민원·제도개선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와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과'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정작으로 선정
- 연구기관(서울행정학회) 선정(05.4)
 - 선도부처간 논의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실시
-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부처간 포럼(과장급 및 실무자급)을 통한 **brain-storming**
 - 총 9차에 걸친 포럼을 통하여 매뉴얼 세부안 지속 검토
 - * 1차 과장급 포럼을 금감위에서 주관하여 개최(05.4.29)하는 등 적극 참여
- 매뉴얼 초안 마련·시범적용(05.7)
 - 주관·선도·참여부처 및 연구위원이 함께 과제의 개념운영 프로세스 전부처(지자체 포함)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매뉴얼 초안 마련
 - 선도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적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포럼을 통하여 의견 수렴
- 매뉴얼 확정(05.10말)·확산
 - 전부처 공통적용가능한 매뉴얼 개발을 확정(10월말)하고 공청회·설명회 개최(11월중예정)

④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주요내용

< 과제의 목표 및 중점사항 >

- ▶ 전부처에 적용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부처민원·제도개선 효과성 및 활성화 제고
- ▶ 개념정립,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방법, 사후관리의 민원·제도개선 추진 체계 구축
- ▶ 형이상학적·피상적·이론적 결과물을 지향하고 각 기관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

< 포럼시 주요쟁점 및 해결과정 >

- 민원·제도개선 개념정립
 - 정부의 많은 일이 '제도개선'이므로 동 업무의 개념이 모호하면 실무자에 혼선 초래 가능
 - ⇒ 각 부처의 고유업무와 엄격히 구분은 하지 않되 동 업무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발굴(언론, 현장참여 등) 민원으로부터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매뉴얼에 소개
- 민원 접수·처리 등 일반 민원처리절차와의 혼재 가능성
 - 자칫, 일반 민원처리절차를 모두 포함시키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 일반 민원처리절차는 제외하고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추진·관리 등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업무흐름을 단순화할 것인지 세밀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

-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민원해소 대책회의', '민원 모니터단', '과제발굴 모니터단' 등 추진체계가 다소 복잡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상세히 하면 혼란을 미칠 우려

⇒ 선도부처간 토론을 통하여 전부처가 반드시 알아야할 핵심사항을 위주로 매뉴얼에 반영

⑤ 금감위·금감원 자체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 금감위·금감원 '민원·제도개선 학습단' 구성
 - 금감위·금감원 합동의 학습단을 구성하여 행자부 주관의 공통과제 세부실행과제 추진시 ~~금감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포럼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매뉴얼 개발 진행(7회 회의개최)
- 학습단을 중심으로 행자부 주관의 공통과제 포럼 지원
 - 세부 실행과제 선정작업 참여 및 연구용역의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 적극 개진
 - * 학습단 논의결과 수립한 '05년 민원행정추진계획' 및 '민원·제도개선 개선방안' 등을 포럼에 제출하여 매뉴얼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체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모색**
 - 금감위·금감원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정비(민원·제도개선 협의회 확대 개편 과제발굴 모니터단 신설 05.5) 등 조직내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
- 자체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
 - 공통과제 포럼에서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매뉴얼 작업 착(05.9)
 - 전부처 공통 매뉴얼을 실무부서에 시범적용 후 보완 작업을 통해 금감위금감원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 개발 완료(11월)

⑥ 주요성과

- 전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매뉴얼'을 개발(10월말)
 - ▶ 다소 생경한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
 - ▶ 각 기관의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제도권에서 논의되지 않는 민원으로 부터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
- 부처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 개발·확산(11월)
 - ▶ 금감위·금감원 특성에 맞게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금감위 부위원장 및 금감원 부원장 공동의장으로 하는 등 양기관 합동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매뉴얼에 반영
 - ▶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추진 참여 성과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민·원·제도개선 업무가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토대 구축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사무관 박재훈

기관명	유 형	과제 구분	세 부 실행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제도 개선	선도과제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착으로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권리구제를 강화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운영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 보완지표 : 민원 만족도 전년대비 향상도 및 민원 감소율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개편 및 '과제발굴 모니터단 신설 등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 발굴 추진 등 민원·제도개선 업무를 크게 활성화 감독당국 출범이후 처음으로 민원발생건수가 감소하고, '05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 '04년 하반기 50.5점에서 53.9점으로 상승
애로사항	해당사항 없음

2. '05년 추진실적

① 목표설정 및 추진과정

- 민원·제도개선 포럼 구성·활동
 - 행자부(주관부처) 및 7개 선도부처(금감위, 건교부, 복지부, 식약청, 고충위, 총리비서실 관세청)로 구성
 - 정부 전체에 민원·제도개선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와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민원·제도개선 매뉴얼 개발'과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정착'으로 세부 실행과제 선정
 - 연구기관(서울행정학회)과 함께 세부실행과제 추진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 진행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 참석(부위원장·혁신행정과장 3.5)
 - 건교부, 노동부, 환경부 및 병무청의 우수사례 학습 등
- 혁신행정과장 및 금감위·원 실무자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 학습단**' 구성(3월~)
 - 민원·제도개선 발전방향 모색 타부처 우수사례 검토 행자부의 포럼활동 지원 기타 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개선방안 논의 등
 - 기타 '민원사례연구팀' 및 '민원제도개선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민원예방 및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토론 및 연구

②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추진

- 학습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05.5.3)
 - '과제 발굴→검토·추진→사후관리'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주축으로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의장을 부위원장 및 부원장(공동의장)로 격상
- 동 업무의 출발이자 핵심인 과제발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발굴 모니터단** 신설
- * 동 내용을 행자부 주관의 포럼에 제출하여 매뉴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의 본격 가동**
 - ‘과제발굴 모니터단(월별 모임)’ 활동을 통하여 언론 개별민원 ‘금융 이용자 모니터단 제보사항’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부기관장 주재‘민원·제도개선 협의회(매분기)’ 및 기관장 주재 ‘민원해소 대책회의(매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제 해결방안 강구
- **민원·제도개선 매뉴얼(전부처 공통 및 기관 자체) 개발을 통한 업무 정형화·확산**
 - 행자부 주관의 포럼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부처에 적용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10월말) 이를 기초로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금감위·금감원 합동으로 제작(11~12월)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의 반영을 통한 “혁신의 내재화” 추진**
 - 정책, 혁신, 만족도, 정책홍보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 평가하여 인사조직 운영에 활용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혁신관리 평가중 공통과제 부문을 포함하여 전 구성원이 동 업무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05.10)
 - * 과제발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및 민원해소 대책회의 상정건수별로 마일리지를 부(당시·과정평가)하고, 업무에의 참여도 및 활성화 노력 제도개선 과제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연1회) 실시 (혁신관리 부문의 평가 반영비율은 30%)

③ 주요성과

- 혁신행정과장 및 금감위원 실무자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 학습단’을 구성하여 **Action-learning의 학습방법 구현**
 - 매뉴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등 **포럼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논의사항을 “전자민원 혁신” 및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재정비”(민원제도개선 협의회 개편 등) 등에 실제 반영추진
 - * 전자 민원창구 통합 단순 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회신을 위한 **Q&A코너 신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FAQ 확충**, 민원의 신속한 분류를 위한 **민원처리 전담자 배치** 등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확대 개편, ‘매뉴얼 개발·제작’, ‘성과관리와의 연계 등의 제반노력을 통하여 동 업무가 조직전체에 내재화되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정착
- ⇒ 국회 등 제도권에서 논의되지 못하지만 국민들의 민생에 절실히 작용하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체질화되는 계기 마련
- ‘05년 상반기중 감독당국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9.6%(3,123건) 감소 (29,461건)**
 - * 민원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금감위원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6년간 금융민원은 매년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동기간 중 민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0.0%에 달함
- ‘05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04년 하반기 50.5점에서 53.9점으로 상승**

④ 주요 성공사례(Best Practice) 및 확산·전파노력

-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 발굴·추진**
 - ‘04년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을 발굴은행·비은행 24건, 카드 22건, 보험 19건, 증권 6건)하여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등을 통해 추진(05.5~)
 - * 9월말 현재 추진실적: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92개 과제를 추진하여 63개 완료, 29개 추진중
 - * 주요 개선사항(예시) : 실적배당상품 판매시 부당권유 방지방안 마련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환조건 개선 신용카드 배송업무 개선 주채무자의 신용등급 변경 등 보증위험 변경시 설명의무 강화 등
- 금융회사의 자율적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민원의 감축 유도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05.5)하여 전 금융기관에 확산(05.7~)

- 국·내외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원처리절차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점검사시 내규반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 * 동과제는 4.29 공통과제 포럼을 통해 선도·참여부처에 소개·홍보
- 인터넷 민원 평가시스템('05.6) 및 서류민원 평가시스템 도입('05.8)
 -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 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며 직원의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자세 확립 유도
-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검토('05.6) 및 시범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05.9)
 - 감독당국은 금융민원에 대하여 채자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우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국가에서 운영중
 - * 법규위반, 비위사실 고발 등의 민원을 제외한 금융민원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의 민원처리에 앞서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자율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기회를 우선부여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을 유도하고금융회사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급증하는 금융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실시간 민원처리시스템 구축('05.3)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 강화
 -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혁신
 - * 단순질의성 상담의 즉답시스템 구축 Q&A코너 신설 및 입력항목 간소화(11개 항목→5개 항목), FAQ코너 내용 대폭 확충('05.2말 현재 166개에서 '05년 9말 현재 927개)
-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도입('05.8)
 -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알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토록 하는 등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민원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한편제공할 때마다 '민원인의 이익침해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부당이용 여부를 중점점검하는 등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적극 방지
 - * 청와대의 요청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주재 민원행정워크숍(05.9)에 참석하여 '민원자율조정제도'의 개요, 도입목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홍보 (참석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고충위)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제도개선' 책자 전부처 배포
 - 행자부에서 각부처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모아 전부처에 배포하여 제도개선참고자료로 활용
 - * 금감위(원) 사례 "자동차 보험약관 개선 포함
- 각계각층에 다양한 금융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국가 금융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
 - 지방 벽지소재 학교 근로 청소년 실업계 고교생 군 장병 및 가족 공무원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 및 금융감독당국 초청교육 실시(연인원 16,575명을 대상으로 134회에 실시)
 - * '금융현장 체험교육'(23회, 1395명), 금감위(원) 집행간부의 '일일 명예교사제도' (12회) 등
 - '금융교육 시범학교'(8개 학교, 22회, 1002명)를 지정, 방문 및 현장 체험교육 실시
 - 온라인 금융교육 포털사이트'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05.9, 25,485명))구축·운영
 - 교육부와 협조하여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금융관련내용을 수록하고('05.8), 중·고교 사회(경제)과목 교사를 위한 교과서 지도자료배포('05.3) 및 유치원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지도자료 제작 추진 중
-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금융 소비자 보호역량 강화·확산
 - 전 금융회사 민원담당 직원의 연1회 집합교육방식을 분기1회 금융권역별 전문화 교육으로변경
 - 금융회사 임직원(LG카드, KB신용정보회사)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05.4~'05.6)
 -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속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연수기회제('05.6, 2회) 등
- 기타 전자민원창구 혁신 등 금융소비자보호노력을언론에 적극 홍보(총12회)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사무관 박재훈

3. 기본과제

기관명	분 야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행정개혁	2. 부조리 유발제도 개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예고 및 청문제도 실시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부방위 개선계획에 따라 금감위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제도 도입 ○ 검사원과 금융회사간의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감사운영에 반(Feed back)함으로써 감사의 질적 수준 향상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방위 개선계획에 따라 소관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모두 완료 ○ 기타 '검사원 제척 제도(05.5)' 도입 등 RM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유착 방지 노력을 기하고 '감독행태 고충처리팀'을 설치(05.6.1.)함으로써 부조리·부패발생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카슈랑스 부당모집행위 등 주요이슈에 적기에 대응하여 관련 부조리 발생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행정예고, 청문제도 등을 정착시켜 행정절차의 투명성 대폭 강화
애로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05년 추진실적

① 행정예고 및 청문제도 준수 여부
<p>* 인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 등을 행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청문제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변경예고 제도 도입(00.11.) 후 총 208건을 예고 ○ '05년 09월말 보험업감독규정 등 총 22건의 규정개정(안)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총 29건의 규정 개정(안) 예고 ○ 05년 9월말 불이익처분 812건에 대해 의견제출통지 780건 및 청문통지 32건(의견청취 실시 109건 및 청문실시 12건, 의견반영 14건)(의견반영제출결과 및 청문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불이익 처분건수 888건 중 의견제출 853건, 청문 35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청취(의견제출 및 청문 등) 후 의견을 반영한 것은 124건 ○ '05년 09월 말 현재 신BIS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공청회 등 총 8건의 공청회 개최

- 참여마당신문고에 전자공청회 운영 중이며 국민참여마당(홈페이지)에 “공청회 안내코너”를 설치 운영
- 국민참여마당(홈페이지)에 “감독정책사전의견수렴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금융정책수립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 정책홍보자료실 PCRM 등 on/off line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종 정책자료를 일반국민에 적기에 제공하여 투명 행정구현에 기여

(참고 : 05년 9월말 정책홍보자료실 유형별 실적)

구분	알림마당 (인사·공고 포함)	최신뉴스	보도자료	보도 해명자료	금융 시장속보	금감위·증권 위 의결사항	정책자료	홍보자료*
2005	30건	302건	456건	36건	224건	31건	11건	21건

* 영상홍보방 1건, 영상정책브리핑 16건, 여의도 칼럼 2건, 홍보간행물 2건

금융감독정보	일간기사동향	외국금융감독동향
38건	232건	38건

- 정책홍보자료실에 금융감독정책해설 한국금융시장역사 해외금융감독현황 뉴스레터 신청, 전자금융감독동향 등을 설치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

○ '05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계획을 마련 (05.4.28)

- 사전권익보호를 위한 처분절차의 준수
 - 사전통지의 엄격한 실시 및 의견청취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 처분의 이유제시 및 권리구제절차 고지
- 국민참여제도로서 행정예고 등의 활성화
 - 규정변경 예고의 이행 준수 및 외부의견 수렴제도의 시행
 - 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의적극적 운영
- 행정지도의 합리적 운영: 선제적 행정지도를 통한 법규위반 예방
- 직원에 대한 행정절차에 관한 교육 강화(05.1, 05.6 직원교육 실시)

②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05.2)'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자체 계획에 따른 집행 실적

< 동 방안중 금감위 관련 사항은 다음의3개임 >

○ 감독규정 제개정시 법제처 사전심사 의무화

-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금감위 및 증권위에서 정책적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사실상 사전적 법제심사의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거쳐 감안하여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함

○ 감독규정 제개정시 입법예고절차 의무화

- 금융감독정책의 성격과 복잡성 등으로 민관합동T/F 구성, 공청회 등 다각적 방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규정의 사전예고 절차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어 시행중이므로 동 제도를 보완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내인가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와 골격 마련

- 법률에 근거와 골격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내인가제도가 신청인의 편의와 법적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권리의 행사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나 법률유보의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토록 함

③ 부방위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계획('04.10)'에 따른 관련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자체계획에 따른 집행 실적

- 부방위 개선계획에 따른 집행실적 * 금감위 해당과제는 아래의 2개로서 모두 완료함
 - 증권회사 부수업무신고서의 서식화 및 기재사항 명확화(완료)
 - 당초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에서 증권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업무개시7일전)하였으나, 증권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부수업무 신고관련 규정 삭제 05.3.29)하여 통보의무 폐지
 - 보험 장애등급 분류표 개선(완료)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05.2.5)에 따라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및 시행('05.4.1)
 - * 장애분류를 세분화하고 장애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 도입 등 보험 장애등급 분류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부패 및 부조리 발생요인 억제를 위한 자체활동
 - '금융비리 특별점검단'의 주요 조치실적(05. 1~9월)
 - 추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수사기관 고발·통보 896명
 - 보험사기사건 적발: 수사기관 고발·통보 2,291명
 - RM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유착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 등과의 사적접촉 제한(05.3. '행동강령' 개정)
 - '지적사항 변동기록부 제도(05.4.)' 및 '검사원 제척 제도(05.5.)' 도입
- **RM(Relationship Manager)제도** : 금융회사별 담당자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량과 리스크관리 수준을 상시평가하고, 결과를 현장검사와 연계하여 리스크가 많은 부문에 많은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는 제도
 - **지적사항 변동기록부 제도** :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검사지적사항이 감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진행상황을 검사원별로 매일 기록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관련서식 개정(05.4.1 시행)
 - **검사원 제척제도** :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고 있는 금융회사 감사시 감사와 동일 부서에서 일정 기간 같이 근무한 검사원은 제척
- 열린 감독기구로의 전환을 위하여 '감독행태 고충처리팀' 설치·운영(05.6.1.)
 - 금감위(원) 직원의 감독·검사업무와 관련된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처리(9월말 현재 10건)
 -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 구축(05.7)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실시(05.8)
 -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 차단
 - 각종 금융관련 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활성화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관련 꺾기제보 등 16건을 신고 받아 관련 검사국에 통보 및 적의조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경로를 다각화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
 - * 인터넷상의 부조리신고센터 이외에 민원상담전화(332) 서비스의 메뉴에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터'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링크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송재근 사무관 채보정 주사보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서재홍 사무관

기관명	분 야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행정개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소외된 계층(기초수급대상자·청년층·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활기반을 조성 ■ 보험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받는 차별요소 해소 ■ 금융교육 혜택이나 금융정보제공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가정주부, 군장병, 청소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 ■ 사금융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확대 및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 기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거래과정에서 예상되는 거래위험을 사전에 공지하는 소비자경보 제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및 서비스 혁신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결과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은 연말까지 62.5%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목표대비 125%수준) * 청년층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실적은 목표치를 다소 하회 ■ 장애인 보험계약인수를 위한 모범기준(best practice)를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의 차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사회 각계각층에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질적·양적 교육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 ■ 불법사금융업체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단속·적발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금융이용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 ■ 기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 소송지원제도 확대 등 감독당국의 정책수혜자중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구제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대일 홍보가 곤란한 청년층·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도 안내가 용이하지 않음

2. '05년 추진실적

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느 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정의했는지 (확인, 분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구제대책 수혜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관계부처·연구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Survey를 실시하여 대상 및 부채규모 등을 파악 - 05.3.23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4.12.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학자금대출연체자·군복무중인 자·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부모대출 보증에 따른 이행 부담 청년층, 04.12.31일 현재 신용불량자인 영세자영업자를 수혜대상으로 정의 ■ 보험계약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금융교육 확대 및 사금융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의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교육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이용자를 사회적계층별·특성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금융교육 지원체계를 마련·보급함으로써 금융교육의 공익적 기능 구현

- 일반 소비자群 : 지방 중소도시 금융이용자 서민층, 가정주부, 군 장병 및 가족, 노인 등
 - 청소년 및 학생群 : 지방 벽지소재 학교, 대안학교, 실업계 고교, 근로 청소년 등
- 불법 사금융업체에 의한 피해에 노출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홍보·적발체계 강화 필요

② 위에서 정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여부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구제대책 추진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한 사전 survey 실시
- 기초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전화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하는 유형의 신용회복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병행
- 청년층·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병무청·국세청·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부채규모 및 연체사유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Needs에 부합하는 신용회복방안을 마련

■ 장애인 보험판매 현황 및 계약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 장애인전용보험의 담보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구성되어 있고 사고 발생개연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판매실적 극히 저조하여 계약조건 등도 매우 불합리

■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위하여 사전 협의·조정 채널 마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 및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사후 설문조사도 실시
- 금융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주제 및 내용 강의 형태 등에 대한 양케이트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및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금융 강좌 및 강사진 확대('04년 32개, 36명 → '05년 63개, 102명)
- 청소년 금융이해력(FQ) 측정조사 정례화('03년 고등학생, '04년 중학생, '05년 초등학교)
-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체계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초·중·고교 대상 조사 정례화

■ 사금융이용자 보호체계 혁신을 통한 서민금융 육성

- 금융감독당국 홈페이지의 '제안센터' 및 '금융범죄비리신고' 코너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 제안센터(금융규제개혁센터, 금융이용자 모니터 맞춤형 이메일), 금융범죄비리신고(금융부조리, 유사금융회사신고, 보험모집질서위반, 증권범죄신고, 보험범죄신고) 등
- 금융현실경험 및 부조리 고발 제도개선 건의 등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금융이용자의 모니터'의 제보를 통한 의견 수렴 지속
-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발시 관련경험이 많은 업체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파악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정도

■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구제대책 추진

- 04.3월과 05.3월의 두차례에 걸친 금융채무 불이행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힘입어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진정국면을 지나 마무리 단계에 진입
- 04.4월 정점을 기록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05.8월말 321만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감소 중
 - * 금융채무 불이행자(만명): 04.4월 382.5⇒04.12월 361.5⇒05.8월 321.0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 기초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순회접수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의 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및 KAMCO를 통해 TV 공익광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기초수급자 지원협약 참여 금융기관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 상호저축은행 임원회의를 개최(05.8)하여 정책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강조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생·손보험회 주관으로 장애인보험 공동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인수를 위한 모범 기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유도
- 생·손보험회 및 보험회사 공동으로 장애인보험신상품을 개발하여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의 다양화·현실화를 통해 보험가입의 실효성 확보

-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 등) 공유를 통해 DB를 축적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보험회사의 다양한 장애인보험 개발에 활용 추진

■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 지방 벽지소재 학교 학생 근로 청소년 실업계 고교생 군 장병 및 가족 기능직 공무원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 및 금융감독당국 초청교육 실시(연인원 16,575명을 대상으로 134회에 실시)
 - 금융거래내용을 손쉽게 경험하고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금융현장 체험 교육제도」(23회, 1395명)를 도입하여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05.2)
 - 금감위(원) 집행간부가 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금융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일 명예교사제도」 도입(05.2, 12회)하여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 실시
 - 금융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금융교육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고「금융교육 시범학교」(8개 학교, 22회, 1002명)를 지정하여 방문교육 및 현장 체험교육 실시(05.3)
 -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함양과 교사 학부모의 금융교육 지도역량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금융교육 포털사이트「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05.9, 25,485명))구축·운영
 - 교육부와 협조하여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금융관련내용을 수록하고(05.8), 중·고교 사회(경제)과목 교사를 위한 교과서 지도자료배포(05.3) 및 유치원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지도자료 제작 추진 중

■ 사금융이용자 보호체계 혁신을 통한 서민금융 육성

-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시민단체 강연 및 언론과의 인터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
 - ‘금융질서 교란사범 주의홍보 포스터 5만부 배포(철도역·지하철역 및 대학교 등),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보도자료 배포(19회), 수시 인터뷰 및 경찰 감사원 및 시민단체 등에 강연(12회)
 - 대부업법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05.5~6월)[경찰청, 협회, 시민단체, 소비자보호관련단체 등 총94개 기관] 및 한국경제신문 여전협회 주관 카드할인(강)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후원(수기공모결과 최우수작에 대한 표창실시 예정(05.10월))
- 피해상담, 사이버 신고망 현장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를 통해 인지한 불법 사금융업체 1,266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강력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활동 실시
- 피해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청으로 통보하는, 14개 지방경찰청 및 전국 66개 경찰서를 핫라인(Hot-Line) 운영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3/4분기 현재 225개 경찰서로 확대)
 - ※ 국조실 주관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추진과 관련, 1,040개의 대책 추진반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04.12.30), 총리주재회의(05.5.2)시 단속사례발표(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불법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05.1건)에 대한 신고포상금(9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과 연대하는 단속활동 추진
- 영세서민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권금융회사로 흡수하고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회사들이 공동관리하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05.7월, 05.12월경 가동예정)
-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및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할인(강)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금융권 건전화에 기여[신용카드 할인(강)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삼성·엘지 등 7개사, 확대 예정), 4개이상 복수카드 소지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정보 공유(05.8월말 현재 약170만명의 정보 집중 올해내 800만명까지 확대 예정 등)]

■ 기타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각 장애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팝업메뉴 구성 및 음성문자확대 등 홈페이지 환경을 최적화하는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05.7월)
- 홈페이지 ‘소비자경보’란에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제(05.6회)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발생 방지
- 군복무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대일 홍보 등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강화하고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영세자영업자 등에 대출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소송지원 대상 및 대상자 요건을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

담당자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이윤재 사무관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김천현 주사보

기관명	분 야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행정개혁	7.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 금융감독당국의 양대 정책수혜자인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편의의 서비스를 강화 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추진
'05년도 목표달성도	○ 국민과의 접점지역인 민원서비스를 대폭 강화 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가 상승 (04년말 50.5점 → 05년초 53.9점) ○ 금융회사와의 문서처리과정을 전산화 고도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휴면계좌 찾아주기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확산
애로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05년 추진실적

①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여부
<p>■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금융민원의 근원적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 민원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점 모색 (괄호안은 인터넷 민원) * 민원발생추이 ('01) 24,143건(11,810)→('02) 34,099(24,033)→('03) 55,725(44,440)→ ('04) 64,476(53,040) ○ 유관기관에의 각종 금융교육 확대·체계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 유관기관의 소비자교육 담당자회(05.4), 금융회사 민원담당직원 교육시 설문조(05.4)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지원체계 강화실질적인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p>■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문서처리 전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일평균 전자공시서류 제출건수의 지속적 증가(*662건('02) → 708건('03) → 732건('04)) - 전자공시서류 열람을 위한 일평균 홈페이지 접속건수의 지속적 증가(*21만건('02)→36만건('03)→56만건('04)) ○ 전자공시시스템 관련 현행 재무제표의 작성·유통·활용상 문제점 검토(XBRL 도입 추진) - 기존 전자문서들이 기술상 한계로 재무제표를 자동으로D/B화하지 못하여 별도 수작업으로 재입력함에 따른 오류위험과 많은 시간·노력 등 사회적 비용이 소요 ○ 내부 사무자동화시스템에 금융회사가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발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개발검토 - 금융회사와 주고 받은 문서는 약13만건으로 A4 용지 기준 약 150만매(5톤트럭 2대분)에 달하며 시간, 물자 및 인건비 등 연간 약 6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개선

- 휴면예금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관계자 및 각 감독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 은행연합회 회의(05.2), 보험업계 의견 수렴(05.1), 금감위·원 감독부서와 협의(수시) 등
- 새로운 검사제도(RM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검사매뉴얼 개편방안 마련(04.5) 및 집필을 완료(04.12)하고 검사매뉴얼 자문단(학계, 회계법인 등 전문가 14명) 구성·운영(04.7~05.1)
*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이 강조됨에 따라 금융회사별 RM(Relation Manager)을 지정하여 주치의 역할 수행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별 전담조직체계
- 기타 인터넷을 통한 자문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 홈페이지의 「제안센터」 및 「금융범죄비리신고**」 코너 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금융규제개혁센터 금융이용자 모니터 맞춤형 이메일 ** 금융 부조리, 유사금융회사신고 보험모집 질서위반, 증권범죄신고 보험범죄신고

② 일선기관 서비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계획 수립 여부

■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금융민원의 근원적 해결

- '민원서비스 실시간 처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05.3)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정비(05.5)등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강화
-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 민원담당직원의 민원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회사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마련 및 실시(05.4)
- 금융관련기관간 소비자교육 인프라 구축과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교육 담당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금융소비자교육 강사 육성 계획** 마련 및 실시(05.6)

■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문서처리 전자화

-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05년 2분기 구축을 목표로 전자공시 전용 통신망 구축 예산을 확보(04)하고 장비사양, 추진일정 등 방안을 수립(05.2)
- 전자공시 홈페이지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방안 수립(05.8)
- 전자공시시스템의 XBRL 도입 추진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05.10)
-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개발 착수('05년말 개통목표)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개선

- 인터넷 자문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질의·답변코너**와 **금융사고 자료실** 전산 개발 의뢰를 완료(05.4)하고 **'금융사고 자료실' 운용계획**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제도휴면예금(휴면보험금, 휴면예탁금 등 포함) 고객 소재 파악 및 휴면예금 조회 시스템 구축 등 각 금융권역별 **휴면예금·보험금 처리 관련 개선방안**의 수립 및 집행(은행 : 휴면예금 환급절차 개선방안 추진(05.5), 보험 : 보험회사의 휴면 보험금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05.3) 등)
- 검사국과 검사지원국간의 업무협조 매뉴얼 마련(05.3), 검사원간 정보를 교환·공유시스템 구축·운영(05.3), 검사부서간, RM간 업무협의체 운영 금융회사와의 유착방지 방안 마련(05.4~5), RM업무 가이드라인 마련(05.6) 등 금융회사 **검사부담경감을 위한 RM제도 정착을 유도**
- 검사매뉴얼에 대한 자문단의 감수의견 등을 검사매뉴얼에 적극 반영하고 검사매뉴얼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중인 검사매뉴얼에 의한 시범검(Field Test) 실시(05.3~5)

③ 계획 대비 실적

■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금융민원의 근원적 해결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금융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05.5)
- Q&A코너를 신설·전담자를 배치하여 단순질의사항은 시간 이내에 답변할 수 있는 1:1 상담체제 구축
- FAQ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정보 제공기능 강화(05.2 166개에서 9월말 927개로 확충)

-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금융민원의 근본적 해결책 적극 모색
 - * 04년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권역별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 발굴·추진
- **민원사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 제정**
 -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를 통한 금융민원의 감축 유도
-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피드백 기능강화**
 - '04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결과 분석(05.4) 및 '05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분석(05.9)
-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및 활성화**
 - 전 금융회사 민원담당 직원의 연1회 집합교육방식을 분기1회 금융권역별 전문화 교육으로 변경 ('05.1/4분기 비은행권역 민원담당직원교육실시'(05.4))
 - 금융회사 임직원(LG카드, KB신용정보회사)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05.4~'05.6)
 -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속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연수기회제(05.6, 2회)
 - 보험권역(생보·손보) 민원담당직원 교육실시(05.7)
-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문서처리 전자화**
 - **전자공시시스템 전용 통신망 구축완료 ('05.5)**
 - 공시이용자 사용 집중시의 서비스를 원활화하고 공시자료 조회속도를 평균 2.8초에서 1.2초로 단축
 - 장애시 1분 이내에 백업회선으로 자동 복구되도록 하고 전자공시와 타 전산시스템의 통신망을 분리하여 시스템간 장애전달 소지를 차단하는 등 전자공시시스템 안정성도 개선
 - 전자공시 홈페이지 외부 모니터링을 가동('05.9)하고 XBRL 도입 추진계획 수립('05.10)
 - 금융회사와의 문서처리 전자화를 위한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개발('05년말 개통예정)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개선**
 -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구축 운영, 잡이익 처리전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등 금융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휴면예금의 환급절차를 정비·개선**
 - 그밖에 은행, 증권사에 대해 pop-up 시스템(신규계좌 개설시 휴면계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one-step 조회시스템(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검사원간 정보공유 활성화(1개월간 400여건 등록), RM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RM 가이드라인 제공** 등 새로운 검사제도(RM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의 상시감시체제로 전환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검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체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임점검사 부담을 경감
 - 05. 4. 4.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시켜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업무질의·답변'코너와 '금융사고 자료실'** 전산개발 완료('05. 6)
 -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지원의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창)구, 부산지원 등, '05.3월, 7월(예정) 등)하고 학생, 주부, 근로자, 군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연중 실시
 - 금융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 제포의 정착 추진(진주, 울산, 포항 등, 수시)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 사무관

기관명	분 야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행정개혁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규제규율(regulatory discipline)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프로세스의 효율화 추진 ○ 민원업무와 관련된 복잡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고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금융소비자 편의 중심으로개편하여 민원이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개선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하여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도 대폭 경감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개편하여 조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여 금융 시장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 ○ 보험사기인지 시스템을 개발 사기적발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여보험사기 적발실적을 크게 향상 ○ 전자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터넷 민원 만족도 향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 제도는 아직은 선진국이 주로 도입한 제도로써임점검사에 익숙한 우리 금융 회사에 동 제도가 체화될 수 있도록 문화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보험사기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2. '05년 추진실적

①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진단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여부
<p>◆ 금융감독업무는 본질적으로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주체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침 ⇒ 감독업무 프로세스가 왜곡될 경우, 시장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주체에 부당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p> <p>⇒ 금감위(원)는 시장규율 활용을 통한 시장친화적인 감독행정을 추구하는 한편규제규율 적용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속할 필요</p> <p>■ 금융감독기구의 본질적 기능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조직·체계 혁신 (RM제도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중 금감위·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금융감독행정 선진화 방안/F를 구성하여 해외 사례(영국, 미국, 일본, 호주) 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04.5~7) ○ '04년 상반기 민관합동 T/F, '04년 하반기중 금감위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RBS 감독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감독업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05.1) <p>⇒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및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현답 검사역(RM)제도* 도입 (05.2, 감사지원조직 편성)</p> <p>*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이 강조됨에 따라 금융회사별RM(Relation Manager)을 지정하여 주치의 역할 수행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별 전담조직체계</p>

- 증시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조사체계 개선방안」수립(05.3)
 - 관련기관 T/F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수행금감위·원, 거래소, 불공정거래 전문가 등
-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보험사기 인지절차 시스템 개편방안」추진상황 점검(05.1)
-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전자민원처리」현황 분석·개선
 - 민원처리 단계별(접수·분류·처리 등) 소요시간 분석결과 인터넷민원의분류배정 소요시간 단축(2~3일)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②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직원의 참여와 교육 실적

- 검사조직 개편(RM제도 도입)
 - 금융감독 선진화 대회 개최(05.3월) :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RM제도의 정착방안을 마련·발표하고,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RM제도 설명회 개최
 - RM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교육(05.6월) : 상시감독업무에서 RM간의 업무편차를 축소하고 금융회사 감독시 예절 등 모범규준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 검사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05.3월)
 - 'RM정보마당' 및 '검사지식마당'을 통해 검사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지식경영 네트워크를 활성화(1개월 400여건 등록)
 - 검사매뉴얼을 Checklist 위주로 구체화('05.8월)
 -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검사의 일관성 유지 및 질적수준을 향상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혁신
 - 불공정거래 조사 실무인력들이 참여하는 T/F회의 개최(05.3~5월중 4차례) : 신속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기관과 심리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MOU체결방안 협의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혁신
 - 금융소비자, 보험회사,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 관련실무교육(17회)을 실시하여 동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요령 등을언론·방송 등을 통해 전파(보도자료, TV, 라디오 인터뷰 등 10회)하여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기여
 - * 보험회사 및 일반인의 혐의정보 신고 현황: 보험회사 인지 보고(1,555건), 일반인 제보 : (61건)
-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혁신
 - 민원처리대상 조정을 위하여 민원상담팀 비제도금융조사팀 등 관계실무부서간 상호협의 및 관계 실무자에 대한 세부운영방식 교육 실시(05.5월)
 - 실시간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민원을 접수분류 하는 부서 및 Q&A를 처리하는 실무부서에 도입 취지 및 도입후 운영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부서와도 긴밀히 협조

③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실적 및 성과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체계 정착
 -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RM체제로 개편·전환(05.2~)
 - ⇒ 종전에는 검사 업무프로세스별 담당자가 달라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가 미흡했으나관별 전담자가 전 프로세스를 전담토록 함으로써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검기관의 부담도 경감
 - 상시감시업무를 강화하여 리스크중심의 감독체(IRS) 기반을 구축하고 수검부담 경감
 - ※ 현장검사 부담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종합검사는 51%, 부문검사는 26% 감소)

- 경영분석·리스크·IT관련 전문가조직이 RM을 지원하도록 하여 검사전문성 강화
- 검사매뉴얼을 Checklist 위주로 구체화(05.8월)하여 검사의 일관성 유지
- 권역별 감독기능 통합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RM정보마당' 및 '검사지식마당' 설치 등을 통해 권역별 검사원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지식경영화를 통한 검사업무 시너지효과 극대화(05.3월, 1개월간 400여건 등록)
-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분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시행(05.3월)

■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결과의 엄중한 제재 조치

- 「중요사건 우선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요도가 높은 조사대상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인력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조사·심리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05.7)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중복 최소화 조사·심리기관의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조사활성화로 조사절차의 합리성 제고
 - * 공동조사 건수 : (04이전) 0건 → (05.9현재) 14건
-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체계 개편을 통해 조사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처리시스템이 정착화
 - * 조사인력 : (03) 112명 → (04) 104명 → (05.9) 86명
 - * 조사처리(1~9월) : (03) 152건 → (04) 165건 → (05) 209건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중시투명화에 기여
 - * 검찰고발, 검찰통보(1~8월) : (03) 89건 → (04) 88건 → (05) 108건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혁신

- * 보험사고 및 계약정보의 자동적 검색 및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자 및 관련자를 찾아내서 공모 관계와 단서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MF) 이후 지능적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자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어렵고 조사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도입 추진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이 용이하게 되었고 동 시스템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분석 협조 요청(45건) 급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 체계 구축(병·의원 관련조사(6건) 공조 추진)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효율적 활용과 04년 7월 부터 대검찰청으로의 보험사기 수사의뢰 창구 단일화 및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노력으로 '04년부터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대폭 증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도입 전·후 실적비교

구 분	도 입 전	도 입 후		
	2003(A)	2004(B)	증감(B-A)	('05.01~06)
건 수	21	114	93 (443%)	(60)
인 원	757	2,576	1,819 (240%)	(1,520)
금액(억원)	48	323	275 (573%)	(331)

■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혁신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금융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순질의성 상담을 위한 질문답변(Q&A)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이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FAQ코너 내용확충('05.2말 기준 166개 등록자료를 '05.9말 현재 927개로 대폭 확충)
- 단순질의성 상담과 관련없는 주소비밀번호 등을 제외하는 등 입력내용 단순화(1개 → 5개)
- 단순질의성 상담업무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 *민원 분류배정 시간 대폭 단축(2~3일 → 3시간)
- 분류배정 후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자동답변추진 프로그램 구축
- ※ 인터넷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범 실시(8, 9월) 결과, '친절도' 53.3% → 58.2%, '처리결과 만족도' 43.4% → 5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담당자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이동훈 사무관 감독정책2국 조사기획과 정규윤 사무관

기관명	분 야	과 제 명
금융감독위원회	전자정부	17.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1. '05년 과제 수행 개요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제안, PCRM, 고충처리창구, 금융개혁 제안센터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제안에 대한 정책반영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 강화
'05년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민참여마당 내의 정책토론방국민제안 등 국민의 다양한 정책참여창구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고급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에의 반영률도 제고 ○ 오피니언 리더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 ○ 금융이용자 모니터단 금융범죄신고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피해발생에 국민 제보를 확대하여 각종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금융회사 및 다양한 계층의 금융이용자(일반국민, 청소년, 어린이 등)에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 참여 가능성을 확대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국민제안 정책토론방 등에 게재되는 글은 건설적인 제안이기보다는 금융분쟁 관련사항으로 민원으로 분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경우 금감위는 비 사업부처이므로 관련사례가 접수될 여지가 다른 부처보다 크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

2. '05년 추진실적

① 온라인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자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국민참여 창구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월 홈페이지 개편시 국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메뉴체계 및 메뉴명을 변경하고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질문답변(Q&A)', '감독정책 사전의견수렴' 신설 및 '인터넷 설문조사' 활성화 ■ 정책수요자에 차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성화 방안」 마련('05.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능동적 정책고객서비스 및 피드백 고객만족도 조사 정례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의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를 통하여 각종 금융사고 및 부조리에 적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검사업무 수행 관련 외부불만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감독행태 고충처리팀을 구성하고 「고충처리 창구」 개설('05년 고유혁신과제) ○ 모니터 선발·교육·관리, 제보내용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04.9월) ○ 예산낭비 행태 적발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05.3월)

■ 온라인을 통한 각종 정책정보 제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참여가능성을 확대

- “금융거래정보” : 금융회사별 현황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등 금융거래시 유용한 정보를 항목별·권역별로 제공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경제행위를 적극 지원

(“금융거래정보” 유형별 제공실적 05년 9월말)

구분	공통 업무자료	조사 연구리뷰	리스크 리뷰	외국환 업무자료	업무위 수탁보고	은행 업무	신BIS 업무	증권 업무*	보험 업무	비은행 업무
2005	58건	3건	14건	3건	20건	1건	14건	15건	5건	3건

* 자산유동화관련자료 5건, 외국인 국내투자 동향 10건

회계업무			검사조사업무			
회계자료	회계교실	회계감리 결과조회	검사매뉴얼	검사징구 자료양식	정보기술(IT)	업무관련 유권해석
87건*	2건	36건	7건	1건	3건	5건

* 회계법인사업보고서 77건, 회계·감사기준 4건, 재무보고에관한실무보고서 4건, 기타회계자료 2건 등

- “금융지식창고”: 소비자 정보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와 기타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적극 게시하여 피해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금융지식수준 향상을 도모

(“금융지식창고” 유형별 실적, 05년 9월말)

구분	소비자 경보	소비자 유의사항	사금융피해 예방홍보	기업 공시안내	인허가업무안내 (신청사실공고)	상품 표준약관	금융 이야기*	금융회사민 원평가결과	유사금융 식별요령
2005	54건	23건	20건	4건	25건	6건	80건	2건	5건

* 어린이를 위한 금융이야기 17건,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33건, 어른을 위한 금융 이야기 30건

- 기타 “금융지식센터코너”를 통해 금융용어사전 245건, 금융교실미디어교실, 보물창고, 호기심도가나 레즈고 도서관, 신용회복지원제도안내 금융상품비교공시 간접투자지구공시, 금융통계정보, 자동차보험소비자정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각종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 “VISION PR” 코너(영상홍보방, 영상정책브리핑 홍보대사와함께 홍보간행물 화제의 인물 금융계 사람들)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참여의식 고취
-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감독정책 등 금융전반에 관해 직접 집필하는 「여의도칼럼」 코너 신설

② 국민의 온라인 참여 및 활용실적

■ 온라인 국민참여마당 활성화

(참고 : 05년 9월말 “국민참여마당” 유형별 실적)

구분	정책참여 (업무질의·답변)	국정감사*	여론조사	제안방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정책 토론방	업무혁신
2005	5건	129건	5건	152건	59건	1960건	39건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각종 국민의견 수렴창구를 “국민참여마당”으로 단일화하고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방”, “국정감사”란을 신설 및 “제안방”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성화
- “정책제안”(‘01 191건, ‘02 245건, ‘03 161건, ‘04년 171건, ‘05.1.~9. 152건)은 총 920건으로 일반국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를 적극 지원
- “국민제안” 등록실적은 05년 9월말 12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작년 상반기 7건)
-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는 정책홍보취지에 입각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금융감독 당국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쟁점정책 52건, 국정감사제출자료 32건, 국감현장 43건, 국감 핫이슈 2건)
- 금융과 관련된 주요이슈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공개토론장을 마련 하여(“정책토론방” 신설) 향후 공개토론장에서 논의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

* 우수토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규제개혁** 국민건의 과제(6개)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규제개혁 작업단(T/F) 검토과정을 거쳐 **4개 과제***를 추진

* 1. 공시자료에 담당자 연락처 명기 등 2. 5% 보고 관련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3. 보험회사 외화증권 투자제한 완화 4. 가스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 기타 "**위원장과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1526건 접수)을 통한 온라인 참여 지속 추진

* 05년 9월 현재 총 236건 접수하여 47건 민원처리, 189건 질의에 대한 답변 등

■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정보교류 활성화

- 정책고객 확충 프로모션 실시를 통한 **양적 확대**와 변호사·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층을 **정책고객 다변화**를 병행 추진하여 정책고객 인프라 대폭확충*(전년말 대비↑42.5%)

* 정책고객수 : 6,737명('04.12말) → 9,603명('05.9말)

- '05년 9월말까지 총 132건의 정책고객서비스를 실시하여 정책고객에 대한 양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동영상자료 탑재 등 자료의 질적 개선 도모

* 04년중 정책고객서비스 실시: 총 87건

- PCRM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여(05.4, 05.9) 서비스 개선에 활용

■ 금융이용자 모니터단을 활성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부조리 신고에의 참여를 확대

- '04.9월 모니터 선발·교육·관리, 제보내용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5년부터 운영할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활성화 유도

* 우수 모니터요원 선발을 위한 선발방법 개선관심제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보등급 세분화 및 동기부여 방안 마련 등(제보등급에 따라 건별로 포상금 지급)

- 효율적인 모니터 제보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개(환)을 마련하여 개발중

※ 유형별 실적 *'05 상반기 제보실적 445건으로 전년동기(405건)대비 10% 증가

구분	법규위반	피해구제	금융현실경험	제도개선건의	부조리고발	기타	계
2005. 1/4	33	6	61	116	22	67	305
2005. 2/4	15	9	25	45	11	35	140

* 등급별 실적 : 2등급(2), 3등급(21), 4등급(174), 5등급(248)

* 주요사례 : 보험관련서류 발송시 타인의 청약서가 오발송 되었고재 발송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면지에 청약서를 복사·발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SK생명에 관련 사실 통보(05.1) 및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관련 내용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시 참고

- "**금융범죄·비리신고센터**" 운영실적(05.9월말) : 유사금융회사신고(476건), 금융부조리 신고(2950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200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152건),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14건),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638건), 인터넷보험범죄신고(152건), 불법외환거래신고(12건), 허위·과장공시신고(13건), 보험상품공시위반신고(258건), 불법펀드신고(4건)

※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카슈랑스 부당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도 링크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비치된 상품 안내자료 및 보험약관에도 동 신고센터를 안내

- 감독행태 고충처리팀 구성 및 「**고충처리 창구**」 개설(05년 고유혁신과제)

- 감독·검사업무 수행 관련 외부불만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접수처리

- 고충처리팀 구성을 완료하고(05.5) 홈페이지 및 협회 등에 불만처리 창구 신설(05.6말)

* 7월 개설이후 9월말 현재 '퇴사시 적립수당 관련 분쟁 등 14건을 민원이첩 처리

- 예산낭비 행태 적발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05.3월)

- 신고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획행정실내에「예산낭비 대응 전담반」구성·운영

* 구성(4명) : 기획행정실장(반장), 혁신행정과장 감독정책과장 증권감독과장 예산담당사무관(간사)

- 신고된 사항은 전담반에서 자체 검토하여 조치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재정관리점검단에 보고

담당자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김천현 주사보

목 차

06년 혁신관리 실적보고서

2006. 11.

금융감독위원회

I. 혁신리더십

1. 혁신기획
2. 혁신의 실천·지원
3. 혁신의 환류

II. 혁신역량

1. 혁신조직
2. 학습활동
3. 업무 및 성과관리

III. 혁신문화

1. 혁신의 내면화
2. 혁신적 행동양식
3. 혁신의 정착·확산

IV. 혁신성과

1. 부처혁신과제의 수행
2.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혁신리더십

1. 혁신 기획

1.1.a. 혁신전략의 체계성

1.1.b.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2. 혁신의 실천·지원

1.2.a. 혁신의 실천

1.2.b. 혁신의 지원

3. 혁신의 환류

1.3.a.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1.3.b. 성과관리의 지원



금융감독위원회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기관명	평가부문
금융감독위원회	혁신 리더십

평가분야	혁신의 기획
평가지표	○ 혁신전략의 체계성 ○ 혁신전략의 실행 가능성

1.1.a 혁신전략의 체계성

□ 고려해야 할 사항 반영

<p><고객요구 및 환경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인 금융의 국제화·겸업화·대형화 추세 ▶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과 금융 공학의 발달 ▶ 우리 금융이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욕구 증대 ▶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약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제기 	→	<p>핵심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산업의 확대·균형발전 지원 등 시장 변화와 함께 가는 금융감독 전략을 추진 2. 문제해결 위주의 학습체계 정비 등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3. 통합감독시스템의 도입 등 효율적인 금융감독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p><기관의 혁신 수준·역량·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내재화로 이행하는 단계이나 혁신일치가 다소 미흡한 측면 ▶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서비스 정신, 전문성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	

□ 혁신목표 및 전략의 명확화 / 세부 혁신과제로의 구체화

◆ **혁신목표** : 국민체감형 금융감독혁신 가속화를 통해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열린 감독기구로 도약함으로써 고객 만족 극대화

우선 전략	우선 세부과제	성과(지표)
(1.고객관점 핵심전략) 시장의 변화와 함께가는 금융감독		
금융산업의 확대·균형발전 지원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을 조성하고 보험사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원	업무범위 확대 판매채널 다각화 등 규제완화 실행
자본시장의 성장동력 지원역량 강화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하고 공시부담 경감 및 이용편리성 제고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공개 실적 증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배려하는 금융감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확충하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 서민 금융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및 서민대출안내 실적 증가
(2.학습과 성장 관점 핵심전략)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배양		
문제해결 위주의 학습체계 구축	혁신일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시학습체계 강화	학습동아리의 정책건의 실적
개방적·창의적 문화 확산 유도	도전적·창의적 업무방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혁신일치의 우수사례 창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촉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확대·개선	성과평가의 활용도 제고

(3.내부 프로세스 및 인프라 관점 핵심전략)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관리시스템의 체계화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및 금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금융사고자료실 조희건수 등 시스템 활용도 증가
정보화 기반 확대를 통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을 신속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횟수 등
수요자 중심의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 시스템 구축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증가

1.1.b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 추진일정·방법 설정의 구체화 정도

① **(05년 혁신활동에 대한 반성·분석)** 혁신을 또 하나의 부담스런 업무로 바라보는 “일 따로 혁신 따로” 인식 상존 ➔ 자랑할 만한 혁신사례가 부족하고 혁신제도 운영의 형식화가 나타남



② **(06년 추진계획)**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해 혁신우수사례 등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토록 지시(성과향상 토론회, 06.3)

- (상반기) 혁업일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인프라 재정비 추진
 - ☞ 혁신로드맵을 작성공유(06.3), 혁신마일리지 개편(06.6),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 ☞ 혁신활동의 결정금감위 및 집행(금감원)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감위금감원 간 긴밀한 협조 당부(합동 TF구성)
- (중반기) 혁신활동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 공개 등 관리 강화
 - ☞ 자체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혁신의 지속성 및 성과창출 효과를 제고
- (하반기) 본격적인 성과창출, 평가 및 환류 강화
 - ☞ 혁신브랜드, 혁신 우수사례 등 가시적 성과 창출과 고객 만족도 조사성과평가를 통한 환류 추진



□ 실행성과의 측정 가능성/주기적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③ **(혁신계획의 실행성과 측정)** 간부진을 중심으로 혁신활동 실적 등을 주기적(반기별, 월별) 점검토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내 공개

- 혁신일지를 작성하고 혁신인식 설문조사(06.6)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느끼는 혁신 애로점을 파악토록 지시
- 상반기 실적 보고 후 성과창출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 실적점검을 강화
 - ☞ 간부진을 중심으로 성과창출에 매진할 것(06.9)과 실적점검 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토록 지시
 - ☞ 수요자 중심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와 혁신마일리지 성적 미흡 직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06.11)토록 지시
- PCRM 등을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주요정책, 민원, 감독행정서비스) 조사를 연2회 실시

평가분야	혁신의 실천·지원
평가지표	○ 혁신의 실천 ○ 혁신의 지원

1.2.a 혁신의 실천

□ (고객 및 이해관계자)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혁신 전파

- 금융산업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움을 수시 강조하여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갖지 못한 금융회사는 언젠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냉혹한 원리임을 인식해야 함(06.6, 증권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

- 외국자본 진입확대, 생보사 상장문제 등 중요한 금융 이슈에 대해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구체적인 해결 작업에 착수

▶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 3원칙 제시(06.3, 주한미상공회의소 강연)

: ① 실질적 공정경쟁 기반 보장(Level Playing Field), ② 내외국인 동등대우(Equal Treatment), ③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Strict Enforcement)

-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Signaling) 등 시장 리더십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관련 대출의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변화발전하려는 자세가 절실함(06.3)

□ (고객)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려 강화

- 고객 중심주의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에 대해 배려를 강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등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가 필요(06.9, Inno-Biz 금융포럼)

“마이크로 크레딧은 자선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06.11, 사회연대은행 후원의 밤)

□ (내부 고객) 출신수범을 통한 감독기구의 변화와 혁신 촉진

- 평소 감독당국의 국제적 감각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 ➡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 금융외교를 출신수범하여 외국 금융감독당국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줌

☞ 국내 관료로는 최초로 그린스펀 연준의장 면담(04.11), 美월가 최고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직접 강의하는 특별 연수프로그램 실시(06.10), IMF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06.11) 등 중요 국제회의 유치, 외국 감독당국과 총 5건의 MOU 체결

- 감독기구의 경직적·권위적 행태 타파를 위해 수요자의 편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최초로 감독당국의 업무계획을 수요자인 금융회사에게 직접 보(06.3), 감독법규에 대한 실무해석 보완 및 공개 금융통계월보 개편 등 수요자 편익 제고 방안을 지시

1.2.b 혁신의 지원

□ 혁신강화를 위한 관심과 후원

- 조직내 혁신문화의 내재화와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 혁신브랜드(전자공시시스템 DART, 정부 10대 브랜드 선정) 세계화 지원 : DART에 관심을 표명하는 베트남 금융감독당국자를 2차례 면담하고 DART수출 합의(06.10)
 - 혁신메시지 전달(7회)과 함께 혁신워크숍(06.5, 9),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06.8), 혁신브랜드 선포식(06.9), 학습동아리 행사(06.9) 등에 참여하여 혁신의지를 직접 전파
 - ☞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변화마인드 및 발표 능력 배양 필요성 강(혁신워크숍 9.21)
 - 창조성과 도전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독려하고 높이 평가
 - ☞ 조직 내부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추진토록 지시(05.7)
 - 사무관과의 대화(06.8), 중간관리층 면담(06.10) 등 직원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 경주
- 혁신이 감독기구 전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및 대국민과의 접점이 넓은 금융감독원의 혁신활동 강화를 지시
 - 금감원은 “국민 도우미로 거듭나기 위한 고객만족(CS) 경영 강화방안”을 마련(06.7)하여 추진하고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 감독기구의 혁신성과가 정부혁신 10대 브랜드, 생산성 및 서비스 분야 10대 우수사례에 모두 선정

□ 혁신추진 애로요인 해소 노력 정도

애로사항		해소 노력
▶ 일과 혁신의 괴리현상 상존 (05년 혁신성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평가에 있어 도전성, 창조성 등 혁신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지시(06.11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 혁신마일리지, 학습동아리 실적 평가 등 혁신성과 평가에 정책기여도 비중을 확대 (06.5 혁신마일리지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성과급 지급시 혁신마일리지 비중을 기존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토록 지시 ■ 추진계획과 실행, 실적점검을 주요정책과 혁신분야 공동으로 진행
▶ 자랑할 만한 혁신 우수 사례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아리를 정책과제 위주로 재편 ■ 간부들이 책임지고 대표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토록 지시(06.9)
▶ 각종 혁신제도의 형식적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추진되었던 혁신과제(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지시 ■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평정 하위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실시토록 지시

평가분야	혁신의 환류
평가지표	○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 성과관리의 지원

1.3.a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 혁신실행을 직접 모니터링

- 혁신계획의 수립(성과창출 토론회 주제)과 실적 점검(분기별·월별 실적점검보고, 직원 설문조사), 환류(평가결과 공개)까지 **혁신의 전과정을 모니터링**
- 하반기에는 중간관리층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 금감위 국과장 및 금감원 국장들과 그룹 면담을 실시(06.10)
 - 사무관과의 그룹 면담도 실국별로 실시(06.8)하여 혁신 추진의 애로 청취

□ 모니터링 결과 분석·활용 정도

분석 내용	활용(혁신전략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이 여전히 부족 - 국제사례 파악 노력, 수요자를 우선하는 자세, 프리젠테이션 스킬(Presentation Skil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문제 해결형 학습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아리 정책기여도 평가 강화 -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지식을 증진시키기위한 학습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 - 안전작성 등 정책검토시 유의사항반드시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간부들에게 별도 회의를 통해 직접 전달(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의 강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조직내 공개 강화

□ 혁신의 성과에 대한 보상 지원 정도

- 정책성과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혁신마일리지**를 재정비(06.6)하고 매월 결과 공개
- 혁신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보상 실시
 - ☞ 혁신유공자 3인 승진 2인 희망부서(은행, 보험과) 배치, 유학 특전 부여 등

1.3.b 성과관리의 지원

□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확대개편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

- 주요정책, 혁신활동 등에 대한 **외부평가와 개인평가의 연계**를 더욱 강화
- 업무추진의 혁신성(창의성, 도전성 등)을 반드시 평가기준에 반영
- 추진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수용성을 제고**할 것 등

□ 민간컨설팅 등을 통해 금감위·금감원 모두 예외 없이 조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토록 지시

-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확대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금감원에서도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07년 본격 시행)

실적평가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	(외부)정부업무평가
60%(60점) 직무성과계약 및 근평	10%(10점)	10%(10점)	20%(20점) 주요정책, 혁신관리 등

혁신역량

1. 혁신 조직

2.1.a. 중간관리층의 역할

2.1.b.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2. 학습 활동

2.2.a. 학습 체계

2.2.b. 학습 지원

2.2.c. 학습 실적

3. 업무 및 성과관리

2.3.a. 업무 관리

2.3.b.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활용



금융감독위원회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기관명	평가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역량	혁신조직

평가지표	2.1.a 중간관리층의 역할
------	-----------------

중간관리층의 혁신비전 · 전략 공유노력

□ 혁신내재화를 위한 “혁신리더 모임” 구성

- 구축배경 : 실무자보다 많은 정책권한을 보유한 중간관리층의 혁신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
- 구성 : 금감위 실국장(4명) · 과장(11명), 간사 : 혁신행정과장
- 운영 : 둘째 · 넷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개최
- 역할 : 단결력이 강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간관리층 전체가 혁신 아이디어 실행, 기관장과 직원간의 연결고리 등 혁신 내재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활동 : ① 금감위 혁신비전과 전략의 공유 및 전파, ② 학습동아리 등 조직내 학습활동 지원, ③ 혁신과제 추진을 총괄, ④ 혁신장애요인 파악 및 해소

□ 상하간 커뮤니케이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전과 혁신전략 공유전파

- 06년 혁신목표 설정 대책회의(06.1), 혁신과제선정회의(06.2) 참여 등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비전 달성을 위한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를 제시
- * 혁신리더모임 등 중간관리층의 혁신전략의 제도화 노력
 -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3F) 제시(Fair competition, Fiduciary Duty, Fully informed decision, 자산운용감독과장) →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구체적 성과 창출
 - 고령화 사회 진전에 대비하여 이에 적합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혁신리더모임 등) → 세부과제에 반영
- 혁신 및 정부업무평가 대응방안 토론회(06.3), 혁신워크숍(06.4) 등에서 국과장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전략과 과제를 전파
- * 3월 토론회: 혁신행정과장이 금감위 혁신추진전략 발표
- 4월 워크숍: 기획행정실장이 금감위 정보화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시장감독과장이 금감위 혁신수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발표

□ 학습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창출(혁신목표)을 주도

- 국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현재 각학습동아리의 후원자(mentor) 및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학습동아리 활성화 계기 마련
- * 증선위 상임위원 : Private Equity M&A 연구회, 기획행정실장 : 보고서 잘 쓰는 방법연구회, 감독정책1국장 : 금융제도연구회, 감독정책2국장 : 선진자본시장 연구회
- 혁신마인드 제고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토론회 및 혁신교육에 참석하여아이디어 제시
 - * 국과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추진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06.7.13)
 - **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국장1명, 과장2명)

중간관리층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

□ 혁신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실행

- 혁신브랜드인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해외 수출 추진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성을 제기(혁신리더모임, 06.8) → 혁신행정과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을 면담(06.9)

* 베트남 증권위원회로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금감위가 적극 협조해달라는 서신을 수신(10월)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

* 결재문서 이외의 일반보고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on-line보고를 제안하여 대면보고 최소화, 복도환경개선 아이디어 제시(미술작품전시(06.6.), 금융연표제작(06.1), 좌석배치표 개선(06.3)), 주요업무추진현황표 작성(06.6), 금융통계수첩제작(06.7), 고객환영 현수막 제작(06.10)

□ 혁신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각종 혁신아이디어를 시스템화·제도화 하는 노력 경주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금감위 정보시스템을 모두 통합하여 포탈시스템 구축(06.12)
-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감위·증권위 안건(6,800건)을 모두 DB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 제안 및 추진
- 매월 개별적으로 직원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실적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

중간관리층의 혁신장애 해소 노력

□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불만사항과 장애요소를 파악

- 평상시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혁신관련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보내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 참여

* 의사소통 및 일하는 방식(06.3.29), 정보화개선방향(06.5.16), 전자결재시스템(06.5.24), 전화친절도(06.6.1), 정책홍보 및 정보공유(06.6.2) 등에 대해 직원들과의 의사교환

- 혁신담당 국과장이 수시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
- 혁신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분석(06.6.16)
- 직급별 토론회 개최시 혁신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고충도 철저히 파악

* 지원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부서의 주무관들을 실무부서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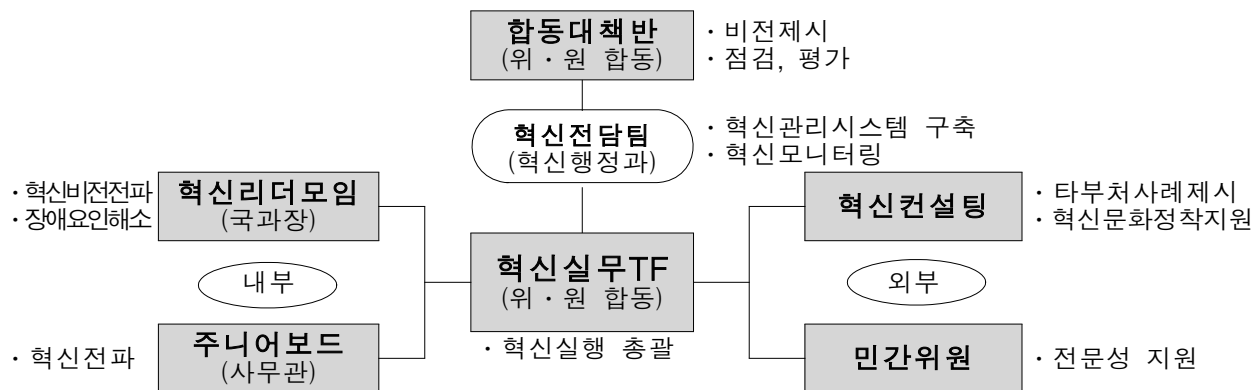
□ 파악된 장애요인을 혁신리더 모임에서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실행

혁신 장애요인	해 소 노 려
혁신피로감	행사위주, 단발성 혁신활동 지양
비자발적인 혁신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하여 생활 속의 혁신실현
일과 혁신 분리	업무 가운데 BP창출 독려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혁신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성과관리, 혁신관리 문화 정착
기관장 혁신철학 공유부족	중간관리층이 직원들과 수시로 면담을 통해 기관장의 의지 전파

실질적인 혁신선도 역량 보유

□ 혁신담당부서에 대한 인력보강 및 혁신추진 체계 강화

- 혁신전담 인력 1명 증원 : 3명 → 4명
- 혁신실무TF, 혁신리더모임, 주니어보드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혁신추진체계를 강화
 - 혁신실무TF는 매주, 혁신리더모임과 주니어보드 모임은 월회로 정례화



- 타부처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혁신 추진 인력비율
 - 혁신전담팀 4명, 혁신리더모임 15명, 주니어보드 11명 등 혁신 추진인력이 전직원(74명)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의 확산이 용이

□ 혁신관련 예산을 확보(11,900만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추진

- 혁신브랜드 및 혁신우수사례 등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 사용을 증대

□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교육 참여 등 혁신 담당부서의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 외부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접촉 및 토론을 통해 혁신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증대하고 혁신관련 주요도서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 * 혁신브랜드 민간 전문가와의 토론(6.21, 9.22), 성과관리컨설턴트와의 회의(10회이상) 등
- 다양한 혁신워크숍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타부처 혁신사례와 성과를 벤치마킹
 - * 정통부 혁신관리시스템 견학, 한국생산성본부 혁신브랜드 교육(9.25~9.26), 관세 혁신학교 교육(06.10.10) 등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한 혁신지원

□ 금감원 혁신활동을 지원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감독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의사결정(금감위)과 집행(금감원) 과정 모두에서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

- 금감위/원 합동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혁신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금감원 혁신을 지원
 - * 합동대책반, 혁신실무TF(팀장: 금감위 혁신행정과장 및 금감원 기획조정국장, 사무관과 팀장 등) 혁신브랜드 추진실무팀, 민원제도개선 실무TF, 규제개혁 실무TF 등 다양한 TF구성
- 06년 금감원 혁신추진계획 수립 및 혁신워크숍 개최시 혁신방향에 대한 협의
 - * 중간관리층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1박2일 일정의 워크숍 등을 개최(6.2~6.3)
 - * 직원들의 혁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워크숍을 9-10월 8차례에 걸쳐 실시
- 외부업체를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성과관리 문화 정착유도
 - * 외부 컨설팅업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06.2)하고 시범운영중

□ 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한 혁신지원 강화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등을 통해성과중심의 경영체제 강화 유도
 - 대내외 환경변화와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원성과계약 체결('06.7월), 개인업적평가제('06.1월) 및 우수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06.7월)을 유도하여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지원
- 혁신 내재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 정비 지원
 - 자산관리공사 경영환경에 맞는중장기 비전 및 경영전략 재정립 협의·지원
 - * KAMCO NEW VISION 선포식 개최('06.6월) ⇒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벌 자산관리회사”

타 부서 · 부처와의 협력관계 형성

□ 부서간 협력 : 각종 TF를 활용

- 주요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 담당자들로TF를 구성하는 등 탄력 대응
 - * 혁신브랜드 추진을 위해 혁신추진부서, 실무담당부서, 홍보부서 담당자들이 실무 TF를 구성하여 브랜드 비전, 로고 설정 및 홍보방안 마련
 - ** 06년 금감위 중점 공통혁신과제인 민원제도개선, 규제개혁, 기록관리 등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하여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들 교육 실시
- TF 팀원은 활동 내용을 직속 부서장에게도 보고토록 하여협력 관계를 내실화

□ 타부처와의 협력 : 혁신성과 공유에 주력

- 행자부의 혁신컨설팅 지원을 적극 수용
 - 혁신 전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10회)하여 의견교환 및 타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통혁신과제 포럼에 참가하여 혁신추진시 문제점을 해결하고혁신성과 공유
 - 민원제도개선과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 포럼에 참석하여 금감위 혁신성과를 홍보하고 타부처의 혁신성과를 공유
- 금감위 혁신성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사례를 관세청과 공유하여 관세청 밀수감시시스템 구축에 기여
- 관세혁신학교에 참석하여 관세청 혁신성과를 공유(06.10.10)

기관명	평가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역량	학습활동

평가지표	2.2.a 학습체계
------	------------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학습체계 운영

핵심가치	전문성(Professionalism), 책임성(Accountability), 고객존중(Respect)
혁신전략	(학습과 성장)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역량(국제감각, 전문성, 수요자 지향 등) 배양



학습목표	조직차원	개인차원
	직무중심의 학습문화 조성으로 성과관리 강화	Global감각과 변화마인드를 지닌 핵심인재 양성(기관장 강조)

학습전략	▶06년 교육계획 및 상시학습체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직무능력평가를 기초로 부서장과 협의하여 하반기 40시간 학습계획 수립		
	①직무능력 향상교육 강화	②혁신역량 강화	③소양교육강화
학습 프로그램	금감원 직무연수교육 - Specialist과정, Core과정 등 중공교 직무관련 교육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 학습동아리/학습조직 운용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 중공교 혁신교육 민간위탁 혁신교육 해외명사초청세미나 우수혁신부처 교육참여	여성지위향상교육 친절도 교육 반부패윤리교육 보안교육
학습방법	Action Learning, 현장학습(증권선물거래소 견학, 중소기업 체험단 등), 민간위탁, 영화감상, 강의, 토론,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실시		



평가 및 피드백	▶교육 및 워크숍 실시후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하고 학습·교육과 개인 성과간의 연관성 분석방안 강구 ▶개인별 「능력개발 실적카드」를 작성하여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07년 직무계약시 부서장은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성과평가 반영 ▶학습활동 실적은 혁신마일리지(10%) 등을 통해 개인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
----------	-------------------------------------------------------------------------------------------------------------------------------------------------------------------------------------------------------

학습동아리(CoP) 구축 · 활동

□ 학습동아리 구성 및 활성화 유도

- 05년 학습동아리 활동 분석 및 문제점 파악

05년 학습동아리 운영현황	문제점	원인분석
20개 동아리구성 동아리 발표대회개최(1회)	형식적인 활동 직원들의 관심부족 조직성과에 기여 미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간부들 관심부족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미흡

-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06.3.)하여 추진
 - 국과장급 이상 간부를 동아리 후원자(mentor) 및 팀장으로 활동하게 하고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 * 혁신마일리지의 30%가 동아리관련 마일리지이며 실적 우수동아리에 대한 포상강화
 - 동아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동아리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 협의회를 분기별 개최(4.5, 6.9, 9.6, 11.10)하여 동아리 활동상황 점검 및 발표대회 논의
 - 동아리 발표대회 개최(06.6.30, 06.11.28)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성과 등록 등을 통하여 동아리 성과를 전직원이 공유
- 학습동아리가 정책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단순 정보공유 목적이거나 학습 필요성이감소한 이슈 관련 학습 동아리는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학습 수요가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신설
 - * 부동산 금융연구회, 브랜드연구동아리, 복합금융연구회 등
 - 우수 동아리 선정 및 활동 저조 동아리 퇴출 등에 있어정책건의와 반영 실적을 최우선 고려
- 학습동아리(PriMa)에서 전직원(위원장 참석) 대상으로 학습내용과 관련한 영화를 상영하여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문화적 욕구도 충족(9.12)

□ 학습동아리활동 실적 및 조직성과 기여 사례

- 10개의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05년에 비해 강도 높게 운영
 - 조직 구성원(74명)에 비하면 많은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동아리로서 업무관련 현안을 학습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동아리 발표대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학습실적을 내실화(6.30, 11.28)
- 동아리활동이 조직성과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

동아리명	조직성과에 기여	참가인원
PriMa(자산&합병연구회)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목적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 · 법령개정안 반영	10
FTM연구회(공정거래연구)	‘단기차익 반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금감위 규정개정시 반영	12
보고서 잘 쓰는 방법 연구회	보고서 양식을 통일하여 보고서작성을 보다 효율화	8
DART人	브랜드 비전 및 미션, 슬로건과 로고 설정	7

학습편의 및 예산지원

□ 개인학습공간 등 학습 편의시설 마련 및 정비

- 기존의 혁신카페 이외의 학습공간(혁신토론방)을 새로 마련
 - * 기존의 학습공간인 혁신카페만으로는 늘어나는 학습수요에 대한 공간부족
- 개인학습을 위해 20석 정도의 열람실을 별도 확보
- 내부망을 사용한 전자예약제를 실시하여 혁신카페 사용 편의성·효율성 증대
- 기존의 교육담당자 외에 학습여건개선 전담자(기록관리사)를 지정하여 학습 공간배정·서적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 직원들이 요청한 서적을 매달 구입(20-30만원 상당)하여 혁신카페에 비치

□ 학습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 최근 4년간 학습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조직의 학습역량을 대폭강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최근 4년간 교육훈련 예산편성 현황 >

구분	2003	2004	2005	2006
편성액	16,350,000원	13,950,000원	63,850,000원	67,800,000원
1인당 교육비	233,000원	190,000원	862,000원	916,000원
증가율		14.7% ↓	350% ↑	6% ↑

※ 각종 교육훈련비, 강사료, 교육여비, 혁신교육 지원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비는 포함하지 않음

- 각 학습동아리에서 초빙한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액 지원

우수 학습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학습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 실시

상시 점검	정기적 점검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 실적점검 · 학습 설문조사 실시 · 우수지식 상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리더모임(월2회) · 혁신마일리지 공표(매월) · 학습동아리 협의회(분기) ·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학습동아리 포상 실시(연2회) ·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실시(반기) · 07년 학습계획 수립

□ 학습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 혁신마일리지 중 학습활동으로 인한 마일리지 부여를 확대
 - 학습활동에 대한 혁신마일리지 비중을 전체 혁신마일리지 중30%로 강화하고 (05년 10%)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해 마일리지를 보다 많이 부여
- 문제해결형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건의 및 반영 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등 동아리 평가기준을 정비
 - 제출한 보고서의 품질 개최횟수, 구성원의 다양성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
 - 활동실적 미흡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학습조직에 대한퇴출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긴장감을 조성

□ 인센티브 내역

- 우수 학습동아리 마일리지 우수자/우수부서 등에게 포상 실시
 - 상반기 동아리 발표대회를 통하여 각 동아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4개)에게 금전적 포상(60만원)을 실시(06.6.30)
 - 하반기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60만원)(06.11.28)
 - 상반기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실시(65만원)(06.8.)
- 매월 최우수 지식인 선정 등으로 비금전적 측면의 인센티브도 병행

전문가 자문 등 학습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국내 금융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 05년 및 06년 업무능력개발 연수 관련 강사100여명과 각 부서별 업계 전문가를 DB화하여 학습동아리 및 학습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수시로 제공
 - * 연1회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강사를 DB화하여 관리
- 학계·업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모임 구성
 - 동아리 및 각 부서 학습조직 활동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거시 금융감독 포럼」 : 금융연구기관(8명) 및 금융회사(8명), 기업(10명)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월 1회 운영
「서민금융활성화 및 감독제도 TF」 : 9명 민간위원과 8개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운영
「채권시장 제도개선 TF」 : 15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월1회 개최

□ 해외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습기회 확대

- 국제금융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학술회의 기회 마련
 - * 영국 금융감독기관(FSA) 연수실시(06.2)
 - * 국제금융전문가인 도이치뱅크그룹 수석경제학자 Nobert Walter를 초청하여 '세계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06.8.31)
 - * 美월가 최고경영진이 직접 강의하는 특별 연수프로그램 실시(06.10.16-27)
 - * IMF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06.11.6-7)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파견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송부하는 해외 금융관련자료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직원들이해외의 풍부한 학습자료를 이용

학습활동의 다양화

□ 학습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육 실시

학습 목표	조직 차원		개인 차원	
	직무중심의 학습문화 조성으로 성과관리 강화		Global 감각과 변화마인드를 지닌 핵심인재 양성	
학습 내용	학습 프로그램	학습목적	학습방법	
	① 직무능력 향상교육 강화 ·금감원 직무연수교육 - Specialist과정, Core과정 등 ·중공교 직무관련 교육 ·학습동아리/학습조직 운용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	·직무관련 전문성향상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 ·정보화 능력 제고	·금융전문가 강의 ·OJT직무연수 - 영국FSA 연수(06.2) - 과장급 및 사무관급 직무훈련실시 ·Action-Learning ·현장학습 실시 - 증권선물거래소 방문학습 - 중소기업 현장 체험단 등 ·사이버 교육실시	
	② 혁신역량 강화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 ·중공교 혁신교육 ·민간위탁 혁신교육 ·해외명사초청세미나 ·우수혁신부처 교육참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 ·글로벌 마인드 향상	·텔파이기법 ·세미나 실시 - 국제세미나(06.8.31) - 국제컨퍼런스 개최(11.7) - 중동금융연구 영어세미나 ·브레인스토밍 토론 실시 ·관련 영화감상 등	
	③ 소양교육 강화 ·성희롱예방교육 ·친절도 교육 ·반부패윤리교육 ·보안교육	·감독업무의 필수적인 높은 은 도덕적 책임감고취 ·고객 중심의 마인드 형 성	·성희롱예방 관련 전문강사초 빙 강의 ·아시아나 항공 친절 서비스교육 실시(06.11.15) ·보안전문가 보안교육(매월)	

학습이 조직성과에 기여

□ 직무능력 향상 학습결과 업무 성과로 연결

- 현장학습, Action-Learning 등 다양한 학습활동과 직무연수결과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학습조직과 동아리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 구성원간 지속적인 토론(Town-meeting)과정을 거쳐 사례조사 도입방안 및 원활한 정착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품질을 제고

학습조직	주요 성과
신BIS동호회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외부적격신용평가기관(ECAI) 지정기준(안), 필요자본 차등화 방안 등에 반영
서민금융활성화TF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사금융 피 해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
규제개혁 연구회	금융관련 규제개혁영향분석서를 제작하고 전직원에게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직·간접교육을 통해 규제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민원제도개선TF	자체 민원제도개선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민원제도개선시스템 정착
선진자본시장연구회	최근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통법)」 입법안의 투자은행 관련 규정 검토시 연구성과 반영
복합금융연구회	세계금융의 검업화·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한 감독방향 설정하는데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

□ 혁신역량 강화에 따라 다양한 혁신사례 창출

-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고취와 혁업일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
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속에서 혁신을 추구
- 소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BP대회**에 7개의 우수사례가 출품되었고
정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3개의 각각 다른 사례가 본선진출

□ 소양교육 강화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창출

- 감독행정만족도 조사결과(06.9) 05년 하반기 보다 1.5점 상승(73.1점)
-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결과(9.11~10.16) 상반기보다 3점 상승(77.8점→80.9점)
- 위기관리 및 보안의식 교육강화 결과금감위 위기관리시스템이 NSC로부터
혁신사례로 평가받음

학습성과의 전파 · 확산

□ 학습활동을 지식자원화하여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KMS)의 학습공유방을 마련하여 학습조직의 연구성과를 등록
- 지식관리시스템 정보의제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
-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06.10)
- KMS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결과를 지식자원화하여 학습조직
등에서 필요한 지식을 쉽게 공유하고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정보통합시스템 구축(06.6)
- * 전권역 금융회사 경영정보, 사업보고서, 금융시장 통계분석 정보 등을 통합관리

□ 학습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대내외 전파 노력 강화

- 학습실적 발표대회를 개최(06.6.30)하여 전직원이 학습성과를 공유
- ‘민원제도개선매뉴얼,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작성·배포하여 학습성과 전파
-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06.8.28)하여 학습성과를 대내외에 홍보
- 정부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위원회의 우수사례를 국민들에게 전파

기관명	평가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역량	업무 및 성과관리

평가지표	2.3.a 업무관리
------	------------

신속·유연한 의사결정체계의 구비 및 활용

□ 위임전결 규정 개정 및 금감위 안전상정 절차 간소화 추진

-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신규업무 등을 추가 반영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감위 위임전결규정을 전면 개정(06.10.)
- 기관장의 전결사항이 대폭 축소(102개→78개)되고 과장(팀장)의 전결비율이 종전 29.9%에서 61.2%로 대폭 확대되어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실현

< 위임비율 현황>

(단위 : 개, %)

구분	단위 사무수	위원장	전결권자			과장위임비율
			부위원장	국장	과장	
기존	522	102	91	173	156	29.9
개정	725	78	68	135	444	61.2
증감	203	△24	△24	△38	288	31.3

- **(기존)** 금감위 상정안전과 합동간담회 상정안전에 대해 각각 위원장 결재
- **(개선)** 금감위 상정안전과 합동 간담회 안전이 동일한 경우 회 결재로 절차 간소화

□ 타부처에 비해 간단한 의사결정 단계 구현

- 과장이하 조직구조를 사실상 팀제형식으로 운영하여 의사결정 신속성 제고
- 사무관, 주무관 및 파견직원이 각각 독립된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수평적인 조직구조(Flat)를 강화

□ 소규모 조직의 장점을 이용한 협의체 활동 효과의 극대화

- 금융시장의 겸업화 추세로 인하여 은행증권 등 권역간 협의 및 공동 작업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동작업(TF) 문화” 정착 도모
- 금융시장 현안 발생시 즉시 TF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안에 따라 기관장 직접보고 등 의사결정 구조도 간소화
- * 북핵사태이후 금융시장 동향TF, 자본시장통합TF, 부동산금융정책 TF, 감독분담금TF 등 구성
- 간부회의, 티타임 등 기관장 주재의 회의에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문화 형성
- * 매주 간부회의에서 경제 및 금융관련 특정 주제에 관한 포럼 실시(10분 주재발표, 15분 토론)

□ 의사결정 신속화와 유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국장급 간부들에게 보고서 내부 메신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감소(06.5.24, 기획행정실장 지시)
-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을 독려하여(이용률 98%) 신속한 의사결정의 여건 조성
- 「보고서 잘 쓰는 방법 연구회」에서 보고서 모범 작성서식을 제시함으로써 문서 작성시간 감소 및 간소화 실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 및 변화관리 노력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담 추진조직 구성 및 변화관리계획 수립
 - 혁신행정과장을 팀장 혁신행정과 및 의사국제과의 담당자를 팀원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06.8)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06.11)
 - * 계층별·단계별 교육, 시스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마련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구축

- 위원회의 기능을 431개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재분류(06.7)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1	1	2	30	127	431

- BRM담당자가 정부기능분류 관련 각과 담당자대상으로 자체교육실시(06.5.16, 7.4)
- 정부기능분류 담당업체인 베어링포인트에서 실무자 방문교육 실시(06.6.20)

□ 업무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경주

- 위원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원
 -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논의 후 전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06.5.8)
 -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장차관 토론회 참석(06.7.14)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감독정보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재정비(06.7, 06.11)
 - 업무관리시스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위원장 혁신메시지 전달(06.11)

“업무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 계층별·단계별 교육 실시
 - 전직원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 및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기관장	국과장	실무자	전담강사
개념교육	7.14.	11.29	부처전담팀워크숍 참석(9.11-9.12) 12월 첫째주 2회 실시	제1차교육참석(9.25) 강사양성교육참석
실무교육	12월 중	12월 첫째주	12월 둘째주	(12월, 국별1명)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주최 BRM 관련 심화교육 참가(06.9.9)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공개강좌 「대통령비서실의 이지원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소개」 참가(06.9.13)
- 과기부, 기재처, 해경청 등 시범 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위원회의 변화관리대응계획 수립시 반영
 -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우수부처인 과기부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대응계획마련
- 업무관리시스템 홍보 동영상 및 관련 신문기사를 지식관리시스템 등록하여 직원들이 업무관리시스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평가지표

2.3.b.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직무성과계약 등 내부평가와 자체평가 등 외부평가를 종합 감안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05년말 구축)”을 확대·개편하여 운영
 - 민간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평가와 개인평가의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을 5급 이하 전직원으로 까지 확대하여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해소

기존 시스템		확대·개편 시스템	비고
▶ 외부평가중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만을 개인평가에 반영	→	■ 주요정책, 혁신, 등 모든 정부업무 평가분야(15개)를 체계적으로 반영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통합평가체계에 따라 외부평가결과를 폭넓게 반영
▶ 통합성과평가 대상이 4급 이상에 한정	→	■ 성과평가 대상을 5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대	평가분야별로 개인별 연계 가능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적용
▶ 업무 성과 평가에 있어 혁신성을 반영하지 않음	→	■ 업무 성과의 창의성 등 혁신성을 평가하여 반영 (CEO 미션의 가점 부여)	일과 혁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이 높은 업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설계

- 개편된 시스템에서 (내부)실적평가(직무성과계약, 근평),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 (외부)기관평가의 개인 통합성과평가 반영비율은 60:10:10:20(%)

실적평가	혁신마일리지	다면평가	(외부)정부업무평가
60%(60점) 직무성과계약 및 근평	10%(10점)	10%(10점)	20%(20점) 주요정책, 혁신관리 등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자체매뉴얼을 마련(06.11)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조직구성원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
- ☞ 금융감독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외부 컨설팅업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06.2)하고 시범운영중(07년 본격 시행)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주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단축
 - 중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및 분석내용을 공유(06.11)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 05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
 - *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전 반영체계) 내부평가,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국조실평가, 혁신마일리지 비중을 50:20:20:10(%)로 하여 평가(06.2)
 - (인사: 보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인평가 결과는 성과급 기준으로 활용

- 구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4급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을 지급(06.3) 하였고 개편 시스템에 따른 평가결과는 전직원의 성과급 기준으로 확대 적용(06.10)
- (인사: 승진 등) 승진심사시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실시
 - * 우수부서의 유공자에 대해 파견근무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06.1)
- 평가 우수부서에 해외유학 유경험자 등 희망인력 우선 충원(06.1)
- (포상)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개별 평가분야 중 주요정책 및 혁신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기적 포상 실시(06.3, 06.6)
- 통합성과평가 대상의 전직원 확대에 따라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
 - 평가결과 저조부서의 경우 인원감축 등 장기 조직운영방안에 반영 등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및 개선

-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안에 반영
 - 통합성과관리 방향을 혁신워크숍에서 설명토론(06.5)하고 개편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설명회(주무사무관 전직원 대상)를 개최(06.6,7)하여 의견을 수렴·반영

의견		반영
▶ 기관평가 결과가 개인평가에 반영될 경우 소관 업무와 상관없이 타부서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	■ 기관평가 분야별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서 및 개인에게 연계 불가능한 지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설계
▶ CEO 미션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우려	→	■ 기관장 직접지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해당 기준을 명확히하여 자체 성과관리매뉴얼에서 제시
▶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 협의 없이 결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 5급 이하에 대해서도 유사 직무성과계약을 실시하여 직근 상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표 및 목표치를 조정(06.10) * 4급 이상의 직무성과계약과 유사하게 직원별 성과지표(목표치)를 직속 상급자와 협의(근평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개인별 가감점 판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민간컨설팅시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선추가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 성과지표 풀(Pool)을 마련(06.7)
 - 주요정책 성과지표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논쟁(06.10)
- 전년도 평가결과를 0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06.3)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정책 반영 여부를 개인 성과평가지 반영

혁신 문화

1. 혁신의 내면화

3.1.a. 혁신활동에의 몰입

2. 혁신적 행동양식

3.2.a. 개방성과 창조성

3.2.b. 도전성과 실패관리

3. 혁신의 정착·확산

3.3.a. 혁신의 제도화

3.3.b. 혁신 커뮤니케이션

기관명	평가 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 문화	3.1. 혁신의 내면화

평가지표	3.1.a 혁신활동에의 몰입
------	-----------------

□ 혁신활동에 대한 일체화

- ① **(혁신전략과 계획단계)** 혁업일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상반기)
- ▶ 문제해결형 학습체계 강화 혁신활동의 정책성과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혁신마일리지 개선(06.6),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추진 등



- ② **(실행과 점검단계)** 혁신활동에 따른 성과창출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혁신마일리지 등) 공개 등 관리 강화(상·중반기)
- ▶ 전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06.8), 혁신 및 주요정책 등 실적점검 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강화(06.8)



- ③ **(성과창출과 환류단계)**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상반기)
- ▶ (사례) 전자공시시스템은 10대 정부혁신 브랜드 선정,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서비스분야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은 생산성분야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 (사례) 상반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 혁신마일리지를 강화 반영(0%→20%, 06.10)

□ 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참여도

- 소규모 조직(74명)의 장점을 살려 전직원이 각종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기여
 -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혁신마일리지 개편 혁신브랜드 개발 혁신워크숍 추진 과정에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 제도를 개선
 - *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혁신브랜드 선정, 워크숍 개최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워크숍 주제 및 초빙강사를 결정
 -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10개)에 참여하고 정책성과를 창출
 - 일하는 환경개선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필요성 제기 ➡ 과별 티타임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 의견 제시 ➡ 즉각 시행*
 - * 복도 그림전시, 직원배치표 및 출입증 교체, 주요업무세부계획 현황판 작성, 외부방문객 환영 현수막 설치 등
- KMS를 통한 혁신사례 공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혁신 공유 활성화

□ 기관의 혁신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

-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혁신인식테스트 등 설문조사 실시(05.12, 06.6)
 - * 설문조사 결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도 아직도 방법론 측면에서 일부 직원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피로감 해소를 위해 기관장·중간관리층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혁신활동에 직원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소외감 해소
 - * 기획행정실장과 사무관과의 대화(06.6.15, 수시) 등과 함께 혁신워크숍 프로그램 선정시 직원들 의견 반영 비중을 확대(06.9월 워크숍)

기관명	평가 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 문화	3.2. 혁신적 행동양식

평가지표명	3.2.a. 개방성과 창조성
-------	-----------------

□ 개방적 업무 분위기 조성

- (상하간) 소규모 부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장 및 부기관장에게 실무담당자(사무관)가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관행을 정착
 - * 위원장과 사무관과의 오찬면담,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 (부서간) 서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 구축
 - KMS외에도 금감위 안전관리시스템 감독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계획을 공유하는 등 정보공유 기반 강화
 -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리더모임과 주니어보드 모임에서 자유롭게 토론
 - 부서간 업무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담당자의 주간업무계획을 공유
- (부처간)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사전협의를 강화토록 하(기관장 지시 06.11)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TF를 구성(서민금융활성화 TF(금감위, 재경부) 등)
- (고객 및 이해관계자) 규제개혁, 민원제도개선 등 각종 업무추진시 고객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
 - * 찾아가는 감독정책 설명회(2,3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금융업계패널, 감독혁신분과위(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등이 제도화

< 사례 :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최초 반영 >

-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인사로 T/F를 구성, 6회에 걸쳐 금감원 재원조달 방안 논의 및 확정(6.9~8.13)
- 특히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협회 및 금융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총 2차례: 삭제)하여 반영

□ 창조적 업무수행 정도

- 업무 챔피언(Champion) 선정 : 도전적·창조적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시 도전성과 창조성이 뛰어난 개별 과제를 선정 (챔피언)하여 개인별 가점 부여
 -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등 외부평가 우수과제와 CEO미션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

< 사례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창조성이 높은 업무로 선정(김영신 위원, 06.10)
- 기존의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고객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을 최초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로 서비스분야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도 선정됨

□ 도전적 업무수행 정도

- 업무 챔피언 제도를 활용하여 도전적창의적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평가 점수를 일정 부분 보전

<사례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도전성이 높은 업무로 선정(이미영 위원, 06.10)
- 신탁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중앙회 부실이 경영실패에 기인한 만큼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예산당국과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
 - 1년 이상의 실무협의, 장관회의 등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냄(3년간 최대 3,000억원의 재정지원방안 확정, '06.4.4 관계부처장관회의)

-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준을 뛰어 넘는 도전적인 업무수행 사례 창출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쳤던 종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제도보다 우수한 세계1위의 감독제도 구축을 지향
 - *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내용의 풍부성, 이용자 편리성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능가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 ➡ 정부 10대 브랜드에 선정

□ 실패관리

- (도전적 업무의 실패 용인) Wild Card 제도 운영
 - ① 환경변화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따라 당초 목표 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자체평가매뉴얼상 감점 대상 과제)로서
 - ② 소관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내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 성과평가지 감점폭을 축소하거나 구제(자체 성과관리매뉴얼에 반영)
- (실패사례 발굴 및 학습) Wild Card 제도 운영을 통해 도전적 업무 수행에 대한 Blame Free 문화 정착 뿐 아니라
 - 동 제도 해당 과제와 기타 실패사례를 축적하여 DB화 한 실패정책은행을 구축함으로써 실패사례의 체계적 분석·공유 및 학습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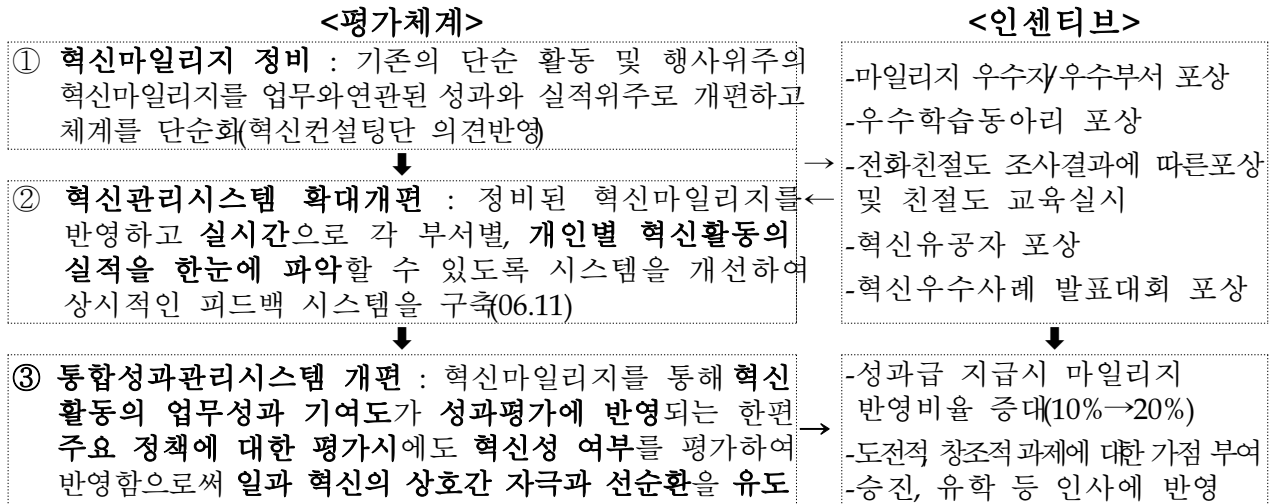
<사례 :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낮은 외부평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공유>

- 위기관리 분야 05년 평가결과, 실무진의 관심부족과 소극적 자세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18위/18위)
-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05년 평가결과 저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유함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지 감점폭을 축소하여 적용(06.3)
- 06년 계획 수립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 ➡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 실시(06.8) : 평가 주관기관(NSC)으로부터 혁신사례로 평가받음

기관명	평가 부문	평가분야
금융감독위원회	혁신 문화	3.3. 혁신의 정착, 확산

평가지표명	3.3.a. 혁신의 제도화
-------	----------------

□ 혁신 참여활동의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 고유의 혁신문화운동 추진

- 금감위 혁신브랜드인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약속을 직원들이 추구해야 할 모범 가치로 공유하고 이를 추진

◆ 직원의 약속 【DART 직원상 (職員像)】

DART人은

1. 언제나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Accuracy)
2. 언제나 신속한 행동으로 신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al time and Reliability)
3.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이용자를 대하겠습니다. (Transparency)

-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일상화
* 복도환경개선, 화장실환경개선, 생활지침제정, 민원인환영현수막 등

□ 혁신 참여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 노력

- 혁신추진 장애요인에 대한 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한 후 대책 마련

혁신장애요인	해소노력
혁신피로감	행사위주, 단발성 혁신활동 지양
비자발적인 혁신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하여 생활속의 혁신실현
일과 혁신 분리	업무 가운데 BP창출 독려하여 단기성과 창출
혁신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성과관리, 혁신관리 문화 정착
기관장 혁신철학 공유부족	기관장과 위원회 모든 서기관·사무관과의 대화 실시, 중간관리층과의 대화

□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수요자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결과를 업무에 반영
- 성과관리시스템 혁신관리시스템 등 평가시스템을 정비하여 혁신을 시스템화
- 성과관리매뉴얼 민원제도개선매뉴얼 규제개혁영향분석서 경영컨설팅매뉴얼 등 제작

평가지표명

3.3.b. 혁신 커뮤니케이션

□ 혁신성과의 국민공유(홍보)

- ON-OFF Line을 망라하여 혁신성과를 적극 홍보

매 체	내 용
신문·TV	찾아가는 금융감독정책(2/20), 금감위 홈페이지 우수마크획득(4/4), 혁신워크숍 개최(5/2), 민원자율조정제도전면확대실시(6/9), 혁신브랜드 선정 등에 대한 언론보도 실시
금융회사 직접 방문 홍보	「찾아가는 금융감독 정책홍보」 행사를 통해 06년 금감위 혁신계획 및 주요업무방향을 은행, 비은행, 지주회사, 증권, 보험 등 5개 권역별로 방문하여 설명하고 의견청취
홈페이지, 블로그 등	금감위 홈페이지 「업무혁신」, 금감위 네이버 블로그 「혁신카페」, DAUM 포털사이트내에 금융감독세션 「SOS금감원」, 국정홍보처 블로그 「혁신블로그」 및 다양한 블로그(20여개)를 개설하여 금감위 업무혁신을 등록·공유
정책홍보 잡지, 국정브리핑	코리아플러스에 “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7.19) 기고(상임위원) 국정브리핑에 금감위 혁신브랜드 전자공시시스템(DART) 홍보
혁신의 창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특별기획기사 홍보(7.19)
지하철	서민금융119, 혁신브랜드(DART) 등 주요혁신사례를 지하철(5-8호선)의 행선안내 게시기에 홍보, 지하철 신문무가지 홍보실시
혁신브랜드 선포식	금감위 혁신브랜드 선포식 행사에 일반인들을 초청하여 브랜드 홍보실시
PCRM	PCRM 고객에게 혁신성과를 주기적으로 전송, PCRM 고객 대폭확충
대형전광판	감독당국의 대형전광판 뿐만아니라 행자부를 비롯하여 전국108개 전광판을 통해 혁신홍보실시

- 혁신홍보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환류
 - 홍보협의회: 국장급으로 구성하여 주요 혁신홍보활동을 점 (월1회)
 - 홍보실무협의회의(4월구성): 혁신활동 홍보에 대해 주1회 진단하고 대응방안 점검
 -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언론보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

□ 국민의 정부혁신 참여 지원

-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간위원9명과 내부위원6명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의견수렴
 - 금융업패널 및 소비자 패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제개혁관련 의견수렴
 - 혁신브랜드자문위원회: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반영
 - 블로그 개설(네이버, 다음, 국정브리핑 등), 홈페이지 업무혁신란 참여마당 신문고의 국민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 혁신브랜드 슬로건 및 홍보방안을 공모(479건 응모)
-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원제도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 금융교육 혁신프로그램 민원제도 모니터단(250명), 민원현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 타부처·민간·해외와의 혁신교류

- 민원제도개선포럼 규제개혁포럼 기록관리혁신포럼 혁신현장이어달리기 정통부 혁신관리시스템 견학 혁신컨설팅 10차례 실시 등 타부처 혁신사례 적극 공유
- 휴면예금찾아주기, 서민금융119서비스 등 감독당국의 혁신을 민간금융회사와 함께 추진
- 「머니투데이」와 함께 금융혁신대상을 선정하여 금융기관의 혁신사례 공유

-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에 혁신브랜드인 DART의 혁신성과 설명회 개최

혁 신 성 과

1. 부처혁신과제 수행

- 4.1.a. 수요자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 4.1.b.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2.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 4.2.a. 혁신활동의 생산성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	-------------	-----	--------------------------

1. 과제의 주요 내용

(1) 혁신과제 선정 배경

- ☐ (환경변화) 최근 금융산업의 **겸업화·국제화** 추세가 급진전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
- ☐ (감독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종래의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검사에서 위험요인에 감독을 집중하는 사전예방적 **리스크중심 감독·검사(Risk Based Supervision)** 위주로, 일방적 지시·감독에서 금융회사의 취약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파트너(partner)**로서의 역할이 요구

⇒ 이러한 환경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편익과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2)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

- ☐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 ① 검사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 제고**, ② 금융회사의 니즈(needs)에 따른 검사서비스의 **범위 확대(경영컨설팅)**, ③ 경영능력 및 규제수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을 세부과제로 추진
- ☐ 동 세부과제 추진은 감독 패러다임의 **근원적 변화**를 촉진하므로, 그간의 권위적인 감독 관행에 익숙한 **조직 구성원의 반발**, 감독서비스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참여 저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우려 등의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2. 성과측정계획 수정사항

해당없음

3. 목표달성도 및 추진활동

성과지표명	'06년 실적 목표수준	'06년 달성수준	비중
①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75점 이상 (05년:71.6점)	73.1점	0.4
②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3/4분기 구축	3/4분기 구축완료	0.3
③ 중소기업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반영비율	90%	93% (=80/86)	0.3

(1) 검사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 제고

- ☐ 금융회사와 상시 접촉하는 **전담검사역(RM) 조직의 내실화 추진**
 -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금융회사별 위험요인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체제로 개편(05.2)
 - 전담검사역에 대한 **교육과 자문그룹 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배양
 - 검사직원 종합연수(500명, 1.5~1.6), RM팀장 워크숍(61명, 1.6), RM집합연수(300명) 및 RM팀원 워크숍(52명, 8.10)을 실시하고 검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 그룹(리스크, IT분야 등)을 편성·운영
 - 우수 검사사례를 발굴하여 워크숍 등에서 **사례발표 및 포상**을 실시하여 공유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p>□ 수요자의 의견이 검사 방향에 지속 반영되도록 피드백(feedback)을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사) 검사를 실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검사만족도 조사(상시)와 면담(수시) 실시 ➡ 설문조사 내용을 각 부서가 공유하고 연수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9개 금융회사('06.1~9월중 검사 실시 금융회사의30%)를 대상으로 검사유용성 검사원 자세, 검사범위의 적정성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하나은행 등 7개 금융회사 감사실 직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담 실시(수시) ○ (외부조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에 금융회사 직원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설문 실시(8.17-9.6) <p>(2)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따른 검사서비스의 범위 확대 :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p> <p>□ 기존의 검사 위주의 감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진단한 취약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2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회사를 확정하고 컨설팅 청구제도의 세부운영방안 마련(4.7) ○ 민간컨설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컨설팅 담당자 교육 실시(5.12), 경영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8.1)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신한 저축은행 등 8개 금융회사 대상 경영컨설팅 시범 실시 완료(06.6~12월) <p>(3) 중소기업 지원에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p> <p>□ 대형화·경업화의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시장 세분화를 통해 취약 부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요자(금융회사) 만족을 극대화</p> <p>□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청취(86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중앙회 실무자 간담회(6.19), 저축은행 지부단장과 오찬간담회(6.22), 신협중앙회와 실무협의회(6.21, 6.30) 등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파악 <p>□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및 정보 제공 실(8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투명성 제고 피감기관의 권리구제장치 강화 등 중소기업 의견 반영한 법규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시행령 개정 (8.4.), 신협중앙회에 대한 자금지원(3,000억원) 및 감독규정 개정작업 진행 중 ○ 중소기업의 감독규제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FY'05 결산관련 실무지도 요청에 따른 출장강의 실시(6.7, 6.14), 질의사항 Q&A코너 답변(16건) 및 FAQ 등록(2건) 			
<p>➡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이용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감독 및 검사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71.6→73.1)되었고 기존의 일방적인 적발 위주 검사시스템에서 사전적·예방적 대응시스템 위주의 선전형 감독시스템으로 정착</p>			
통합산식값	$\text{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90\text{점}) \times 0.4 + \text{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100\text{점}) \times 0.3 + \text{중소금융회사의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대비 정책반영비}(90\text{점}) \times 0.3 = 96\text{점}$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	-------------	-----	--------------------------

4. 성공사례 창출 및 전파

- 전문검사역 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검사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 향상**을 추진한 결과
 - ➔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효과적인 상시감독의 기반이 마련되고 종합검사 횟수가 감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완화**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 *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04년 158개사 → '05년 104개사 → '06년 73개사로서 각각 전년대비 △34.2%, △30% 축소되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대폭 완화됨
- 수요자 니즈에 충실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성공사례 창출
 - ➔ 외국계 생보사인 ING생명과 SH&C생명에 대한 컨설팅 결과 두 회사의 경영진이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개정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취약부분을 보완**
- 전담검사역(RM)대상 워크숍 및 연수시 우수한 전담검사활동과 경영컨설팅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실시, 내부 지식마당에 우수사례 게재 및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경영컨설팅 절차 및 기법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포함한 「**경영컨설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청구 제도를 확대 운영

5. 과제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사례

- (장애요인) 새로운 검사제도 운영 및 경영컨설팅 도입에 대해 ① 내부적으로 검사업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무부담과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부족**, ② 외부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취약점을 스스로 드러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참여에 소극적** (제도의 활성화 불투명)
 - ➔ ① 내부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감독행정 변화필요성 메시지 전달, **검사직원 연수**를 통한 **검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부서 대상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극복
 - ➔ ②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참여 촉진을 위하여 현장검사 축소, 컨설팅 기간 **최소화** 등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적발 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 컨설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Feed back**을 통해 제도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해소
- (장애요인) 신탁중앙회 부실사태(약 6,000억원)가 악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탁중앙회 결손에 대한 자금지원과 중앙회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하였으나
 - 관계기관(기획예산처)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명하였고 중앙회 역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미흡한 상황이었음
 - ➔ 이에 감독당국은 관계부처와 수차례 실무회위관계장관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Consensus를 도출하였으며(3,000억원 지원)
 - ➔ 신탁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 자구노력 추진시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계획 도출

담당자	혁신행정과 전수한 사무관
-----	---------------

《혁신과제 성과측정계획》

부처명	금감위	과제명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	-----	-----	---------------------------

통합산식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x 0.4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x 0.3 + 중소기업회사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대비 정책반영비율x 0.3	
성과지표명	'06년 실적 목표치	비중
1.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75점 이상	0.4

- 지표내용 : 감독행정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만족도
- 실적산식 : 외부조사기관에 의한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 2005년도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 : 71.6점
 - 감독행정의 특성상 70점 이상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획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적목표치 제시
- 득점구간 :

점수(점)	60	70	80	90	100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	69점미만	71점이상 ~ 69점미만	71점이상 ~ 73점미만	73점이상 ~ 75점미만	75점이상

- 검증방법 : 연말/전문조사기관/실적증빙 첨부

2.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3/4분기 구축	0.3
-----------------------------	----------	-----

- 지표내용 : 경영컨설팅제도 인프라(경영컨설팅 시행방안 컨설팅매뉴얼, 담당검사역 교육) 구축목표 대비 이행실적
- 실적산식 : 구축일정(3/4분기) 내 목표달성여부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경영컨설팅 관련 제도 도입 일정
- 득점구간 :

점수(점)	60	70	80	90	100
사업진척율	3개월 이상경과	2~3개월 경과	1~2개월 경과	1개월이내 경과 구축	3분기내 구축

- 검증방법 : 연말/자체/3분기 시스템 구축확인

3. 중소기업의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반영비율	90%	0.3
-------------------------------	-----	-----

○ 지표내용 :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

○ 실적산식 : 전문서비스제공 건수 / 수요조사결과 전문서비스 요구 건수

* 전문서비스제공 : 수용여부통보, 정책반영, FAQ 등록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모든 요구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영비율을 90%로 책정

○ 득점구간 :

점수(점)	60	70	80	90	100
반영비율(%)	50	60	70	80	90

○ 검증방법 : 연말/자체/실적증빙 첨부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	-------------	-----	-------------------------

1. 과제의 주요 내용

(1) 혁신과제 선정 배경

☐ (환경변화)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복잡한 금융거래와 상품 증가 등 금융의 고도화 진전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p>○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정보의 공개공유, 신속한 전파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수준도 증대</p> <p>⇒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식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감독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수요자인 금융회사에게도 서비스하는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이 요구됨</p> <p>(2)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p> <p>①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p> <p>○ 경영분석, 감사지원, 시장감시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개별 금융감독 정보를 금융감독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유</p> <p>②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고객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금융사고자료실」과 「사고예방시스템」 운영 활성화</p> <p>○ 금융사고자료실 : 주요 금융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전파</p> <p>○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자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p> <p>③ 지식관리를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p> <p>○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홈페이지, TV, 신문,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p>			

2. 성과측정계획 수정사항

해당없음

3. 목표달성도 및 추진활동

성과지표명	'06년 실적 목표수준	'06년 달성수준	비중
①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상반기 구축	상반기 구축 완료	0.2
② 금융사고자료실 운영 활성화	총 조회건수 2,400회 이상	총 조회건수 7,600회	0.3
③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3/4분기 구축	3/4분기 구축완료	0.2
④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및 조회건수	교재개발 23건 총 조회수 5,000건 이상	교재개발 23건 총 조회수 6,000건	0.3

(1) 「금융감독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완료(6.12)

- ☐ 기술적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임직원 설명회 개최(4회) 등 개발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스템 통합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매뉴얼을 작성·배포**
- ☐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부서간공유정보 범위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여 정보공유를 확대
- 내부시스템은 물론 연계된 외부 웹사이트까지 일괄 검색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다양한 상세검색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확보**
- ⇒ 사용자 이용빈도가 증가하여 감독기구의정보공유가 **활성화**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감독 역량 및 상시감독의 효과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			
(2) 금융사고자료실 운영 활성화			
<div><div><div>□ '05.12월 구축 이후 금융사고 정보사항 22건 및 금융사고 사례 13건을 등록·전파</div><div><div>○ 등록된 자료 내용에 대해 금융회사가 평가하고 댓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쌍속적인 환류(feed-back) 체계를 마련</div></div></div><div><div>□ 총 조회수가 약 7,600회에 이르는 등 시스템 활성화로 정보의 수요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유사 사고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보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음</div></div></div>			
(3) 고객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div><div><div>□ 사용실적이 부진하던 기존의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검토 등을 거쳐 시스템 전면 재정비(9.29)</div><div><div>○ 개인정보 유출사실 전파를 위한 유출 당사자 동의신고 창구를 감독당국 뿐 아니라 은행 영업창구로까지 확대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신규정보 등록시 금융회사 담당자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SMS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 증대를 도모</div></div></div></div>			
(4) 지식관리를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			
<div><div><div>□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금융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금융교육 로드맵'을 마련(06.3.8)</div><div><div>○ 5개 금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를 구성(06.3.31)하여 금융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div><div><div>○ 로드맵 실천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중</div></div></div><div><금융교육 활성화 실적></div><div><div>- 홈페이지(kids.fss.or.kr)를 통해 표준강의 교재를 제공(교재23건, 총조회수 약6,000회)하고, '소비자정보란에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24건의 자료 게시</div><div>- 금융퀴즈대회(지상파DMB(20회, 4월), 어린이동아(16회,9월~12월), 다음 인터넷포탈사이트(11월)</div><div>- 주부, 교사, 대학생 등 초청교육 실시(215회), 금융거래 계도용 책자 및 팜플렛 제작(11월), '유아금융교실 및 '초등학생 경제·금융 교실' 발간·배포(11월)</div><div>- 청소년 금융백일장 금융교육 우수사례 금융논문 공모, TV프로그램 소재제공(SBS솔로몬의선택 등)</div></div></div><div><div>➡ 감독당국이 감독관련 정보와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공유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역량 제고는 물론 금융회사 스스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div></div></div>			
통합산식값	금융감독정보통합시스템구축(100점)×0.2 + 금융사고자료실 운영활성화(100점)×0.3 + 사고예방시스템구축(100점)×0.2 +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100점)×0.3 = 100점		
4. 성공사례 창출 및 전파			
<div><div><div>□ 금융사고자료실을 활용한 사고사례 전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및 유사 반복 사고의 재발방지 효과가 나타남</div><div><div>○ 금융사고의 상세내용을 제공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절차를 보완·비토록 유도</div></div></div></div>			

기관명	금융감독 위원회	과제명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p>➡ '06년 상반기중 금융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감소</p> <p>* '05 상반기 1,764억원(207건) → '06 상반기 954억원(181건), 금액기준 △45.9%</p> <p>○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자료실에 등록된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제도의 정비에 활용하는 등 금융사고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중</p> <p><적용사례></p> <p>- ○○은행은 금융사고자료실에 등록된 사례 등을 종합분석하여06.9월 국내은행 최초로 직무분리제도(SOD:Segregation of Duties)를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 의한 시스템적인 내부통제를 제도화</p> <p>* 직무분리제도: 직원 1인이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수행하는 것을 막고 영업창구별 전산권한을 통제</p> <p>□ 지식관리를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사회적 관심도가 제고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금융교육 참여분위기가 조성</p> <p>○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금융교육의 확대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사 및 프로그램 방영이 확산되는 추세</p> <p>* 'SBS솔로몬의선택'에서 금융분쟁사례 방영 'KBS도전골든벨'에서 금융퀴즈문항 출제 등</p> <p>○ 조직내부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교육 관련혁신실적을 전파(8.28)</p>			

5. 과제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사례

(1)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의 보안위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 (장애요인)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른 내부분서의대외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로 문서공유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팽배	
➡ 기관장의 강력한 정보공유 의지에 따라 공유정보의 범위를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	
○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를 공유하고 보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서제목과 작성자 등 자료검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보완하여 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료	
(2)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지식 및 정보 제공	
□ 각종 현안사안에 비하여 단가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금융교육에 대한예산·인력지원에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 단독으로는 효율적 금융교육 추진이 곤란	
➡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재경부 등의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계 및 학교교사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유도	

담당자	혁신행정과 전수한 사무관
-----	---------------

《혁신과제 성과측정계획》

부처명	금감위	과제명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 정보서비스」 확충
-----	-----	-----	--------------------------

통합산식	금융감독정보통합시스템구축0.2 + 금융사고자료실 운영 활성화×0.3 + 사고예방시스템구축0.2 +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0.3	
------	------------------------------------------------------------------------	--

성과지표명	'06년 실적 목표치	비중
1. 금융감독정보통합시스템구축	상반기 구축	0.2

- 지표내용 : 시스템 구축 일정상 목표 대비 이행 실적
- 실적산식 : 시스템 구축 일정상 목표 기한('06년 상반기) 내 구축 여부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구축 일정상 목표 달성
- 득점구간 :

점 수(점)	60	70	80	90	100
사업진척률	3개월 이상경과 (계획수립)	2~3개월 경과 (사업자선정)	1~2개월 경과 (시스템설계)	1개월이내 경과 구축 (시스템구축)	상반기내 구축 및 운영 (시스템운영)

- 검증방법 : 반기말/자체/6월말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2. 「금융사고자료실」 운영활성화	금융사고자료실 총 조회건수2,400회 이상	0.3
--------------------	-------------------------	-----

- 지표내용 : 금융사고자료실을 통해 대형사고 등대표적인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금융 회사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자체감사업무에 활용
- 실적산식 : 1년 중 금융사고자료실에 등록된 사고건수× 등록사고사례 건별 조회수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05년 금융사고자료실 사고사례 등록건수(19건) 및 등록 사고사례 평균 조회수(102건)
- 득점구간 :

구분	60	70	80	90	100
전체 조회건수	1,800회 이하	1,801~2,000 회	2,001~2,200 회	2,201~2,400 회	2,401회 이상

- 검증방법 : 연말/자체/'06년 하반기 금융사고자료실 등록건수 및 조회수 확인

3.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3/4분기 구축	0.2
-----------------	----------	-----

- 지표내용 : 시스템 구축 일정상 목표 대비 이행 실적
- 실적산식 : 시스템 구축 일정상 목표 기한('06.3/4분기) 내 구축 여부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구축 일정상 목표 달성
- 득점구간 :

점 수(점)	60	70	80	90	100
구축시기	3월 이상 경과	2~3월 경과	1~2월 경과	1월 이내 경과	9월말 구축

- 검증방법 : 9월말/자체/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4.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및 조회건수	총 조회수 5,000건 이상	0.3
--------------------------	-----------------	-----

- 지표내용 : 전년도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당해연도 표준강의 교재 개발 실적 증가정도 측정

*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재개발 범위 및 주제를 선정하고, 금융당국의 정책과제 외부 전문기관(대학)에 의뢰하여 개발한 연구교재 등을 참고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식전달의 표준화 및 객관성 유지

- 실적산식 :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건수× 평균조회수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05년 표준강의교재 개발실적 건수(19건)
('06년 실적 목표치 20% 향상→ 23건)
'05년 평균조회수 180회
('06년 실적 목표치 10% 향상 → 200건)

- 득점구간 :

구분	60	70	80	90	100
연간 조회건수	2,000회 미만	2,000~2,999회	3,000~3,999회	4,000~4,999회	5,000회 이상

- 검증방법 : '06년 하반기 표준강의교재 게시(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실- 표준강의교재 코너)실적

기관명	부문	분야	평가지표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성과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4.2.a. 혁신활동의 생산성

평가중점사항 1	혁신활동으로 인한 업무역량 향상·예산 절감 정도
----------	----------------------------

■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금융감독 실현 (▶생산성 분야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혁신활동)**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연간 14만건의 많은 문서 교환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인식 ➔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활용한 전자 문서 교환시스템을 구축(06.8)
 - *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교환시스템
 - 수차례의 설명회 개최 등 개방적 토론 문화를 통해 보안대책을 설명하여 전자문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거부감을 불식
 - 수요자인 금융회사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구축한 단일 서버를 활용하는 서버공유방식을 채택
- **(예산절감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로 연간 1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예상
 - * 05년 중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주고 받은 서면문서는 약 14만건으로 5톤 트럭 2대에 가득차는 분량으로 연간 100억원 절약 가능

■ 금감위 정보시스템 개편

- **(혁신활동)** 기존의 금감위 정보시스템은 체계적인 계획없이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이용이 불편하여 업무생산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 혁신리더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감위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발표(기획행정실장, 06.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설명회 개최(06.7),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 매주 1회 외부 전문가와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06.11),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3회)과 명칭공모(06.11) 실시
- **(업무역량 향상)**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든 금감위 정보시스템(8개)을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해져 업무처리 시간 단축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업무역량이 향상

■ 감독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 구축

- **(혁신활동)**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사후 제재 위주 감독방식의 일대 변혁이 요구됨 ➔ 상시 감시를 통해 위험을 사전 인식·해소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리스크중심 감독시스템 구축 ('05)

- **(효율성 향상)** 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영업 부문에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위험도와 관리능력을 상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영업 부문에 감독을 집중·검사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
 - *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회수 축소 : 전년대비 34.2% 감소(05년), 27.9% 감소 예상(06년)
 - 상시 감시 활성화에 따라 현장검사와 관련한 예산을 11.7% 절감
 - * 금융회사 감사여비 요구내역 : (06년 예산) 33.5억원 → (07년 예산 요구액) 29.5억원

평가중점사항 2 혁신활동으로 인한 조직·인력 효율성 향상 정도

■ 금감위·증권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혁신활동)** 합의제 기구인 금감위의 핵심 자료인 금감위·증권위(증권선물위원회) 안전(약 6,300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 안전검색 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허비되는 비효율과 함께 지식기반 약화 우려
 - ➔ 개방적 토론과 설득을 통해 정보화 자료관리에 대한 조직 내의 인식 부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검색이 가능한 안전DB시스템)을 구축(06.12)
 - 과거 안전의 재정리 부담 등에 따른 거부감이 있었으나, 기관장의 적극적인 추진 지시 및 설명회 개최(5회,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필요성을 설득하여 해소
- **(시간비용 절감)** 필요한 안전 및 관련 의사록의 즉시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당 평균 3시간의 검색시간 단축 예상(연간 총 6,000시간 단축)

■ 당사자간 자율 해결 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 향상

- **(혁신활동)** 민원 접수 및 처리 위주의 수동적인 대응 ➔ 양당사자인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 시도 :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06.7)
 -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이 처리
 - 금융회사가 자율 조정에 적극 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조정 실패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 **(역량제고)** 당사자간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역량이 향상되는 한편, 감독당국은 자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보다 집중함으로써 업무역량 제고
 - * 06.7~8월 중 제기된 민원 중 40%가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민원 수용율 55%)

■ 독창적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

- **(혁신활동)** 기존 조사방식으로는 전문 사기단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 수백차례의 모의실험(simulation) 등 분석과 학습을 통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운영(03년 중 개발, 04년 본격 가동)
 - *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DB화하여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정보처리시스템
 - 모의실험과 해외 자문 등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학습과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혐의가능성 평가와 자동추적기능을 연계하는 독창적 시스템을 개발

- (효율성 향상) 동 시스템 운영 후 추가적인 인력 보강 없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급증 ➡ 보험사기 억제를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보험사 건전성 강화에 기여

	(운영 전)	(운영 후)		
	2003	2004	2005	2006.6
보험사기 적발건수	21	114	133	81

- 아울러 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활성화
- * 대검찰청은 동 시스템을 활용·조사후 통보된 혐의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를 지시

평가중점사항 3 혁신활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범위 확대

■ 금융감독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혁신적인 서민대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10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고객: 기존 제공자점: 신규)

- (혁신활동) 신용카드 사태 이후 서민대출 위축에 따른사채시장 이용 확대로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 발생 ➡ 기존의 건전성감독 위주의 감독 패러다임을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05.12)
- * 310여개 금융회사의 약880여개의 대출상품 등록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 건전성 감독 위주의 금융감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금융회사 보다는 금융이용자의 편익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 “금융감독 고유업무(건전성 감독)나 제대로 하랴”는 내부의 냉소주의에 맞서 설문 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설득하여 극복
- (서비스 확대) 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당국의 서비스가 건전성 감독에서 다양한 대출정보 제공으로까지 확대
- 금융회사가 고객 선택→ 고객이 금융회사 선택 방식으로 전환 소비자 주권 향상
- 영세서민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 대출사기 감소에 기여
- * 06년 11월 현재 50만명이 접속, 4만7천명이 회원가입하였으며, 5천5백명이 대출 신청하여, 1,980명이 대출승인을 받음(총 대출액 약 83억원)

■ 금융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응한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제공 (고객 : 기존, 제공시점 : 신규)

- (혁신활동) 마이크로크레딧빈곤층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지원 등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회사 휴면계좌에 대한 문제가 제기
- * 휴면계좌 :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고객의 예금 또는 보험금 계좌 중 일정기간(예금:5년, 보험금:2년 동안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휴면예금/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좌
- ➡ 금감위(원), 재정부, 각 금융협회 간 긴밀한 협의와 학습을 통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합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06.4)
- 해외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소비자 주권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원활히 추진

- **(서비스 확대)** 다수의 개별 금융회사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방식→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 통합 조회가 가능 : 서비스 확대에 따른 만족도 증가 예상
- * 06년 8월말 현재 약 59억원 환급

평가중점사항 4 | 혁신활동으로 인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 정도

■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적극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선진제도를 능가하는 초일류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10대 정부혁신 브랜드 선정) (고객: 기존 제공시점: 기존)

- **(혁신활동)**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열린 자세로 고객 보다 먼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일류 브랜드로 육성
 - * 공시자료 조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시서류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상으로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만든 글로벌 시스템(01년 전면 시행)
 - 선진국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 중인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을 국내 최초로 DART시스템에 적용(06.12)
 - 한글을 모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증진 등을 위해 동 시스템에 대한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정보 이용 가능성을 향상
- **(서비스 확대)** 동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스템으로서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적 범용성이 크게 확대됨
 - * 해외 총 49개국에서 사용(총 방문자의 11.6%가 해외 방문자), 베트남 수출 확정(06.9)

■ 감독권 행사방식(적기시정조치 : Prompt Corrective Action)* 개선을 통한 금융구조조정 시스템 혁신(고객 : 기존, 제공시점 : 신규)

- * BIS비율 하락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회사에 감독당국이 자본확충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은행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과 부실화 예방에 활용되었으나 절차적 적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
- **(혁신활동)** 이해관계자 및 타 부서와의 이견을 체계적 학습과 개방적 토론을 통해 해소하여 감독업무의 추진 방식을 개선
 - 대상 금융회사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치이행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기시정조치가 보다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업무 방식 개선
 - 학습동아리 활동(규제개혁연구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와 국내 구조조정 사례 연구(R&D) →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관련 부서의 이견을 해소하고 공청회 등 개방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 도출
- **(정책품질제고)** 적기시정조치의 신속·효율화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적 구조조정*도 촉진
 - 신속한 부실 정리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건전성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저축은행 연체율(%) : (04말) 22.8 → (06.6) 15.5)
 - 적기시정조치 결정 전에 대상금융회사에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증가 또는 매각 등을 유도(06년 들어 7개 저축은행의 M&A가 추진중)

■ **학습과 개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균형적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 도출 (고객 : 기존, 제공시점 : 신규)**

- **(혁신활동)**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적 공시제도 마련을 위해 해외사례를 학습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제고되는 반면 기업의 공시부담은 증가하는 trade-off 존재
 - 설문조사,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구성 등 개방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 경로를 open함으로써 기존 공시제도가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포착
 - 액션 러닝 등 문제 해결형 학습(자본시장연구회)을 통해 해외 제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질문기법을 활용하여 균형적인 정책 방향 제시
 - * 공시의무사항 축소, 자율공시 확대 등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개선하는 보완책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제시
- **(정책품질제고)** 수시공시제도가 합리화됨에 따라 상장기업 전체적으로 약 550 억원의 공시관련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 : 상장부담 경감

■ **절차 개방성 향상을 통해 금감원 예결산의 투명성 제고 (고객: 기존 제공시점: 신규)**

- **(혁신활동)** 금융감독원의 예산 규모 증대에 따라 예결산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대 → 수요자와 전문가가 예결산 심의 단계에 직접 참여토록 제도화
 - 조직내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금융업패널(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06.8)
- **(정책품질제고)**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가 제고됨으로서 시장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업무의 효과 증대에도 기여

평가중점사항 5	혁신활동으로 인한 국내외의 인증·공인·수상, 논문 및 학술잡지 등 인용 실적 등
----------	----------------------------------------------

- 「2006 한국사회공헌大賞」 특별상 수상(06.9)
 -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지원 등 금융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응한 적극적인 혁신활동이 인정받음
- 아시안 뱅커(The Asian Banker)誌 금융감독부문 수상(06.3, 기관장 수상)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에 따라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등 감독선진화가 한국 은행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적인 위험관리 학술잡지(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에 보험 사기인지시스템 소개 논문이 게재(06, vol 9, No.2, 131~147)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05.11)

07년 혁신관리 실적보고서

2007. 11.

금융감독위원회

기관명	평가부문
금융감독위원회	혁신리더십

평가지표 **1.1.a.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 내·외부의 고려해야 할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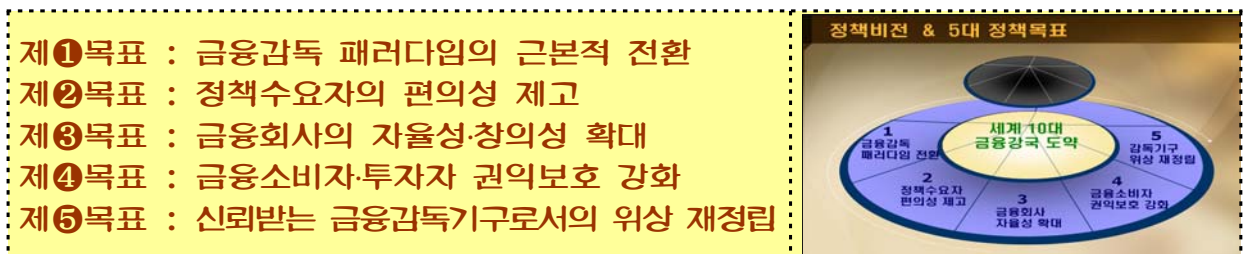
<고객요구 및 환경변화>	<기관의 혁신수준·역량·자원>
◇ 금융감독기구가 직면한 환경변화 및 도전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형화·검입화·개방화 추세 확산 ○ 글로벌 금융혁신 및 변동성 확대 ○ 감독기구 인력의 도덕성·전문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 	◇ 혁신의 내재화로 이행하는 단계이나 아직까지 혁업일치의 모색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내부 시스템 효율화 노력필요 ○ 감독 인력의 서비스 정신, 도덕성·전문성 등은 여전히 부족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실무반별 외부전문가 ▪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 ▪ 금융업·금융소비자 패널 	【개선 방향】 높은 도덕성·전문성과 국제화를 바탕으로 원칙·기능중심의 감독 및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시장 친화적 감독 정착 필요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혁신전략 수립

- [정책 비전] 향후 10년내에 우리나라를 세계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
 - 국제금융시장내 위상 국가경제내 비중 Global Player 금융회사 존재여부 회계·법률 등 금융인프라 구축정도 정책당국의 공신력 수준 등을 감안필요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 [정책 방향] 감독정책·시스템 및 감독기구의 내부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다음 5가지 변화를 목표



- [추진 전략] 「i-GPS」로 명명된 4대 핵심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i-GPS」(information-based GPS) :

- ① 정보화(Information)에 기반하여
- ② 국제화(Globalization),
- ③ 전문성(Professionalism),
- ④ 청렴성(Sense of Integrity)을 확보

4대 추진전략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4대 전략 : i-GPS



- [추진 과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2개부문 100대 과제를 선정·관리
- 단기(2008.6), 중기(2008.12), 장기(2010.12) 등 일정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점 관리

* 성과지표 작성시 외부 전문가 초빙 회의개최
(10.10, PNP Partners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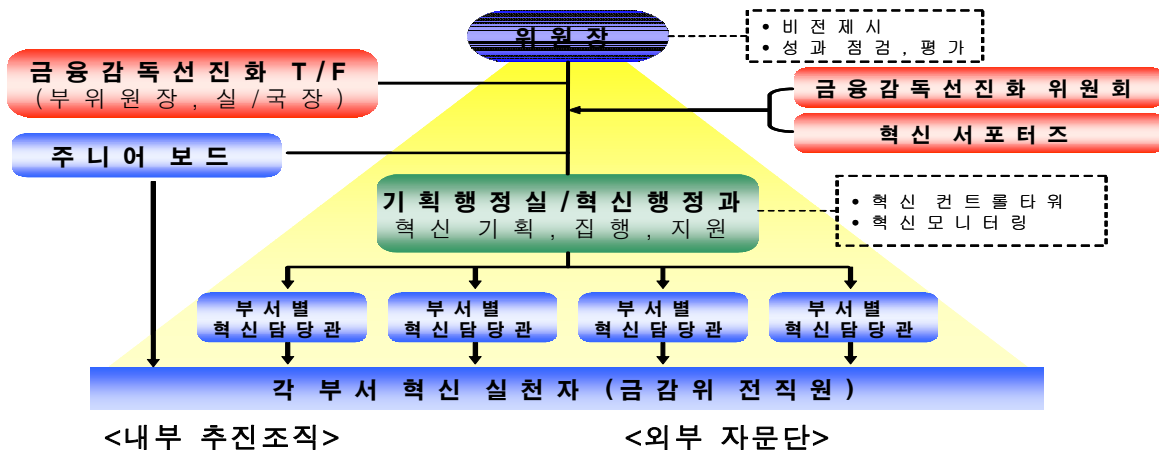
- 100일내 달성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별도 관리



(성과지표 작성 회의)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및 실행방안 구성

- 조직 내·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혁신추진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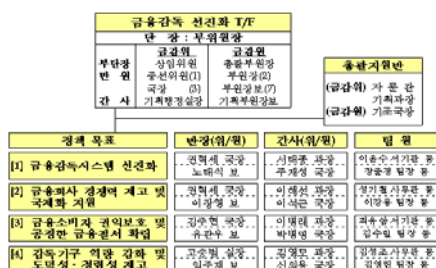


<내부 추진조직>

<외부 자문단>

▶ 금융감독선진화 T/F

-100대 과제를 4개 실무반에서 수행



(금융감독선진화 T/F 구성)

▶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

- 금융관련 국내외 전문가 26명으로 구성
- 거시적인 금융감독기구 정책에 대한 조언
- 반기별로 로드맵 추진상황 점검, 완료과제 승인, 신규과제 발굴 등을 담당

▶ 혁신서포터즈

- 교수, 컨설턴트 등 혁신전문가 14명으로 구성
- 위원회 비전 및 미션수립, 혁신활동에 대한 조언

□ 혁신성과의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 개최(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주요 혁신·정책과제에 대해 자체 세부계획을 점검하고 부진 대책 및 추가·완료 과제 발굴
- (금감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간부, (금감원) 감사, 부원장 등 참여

- 대내조직(금융감독선진화 T/F, 혁신추진동체 및 촉진자 그룹) 및 대외조직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 혁신서포터즈)을 통한 혁신과제의 점검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시스템 고도화

- * 금감위-금감원간 BSC 연계체계 구축, 3단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단기·중기·장기 성과 지표 수립 등 ➡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참조

□ 혁신적 사고 (혁신의 전도사)

- 김용덕 위원장 취임사 혁신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결국 생존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혁신 취임사, ' 07.8.6]



(김용덕 위원장 취임식)

- 혁신의 전도사로서 혁신아이디어와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적극 주도
 - ▶ '관세청장'('03~'05), '건교부 차관'('05~'06)으로서의 혁신 경험과 아이디어 제시
 - ▶ '청와대'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벤치마크 하여 금감위 메모보고 시스템 개선
 - ▶ '나라경제' 대담 등을 통해 본인의 금융감독 혁신사고를 제시

금융계가 나아갈길은 카누가 아니라 래프팅이다. 카누는 구성원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만 래프팅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수시로 진로를 방해한다. 따라서 래프팅에서는 목표를 수시로 수정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기민함과 역동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경제, 10월호]

□ 혁신의 실천 (행동하는 혁신가)

【내부 고객】

- 근무시간중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 노력
 - ▶ 위원장 재택(在宅)근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조기퇴근 독려
 - ▶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억제를 위하여 승인권자를 상향 조정
- 혁신도서를 선정하여 직원들과 함께 독서토론회 개최
 - ▶ '대국굴기', '대통령 보고서',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 등 혁신도서를 직접 추천, 신청을 통해 혁신카페 도서 구입(총 800여권)

최근에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먹고사는 신청장 동력을 찾기위해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의 비결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국굴기'를 읽기를 권했다. [파이낸셜 뉴스 10.18]



(김용덕 위원장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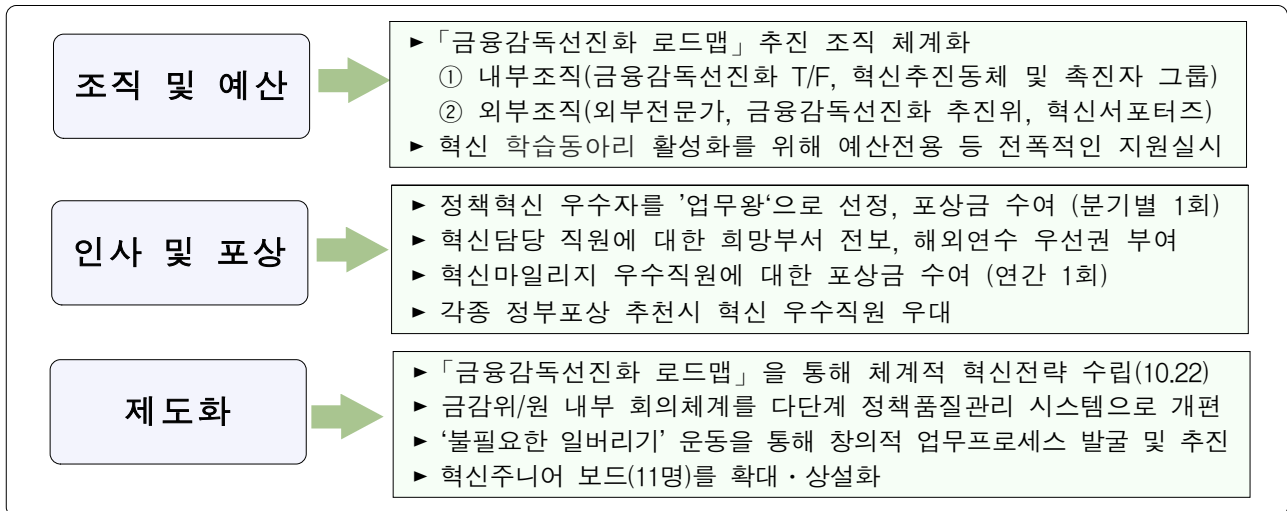
-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 적극 추진
 - ▶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15개 과제 (금감원 87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발굴 ('07.10월부터 본격 실시)

【외부 고객 (금융업·소비자)】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금융업(3회)·소비자(2회) 패널 의견을 취합하고 '07년부터 금융개방성 확대를 반영 외국계 금융업 패널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중
- 김용덕 위원장 취임이후 금융 권역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 : 금융시장 현안 과제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

* 은행(8.22), 자본시장(8.31), 비은행(9.6), 보험(9.13)

□ 혁신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 및 지원 (혁신의 감시자)



□ 체계적인 변화관리 방안으로 혁신 장애요인을 해소

- 내부직원 냉소 및 혁신 피로감 ⇒ 스किन십 활동과 희망메시지 전파로 극복
 - '혁신주니어보드', '직원'들과 위원장간 대화를 통해 혁신필요성과 비전 설명
 - 조직내부에 혁신의 성공과 희망 전파를 위해9층에 『혁신카페』 확대 운영
 - 위원장이 내부 정부혁신 BP대회에 참석하여 격려금을 수여 혁신 자긍심 고취
 - 워크숍,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혁신피로도 해소방안 발굴
- * 혁신피로도조사('07.4) 실시후 직급별·부서별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1차 혁신 워크숍('07.4)에서 의제화 및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 실시

극복 사례

취임이후 조직내 동향에 대한 언론에 대한 식명의 이메일건(8.12) 대응

⇒ 현재 추진중인 업무혁신에 대한 眞意를 직접 설명

- ① 불필요한 일줄이기는 “근무시간중 집중하고, 여유시간은 자기계발에 충실” 취지
- ② 혁신로드맵은 “업무를 시스템화 체계화하여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방지” 목적
- ③ 회의시스템 변경은 “금감위/원이 호흡을 같이하고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

- 외부 갈등과 저항 ⇒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홍보를 통해 전략적 대처
 - PCRM고객에게 혁신사항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맞춤형 홍보대책 수립·시행
 - 금융권역별 간담회(5회), 금융업 패널(3회, 외국계1회)·금융소비자 패널(2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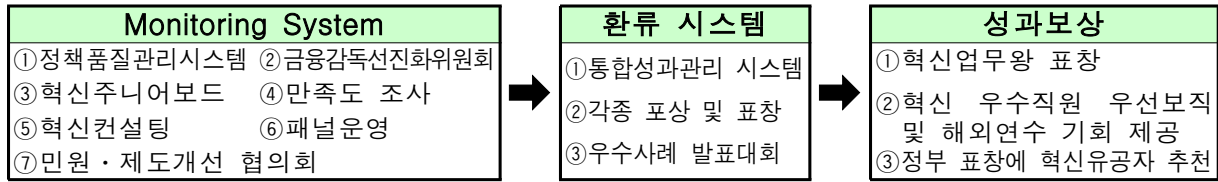
극복 사례

소속기관 인사(8.24)일 이후 전직원에 보내는 메시지

“저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地緣·學緣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투명성, 적재적소, 균형인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능력이나 조직기여도를 중시하고 관련 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세

체계적 환류시스템 운영



가.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및 환류

□ 내부 혁신활동 모니터링

① 금감위/원 내부 회의체계 개편 : 다단계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으로 혁신

- ▶ (모니터링) 매주 현안보고식 간부회의가 차별성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 금융 동향 파악 및 혁신·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

개편전	개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주 월요일 금감위/원 간부회의 ▪ 2·4주 월요일 금감위/원 티타임 ▪ 매주 목요일 금감위 간부 티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점검회의 (매일 오전) ▪ 주요현안점검회의 (매주 월요일) ▪ 월간 정책혁신평가회의(매월 마지막 월요일)

▶ (모니터링 환류)

-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위한 '금융시장 상황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에서 개별 혁신이슈 토론 실시
(예) 감독인력역량강화방안, 감독시스템선진화방안, 정부업무평가실적제고방안('07.9)
감독기구 도덕성·청렴성 제고방안, 만족도 조사 제고방안('07.10)

② 「혁신 주니어보드」 확대·상설화

- ▶ (모니터링) 금감위 혁신주니어 보드(11명), 금감원 주니어 보드(15명) 확대 및 상설화('07.9)
- ▶ (모니터링 환류) 간부-직원간, 금감위-금감원간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수렴 활성화
* 매분기 정기회, 주요현안 발생시 임시회 개최 ⇒ 주요 감독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내부 경영혁신 문제에 대한 제안·토의 및 의결 등 역할 수행

③ 외부 컨설팅을 통한 내부혁신 모니터링

- ▶ (모니터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 및 인사시스템에 대한 진단('07.9) 및 행자부 혁신컨설팅('07.4~11) 실시
- ▶ (모니터링 환류)
 - 조직진단을 완료('07.12)하고 향후 금융감독기구 조직 재정립 등에 활용 예정
 - 혁신문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적(10회)를 통해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외부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①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 ▶ (모니터링) 공동의장(2명), 학계·연구기관(10명), 금융회사 대표(6명), 언론·산업계 대표(8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하여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확정(10.22)하고 반기별 실적점검 실시
- ▶ (모니터링 환류) 부진과제 원인분석 완료과제 승인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환류 예정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 10.22)

② 만족도조사 실시

- ▶ (모니터링) 인·허가 및 검사 서비스 정책, 전화응대태도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 실시
* 상, 하반기 각각 1회 실시, 주관기관 '현대리서치'
- ▶ (모니터링 환류) 만족도 저조 분야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행태개선을 위한 피드백 연수 실시

③ 외국계 금융업 패널 구성 및 운영

- ▶ (모니터링) 금융개방 가속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진입 확대> 외국계 금융업 패널을 구성(5.25)·운영(6.22)하여 애로사항 및 규제개혁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에 반영
* 국내 금융회사 금융업 패널(3회) 및 금융소비자 패널(2회)도 지속 운영
- ▶ (모니터링 환류) 7개 건의사항 중 2건 수용 (감독규정영문번역서비스 실시, 수익증권 기준가격 편차 허용 검토 등)

④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 ▶ (모니터링)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외부 위원인, 금융회사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 심의를 통해 정책방향 결정(반기별 개최)
- ▶ (모니터링 환류) '07년중 3개 신규과제 발굴 12건의 과제를 종료

나. 모니터링 결과 분석·활용

【실패사례 분석】 '06년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한 차 정책품질관리 사례로 지정 실패원인을 분석 후 리스크 관리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6년초 10.6%에서 '07.6월 0.8%로 감소시킴

다.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으로 혁신활력 창출을 위한 성과보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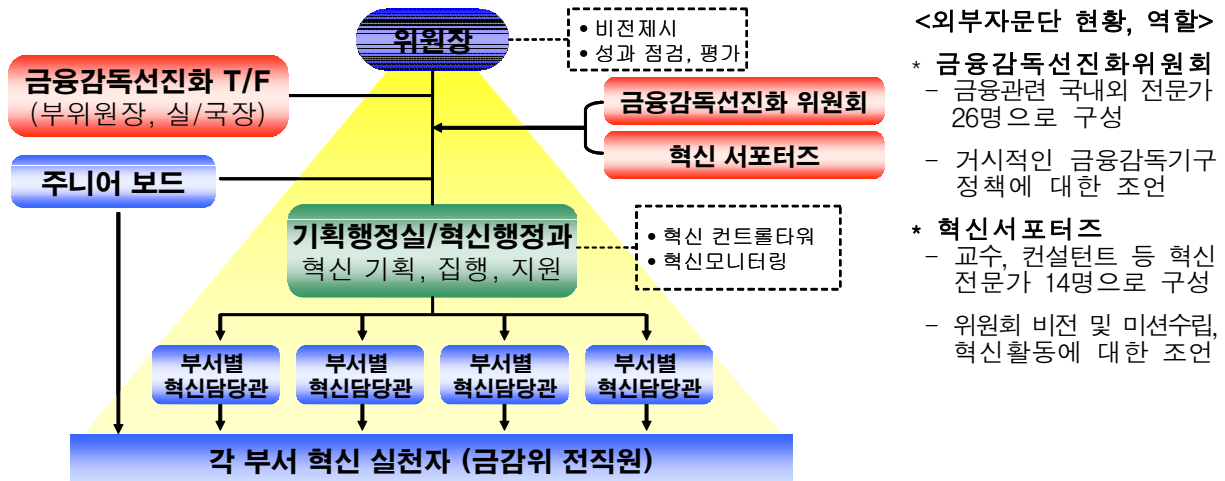
- ▶ 정책 혁신 우수직원'업무왕' 포상(분기별 1회), 혁신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연간 1회)
- ▶ 혁신담당 직원에 대한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 06년 혁신브랜드, BP대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담당 사무관은 자산운용감독과로 전보, 혁신총괄 서기관은 기수를 뛰어넘어 과장급 직무훈련 실시
- ▶ 각종 정부포상 추천시 혁신 우수직원 우대(행자부장관 표창 1명 등)
* 대통령 표창 1명(규제개혁 담당), 국무총리 표창 1명(혁신담당), 행자부장관 표창 2명(혁신 및 정보화 담당) 등

기관명	평가부문
금융감독위원회	혁신역량

평가지표 **2.1.a.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① 실질적인 혁신선도 역량 보유 여부

가. 【조직】 내·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혁신추진조직 구성



□ **혁신추진조직 및 외부 자문단의 다원화 및 활성화**

- 혁신행정과 외에 금융감독선진화/F(29명), 주니어보드(11명)를 새로이 구성하여 혁신추진동체로서 역할을 제고☞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추진에 위원회 정원의 50%가 몰입
- 금융감독선진화위원회(07.10 구성)는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에 대해 대면보고 받은후 (10.22, 로드맵발표대회) 반기별 실적점검 보고회를 개최 우수 및 미흡과제를 직접심사할 예정
- 혁신서포터즈(07.10)는 기관장과의 면담 서면 의견교환 등을 통해 위원회 혁신방향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혁신레터 발송 등을 통해 혁신행정과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나. 【인사】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 **혁신추진조직의 권한 강화 및 역량 증진 노력**

- 타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혁신전담인원(44명/80명)비율을 유지, 혁신추진동력을 강화
- 혁신행정과장 승진(서기관→부이사관) 및 중공교 변화관리 선도자 교육(07.3), 생산성 본부 회의 퍼실리테이터 교육 수료(07.11)
- 혁신총괄사무관에 성과평가S등급 획득자를 전진배치
 - 학습동아리 활동, 행자부 워크숍(07.3), 중공교 변화관리 실행자교육(07.4) 및 병무청 등 각부처 혁신이어달리기에 참가하여 혁신선도부처의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실시
- 예산처, 특허청 등 혁신우수기관에서 혁신담당 사무관을 전입 받아혁신조언자로 활용

다. 【예산】 혁신활동 수행을 위한 혁신예산 확보

□ **다양한 혁신활동 지원하기 위해 혁신예산 비목 조정**

- 08년 혁신예산을 07년보다 7.5% 증액 확보하고 사업추진비 비목을 추가하여 권역별 금융포럼 등 다양한 혁신행사를 신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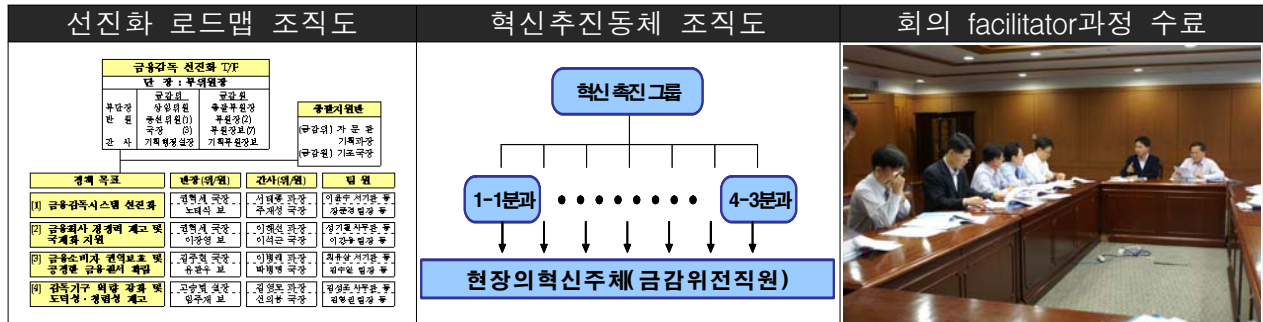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혁신예산(증감)	121,800	119,800(△1.6%)	106,250(△11.3%)	114,000(7.5%)

② 중간관리층의 혁신역량 보유정도

가. 비전·전략 공유 노력

-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 작성 및 실행('07.8~)에 모든 중간관리층이 참여
 - 로드맵작성을 위한 4개의 실무반장 및 간사로서 기관장의 의지를 전직원에 전파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허브역할 수행
 - 100대 과제 및 30대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6회 실시('07.8~10)
 - 로드맵실천을 위한 혁신추진동체에 혁신촉진자로서 효과적인 이행계획 수립원활한 회의진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 생산성 본부의facilitator과정을 수료('07.11)
 - 로드맵을 전직원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분과별 워크숍성과점검회의 등을 주최



나. 혁신아이디어 제안 등 출선수범

□ 【혁신적 사고 및 실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 제시와 출선수범

- 혁신워크숍('07.4월, 7월), 월간혁신정책평가회의(매월) 등에서 자율 발제를 통해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제시

제안자	제안내용	출선수범
감독정책2국장	면담자료 작성 간소화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해당국 회의자료, 면담자료 생산 최소화
감독정책과장	매주 학습동아리와 외부전문가 정책토론 실시	모든 학습동아리 토론에 참여(총17회)
혁신행정과장	보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기자 표시등 설치	메모보고 활성화 계획 수립
증권감독과장	중복되는 통계자료 작성 부서를 일원화	통계자료 작성 서식 정비
국제협력과장	지식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검색 편의 증진 방안 제안	지식 등록 양식 정비 등 실시
인사계장	불필요한 안내문서를 줄이기 위한 금감위 전자 회보 발행	회보 양식 정비 및 회보 관리책임

□ 【혁신활동】 국·과장주도 CoP활동으로 창의적 업무 발굴

- 국내외증시 주요이슈연구회(감독정책2국장), 금융감독정책현안 연구회(감독정책과장) 등 국·과장이 모든 동아리 활동 책임자로서 외부 전문가 섭외토론 등을 주도
 - * 19회(10월말 현재) 외부전문가 토론회 중 부위원장 주재 2회, 상임위원 주재 5회, 국장 주재 3회, 과장주재 9회로 모든 토론회를 중간관리자가 주재

다. 혁신장애요인 파악 및 해소 노력정도

□ 【수시】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 혁신장애요인 파악

- 혁신만족도 설문조사(반기1회), 간담회(수시)를 통해 공식적 상하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 위원장 주니어보드 간담회('07.8~9), 릴레이 사무관 간담회(혁신행정과장/기획과장, '07.8~10)

□ 【정기】 워크숍, 월간혁신정책평가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해소방안 발굴

- 혁신피로도 조사('07.4) 실시후 직급별·부서별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차 혁신 워크숍('07.4)에서 의제화(혁신행정과장 발제) 및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실시

혁신장애요인
과도한 일회성 혁신행사
부처 특성에 맞지 않은 혁신활동
업무 부담 가중
주무관 역할 모델 부재
딱딱한 조직문화
인센티브 부족



장애요인 해소노력
소집단(업무관련 T/F) 토론회 워크숍으로 개편
부처특성에 맞는 혁신활동 발굴, 실행(학습동아리 내실화 등)
가정의 날, 춘계휴가 시행, 과별 업무재분장, 일버리기 운동
부서별 주무관 · 실무관 업무 재분장 및 적극적 임무부여
HR(human relationship)운동 및 취미동아리 활성화
혁신마일리지 재정비, 혁신 업무왕 선정(분기1회)

③ 소속 · 산하기관 등에 대한 혁신지원 정도

□ 【소속기관】 금감원 혁신활동 지원

◇ 국민의 금융감독당국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민 접촉점인 금감원의 변화와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및 감독

- 금감위/원 합동 혁신추진조직을 구성하여 금융감독당국의 혁신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금감원 혁신을 지원
 - * 혁신추진동체, 혁신촉진그룹, 민원제도개선TF, 서민금융활성화 TF, 혁신로드맵TF 등 다양한 TF 구성
- 금감원혁신추진계획 수립(3.12), 혁신워크숍 개최(7.2~19), 혁신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8.16), 불필요한 일버리기과제 선정(9.3)시 Know-how를 전파
- 금감원조직진단(10.7~), 연수프로그램 혁신컨설팅(9.27~)에 금감위 혁신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혁신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산하기관】 자산관리공사(KAMCO) 혁신활동 지원

- 정부부문에서 기 도입한 각종 혁신활동에 대해 조언 및 지원
 - 총액인건비제 도입('07.6), 경영전략계획 수립('07.6), 혁신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BP대회개최('07.9)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Know-how 제공
- 중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
 - * ① 윤리경영 수준 진단 고도화, ② 신용회복지원센터 개선을 통한 신용지원 서비스 강화, ③ 온-비드를 통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 구축

④ 타 부서 · 부처와의 협력관계 형성 정도

□ 【부서간 협력】 T/F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

- (T/F 활용을 통한 협력관계) 선진화로드맵 수립 및 과제 수행을 위한 4개의 실무반은 조직의 틀에 제약받지 않은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
 - *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서간 이기주의, 업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이 직접 지시
- (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지식관리시스템 게시판, 금감위 회보 등을 통해 위원회 내의 모든 정보가 전직원에 실시간으로 공개
 - * 정보공유를 보다 내실화 하기위해 지식맵 및 지식검색 엔진 재정비('07.11), KMS와 온-나라 시스템 연동('07.12), 금감원 정보시스템과의 연계('07.12)등을 추진

□ 【타부처와의 협력】 혁신선도부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 혁신선도부처의 Know-how 전수
 - 혁신행정과장 등이 건교부 관세청 등 혁신선도부처 기획관리실장에게 혁신 내재화 방안 등에 대한 Know-how를 전수 받음('07.8)
 - * 회의체계 개편방안,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 추진방안 등 위원회의 주요 혁신사업에 대한 조언
- 행자부 혁신컨설팅을 적극 수용
 - 혁신문화, 전문성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10회)를 통해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민원제도개선(공동혁신과제)포럼에 선도부처로 참가
 - 온-나라시스템과 참여마당신문고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타부처 혁신성과 공유

① 고품질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학습체계 운영

□ 조직과 직원의 수요(Needs)에 기반한 학습체계 구축

- 금감위 전문성에 대한 혁신컨설팅을 통해 학습 수요를 체계화

◇ 비전 및 미션 분석 후 금감위 직원이 가져야할 핵심역량을 도출, 이에 기반한 학습체계 설계

핵심역량

- ① 전문성 : 금융관련 학술지식, 법규해석 능력, 금융시장 동향 파악 능력
- ② 국제감각 : 외국어 능력 및 선진국 규정 및 사례 이해도
- ③ 정보화 능력 : 각종 시스템 이해 및 활용 능력
- ④ 청렴성 :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중립·합리적 정책 결정 능력

핵심역량

(i-GPS) ① 전문성, ② 국제 감각, ③ 정보화능력, ④ 청렴성

혁신전략

(역량 강화) 세계 금융 10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



학습목표

조직차원

고성과 달성을 위한 핵심 역량 개발

개인차원

금융 감독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

학습전략

▶07년 교육계획 및 상시학습체계 운용계획을 수립,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기계발계획을 기초로 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직원 100시간 상시학습계획 수립

I. 핵심가치 달성

II. 혁신 역량

III. 리더십

학습 프로그램

- ① 전문성 : 직무연수 및 OJT
 - 금융기초, 금융실무, 금융감독과정 등
 - 사이버연수원 교육
 - 업권별 협회 위탁교육
 - 민·관 합동 학습동아리
- ② 국제감각: 외국어 및 국제금융법
 - 중공교 사이버 외국어 교육
 - 선진자본시장 연구회 등 학습동아리
- ③ 정보화: 중공교 정보화 교육
- ④ 청렴성: 윤리교육, 청렴위 교육

변화와 혁신 워크숍
중공교 변화관리실행자과정
민간위탁 혁신교육
혁신전문가 초빙교육
중공교 변화추진 아카데미
행자부 혁신컨설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변화관리 선도자 과정
4급 핵심리더 과정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고위 정책과정

학습방법

Action Learning, CoP(학습동아리), 민간위탁(facilitator 양성과정), 시장전문가 및 혁신전문가 초청강의 토론,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실시



평가 및 피드백

- ▶전화친절도 조사, 감독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등평가와 행태개선 훈련을 연계한 피드백 연수 실시
- ▶교육 및 워크숍 실시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하고 학습·교육과 개인 성과간의 연관성 분석방안 강구
- ▶개인별 「능력개발 실적카드」를 작성하여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
* 07년 직무계약시 부서장은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성과평가 반영
- ▶학습활동 실적은 혁신마일리지 등을 통해 개인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

□ 다양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직무역량 배양

-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07.4)하고 성과 부진 동아리 정리 후(07.4), 5개의 정책연구연구회, 5개의 현안해결동아리를 운영
- 정책연구 동아리는 감독정책과장의 제안으로 매주 수요일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을 필수적 과제로 설정 10월말 현재 19회의 토론을 실시
- 학습동아리 연구로 가시적 정책성과를 창출 조직성과 기여부분 참고

대표적 동아리	조직성과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	참가인원
헤지펀드 도입 동아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입법예고	10
감독정책연구회	금융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우수·실패 사례 분석·공유	9
온-나라 시스템 동아리	메모보고, 회의관리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능에 대한 메뉴얼 제작	14
금융규제 개혁 연구회	각종 패널의 의견 분석 후 규제 개혁 정책에 반영(외국계 2건)	8

② 학습편의 및 예산지원

□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학습환경 및 여건을 조성

- 충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카페 이전(4명 수용→20명 수용) 및 개인 열람실 확보(40석)
- 학습여건개선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습공간 및 학습서적을 효율적으로 관리
- 상시학습체제운영지침을 제정(07.3)하여 전직원이 연간100시간의 학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연간능력개발계획을 협의 수립

* 상시학습체제

- 개인별 연간능력개발 계획 수립을 의무화
 - 직무교육 비율(50%) 내 자유로운 교육프로그램 선택권 부여
- 간부들의 적극적 지원
 - 부위원장은 상시학습 책임관, 혁신행정과장은 상시학습스폰서, 과장은 부하육성 책임관이 되어 전직원의 상시학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학습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 최근4년간 학습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편성액(천원)	13,950	63,850	67,800	72,701
1인당 교육비(천원)	190	862	916	982
증가율	-	350%	6%	7%

□ 정기적 학습활동 점검 및 인센티브 제도화

- 상시 학습현황 공표(분기별), 학습동아리 협의회 개최(분기별), 우수사례 발표대회(매년), 최우수 지식인 선정(매년)을 통해 정기적인 학습실적 확인·점검 실시
- 매년 우수사례 발표대회(07.8.16, 7개팀 참가)를 개최하여 학습 성과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성과우수팀에 대해 위원장표창 및 시상금(3팀)을 수여하고 발표 대회 참가팀 전원에 혁신 마일리지 부여
- 최우수 지식인 선정 학습동아리 일몰제 등을 통해 학습성과를체계적으로 관리



③ 학습활동의 다양화

□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습 자원 공유

- 4개의 업권별 자문그룹 포럼을 구성(4.26, 60명)하여 시장 및 산업동향 등 시장의 목소리를 정기적 미팅(매월 1회)에서 직접 수렴
 - * 6개 권역별 전문가인력pool은 별도 관리 중
- 업권별 협회,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 지식 정보DB 검색 담당자를 임명(07.2)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KMS 및 게시판에 등록(210건 10.19현재)

□ 학습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습 목표	조직차원		개인차원	
	고성과 달성을 위한 핵심 역량 개발		금융 감독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	
학습 내용	학습 프로그램	학습목적	학습방법	
	I. 핵심가치 달성 ① 전문성 : 직무연수 및 OJT - 금융기초, 금융실무, 금융감독과정 등 - 사이버연수원 교육(42과정) - 업권별 협회 위탁교육 - 민·관 합동 학습동아리 토론(19회) ② 국제감각 : 외국어 및 국제감독규범 - 중공교 사이버 외국어 교육 - 선진자본시장 연구회 등 학습동아리 ③ 정보화 : 중공교 정보화 교육 ④ 청렴성 : 윤리교육, 청렴위 교육	· 직무 전문성향상 · 정책대안 마련 · 감독서비스 품질 향상 · 외국의 선진사례 습득 · 감독규범 및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정보화 능력 제고 · 고도의 직업적 윤리의식 제고	· 금융전문가 강의 · OJT직무연수 · 영국FSA 연수('07.3) · 과장급 및 사무관급 직무훈련 · 신규보직자 멘토지정 OJT · Action-Learning · 사이버 교육 · 강의식 교육	
	II. 혁신역량 강화 ·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 · 중공교 혁신교육 · 민간위탁 혁신교육 · 우수혁신부처 교육참여	· 환경변화 대처능력 제고 · 글로벌 마인드 향상	· 텔파이기법 · 세미나 실시 · 브레인스토밍, 토론 실시 · 아시아나 항공 친절교육	
	III. 리더십 교육 변화관리 선도자 과정 4급 핵심리더 과정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고위정책과정	· 리더십 강화 · 상하간 의사소통 원활화 ·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	· 역할극 · 세미나 실시 · 브레인스토밍, 토론 실시 · 사이버 교육실시	

④ 학습의 조직성과 기여 및 학습 성과의 전파 · 확산

□ 학습의 조직성과 기여한 대표사례

- 업권별 금융포럼 CoP, 회의 facilitator 과정 등 다양한 학습이 조직 성과로 연결

교육명(동아리명)	조직성과에 기여한 대표사례
증시 이슈 연구회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재경부에 시행령 개정요청 돈육 선물 및 국제10년물 선물 상품 상장방안 검토
서민금융활성화동아리	설문조사 분석, 외부의견 수렴을 통해 서민금융 119를 환승론으로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토론 실시 후 상호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 발표
보험산업 발전 연구회	생보사 상장의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사 상장에 기여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감독규정 개정)
금융제도 연구회	외부 전문가 토론 실시 후 정책보고서 '은행산업 발전 방향' 발표
회의 facilitator 과정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 토론식 워크숍을 활성화

□ 시스템을 통한 학습 성과의 전파 · 확산

- 혁신포털(ino-FSC), 지식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게시판에서의 학습·지식 공유를 통해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ino-FSC에서 모든 시스템 연결·통합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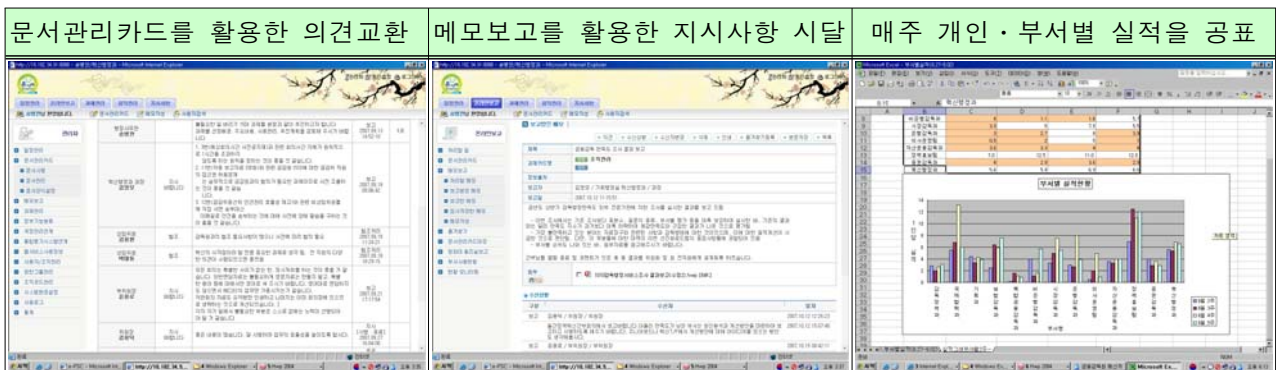


평가지표 2.3.a. 온나라 BPS 활성화

- 온-나라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혁신행정과장과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온나라시스템T/F를 구성·운영(07.3~)
 - 온-나라시스템 조기 정착 방안을 수립(07.3)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 * Help Desk 운영, 맞춤형 교육 실시, 실적 현황 공표 및 인센티브 계획 수립
- 온-나라시스템 도입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Help Desk 운영
 - 각부서 Help Desk 담당자를 지정, 일반사용자 보다 심층적인 유지 보수 교육 실시
-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 시도
 - 각 부서별 방문교육(1.2~3), 신규 사용자 및 희망자 교육(4.12), 온-나라시스템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리즈(9.6,10,17)배포, 수시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실시

교 육 명	대 상	실시기간	교 육 내 용
부서별 방문교육	전직원	1.2~3	전직원에 활용방법 및 장점 등을 전파하기 위함
신규 사용자 집합교육	전입자 등 20명	4.12	신규 사용자에게 활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함
Help Desk 운영자 교육	담당자 12명	9.11	FAQ 등 일반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BRM 분류체계 변경 교육	담당자 12명	9.28	온-나라 시스템 과제 변경 방법 교육
온-나라 시스템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리즈	전직원	9.6,10,17	메모보고, 회의관리 등에 올바른 활용방법 및 우수사례에 대해 전파

- 온-나라시스템 사용실적을 공표하고 각 항목별(과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 등) 우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경쟁 유도
 - 매주 활용현황을 점검하여 부서별·개인별 사용실적을 공표하고 실적 저조자는 혁신 마일리지 차감 우수자는 위원장님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
- 위원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온나라 시스템 활용에 솔선수범
 - 금감위 혁신의 4대 핵심전략 중 한가지 항목을 정보화로 천명(07.8.6)
 - 위원장실 대면보고 금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지시(07.8.7)
 - 모든 회의자료를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포 공유할 것을 지시(07.8.8)
 - 24시간 온-나라시스템 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택으로 온나라시스템을 연결(07.8.13)



성과목표

금융강국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높은 성과를 거둔 인재를 우대하는 성과주의 문화 고도화

발전방향

준비기('04)	도입기('05)	활용기('06)	고도화기('07)
· 성과도양 조성	·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외부평가확대 · 대상 확대	· 시계열 정합성 확보 · 금감위/원간 BSC 통합

①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 3단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 정책중심 부처로서 성과관리시행계획 (1년계획)에서 전략계획 (5년계획)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서 3개년 계획인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추진

	1단계 성과관리	2단계 성과관리	3단계 성과관리
	성과관리 시행계획 단기과제(1년)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중기과제(3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장기과제(5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전략목표 23개 성과목표 70개 주요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대 부문 100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전략목표 23개 성과목표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4대 실무반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 혁신추진 동체·촉진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호연계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반영('2008~'2010)	3년계획 추진후 점검을 통해 로드맵 재수립	재정관련 과제만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5개년 계획)에 연동하기 위해 마련된 중장기(5개년)계획이라는 제정 취지를 반영

□ 금감위-금감원간 BSC의 연계 체계 구축

- 금감위/원이 공동으로 금감원 조직진단에 참여하여 조직·인사 시스템 검토
 - * '07.10월 용역발주, 11월 중간보고, 12월중 조직진단 완료
-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금감원BSC Pilot Test('07년) ⇨ 혁신건설팀단 자문(4~11월) ⇨ BSC 전면도입('08년)을 목표로 BSC 도입을 추진중
- 로드맵 작성시 금감위/원 담당자를 공동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일한 성과지표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금감위/원 간 공조체제를 강화

□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정착 및 대내외적 성과 창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확대	성과창출	대내적	대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평가-개인평가 연계 대상확대: 5급이상 전직원 창의성등 혁신성 평가 (CEO 미션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년 상반기 전략목표 초과달성 상반기 성과급지급 성과주의 문화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뱅크지 혁신상 혁신 BP·브랜드 본선 혁신순위 상위권 (3군중 3위/11개기관)

② 성과관리평가 결과의 활용

□ 성과관리 결과를 승진, 성과급, 국외훈련 등 인사운용 전반에 반영

승진에 반영

- ▶ 평가결과를 PPSS에 입력, 누적 관리하여 객관적 평가자료로 활용
- ▶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 평정 반영,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 반영

성과보상 및 포상에 반영

- ▶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연계하여 지급
 - * 성과계약·근평(60%), 혁신마일리지(10%), 다면평가(10%), 정부업무평가(20%)
- ▶ 업무성과 우수자를 '업무왕'으로 선정, 포상금 부여 (분기별1회)

전보 및 기타

- ▶ 성과 우수자에게 전보 및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 ▶ 각종 정부포상 추천시 혁신 우수직원 우대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행자부장관 표창 2명 등)

③ 성과관리평가 결과의 환류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상 개선요구를 정기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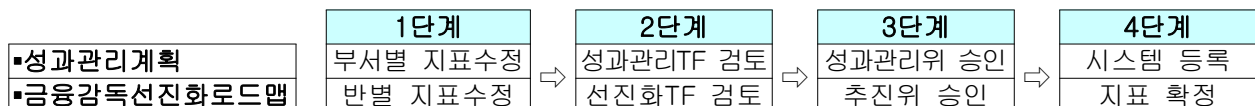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전직원 의견수렴(7.4) 및 지속적 홍보('07.9,10)
- 정책성과에 대해 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성과평가 개선에 반영
 - * 상반기 정책만족도 조사 : PCRM(117명), 금융회사(114명), 협회·연구소(100명)에 대해 조사 실시
- 성과관리 운영현황에 관한 혁신컨설팅(7.4~9), 전문가 의견 수렴('09.10)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 성과관리지표의 수정·보완 및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노력 강화

- 수요자 관점에서 대표성 있는 단기 및 중장기 계량 결과 지향적 성과지표 개발 노력
 - *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경우 단기(2008.6), 중기(2008.12), 장기(2010.12) 등 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점 관리
- 부서별 평가결과 환류에 따라 성과지표 정제 및 목표값 수정
 - * 상반기 평가결과 100%이상 초과달성된 지표(12개)를 집중 재검토하여 지표의 보완을 추진하고 금융감독로드맵의 성과지표는 TF팀 및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를 통해 승인작업 추진



□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전략계획,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에 환류

- 지표별 성과달성 추세 등을 토대로 「성과관리전략계획(5개년)」 및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3개년)」, 「시행계획(1개년)」 성과목표를 설정 및 수정 예정
 - * 단위과제별로 측정·평가할 목표는 100% 성과지표화하여 내년도 BSC 시스템에 반영·관리할 예정

기관명	평가부문
금융감독위원회	혁신문화

평가지표 3.1.a. 혁신의 일상화



① 혁신활동에 대한 일체화 정도

□ 혁업일치의 완성본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마련

환경분석	세계금융환경변화	고객 수요(Needs)	그간의 성과 및 반성
------	----------	--------------	-------------



전략수립	정책비전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 ①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②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③ 금융회사의 자율성·창의성 확대 ④ 금융소비자·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⑤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
	정책방향	

시행계획 수립	12개 부분 100대 과제 30개 성과지표 수립			
	목표별 과제분류	목표1(16개) 목표2(14개) 목표3(31개) 목표4(21개) 목표5(18개)	추진기간별 과제 분류	단기과제(6개월) 24개 중기과제(1년) 53개 장기과제(3년) 23개
수립과정	I. 민관 합동 T/F 구성		II. 6차례 T/F 회의 개최	III. 로드맵 발표대회(10.22)
			① 8. 8 1차 : T/F 구성 ② 8.14 2차 : 추진방향협의 ③ 8.30 3차 : 전략, 비전수립 ④ 9.11 4차 : 과제조정 ⑤ 10.5 5차 : 과제확정 ⑥ 10.8 6차 : 홍보방안수립	

수행방법	소규모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촉진자(20명)를 포함한 혁신추진동체(100명) 조직, 각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
------	-----------------------------------------------------------------------------------

모니터링	① 로드맵 과제 우수사례 발표대회('08.2), ② 4대 고객만족도지표(민원, 인·허가, 검사, 청렴) 매년 발표 ③ 매분기 월간혁신정책평가회의 실적보고, ④ 금융감독선진화위원회에 매 반기마다 성과 보고
------	----------------------------------------------------------------------------------------------------------------------

환류방안	우수사례에 대한 위원장 표창(매년), 30대 성과지표 BSC 반영 등을 통해 전직원이 로드맵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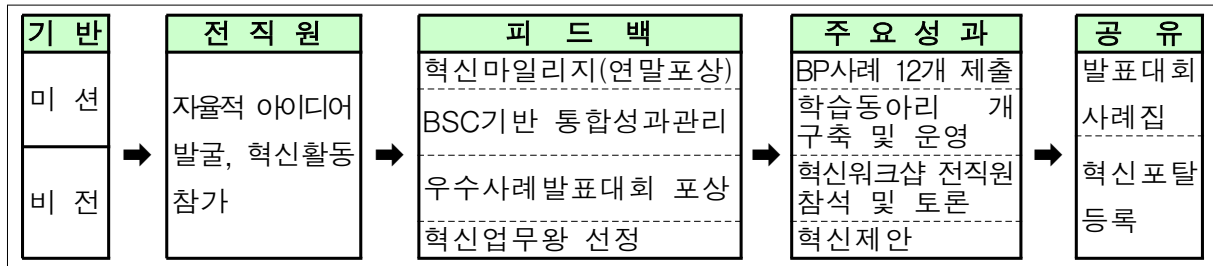
○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수립하여 업무계획→ 실행 → 평가 → 환류를 일원화

“로드맵을 통해 업무를 시스템화·체계화하여 업무중복 및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로드맵과제만 잘 수행하면 고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 - 위원장 혁신메시지('07.8) -

- 활동기간 : 로드맵 수립('07.8~'07.10), 로드맵 이행('07.10~'10.8), 로드맵 평가 및 평가 및 환류(매 분기 과제별 이행실태 점검)
- 참여인원 : 금감위 전 직원이 1개 이상의 과제를 담당 과제 실적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연계
- 조직내 적용범위 : 매분기 점검시 완료과제 관리 종결 및 신규과제 발굴하는 등 로드맵을 지속보완하고 전직원이 로드맵을 통한 비전달성에 몰입

② 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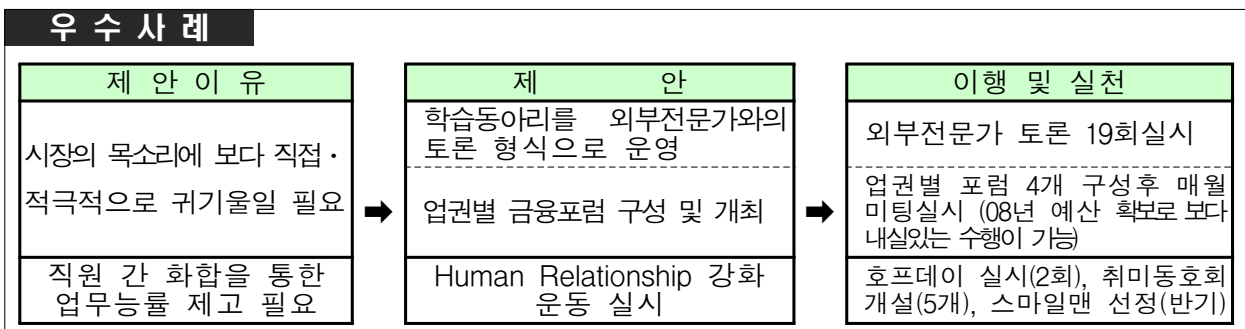
□ 자율적 혁신활동 촉진체계 구축



- 개인별 혁신활동 인센티브(인사·성과급·포상) 체계 구축
 - (인사) BSC에 혁신마일리지 20%반영, 다면평가(10%) 항목 중 혁신적 마인드·행동 항목 추가
 - (성과급) BSC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매년 2회), 혁신업무왕은 성과급 등급1단계상승
 - (포상) 혁신업무왕, 경진대회 입상, 연말 혁신마일리지왕에 위원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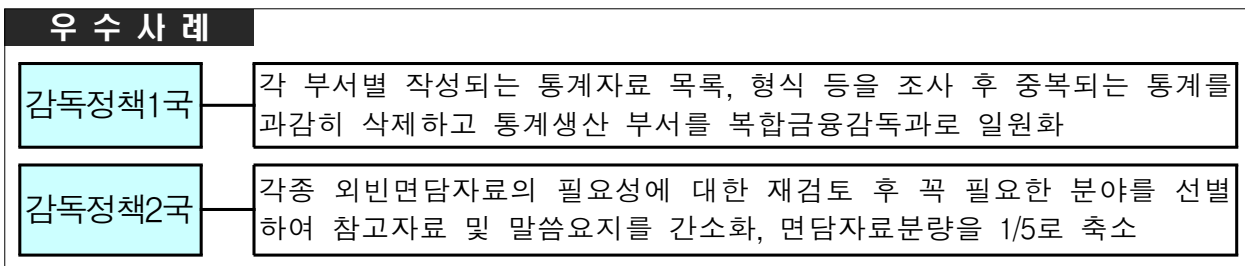
□ 자율 발제를 통한 토론식 혁신워크숍 개최(4.19)

- 금감위 역량 및 위상 강화라는 주제로 전 직원의10%가 자율 발제 ➡ 부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이를 바탕으로 대토론회를 실시12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전위원회 차원의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 시행(8.24~)

- 국별 자발적 T/F 구성, 타임시트를 작성하여 중복되는 일과 필요 없는 일에 대한 검토 후 15대과제를 선정, 세부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이행



□ 자발적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 학습동아리 외부 전문가 토론회(매주 수요일 08:00~ 09:30)에 위원회 전 사무관 중 60%이상이 꾸준히 참석하여 토론을 실시 실적은 11,12p 학습실적부분 참조

□ 혁신포탈을 활용한 혁신활동 공유

- 부서차원의 혁신활동 및 학습동아리 학습결과는 위원회 혁신포탈(Inno-FSC)에 실시간 등록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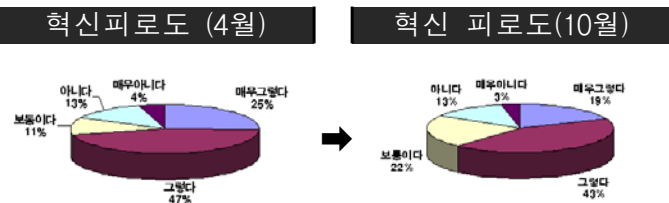
❶ 기관의 혁신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

□ 혁신장애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분석과 피드백

- 혁신추진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조사 분석 및 대안 마련

발굴 활동	발굴 사례	해소 방안
혁신 주니어보드 토론회('07.1)	타부처와 동일한 혁신추진으로 인한 혁신과 업무 분리 및 추진동력 저하	위원회 맞춤형 혁신추진계획 수립('07.3)
혁신 만족도 조사('07.4)	일률적 혁신워크숍의 피로감	토론식 워크숍 개최('07.4)
→	혁신 마일리지, 의무적 학습동아리 참여의 피로	→ 혁신 마일리지 개편안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07.4)
위원장과 대화('07.8)	관행적 대면 보고 문화로 인한 대기 시간 증가	대면보고 최소화 및 메모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07.8)
혁신 만족도 조사('07.10)	불필요한 일버리기의 실천 미흡	홍보 강화 및 이행여부 점검 실시('07.10)

- 체계적 장애요인 관리로 혁신피로도 감소(4월, 10월 혁신만족도 조사결과)
- 금감위 혁신활동에 대한 자부심: 52%→73%
- 혁신활동에 대한 피로도: 72%→62%



□ 감성관리 기법 도입으로 혁신피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회사를 다니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회사가 즐겁지 않다면, 자신의 역량을 100%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직원의 역량을 120%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소규모 호프 데이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은 정시 퇴근하여 부하들이 눈치를 보며 퇴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취임식 직후 간부들과의 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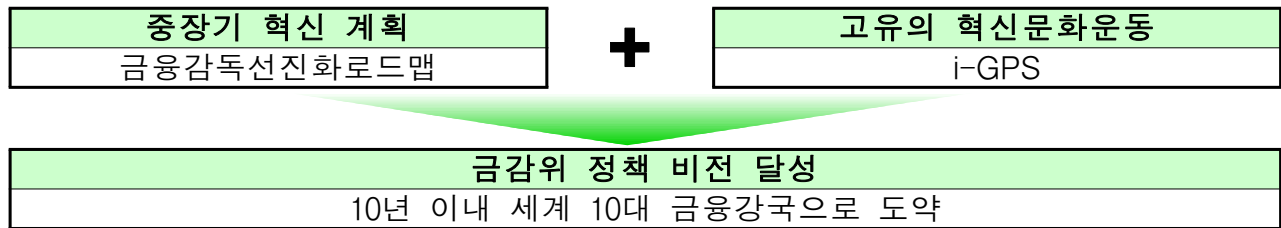
- 직원들의 피로도 저감을 위해 위원장이 각종 감성운동을 출선수범
 - 6시 정시퇴근과 실시간 상황보고를 조화시키기 위해 가택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결
 - 회식의 119원칙 제시 후 실천: 1가지 주종으로 1차에한해 9시 이전에 종료할 것
 - 위원장과 대화방 개설 후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메시지를 전파
- 혁신행정과장의 귀담이(전직원 애로사항 수렴사업)를 '07.8부터 지속적으로 수행
 - 점심·저녁 시간을 활용한 직급별 소규모 그룹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격의 없는 대화로 수렴 후 해소
- 취미동아리 활성화('07.4)를 통한 직원간 유대관계 공고화
 - 맛집기행 동호회, 공연관람 동호회 등 5개의 동호회에 간부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취미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공고화

□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마인드 개선을 유도

-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위해 한국교원대학 이홍수 교수를 초빙「음악과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07.7)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98% 직원이 만족

② 기관고유의 혁신문화운동 추진

□ 조직의 미션과 연계된 고유의 혁신문화운동 i-GPS 추진



【 i - GPS 란? 】

- ◇ i - GPS는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역량을 moto화한 혁신문화운동
 - Information(정보화) : 감독효율성과 고객 이용편의 극대화를 위한 전직원의 정보화시스템 적극 활용
 - Globalizaion(국제화) : 급속도로 진행되는 금융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및 외국어에 정통
 - Professionalism(전문성) : 관련법규 및 시장·산업 동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
 - Sense of integrity(청렴성) :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중립적·합리적 정책결정 능력
- ◇ 로드맵을 잘이행하여 세계 10대 금융강국이라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 수행



- i-GPS를 직원들에 전파하기 위해 전직원 설명회 개최(0.22)
- 위원장이 직접 전직원 앞에서 i-GPS의 필요성 및 실천의지를 다짐

“정보화, 국제화, 전문성, 청렴성은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함께 나아갑시다. 위원장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전직원 설명회-

- i-GPS를 갖추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비 10p 학습체계 참조
- 전문성(Professionalism)의 정의에 대해 행자부 혁신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

□ 「혁신업무왕」을 위원회 고유 문화로 정착

- 매분기 best performer를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성과급 및 인사 반영 등 물리적 보상과 “일 가장 잘하는 직원”이라는 명예를 동시에 수여
- * 부서별 선정위 → 공적조서 작성 → 부위원장 주재 선정위에서 결정

□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즐겁고 보람찬 일터(Great Work Place) 운동 실시

“외부고객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감성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호프데이-

- 만성적 대기문화의 일소를 위한 “가정의 날” 제도 정착노력
 - 매주 수요일 퇴근전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간부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직급을 상향시켜 불필요한 야근을 최소화
- 전 위원회 차원의 불필요한 일버리기 사업을 실시
 - 타임시트 분석 작업을 거쳐 15대 과제를 설정,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매월 월간혁신정책평가회의에서 과제 추진경과를 보고 → 불필요한 일버리기 만족도 88%

① 개방적 업무분위기

☐ 권위적·폐쇄적 조직문화가 민주적·개방적으로 변화

○ [내 부] 구성원들 부서간·상하간 의사소통 및 개방성·자율성 제고

- ▶ (부서간)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 수립 및 내재화 과정에 내부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 * 6차례 금융감독 선진화 T/F 회의개최, 혁신추진동체·촉진자그룹과 함께 동 로드맵의 비전공유 및 내재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 (상하간) 금감위/원 인트라넷(사무자동화시스템)에 위원장/원장 대화방 신설을 지시(8.13)하여 직원들과 공식적·개방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 * 동 대화방을 통해 직원의 고충·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후 최대한 반영·지원
- ▶ (부서간·상하간) 혁신주니어보드 확대·상설화('07.9)를 통한 간부·직원간, 금감위-금감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 매분기 정기회, 주요현안 발생시 임시회 개최⇒주요 감독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내부 경영혁신 문제에 대한 제안·토의 및 의결 등 역할 수행

우수 사례

취임이후 조직내 동향에 대한 언론에 대한 식명의 이메일건(8.12) 대응
 ⇨ 현재 추진중인 업무혁신에 대한 眞意를 직접 설명

- ① 불필요한 일줄이기는 “근무시간중 집중하고, 여윌시간은 자기계발에 충실” 취지
- ② 혁신로드맵은 “업무를 시스템화 체계화하여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방지” 목적
- ③ 회의시스템 변경은 “금감위/원이 호흡을 같이하고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

○ **[외 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금융업·소비자)에게 금융감독정책 문호를 적극 개방

- ▶ (부처간) 은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 현안발생시 재경부 등 유관부처와/F 구성 및 운영,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작성시 재경부, 공정위와 협의 등
- ▶ 이해관계자 (금융업 · 소비자)
 - 4개 실무반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금융감독선진화 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확정(10.22)
 - * 학계 및 연구기관(10명), 금융회사 대표(6명), 언론 · 산업계 대표(8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고 추후 반기별로 추진상황 점검, 완료과제 승인, 신규과제 발굴 등 담당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업(3회) · 소비자(2회) 패널 의견을 취합하고, '07년부터 금융 개방성 확대를 반영 외국계 금융업 패널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중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운영
 - * 매주 3만명에게 뉴스레터를 제공, 혁신사항 홍보 및 의견수렴

우수사례
금융소비

위원장 취임이후 금웅 권역별 LE△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웅시장 현안과제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

- * 은행(8.22), 자본시장(8.31), 비은행(9.6), 보험(9.13)

김용덕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 “영업활동 적극 돕겠지만 실적은 엄격히 평가” 첫 상견례 “축하”, “기대” 발언 소가며 화기
애애 (머니투데이 8.23)



<은행CEO 간담회 8.22>

② 창조적 업무수행 정도

□ 창의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통해 창의적 업무프로세스 발굴 및 추진
 -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15개 과제 (금감원 87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발굴 ('07.10월부터 본격 실시)
- 전직원에게 창의적 연구기회를 열어준 『학습동아리』 성공적 운영
 - 국내외중시 주요이슈연구회 금융감독정책현안 연구회 등 국·과장 포함 전직원이 모든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 섭외토론 등을 주도
 - * 10월말까지 20회 외부전문가 토론회에 부위원장 참가 2회, 상임위원 참가 8회, 국장 참가 12회, 과장참가 100% 달성 등 간부직원들이 혁신을 주도
- 금감위/원 내부 회의체계를 다단계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개편
 - 매주 현안보고식 간부회의가 차별성 없이 이루어 지는 상황 ⇨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혁신·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

개 편 전	개 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주 월요일 금감위/원 간부회의 ▶ 매주 목요일 금감위 간부 티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점검회의 (매일 오전) ▶ 주요현안점검회의 (매주 월요일) ▶ 월간 정책혁신평가회의(매월 마지막 월요일)

○ 독서·지식 행정 추진으로 창의적 업무분위기 조성

- ▶ 혁신도서를 선정하여 직원들과 함께 독서토론회 개최
 - * '대국굴기', '대통령 보고서',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 등 혁신도서를 직접 추천
- ▶ 혁신카페(9층)를 확대·개편, 독서 및 혁신토론 장소로 활용
 - * 월별로 직원신청을 받아 혁신도서를 구입하여 혁신카페에 비치 (총 800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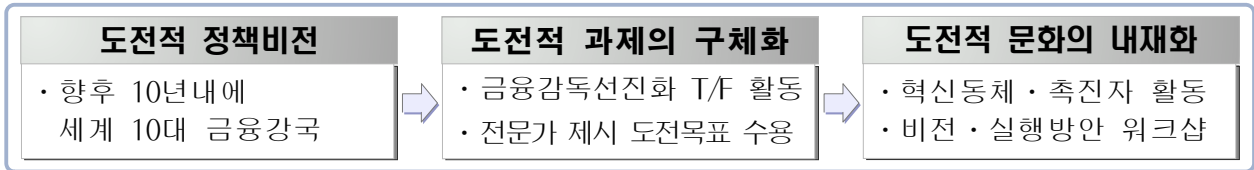


(김용덕 위원장 저서)

- 창의적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왕' 선정
 - 과별로 1명씩 추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후 포상 및 성과급 가점 부여
 - * 위원장(상임위원), 위원(주무과장 3명), 간사(인사계장)
- 홍콩 통화감독청(HKMA) 수석 부청장 출신 '윌리엄 라이백' 영입
 -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국제적 정합성 제고 규제개혁 등 창의적 업무 담당
- 업무성과의 창의성 등 혁신성을 평가하여 CEO 미션의 가점 부여
 - 자체 성과관리매뉴얼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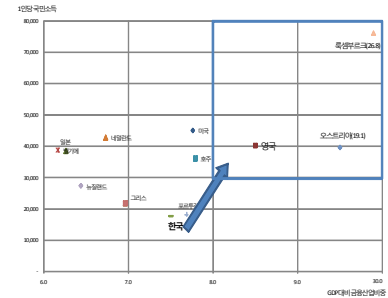
평가지표 3.2.b. 도전성과 실패관리

① 도전적 업무수행 정도



□ 도전적 정책비전 제시

- 향후 10년내에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금융강국* 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
- 국제금융시장내 위상 국가경제내 비중 Global Player 금융회사 존재 회계·법률 등 금융인프라 구축, 정책당국의 공신력 수준 등을 감안 필요
-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GDP대비 금융산업 비중
7.5%(2006)→9.0%(2016)

□ 도전적 과제의 구체화 및 도전적 문화의 내재화

- 스스로 달성가능한 목표가 아닌 금융시장 및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도전적 목표* 과제를 선정
- *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 금융감독선진화 T/F 외부전문가, 금융업 · 금융소비자 패널 등이 제시하는 도전 목표 수용
- 혁신추진동체 및 촉진자 그룹 양성을 통해 도전적 과제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행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고정관념을 깬 도전적 업무수행 사례

-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성과지표 작성시 전문가 자문회의(10.10)를 거쳐 단순 정성적 또는 건수 위주 지표를 고객만족도 지수 등 정량적 지수로 개정



(성과지표 전문가 회의 10.10)

- 상반기 평가결과 100%이상 초과달성된 지표(12개)를 집중 재검토하여 도전적 성과지표로 정교화·보완 추진(07.11)

<주요 도전적 업무수행 사례>

환승론 : 사채를 저금리 제도금융권으로 환승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 도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금융소외계층에 소액금융지원
<p>새로운 대출상품 '환승론'</p> <p>제도권 금융회사</p> <p>고금리의 농</p> <p>신용화</p> <p>'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p>	<p>투자등록 전산화의 주요내용</p> <p>◆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 개발</p> <p>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p> <p>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p>	<p>전화금융 사기 피해예방 대책 종합적 성과</p> <p>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 4,235건, 399억원</p> <p>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실적</p> <p>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실적</p>	<p>소액금융지원</p> <p>소액금융지원 주요 내용</p> <p>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금 등에 1년이상연대는 2년이상 연금 대출금</p> <p>연회계회계 지원하고 있는 자 중 긴급생활안정자금 (생계비, 학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p> <p>대출금 상환 방식 : 특별 할부금률 공평할부 상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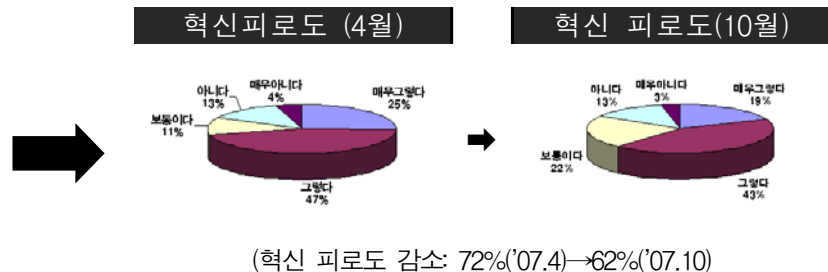
② 실패관리

□ 善意의 실패에 대해 용인하는 제도나 재발방지 시스템

- 도전적 업무의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Wild Card』 제도 운영
 - (i) 환경변화나 도전적인 목표설정에 따라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로서
 - (ii) 담당자가 자발적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내 공유시
 - ⇒ 개인 성과평가지 감점폭을 축소하거나 구제(자체 성과관리매뉴얼에 반영)
-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 추진중 부진·실패사례에 대해 전직원 워크숍을 통해 발표·토론함으로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회로 활용
 - * 부진·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 발표후 토론을 거칠 경우 패널티가 없음을 사전 공지
- 『금융전산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추진 및 교육실시
 - 금융전산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 매뉴얼의 실효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07.5월 개정안 확정)하고 재경부, NSC 등과 협의회 최종 확정
 - 「혁신집중교육의날」 행사('07.10월)시 위기관리 교육 실시
- 전직원 워크숍 등을 통한 혁신 피로도 토론
 - 혁신피로도 조사('07.4) 실시후 직급별·부서별 애로사항 분석, 혁신워크숍('07.4)에서 의제화 및 해소방안 토론⇒ 체계적인 장애요인 관리로 피로도 감소



(제1차 혁신워크숍 '07.4)



□ 실수·실책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혁신지원」 사이트 운영

- 통합정보관리시스템(e-FSC)내 「혁신지원」 사이트를 운영 ⇒ 우수사례뿐 아니라 실수·실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학습기회로 활용

□ 정책품질 분석을 통해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공유·학습 기회로 활용

- (i) 발굴 T/F, 심사·분석회의를 거쳐 → (ii) 이전년도 주요정책과제 중 국조실 지정사례에 대해 → (iii) 분석시의성 자료수입 용이성 등을 감안 선정
- '07년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분석하고 해당부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유하여 학습기회로 활용

* 국조실 상반기 점검에서 “선제적 감독강화로 잠재적 불안요인을 제거”함으로써 '07.6월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0.8%)은 작년 상반기(10.6%)보다 대폭 감소함을 우수사례로 제시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감독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편익증진
1. 과제의 주요 내용			
(1) 혁신과제 선정배경(혁신과제 선정의 적합성)			
<div><div><div>□ (환경변화) 최근 글로벌 금융은 대형화·개방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독기구의 전문성 및 내부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아짐</div><div>□ (문제점① :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금융회사들의 체감만족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div><div>□ (문제점② : 업무보고서) 유사·불필요 보고서의 존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으로 보고서 작성부담이 과중</div><div>□ (문제점③ : 제출시스템)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검증기능 미흡 전문분석 툴 부족 및 분석기법 수준 저하로보고서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지원 기능이 미흡</div></div></div>			
<div><div><div>고객의 목소리</div><div>자체 반성</div><div>환경 변화</div></div><div>➡</div><div><div>혁신과제</div><div>· 만족도 조사 체계 개편 · 업무 보고서 정비 · 업무보고서 제출시스템 선진화</div></div><div>➡</div><div><div>과제 목표 달성</div><div>행태개선과 지속적 과제발굴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div></div></div>			
(2) 혁신과제의 주요내용			
<div><div>①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 조사에서 감독당국 행태 개선의 의견수렴 창구로 패러다임을 전환</div><div>②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유사·중복 보고서의 및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의통·폐합, 작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div><div>③ (XBRL 도입사업 추진) ①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②해외 금융감독당국 도입사례 조사 ③XBRL 기술의 실현가능성 점검을 위한 예비테스트(Pilot test) 실시, ④종합계획(Master Plan) 작성의 4대 전략과제 달성으로 XBRL의 도입 기반 확보</div></div>			
2. 성과측정계획 수정사항			
<div><div>□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목표수준은05년, 06년의 결과를 기준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설문문항, 설문대상 등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목표수준을 70점으로 하향할 필요성 대두</div><div>자세한 내용은 추진활동 참조</div></div>			
3. 목표달성도 및 추진활동			
성과지표명	'07년 실적 목표수준	'07년 달성수준	비중
①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70점이상	68.5점	0.3
② 업무보고서 감축률	10%감축	10% 감축	0.3
③ 1단계 XBRL 도입 사업 완료	4대 과제 달성	연내 4대 과제 달성	0.4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감독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편익증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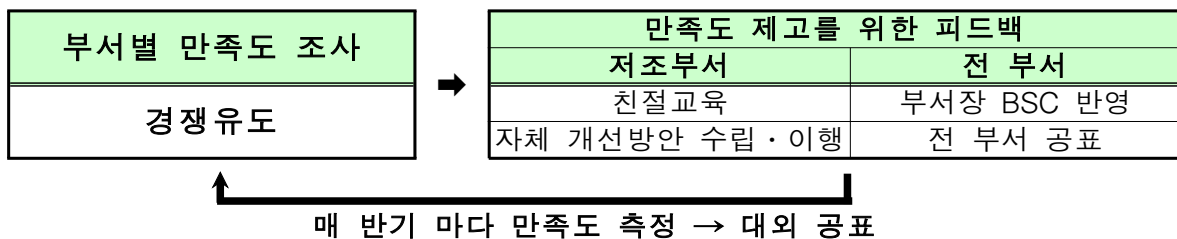
(1)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 **(추진배경)** 05년부터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실제 체감 만족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민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수렴
 - 이에, 감독당국의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
- **(추진과정)** 만족도 조사 개선 T/F*를 구축('07.6), 지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정밀 분석 및 금융회사 의견 수렴을 실시(T/F회의 3회 개최),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의견수렴
 - * 혁신행정과, 감독정책과, 금감원 총괄조정국 직원 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
- **(시스템 개편)** 각 부서가 만족도 개선을 위한 자체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족도 도출 방법, 조사항목, 환류 프로세스를 개편

항 목	개 편 내 용	기 대 효 과
점수 도출	권역별만족도 산출 → 부서별 만족도 산출	각 부서의 조사 결과 체감도 ↑
조사 항목	담당자의 전문성, 자료요구 관행 등 금융회사의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이 추가	실제 개선되어야 할 행태에 대한 근거로 활용
피드백	부서장 BSC반영, 저조 부서 피드백 교육 및 자체 만족도 개선 방안 수립 후 이행여부 점검	실질적 고객 만족도 증진

- **(만족도 조사결과)** 06년 보다 6.6점 하락한 68.5점을 기록*하였으며, 부서별 순위를 도출하여 공표
 - * 조사항목 변경 및 표본수 확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
- **(후속조치①)** 만족도 순위 하위 20%부서(7개)는 만족도 저조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및 차기 만족도 목표치 지정(반기별 실적점검)
- **(후속조치②)** 조사항목 중 자료요구 관행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 제출기한 촉박, 분량과다, 중복자료 요구 등 다양한 사례의 비효율적 자료징구 행태 포착
 -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Central Point of Contact)를 통한 중복 자료 징구 최소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에 반영

【 개편된 만족도 조사 시스템 체계도 】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감독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편익증진																																				
(2)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div><div><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div><div>서식 통·폐합 등 서식 간소화 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XBRL 사업추진시 프로그램 개발 부담을 완화</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추진과정)</div><div>각 금융업협회 및 실무부서가 참여하는T/F를 구성하여 서식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07.3)하고, 구체적인 서식정비기준안을 마련하여 실무부서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07.8)</div></div> <div><div>*</div><div>재무현황(재무제표, 경영실태평가항목 등)위주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보고서는 통합하고 일반현황 및 내부통제현황 등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는 전향적으로 폐지</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추진결과)</div><div>의견수렴 결과, 폐지 53개, 통합 47개, 작성방법 19개 등 총 123개 (총 보고서수 대비 10%)의 서식이 정비대상으로 선정됨</div></div>																																							
【정비대상 보고서 서식 현황】																																							
<table><tr><th>권역</th><th>폐지</th><th>통합</th><th>작성방법</th><th>합계</th></tr><tr><td>은행</td><td>6</td><td>4</td><td>-</td><td>10</td></tr><tr><td>증권</td><td>39</td><td>12</td><td>-</td><td>51</td></tr><tr><td>보험</td><td>6</td><td>23</td><td>4</td><td>33</td></tr><tr><td>비은행</td><td>2</td><td>3</td><td>19</td><td>24</td></tr><tr><td>기타</td><td>-</td><td>5</td><td>-</td><td>5</td></tr><tr><td>전체</td><td>53</td><td>47</td><td>23</td><td>123</td></tr></table>					권역	폐지	통합	작성방법	합계	은행	6	4	-	10	증권	39	12	-	51	보험	6	23	4	33	비은행	2	3	19	24	기타	-	5	-	5	전체	53	47	23	123
권역	폐지	통합	작성방법	합계																																			
은행	6	4	-	10																																			
증권	39	12	-	51																																			
보험	6	23	4	33																																			
비은행	2	3	19	24																																			
기타	-	5	-	5																																			
전체	53	47	23	123																																			
* 증권영역 시행세칙 개정완료('07.4), 기타영역은 연내 시행세칙 개정 추진																																							
(3) XBRL 도입 기반 구축																																							
<div><div><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div><div>현행 업무보고서 제출시스템은 전산기술 환경상 보고서 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분석지원 기능 강화에 한계</div><div><div>○ 국제표준 전산언어인XBRL을 도입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 및 다양한 분석지원 기능을 강화 필요</div></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div><div>4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div><div><div><div>○ 외부전문기관(한국후썬스·삼정KPMG 컨소시엄)의 컨설팅을 실시('07.5~11), XBRL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점검을 위해 예비테스트(Pilot test) 실시</div><div>- 현행 보고서 서식의 XBRL 구현 여부 및 XBRL 문서의 저장, 조회, 정보공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증 실시</div></div><div><div>○ 스페인·프랑스 중앙은행의 XBRL 도입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실시('07.9월)</div><div>○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과제선정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작성 ('07말 완료)</div></div></div></div>																																							
통합산식값	①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90점)×0.3 + ②업무보고서 감축률(100점)×0.3 + ③XBRL 기반구축4대과제(100점)×0.4=97점																																						
4. 과제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사례																																							
<div><div><input type="checkbox"/> 부서별 만족도 도출 및 BSC반영에 따른 조직내부의 갈등을 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극복</div><div><div>○ 실무부서의 의견 청취 및 지속적 대화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div></div></div>																																							
담당자	혁신행정과 송병관 사무관																																						

《 혁신과제 성과측정계획 》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감독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편익증진													
통 합 산 식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 0.3 + [업무보고서 감축률 × 0.3 + [XBRL 도입사업 완료 × 0.4]														
성과지표명		‘07년 실적 목표치		비중												
1.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70점 이상		0.3												
<div>○ 지표내용 : 감독행정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만족도</div> <div>○ 실적산식 : 외부조사기관에 의한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div> <div>○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div><div>- 최근 2년간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는71.6점(05년), 73.1점(06년)이었으나, 금년 조사는 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삭제하고신규 불만 사항을 항목에 추가 및 표본수 증가</div><div>- 감독행정의 특성상 70점 이상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획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적목표치 제시</div></div></div> <div>○ 득점구간 :</div> <table><tr><td>점수(점)</td><td>60</td><td>70</td><td>80</td><td>90</td><td>100</td></tr><tr><td>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td><td>64점미만</td><td>64점이상 ~ 66점미만</td><td>66점이상 ~ 68점미만</td><td>68점이상 ~ 70점미만</td><td>70점이상</td></tr></table> <div>○ 검증방법 : 연말/전문조사기관/실적증빙 첨부</div>					점수(점)	60	70	80	90	100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	64점미만	64점이상 ~ 66점미만	66점이상 ~ 68점미만	68점이상 ~ 70점미만	70점이상
점수(점)	60	70	80	90	100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점수	64점미만	64점이상 ~ 66점미만	66점이상 ~ 68점미만	68점이상 ~ 70점미만	70점이상											
2. 업무보고서 감축률		10%		0.3												
<div>○ 지표내용 :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수시로 제출 받고 있는1,226종의 보고서는 수작업에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어 작성부담이 과중한바이를 10%(120건)이상 통·폐합하여 보고서 작성부담과 제출부담을 줄이고자 함</div> <div>○ 실적산식 : [(통합 보고서 수 + 폐지 보고서 수 + 작성요령 개정 보고서수/전체 보고서 수] × 100</div> <div>○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금융업계의 보고서 개정 의견 반영<div>* 금융업협회는 전체 1,226개 보고서 중 48개를 통·폐합 요구</div></div> <div>○ 득점구간 :</div> <table><tr><td>점수(점)</td><td>60점</td><td>70점</td><td>80점</td><td>90점</td><td>100점</td></tr><tr><td>정비비율</td><td>4%미만</td><td>4%이상~ 6%미만</td><td>6%이상~ 8%미만</td><td>8%이상~ 10%미만</td><td>10%이상</td></tr></table> <div>○ 검증방법 : 연말/자체/ 산식 계산</div>					점수(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정비비율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이상
점수(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정비비율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이상											
3. 1단계 XBRL 도입 사업 완료		4대 과제 달성		0.4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감독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편익증진														
<p>○ 지표내용 : 업무보고서 제출시스템에 XBRL 도입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등 1단계 사업의 완료여부</p> <p>○ 실적산식 : 1단계 4대 중점과제*의 달성 여부 (비계량)</p> <p>* ①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10점), ②선진금융감독당국의 도입사례조사 실시(20점), ③예비테스트를 통한 실현가능성 점검 실시(30점), ④향후 기술도입추진일정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작성(50점)</p> <p>○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3단계에 걸친 XBRL 도입 사업 중 07년에는 1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실행완료</p> <p>○ 득점구간 :</p>																	
<table><tr><td>점수(점)</td><td>0점</td><td>10점</td><td>20점</td><td>50점</td><td>100점</td></tr><tr><td>달성과제</td><td>4대중점과제 모두 미실시</td><td>과제①실시</td><td>과제①②실시</td><td>과제①②③ 실시</td><td>과제①②③④ 실시</td></tr></table>						점수(점)	0점	10점	20점	50점	100점	달성과제	4대중점과제 모두 미실시	과제①실시	과제①②실시	과제①②③ 실시	과제①②③④ 실시
점수(점)	0점	10점	20점	50점	100점												
달성과제	4대중점과제 모두 미실시	과제①실시	과제①②실시	과제①②③ 실시	과제①②③④ 실시												
<p>○ 검증방법 : 연말/자체/ 실적자료* 제출</p> <p>* 컨설팅 실시 품의안 해외 조사출장 보고서 예비테스트 실시 보고서 마스터 플랜 보고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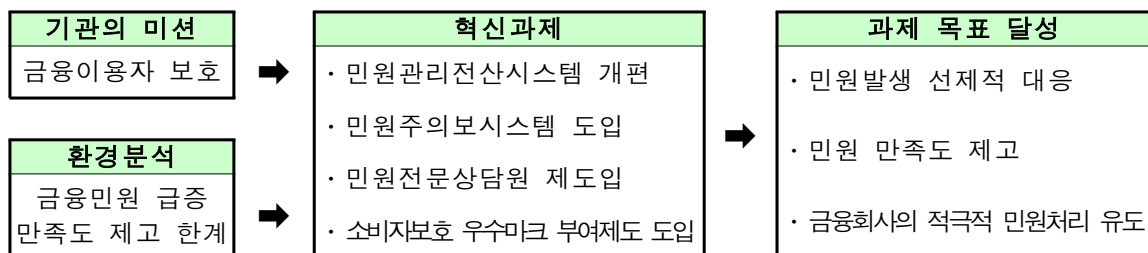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	-----	-----	---------------------------

1. 과제의 주요 내용

(1) 혁신과제 선정배경(혁신과제 선정의 적합성)

- **(환경변화)** 금융산업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매년 접수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출현
- **(금융민원의 특수성)** 일반행정민원과 달리 금융민원은 민원인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며 감독당국은 양 주체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위치
- **(기존 민원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민원인·금융회사·감독당국 간 정보전달 체계 비효율성으로 만족도 제고에 한계 노정

➡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관리의 필요성 대두



(2) 혁신과제의 주요내용

① 금융민원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민원인·금융회사·감독당국간 민원서류 교환 전면 전산화 및 민원DB 구축을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진

② 민원주의보시스템 구축

- 특정 금융상품 또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단기간내 급증할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③ 민원전문 상담원제 도입

- 민원인의 접촉창구를 전문상담원으로 교체친절한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 도모

④ 소비자 보호 우수 마크 부여제 도입

-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대한 평가 후 우수마크를 부여하여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

2. 성과측정계획 수정사항

-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상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에 해당되어 이를 수행하느라 예상보다 사업비가 지연
- 시스템 만족도 측정이 연내 측정이 불가하여 시스템 구축여부로서성과지표를 변경

3. 목표달성도 및 추진활동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성과지표명		'07년 실적 목표수준	'07년 달성수준	비중	
① 민원관리 전산시스템 개편여부		12월말까지 완성	'08년 1/4분기 완성예정	0.4	
②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2006년 대비 3% 감축	2.6% 증가('07.1~9월 기준)	0.4	
③ 민원발생 증가율		2006년 대비 3% 이내 증가	8.0% 증가('07.1~9월 기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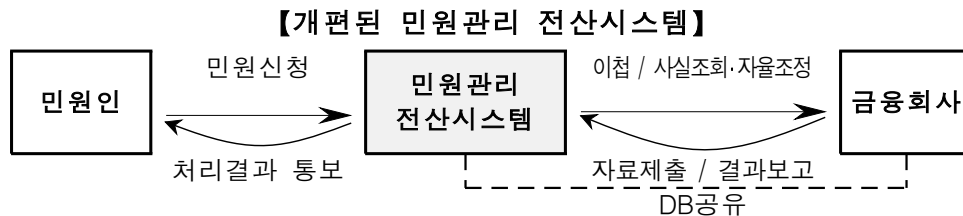
(1) 민원관리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 (추진활동)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을 완료('07.2)하고 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외부업체를 통한 구축사업 추진중이며'08년 1/4분기 완료예정

* ① 제출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감독당국이 민원인에 즉시통보, ② 민원 분류기준 세분화를 통해 민원통계 다양성 제고, ③ 민원 DB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유사 민원발생을 예방

□ (기대효과)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예방 노력 유도



(2) 민원주의보 시스템 도입

□ (추진활동)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을 완료('07.7)하고 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외부업체를 통한 구축사업 추진중이며'08년 1/4분기 완료예정

* 특정 금융상품 또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 (기대효과) 민원주의보발령시 자동경보결과를 분석금융회사 및 원내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유사민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

○ 사후적 민원처리에서 사전적 민원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

< 민원주의보 발령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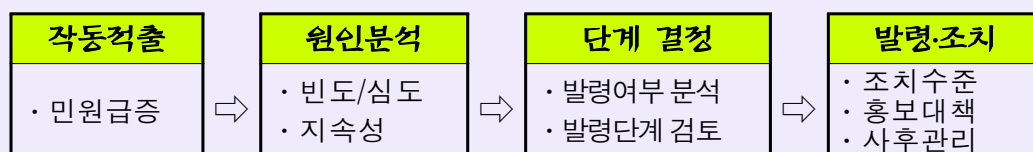
① 과거 평균 민원건수에 비해 특정민원이 급증

⇒ 직전 1주간 민원접수건수 > 52주 이동평균 접수건수(μ) + 2×표준편차(σ)

②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경우

⇒ 직전 1주간 민원접수건수 > 4주전 민원접수건수 × 120%

< 운영체계 >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p>(3)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 도입</p> <p><input type="checkbox"/> (추진활동) 소비자보호업무「모범규준*」에 따른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여부를 평가 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를 선정, 우수마크를 부여'(07.10현재 심사중)</p> <p>*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십,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민원관리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의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한 금융회사간 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 및 자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유도</p> <p>(4) 민원전문상담원제도 도입</p> <p><input type="checkbox"/> (추진활동) '06.12월 전문상담원 2명(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07.9월 전문상담원 3명(은행, 카드, 증권 부문)을 채용</p> <p>○ '09년까지 모든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민원인의 체감 공정성 및 만족도 증진</p> <p>(5) 민원만족도 BSC 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활동) '07년 부터 금감위/원 BSC에 민원만족도를 반영(금감원 BSC는 Pilot test 중)</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각 부서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민원처리 노력 도모</p>			
통합산식값	$\textcircled{1}\text{민원관리전산시스템개편(90점)} \times 0.4 + \textcircled{2}\text{민원처리기간 단축률(60점)} \times 0.3 + \textcircled{3}\text{민원발생증가율(70점)} \times 0.3 = 75\text{점}$		

4. 과제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사례

<p><목표달성도 저조 원인></p> <p>① '07.3월 KBS기획취재 “쌈”에서 연금보험에 대해 보도하면서 보험 민원이 '06년에 비해 폭증(35% 증가), 직원 1인당 처리민원수가 증가로 민원처리기간 장기화</p> <p>② 민원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및 민원주의보 시스템을 07년 3/4분기 구축 완료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원발생 증가율 저감,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제반 사정변경으로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이 08년 1/4분기로 지연, 이로 인해 성과목표 달성율이 저조</p> <p><대체지표 : 혁신과제 수행으로 인한 민원 만족도 제고></p> <p>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부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뢰한 07년 민원만족도가 62점으로 06년 대비 4.6점 상승</p> <p>* '05년(53.9점) → '06년(57.4점) → '07년(62점)</p>	
---------------------------------------------------------------------------------------------------------------------------------------------------------------------------------------------------------------------------------------------------------------------------------------------------------------------------------------------------------------------------------------------------------------------------------------------------------------------------------	--

담당자	혁신행정과 송병관 사무관
-----	---------------

《 혁신과제 성과측정계획 》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통 합 산 식		[민원관리전산시스템 개편× 0.4 +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 0.4 + [민원발생 증가율 × 0.2]				
성과지표명		‘07년 실적 목표치			비중	
1. 민원관리전산시스템 개편		연내 시스템 개편 완료			0.4	
○ 지표내용 : 수립한 계획에 의거 민원관리전산시스템 개편 완료 여부를 평가						
○ 실적산식 : 비계량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시스템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설정						
○특점구간 :						
시스템구축 완료여부	60	70	80	90	100	
시스템 구축 시기	‘08년 4/4 분기	‘08년 3/4 분기	‘08년 2/4 분기	‘08년 1/4 분기	‘07.12월	
○ 검증방법 : 연말/자체/시스템 개편 여부를 점검						
2.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2006년 대비 3% 단축			0.4	
○ 지표내용 :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실적산식 : (금년처리소요기간100/전년처리소요기간) - 100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최근 3년 민원처리기간 감축률 평균(3.0%)						
감독당국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민원처리가 가능하므로 처리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음을감안하여 실적목표치 제시						
○특점구간 :						
점수(점)	60	70	80	90	100	
처리기간 감축률	0%미만	0%이상~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 검증방법 : 연말/자체/산식계산						
※ 첨부 1 : 민원처리기간 현황						
3. 민원발생 증가율		2006년 대비 3% 이내 증가			0.2	
○ 지표내용 :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조기 파악과 대응체제 보완을 통해 유사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발생 증가율을 낮춤						
○ 실적산식 : (금년민원접수건수*100/전년민원접수건수) - 100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최근 3년 민원발생 증가율 평균(3.4%)						
민원주의보시스템 등의 민원관리시스템 개편이9월말에 달성됨을						

기관명	금감위	과제명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감안하여 실적 목표치를 제시					
○ 득점구간 :					
점수(점)	60	70	80	90	100
민원발생 증가율	12%이하	10%이하	7%이하	5%이하	3%이하
○ 검증방법 : 연말/자산/산식계산					
※ 첨부 2 : 민원접수건수 현황					

기관명	평가부문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활동의 생산성

중점사항 1	혁신활동으로 인한 업무역량 향상·예산 절감 정도
--------	----------------------------

①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통한 업무 과부하 해결

□ 활동개요

- (필요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등을 통한 업무효율제고로 혁신역량 강화필요
- (주요내용) 다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관행·시스템·제도 등 업무전반에 걸친 15대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를 통해 업무 비효율 제거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타임시트작성 후 업무 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국별 업무재분장 및 일 버리기 과제 선정 ■ 전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10.22) ■ 월간혁신평가회의에서 추진상황점검(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프로세스과제와 8개 업무 Slim화 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매뉴얼 작성, 지식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 ■ 만족도 조사결과 직원의 88%가 만족

② 정보시스템 개편

□ 활동개요

- (필요성) 개별시스템간 연계 미흡 안전 및 국제협력 정보 등 지식관리 미흡으로 업무 효율성 저해
- (주요내용)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시스템국제협력 정보 시스템 혁신포탈을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내실화 하는 등 위원회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1.3~5) ■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면담(3.20) ■ 타부처 유사사례 조사 실시(4.9) ■ 안전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편(12월완료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과정 단축 : 13단계→8단계 ■ 안전의결·집행 시간 절감 : 6일→15분 ■ 안전배포비용 절감 : 연간 1100만원

③ 금융시장산업 관련 통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활동개요

- (필요성) 각종 통계입수채널이 분산되어 중복통계 작성통계 수집 시차 존재 등 비효율성 존재
- (주요내용) 금융시장 상황변수의 집계시차 단축 및 집중 상시적 모니터링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의 실시간 분석 체계 구축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입수 및 작성 창구 일원화 실시(8.3) ■ 금감위원 합동 일일시장상황 점검반 운영(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효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부서/인력 감축 : 3과/3명→1과/1명 ■ 일일시장상황 점검 회의 개최(54회, 10.31현재)

①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수립을 통한 감독 역량 강화

□ 활동개요

- (필요성) 조직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필요
- (주요내용) 감독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30개 부문 100대과제의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선진화 T/F 구성(8.8) ■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6회) ■ 로드맵 성과지표 민간위원 검토(10.10) ■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청와대 보고(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부문 100개 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 KBS, MBC 등 주요 언론 보도 ■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민간)에 로드맵 보고대회 개최(10.22)

② 회의체계 개편을 통한 의제관리 효율성 향상

□ 활동개요

- (필요성) 매주 현안보고식 간부회의가 차별성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 발굴 및 회의참여 시간낭비 발생
- (주요내용) 다양한 의제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를 다단계 정책품질관리시스템으로 개편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안건 작성 합리화 계획 수립(4.25) ■ 다단계정책품질관리시스템으로 개편(8.6) ■ 회의시간 지정제 도입(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검토의제 건수 증가 : 200건→440건 ■ 월평균 안건 작성시간 감소 : 156시간→44시간 ■ 간부1인당 월평균회의 참석 시간 감소 : 12시간→8시간 ■ 회의체계 개편 만족도 : 72% 만족

③ 학습동아리 내실화를 통한 감독 역량 강화

- 정책 전문성 확보와 시장과의 네트워크공고화를 위해 매주 외부전문가 1인을 초빙하여 동아리 팀원과 토론 실시 → 혁신학습부분(11,12p)참고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워크숍 토론 중 혁신제안으로 수용(4.19) ■ 외부전문가 초빙 토론 실시(19회, 10.31현재)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토론회 참가 및 검토 정책 즉시 지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과정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 → 혁신학습부분(11,12p)참고

④ 업무재분장을 통한 인력 효율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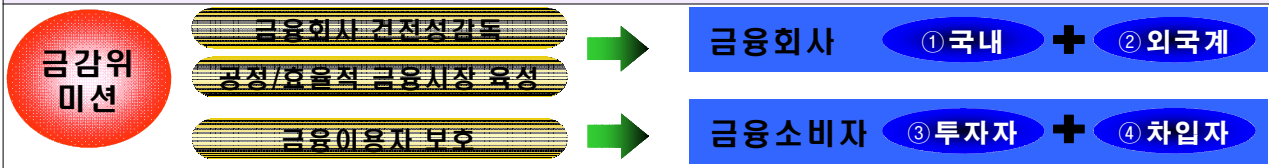
- 위임전결규정개정 주무관/실무관 업무재분장 사무관 업무재분장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자율·책임행정 구현 도모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 규정 개정(5.15) ■ 혁신워크숍 후속조치로 주무관/실무관 업무재분장(4.25) ■ 불필요한 일버리기 일한 사무관 업무재분장(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급 위임전결비율 제고(61.3%→63.5%) ■ 주무관(8명), 실무관(12명)에게 신규 임무 부여 ■ 불필요한 일버리기 직원 만족도 (88%)

중점사항 3

혁신활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범위 확대

금감위 미션 분석을 통한 핵심 고객 분류



① 외국계 금융업 패널 구성·운영 [핵심고객②]

□ 활동개요

- (필요성) 금융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및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 (주요내용)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해소를위해 외국계금융업패널을 설치 운영하여 규제개혁 의견 접수창구를 외국계 금융회사까지 확대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패널 규정개정(5.25) ■ 외국계금융업패널 회의 개최(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애로사항 중 2건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규정영문번역서비스 실시(9.20~) - 수익증권 기준가격 편차 허용 검토(시행령개정 요청)

② 환승론 시행으로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핵심고객④]

□ 활동개요

- (필요성) 기존 서민맞춤대출서비스로는 기존 고리사채 대출자 구제 불가
- (주요내용)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중 상환실적이 우수한 대출자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 대출 제도 마련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맞춤대출서비스 운영성과분석('06.12월) ■ 대부업체 영업현황 실태조사('07.1월~4월) ■ 서민금융연구회를 민관T/F로 개편('07.5월) ■ 3주간 pilot test 실시후 환승론 출시('0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체 이자율 하락 : 66%→41.5%(자율적) ■ 주요언론 보도 : 한겨레, 매일 경제 등 주요일간지 다수 ■ 이자비용 절감 : 연간 620백만원

중점사항 4

혁신활동으로 인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 정도

① 펀드창구서류 간소화 [핵심고객③]

□ 활동개요

- (필요성) 펀드가입을 위한 각종서류 및 절차가 판매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투자자 편익을 저해(외국펀드 1개 가입을 위해 83항목을 작성, 13회 서명 필요)
- (주요내용) 중복서류 및 항목을 통폐합하고 투자설명서 등을 알기 쉽게 개편하여 투자자 편익을 제고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 펀드투자 서류 간소화 만·관T/F구성운영('06.9월~12월) ■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개설('07.2월) ■ 창구서류 간소화 설명회 개최('07.3월)	외국펀드			국내펀드			
	변경전	변경후	차이	변경전	변경후	차이	
	작성항목	83	48	△35	53	39	△14
	서명 회수	13	8	△5	6	5	△1

②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도입 [핵심고객③]

□ 활동개요

- (필요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분량과다 및 실질적 설명 미흡으로 불완전 판매(mis-selling)가 지속 발생(금융민원의 주요원인)
- (주요내용) 금융상품계약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상품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금융상품핵심설명서 T/F 구성('06.12월) ■ 금융소비자 패널 의견 청취를 통한 상품선정('07.2월) ■ 민원제도 개선협의회의 의견 청취('0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상품군에 대한 pilot test 시행중(07.4월~) ■ 판매직원 설명제를 도입하여 판매직원의 책임성 제고(07.4월~)

③ 절차개방성 향상으로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제고 [핵심고객①]

□ 활동개요

- (필요성) 감독원 예산 조달 수단인 감독분담금의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 강화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내용) 감독분담금의 금융영역별 산정기준 개선 및 업계 의견수렴이의신청 창구 신설, 예산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인력 참여 대폭 확대로 투명성 강화 노력

□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 배분 기준 개선 만·관 합동 토론 실시('06.8월)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개정('07.6월) ■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0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내용을 반영한 금융영역별 배분기준 개선 및 동일 금융영역내 배분기준 다양화 ■ 예산검토전문위원회(5인→9인) 및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기능 강화, 감독분담금 효율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강화

④ 만족도 조사 개편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기반 마련 [핵심고객 ① + ②]

- 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국별 평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피드백 연수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도모 혁신과제2 부분 참

2007년도 혁신활동(내용)	2007년도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07.4월) ■ 만족도 조사 개편 T/F 구성 및 지난 조사 분석('07.6월) ■ 개편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 발주('0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개선 후속조치 방안 마련('07.10월) ■ 하위부서 피드백 연수 실시('07.10월~12월)

22. 각 기관별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 ☐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사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그 현황에 대하여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첨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현재 정부관련 공공기관은 총 305개이며, 공공성 등 기관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

분류	지정요건	전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24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7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20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산은)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 (기은)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시스템 ■ (신보)한국기업데이터 ■ (예보)정리금융공사 ■ (자산공사)한국자산신탁 ■ (기타)코스콤, 기보캐피탈
소계		305	19	
정부소유 구조조정기업	공적자금 투입기관, 산은 지분보유 기관	—	14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중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23. 각 기관 산하 연구기관 관련

- 현황자료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현황 및 투입 예산
- 연구사업 실용화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별도의 산하 연구기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와 연관되는 기관으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연구원 등이 있지만, 이들 기관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은 아님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이들 기관에 대해 별도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예산 투입, 연구사업 실용화 등을 추진하지는 않음

24.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 별첨 참조

<별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6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08.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4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08. 3. 18	베어스텐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 평가 및 대응
08. 3. 18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08. 3. 20	[참고자료]한경미래포럼 강연자료
08. 3. 20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08. 3. 21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08. 3. 24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08. 3. 24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보도일자	제 목
08. 3. 2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08. 3.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 '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08. 3. 26	텔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08. 3. 2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08. 3. 2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08. 3. 31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08. 3. 3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08. 4. 2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4. 3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08. 4. 3	금융산업에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보도일자	제 목
08. 4. 4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08.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08. 4. 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08. 4. 10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08. 4. 1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11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처리안 의결
08. 4. 17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08. 4. 17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08. 4.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
08. 4. 24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08. 4. 25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08. 4. 28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08. 4. 29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08. 4. 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보도일자	제 목
08. 4. 3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08. 5.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5. 2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5. 6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08. 5. 7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산임 심사 결과
08. 5. 9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08. 5. 9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08. 5. 15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 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08. 5. 19	제16차 애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08. 5. 19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08. 5. 20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08. 5. 2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IB 대상"축사
08. 5. 21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08. 5. 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5.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WSBI(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최축사
08. 5. 22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보도일자	제 목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08. 5.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08. 5. 23	대한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겸영 인가
08. 5. 23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08. 5. 23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5. 26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08. 5. 26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08. 5. 2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08. 5. 27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출
08. 5. 29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08. 5. 2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T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08. 5. 29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08. 5. 29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16차 에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08. 5. 3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08. 5. 30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보도일자	제 목
08. 5. 3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08. 6. 2	전광우 금융위원장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개최
08. 6. 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2	산은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및 공기업 인사쇄신의 계기를 마련
08. 6. 2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08. 6. 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08. 6. 3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6. 4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08. 6. 4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08.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5	단위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08. 6. 5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보도일자	제 목
08. 6. 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조연설
08. 6. 9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08. 6. 10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08. 6. 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컨퍼런스 축사
08. 6. 1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08. 6. 12	영진약품공업(주)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08. 6. 12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08. 6. 12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08. 6. 12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08. 6. 12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08. 6. 12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08. 6. 12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국 거래소 상장을 제안
08. 6. 13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08. 6. 13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기로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합의

보도일자	제 목
08. 6. 1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08. 6. 16	홍국생명보험(주)의 홍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16	애플러스자산운용(주)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6. 16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6. 17	전광우 금융위원장 IAI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08. 6. 17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08. 6. 17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08. 6. 18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08. 6. 19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정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08. 6. 2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08. 6. 20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08. 6. 20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08. 6.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08. 6. 24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 방안
08. 6. 24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보도일자	제 목
08. 6.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08. 6. 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6. 2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08. 6. 2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08. 6. 26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 사항
08. 6.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08. 6. 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08. 6. 27	기업은행 감사 임명
08. 6. 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7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27	(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08. 6. 30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30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08. 7. 1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보도일자	제 목
08. 7. 1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08. 7. 2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7.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08. 7. 11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08. 7. 11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08. 7. 11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08. 7. 11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7. 14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8. 7. 15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08. 7. 15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08. 7. 17	은행장간담회 개최
08. 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08. 7. 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08. 7.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8. 7. 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7. 23	아이메카(주)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일자	제 목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08. 7. 24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08. 7. 2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08. 7. 25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08. 7. 25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
08. 7. 25	증권업 및 선물업 겸영허가안 의결
08. 7. 25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08. 7. 25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08. 7. 25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08. 7. 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08. 7. 28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08. 7. 31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08. 8. 1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08. 8. 4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도일자	제 목
08. 8. 6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08. 8. 7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08. 8. 12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08. 8. 13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08. 8. 1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08. 8. 14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08. 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8. 8. 19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08. 8. 20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08. 8. 2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8. 21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08. 8. 2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08. 8. 25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08. 8. 2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8. 26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IR 개최
08. 8. 26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08. 8. 26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보도일자	제 목
08. 8.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축하
08. 8. 2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08. 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08. 9. 2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08. 9. 2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08. 9. 5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영현황
08. 9. 5	코스피 200선물 24시간 거래 추진(선물거래 야간시장 개설)
08. 9. 8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08. 9. 9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08. 9.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8. 9.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08. 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8. 9.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08. 9. 9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08. 9. 10	메디에스앤피(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보도일자	제 목
08. 9. 11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08. 9. 11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08. 9.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08. 9. 12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15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08. 9. 16	리먼브러더스 بنك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
08. 9. 16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08. 9. 18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08. 9. 19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08. 9.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08. 9. 22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2차)
08. 9. 24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08. 9. 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보도일자	제 목
08. 9. 26	(가칭)㈜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
08. 9. 26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08. 9. 26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26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08. 9. 29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08. 9. 3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08. 9. 30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2.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24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08. 3. 25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3. 26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08. 3. 31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7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보도 관련
08. 4. 22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희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22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08. 4. 25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08. 5. 2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08. 5. 7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 ‘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일자	제 목
08. 5. 7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08. 5. 7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08. 5. 9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13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08. 5. 16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포이즌필'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08. 5. 19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08. 5. 20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멎는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제2의 송례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3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 (‘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5. 26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28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6. 4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보도일자	제 목
08. 6. 4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12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24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엔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27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1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3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08. 7. 24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8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9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30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08. 7. 30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보도일자	제 목
08. 8. 13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08. 8. 19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8. 25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8. 26	08. 3. 24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 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08. 9. 2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08. 9. 4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냐
08. 9. 9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08. 9. 9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08. 9. 16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08. 9. 23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08. 9. 26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9. 29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5. 최근 5년간 임원 개별연봉/ 급수별 평균연봉,
최저, 최고 연봉(산하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임직원의 연봉 현황은 별첨과
같음

○ 다만,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의원
실로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함

<별첨> 산하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

증권예탁결제원

□ 임원 개별 연봉

(단위: 백만원)

연도	성명	연봉	비고
2003	노00	367	
	홍00	252	
	이00	16	퇴임
	이00	241	선임
	이00	8	퇴임
	이00	194	
	이00	207	
	류00	207	
2004	노00	226	퇴임
	정00	159	선임
	홍00	115	퇴임
	이00	147	선임
	이00	263	
	이00	219	
	류00	220	
	이00	217	
	배00	136	선임
2005	정00	351	
	노00	55	성과급*
	이00	260	
	홍00	17	성과급
	이00	124	퇴임
	류00	219	
	이00	137	선임
	이00	101	퇴임
	최00	138	선임
	이00	224	
	배00	216	

연도	성명	연봉	비고
2006	정00	389	
	이00	274	
	이00	13	성과급
	류00	279	
	이00	11	성과급
	이00	220	
	최00	220	
	이00	225	
	배00	222	
2007	정00	309	퇴임
	조00	158	선임
	이00	176	퇴임
	김00	132	선임
	류00	318	
	이00	164	퇴임
	최00	155	퇴임
	이00	111	퇴임
	배00	126	퇴임
	김00	95	선임
	오00	98	선임
	이00	96	선임

*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퇴직 임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

□ 급별 평균, 최저·최고 연봉

(단위: 백만원)

연도	직급	평균	최저	최고
2003	1급	112	105	120
	2급	96	86	107
	3급	80	63	98
	4급	64	43	77
	5급	46	33	67
	6급	30	30	30
	서무원	43	33	51
2004	1급	115	113	125
	2급	102	94	113
	3급	86	74	105
	4급	69	47	84
	5급	51	34	75
	6급	-	-	-
	서무원	46	36	55
2005	1급	108	105	123
	2급	98	90	113
	3급	85	72	100
	4급	69	55	85
	5급	50	32	77
	6급	32	32	33
	서무원	49	39	56
2006	1급	124	117	131
	2급	104	90	119
	3급	91	71	106
	4급	73	55	91
	5급	51	35	83
	6급	-	-	-
	서무원	53	43	60
2007	1급	133	129	138
	2급	114	96	132
	3급	101	89	115
	4급	82	70	99
	5급	63	46	92
	6급	41	41	42
	서무원	58	48	65

코 스 콤

직위	성명	연도	연봉	업무추진비	출장비	Stock Option
대표이사 사장	한○○(12)	2004	216,002	51	7,986	
	한○○(12)	2005	216,002	40	21,007	
	한○○(4), 이○○(8)	2006	216,002	41	5,000	
	이○○(12)	2007	231,790	33	17,648	
	이○○(6), 정○○(3)	2008	178,300	25	4,000	
감사	고○○(3), 김○○(9)	2004	186,858		11,227	
	김○○(12)	2005	186,858		11,245	
	김○○(12)	2006	186,858		14,302	
	김○○(3)	2007	53,988			
	정○○(3)	2008	53,988			
전무이사	장○○(12)	2004	186,858		2,540	
	장○○(12)	2005	186,858		16,099	
	장○○(6), 정○○(6), 이○○(6)	2006	280,287		13,389	
	정○○(12), 이○○(12)	2007	401,050		7,384	
	정○○(6), 이○○(6), 정○○(3), 이○○(3)	2008	308,500		11,549	
상무이사	박○○(12), 김○○(12), 신○○(12)	2004	471,120		7,464	
	박○○(12), 김○○(10), 신○○(12), 정○○(2)	2005	471,120		34,250	
	박○○(6), 신○○(6)	2006	314,080		6,949	

※ 2008년분은 9월말까지의 실적임

※ 감사 : '07.4월~'08.6월의 기간동안 비상임감사로 운영

※ 전무이사 : '06.7월부터 2명으로 운영

※ 상무이사 : '06.7월부터 집행간부화

<단위 만원>

직급	연도	최저연봉	평균연봉	최고연봉
1급	2004	10,565	11,064	11,443
	2005	10,565	11,064	11,443
	2006	10,961	11,470	11,856
	2007	11,242	11,761	12,155
	2008	11,242	11,761	12,155
2급	2004	8,856	9,210	9,977
	2005	8,856	9,210	9,977
	2006	9,034	9,395	10,177
	2007	9,276	9,644	10,442
	2008	9,276	9,644	10,442
3급	2004	7,466	7,975	8,366
	2005	7,466	7,975	8,366
	2006	7,616	8,134	8,534
	2007	7,829	8,358	8,766
	2008	7,829	8,358	8,766
4급	2004	5,646	6,127	6,805
	2005	5,646	6,127	6,805
	2006	5,759	6,250	6,941
	2007	5,936	6,436	7,142
	2008	5,936	6,436	7,142
5급	2004	3,932	5,093	5,303
	2005	3,932	5,093	5,303
	2006	4,011	5,195	5,409
	2007	4,152	5,360	5,579
	2008	4,152	5,360	5,579

2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 ☐ 붙임 문서와 같이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08. 10.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 (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 (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재정립 방안 보완
- (7)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 (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p>⇒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08.3.28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제공하고 있음</p> <p>○ 아울러,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p> <p>□ 향후, 보험상품 범위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포함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p> <p>○ 보험사 이외에 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p> <p>* '08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시 반영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p> <p>*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신망으로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p> <p>○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였고,</p> <p>○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이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으며</p> <p>○ 또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재단이 휴면예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 *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을 분석하고 금융소외자의 현황을 종합 조회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 -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 혁신 촉진</p> <p>각 국책금융기관에 대한예산 승인시 경영혁신을 감안하여 지출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p>	<p>□ 국책금융기관의 객관적 경영실적 평가 및 공정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06.11월)</p> <p>* 경영·예산·회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p> <p>○ 동 심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승인시 반영</p> <p>- 경영평가는 '07년에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였고('07.9월), '08년부터 정식평가 실시('08.5월)</p> <p>- '08년도 예산 승인시 총4회의 심의회를 거쳐 예산 승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보완</p> <p>'07년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제시된 국책은행간 업무중복 해소나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8.6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 발표</p> <p>□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p> <p>○ 다만, 지배지분 매각은 KDF 설립 등 중소기업 금융체제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p>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p> <p>금융중심지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전문지식과 윤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시현황 등을 '08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p>	<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KAIST 금융대학원에 '08년 20억을 출연할 예정</p> <p>○ KAIST 금융대학원에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한 금융전문가 과정을 설치 (100명, '07년)</p> <p>* '09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할 예정</p> <p>○ 협회 차원에서 금융업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과목을 강화하도록 함</p> <p>○ 자격증제도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의 취지를 살려 통폐합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p> <p>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p> <p>○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 -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p> <p>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대책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LTV(50%~60%), DTI(투기지역 6억원이상 APT, 40%) 규제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p> <p><input type="checkbox"/> M&A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p> <p>○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에 대한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설치 허용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p> <p>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이후 대출 연계한 보험권유행위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보험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카슈랑스의 부작용 발생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 (2) 칼라일, 뉴브릿지, 톤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도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었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 (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경부와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협의 진행중</p> <p>*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p> <p>○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종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재경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p> <p><input type="checkbox"/>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p> <p>○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경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할 예정</p>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p> <p>○ 국제화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p> <p>○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 ○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 -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 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06.12.15)</p> <p><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 - 김포공항(신한) - 김해공항(신한, 부산) - 대구공항(대구) - 제주공항(제주) ○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 -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p> <p><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p>○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p> <p>*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p> <p>○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p>○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 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신탁·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 <p>(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p> <p>*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종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 <p>□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 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 <p>□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p>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	<p>□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 □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 ○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 <p>< T/F 진행 상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 *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 ○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 -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 ○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 <p>□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품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p>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 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p>□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 <p>< 추가 통보 인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 -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 <p>※ 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p> <p>□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p>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p>□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div data-bbox="699 454 1481 1977"> <div>□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뱅크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div> <div> <div>○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div> <div> <div>-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div> <div>→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div> </div> </div> <div> <div>○ 새누리저축은행</div> <div> <div>-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div> <div>→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div> </div> </div> <div>□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div> <div> <div>○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div> <div> <div>-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div> <div>-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div> <div>-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div> <div>-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div> </div> </div>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 -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 -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 <p>*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p>
<p>(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p> <p>*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만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p>(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p>	<p>대비 가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 -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
<p>(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p>(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 *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 ○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 ○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p><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 <p>□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p> <p><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 *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 ○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 <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 (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 <p>□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p>
<p>(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칠 예정이며, ○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
<p>(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p>	<p>□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p> <p>*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서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TS 등)에 제공 ○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p>⇒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 월)</p> <p>※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 '06.12월 -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07.8월 <p>□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 □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 □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07.1.31) 도입을 계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 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I,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 ○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
<p>(28) 신협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협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협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 ○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 □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협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 한편, 신탁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송인)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탁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탁측의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탁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
<p>(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 <p>□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p>※ 연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 -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 <p>□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p>	<p>□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 -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
<p>(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여부와 ○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06.5월) ○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 <p><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감독강화 ○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data-bbox="695 304 1476 772"> <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 <input type="checkbox"/>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div> <div data-bbox="695 813 1023 853">< 향후 추진계획 ></div> <div data-bbox="695 896 1476 1048"> <input type="checkbox"/>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div>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div data-bbox="695 1086 1476 1406"> <input type="checkbox"/>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 </div> <div data-bbox="754 1449 1476 1630">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 “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div> <div data-bbox="695 1671 1476 1991">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p>
<p>(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p>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 ○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p>(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p>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첩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div data-bbox="699 304 1481 1644"> <div data-bbox="699 304 1481 1254"> <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 ○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 </div> <div data-bbox="699 1294 1481 1559">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 </div> <div data-bbox="711 1599 1394 1644">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div>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단위 : 건)</div> <table><tr><th>처리 유형</th><th>2004년</th><th>2005년</th><th>2006년</th></tr><tr><td>기소¹⁾</td><td>85</td><td>76</td><td>30</td></tr><tr><td>불기소²⁾</td><td>18</td><td>17</td><td>3</td></tr><tr><td>수사중³⁾</td><td>63</td><td>93</td><td>99</td></tr><tr><td>총계</td><td>166</td><td>186</td><td>132</td></tr></table> <div>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div>	처리 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¹⁾	85	76	30	불기소 ²⁾	18	17	3	수사중 ³⁾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 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¹⁾	85	76	30																		
불기소 ²⁾	18	17	3																		
수사중 ³⁾	63	93	99																		
총계	166	186	132																		
(39) 수도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div><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div> <div><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div> <div>※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div>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div><input type="checkbox"/>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div> <div>*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div>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p>(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style="padding-left: 20px;">*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p>○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p> <p>○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p> <p>□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p> <p>○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p> <p>□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p>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p>□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p> <p>○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 ○ 공시·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p>○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p>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계류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p> <p>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p> <p>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p> <p>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p>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p>○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p>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p>(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정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p> <p>○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p> <p>– '07.1월중 광고 예정</p> <p>○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p> <p>– '07.2월초 개최 예정</p>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p>○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에 건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토록 주기적 교육실시 ○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 <p>□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행위 예방교육 실시 ○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 <p>□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p>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 <p>□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협의회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10.26) ○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회 구성(12.15) □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 (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 □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 ○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과제를 선정('0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ata-bbox="730 824 1439 117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07년 경영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 • 고객만족경영의 실천 •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 </div>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6.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보고할 것
-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
- (12) 제3자 명의 CD 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
-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5) 역모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매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 (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
- (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와 관련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
- (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
-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마련하여 보고할 것
-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중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 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
- (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

-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 (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
- (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
-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 (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시 축소방안을 보고할 것
- (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
-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
- (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회~~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찾아~~주고 회사 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제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05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6조의4, 은행법시행령1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6조의2에 의거하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05년말기준 결산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06년 상반기중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 적격성심사는 매반기 정기적으로 실시(은행법 제16조의4)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마련(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공시 자율추진 ○ 윤리경영 및 관계형 대출 활성화 ○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국회의결에 따라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금감위(원)·재경부한국외환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중임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 <input type="checkbox"/> '05.1.26 금감원은 여성 피조사자에게 음주한 상태에서 밤늦게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5.2.16 해당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금감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품위 손상 등에 대하여 매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함을 적극 주장</p> <p>□ '05.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도록 명령(구제명령)</p> <p>○ '05.5.6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06.1.2 중앙노동위원회도 금감원의 재심신청을 기각</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에서2차에 걸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06.3.2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낮추어 “정직” 처분(현재 해당 직원은 출근이 정지되고 있음)</p> <p>□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data-bbox="619 309 1452 353">[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p> <p data-bbox="619 392 1161 436">□ 헤르메스 시세조종 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46 481 1452 817">○ 삼성물산 주식 대량보유자인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가 국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04.11.26)를 자청하여 삼성물산의 M&A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04.12.1)되게 한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04.12.3)한 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04.12.17) <li data-bbox="646 862 1452 1198">○ 조사결과, 헤르메스 펀드매니저가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보유주식을 원활히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헤르메스 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 D증권사 K직원을 고발(’05.7.22)하였음 <p data-bbox="683 1243 1452 1332">* 검찰은 수사결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를 기소(’06.1.31.)</p> <p data-bbox="619 1366 1452 1579">□ 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05.9.22~10.11)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p> <p data-bbox="635 1680 992 1724">(자체 진상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46 1769 1452 1982">○ 헤르메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투자 펀드임에도 삼성물산이 헤르메스를 투기적 M&A펀드로 몰아갔고 금감원의 조사는 특정 재벌 편들기의 일환이었다는 의혹 관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 주식매도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감독당국도 헤르메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재벌 편들기나 보호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감독당국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 D증권사 K직원을 고발하면서 동 증권사를 조치하지 않아 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 관련 - D증권사 K직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의 위법행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K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D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업원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는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D증권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D증권사 K직원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재경부 등 지역서민금융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상반기중) *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의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 부여는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 <input type="checkbox"/> LTV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일반은행 모기지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추진할 필요(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LTV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의 재개정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의 개정 필요성여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05년 중 다음과 같이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행 실태를 점검 ① 공동 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② 은행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③ 워크아웃제도 홍보 ④ 경영진의 관심 및 담당자의 인식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6년에는 서베이 실시 등 워크아웃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1/4분기중)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3/4분기중)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등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p>
<p>(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p>	<p>□ 분기별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BIS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제3자인수 및 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음</p>
<p>(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는 내외부에서 혐의사항을 통보한 기업 및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무작위 표본선정은 엑셀프로그램의 난수발생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이 공개적으로 직접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음</p> <p>(2005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에는 총 204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87사 - 연결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5사 - 결합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2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시회사는 모집단에서 제외 - 모집단 형성시 무작위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감사투입시간 등을 혼용 (2006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감리대상을 확대하여 감리 사각지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사 → 280사(37% 증가) ○ 장기간 감리미 실시 회사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은 회사 등의 선정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모집단 형성을 검토
<p>(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편취 및 위조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CD발행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출하여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05.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는 동시에 CD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 ○ 위규행위와 관련된 직원(5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문책’ 등의 조치를 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8조 및 동 「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있음</p> <p>□ 따라서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에 대해서도 상기규정에 따라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하였음('05.1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 ○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동일하게 취하도록 조치의뢰 <p>□ 앞으로도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전 금융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p>
<p>(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p>	<p>□ 불건전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유통 방지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0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금지사항에 CD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적인 CD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 CD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	<p>□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 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을 수립('05.9)하여 시행중에 있음</p> <p>(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PC에 해킹차단 프로그램 의무적 설치 ○ 보안카드 비밀번호 확대를 통한 일회용비밀번호 (OTP: One time password)기능 강화 ○ 보안전담기구 및 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 도입과 운영을 위한 OTP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 ○ 보안수준별 거래한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뱅킹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 적용 ○ 금융소비자의 보안의식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관리 유의사항 등 '전자금융이용자 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전자금융 이용방법을 홍보
(15)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재정경제부 주도로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06.2.16)</p> <p>□ 금년 중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07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보고할 것</p>	<p>□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등)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p>*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및 이용목적 제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부여,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관리규정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p> <p>□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한 내부관리기준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 중</p> <p>□ 또한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05.11월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가 한층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운영 - 고객신용정보처리 업무 위탁 등 고객정보 외부 제공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및 약정이행상태 점검 - 고객의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권한 도입 등 <p>□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관리보호인 지정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6.4월 이후 시행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은행감독이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업무 취급결과 늘어나는 위험자산을 BIS 비율 산정시 반영하고 ○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부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은행감독장치를 적용하고 있음 <p>□ 최근 금융겸업화 진전으로 은행의 부수업무가 증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업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06년 2/4분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BIS비율 산정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p> <p>⇒ 전담조직(보험조사실)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방지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업계의 방지 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data-bbox="624 309 1283 347">□ 2006년 주요 추진 보험사기 방지대책</p> <p data-bbox="639 434 903 477">(적발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67 521 1460 564">○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94 607 1460 712">-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 실시 <li data-bbox="694 754 1460 860">-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지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li data-bbox="667 902 1310 945">○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94 987 1460 1149">-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p data-bbox="639 1227 938 1270">(예방활성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67 1314 1382 1357">○ 보험사기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94 1400 1460 1561">-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 대응요령 전파를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li data-bbox="667 1603 1460 1646">○ 보험사기 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94 1688 1460 1850">-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소비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 대상 예방교육 실시 <li data-bbox="694 1892 1460 1935">- 보험사기 조사실무교육을 통한 조사 전문인력 양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05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중심으로 전자민원창구를 대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Q 대폭확충 및 단순질의성 상담에 대한 즉답 시스템 구축 등 □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 평가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직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민원업무에 반영 □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정식 처리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 기회를 부여 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06.3(필요시 3개월 연장) 기간중 민원 처리 우수 8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범위 민원서류 제출시 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감축을 위해 민원처리 모범규준 제정 및 적용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조직,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총7장, 31개 조항으로 구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감축 노력, 금융교육 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로 활용 □ 상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원제도 도입 □ 소비자단체 임직원을 일일상담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명예옴부즈만제도 도입 □ 금융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연수 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자문 및 외부 용역을 확대 □ 금융회사의 부당한 소 제기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소송지원제도 적극 추진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민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p>(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BW의 공모발행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BW의 전환권 등에 대한 내용 발행절차,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및 발행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또한, CB·BW의 사모발행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채의 내용, 자금조달의 목적, 사채발행 방법, 전환에 관한 내용 등의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p> <p>○ 특히 배정받는 특정인의 성명 회사 또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 및 발행권면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음</p> <p>□ 경영세습을 위한 CB·BW 발행은 그 특성상 사모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p> <p>○ 이러한 CB 등의 사모발행을 통한 이익공여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40)</p> <p>□ 공시측면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 발행시의 공시를 강화하여 그 투명성을 확충하는 한편 사모발행시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CB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의 투명한 공시 및 공시를 통한 상법 및 세법상의 규율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겠음</p> <p>* 현재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단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임</p>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p>□ '05.11.3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와 예치금을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시행</p> <p>○ '05.11.30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344억원 초과하였으나 12월 중 1조 167억원 감축하여 은행법상 한도이내를 유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p> <p>*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씨티그룹캐피탈을 의미하며, 동사는 '04.12.29 씨티리스가 씨티파이낸셜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p>	<p>□ 한국씨티은행의 그룹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리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임 <p>□ '05년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05.10.12 ~11.10)시 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여신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p> <p>(AA등급 금융채금리 + 35bp 적용)</p> <p>⇒ 따라서 금감원에서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음</p> <p>□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자금소요액 대비 지원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2.28현재 신용공여한도는7,350억원(대출잔액은 3,280억원)인데 반해, 미사용한도가 4,070억원임 ○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시 「씨티그룹간의 여신공여 승인규정」에 의거 신용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됨 <p>⇒ 따라서 금감원은 씨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시 여신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신용조사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임</p> <p>* '05년 종합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반영</p> <p>※ 동행은 '05.12.29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4,500억원으로 감축한 바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체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p>	<p>□ 금융감독원이 공기업과 외국은행간의 사적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소송 제기 등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외국은행의 거래행태에 부당한 점은 있으나 동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외국은행이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제반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아 환수대상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 ○ 다만, 관련 외국은행들로 하여금 비정형파생상품거래를 공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정형파생 상품거래로 전환토록 지도함으로써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과도한 위험을 해소하였음 <p>□ 금융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관련 검사결과를 '05.9.28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p> <p>□ 또한 장외파생상품 부당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을 통보('05.10.5)하고, 파생상품거래 담당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5.10.20) - 거래의 적정성 및 거래 상대방의 법률적 권한 (Legal Capacity) 등의 확인의무와 리스크 등 중요정보의 충분한 고지의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완(별첨 참조)하여 은행이 공기업 등 거래자에게 부당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화(05.12.23) ○ 또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이치, BNP파리바, 바클레이즈)과 재발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점검결과 양해각서 내용이 대체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신규 취급은 없었음 <p>(별첨)</p> <p><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p> <p><input type="checkbox"/> 불건전 영업행위(세칙 64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리스크와 잠재적 손실에 영향이 있는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p><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세칙 65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 ○ 의사결정에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는 내재된 개별 거래의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의 거래권한 보유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 ○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고 비정형 파생상품은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 ○ 비정형파생상품거래 매월말 거래평가서를 송부 ○ 거래관련 자료를 보관
<p>(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p>	<p>□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영업전략에인신용위험 평가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p>□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지 않고 있음 <p>□ 다만 정책수행을 위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가 필요하며 국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p> <p style="margin-left: 40px;">* 재경위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의 재작성을 정부(재경부)에 요청('05.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파악하여 代用통계로 활용 <p style="margin-left: 40px;">* 3개월이상 연체중 5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미만 2건이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div data-bbox="624 309 1460 517">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심사제도 활성화 방안’(04.12월)을 마련,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div> <div data-bbox="647 555 1460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업체에 대한 내부심사결과를 분석하고 및 동 분석결과를 공시 ○ 신용등급별 기준수익률과 실제시장수익률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공시 ○ 신용등급 예측정보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 공시 등 </div> <div data-bbox="624 969 1460 1070">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상기 제도 개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계속사항) </div> <div data-bbox="624 1108 1460 1406">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요건(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新BIS 협약 시행(‘07년말) 후 동 요건에 따른 ECAI 지정시 상기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겠음 </div>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div data-bbox="624 1473 1460 1630"> <input type="checkbox"/>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해외송금한도 폐지 등으로 일반기업·개인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div> <div data-bbox="624 1668 1460 1877"> <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혐의 거래 자동검색을 위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중 </div> <div data-bbox="687 1915 1460 1995"> <p>* 「외국환거래법」 개정(‘05.11.23)으로 금년부터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 이용 가능</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감시시스템」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 등을 DB화하여 거래분산송금 등 불법이상 징후 외환거래를 자동검색 - 「상시감시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위해 외환 심사반 신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 등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이 관련거래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은행의 안내 미흡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 외환거래 설명회(상·하반기 각1회) ○ 은행 외환업무지도점검(하반기 1회)
<p>(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감법 제15조 제1항은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증선위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는 모든 외감법상의 위반 행위를 전부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의 대상 선택에 있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내지는 일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 본 감리제외 방침의 적용요건(기업회계기준실질에 맞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충족시킨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 감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감되는 이유는 ①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인 “기업회계투명성”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는 점 ②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정분류오류 정도는 회계정보 오류의 중요성이 낮아 처벌의 중요도도 떨어지는 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외감법 제15조 제3항은 감리업무의 집행에 수반하는 구체적 기준 감리대상의 선정 감리의 구체적 절차, 조치수준 등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정립권을 금감위에게 부여하고 있음</p> <p>□ 상기 외감법상의 적법한 규정정립수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외감규정은 본 방침이전에도 이미 감리조치의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58조 제4항은 동 규정제정 당시(99.3.12)부터 “발생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감리제외(조치유예) 제도의 조치 감경면제 근거는 조치시행이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음 <p>□ 또한 본 방침이전에도 제48조 제2항 각호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금번 규정개정은 감리 미실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p> <p>□ 금번조치는 엄벌주의보다는 집단소송법이 유예되었음을 기회로 감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한 것으로 선진유도 행정을 그 수단으로 하되, 엄격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악용소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국정감사시 지적된 제도의 악용문제는 이미 실무지침을 통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현재 없다고 판단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시중 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 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경위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감독당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 회계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리방식도 변경하고 표본감리대상 기업도 대폭적으로 확대 선정('04년 120사 → '05년 204사)하여 감리를 실시중에 있음 □ 감독당국은 금년에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감리대상기업을 '05년의 204사(상장법인의 약15%)에서 280사(상장법인의 18%)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 혐의기업감리(30사 예상) 감안시 총 감리기업은 310사(상장법인의 약 20%)가 됨 ○ 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 '06.3월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div>□ 공사는 '05.4.28자 금감위 조치요구서 접수 후 관련법령 및 내규에 의거 공매재산 취득양태 (재산종류, 취득건수, 취득가액 및 업무관련성)를 기준으로</div> <div>○ 대상자 19명 전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처분</div> <div>※ 징계처분 내역</div> <table><tr><th>구 분</th><th>정직</th><th>감봉</th><th>견책</th><th>경고</th><th>주의</th><th>합계</th></tr><tr><td>인원 (명)</td><td>3</td><td>5</td><td>2</td><td>4</td><td>5</td><td>19</td></tr></table> <div>※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 관련</div> <div>- 공사가 불용 처분한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div> <div>- 징계 양정시 포상 등이 있을 경우 감경이 가능함에도 엄정한 기강확립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경 적용 없이 대상 직원 전원 중징계</div>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div>□ 발생 가능한 장애별 안정성 제고 대책을 '03년부터 마련·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div> <div>○ 자연재해 : 중요 시스템의 이중화, 자료의 정기적 백업 및 분석 시행</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재해 및 장애 : 2중의 방화벽 설치, 침입 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프로그램 사용 ○ 시스템 장애 및 기반구조 장애 : 자가발전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지사 확대 운영('05.12), 통신망의 이중화 및 정기적인 사용량 측정 시행 ○ 외부연계 장애 : 지불결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운영('04.7), 담당자간 비상연락 체계 운영 □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주관제 서비스」('05.5), 「장애발생 통보 프로그램 및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06.2) ○ 24시간 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p>(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1999-1 국제입찰에서는 경제적 매각 규모 달성을 위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1999-2 국제입찰부터는 포함시키지 않음 ○ 또한 '01년 이후부터는 국제입찰 매각 실적이 없으며 특별채권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 매각시 원칙적으로 보증서 있는 채권은 매각에서 제외 하였으며 매각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매수자가 보증서 관련 회수액을 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조건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p>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작간 접 경비 분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 ○ 이에 따라 정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p style="margin-left: 40px;">* 매각금액의 2% → 2.8%</p> <p>□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와 국세청 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 ○ 공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 ○ 정원외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p>(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p>	<p>□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의 지역별(본사 및 권역별 6개지방법) 전담관리체계를 통한 현장위주의 직접 관리 조직체제 구축 시행('06.2.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유형별*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재산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재산, 활용·수익재산, 처분·매각대상재산 ○ 위탁확대로 증가되는 업무량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현행 전산시스템을 전면 확대·재구축('06.11, 개발완료 예정) ○ 국유지 개발 사업분야 전문인력(변호사, 건축사 등) 보강 및 교육활동 강화를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 ○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괄청에 법령 개정 건의 및 반영('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납부시 보증금 등 예치(10백만원 이상) 및 분납기준 상향조정(1백만원 초과) - 경쟁을 통한 매각 및 대부(임대)경우 전자입찰(OnBid) 의무화 등 ○ 업무절차개선 및 채납자 관리 등 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적관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부과시 공시송달제도 도입 <p>□ 향후에도 국유재산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반영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p>	<p>□ 기본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우리나라와의 지역연계성 및 시장 잠재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만·일본·베트남시장을 초기 목표시장(틈새시장)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 －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을 선도하여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 창출 ○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이 동북아 금융허브구축 지원 및 공사의 노하우 발전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투자 전문기관(IB, 연기금,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및 세계적인 사업망과 노하우를 갖춘 회계법무법인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p>□ 부문별 해외사업의 전략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는 공사 초기 사업임을 감안, 사업 핵심요소(인력, Deal Sourcing, Fund Raising, 자산관리 및 리스크관리) 등 대내외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 ○ 직접 투자의 초기 Track Record 시현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IB가 참여하는 시범적 투자펀드 조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부문은 투자사업 시장조성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旣 컨설팅 실적이 있는 국가 중심으로 실질적 수익창출 도모 - ADB, AfDB 등 컨설턴트로 등록된 국제기구 적극 활용 ○ 직원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및 KOICA(국제협력단)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사업 강화로 수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부문 교육기관으로서 인지도 확보 및 피연수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으로 사업진출 토대 구축 <p>□ 해외투자사업 손실(리스크) 최소화를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 최소화 ○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20/100으로 총 투자한도를 제한하였으며,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 <p>□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과 연계한 해외사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정보센터 구축, 구조조정포럼 개최 준비 및 국내 구조조정자산운용업 육성 지원 등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지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div><div><div><div><div><div></div><div>□ 기한의 이익 상실 현황</div></div><div><div></div><div>○ '06. 2월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5만 1천 여건으로서 전체 대부건수(183,948건) 대비 28%에 이르고 있고, 매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div></div></div></div><div><div><div></div><div>□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부활 제도 도입 및 조건 완화를 통한 구제제도 시행</div></div><div><div></div><div>○ '05. 3월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 제도를 도입하고, 콜센터를 통한 부활 안내 TM·SMS 발송 및 최고 등의 방법으로 연체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div></div><div><div></div><div>○ 특히 '05. 9월부터는 배드뱅크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조건을 완화 및 조기 상환시 일정률의 할인제도(할인율 : 6%)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 '05.11.1부터는 콜센터 연체전담 TM반을 운영,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div></div></div></div><div><div>※ 기한의 이익 부활 현황('06.2월말 기준)</div><div>(단위 : 억원)</div><table><tr><th>구분</th><th>'05.3~12월</th><th>'06.1월</th><th>'06.2월</th><th>계</th></tr><tr><td>건수</td><td>6,757</td><td>1,306</td><td>994</td><td>9,057</td></tr><tr><td>금액</td><td>2,817</td><td>435</td><td>472</td><td>3,724</td></tr></table></div></div>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p>	<p>□ 채권추심기관에 무담보채권 추심·회수위임과 관련하여 공사는 '05. 8월부터 수수료를 동종업계 평균 수준인 24%로 인상하고, 위임기관별 회수목표를 부여하여 관리함과 동시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월까지의 위임기관별 회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실적 부진 위임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히 위임계약을 해제하는 등 ○ 위임기관 간 채권 회수 경쟁체제 유도를 통해 아웃소싱 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p>□ 한편, 위탁관리 채권의 공사 자체 회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 및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기관간의 실적 평가기간('06.3~8월) 종료 후 탈락업체 보유 채권에 대한 공사 직접 관리 여부를 경영 여건과 회수율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임
<p>(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의 실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도 공사가 수행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05.5.9~'05.11.8)간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 약15.6만명 대비 57%에 해당하는 약8.9만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함 □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과잉추심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협약」 상 채권금융기관 준수사항에 의거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를 중단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이를 위반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동 협약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과잉 추심 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음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행성과와 공사의 직·간접비 대비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 data-bbox="632 367 855 409">□ 추진 경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28 : 수익제고 및 비용절감 방안 수립 ○ '05.3.29 : 공매대행 수수료를 개선방안 보고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 '05.3.30~12.31 : 수수료를 개선방안 제출·협의 ○ '06.2.9 ~ : 변경 수수료 제도 시행 <div data-bbox="632 835 927 878">□ 수수료율 개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매각금액의 2%→ 2.8%로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매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수수료 조정 <p style="margin-left: 40px;">*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비용 부담 및 국가 재정 수입 안정 기여</p>
(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div data-bbox="632 1319 1246 1361">□ 임직원 비위 방지대책 마련 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03.12.19)하고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징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공매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취득금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이 본인의 계산하에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인터넷 입찰시스템(OnBid)을 개선하여 임직원 및 직계 준·비속의 응찰을 원천적으로 제한</div><div>○ 매월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행사실시 및 윤리경영 책자 발간을 통한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div><div>○ 윤리경영 교육강화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발굴 시행</div><div>* 청렴서약제, 클린카드제, 임직원 재산취득 방지교육 주기적 실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의 추진실적 감독기관 정기보고</div></div></div></div>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대우채권 인수·정리 현황('05.12월말 기준)</div><div>(단위 : 조원)</div><table><tr><th colspan="2">인 수</th><th colspan="3">정 리</th><th colspan="2">보 유</th></tr><tr><th>채권액</th><th>매입액</th><th>채권액</th><th>매입액</th><th>현금회수</th><th>채권액</th><th>매입액</th></tr><tr><td>35.8</td><td>12.7</td><td>6.7</td><td>4.1</td><td>5.8</td><td>29.1</td><td>8.6</td></tr></table></div><div><div>□ 향후 회수 예상규모</div><div><div>○ 보유 주식에 대하여 '05.12월말 현재 시가로 매각을 가정하고 계열사별 채무상환계획상의 회수금액을 합하여 향후 6.4조원이 추가 회수 될 것으로 추정</div></div></div></div></div>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2월말 현재 기회수한 5.8조원을 포함하면 총 12.2조원이 회수 예상되어 투입액 12.7조원 대비 96% 회수율 예상됨 □ 따라서 공사는 주요 경영정상화 기업의 가치제고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대우채권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위원회는 출자 주주(정부, 금융기관)의 위임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관리감독적 기능과 공사 경영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서 설치되었음 □ 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사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인적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년 내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리업무의 종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에 공사법 개정을 통하여 동 위원회의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추진코자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 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p>	<p>□ JV파트너의 국외연수비용 제공은 공사에 직접 금전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금융기법 연수를 위한 과정설계, 강사 섭외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대부분의 보유자산을 정리한 현재로서는 유사한 계약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p>□ JV투자자의 국외 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 목적은 상호 발전적 협력차원에서 공사 직원의 자산유동화 AMC운영 등과 같은 최신 금융기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 직원들의 다양한 금융기법 습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외연수를 실시토록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재무자문사의 주관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의 국외 연수 지원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p>(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p>	<p>□ (주)로이젠*은 거제도 골프장 예정부지 21만 평(698,327㎡)을 '04.7.9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부터 59억원에 매입, 소유권을 취득</p> <p>* 주주는 75%의 지분을 가진 에이원컨트리클럽(주)와 25%의 지분을 가진(주)필코리아리미티드로 구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사는 채권보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이젠은 (주)대우 및 김우중 前회장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으로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채권보전조치는 불가능하나 ○ 공사는 김우중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퍼시픽인터내셔널이 소유한 필코리아리미티드 주식 10만주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득하였음 <p>□ 향후 공사는 10개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주)로이젠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코자 함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작간점 경비 부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 이에 따라 정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div> <div>* 매각금액의 2% → 2.8%</div> <div>□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div> <div>○ 공사와 국세청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div> <div>○ 공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div> <div>○ 정원外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div>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div>□ 공사는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div> <div>< 인력 구조조정 실시 ></div> <div>□ 인력구조조정 내용</div> <div>(단위 : 명)</div> <table><tr><td>구 분</td><td>'03</td><td>'04</td><td>'05</td><td>'06</td></tr><tr><td>정 원</td><td>1,177</td><td>1,077</td><td>997</td><td>907</td></tr><tr><td>(전년대비)</td><td>△50</td><td>△100</td><td>△80</td><td>△90</td></tr></table>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data-bbox="635 338 1139 380"><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p> <div data-bbox="635 456 1485 1086"> <p data-bbox="635 456 1485 616">□ 유사기능 수행조직의 통폐합 및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용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59 685 1485 844">○ '06.2.1자 조직개편시 기업개선부, 해외채권관리부, 특별채권부 등 3개 부점을 기업개선부로 통합 <li data-bbox="659 922 1485 1086">○ '06.2.1자 조직개편시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영방안 도출로 총 팀수를 '05년말 대비 24팀 축소 운영 </div> <p data-bbox="635 1184 1139 1227"><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p> <div data-bbox="635 1303 1485 1933"> <p data-bbox="635 1303 1086 1346">□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59 1391 1485 1550">○ 비서·서무지원 업무 등 비핵심 업무의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정원인력의 핵심업무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 <p data-bbox="635 1628 1114 1671">□ 후선부서 투입인력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59 1715 1485 1816">○ 후선부서 투입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가용인력의 영업부점 배치로 효율성 제고 <p data-bbox="635 1895 963 1937">□ 임금피크제 도입</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업무·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설계와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연봉제 적용범위 확대 추진(현재 정규직 1·2급) <input type="checkbox"/>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 강화 및 사후평가 실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정성 제고
<p>(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 시 축소 방안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사업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부동산 매입 및 컨설팅, 보유부동산 임대 및 시설관리 ○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및 신규사업방안 기획 ○ 국유부동산 및 보유부동산 개발에 따른 건축 업무 등 <input type="checkbox"/> 현재 인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유부동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아웃소싱하고 있고 ○ 대부분의 인력은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운용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 시범개발사업 3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신규 개발물건 발굴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국유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이 필요한 상황임
<p>(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p>	<p>□ 물납은 조세의 현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합법적 탈세 시비, 장기 미매각에 따른 국고회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p>□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물납허용 기준 강화, 물납가액 산정방식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총괄청(재정부)에 건의('05.1)</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건의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개선 의견</th></tr> </thead> <tbody> <tr> <td>① 물납허용기준 강화</td><td>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td></tr> <tr> <td>② 물납청구범위 개선</td><td>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td></tr> <tr> <td>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td><td>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td></tr> <tr> <td>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td><td>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td></tr> </tbody> </table> <p>□ 향후 공사는 물납법인에 대한 관리강화와 시장 현실에 맞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기에 국고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p>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	<p>□ 「철도청잡종재산 활용도제고 및 관리효율화 방안」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재산을 활용, 처분, 보존재산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 활용가능재산은 대부계약 갱신, OnBid를 통한 공개입찰 대부(임대)로 대부율을 극대화하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대상재산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필요시 수의계약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매각 극대화 - 보존재산은 소관청 관리환(도로, 구거), 처분제한 재산의 단기대부(도로부지 등) 추진 ○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작지, 야적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선정하여 공개입찰 대부를 추진 □ 도로용지(보존재산)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이 개정('05.2)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12.31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총괄청 소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 '92년 이전에 결정된 도로시설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지에 대하여도 사업시행 시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외환위기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대규모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영입했던 기업·금융 구조조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재교육 및 직무개발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로 신규, 전문인력 육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97년도 이후 공사가 금융·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정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업무 경험을 쌓은 우수 잠재 인력 보유 중임</p> <p>□ 국외부실채권 시장 진출 등 신규 업무수행시 국제적인 금융전문인력 및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할 경우에는</p> <p>○ 국외투자사업 전문분야 인력수요와 공사내 대체가능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p>
(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p>□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p> <p>○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방침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등</p> <p>○ 경영관리감독적 기능 이외에 사외이사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p> <p>○ 한편,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이사회와는 심의의결범위 등 그 기능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은 미미하여 향후 수년 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준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함</p>
<p>(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p>	<p>□ 일반적으로 M&A부띠끄는 소액의 자본금과 소수의 인력으로 한정된 업종 내 기업의 지분(주식)을 중심으로 M&A 중개·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는 주로 증권회사 출신들이 사업자 등록 관련 법률상 기타 법인으로 설립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M&A 중개를 하고 있으며 ○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법이 제정되자 일부 M&A부띠끄들이 참여하고 있음 <p>□ M&A부띠끄 범주에 Hedge Fund, 사모펀드(PEF), 벌처펀드 등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회계법인들이 별도의 사업부문(Division)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금융부문(Corporate Finance)은 M&A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M&A부띠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 data-bbox="632 320 1485 1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공사 해외 사업의 경우, 국외소재 부실채권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 국외부실자산이 투자대상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부띠끄가 중개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는 구별하여야 되며 ○ 아직까지 부실자산투자 부문에서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M&A부띠끄는 알려져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사는 국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 향후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펀드, IB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임 </div>
<p>(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div data-bbox="632 1261 1485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매각 가능 채권은 대우계열사 관련 기업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이 대부분이며, 동 주식을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M&A 등의 방식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가 주관하여 매각하는 기업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는 물론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국민경제 기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이 기대되는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의 토대 마련은 조성된 것으로 보임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시, 우리 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자금 등을 해당기업이 지원해줄 경우 동 금액만큼 기업가치 및 매각 금액을 하락시켜 공적자금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p>(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임·횡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 찾아주고 회사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제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의 매각 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도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수자에게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인수자 결정시 매각금액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인수자의 경영 및 사업 계획, 인수자와 해당기업 간의 시너지, 관련산업 연관효과,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투자자를 선정 매각하고 있음 □ 한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 ○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의 경우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7. 컨퍼런스 콜을 통한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 점검 결과(08년)

-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동향과 주요 이슈를 일별로 점검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협의하는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가 검토·대응토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음
 - ※ 점검분야 :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국내 신용, 금융권 자금 동향,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등
- 전체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등시장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충격 요인에 의해 환율 주가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화조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실물경제의 어려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의 합동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28.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제금융국의 금융위 이관에 대한 금융위 입장

-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다는
 - 관계기관간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정부조직개편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제 금융업무의 소관변경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29. 금융허브정책 추진 현황

※ 08.8.31 정기국회에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08. 8

금 융 위 원 회

본 자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2008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目 次

I. 금융중심지추진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II.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III.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2. 금융인프라 선진화

3. 자산운용시장 육성

4.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1. 우리나라 금융 현황

□ 지난 10년간 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

- 주식시장의 경우 거래 및 자금조달 규모 등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수준

국내 주식시장 규모비교('07년)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장기업수	조달금액
규모 (세계순위)	1.1조달러 (14)	2조달러 (9)	1,757개 (9)	169억달러 (10)

- 채권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육성노력에 힘입어 발행규모 증대 및 시장구조의 고도화*가 진행

*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비중: '03. 23.5% → '06. 34.3% → '07. 38.3%

채권발행규모 추이

단위 : 조원

	'98말	'00말	'02말	'04말	'06말	'07말
전체채권	406	468	600	711	942	982 (2.4)
국채	61	72	99	178	258	274 (4.5)
통안증권	51	67	83	143	158	150 (2.9)
회사채	123	145	156	133	158	190 (1.5)
은행채	44	49	83	112	169	210 (4.8)
기타 ¹⁾	127	135	179	145	199	158 (1.2)

주: 1) 특수채, 지방채 등 2) ()내는 '98년 대비 '07년 발행 잔액 배율임

- 외환시장은 거래규모와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심도가 제고되었으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거래규모를 기록하는 등 괄목하게 성장

*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규모: ('98) 40억달러 → ('07) 465억달러, 11.6배

** 파생상품시장: 주가지수 옵션 세계 1위, 주가지수 선물 세계 8위 (장내거래 기준)

□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

-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양적인 성장('99말 대비 총자산 113%증가)과 재무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은행 ROA : (FY07) 1.10% [미국 0.92%, 일본 0.58%, 영국 0.75%]

** 은행 BIS비율 : (FY07) 12.28% [미국 12.23%, 영국 12.05%]

- 증권 및 자산운용업은 주식시장의 활황 및 투자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제반 재무 지표가 개선

* 증권사 ROE: (FY01) 5.41 → (FY07) 15.40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FY01) 208.4 → (FY07) 550.8

** 자산운용사 ROA: (FY03) 10.1 → (FY07) 37.5

- 보험업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꾸준히 실적 및 건전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손보사 ROA: (FY02) 0.95 → (FY07) 2.65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 추이

단위 : %

	생보산업			손보산업		
	'03.3말	'05.3말	'08.3말	'03.3말	'05.3말	'08.3말
지급여력비율	226	230	240	234	290	288
부실자산비율	16.6	5.0	2.7 ¹⁾	9.6	8.1	4.9 ¹⁾

주: 1) '07말 기준

2.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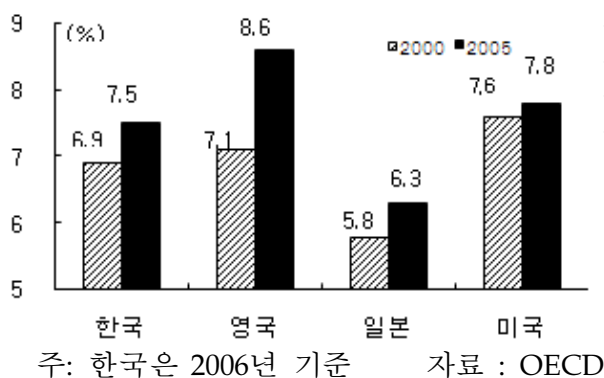
- ◆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서비스업(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금융중심지(금융허브) 구축은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생산성 제고에 기여

(1)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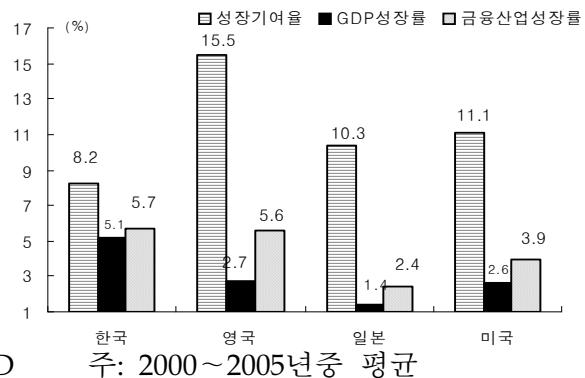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 충분

- 우리나라는 금융업 부가가치/GDP비중('00년 6.9%→'06년 7.5%)과 GDP 성장 기여율('00~'05중 평균 8.2%)이 상승 추세이나
 - * 피용자보수+고정자산소모+순기타생산세+영업잉여
- 영국('05년 GDP비중 8.6%, '00~'05년 성장기여율 15.5%), 미국(GDP비중 7.8%, '00~'05년 성장기여율 11.1%)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이 충분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



□ 고용창출에 기여

- 금융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06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 * 총취업자중 금융업 비중: '97. 3.7%→'05. 3.26%→ '06. 3.40%→ '07. 3.45%(미국 4.47%('07년), 영국 4.02%('05년), 일본 2.43%('06년))

- 금융산업은 임금수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영국은 '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시장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런던지역의 금융부문 종사자가 '99년 29만명에서 '06년 34만명으로 17% 증가

영국의 금융서비스부문 고용현황

단위: 천명

	'99	'01	'03	'04	'05	'06
영국	1,075	1,064	1,085	1,079	1,064	1,071
런던	294	311	311	316	325	338

□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투입액)은 여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00년 65.7%→ '06년 71.1%로 부가가치율 상승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00)	('06)	('05)	('05)	('05)
제조업	24.4	22.1	34.2	35.5	34.9
서비스	58.2	57.2	68.2	54.6	60.5
금융업	65.7	71.1	76.3	51.0	56.7
전 산업	40.5	38.5	55.0	49.6	54.4

자료 : OECD

(2)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 금융중심지가 구축되면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생산성이 제고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자본, 금융기관, 인력, 정보의 집적 또는 밀집(clustering)에 따른 경쟁의 증대와 함께 생산요소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촉진

3.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의 경과 및 평가

- ◆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 글로벌플레이어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중심지(금융허브)」는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중심지(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 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

- ① ‘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1단계(~‘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 ②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정책 기조 정립하에 추진전략을 설정

②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보완의 여지도 있음

①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 부진

* KDI 설문조사('07.2) 결과, 금융허브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

②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상당부분은 제도적인 과제로서 실제 이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자본시장 발전, 금융업의 성장,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한 시일을 요함.

③ 금융의 국제화·증권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④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흡

*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출지역이 제한적이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체계나 전문성이 부족

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제는 크게 개선 되었으나 은행 및 보험사 관련 규제의 개선은 미흡

⑥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이 미약

⇒ 최근,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08.3)

4.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 시가총액, 자산운용수탁고 등에 있어 허브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50% 미만 수준에 불과

* 시가총액('07.12, 단위:억불): (한국) 11,226 (홍콩) 26,544 (싱가포르) 5,392
자산운용수탁고('07, 단위:억불): (한국) 3,300 (홍콩) 8,184 (싱가포르, '06) 5,810

○ 금융연관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 금융자산잔액/명목GNI('07.말): (한국) 8.88% (미국) 10.25% (일본) 11.92%

○ 우리나라 금융개방도*는 2006년말 124%로 미국(198%), 영국(760%), 일본(451%)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금융개방도 = 자본유출입 잔액/명목GDP

② (영세한 규모)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와 비교시 아직 영세한 수준

* 총자산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현황
- 4대 은행: 미국의 13% 내외
- 5대 증권사: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 각 업권별로 수익구조도 전통적인이자수익(은행, 81%), 위탁 매매수수료(증권, 68%) 등에 과다 의존하고 국내(97%)에 편중

* 국내은행 해외자산 비중 : ('07) 3.1%
- 반면, UBS(스) 90%, Deutsche Bank(독) 79%, Citi(미) 43%

③ (경쟁력)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 세계 10대 금융강국(OECD기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 우리의 경우 금융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상위권이나

* 은행산업 · 자본시장 · 보험산업 규모

** GDP중 금융산업비중, 금융연관비율,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지수, 금융전문인력

** TNI(TransNationality Index), 금융개방도, 글로벌 100대금융회사 수

※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3$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2008년 스위스 IMD('08.5.15일 발표)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중 국내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1위('07년)에서 40위로 하락

④ (금융허브 경쟁력) 마스터카드가 투자환경(규제·삶의 질), 입지 여건, 금융규모 등을 평가한 도시경쟁력 순위('08.6)에서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년 연속 9위(50개 도시)로 평가

○ 반면, '08. 3월 영국 「City of London」 이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를 발표하였는데 전세계 59개 조사대상 도시 중 서울을 51위로 평가

* 전세계 금융기관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와 다른 기관이 발표한 지수 (노동생산성, MBA 랭킹, 삶의 질, 규제, 세율, 임대료 등)를 통해 산출

II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1. 정책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목 표	<div><2010년> 자산운용의 규모 확충 및 국제화 글로벌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 여건 개선</div>		⇒	<div><2015년>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조성</div>
전 략	혁신	인프라	개방	특화
	기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금융시장의 폭 과 깊이를 심화)	인력양성 금융 클러스터 조성등 금융 산업발전 기반 구축	금 융 회 사 의 대형화 및 해외 진출 촉진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진입 유도	비교우위산업인 자산운용 산업 육성에 특화
원 칙	시장·민간 주도 (규제 개혁)		네트워크 강화 (중앙·지방, 관계부처간, 해외)	기반시설 마련 (금융클러스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과제	①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② 금융인프라 선진화	
	<div>○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감독 서비스 구축</div> <div>○ 금융산업 제도 개선</div> <div>○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div>		<div>○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div> <div>○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div> <div>○ 금융전문인력 양성</div>	
	③ 자산운용시장 육성		④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div>○ 자산운용시장 활성화</div> <div>○ 자본시장의 국제화</div> <div>○ 채권시장 고도화</div> <div>○ 지역특화금융수요개발</div>		<div>○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div> <div>○ 경영 환경 개선</div> <div>○ 영어 사용환경 조성</div>	

2. 금융중심지정책의 목표 설정

(1)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및 전략

- 우리나라의 환경은 금융중심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은 아님
 -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등 금융인력 및 자금 등의 집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또한 대륙법계국가로서 "규정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특화된 전략을 택한다면 금융중심지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전략적 선도 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선도 금융 시장이 타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금융 중심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의 1/4이 보험 자산운용업의 발전으로 "보험업"도 발전

(2) 자산 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
 - 국내 금융산업 특성의 측면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상대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강한 점을 적극 활용

-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비해 자산운용업의 발전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

○ 자산운용업의 특성 측면

- 자산운용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적어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음
-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에 대한 저항감도 작음

○ 선도산업으로서 갖춰야 할 파급효과 측면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
-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 시설투자 부담이 적고 이동성(mobility)이 높아 외국기관 유치도 상대적으로 용이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업의 기반이 강화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나라마다 전반적인 여건은 다르므로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 중 우리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나갈 필요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 및 자산운용 규모(퇴직연금 등)가 크고 인접국가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소득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으로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
- 아일랜드는 자산운용업의 back office에 특화하는 전략 사용

3.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금융업종사자는 금융중심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07.2월 KDI 설문조사)

◇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도 중요

□ 우리 경제력을 토대로 금융산업 규모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금융 혁신 지속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감독 체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 소유구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금융 글로벌플레이어(Global Player) 출현의 기반 조성

(2)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전문인력 수준이 질적으로 미흡하며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시대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외환제도·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

□ 자본시장 인프라 외환제도 개혁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 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3] 자산운용시장 육성

◇ 비교우위가 있는 자산운용업에 특화하여 금융산업전반을 견인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달성에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시장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4]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금융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된 데 일부 기인

- 금융중심지달성을 위해서는대외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금융발전정책보다는새로운 측면의 접근이 필요

□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전문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

- 금융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행정의 합리성 회계·법률 인프라 등 사업 환경의 편의성에 중점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영어사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4. 향후 미래상

① 금융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기여

- GDP 대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 21% → 30%이상

*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등

②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글로벌 금융회사 출현

- 활발한 인수·합병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금융회사의경영효율성도 제고
-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 출현으로 금융산업 시너지 극대화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금융중심지 정착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여건 개선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해외 우수 금융회사들을 적극 유치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④ 해외기업 상장 유치, 기업가치 증대 등을 통해 아시아 자본시장을 선도

* 아시아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07말, 십억불)

: 동경(4,330), 상해(3,694), 홍콩(2,654), 한국(1,122), 대만(664)

-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여 수탁고『500조원 시대』 달성

Ⅲ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I.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및 금융 감독 서비스 구축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300여건의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

*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08. 3~5월)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08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09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2.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의 인적쇄신 및 감독역량 강화

□ 외부 전문인력 충원 강화

- 외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감독·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대응능력 강화

- 금융환경 및 감독수요 변화에 맞춰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

- 2012년도까지 감독전문인력 대비 외부전문인력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 잘하는 금융감독기구」 위상 정립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된 승진·보수제도의 내실화

- 인사시스템 전반(채용, 이동, 승진, 평가)에 대한 진단을 완료하고 성과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으로 개편
- BSC(조직성과관리제) 평가결과를 종합근무평정(조직업무 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08년도 100% 반영)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전면 조직개편

- 본부제 조직 도입 및 감독·검사부서의 통합으로 One-Stop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중복의 해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외국 금융규제당국과의 협력 증진

- 외국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 및 주요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

3.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서비스 구축

□ 감독 패러다임 전환(원칙중심 ← 규정중심)

- 국가별 법체계 및 규제문화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조사('08년 중)

*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칙 중심 규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대상을 금융권역별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09~'10년)
- 원칙중심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쌍방향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준수와 관련된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시
- * 예시1) 주식투자한도 등 자산운용관련 개별적 규제
→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되 리스크 총량은 엄격히 감독
- * 예시2)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영업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창구지도를 하는 관행 타파

□ 취약부문 중심, 서면·전산 검사 활성화

- 현장검사방식의 종합검사를 매년 10%이상 축소*하고 리스크평가 중심의 서면검사로 점차 전환('08~'09년)
- * 종합검사 계획 : ('08년) 60건 → ('09년) 50건 → (10년) 40건
- 리스크 평가결과에 의한 검사 운영방안 마련('08. 1/4분기)
- 금융위규정 및 매뉴얼 개정 등('08~'09년)
- 위법부당행위는 금융회사의 자체규율시스템이 처리토록 하고 금감원은 자체규율시스템 등의 운영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사패러다임 전환

□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조정

- 금융당국과 공정위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안을 이행

1. 은행 소유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미국, EU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산업자본과 관련된 은행소유규제(4%)가 지나치게 엄격

* (미국)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25%이상 또는 5% 이상 소유+ 사실상지배” 금지(다만, FRB는 일반적으로 10% 까지는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산업자본이 10% 까지는 소유 가능)

(영국·독일 등) 개별적 적격성 심사(사전적 소유제한 없음)

- 금산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은행소유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 ①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③ 규제완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및 자금고화 등부작용 방지를 위해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08.9월중으로 확정된 후 '08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 증권·보험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非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년중)할 예정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非금융회사 지배에 따른私金庫化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순환출자 등의 해소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중요 내부거래(material transaction)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 임원 겸직 허용, 정보공유 범위 확대 등 지주회사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예금보험제도 개편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등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추진

*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08년중)

1.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2. 금융상품개발·판매의 자율성 확대

- 자본시장통합법의 예의 비추에 금융권역별 상품개발 관련 자율성 확대를 추진
 - 보험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
 - 보험업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09년)

- * (현행) 사후제출상품(90%), 사전신고상품(10%) : 모두 3단계 절차 (선임계리사 → 보험개발원 → 금감원) 절차 이행
 - (개선) 자율상품(75~85%) : 회사내부 검증 절차만 거치고 자율 판매
 - 신고상품(15~25%) : 현행 체계 유지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 은행의 해외영업 진출절차 간소화(사전협의 →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말)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완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08.6)

-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친화적 지원체계 구축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 금융시장의 법규, 제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08.6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설립 예정)

4.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시장경쟁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다양한 금융업무 겸영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선진 금융투자회사(IB)가 추구하는 영업모델 채택을 유도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을 활성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08. 8월) 및 시행('09. 2월)

5.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IB) 육성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08년)

-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 : Corporate Investment Bank) 체제 구축

* Deutsche Bank도 '95년 본격적인 CIB 체제를 도입, 공격적인 M&A를 통하여 5년 만에 세계 상위권 투자은행(Top tier IB House)으로 발전

- 산업은행과 자회사*를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대우증권(39.1%), 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64.3%)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08.9)

- 산업은행 지분 49%를 다양한 방식(상장 전 투자유치 [Pre-IPO Investment], 상장, 블록세일 등)으로 매각(~'10년)

* 2009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고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새정부 임기 내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

- 민영화 추진 관련 보완조치 방안 병행 검토

-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등 경영의 자율성 확대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 강구

-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6. KIC(한국투자공사) 투자 활성화

□ 위탁 규모의 확대

- 공적자금의 추가위탁을 통해 운용규모를 확대

□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 투자대상 자산을 KIC법이 허용하는 PEF,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
- 한국은행의 경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다양성 허용 추진

□ 운용역량 제고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직접투자 비중 확대, 투자자산 다양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외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 추진
- 운용부문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운용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중심의 보수체제로 변경

Ⅱ. 금융인프라 선진화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1. 전자증권제도 도입

- ☐ 비용 절감과 증권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전자증권법제정안 국회 제출 : '08년 12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및 전자증권제도시행 : '09~'11년

2.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 상장요건을 다원화하여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선택 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 맞춤형 상장제도 등 시행 : '09년

- ☐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

3.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 ☐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확충)

*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사업장정보,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가스사용량 등

- ☐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 사용 동의방식 다양화, 신용정보 사용범위 확대 등

- ☐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감독규정 정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1.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 신고가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고기관도 외국환 은행으로 하향조정하여 외환거래시 편의를 제고
- 해외투자자와 같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제 도입

☐ 비은행 금융회사에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09.2)을 지원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국제업무역량 제고

☐ 제2단계 자유화 계획 주요조치 조기이행

- 당초 '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제2단계 자유화 계획('06년 발표) 중 주요조치를 조기추진('08년중)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는 기추진
 -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완료('08.5월)
 - 외국환 업무취급 자유화·신고면제 대상 자본거래 범위 확대 등은 12월 규정개정시 반영

☐ 수요자 중심의 규정으로 개편

- 일반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체계를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2.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제고

-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제적 신인도 제고
- 국제거래에서 외국인의 원화 보유 및 결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규제를 완화

* 경상거래·장내 증권거래시 결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비거주자간 장외 증권매매 결제 등은 불가능

☐ 원화국제화 로드맵 작성

-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속도와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원화국제화 장기 로드맵을 마련

* 원화국제화의 예상효과를 검토하고자 KIEP와 공동연구 진행중

[3]

금융전문인력 양성

1. 금융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정비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9년중)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 금융인력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개발하여 금융인력의 수급계획 수립과

교육 훈련 수요 파악 등에 활용('08년)

☐ 금융인력 교육과정 개선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기초로 금융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creditation)하는 제도 도입을 지속 검토('09년~)

2. 금융인력양성기관 개선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운영 개선('08년~)

- 산학협동·맞춤형 단기과정 등 금융회사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

☐ 금융교육·연수기관의 교육수준 제고 및 역할 정립('08년~)

- 시장의 통합화·겸업화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의 도입 필요

☐ 국제수준의 현장금융인력 양성체제 확립('08년~)

- 현장 전문인력 양성의 민간경쟁의 활성화를 유도
- 경쟁력 있는 민간 금융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유도

3.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시

☐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초·중·고등학생에서부터 군인, 일반인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도

☐ 금융 교육 총괄 추진체제 구축

- 기존 '금융교육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유관부처 담당자들로 '금융교육 전담팀'을

Ⅲ. 자산운용시장 육성

[1]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1.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

- ☐ 자본금 요건을 세분화·완화하여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전문자산운용회사의 진입 활성화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운용대상자산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
 -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요건 대폭 완화
- ☐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 자산운용사 해외법인 설립시 절차간소화(사전협약→ 사후보고)
 - * 자통법에 기 반영, 09.2월 시행 예정

2.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확대
 - 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
 -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고, 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08년말까지)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방식을 변경

-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사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 범위 확대

-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유형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율성 제고

* 다만, 총액한도 규제(총자산 3%)를 유지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건전성 훼손을 방지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3. 헤지펀드의 도입

□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및 금융회사의투자·위험관리 기법 선진화 등을 위해 헤지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

-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시장과 감독당국의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도입 추진

※ 이후 제도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헤지펀드투자자 범위를 확대 [소수(50인미만) 일반투자자(Non-qualified Investor)에게 허용] 하고, 최종적으로는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하여 일원화 추진

4. 펀드 판매 채널의 확대

□ 펀드 판매채널 확대 및 판매중개회사(Financial Planner) 허용

-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

*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08년 하반기)

- 보험대리점 등 일반법인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09)

5. 퇴직연금의 활성화

- ☐ 퇴직연금제도 유연화 및 선진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제도형태 다양화·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제도유연화 연금계리제도 도입 등 제도 선진화 추진

- ☐ 퇴직연금제도 적용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4인 이하 사업장 및 자영인에 대한 적용확대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검토

- ☐ 퇴직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지속 검토

- 퇴직연금 선택 근로자 세제혜택 부여 등 세제 개선 사항 지속 검토

- ☐ 퇴직연금 예금보호 적용 검토

-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검토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시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할 계획

1. 외국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

- ☐ 상장 외국기업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현재 45일)을 연장하여 외국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추진(08년 하반기)
 - 자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
- ☐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시언어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09년~계속)
 - 국내 투자자의 이해부족 및 번역오류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2. 아시아 신흥국가 거래소 설립 지원 및 IT시스템 수출

- ☐ 교육 및 자문,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캄보디아('09), 라오스('10) 등에 대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여 한국형 증시모델 보급 및 연계망 확보
- ☐ 말레이시아('08) 등 신흥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시스템 수출 추진

3. 해외 거래소와 선물시장 연계 추진

- ☐ 거래시간 확대, 해외 투자자의 시장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KOSPI200 선물의 연계 추진('09년 하반기)
- ☐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후유럽의 선물거래소(Eurex)와 파생상품 연계거래 추진('10년 이후)

4.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 ☐ 다양한 투자·헤지 상품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돈육('08.7), 석유제품('09.하) 등 선물상품의 기초자산 확대
- ☐ 주식 이외에 귀금속·자원·곡물 등 실물자산 등을 추적하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추진('09.하반기)

(3)

채권시장 고도화

1. 합성 CDO 발행 허용

- ☐ 고수익채권 보유자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성 CDO*발행 허용(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8.11)

*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신용파생계약(CDS)과 유동화증권(CDO)이 결합된 상품
- 자산의 이전 없이 자산의 신용위험만 분리, SPC에 이전하고 SPC는 담보자산과 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합성CDO를 발행

2. 회사채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

- ☐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의 부도율, 회수율관련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08.하반기~'09.상반기)
 - 정보 생성기관으로부터 부도율 회수율 산출을 위한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3.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 콜거래 비중 축소 및 RP시장 활성화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RP 시장을 보완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 CP(기업어음)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개선

- CP의 유통성을 제고하여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고 발행정보 관리를 통해투자자 보호 강화

☐ CD(양도성정기예금) 금리 안정화

- CD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CD 금리 안정화 유도

4. 채권시장 국제화

☐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의 적용대상 확대

- 현재 국채·통안채 투자시에만 가능한 옴니버스 계좌 설치를 향후 회사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 현재 ICSD*만이 옴니버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개설주체를 여타 국제보관기관까지 확대

*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국제에탁결제기구)는 고객(외국인투자자)을 위하여 투자국에 자기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 자금 등을 관리하는데 이경우의 계좌를 통합계좌(Ominbus Account)라고 지칭

□ 채권장외매매시 원화 결제 허용

○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장외거래하는 경우 원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거래 일방이 ICSD인 경우 비거주자유원계정(비거주자의 해외용 원화계정)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07년에 신규로 도입된 옴니버스 계좌제도의 정착추이를 감안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1.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 투자자본 확충

-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IB 기능 강화를 유도하여 구조조정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 유도
- 사모투자펀드·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동북아 개발 금융 참여 강화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EDCF·ADB 협조융자·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통해 동북아 개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08. 6~10년)

- 수출입은행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별 금융지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JBIC 등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공동 진출방안 모색
- 산업은행은 금융주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동북아 개발금융에 국내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

3. 선박금융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선박관련 협조융자 지원 확대

- 직접대출과 대외채무보증의 혼합지원을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

- 우량 해운업체에 대한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강화
- 금융자문 및 주선(financial arranger) 기능 수행을 위한 선사 및 금융기관과의 networking 강화

□ 선박 이행성보증 시장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시장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 보증료를 적용
- 국내조선소의 해외현지법인이 수주한 선박에 대한 이행성 보증 적극 지원

IV.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1)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1.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지정

□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08)

* 지자체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선행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08.11)

- 지정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계획의 현실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 고려

2.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조성 지원

□ 금융 및 관련 서비스 업종 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에 입주하는 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시행('09~)

- 금융클러스터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 개선을 추진

* 금융클러스터 지정 평가시 세제·건축 등 측면의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의료·교육서비스 지원 등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지원 의지 및 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지원

3.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 설립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08.9월)
 - KOTRA Invest Korea 등 유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 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실적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One-stop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국내외 진출입과 관련한 상담, 인허가·승인 등 애로사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여 One-stop으로 처리
 - (금융환경개선) 외국금융사 등이 제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국제적 정합성 및 경쟁력 제고
 - (수요자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 지원센터 전용 웹사이트 운영 영문자료 서비스 확대 등
 -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외국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확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진출대상 국가정보 제공 등

4. 금융전문인력의 출입국 편의성 제고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고급 금융인력이 고용계약 없이 입국·구직할 수 있는 비자 신설
 - (예) 세계 500대 기업(「Forbes」誌 또는 「Fortune」誌 기준)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세계 300위권 대학(「The Times」 등 기준) 졸업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비자 발급
 - (예) 최근 세계 우수 금융기업에서 경영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취업활동 지원

- 전문직 취업비자(E-7) 발급요건 완화
 - ‘근무경력 2년 이상 학사’에서 ‘현장실습 또는 근무경력 1년 이상 학사’로 요건을 완화
 - * 현재 금융분야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상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 중
- “특정활동(E-7)” 자격 금융분야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1~2년 → 3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개정)
 - 취업비자 발급 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고용계약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체류 환경 개선

- 금융인력 배우자의 동반비자를 국내에서 즉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등 취업절차 개선

1. 세율 하향 조정

-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유지

* 법인세율(%) : 일본 30, 한국 25(10년 20), 대만 25(10년 17.5),
중국 25, 싱가포르 18, 홍콩 16.5

- 낮은 세율 적용구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2. 금융 관련 세제 합리화

- ☐ 금융관련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 추진

(예)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09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 불필요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하여 모든 조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 납세자불평통합관리시스템 도입('08)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세정에 피드백

-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외국 기업의 조세행정 이해증진 노력

- 외국계기업 초청 간담회를 통한 세무안내 및 애로사항 수집 해결
- 세무당국이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책자 등 영문정보제공 확대
-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및 확대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4.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시장개방 추진

□ 외국법자문사제도 도입

-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법 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미 FTA 합의내용 중1단계 개방 반영)

- 외국법자문사법률 제정안 입법 재추진(08년 하반기)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일정 에 맞춰 추가 개방

*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2·3단계 개방 내용

- 제2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 국내법률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공동 수임,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를 허용
- 제3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벤처 합작사업체 형성 허용
 - 일정한 요건 아래 위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5. 회계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회계시장 개방 추진

- ☐ 금융회사 등이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결합재무제표 폐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등 회계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 관련 법령 정비('08년 하반기), 희망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허용('09년), 모든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 도입('10년 ~)
- ☐ 회계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회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 한·미FTA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외국회계법(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 관리감독 방안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08년 하반기)

(3)

금융 회사 종사자의 영어 사용 환경 조성

1. 금융법령을 영문으로 제공

- ☐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법령 영문서비스 제공
 - 금융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예산 및 역할을 분담하여 영문화사업 실시
 - 영문 법령, 영문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Update 실시
 - * 영문 금융감독규정(41개)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 중이고, 영문 법령(94개)은 '08.7월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
- ☐ 「외국환 거래규정」 영문판을 작성하여 배포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반영(09년)

2. 외국 금융기관·종사자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영어서비스 제공 강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영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영어로 자문·상담
- 고충처리 간담회 등을 영어로 개최(정례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영어사용 환경 조성 지속 추진

3. 영어 라디오 방송 확대

※ 지자체 중심으로 방송국을 운영,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유치 인프라 마련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주파수 확보

-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이 집중된 수도권·부산권 및 광주권은 금년중 우선 추진
- 기존 방송국의 허가제원 조정, 전파월경 차단 등을 통해 광역단위별로 영어FM방송용 신규 주파수 확보

※ FM주파수 대역은 88~108MHz(20MHz대역, 100채널)인데, 이미 허가한 방송국은 319국으로 기존 방송국 조정 없이는 주파수 확보가 어려움

☐ 기타지역 주파수 확보

-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정밀 시뮬레이션과 TFT 구성·운영을 통해 가용 주파수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3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구성원 이력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민간 위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동원금융지주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한국지점 대표	동서증권 영업총괄본부 본부장(부사장)
	윤영각	삼정KPMG그룹 대표	삼정컨설팅 대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전성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R클립스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한미은행장
당연직 (정부)	전광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울산과학기술대 이사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당연직 (유관 기관)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은행 감사
	민유성	산업은행총재	리먼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
	진영욱	한국투자공사장	한화손해보험 부회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감위 부위원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한화투자신탁 대표

3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차별 회의내용 및 참석자

① 제1차 회의(08.6.30)

※ 참석자 : 해외체류중인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 학장(로버트 클렘코스키)외
전원 참석

□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에 대한 심의와
- (2)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08~10년)>

□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음

- 이번 계획안은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 추진과제의 구체화 및 현실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산시장통합법 제정 및 금융 규제 개혁 등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마련 등을 과제에 새롭게 추가하였음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및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음
 -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토대로 운영될 동 센터는 잠정적으로 금감원에 설치하되 향후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
 - 지원센터 개소를 위해 인력 파견, 사무실 확보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하되 사무실은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지정시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 다수의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집적될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의 지정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금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계획 작성에 대한 신청 지침과 평가 기준* 등을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제출을 금년 11월까지 접수할 계획

* 마스터카드, 맥킨지컨설팅, 런던시정부 등 세계 유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분과위는 내부평가지침을 마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평가분과위원회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계획

② 제2차 회의(08.7.31) : 서면개최

※ 참석자 : 해외체류중인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 학장(로버트 클렘코스키) 및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김남구)외 전원 회신

- 제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과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음(서면)
 - 두 차례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2008.8.31 국회에 제출*함
- * 금융중심지법 제3조 제2항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금융중심지 평가단 구성원 및 구성원 이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출한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에 대해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하여
 -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08.10.2 현재 미구성)

33. 금융중심지 평가단 내부평가지침

- 향후 구성될 평가단은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08.10.2 현재 미작성)

3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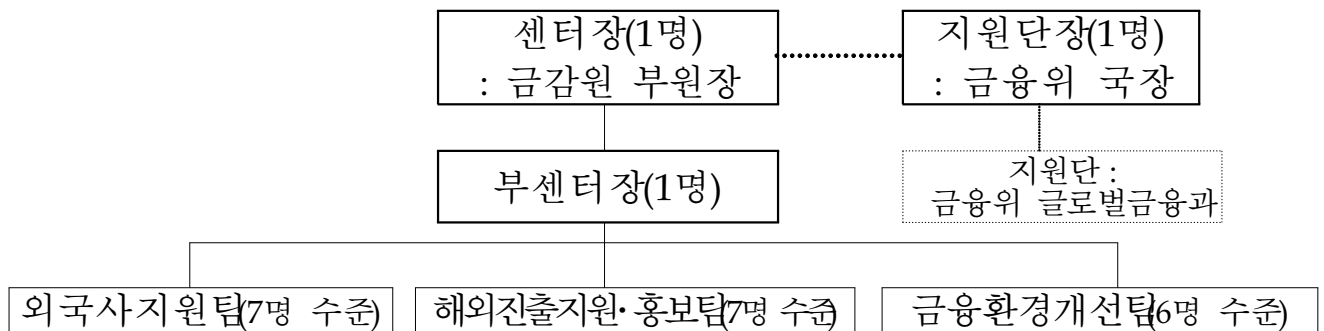
□ (설치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

- 동법 제13조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직구성 및 인원)

- 조직구성 : 센터장 1인, 부센터장 1인을 두고 지원단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자문·지원하며, 외국사지원팀, 해외 진출지원·홍보팀, 금융환경개선팀의 3개팀으로 구성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조직도 >



- 총원 : 20여명 수준(센터장 1명, 지원단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내외)

※ 인원구성 : 금융위(1), 금감원(8, 센터장 1 포함) 및 지원센터 신규 채용(3)*, 유관기관(7~8; 한국은행 1, 신보 1, 각 금융권협회 4 등)

* 영어능통자로서 금융업무 유경험자중 선발하되 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함

<별첨>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팀별 담당업무

① 외국사지원팀

- 신규 및 기 진출 외국금융사의 애로 건의사항 원스탑서비스지원
- 외국금융사 등의 국내 영업상불합리한 제도개선
- 외국 금융사와 네트워크 구축 및 대화채널 운영
-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 지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

② 해외진출지원·홍보팀

-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원스탑서비스 지원
- 해외진출 동향 모니터링 및 불합리한 해외진출 관련 제도개선
- 외국의 법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데이터 베이스화 및 제공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대상국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등 대외홍보

③ 금융환경개선팀

- 조세, 출입국, 교육 등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지원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 및 투자활동상 애로 신고센터 운영
- 금융중심지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전담반 운영
- 금융감독법규 유권해석사례 및FAQ에 대한 영문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금융기관 현황 관계법령 및 세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자체 영문웹사이트 개발 운영

35. 외부전문가 충원 현황(3년간)

☐ 외부전문가 충원현황

일시	성명	직급	소속과	주요경력
2006.11.9	서종군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자산운용협회
2007.4.30	제종옥	별정5급상당	보험과	보험개발원
2007.9.20	장인선	일반계약직5호	글로벌금융과	한국선물거래소
2007.10.1	노진호	일반계약직5호	금융시장분석과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2007.3.28	이종구	별정직고위공무원	금융위상임위원	법무법인 세종

36. 감독서비스 수준에 대한 외부 평가 실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7. 외부평가 실시 기관 또는 인원 현황(이력 포함)

☐ 해당사항 없음

38. 지난 3년간 금융위 출신의 금융기관 재취업현황

성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금융기관	직위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부위원장	'07.12.21	중소기업은행	행장
이00	FIU원장	'08. 4. 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3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 중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체결 보험 계약의 상품 내용

- ☐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소액보험상품을 개발 중
- ☐ 앞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상품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중으로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40.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 (최근 3년간)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 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 08.7.1 금융민원센터 개소 이후 인허가 민원305건, 등록·신고 민원 326건, 유권해석 민원 125건 등을 접수·처리중 (08.8.31현재 기준)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41.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배상책임 가입현황

기관명	직책	성명	보험 가입액	보험 회사명	책임범위	비 고
산업은행	이사대우 이상 임원 (사외이사 포함)	민유성 총재 외 14명	200억원	LIG 손보 외 6개사	업무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기업은행	지역본부장급 이상 간부 (사외이사 포함)	윤용로 행장 외 35명	100억원	그린화재 해상보험 (주)	법률상 부담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및 제비용	
한국기업 데이터	대표이사 외 임원진 전원 (7명)	장유환 외 6인	20억원	삼성화재 해상보험	경영판단과 관 련한 과실로 인 한 법률상 배상 책임	

42. 리먼 인수에 대한 산업은행과의 논의 여부 및 관련서류 일체

□ 7.27일 산은으로부터 구두로 리먼과의 협의 착수에 대해
최초로 보고받고,

○ 이후 3차례(8.1, 8.13, 9.2일)에 걸쳐 협의 진전상황 등을
(서면)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동 문건은 향후 미국측(美 정부 및 리먼 등)과의 분쟁
소지나 국제 거래관계에서의 관례 등을 감안, 비공개함이
바람직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거래관계 CA(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상
거래내용의 일방적인 공개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측면

조 문 환 의 원

1.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 ☐ 2008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현황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 별도 제출

2. 2008년 인건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인건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2008년 9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집행액
인건비	8,844	-	-	-	8,844	5,725
업무추진비	417*	-	49**	-	368	256

* '08. 2. 29 정부조직개편 후 금융위로 이체된 관서업무비 예산액

** 예산절감액 49백만원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비(시설비)로 전용

□ 금융위 직원 직급별 급여 현황(2008년 9월 기준)

(단위 : 천원)

직종	세부직종	계급	평균보수월액
합계			3,748
정무직	소계		9,207
		장관급	9,423
		차관급	8,992
일반직	소계		3,753
	1급내지9급	고위공무원	7,243
		3.4급	5,851
		4급	5,158
		4.5급	3,914
		5급	3,505
		6급	2,695
		7급	2,164
		9급	1,055
	연구직	연구사	2,753

직종	세부직종	계급	평균보수월액
별정직	소계		6,577
		고위공무원	7,685
		5급상당	3,254
계약직	소계		3,686
		5호	4,151
		6호	2,910
		7호	2,142
기능직	소계		2,330
		기능8급	2,703
		기능9급	2,154
		기능10급	1,644

□ 직급별 성과급 현황(2008년 전체)

(단위 : 원)

직급	금액	대상자수
기능10급 운전원	2,027,360	1
기능8급 사무원	11,776,440	4
기능8급 운전원	2,415,680	1
서기관	25,604,240	7
서기관 팀장	2,560,420	1
전산사무관	2,218,820	1
통계주사	1,601,070	1
행정사무관	130,729,460	37
행정주사	24,324,150	8
행정주사보	23,467,170	9

3.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및 그 실적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II.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III.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새 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 금융산업은 新성장동력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금융시장 안정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한 섬기는 금융행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금융시장 동향

- 작년 중순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먼 등 주요 IB 도산과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시장 불안 수시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조정

*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 4,000억~5,000억불 추정(Fitch 4,010억~5,500억불, IMF 9,450억 불)

-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최근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1,300대 후반까지 조정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도 연중 최저치 4.88%(4.30일)를 기록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82bp 상승(10.2일 5.7%)

정책적 대응

- 서브프라임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금감원·금융회사 등과 시장상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흐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금융위·금감원 합동 conference call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로 점검

-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제도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정책협의회(17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11회) 등

□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및 감독 강화로 시장 불안을 완화

○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장내불안 심리의 무분별한 확산 차단

* 例 : KIKO 거래현황(8.1), 9월 위기설 관련 기자 간담회(9.2), 리먼 · 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 파악(9.15) 외화유동성등 금융현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10.6) 등

○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시장에서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 방향 수립 · 발표(7.15일) 등

□ 주요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제 가동과 조기 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상시 점검

○ 중점 리스크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재정부, 금감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워크샵(7.15) 개최, 금융위 · 금감원간 하반기 리스크 점검(7.25)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 대응방안 모색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 例 : 공매도 금지(10.1)

□ 규제금융법안 하원 통과에도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리스크 요인별 금융위험의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②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추진 실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총 14인 : 민간 전문가 11인,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 (단장 : 민간전문가)

<주요 개선사항>

- 금융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총무·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 70억원이상 → 자산100억원 이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 은행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등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내년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또한,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
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

* 과징금제도 확대

③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추진 실적

-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금융섹터 **Global Player**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을 발표('08.6.3)하여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
 - * 추진일정 : 산은법 개정 및 KDF 설립 입법안 마련('08.8) → 산은의 기업분할('08.12)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2009~2010)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2011~2012)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또한 신설되는 KDF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On-lending**방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향후 조치계획

- 연내에 산은법 개정과 KDF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내 지배지분 매각 및 민영화 완료

4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 ※ 8개 증권회사 및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
- 자본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09.2 시행)을 위하여
 - 기존 투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갱신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완료(08.8.4)
 - 자통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9편 442개 조문)을 조기에 제정(08.8.4)하여 업계 사전준비를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재인가·재등록업무(450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 금융위·금감원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전담 T/F구성·운영, One-stop 서비스로 처리
- 자통법에 따라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통합(09.2.3까지)하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

< 주요국 자본시장 현황 >

(07년 말 기준, 조, 개)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사 (수)	기업공개 규모(신규)	유상증자 규모	채권시장**			
					국채	금융채	회사채	총계
한국	1,051.7	1,767	2.3	14.3	404	377	112	893
미국	18,690.8	5,965	71.9	71.9	5,930	13,267	2,671	21,868
영국	3,613.9	3,307	46.9	30.8	824	393	22	1,239
일본	4,374.8	3,870	0.8	17.2	6,436	841	643	7,967

* 한국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미국 : NYSE+NASDAQ+AMEX / 일본 : TSE+JASDAQ+OSAKA

** 국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ABS 포함)

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실적

-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중
 - 다양한 투자·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주식선물(15종목)을 상장(5.6)하고 돈육선물 상장(08.7.21)
 - * 돈육선물의 상장초기 양돈농가 등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강화
- ☐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08.9월)
-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펀드상품 유형별로 펀드 판매보수·수수료의 비교공시(자통법시행령) 의무화
 -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자율적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유도
 - * 수수료 20% 인하(08.5.13, 인하효과 1,110억원), 수수료 면제(9.22~12.31, 면제효과 1,026억원)

향후 조치계획

- ☐ 자통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단계적(09하반기부터)으로 도입(금년중 개정법안 국회 상정 예정)
- ☐ 중요 불공정사건은 공동조사(금감원·거래소간)를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강화하는 등 금년중 불공정거래·공시제도 개선

⑥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추진 실적

-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신정부 출범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 신용등급 7~10등급(약 720만명) + 사금융만 이용하는 자(약 57만명)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

* 08년 하반기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200억원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 30.7만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

- 대출기관 채무자의 채무재조정과 사금융 채무자의 저금리 환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발표(7.24)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의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 (약 7,000억원)

향후 조치계획

- '08년 하반기중 신용회복기금 시범사업(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실시하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개시
- 악성 추심행위 근절, 서민금융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도 연내 국회 제출 예정법무부와 공동발의

7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추진 실적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9.30 현재)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 해 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17	36	370	34	169	926

향후 조치계획

□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예시)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

⑧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추진 실적

- 금융위원장은 美國 **FRB · 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 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
 - 또한, 증권분야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및 정보교환 확대 등을 결정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으로 선출
- ※ IOSCO APRC 의장국 진출로 국제금융계에서의 한국정부의 발언권 제고 기대
- 지난 '08.5월 대통령 訪中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 중국방문 (6.12~13)시 양국 금융당국간 금융협력방안 구체화
 - 중국 해외투자적격 은행(**QDII***)의 對韓 투자를 허용하는 협약체결 및 한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자(**QFII****) 승인
 - *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내국인 거래전용의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중국 적격 은행의 투자허용으로 중국 자본자본 총유입액은 향후 2~3년간 60억달러로 전망(국제금융센터 추정)되고, QFII 승인(미래에셋 : 8.1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향후 조치계획

- IOSCO APRC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 적극 추진
-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
- 금융당국간 정례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확대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과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⑨ 에그몽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추진 실적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부패 방지를 위한 FIU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IU) 협의체
- * 2008.5.25(일)~5.29(목),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91개국·262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역대 가장 성공적 총회' 평가(그룹 의장)

①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의지 대내외 천명

- * 총리님의 개회식 참석과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 * 금융위원장, FIU 원장 등의 언론기고(동아, 한경, 매경),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③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IT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홍보

- * 터키, 싱가포르 등이 공유 요청, 자금세탁방지 IT시스템 견학

④ 우리나라의 FATF가입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 및 문화·사교행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향후 조치계획

- 에그몽 총회 개최를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자금 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11월 중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심사 예정

① 은행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현황

- ①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
 - ①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②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
- ③ 동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진행중

향후 계획

-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②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추진 현황

- 그동안 신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5.23발표)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 정비

③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추진 현황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 시장을 활용한 中企자금지원방안*(6.11)의 차질 없는 추진
 - * 합성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펀드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 지원TF를 구성(08.5월)·운영하여 개편방안 논의
 - KDF 신설 및 보증부문 운영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선의일부 내용을 발표
 - “산은 민영화 및 KDF 신설방안(6.2)”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F의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6.11)”에서 4대 부문 18개 과제를 설정·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진 중
 - KDF 신설 등에 따른 신·기보 등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 (7.28, 8.12)

향후 계획

- 추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
 - ※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 등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또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 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4]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현황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법을 제정·시행('08.3)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 두차례(6.30, 7.28) 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및 금융중심지 평가기준 등 마련 지자체 통지
- '08.9월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 제공

향후 계획

-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월중)하면 금년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지역 선정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의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08.11월 지자체 신청전)
- 금융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내 입주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시행('09년이후)
 - 금융중심지의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⑤ 금융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 추진

추진 현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 현재 상반기중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금융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

향후 계획

- '08년 하반기중 21개 관련 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계획
 - 제정 : 한국개발펀드법(KDF 조직 및 업무 등), 불법추심방지법 (심야방문 및 전화 금지 등,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등 3개
 -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한국산업은행법 (대외채무 자금보증 근거 등), 은행법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등 18개

〈입법추진 대상 21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법,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불법추심방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4-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 해당 사항 없음

4-2.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 붙임 참고

4-3. 위 자료가 없을 경우 질의 응답서, 사실 확인서

4-4. 감사원을 제외한 상급기관 감사결과 자료사본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최근 5년간 감사내역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지적 사항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펀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5 (감사원)	중소·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감독체계 불합리(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출연율 결정 부적정(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출연금 납부 대상기관 선정 부적정(통보)	신보법·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4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input type="checkbox"/>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정책기능 분산(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 겸임 부적정(통보) <input type="checkbox"/> 동일사항의 권역별 금융감독법규 상이(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법령 제·개정 협조 미흡(통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5-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 해당 사항 없음

5-2. 최근 5년간 산하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

☐ 붙임 참고

5-3. 최근 5년간 산하 단체(기관)나 산하 단체장(기관장)에 대한 경고, 주의 현황

연 도	대 상	내 용
2007	주택금융공사	<input type="checkbox"/>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위배한 업무처리(기관경고) <input type="checkbox"/> 협약구입자금보증 취급 부적정(기관주의)
2007	금융결제원	<input type="checkbox"/> 정원초과 승진 및 사면처분 부적정(기관주의 및 개선)
2007	공인회계사회	<input type="checkbox"/> 조직운영 부적정(기관주의)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부적정(기관주의)

<붙임>

산하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연 도	대상기관	결 과 (주요 처분요구 사항)
2007	주택금융공사	<input type="checkbox"/> 공사발행 MBS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개선) <input type="checkbox"/> MBS 발행기관 선정 관련(개선) <input type="checkbox"/> 가산금리 부관 및 기한이익 상실시 기존주택의 처분간주 기준 불합리(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주택신용보증료 징수 불합리(개선) <input type="checkbox"/> 주택신용보증료율 운용 불합리(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위배한 업무처리(기관경고) <input type="checkbox"/> 협약구입자금보증 취급 부적정(기관주의)
2007	공인회계사회	<input type="checkbox"/> 조직운영 부적정(기관주의) <input type="checkbox"/> 윤리위원회 등 위원 위촉방법 불합리(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사이버 연수 관리규정 미비(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부적정(기관주의)
2007	금융결제원	<input type="checkbox"/> 정원초과 승진 및 사면처분 부적정(기관주의 및 개선) <input type="checkbox"/> 인사위원회 운용 부적정(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처리 부적정(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사록 작성 부적정(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수익사업 잉여금 운용기준 미비(개선통보)
2006	금융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조직운영 시스템의 전반적 관리 부실(기관경고)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개선) <input type="checkbox"/> 휴일 차량관리 부적정(시정)
2005	은행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정비 및 운영 미흡(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 이용자 지위변동에 따른 대응 지연(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삭제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부적정(개선통보 및 업무주의) <input type="checkbox"/> 인사규정의 직원 채용요건 부적정(개선통보)
2005	금융결제원	<input type="checkbox"/> 수익사업 장기 운영방향 미정립(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직 인력관리 부적정(개선)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예정자의 정원의 운용 부적정(개선통보)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공동망 관리 부적정(업무주의)

6. 최근 3년간 기관, 기관장의 상벌자료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이 경고·주의 받은 내역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의 수상 내역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이 경고·주의 받은 내역

처분명	일시	처분내용
기관주의	08.7.23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정기인사감사 지적(직무태만) 4건

☐ 당 기관이나 기관장의 수상내역(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대상	포상명	포상일시	포상내용
기관	대통령표창	2004.4.27	비상대비 자원조사 유공
기관	대통령표창	2004.12.30	민생경제침해 방지 유공
기관	국무총리 표창	2006.5.9	정부업무평가유공

7. 2008년 각종 민원 처리사항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08.8월 말까지 총 1701건의 일반 민원을 접수·처리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327건	136건	368건	1074건	1905건

- 08.7.1 금융민원센터 개소 이후 인허가 민원 305건, 등록·신고 민원 326건, 유권해석 민원 125건 등을 접수·처리중 (08.8.31현재 기준)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8.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과 금융위원회 규정집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작성·제출하며 규정집은 한글파일로 제출합니다

○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최근 3년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동현황

* 별첨 2 : 규정집(별도 제출)

별첨 1 : 최근 3년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동현황
<공정시장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일정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05.6.30	
		<input type="checkbox"/> 회계 부정행위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직접 수행		
		<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 원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 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 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	2007.4.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구정비*	2008.7.29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p>*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p> <p><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지배·종속의 관계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p> <p><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p> <p>○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p> <p><input type="checkbo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p> <p>○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정기주총 4주전</p>	입 법 예고중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input type="checkbox"/> 규모가 큰 금융기관(8천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p> <p><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건별 기재사항을 총애만 기재토록 하는 등 작성부담을 완화</p>	2006.3.10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p><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p> <p>○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p> <p>○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당해회사의 자산매도실사</p>	2006.3.10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6.6.12	
		<input type="checkbox"/>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 시험(토플·토익·텡스)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처리되는 바,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험 형태인 토플 IBT(Internet Based Test) 시험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토플 시험의 실시방식에 IBT시험을 추가	2007.2.12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7.3.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정비	2008.7.29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2006.3.10.)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2006.7.5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글로벌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 차등을 규정한 법 령으로 금융중심 지의 지정절차 금 융중심지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 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	2008.3.22 시행	

〈금융정책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담금 산정방법의 개선(영 제12조제1항)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개편(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예산 및 결산 공시제도 마련(영 제12조의2 신설) 	2007.5.16	
개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8.7.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6.3.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7.10.2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3조의4 신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요건 신설(영 제5조의4부터 제5 	2007.11.12	

		조의7까지 신설)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영 제13조 제1항제4호나목 신설,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등)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2.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할 목 적으로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 호, 2007. 8. 3. 공 포, 2007. 11. 4. 시 행)됨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의 구조조 정을 주도하는 채 권금융기관의 범위 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 및 한국수출 보험공사 등을 추 가하고 주채권은 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려 는 경우에는 회의	2007.10.31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도록 하며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 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시행령	○ 금융 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2.29	
개정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보험업법령 최근 3년간 개정현황

〈보험업법 시행령〉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가.보험계약의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의무사항 나.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다.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	2007.8.17	
“	“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 나.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 조치 사유 신설	2008.1.20	
“	“	2008년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개인보장성 보험자 동차 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삭제 등	2008.3.28	

“	“	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 나.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다.자산·손익 구분 계리 방식 마련	2008.6.15	
---	---	-----------------------------------------------------------------------	-----------	--

〈보험업법 시행규칙〉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 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18761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 되어 종전에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 되어 있던 인·허가 및 보험회사의 건 전성 감독과 관련 된 사항을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 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005.3.31	
“	“	「금 융 위 원 회 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제정(대통 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	2008.3.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에 따른 일부개정	2008.8.4	

〈산업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분의 15이하→100분의 20이하 ○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전문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 	'06. 1. 1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한 여신한도를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 30으로 완화 	'06. 6.22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 	'06.12.29	
개정(안) 입법예고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15% →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및 금융위 승인시 은행 자기자본의 30% 	'08. 9.12 (입법예고)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05. 8.26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비율 상향 조정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시 차등요율 적용	'06. 1.24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하는 것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06. 2.22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07. 7. 1	
개정	기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출연금액 개정	'07. 6. 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농협·수협중앙회) 출연요율 상향 조정	'06. 1.2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농·수·산림 회원조합 출연개시)	'06.10. 1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농협·수협중앙회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 및 출연요율 상향 조정	'07. 7. 1	

〈은행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 일자 [폐지 일자]	기 타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7.9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 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 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 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 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07.7.1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 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 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07.1.1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4.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	07.5.3

		<p>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0.04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p>	
--	--	---------------------------------------------------------------------------------------------------------------	--

〈자본시장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조합에 관한 요건을 근로자복지 기본법과 일 원화	'05.12.9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증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제 도의 도입에 따른 승인대 상, 승인절 차 등을 규 정	'06.1.27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상장법 인의 임직원 이 금감위로 부터 해임권 고, 고발 또 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스톡옵 션 취소 근 거 마련	'06.3.30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금감원이 증권사 또는 유가증 권 발행인으 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 의 한도, 초	'07.5.16	

		과분의 처리 등을 규정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	'07.6.2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증권사 에게 위법행 위를 요구하 거나 부당한 조건의 거래 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대 주주의 부당 행위를 금지	'08.1.1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규칙	정부·예로부터 취득한 자사 주를 대상으 로 교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배제한 것 외에, 기타 용어 및 규 정체계 정비 등으로서 특 기 사항 없 음	'06.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현물시장에서 이 득을 얻기 위해 선물시 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는 역방향 시세 조종을 불공	'07.12.20	

		정 거래 행 위 로 명시하는 등 규제 정 비		
개정	선 물 거래 법 시 행령	대주주가 선물업 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의 부 당행위를 금 지	'08.1.18	
개정	선 물 거래 법 시 행령	일반상품 선물거 래의 대량보 유 보고기 준, 보고사 항, 보고시 한 등을 규 정	'08.4.30	

〈자산운용과〉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개정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06.1.27)	<input type="checkbox"/>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 주주의 범위 및 요건 신설 등	’06.1.30
	상동(‘06.2.9)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6.2.9
	상동(‘06.4.27)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06.4.27
	상동(‘06.12.29)	<input type="checkbox"/>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7.1.1
	상동(‘07.6.28)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확대	’06.7.4
	상동(‘07.12.28)	<input type="checkbox"/>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한 요건을 완화 등	’07.12.28
	상동 (08.1.18)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8.1.20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규칙 (‘06.5.9)	<input type="checkbox"/>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대리 인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 정함	’06.5.9
	상동(‘08.1.8)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등	’08.1.8
	상동(‘08.3.3)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3.3
	신탁업법 시행 령(05.11.25)	<input type="checkbox"/>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신탁 업무를 겸영시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 적용할 근거 마련	’05.11.25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폐지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폐지	’09.2.4
	간접투자자산운 용법 시행규칙	상 동	’09.2.4
	신탁업법 시행령	상 동	’09.2.4

〈중소서민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	2008.1.18.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06.5.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	2008.1.18.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6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 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 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 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 법을 다양화	2006.7.1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 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	2008.3.22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7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p>	2007.11.22.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협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이 지급불능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인 5000만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타 회계에 대하여도 신</p>	2008.6.25.	

		협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함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 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 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 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9.1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 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 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 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 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 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2007.10.4.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 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 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 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 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	2008.3.28.	

**9.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정보화 관련 수준 평가,
설문조사, 모니터링 자료**

-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위원회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보고서
금융감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별첨(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도제출

10. 최근 5년간 소송에 관한 사항

□ '08.8말 현재, 소송제기 연도별 소송진행 현황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담당 (소송비용)	진행 내역
2004	손해배상	동아정기 발행주식에 투자한 100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2004가합2964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플래닛팔이가 제재 과중을 주장 (2006구합13961)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진행 중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외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2006구합15684)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2006	부당이득금반환 등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채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2006가합4250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2006	손해배상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2006가합49593)	"	1심: 진행 중
2006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처분 과중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6구합29270)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200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법무법인 세종 (9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7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007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	1심: 진행 중
2007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박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8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패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	1심: 진행 중
200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	1심: 진행 중

□ 최근 3년간 소송 패소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종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 결과	법무법인 (소송비용)
2006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플러스저축은행 외 1명이 경영개선명령처분은 부당(2005구합13247)	1심: 패 2심: 패 (종결)	한빛 (900만원) 세종 (1,000만원)
2007	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김OO가 외감법 위반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제한(1년) 부당함을 주장(2003구합3529)	1심: 패 2심: 패 3심: 패	화우 (2,000만원)
200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기술이전계약 허위 공시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에이디칩스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2003구합20098)	1심: 승 2심: 패 3심: 패	태평양 (3,400만원)
2007	경영관리개시 처분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플러스저축은행 외 1명이 동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처분이 부당함을 주장(2005구합24018) ※ 영업정지 처분만 금융위 승소	1심: 패 (일부) 2심: 패 3심: 패	세종 (600만원)
2008	손해배상(기)	강OO 외 7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배상(2006가합95350)	1심: 승 2심: 패 (일부) 3심: 패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1. 최근 3년간 과장급(4급)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현황

성 명	퇴직전 직책	퇴직일자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	직 책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	하나금융지주	상근 감사위원
양00	부위원장	06. 9.11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	금융감독원	감사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위원장	07. 8. 3	임기만료	-	-
윤00	부위원장	07.12.21	의원면직	중소기업은행	행장
박00	상임위원	08.1.2	"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00	위원장	08.3.5	"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
이00	FIU원장	08.3.28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	은행연합회	감사

12. 최근 5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 각 위원회 별 위원명단 : 성명/성별/현 직책/주요경력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율), 서면회의 개최횟수, 각 위원회별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소요예산

☐ 위원회별 위원 명단 : 별첨

☐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위원회명	04	05	06	07	08
기금운용심의회	2	2	2	2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	-	-	3
대부업정책협의회	-	-	1	2	3
시장효율화위원회		3	4(서면2)	4	4(서면1)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1	2	-	-	1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1	1	-	2	-

□ 참석자수(율)

위원회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기금운용심의회	8 (100)	7 (88)	5 (63)	8 (100)	8 (100)	7 (88)	8 (100)	8 (100)	8 (10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8 (80)	22 (81)	26 (96)	-	-	-	-	-	-
대부업정책협의회	5 (100)	6 (100)	6 (100)	5 (100)	4 (80)	3 (60)	-	-	-
시장효율화위원회 (서면회의 제외)	9 (100)	9 (100)	8 (88.9)	7 (77.8)	8 (88.9)	8 (88.9)	8 (88.9)	9 (100)	9 (100)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7 (100)	7 (100)	7 (100)	서면 결의	-	-	-	-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7 (100)	7 (100)	6 (85)	6 (85)	-	-	-	-	-

□ 서면회의 개최횟수, 자료제출건수, 존폐여부

위원회명	서면회의횟수	자료제출건수	존폐여부
기금운용심의회	7	7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	2	○
대부업정책협의회	-	-	○
시장효율화위원회	3	3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1	1	통합예정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	-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04	05	06	07	08
기금운용심의회	0.6	0.6	0.6	0.6	0.6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	-	-	54
대부업정책협의회	-	-	-	-	-
시장효율화위원회	-	-	-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	-	-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	-	-	0.4	-

13. ‘9월 금융위기설’ 관련 ① 일자별 대책회의 현황 및 ② 위원장의 일자별 각종회의 참석 주요 발언 내용 및 언론 등에 발언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매일 개최하는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외국인 보유 채권의 9월 집중 상황도 동 회의를 통해 점검
하고 금감원을 통해 관련보도자료*를 배포(5.22일)

* 주요내용 :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

□ 이 후 금융시장 · 산업 전반의 다양한 잠재위험요인별
리스크 및 대응방향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 점검회의(7.15)를
개최하고

- 점검회의 이후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추진

□ 아울러, 거시정책협의회(매주 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수시), 금융
시장현안점검회의(통상 매주)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하여 재정부 한은
등 유관 기관과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

* 3월부터 9월초까지 거시정책협의회(장관) 총 16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
총 9회, 금융시장현안점검회의(청와대 경제 · 금융비서관 주재) 총 9회 개최

□ 또한, 기자 간담회, 라디오 및 TV 토론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결과와
정부의 시장안정의지 등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전달코자 노력

* 주요사례 : 부위원장 은행권(6.12) 및 금융투자업계(6.18)간담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7.17) 및 기자 간담회(8.25), 축사 및 강연(8.26, 8.28), 조선
일보 인터뷰(9.3) 부위원장 TV 토론회(9.5),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9.8) 등

14. 2008.3 퀵-히트 과제 사본 및 추진현황

가. 퀵-히트 과제 사본

- ☐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퀵-히트 과제 추진현황

(1) 온라인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추진 현황

-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 인허가·등록 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8.31 현재 기준)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해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583	24	48	16	125	796

(2) 금융회사 종류별 인가기준 다양화로 설립의 용이성 제고

☐ '08.7.29일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제정 완료

- *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특정 업무에 특화하는 전문 금융투자회사 진입 확대 (예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현재 100억원이 소요되나 부동산에 특화할 경우 20억원으로 가능)

(3)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적극 검토 ('08.7월말까지)

☐ '08.7.25일 8개 회사*에 대한 증권업 허가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이상 종합증권업), 엘아이지투자증권(주), 토러스투자증권(주) (이상 위탁+자기매매업), 아이엔지증권중개(주), 애플투자증권중개(주), 바로증권중개(주) (이상 위탁매매업)

☐ '08년중 13개 자산운용사 신규 허가

-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아이엠엠자산운용(주),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메리츠자산운용(주), 더커자산운용(주), 블랙록자산운용(주),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주), 에이아이자산운용(주), 엘에스자산운용(주),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 지에스자산운용(주), 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4)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관련 추진 현황

□ 보험상품 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및 보험사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를 Quick-Hit 과제로 선정하였음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를 도입하고 상품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관계부처 협의 중(08.7.16~)이며,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예정

(5)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 은행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와 사전협의 하도록 은행법에서 규정

* 증권이나 보험사의 경우 사후보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원칙 사후 보고, 예외* 사전협의로 개선할 예정

* 예 :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타 개정사항과 함께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예정

<첨부> 2008.3 퀵-히트 과제 사본

Quick Hit 과제의 신속한 추진

◇ 규제개혁 과제중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Quick Hit)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

1) 민원사항에 대한 On-line One stop 모듈 다양화

①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한 곳을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방문(One stop)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

- 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유권해석의뢰, 정보공개청구, 단순 민원 등 다양한 민원종류별로 처리시스템 구축
-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인이 금융당국을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내부의 민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

② 민원 제출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는전과정을 금융당국이 **On-line**으로 통보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민원접수/담당자/처리시한/처리상황/자료보완사항/처리결과 등을 금융당국이 인터넷,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

On-line One stop 민원처리시스템 체계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On-line One stop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4.30)	시스템 개발 및 운영(6.30)			

2)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民願性 規制의 優先的 해소

① 금융회사 종류별 인가기준 다양화로 설립의 용이성 제고

-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와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요건 대폭 완화 (자통법시행령 제정)

②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허용

- 증권사 (13개), 자산운용사 (9개) 신설 인가여부 결정 ('08.7까지)

③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 도입, 상품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추진(보험업법 개정)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④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 사전협의·신고 사항이던 해외점포 설치를 사후신고로 통일

* 은행: 금융위와 사전협의, 보험·증권: 사후보고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민원성 규제 신속해소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보험업법개정안 입법예고	자통법시행령 제정		

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15-1) 선진국의 사례 및 장단점

<선진국의 사례>

- ☐ 미국(12개), 영국(3개), 일본(4개) 등에서 다수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됨

※ 7.18일 금융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참고

<장단점>

- ☐ (장점)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 CD·ATM기 등만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점포 설치·운용비용을 절감하여 대출·예금이자 등 가격면에서 일반은행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
- ☐ (단점) 대부분 비대면 거래에 의해 영업이 이루어지므로고객 불만처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 금리 등 금융시장 변화에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유동성 위험이 증대할 소지가 있음

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15-2) 인터넷 사고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 ☐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 의무화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비밀번호 장치강화에 : OTP 등 사용의무화 등 **고객(정보)보호와 거래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15-3) 도입 세부 계획

□ 그동안 한은, 금감원, 업계, 연구원 등과의 TF운영, 금융 연구원 정책토론회(7.18)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 은행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10월중 입법예고 예정)

※ 이후,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작업 이후 도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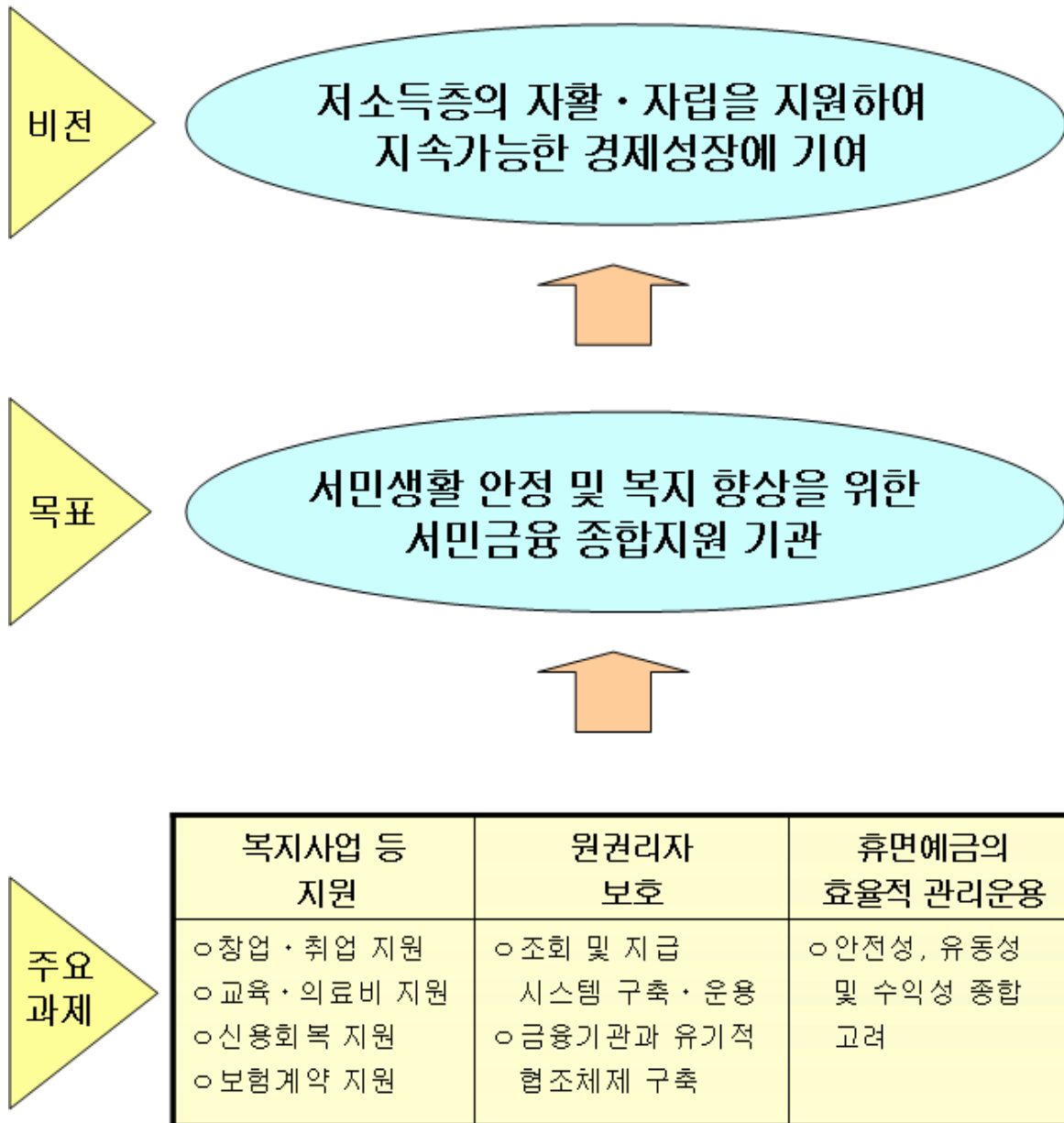
16. 소액서민금융재단 사업 계획(6개 복지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등)

□ 소액서민금융재단 사업 계획(자료:소액서민금융재단)

○ 첨부 참조

휴면예금관리재단 2008년도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및 비전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기반

2. 사업추진 기본 방향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 등 단계별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 (사업의 투명성 확보) 복지사업자 모집·선정·지원·관리·감독 등 전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3. 사업추진 방법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출범초기: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범 수준으로 추진
 - 안정·정착기: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추진
 - 사업 확대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사업 위주 추진

4. 복지사업자 지원 사업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 내용	창업·취업 지원자금 신용대출	교육·의료비 등 생활자금 신용대출	금융채무 불이행자 경제적 회생 지원	마이크로 인슈런스 *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복지 사업자	대안금융기관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대행창구로 활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등	보험회사
수혜 대상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30만원 미만 (취약계층) 신용기준 : 신용등급 7~10등급 (금융채무불이행자 포함)			

- 복지사업자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과 신용등급(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을 기준으로 설정

* 개념상 저신용계층과 저소득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의 규모가 공히 700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 사업목적

-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

□ 운용방향

- 창업지원은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활용
 -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창업을 극대화하고 원금 훼손을 최소화
- 취업지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
 - 저소득층이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중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생활자금지원과 연계)

□ 지원 방식

- 활동 중인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과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
 -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시 보건복지가족부(창업지원), 노동부(취업지원)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첨부하여 지원

□ 지원 규모

-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 다만, 복지사업자별 지원 수준은 개별 복지사업자가 신규 인력·조직의 확대 없이 운용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 창업·취업자금 이외의 복지사업자 자체의 인건비·운영비 별도 무상지원은 배제

□ 지원 금리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동 재원에 수수료(운영비)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 * 현재 복지사업자(NGO형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6% 이내 수준

나.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 사업목적

-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자 흡수

□ 운용방향

- 서민금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여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
- 대행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병행

□ 지원 방식

-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전문성을 지닌 서민금융기관을 재단의 지원 자금 대출창구로 활용 추진 계획임

다. 신용회복 중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

☐ 운용방향

- 신용회복 지원자의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5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재조정 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 지원 규모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소액으로 한정
- 창업 지원은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되 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지원 금리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
-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책정

라.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사업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운용방향

- 보험회사가 재단의수혜대상자 중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Microinsurance)을 개발하여 사업지원 신청 → 재단은 사업 타당성 심사 후 재원을 배분

*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생아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보육원, 장애인복지단체 등 법인·단체 포함

□ 지원규모

- 보험권 출연액(기부금 포함)의 이자 수준을 한도로 보험 회사별 출연실적과 연계하여 배분하고 휴면예금과 구분 계리

*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신용대출사업과 달리 자금의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 지원방식(가입자 보험료 대납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원금보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

5. 원권리자 보호 사업

□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의 신속·편의성 추구

□ 휴면예금 지급의 원활화 중점

- 휴면예금 출연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휴면 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출연되기 전후의 휴면예금을 동시에 일괄 조회토록하여 편의성 제고
- 원권리자 지급요청 시 해당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지급 절차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기관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 금융기관이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주거래은행)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상당액 이체

6. 정보화 사업

□ 복지사업자 지원·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원권리자 보호 증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1단계) 출범초기에는 기본적인 재단 관리업무 및 원권리자를 위한 지급업무 등에 필수적인 시스템만 구축하여 운영(2008년)
- (2단계) 복지사업자 및 수혜자의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재단과 복지사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중복지급에 대한 배제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2009년도 이후)

2008년도 복지사업자 지원현황

(2008.9.12 현재)

분야 (지원한도)	구 분	복지사업자명	2008년 지원금 배정	교부금액*
소액금융 (250억원)	저소득층 창업·취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12.5억원
		신나는조합	3억원	계약체결 후 출금예정
		근로복지공단	32억원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60억원	6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30억원
	사회적기업지원	실업극복국민재단	20억원	10억원
소액보험 (30억원)	저소득층 보험지원	보험회사	소액보험 상품개발 중	
합 계			200억원	112.5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2회에 걸쳐 지원금 전액 교부완료 그 외 복지사업자는 1차 지원분이 80% 이상 소진 될 경우 나머지 지원 예정

17. 채무자에 대한 악성추심행위 근절 대책

- 정부는 '07.12.27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대부업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①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 ②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의 자필기재, ③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 적용 등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향후 (가칭)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18.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관련(보증도입, 펀드신
용평가제도, 4대부문 18개 과제 등 세부추진
계획)

□ '08.6.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첨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2008. 6.



금융위원회

I.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향

- 1.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
- 3.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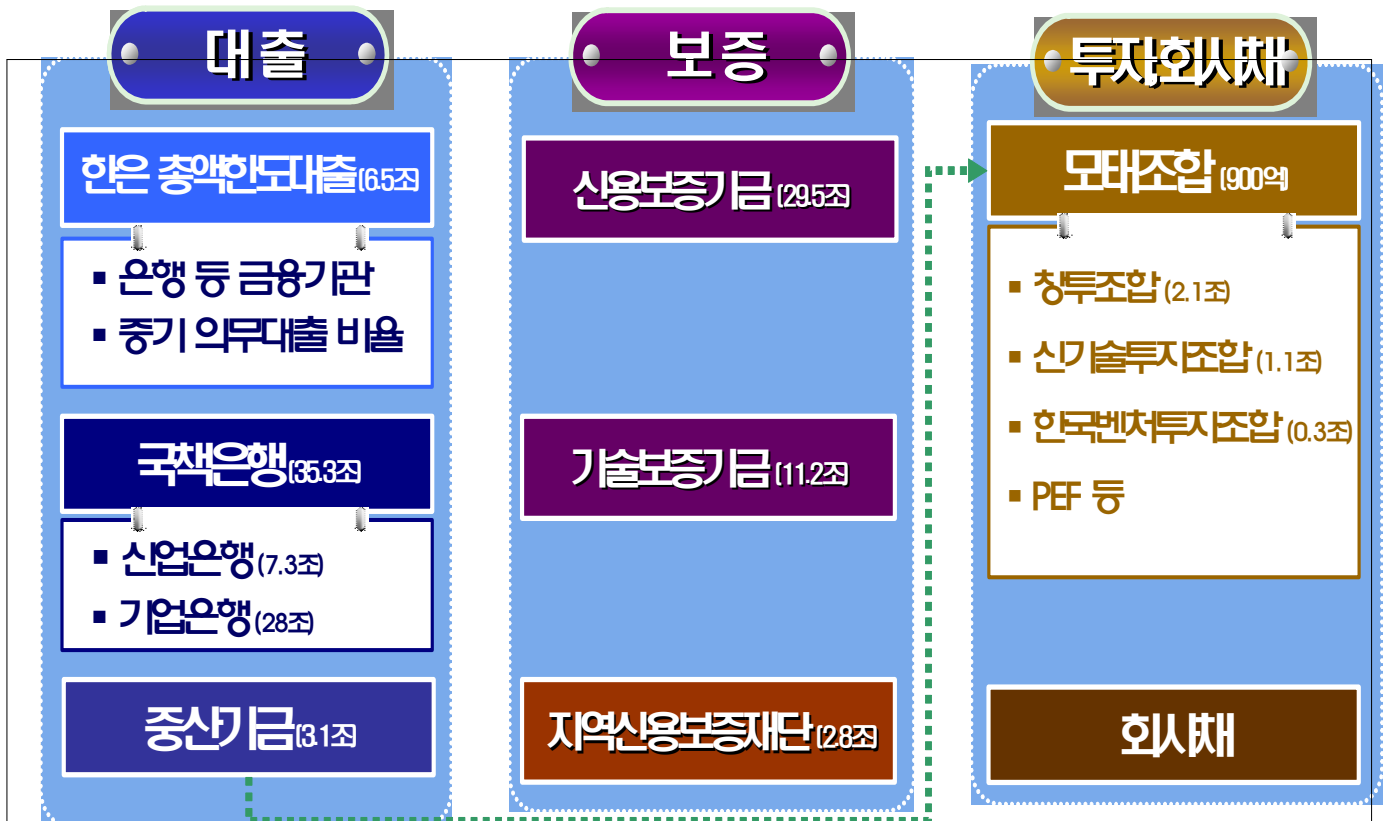
II. 추진 방안

- 1. 원활한 진입·퇴출 확보방안**
-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금융 운영**
- 3.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의 구축**
- 4.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확대**
- 5.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추진**

III. Action Plan

1.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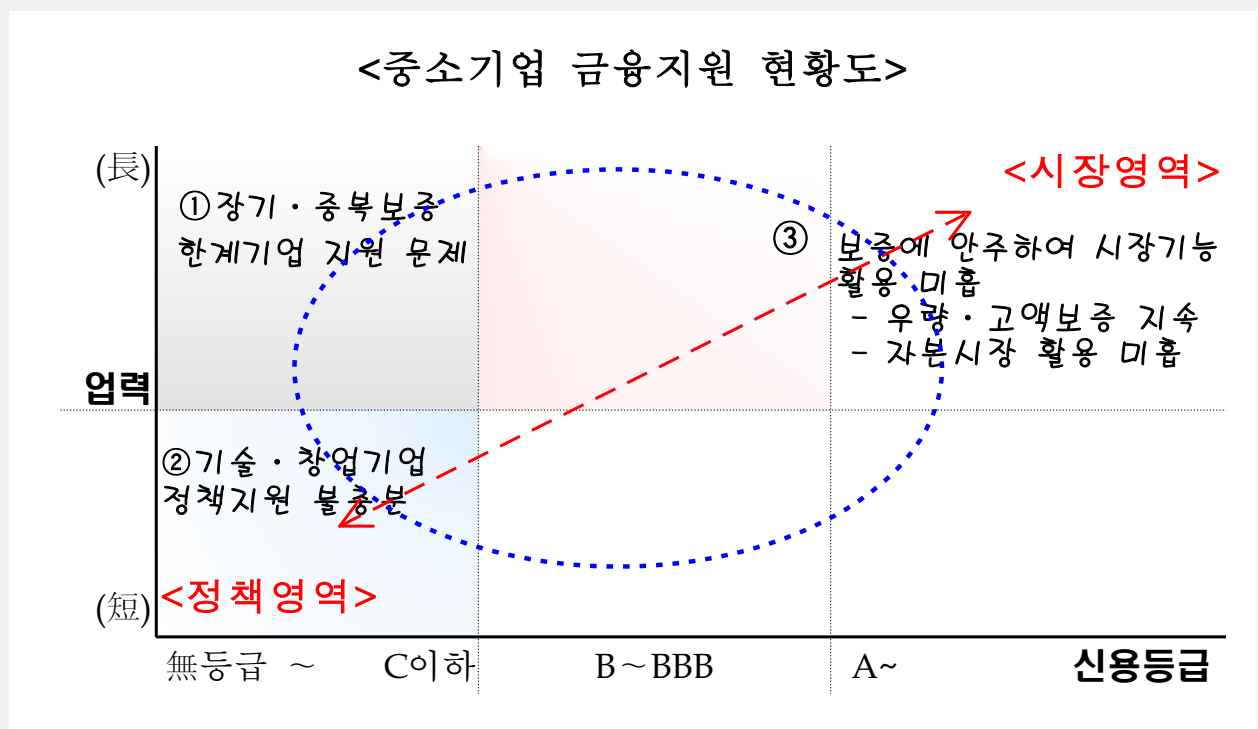
□ 국책은행,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07년도 공급액 기준)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

- ◇ 현재 신·기보 및 정책자금 등으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원규모에 비해 체감 효과 미흡
- ◇ 중소기업을 「업력」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시 금융지원이 중간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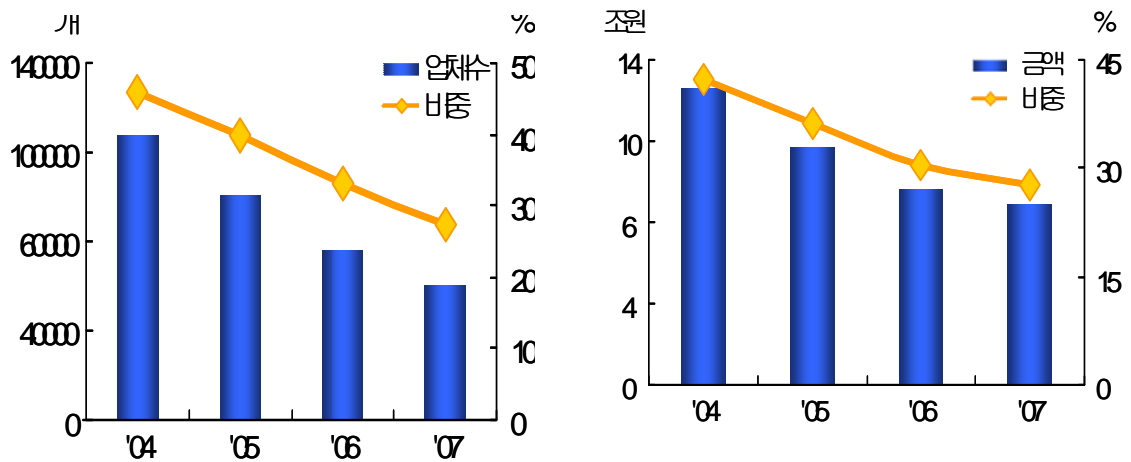


- ① 한계기업 지원, 장기·중복보증 등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미흡
- ② 시장에서 지원이 어려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 ③ 시장에 의해 지원가능한 중소기업까지 과도하게 지원함에 따라 시장의 기업선별능력 및 관련 금융시장·상품의 발달을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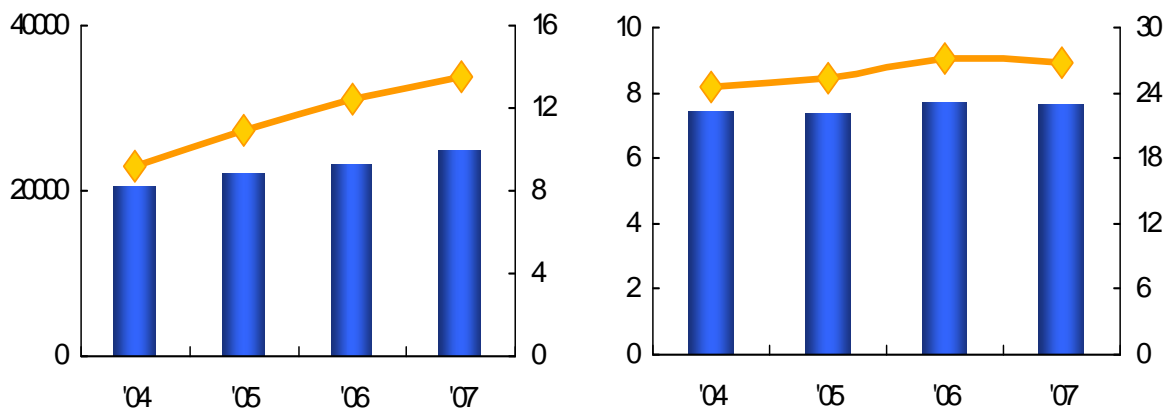
가. 신용보증제도의 사례 (시계열 분석)

- 최근 4년간 신·기보의 보증지원 추이를 보면 업력 5년이하 신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축소되고, 업력 15년초과 기존기업에는 보증지원이 점증하고 있음

<업력 5년 미만 신설기업 보증지원 추이>



<업력 15년 초과 기존기업 보증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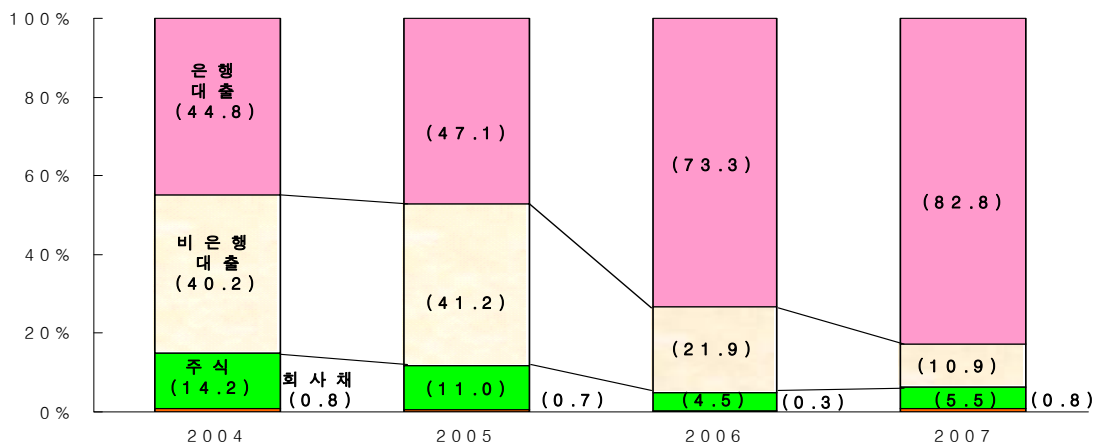


⇒ 정부의 정책역량을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집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필요

나.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

- 채권(정크본드) 및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이 미발달하여 중소기업은 주로 단기·대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중
- 중기대출규모의 증가에 비해 자본시장 접근은 활성화되지 못 해 대출시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

* 07년중 中企 자금조달(82.6조원)중 93.7%를 대출시장에서 조달(77.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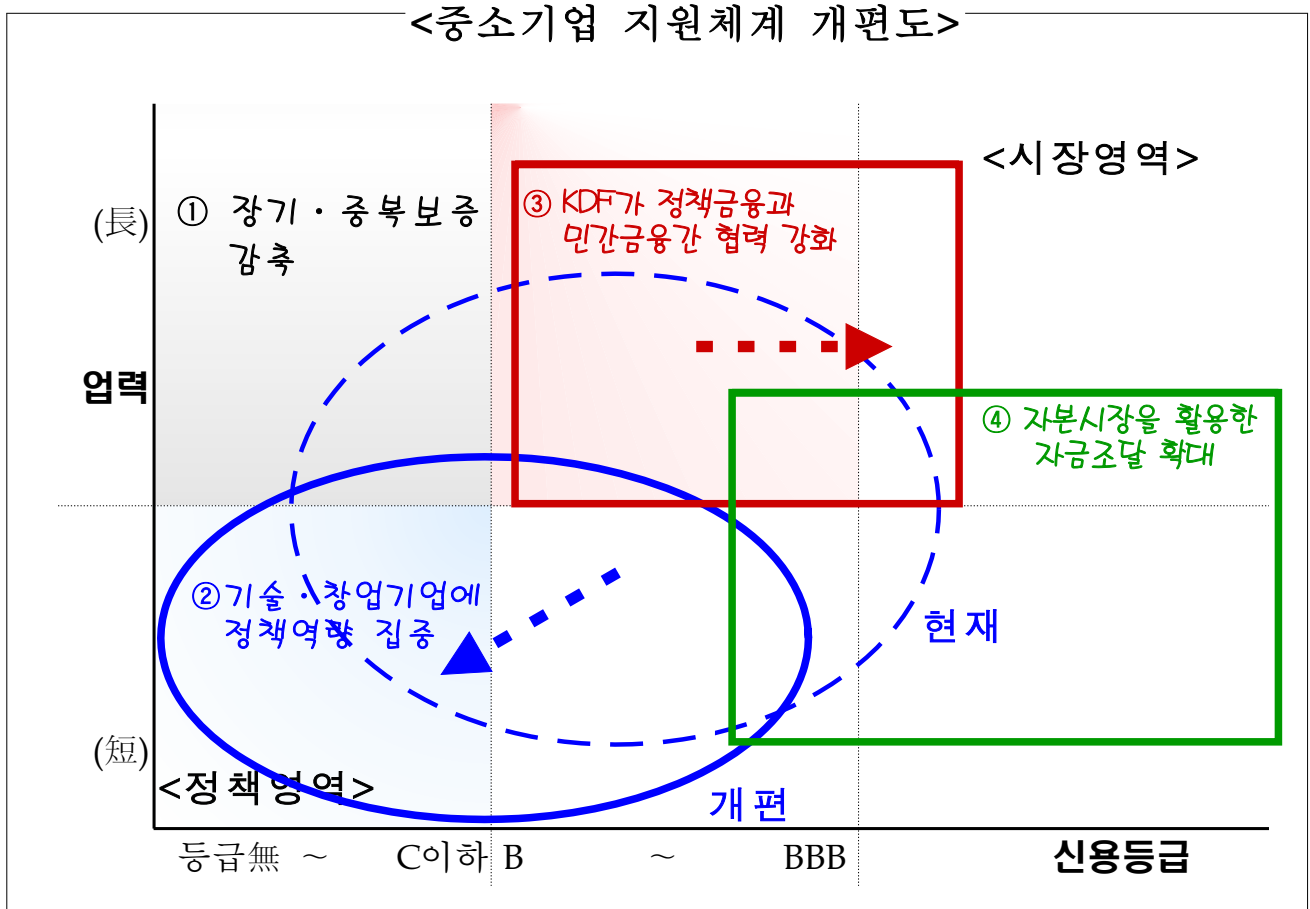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증·감액			
	'04년중	'05년중	'06년중	'07년중 ^p
은행 대출 ¹⁾	5.7(2.4)	12.8(5.2)	45.2(17.5)	68.4(22.5)
비은행 대출	5.1(20.3)	11.2(37.1)	13.5(32.6)	9.0(16.4)
금융권 대출 합계	10.8(4.1)	24.0(8.7)	58.7(19.6)	77.4(21.6)
직접금융시장조달	1.9	3.2	3.0	5.2
주식발행	1.8	3.0	2.8	4.5
회사채발행	0.1	0.2	0.2	0.7
총 합계	12.7	27.2	61.7	82.6

주 : 1)원화대출금 기준(신탁계정 포함), 2)비은행은 '07.11월말 기준, 3)()내는 증감률(%)

-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보증을 통해 정부 재정에서 부담함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유동화·분산하는 금융상품 발달도 미흡
- ⇒ 자본시장 성장에 걸맞는 금융상품을 공급하여 자본시장 자금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흘러올 수 있도록투자자와 연결할 필요

3. 개선 방향



- ①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중복보증의 점진적 감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규기업 지원에 활용
- ② 한정된 재정역량을 기술·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
- ③ 산은 민영화 자금 일부로 설립될 예정인 한국개발펀드(KDF)가 민간금융회사를 활용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중견·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
- ④ 중소기업의 자본시장(회사채·지분투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간자본이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III. 추진 방안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

부문별 추진방안

1 원할한 시장 진출입으로 선순환 구조 마련

- 장기 · 우량 · 거액보증 이용기업의 단계적 보증졸업

3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 도입

- KDF 설립으로 中소지원자금 확보 및 정책 · 민간금융간 협력모델 창출

2 기술 · 창업기업에 정책역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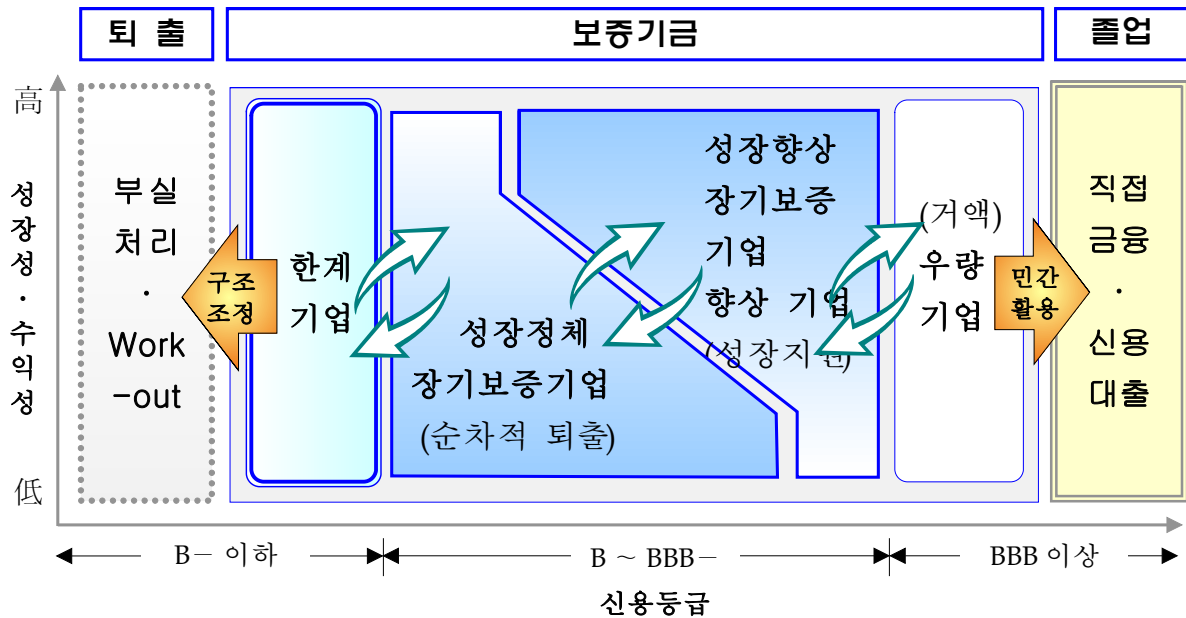
- 기술 · 창업기업에 보증 확대
- 기술 · 창업기업에 적합한 심사방식 및 보증상품 개발
- 수요자 중심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4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확대

- 합성CDO 도입 및 유동화 신용보강으로 신용대출 활성화
- 유동화회사 보증 및 펀드신용평가 도입으로 회사채 발행 활성화
- KDF의 벤처펀드 간접투자 및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로 투자자금조달 활성화

1. 원활한 진입 · 퇴출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1 장기·우량·거액보증 이용기업의 시장친화적인 보증졸업 유도



1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보증졸업 프로그램 운영

- 5년 초과시 가산보증료('06년 0.1%p → '08년 0.3%p) 부과, 10년 초과시 부분보증비율(5%p) 감축
- 예비 장기기업(7년 초과)은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하여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08.1월부터 시행중)
- 성장성·수익성 및 신용도 등 기업특성에 따라맞춤형 보증졸업 프로그램 운영

* (예) BBB이상 우량기업은 보증축소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유도 등

② 거액·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으로 더 많은 신규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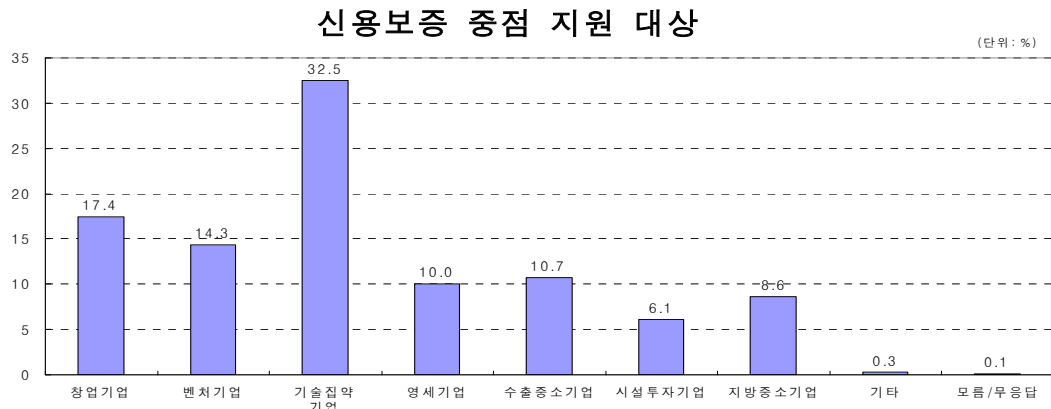
-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축소(100→70억원)하고 15억원 이상시 가산보증료를 부과(06년 0.1%p→ 08년 0.3p%)
-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도 우량기업(신보 BBB, 기보 A 이상)의 부분보증비율(5%p) 감축
- 보증기업의 특성별·상품별로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하여 우량기업 등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책임부담을 더욱 확대

<신용등급/이용기간별 부분보증비율>

신용등급		'06년		'08년 이후	
신보	기보	10년 이하	10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AAA	AAA	50%	50%	50%	50%
AA ~ A-	AA	75%	70%	70%	65%
BBB+ ~ BBB-	A ~ BBB	80%	75%	75%	70%
BB+ ~ B-	BB ~ CCC	85%	80%	80%	75%
CCC+이하	CC ~ D	90%	85%	85%	80%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금융 운영

1 기술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구)재경부 설문조사 결과 향후 신용보증을 중점 지원해야 하는 대상기업으로 기술 집약기업(32.5%), 창업기업(17.4%), 벤처기업(14.3%), 수출기업(10.7%)의 순으로 조사

- 신보는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07년 45.6%에서 '11년 65%(총 보증공급 대비 23.4%)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기보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07년 41%에서 '11년 52%까지 제고 (총보증공급대비 36.2%)

(단위1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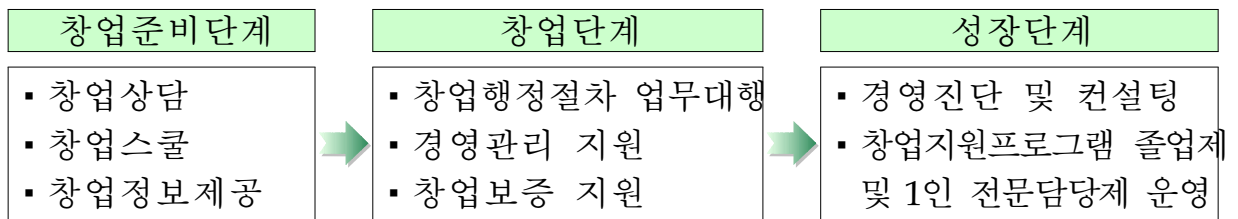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신보	총보증공급액(A)	28.5	28.0	28.0	28.0	29.0
	창업·혁신기업	8.6	10.0	11.0	12.0	13.0
	창업기업(B)	5.3	5.5	6.0	6.3	6.8
	(총보증중 비중B/A %)	(18.6)	(19.6)	(21.4)	(22.5)	(23.4)
	신규보증(C)	8.5	7.5	8.0	8.5	9.0
	창업기업신규(D)	3.9	4.1	4.8	5.3	5.9
	(신규분중 비중 D/C %)	(45.6)	(55.1)	(60.0)	(62.5)	(65.0)
기보	총보증공급액(E)	11.1	10.5	10.5	10.5	10.5
	기술혁신형	9.2	9.2	9.3	9.5	9.7
	기술창업(F)	3.4	3.5	3.6	3.7	3.8
	(총보증중 비중F/E %)	(30.6)	(33.3)	(34.3)	(35.2)	(36.2)
	신규보증(G)	3.7	3.5	3.6	3.7	3.8
	기술창업신규(H)	1.5	1.6	1.8	1.9	2.0
	(신규분중 비중H/G %)	(41.0)	(45.7)	(48.6)	(50.0)	(52.0)

2

기술 · 창업기업에 적합한 심사방식 및 보증제도 개발

- ① (창업종합지원시스템) 창업기업별 '1인 전담제' 실시를 통해 창업상담에서 교육·신용보증·경영컨설팅을 종합지원하는 「창업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창업단계별 주요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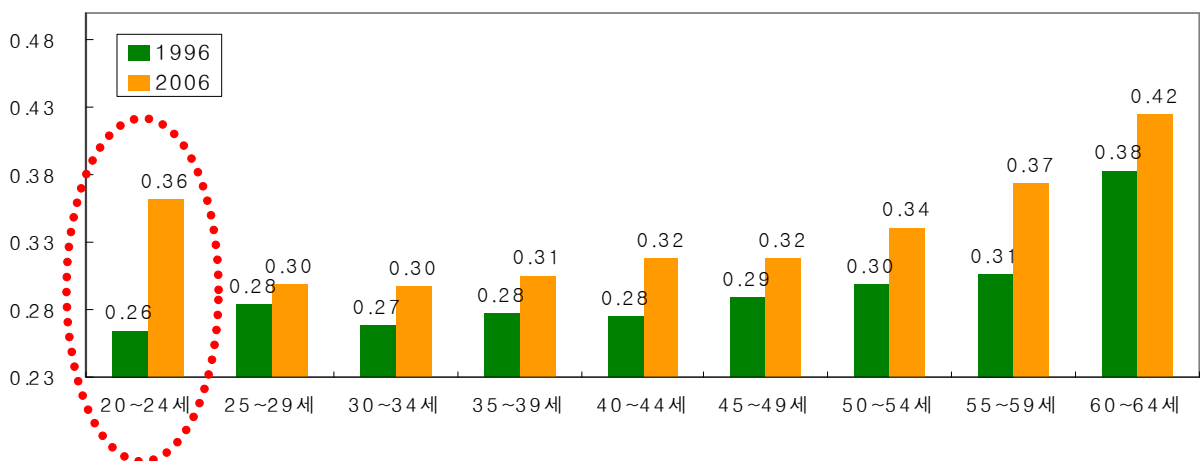


- ②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제도를 도입(08년 하반기)

* 08.4월 현재 30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7.5%로 전체실업률(3.2%)의 약 2.3배

※ 靑年層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20-24세 구간의 소득분배도 급격히 악화

연령군별 소득불균형: Gini 계수 (1996년과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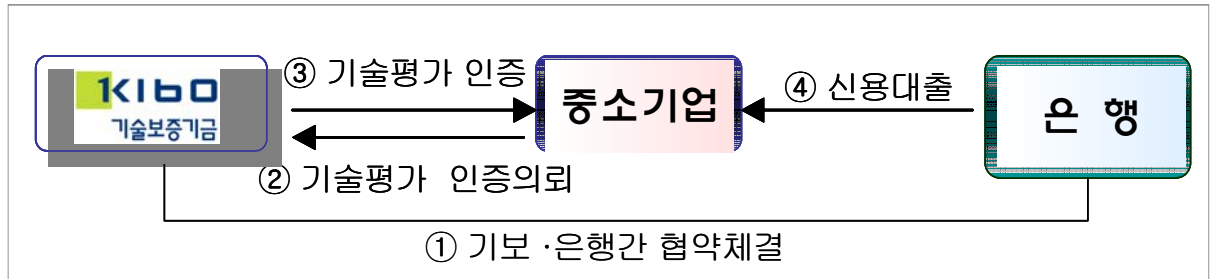


- 35세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미만 장기자금 보증지원제도로 창업기업당 5천만원 이하, 연간 약 5천개 기업을 지원

* '08년 하반기 1,000억원 → '09년 3,000억원

-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 ③ (기술평가대출) 기술평가만으로 대출기관(은행 및 정책자금)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과 대출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 현재 기보가 시중은행과 체결중인 기술평가인증서협약을 중산기금 등 여타 정책자금에 확대하여 기술평가제도의 효용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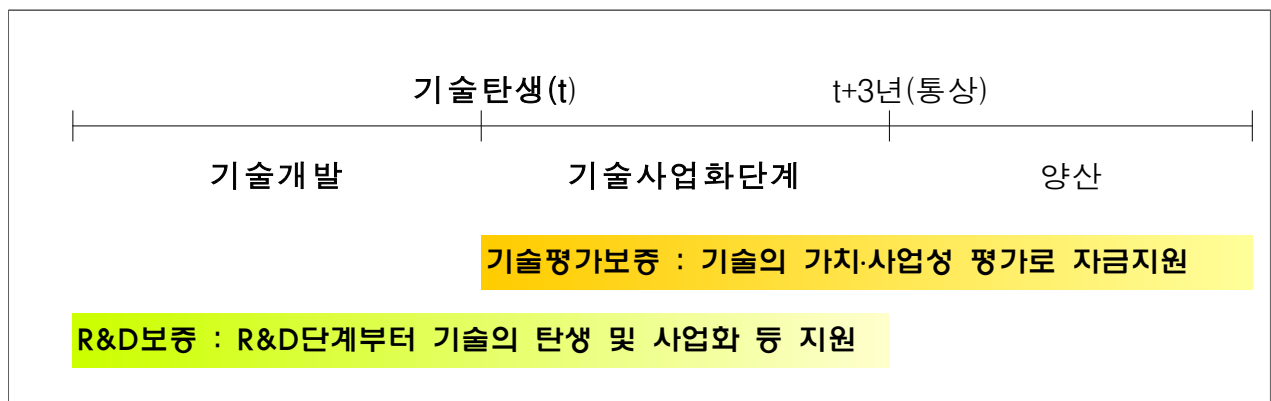
* 산은·기은·우리은행 등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 중

- ④ (R&D특례보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 도입('08.9월)

- 기보가 R&D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하여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운용규모(억원, 계획) : ('08) 1,500 → ('09) 5,000 → ('12) 8,000

※ R&D 보증과 기술평가보증간 비교



⑤ (투자옵션부 보증) 투자전환 옵션이 부여된 보증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우선주 등으로 전환 (신기보법 국회 제출 08.12월)

○ 지분과 차입간 중간적 성격인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술기업의 자본 확충에 기여

* 부채→자본금 전환으로 자본력 취약 기술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

- 기업성공시 IPO, M&A 등 지분매각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여 성과(Upside Potential) 공유

3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집행체계 구축

□ “On-line one-stop 보증지원제도” 도입

○ 無방문 보증상담·신청을 위한 Cyber영업점을 운영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보증서비스 제공* 및 On-Line 중심의 보증업무 프로세스 개선 구현

* 보증신청 및 진행현황 조회, 보증상담 및 신청서류 전산 제출

연대보증인 현황조회, 신용보증료 정보조회, 채무분할상환 정보조회 등

* On-Line 보증신청·상담 및 자료수집 절차 구현으로 고객 방문횟수 감소

○ 행정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제출서류 ZERO화” 추진(08.12월)

* 기보는 향후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기보 직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수집 추진(* 신보는 기시행 중)

3.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체제의 도입

1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08.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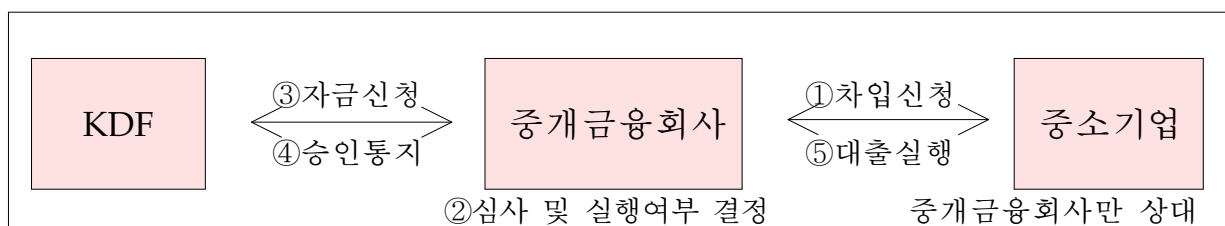
□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 일부로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산은·기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
- 시장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KDF가 민간금융회사와의 공조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견·대기업으로 육성
-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中企 맞춤형 지원상품을 개발

* 기보의 기술력담보대출에 민간금융회사와 협조융자(Co-financing)지원 등

□ KDF는 중소기업을 민간금융회사의 심사 집행·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On-lending)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대자금을 금융회사에 공급
- 금융회사는 대상 중소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를 결정
- 동 과정에서 KDF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신용보강(전대채권 포트폴리오의 약 50%) 및 유동화를 지원



4.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확대

◇ 자본시장의 성장·시중 유희자금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여력도 증가

- 자본시장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금융기법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줌

⇒ “단기·담보(보증)부 대출상품”에 편중된 중소기업 자금구조를 “장기·안정적 투자상품” 및 “신용대출상품” 구조로 변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별 개선방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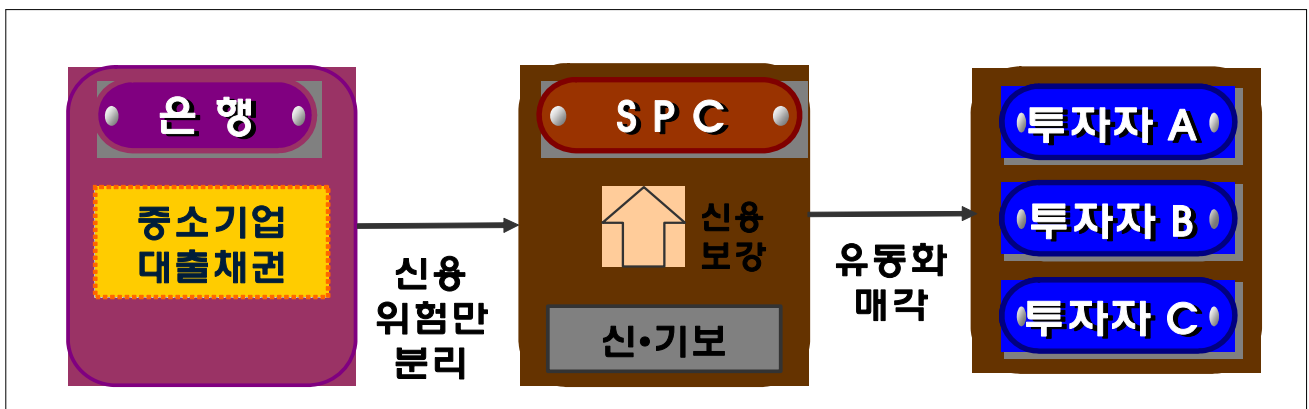
구분	개선방향	주요 과제
대출시장 (Loan)	▪ 신용대출 활성화	▪ 합성 CDO상품 도입 ▪ 유동화과정 신용보강 지원
회사채시장 (Bond)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 유동화회사 보증(P-CBO) 도입 ▪ 펀드 신용평가제 도입
지분투자 (equity financing)	▪ 지분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	▪ KDF의 중소기업 간접투자 ▪ 성장형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1 中企대출채권 신용위험의 분리·유동화로 신용대출 활성화

(08.12월 ABS법 및 신·기보법 국회 제출)

-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합성CDO)을 도입하여
 - 현재는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렵던 중소기업도 더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기보는 동 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동화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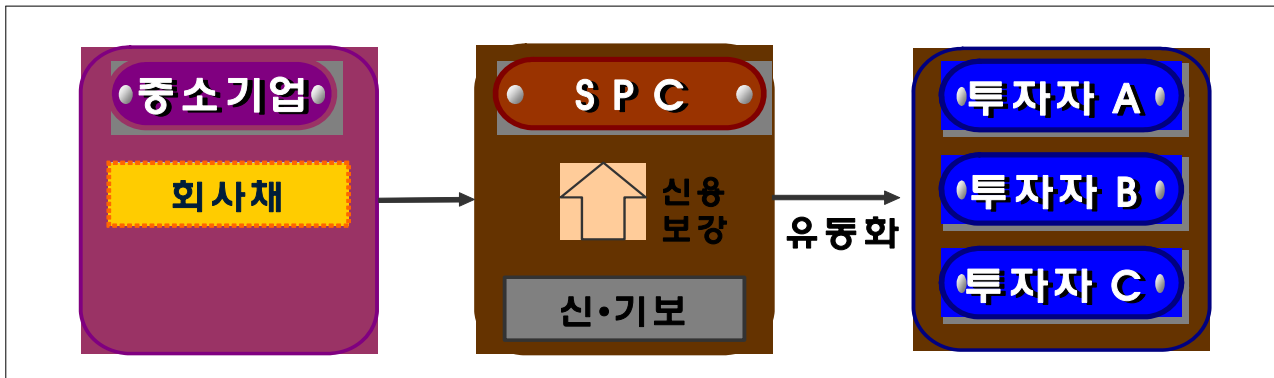
[합성CDO 발행구조]



2 회사채시장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①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
(08.12월 신·기보법 국회 제출)
 - 신용도 열위 등으로 회사채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별 중소기업의 채권을 pooling·유동화하고
 - 신·기보가 유동화회사에 대하여 보증*하여 자본시장에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

[P-CBO 발행구조]



○ 아울러, 과거 벤처 P-CBO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 지원대상기업 사전심사 및 **Pool 구성 강화***로 신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설정하고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Primary CBO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정된 pool 구성을 위해 기초자산 편입을 다양화(기발행 사채도 포함)하고, 기초자산에 분할상환구조를 도입하여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②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크본드 수요기반 확대

(’08.12월 신용정보법 국회 제출)

-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

*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해 등급을 결정

* S&P, Moody's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에서 이미 펀드신용평가를 활발히 수행 중으로, 기관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형펀드에 투자

- 채권투자등급 제한을 받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채권 편입 펀드시장을 선도

* 채권투자 가능 등급 : 연기금 A-이상, 신탁·농협·새마을금고 등 BBB+이상

① KDF의 중소기업 간접투자 지원

-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모태펀드* 및 민간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펀드(Fund of funds)

- 추가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벤처캐피탈의 3년이하 창업기업 투자비중

: (02년) 54.1%→ (04년) 30.1%→ (05년) 26.0%→ (06년) 30.3%

②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 지원

- ①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하여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 (08.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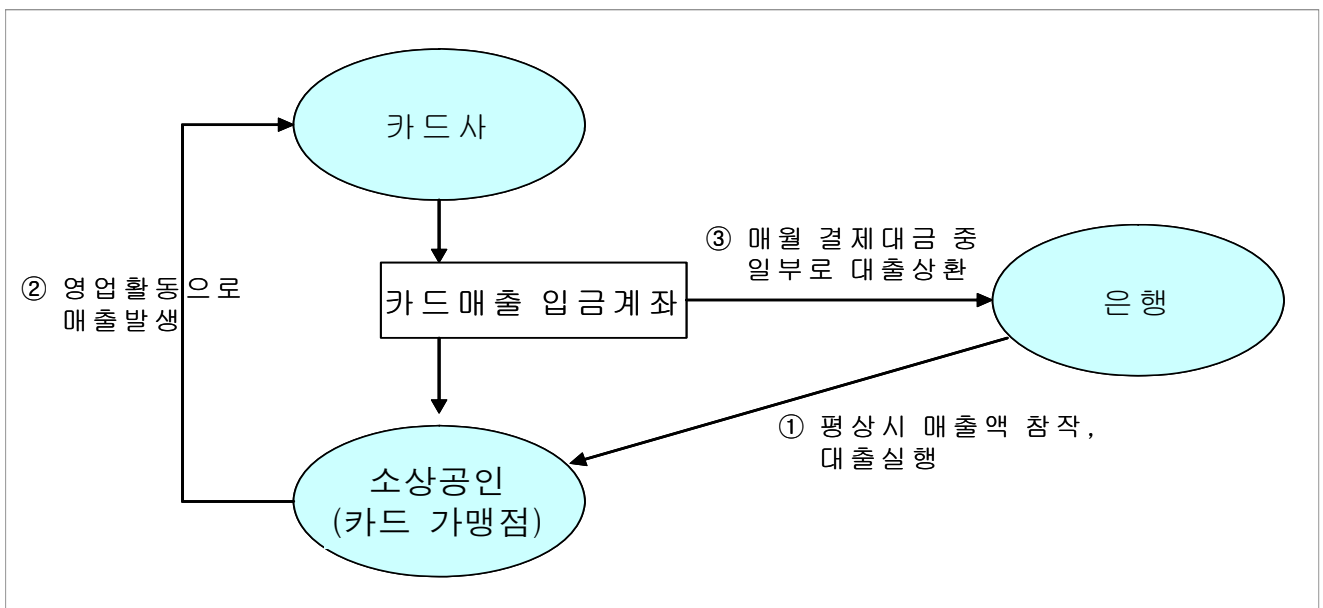
-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07.11 거래소 추정)

5.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추진

-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및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 영업활동 가능
 - 금년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필요시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 검토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구조도>



IV. Action Plan

<과 제 명>	<조 치 사 항>	<시 한>
1. 원활한 진입·퇴출 확보		
시장친화적인 보증졸업 프로그램 도입	(신보 즉시조치)	08.7월
2.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도입		
KDF 신설	KDF법 제정·설립	08.12월
3. 기술·창업기업에 정책역량 집중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확대	(신·기보 조치중)	시행중
창업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신보 조치중)	"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도입	(신보 즉시 조치)	08.8월
기술평가대출 활성화	(기보 정책자금 협약 확대)	09.1월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 도입	(특례보증 세부내용 관련 재정부·지경부 추가협약)	08.9월
성과공유형 보증제도 도입	산 기보법 국회제출	08.12월
On-line one-stop 보증지원제도 도입	(기보, 제출서류 간소화)	08.12월
4.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확대		
합성 CDO도입	자산유동화법 국회제출	08.12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	산 기보법 국회제출	"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	신용정보법 국회제출	"
KDF의 중소기업 간접투자 확대	KDF 설립·운영	09.상반기
거래소·코스닥 상정요건 완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08.3분기
5.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기은부터 시범 실시	08.하반기

19.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관련

- 지역선정 추진 계획 및 부처 및 지자체 협의내용
- 현 수도권 금융중심지와의 문제점

① 지역선정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14일한) 하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현재 교수,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 CEO등 10인 위촉)과 정부위원(5명이상), 금융유관기관장(10인) 등으로 구성

- 특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 평가단은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

② 부처 및 지자체 협의내용

-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중심지 정책 관련 부처의 차관*들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사항을 심의

* 재정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 및 안건관련부처 차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은 1~2차 회의('08.6.30, '08.7.30)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을 심의하였으며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에 참여할 것임

* 주요 내용 : 금융중심지지정 추진 방안 및 평가 방안(평가 기준 등)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은 '금융중심지를 신청하려는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전협의를 거친 시·도는 없음

*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 수도권 금융중심지와 문제점

- 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본사가 주로 입점해 있는 서울특별시 뿐 아니라 금융중심지 지정 지정을 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계획의 현실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심의할 계획으로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최종지정할 계획이

20. 금융사 등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①도입 배경 및 반대의견, ② 국책은행 및 공사에 대한 제도 시행의 전해

① **(도입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
- 이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현재 보다 활성화*하여 영국 등 금융선진국형 제재로 발전시키고자 함

* 현재 과징금은 은행법 등 7개 금융관련법의 일부 위법행위에만 도입

◇ 현재 주요 제재수단으로 활용중인 신분적 제재는 제재 실효성 확보에 한계

- 금융회사에 대한 신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등록) 취소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한정되어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 산정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존재

② **(반대의견)** 다만, 공청회 등에서 업계를 중심으로 과징금제도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위축 우려,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 등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감안하여

-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확대 주요 제재시 청문 강화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

③ **(국책은행 및 공사)** 과징금 부과 대상을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 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 확정시 최종 결정할 계획


21. 새로운 금융상품(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에 대한 시장전망 및 관리대책

☐ 시장전망 관련 : 해당자료 미보유

☐ 관리대책 관련

- 헤지펀드 도입 및 PEF 투자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 등을 관리할 계획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보도자료별첨 1) 및 PEF 현황자료 (별첨 2) 참고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 금융산업의 선진화
	<h2>2008.8.19일 조간부터 보도</h2>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임자	이명호과장 (2156-9870)	담당자	김기한 · 변재호 · 이수영사무관
	도규상과장 (2156-9890)		박민우서기관 · 김종훈 · 서종군사무관
	정완규과장 (2156-9910)		홍명중 · 강호산사무관
배포일	2008. 8. 18.(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0매

제 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2.4일) 이전에 개도개선 사항 등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①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특례규정은 상법에 반영

②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③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헤지펀드 도입, 규제개혁심사단 결정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 8.19일부터 20일간(~9.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

○ 이후 규제위 ·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별첨 >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 개정내용

1.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 이관

□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 (안 제165조의2~제165조의19)

○ 대부분 현행 증권거래법 조문을 그대로 이관하되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① 합병 등 원활화*를 위해 합병 등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안 제165조의5제1항)

* 현재는 매수가격을 과거 시가(이사회결의일 전 2개월, 1개월, 1주간 평균)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이사회 결의이후 주가하락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차익거래유인이 발생 가능

- 이사회 결의 공시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공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공시 이전에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매수주문을 낸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이사회 결의 공시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주문을 이사회 결의 공시 이전에 낸 경우에는 악의적인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음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해 주주-법인간 이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①주주와 법인간 협의 → ②시가산정 → ③금융위조정 順으로 결정 (증권거래법 제191조)

- 정부가 민사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므로 폐지 (안 제165조의5제3항)

- ③ '06.3월 이전 체결된 자사주 신탁계약도 계약 해지·종료를 통해 자사주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 (부칙 제6조)

☞ 규제개혁 심사단 규제완화 심사결과 반영

- '05.12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통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법 시행('06.3월) 이후에 체결된 자사주 신탁계약에 대해서만 인정

2.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반영

- ①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외감법을 준용 (안 제162조 및 제170조)

* 외감법(제17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해당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회계감사인의 임무태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 '08.3.21일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을 반영

- ② 일반상품을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 (안 제173조의2제1항)

* 예 : 돈육선물을 일정수량 이상 보유한 자는 5일내에 보유현황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 '08.3.14일 선물거래법, '08.4.30일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③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 (안 제173조의2제2항)

☞ '08.3.14일 선물거래법 개정사항을 반영

④ 現先 연계 역방향 시세조종 금지제도 보완 (안 제176조)

- 역방향 시세조종 행위(장내파생상품 시세조종 → 기초자산 매매에서 부당이득)의 규제 대상을 현재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증권인 경우에서 일반상품 등인 경우*까지 확대

* 추가로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예시 : 돈육현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돈육선물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 '07.12.20일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3. 법령 선진화 작업

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 명시 (안 제430조)

☞ 법제처,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 반영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수준 결정에 재량이 과다하다는 지적)

②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 환급금·환급가산금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 제449조제7항)

☞ 금융위 자체 과제 (금융법령상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개정)

③ 양벌규정 개선 (안 제448조)

☞ 법무부, 양벌규정 개선 과제 반영

- 현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소속 법인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처벌받도록 하고 있으나

-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4. 제도개선 과제

(1) 헤지펀드 도입 (안 제249조의2)

□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 도입 근거를 마련

- 운용주체는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대상투자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
- 금전차입 규제 완화*, 파생상품 투자한도(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 적용배제 등 자산운용 규제를 사모펀드에 비해서 완화 적용

* 구체적인 금전차입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위해 신규 설정시 사후 보고토록 하고 금전차입,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에 대해 보고의무* 부과

* 보고 의무 위반시 형벌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제107조 삭제)

□ 신탁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자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0% 이상의 현금 등을 법원에 공탁토록 하는 공탁제도를 폐지

☞ 규제개혁 심사단 규제완화 심사결과 반영

- 자기자본규제제도*를 통해 적정자본금을 보유토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중 규제 소지

*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자기자본 유지제도 등

(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보완** (안 제174조)

□ 공개매수자, 주식등 대량거래(취득·처분)자 본인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공개매수자, 주식등 대량거래자 본인을 추가

* 현 자통법에서는 본인이 공개매수등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토록 하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이 아님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도개선** (안 제234조)

□ ETF가 연동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납입대상 자산도 증권 이외 모든 자산으로 확대

○ 현재 ETF가 연동하는 대상은 ①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이어야 하며, ② 同 지수를 이루는 기초 자산이 ‘증권’이어야 하나,

- 연동 대상을 종합지수뿐 아니라 개별 가격도 포함*하고 지수를 이루는 기초 자산도 ‘증권’ 이외에 실물자산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예) 金·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이나 외환 등에 연동하는 ETF 출시가 가능

○ ETF 설정시 납입하는 자산의 범위를 현재 ‘증권’에서 실물자산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

(5) 집합투자업 겸영 은행·보험 임원겸직 제한완화

(안 제250조 및 제251조)

-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보험의 경우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간 임원 겸직을 허용

☞ 규제개혁 심사단 규제완화 심사결과 반영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은 신탁업의 본질업무라는 점에서 겸직을 허용할 필요

* 자본시장 통합법상 Chinese-Wall에서도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지 않음

(6)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의 투자제한 완화 (안 제27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가 다른 기업(국내·외 기업 모두 포함)을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이내에 매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외국기업까지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타법령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 PEF가 계열사로 편입한 기업이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5년내 매각 의무를 적용 배제

☞ 규제개혁 심사단 규제완화 심사결과 반영

(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류 확대** (안 제437조)

□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한 외국감독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제한을 완화*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협정(MMOU) 가입 조건

- 통합법에 상응하는 외국법령 위반 정보를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에의 제공을 허용
-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행정처분절차, 재판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를 허용
-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8)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시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6조)

* 현재는 신규 인가시에만 예비인가제도 이용이 가능

②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商號로서 “금융투자”, “선물”을 추가 (안 제38조)

* 현재는 증권,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

③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안 제87조)

- 현행 규정은 펀드재산에 속하는 모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집합투자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

※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비상장주식 등은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제처 심사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함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이 지나치게 조기에 공개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영업보고서 제출 시기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에서 2월로 연장 (안 제90조)

* 펀드평가사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2개월)에 정보공개

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한시적(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연장 (안 제160조)

5. 조문정비 사항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7조)

* 현재는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근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병행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 (병행 운영시 감사보고서 작성 등 기능 중복에 따른 혼선 발생)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 (안 제246조)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정을 모두 적용배제(제245조)함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사항도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 발생

③ 펀드 종류별 최소투자 비율 준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안 제81조)

○ 펀드 종류별로 특정 자산에의 최소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증권펀드의 경우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각종 비율규제에서 펀드 설정일로
부터 일정기간(시행령상 1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투자비율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부여

④ PEF 해산·청산에 대해 투자회사 해산·청산 관련 규정을
적용 (안 제277조)

○ PEF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채권자보호 절차가 적용되도록
투자회사의 해산·청산 규정을 PEF에 준용

※ 현행 간투법상 투자회사 해산·청산 관련 규정이 PEF 해산·청산에도
적용되나, 자통법상 PEF 해산·청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⑤ 금융위원회 긴급처분권(제413조)은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인
협회 장외시장에는 적용 배제 (안 제289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의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장시간 변경, 거래의 중단, 시장의
휴장 등을 명할 수 있음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 현황

'08. 8. 31. 현재

구분	등록일	GP	출자액정액	비고
1	미래에셋 파트너스일호	'04.12.27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400 억원
2	우리제1호	'04.12.27	우리은행	'05.10.7(해산)
3	대본서	'05. 2.15	대본서코리아	300 억원
4	마르스제일호	'05. 3. 7	우리투자증권	340 억원
5	칸서스제1호	'05. 3.29	칸서스자산운용	- '06.3.14(해산)
6	KDB 밸류 제1호	'05. 5. 9	산업은행	3,000 억원
7	기업은행케이티비제1호	'05. 5.31	기업은행, KTB네트워크	1,200 억원
8	보 고	'05. 9. 2	보고인베스트먼트	5,110 억원
9	신한-국민연금제1호	'05. 9. 8	신한 PE	3,000 억원
10	엠비케이	'05. 9. 8	MBK파트너스	10,000 억원
11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05. 9.26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12,142 억원
12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05. 9.2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파트너스	1,505 억원
13	KT2005	'05. 9.29	케이티비네트워크, 케이티비자산운용	1,500 억원
14	미래에셋 파트너스이호	'05. 9.29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400.1 억원
15	에이치앤큐 국민연금 제1호	'05.11. 2	한국 H&Q AP	3,000 억원
16	FG10	'05.12.27	파이낸스그룹텐	- '06.11.6(해산)
17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1호	'06. 3. 7	중소기업은행, 기보캐피탈	510 억원
18	KTB-SB	'06. 4. 6	케이티비자산운용	125 억원
19	우리	'06. 7. 6	우리 PE	3,440 억원
20	코너스톤제일호	'06. 8. 4	코너스톤PE파트너스	1,005 억원
21	미래에셋 파트너스삼호	'06. 9.11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6,110.1 억원
22	KT2006	'06.10. 2	케이티비네트워크	2,501 억원
23	KDB 밸류 제2호	'06.11. 2	산업은행	4,000 억원
24	아이비케이 제3호	'06.11. 7	기업은행	450 억원
25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제1호	'06.11. 7	기업은행, SK증권	201 억원
26	유진자산제1호	'06.11.28	서울자산운용, 서울증권	250 억원
27	스카이라이프글로벌인큐베스트사 모투자전문회사1호	'06.12.13	스카이라이프	316.2 억원
28	제일호과학기술	'06.12.28	한화기술금융	500 억원
29	국민유선방송투자이호	'07. 2. 7	MBK파트너스	1,005 억원
30	르네상스제일호	'07. 2.22	웅진캐피탈, 대우증권	3,010 억원
31	마르스제이호	'07. 3. 2	우리투자증권	4,500 억원
32	미래에셋 파트너스사호	'07. 4.10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3,680.1 억원
33	디지털컨버전스바이아웃	'07.4.26	티스톤	1,000 억원
34	KDB 벤처엠앤에이	'07. 5.25	산업은행	300 억원
35	솔로몬	'07. 6.13	솔로몬상호저축	1,793 억원
36	쥬피터	'07. 6.13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1,040 억원
37	CF인베스트먼트제1호	'07. 7.13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1,000.5 억원

구분		등록일	GP	출자액정액	비고
38	아이스텀레드	'07. 7.13	아이스텀 파트너스 아이스텀 투자	360 억원	
39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2호	'07. 8. 3	기업은행, 기보캐피탈	1,100 억원	
40	스카이레이크글로벌인큐베스트사 모투자전문회사2호	'07. 8. 3	스카이레이크	1,060,5 억원	
41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 제2호	'07. 8. 3	기업은행, SK증권	171 억원	
42	NH애그리베스트	'07. 8.27	농협중앙회, NH증권	300 억원	
43	교원나라제일호	'07. 9.18	교원나라기술	200 억원	
44	KTB2007	'07.10.18	케이티비네트웍	4,600 억원	
45	리딩밸류	'07.11. 1	아이더블유엘	1,200 억원	
46	프리모리스	'07.11.22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405 억원	
47	제2호과학기술	'07.12. 3	한국기술투자	700 억원	
48	엔플러스일호	'08. 1. 2	엔조이플러스	233 억원	
49	엔에이치아이비케이제일호	'08. 1.15	NH투자증권, 기업은행	1,400 억원	
50	KTB2007-2	'08. 1.22	KTB 네트워크	231 억원	
51	클라우드	'08. 1.31	코어에프지	202 억원	
52	국민유선방송투자일호	'08. 2.21	MBK 파트너스	2,361.5억원	
53	튜브	'08. 3. 1	튜브투자자자문	106 억원	
54	마르스제3호	'08. 3. 7	우리투자증권	510 억원	
55	한국케이블	'08. 3. 7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420.3억원	
56	아이비케이제팔호	'08. 3.10	기업은행	500 억원	
57	대선	'08. 3.31	코너스톤PE파트너스	155 억원	
58	씨이피제일호	'08. 3.31	코너스톤PE파트너스	885 억원	
59	SHCF 인베스트먼트	'08. 4.11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2,000 억원	
60	인헤리턴스	'08. 4.25	메리츠증권	180 억원	
61	리더스	'08. 5.2	SK증권, 산은캐피탈	3,100 억원	
62	마르스제사호	'08. 5.13	우리투자증권	505 억원	
63	유진자산 제이호	'08. 5.22	유진자산운용	2,261.7억원	
64	티스톤2호	'08.7.3.	티스톤	1,190 억원	
65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	'08.7.8.	(주)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 케이비창업투자(주)	3,350 억원	
66	케이쓰리코리아일호	'08.7.14.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	261.2 억원	
67	신한제2호	'08.7.14.	신한프라이빗에쿼티	4,200 억원	
68	국민연금케이비아이씨제일호	'08.7.23.	케이비창업투자(주)	1,950 억원	
69	아이엠엠로즈골드	'08.8.1.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3,125억원	
70	네오플렉스제1호	'08.8.7.	주식회사 네오플렉스	2,000억원	
71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08.8.7.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3,590.1억원	
72	에이치앤큐제이호	'08.8.11.	에이치앤큐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3,725억원	
합 계				128,430.3억원	

22. 금산분리 완화 관련 선진국의 사례

☐ 별첨 참고

<별첨1> 미국의 금산분리 제도

- 美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등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control) 하고자 하는 회사는 FRB 등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참고) 美 BHC Act의 지배주주 정의 : ① 직간접적 25%이상 의결권 행사, ②과반수 이상 이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③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FRB가 인정하는 경우

- 다만, 美 **FRB**는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15%** 까지는 “지배”로 보지 않음(**FRB Policy statement**^{*}, '08.9.22)

※ 다른 나라에 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금산분리)의 전통이 강한 美國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 등을 위한 은행주식 투자 유도를 위하여 은행 소수주주(minority investor)의 지배력 행사의 요건을 완화

☞ 일반적으로 FRB의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 (종전) 10% → (개정) 15%

⇒ 따라서 산업자본도 이사선임 등 다른 지배적 영향력의 징표(other indicia of control)가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까지** 보유 가능

-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회사 지분 소유 및 非은행 관련업 영위를 제한

*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가 된者は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은행업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FRB가 승인한 업무”이외의 업무영위 금지

<별첨2> 주요국의 은행소유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일본 (Japan)	은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은행 주식을 20% 이상 보유)가 되려는 자는 금융청의 사전승인이 필요
EU 2nd Banking Directive	직·간접적으로 은행주식을 10%, 20%, 33%, 50% 초과보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한 승인이 필요
프랑스 (France)	EU 2nd Banking Directive
독일 (Germany)	EU 2nd Banking Directive
영국 (U. K.)	EU 2nd Banking Directive * 은행주식을 15% 이상 보유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시 고객예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확약서(Comfort letter) 요구
오스트리아 (Austria)	EU 2nd Banking Directive
이탈리아 (Italy)	비금융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해 상당히(significantly) 높은 경우 당해 기업의 은행 주식 15% 초과소유 등 금지
덴마크 (Denmark)	EU 2nd Banking Directive
핀란드 (Finland)	EU 2nd Banking Directive
그리스 (Greece)	EU 2nd Banking Directive
벨기에 (Belgium)	EU 2nd Banking Directive
네덜란드 (Netherlands)	EU 2nd Banking Directive
호 주 (australia)	은행주식 15% 초과보유 금지(단, 국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초과보유 승인)
스페인 (Spain)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분변동(10%, 15%, 20%, 25%, 33% 등)시 사전신고
스웨덴 (Sweden)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50%로 제한

* 자료 : 금융연구원, 2006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보험과 사무관 제종옥 019-9767-5703)

생보사 상장위원회 위원 명세

성명	전공 및 대상사유	직함	이력
이정한	법률	태평양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법학과 제27회 사시합격 태평양 변호사
한기정	법률	이화여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법학과 이화여대 법학교수
정민근	회계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박종수	회계	한영회계법인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 경영학 미국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상무이사
오창수	계리	한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 학사 美보험계리인회 회원 한양대 디지털경영학부 교수
안동현	재무	서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나동민	보험	KDI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대 법학과 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
정세창	보험	홍익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강대 경영학과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정학봉	증권/자본시장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 무역학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장보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보험과 사무관 제종옥 019-9767-5703)

위원회의 생보사 상장에 관한 보고서

“붙임 참조”

- 붙임 : 1. 금융위 안전 관련 현안 보고(국회보고, 07.4.24)
2. 생보사 상장관련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전망(보도자료, 07.4.27))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 보고(국회보고, 07.4.24)

I. 추진 경과

- ☐ 생보사 상장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확대되는 등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 증권시장 입장에서 우량 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 ☐ 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 ☐ 이에 따라 06.1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 추진체계 논의
 - 현행법과 규정체제하에서 생보사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심사·결정하는 만큼
 -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를 설치한 후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자문위의 심도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 **06.2월** 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 보험, 회계, 재무분야 등
각계 중립적 전문가로 **상장자문위**를 구성

□ **상장자문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청취(06.6월)**를 거친
후 **공청회 (06.7월)**를 개최하여 상장관련 기본 입장을 공표

○ **학술세미나(06.12월)**를 통해 배당적정성 모형(Asset
Share모형)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발표**

⇒ 이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50여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

□ **상장자문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07.1월)**

□ **국회(재경위)**에서도 생보사 상장관련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07.3.5)

□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 금융감독위원회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

Ⅱ.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1. 그간의 경과

- 07.4.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개정(안) 의결
- 07.4.1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금감위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 신청
- 07.4.12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법 제115조제2항에 의거 재정부에 동 규정 개정(안) 협의공문 발송
- 07.4.18 재정부, 금감위에 이견이 없다는 회신 공문 발송
- 07.4.20 금감위·증권위 합동간담회, 동 규정 개정안 승인여부에 대해 논의

※ 상장규정 개정절차 및 관련 법규

- ◇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 상장규정에는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함(증권거래법§88)
-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금감위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115)

2. 개정 배경

-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는 주권상장신청법인은
설립년수, 자본금, 경상이익 등 **계량적 신규상장 요건**
(상장규정 §32)외에
 -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 보호
등에 대한 **심사요건***(상장규정 §35)도 규정
-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중 하나인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상장규정§35.1.
다.(2))조항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5조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

1. 기업 경영의 계속성

다. 주된 영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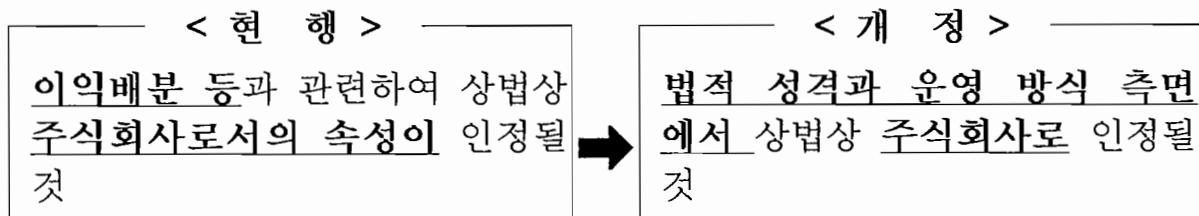
(2)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
호하여 **상장 심사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동 기준만을 활용하여 심사를 하는
데 한계**

3. 개정 내용

□ 금번 상장규정 개정 내용은

-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고
- 상장신청법인이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4. 기대 효과

- 불명확한 상장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보편성이 제고되고, 향후 원활한 상장 심사가 기대

5. 향후 일정

- 4.25(수) 증권선물위원회, 4.27(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
- 추후 개별보험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계량적·질적 신규상장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

<참 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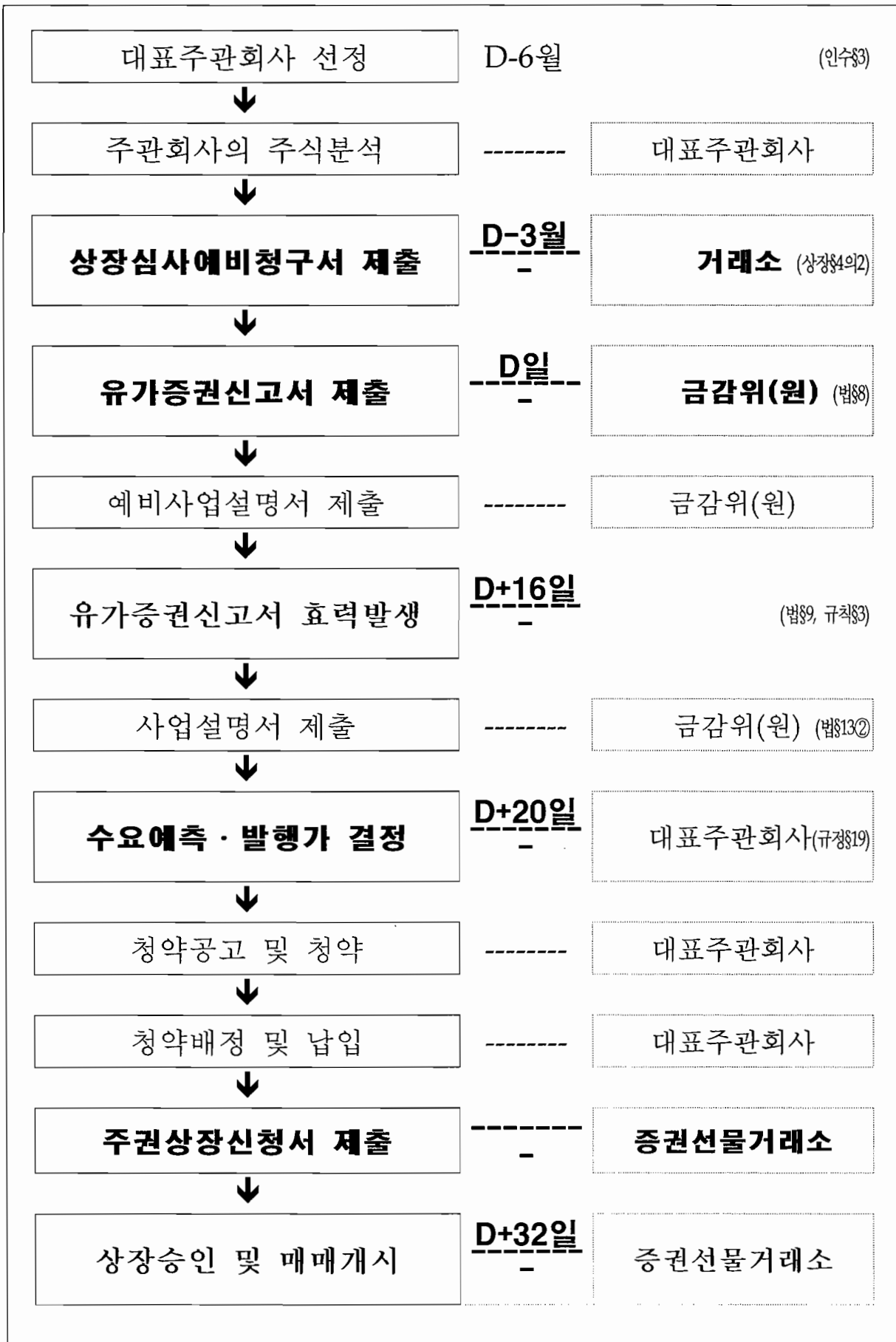
생명보험회사 주요 통계
(’06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보험료* 수 익 (점유율)	당 기* 순이익
대 한	444,055	410,627	33,428	79,649 (16.2)	1,526
알리안츠	91,140	84,001	7,139	17,758 (3.6)	184
삼 성	1,072,756	983,664	89,092	152,661 (31.0)	2,049
흥 국	61,250	57,308	3,943	13,551 (2.7)	792
교 보	421,186	403,879	17,307	77,391 (15.7)	2,485
녹 십 자	14,737	14,019	718	2,700 (0.5)	11
신 한	62,259	57,954	4,305	16,377 (3.3)	915
L I G	13,050	12,583	467	3,177 (0.6)	105
금 호	51,536	48,424	3,112	12,188 (2.5)	218
미래에셋	63,409	60,235	3,174	13,639 (2.8)	44
K B	7,004	6,685	319	3,053 (0.6)	35
동 부	23,159	22,087	1,072	7,172 (1.5)	100
동 양	66,154	61,913	4,241	13,874 (2.8)	597
메트라이프	47,013	44,123	2,890	13,392 (2.7)	629
P C A	11,082	10,384	699	5,377 (1.1)	△211
뉴 욱	3,121	2,896	225	964 (0.2)	△64
푸르덴셜	37,421	31,495	5,926	8,464 (1.7)	957
I N G	97,567	91,537	6,030	28,591 (5.8)	751
하 나	6,446	6,212	234	1,462 (0.3)	28
라 이 나	6,587	4,648	1,939	3,422 (0.7)	396
아메리카	46,951	42,732	4,219	15,224 (3.1)	737
SH&C	9,914	9,504	410	2,916 (0.6)	73
생보사계	2,657,798	2,466,912	190,886	493,002 (100.0)	12,357

* 보험료수익과 당기순이익은 06.4~12월 기준임

<참고 2> 거래소 상장 절차



<참고 3>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88조 (상장규정) ①삭제 <1997.1.13>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4.1.29>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5조 (규정의 승인) 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2004.1.29>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1.8, 1998.5.25, 1999.5.24>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보험과 사무관 제종옥 019-9767-5703)

최근 생보사 안건 회의 경과

“붙임 참조”

붙임 : 1.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상장규정개정규정” 승인안

금감위 증권감독과장 이명호(3771-5050)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정은윤(3786-8420)
금감위 보험감독과장 도규상(3771-5042)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박병명(3786-82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 승인안(요약)

I. 제안이유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해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4.25)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고자 하는 것임
- ※ 재정경제부와 협의완료(2007.4.18)

II.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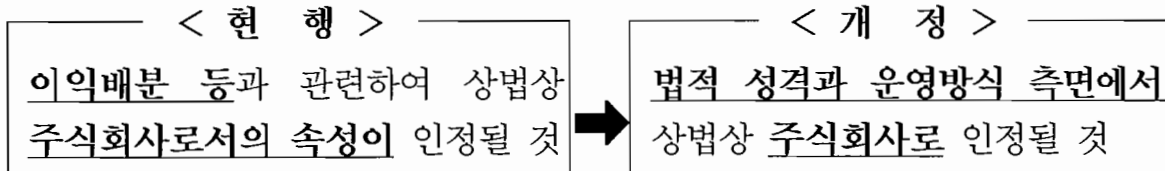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주권상장 신청법인은 자본금, 경상이익 등 일반적인
신규상장 요건(상장규정§32) 외에
 -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등 질적 심사 요건(상장규정§35)도 충족 필요
- ☐ 그러나,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상장심사시 해석 ·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여, 동 기준만으로 심사하는 데 한계

나. 개선 방안

-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명확하게 정비



다. 기대 효과

-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보편성이 제고되고, 향후 원활한 상장심사 기대

☞ 필요조치 사항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보험과 사무관 제종옥 019-9767-5703)

상장 가능한 생보사별 현황

1. 생보사별 상장요건 충족여부

☐ 2007사업년도말 기준으로 22개 생보사중 16개사가 상장요건을 충족

- 국내사는 KB·하나생명이, 외국사는 메트라이프·PCA·뉴욕생명이 상장요건을 미충족(당기순손실 등)
- AIG생명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으로 상장이 불가능

2. 상장을 추진중인 회사 동향

☐ 동양생명 : 상장예비심사 통과

- '08.1월 국내 주간사*를 선정하고, '08.3월 해외주간사** 선정

* 대우증권(대표주간사), 굿모닝신한증권(공동주간사)

**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 '08. 5.14.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 '08. 8.28. 상장예비심사 통과
- 상장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보험과 사무관 제종옥 019-9767-5703)

생보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주요 논점별 정리

1. 생보사의 성격

- ☐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실질적인 운용상 주식회사」이며 계약자는 채권자임

※ 과거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등 **경영리스크**를 부담한 사례는 없었으며, 과거 은행, 손보사 등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상호회사 논란이 없었음

2.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분석모형(Asset-Share방식)**에 의거 분석한 결과, 그간 '**충분한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결론

※ 세계적인 계리법인(틸링하스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자문위 모형의 가정·방법론 및 결론이 적정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 한다고 회신

※ 자문위의 **Asset-Share모형**의 가정, 방법론 및 결론에 대해 공개 (06.12월 보험학회 세미나)

3.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 ☐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며, 상장 전에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

※ 90년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자본전입이 불가능하고,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계약자 몫의 미할당 잉여금을 자본계정에 계상하나 자본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음

4.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배분

- ☐ 부동산 재평가이익 등은 미실현이익인 만큼 **상장前**에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회계기준** 등에 위배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수용곤란

※ 추후 부동산등 가격 하락시 계약자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
<붙임> 상장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참조> 상장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I. 생명보험회사 상장 추진 개요

1. 생명보험회사 상장 추진경과

□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함)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19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장이 유보되어 옴

○ 교보생명(1989년)과 삼성생명(1990년)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9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 악화로 재무부가 상장추진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1999년)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2003년)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방안 마련 유보

□ 2006. 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개별 기업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상장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을 추진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의견을 마련·전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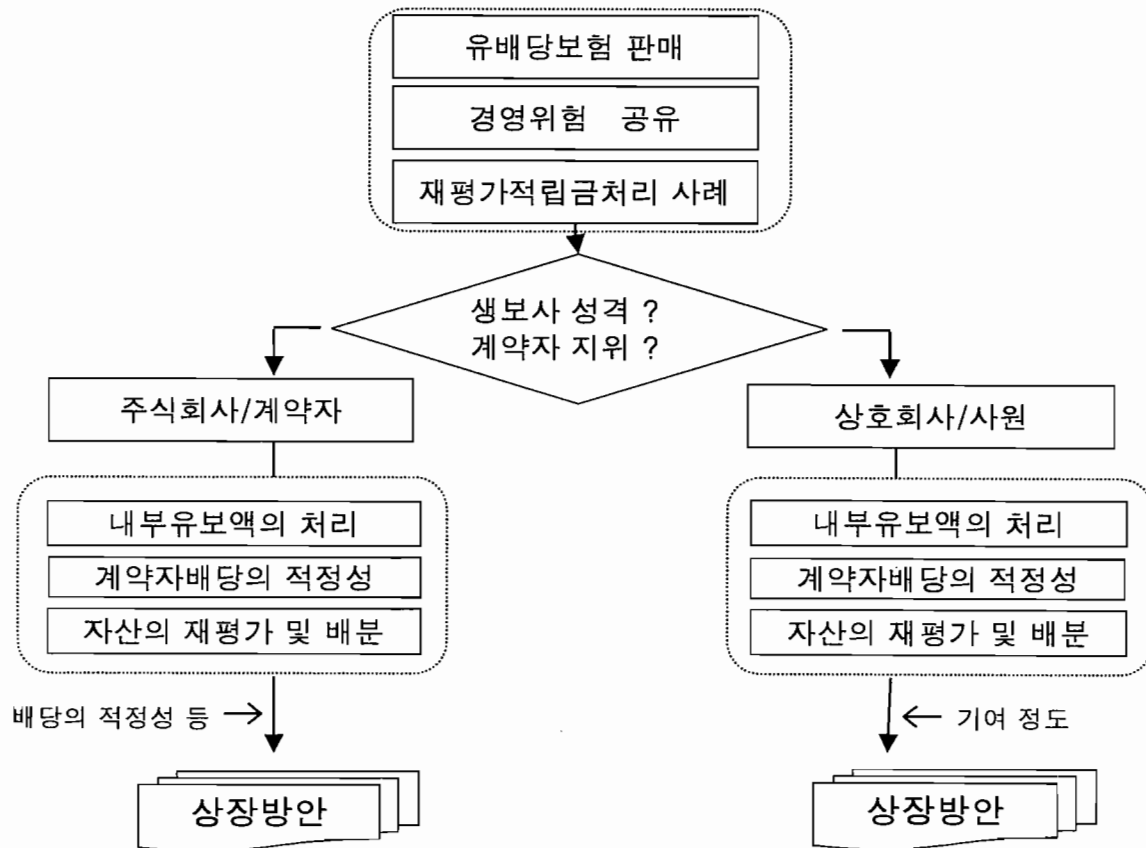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국내 생보사 성격과 계약자의 지위



II. 국내 생보사 발전 과정

※ 국내 생보사의 성격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생보사의 설립 및 주요 판매상품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

□ 1946년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1950년대 말까지 다수의 생보사가 설립되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기반이 허약

○ 영업부진과 일부 생보사의 파산으로 1960년부터 신설사 설립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1980년 중반부터 보험시장이 개방되어 1993년에는 생보사의 수가 33개로 증가하였으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2006년 현재에는 22개 생보사가 영업

□ 생보사 발전에는 정부의 장기저축 장려, 내자조달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

○ 1960대와 1970년대에는 저축기관 지정과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인정으로 단체보험이 주력상품

○ 이후 보험차익비과세 조치의 영향을 받아 노후복지연금 등이 급성장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지

□ 1992년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는 유배당상품의 신규 판매는 세제적격연금에 한정되고 있음

Ⅲ.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적 성격

-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볼 때,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는 주주 지위와 보험계약자 지위를 별개의 행위에 의해서 각각 취득하여야 함
 - 반면, 상호회사에서는 사원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계약자 지위를 상실하면 사원 지위도 상실
- 계약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달리 의결권이 없고, 청산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음
 -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는 약관에 의거 배당청구권을 보유하는데, 여기서 계약자배당은 초과보험료의 환원이라는 성격일 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는 무관(대법원 판례)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잔여재산 분배에서 일반채권자에 비해 후순위에 놓이며, 정관으로 보험금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원의 지위 보유로 인하여 경영위험을 부담

□ 또한,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로서, 상호회사의 사원총회(보험계약자로 구성)와 차이가 존재

◇ 설립, 출자, 사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최고 의사결정기관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 생보사의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임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주주가 출자한 자본(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없음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손실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3. 실질적 운영 방식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국내에서는 19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 판매만이 허용되었으며, 그 이후 단계적으로 무배당보험의 허용범위가 확대
 - 생명보험산업 초기에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높은 금리변동성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배당보험만을 허용
 - 무배당보험 도입후 초기에는 무배당보험의 비중이 낮았으나, 2000년 이후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예: 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이 무배당보험으로 개발되어 무배당보험의 비중이 증가
 - 최근에는 무배당보험과 유배당보험이 결합된 상품이 개발되고 있어, 유·무배당보험간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는 추세
- 외국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에 따라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
 -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도 주식회사의 배당상품 판매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최근까지 유배당상품만을 판매
 - 한편, 상호회사도 주식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일부상품에 대하여는 무배당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 생보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상호회사적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며,
 -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생보사도 별다른 제한없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표 10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 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00	0
		Canada Life Ins. Co.(N.Y)	93	7
		Hartford Life Ins. Co.	73	27
		Lincoln Life Ins. Co.	1	99
	상호회사	Metlife	89	11
일 본	주식회사	協榮生命	100	0
영 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urance	85	15
대 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 한편,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배분하는 것과 상호회사적 성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유배당보험은 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관계를 정한 보험약관에 의거 이익을 배분하는 것임

○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와 수익사채(income bond)도 회사이익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 사채발행회사가 동 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는 없음

◇ 외국의 경우 법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유·무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 유배당보험 이외에 이익참가부사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유배당보험 판매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님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과거에 일부 보험사의 경우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음

< 표 12 >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대한	0.3	0.4	0.4	0.4	0.4	0.5	0.5	0.5	0.4	0.2
삼성	0.0	1.1	1.2	1.3	0.1	0.1	0.0	△0.4	△0.6	△0.8
흥국	0.5	0.5	0.5	0.5	0.5	0.5	0.5	0.5	1.0	1.0
교보	0.5	0.6	0.6	0.6	0.6	0.6	0.6	0.7	5.0	5.4
구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대한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삼성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흥국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교보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대한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삼성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흥국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교보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자기자본 잠식상태를 실질적 파산상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당시의 원가주의 회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했는가는 미실현이익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그러나, 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된 생보사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판단

□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일반채권자보다 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후적으로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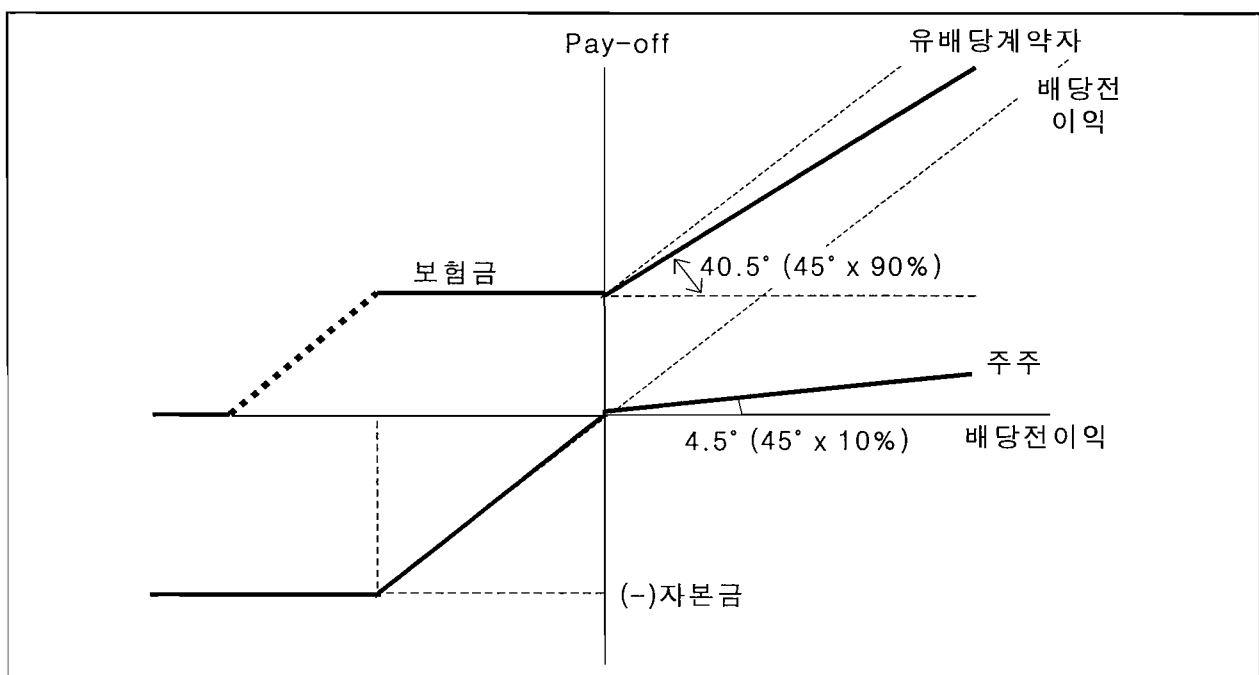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가 있지만,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사례를 볼 때,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1973년)

흥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1973년)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1973년)

- 또한, 생보사는 적자상태에서도 은행금리 수준의 배당을 실시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 1982~1995년, B은행 1983~1984년(자산재평가로 결손보전), C리스사 1999~2003년 자본잠식 상태

◇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채권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는 주주(상호회사의 사원)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확정배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잉여금으로 회사의 이월결손 보전에 사용
 - 재무부가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기준을 마련(1990년)하기 이전에는 재무부 지침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고, 이월결손이 있는 회사는 잔여잉여금을 이월결손 보전에 사용 가능
 - 1990년 이익배분기준을 마련된 이후 잔여잉여금을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당기 계약자지분을 이월결손 보전에 사용 가능(주주지분 우선 사용)
 - 2004년부터는 계약자지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립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보험손실만을 보전토록 하고 있음

< 표 13 > 계약자지분을 통한 이월결손 보전 현황(1988~2002년)
(단위 : 억원)

대한	알리안츠	신한	녹십자	LIG	금호	미래에셋	ING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2,799	103	414	207	74	433	797	272	407	118	217

주 1) 삼성, 흥국, 교보는 동기간중 이월결손 보전 없음

2) 녹십자는 舊대신생명, 미래에셋은 舊SK생명, LIG는 舊럭키생명임

- 유배당보험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배당을 지급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익의 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
 - 즉, 특정 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운영 특성

- 외국의 경우, 이러한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여 결손보전에 사용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한편, 국내는 유배당보험 결손시 주주이익으로 우선 보전 후 잔액을 계약자지분으로 보전토록 하는 반면,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손실을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므로 국내 제도가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음

◇ 유배당보험의 특성 및 외국의 유배당보험 운영사례를 볼 때,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한 점을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계약자보호제도는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자(채권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 (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타금융권에 비해 우리나라 보험권에 계약자보호제도가 먼저 도입
 - ※ 1962년 공탁금제도(19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19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19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 은행권은 19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금융산업에는 경영위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없음
- 외국의 경우, 계약자보호제도가 불비되어 있는 국가가 많고,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부분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주주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는 사례는 없음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교보(1989년)와 삼성(1990년)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재무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1990.8월)」을 제정[※]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토록 함

※ 보험업법(§97 ③)상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배당에 사용할 수 있으나,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재평가적립금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배분하기 위함

- 부동산의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19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칙임
 - 자본잠식으로 인해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
 - 계약자보호제도의 미비는 경영위험 공유 논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재평가차익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IV.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1990년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무부의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일부(교보 662억원, 삼성 878억원)를 사내에 유보

※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재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97③을 근거로 마련된 재무부 지침

< 표 17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 분	교 보		삼 성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1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재평가적립금 합계	2,197	100.0	2,927	100.0

-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재평가적립금중 xxx원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됨'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 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결손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기업회계상, 자본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 회사가 추후에 발생한 이익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는 반면, 내부유보액은 의무적으로 보충하여야 함을 볼 때 회계적으로도 내부유보액을 자본으로 간주하기 곤란

-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의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

※ 미국과 캐나다의 감독회계기준(SAP)에서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을 자본계정으로 처리한 후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 가능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나, 이를 이유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 후순위채무액, 특정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부채[※], 정상·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고,

※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외국의 경우에도 후순위채무액, 특정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미할당부채 등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

라. 내부유보액의 처리방안*

※ 현행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본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을 부채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1) 부채항목으로의 전환시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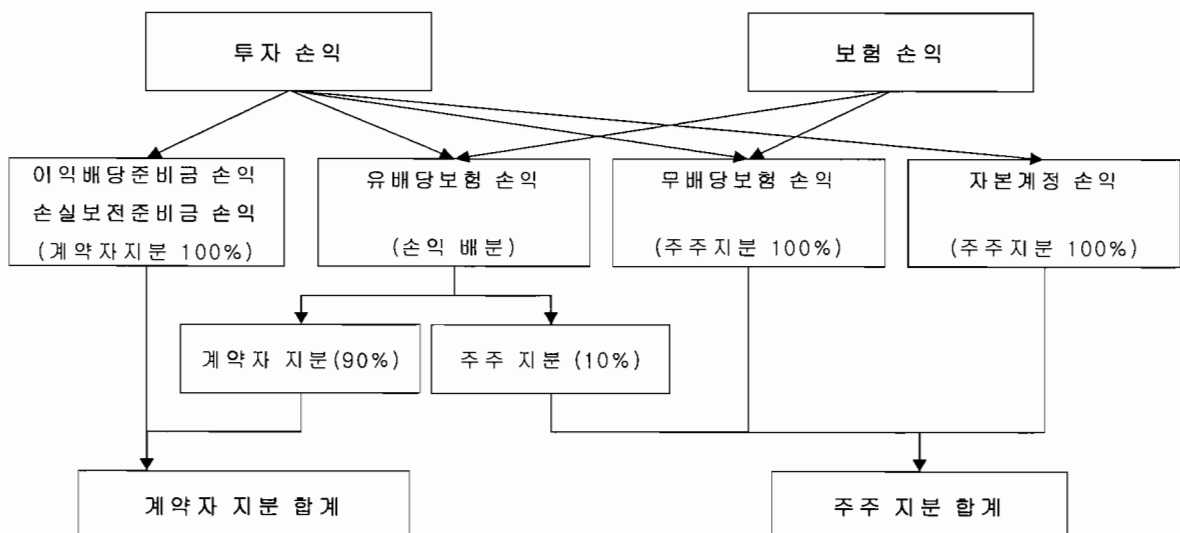
- 1998년부터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지를 주주몫으로 배분하더라도,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에 대한 투자수지는 계약자몫으로 직접 배분하지 않음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중 내부유보액

-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를 주주지분으로 배분
- 계약자몫의 미할당잉여금에 대한 투자수지는 유·무배당보험책임준비금 비중에 비례하여 배분*됨으로써 계약자몫의 투자수지 일부가 주주몫으로 이전되는 효과 발생

※ 2002년부터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를 계약자지분으로 배분

< 그림 3 > 계약자와 주주간 손익배분 구조(2006년 현재)



- 따라서, 투자수지를 배분함에 있어서 주주와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몹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 내부유보액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 이익이므로 투자수지 배분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 재평가적립금중 자본금으로 전입된 금액에도 투자수지를 배분하여 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경우, 자기자본에 비해 투자수지 배분이 늦게 이루어진 면이 있음
- 그러나, 그동안 투자수지 배분은 이원분석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바, 그동안의 투자수지 배분 부족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부채로 전환할 계정

- 내부유보액은 그 원천과 성격면에서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가장 유사
 -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으로 사용할 기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 표 18 >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별 특징 비교

구 분	배당재원 활용	지급기한 확정	투자수지 직접배분	결손보전 사용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	×	×
내부유보액	○	×	×	△ ^{주)}

주)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에 사용될 수 있으나, 추후 이익으로 다시 보충해야 함

- 그러나,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정은 자산재평가를 전제로 한 계정과목으로서, 향후 그 용도가 지속될 수 없음
- 내부유보액을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재에 비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한계가 있음
- 상기사항을 감안해 볼 때,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 이 경우, 그 용도와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적립후 5년 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안정적 배당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당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의 내용 및 유배당보험 운영특성,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 내부유보액 등에 대해 투자수지를 소급하여 배분토록 강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 내부유보액 등 미할당잉여금에 투자수지를 배분함에 있어 주주와 계약자간 형평성이 저해된 점을 보완할 필요
-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내부유보액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2. 1989년 이전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리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실시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익의 처리와 관련하여

* 동 지침은 1989.1.1일 이후 실시된 자산재평가분부터 적용(부칙)

- 결손보전후 잔여재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이 없이 전액 주주 몫으로 전입한 것은 계약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 제기
- 이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 이전의 법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자산재평가차익 처리

- 생보사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결손보전에 사용한 후 남은 잔여재평가차익의 대부분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본으로 전입

※ 1982년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금리역마진 발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산재평가 실시

< 표 19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이전 재평가차익 처리 내역

(단위 : 억원)

보험사	재평가 년도	재평가 차익	처분내역				처분 후	
			결손보전	자본전입	내부유보	기타	자본금	자기자본
대한	1982년	64	47	17	-	-	20	△39.8
제일	1982년	64	51	13	-	-	18	0.4
삼성	1962년	1.61	0.06	0.25	-	1.30(집수익)	0.5(유상0.15)	1.1
	1983년	132	51	20	61	-	30	91.3
교보	1969년	4.2	-	4.2	-	-	5(유상0.3)	5.0
	1981년	27	-	25	2	-	30	48.9

주) 홍국생명은 1982년에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전액 결손보전에 사용

□ 재평가차익중 일부를 계약자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제정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이 시행된 1989년부터는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재평가차익의 일부를 계약자몫으로 인정

□ 그러나, 당시는 정부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생보사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정부지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결손이 누적되었고,

○ 이에 따라 주주의 자본투입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해 온 점[※] 과도 균형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교보는 1981년, 삼성은 1988년에 들어서야 주주배당 실시

□ 따라서, 재평가적립금 처리의 적정성을 장기적인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평가적립금중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결손보전, 자본전입 또는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삼성 61억원, 교보 2억원이 재평가적립금 항목으로 자본잉여금계정에 남아있음

◇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 이전의 재평가적립금 처리방식은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 지금까지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자본전입, 계약자배당 재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

3.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 그간 국내 생보사는 법규에 따라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비해 과소 또는 과다 배당해 왔다는 의견이 있음
- ☐ 따라서,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토

나. 배당의 적정성 검토

(1)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이용한 계약자배당 수준 검토

-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을 정기예금 금리로 누적하여 2005년말 시점의 현재가치를 추정
- ☐ 추정결과,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회사의 계약자배당률은 90%수준
 - 일부 회사(대한, 신설사)의 경우에는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짐
-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현재의 이익배분기준 또는 선진국 수준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표 31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2005.12월)

(단위 : 억원)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 ↑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2)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 자산할당모형이란, 회사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된 AS(수입-비용)와 책임준비금(계약자에 대한 부채)을 비교하여,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

$$\text{※ AS} = \sum_{\text{회사설립시}}^{\text{현재시점}} [\text{수입(수입보험 + 투자수입 + 기타수입)} - \text{비용(보험금+계약자배당금+사업비+기타비용+주주 몫)}]$$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① 원가 AS분석 결과(Case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비교

- ☐ 분석에 사용된 가정

< 시나리오1 > : 기본 시나리오

- ①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
- ② 유배당보험에 사용된 실제사업비는 유배당 계약자가 부담
- ③ 과거 보험법규*에 따라 계약자 몫을 배분

※ 90년 이전 : 재무부장관 지침, 1990~99년 : 유배당이익의 70%, 2000년 이후 : 90%

< 시나리오 2 > : “시나리오 1”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②를 변경하여 초과사업비(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를 주주가 모두 부담

※ 생보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과소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음

< 시나리오 3 > : “시나리오 1”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③을 변경하여 현행수준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유배당보험 이익의 90%)을 개별 생보사 설립시부터 소급 적용

※ 이익배분기준이 현재에 비해 낮아 과소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음

□ 분석결과 :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유배당 보험 AS가 책임준비금에 비해 부족하므로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1개사는 시나리오 2에서 유배당보험 AS가 책임준비금에 비해 크게 나타남

< 표 32 > 시나리오1에서의 Net AS (원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표 33 > 시나리오2에서의 Net AS (원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표 34 > 시나리오3에서의 Net AS (원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② 시가 AS분석 결과(Case2) : 시가 AS와 시가책임준비금 비교

□ 분석에 사용된 가정

< 시나리오1 > : 원가 AS분석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되,

- ① 부동산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익 변동분을 반영하여 AS 산출
- ② 2005년 자산운용이익률 5.59%을 적용하여 시가책임준비금을 산출

< 시나리오 2 > : “시나리오 1”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업비 (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를 주주가 모두 부담

< 시나리오 3 > : “시나리오 1”을 기본으로 하되, 현행수준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유배당보험 이익의 90%)을 개별 생보사 설립시부터 소급 적용

□ 분석결과 : 원가AS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

-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유배당보험 시가 AS가 시가책임준비금에 비해 부족하므로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1개사는 시나리오 2에서 유배당보험 시가AS가 시가책임준비금에 비해 크게 나타남

< 표 32 > 시나리오1에서의 Net AS (시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표 33 > 시나리오2에서의 Net AS (시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표 34 > 시나리오3에서의 Net AS (시가 AS 기준)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참고> 사용된 자산할당방법에 대한 검증결과 주요내용(영국 계리법인 Tillinghast)

- 자산할당방법이 과거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며,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할당방법과 일치한다는 의견

(3) 옵션(Option)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보장이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유배당보험 가격의 적정성과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적정 배당	과소 배당
보장이율 차이(1%p) < 콜옵션가치	보장이율 차이(1%p) > 콜옵션가치

☐ 분석결과

- 유배당보험 계약자는 무배당보험을 구입한 경우와 비교할 때, 낮은 보험료로 판매됨
 - 유배당보험의 보장이율은 무배당보험에 비해 1%p 낮게 설정되었지만, 분석결과에 의하면 1.75%p 이상 낮았어야 했음
- 유배당보험이 무배당보험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과거 배당 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자에게 실제 지급된 이자율차배당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유배당보험의 보장이율은 무배당보험에 비해 1.75%p이상(2%~2.75%p) 낮았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됨

◇ 현재가치를 이용한 계약자배당률 수준에 대한 분석, 배당수준 분석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 그리고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 상품비교 등을 통하여 과거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 과거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해약식초과준비금의 처리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생보사의 해약식초과준비금 처리와 관련하여 1998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으며, 초과준비금의 적립과정에서 유배당계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이뤄진 면이 있음

나. 해약식 초과준비금의 처리

- 1987년, 재무부는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해약식준비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K율 방식으로 강화
 - 당시 추가적립 여력이 있었던 삼성, 교보, 흥국 등 3개사는 K율 100%에 해당하는 순보험료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
 - 1992년, 무배당보험이 허용되면서, 유배당보험계정에 무배당보험의 해약식초과준비금을 대신 적립토록 하여 K율 100%인 생보사의 시장경쟁력을 보완
- 1998년말에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사실상의 해약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 생보사는 해약식초과적립금을 특별이익으로 처리
 - 교보와 흥국은 해약식초과준비금으로 이자율차손실을 보전
 - 삼성은 5년에 걸쳐 이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분
- 유배당보험분의 해약식초과준비금으로 유배당보험의 당기결손을 보전한 것은 계약자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유배당보험의 이익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되므로, 특정 해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

- 다만, 무배당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해약식초과준비금을 유배당보험에 적립함으로써 계약자배당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하나,
- 무배당보험분 해약식초과준비금중 계약자몫을 과거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본 결과,
 - 1999년에 실제 계약자몫으로 배정한 금액이 무배당보험분 해약식초과준비금중 계약자몫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해약식초과준비금 적립으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음

< 표 40 > 유배당보험 계정에 계상된 해약식초과준비금 처리 관련
(단위 : 억원)

구 분	교 보			홍 국		
	유배당분	무배당분	계	유배당분	무배당분	계
(C)1999.3월 특별이익 처리액	5,550 ^{주1)}	2,685 ^{주1)}	8,235	1,015	229	1,244
(D)1999.3월	2,567		2,567	311		311
실제 유배당배당전 이익						
이차	-10,579		-10,579	-1,834		-1,834
사차, 비차, 기타	4,910		4,910	901		901
특별이익(C)	8,235		8,235	1,244		1,244
(E)계약자몫추정액 (=C*70%)	3,885	1,880	5,765	711	160	871
(F)1999.3월 실제 계약자 몫 배정액 (=D*85%)	2,182		2,182	265		265

주1) 자연소멸분 총액에 홍국의 소멸분 비중(유배당 93.6%, 무배당 6.4%)을 적용하여 추정

주2) 1999.3월에 실제 계약자에게 배분된 금액(교보 2,182억원, 홍국 265억원)이 무배당보험분의 해약식초과준비금중 계약자 몫(교보 1,880억원, 홍국 160억원)이 에 비해 더 큼

◇ 유배당보험분의 해약식초과준비금을 이용하여 나중에 발생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한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원칙과 당시의 재무건전성 확충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 무배당보험분의 해약식초과준비금 적립으로 계약자가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5.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가. 논의배경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19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및 평가차익의 배분가능성

- 19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 회계처리와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19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자원 ↓

□ 결국,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이익중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부동산의 경우, 1990년과는 달리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음에 따라 평가차익의 배분도 불가능

◇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이익중 계약자몫이 동 자산의 처분시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투자이익 배분기준의 개선이 필요

6. 구분계리방식의 개선

가. 논의배경

-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 상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장전 구분계리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 유·무배당보험간 자산구분계리가 상장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존재

나.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의 상장

- 현행 구분계리방식하에서도 생보사가 상장을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음
 - 유·무배당보험, 그리고 자본계정간에 손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손익배분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음
 - 현행 투자수지를 배분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국제적으로 생보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한 구분계리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국내 현실에서 볼 때, 당기 평균준비금에 의한 구분계리방식은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평가 및 처분손익의 계약자의 몫과 주주의 몫이 달라지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구분계리방식을 개선할 경우, 생보사의 순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상장전에 개선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원칙적으로 현행 구분계리방식하에서도 상장이 가능하나, 구분계리방식을 개선*할 경우에는 상장전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개선방안을 논의중

V. 결 론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 사원과는 권리·의무가 다르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채권자로서의 위험으로서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부담과는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세부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내부유보액은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약자이익배당 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재평가적립금처리침 제정 이전의 재평가적립금 처리의 적정성은 장기적인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형 등을 이용하여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약식초과준비금의 처리는 유배당보험 운영원칙을 감안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계약자이익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동산의 경우, 1990년과는 달리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음에 따라 평가이익의 배분도 불가능
 - 원칙적으로 현행 구분계리방식하에서도 상장이 가능하나, 구분계리방식을 개선할 경우에는 상장전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24. ‘08년 공매도 거래내역 (내국인, 외국인 거래 대금 상위 5위까지 거래자 명단 및 금액)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국인,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5위까지 거래자 명단 및 금액」 관련 자료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동 자료를 입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채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보호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중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당시 동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4-1. 공매도 제도 보완 경과

-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음
 - 또한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1.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실시

□ 1차 (7.15~7.25)

- 증권예탁결제원 및 7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 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
- 금년중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거래(55만건, 194조원)를 대차거래 내역(29만건) 및 위탁자 입출고 현황(135만건)과 일일이 대조하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 2차 (8.26~9.19)

- 45개 증권회사와 4개 주식 보관은행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검사
- 매도 내역(85만건),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520만건), 대차체결 내역(18만건) 등을 대조하여 투자자별로 위규 여부를 확인중

2.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9.24 발표)

①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 종래는 적격 기관투자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 면제 가능

- 사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
 - 규정 위반 증권사에 대하여 경고·제재하는 한편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처벌

②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하여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 담보비율을 현행 수준(90~110%)보다 상향 조정(예 : 140%)

③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시 일정한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도록 함
-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 대비 일정 비율(유가 5%, 코스닥 3%)을 초과한 종목에 대하여 10거래일간 공매도 정지

※ ELW, ETF, 주식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④ 공시 강화

-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공매도 현황은 지난 6.23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 10월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탁원·증권금융·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

3.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9.30 발표)

-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9.29)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증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
- 10.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하여 기존에 금지되던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뿐만 아니라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까지 금지

19. 조윤선 의원

1.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인력 개편 현황, 계획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별 인력 개편 현황 및 계획은 별첨과 같음

-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신탁(주), 정리금융공사(주) 등 4개 기관 관련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의원실로 직접 제출할 예정

<별첨> 산하기관별 인력 개편 현황 및 계획

금 용 감 독 원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의 조직구조를 금융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조직으로 다시 설계하여
 - 양질의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개편('08.6.16.)

나. 주요 내용

- ☐ (본부제 도입) 각 본부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자기완결적 업무수행을 도모
- ☐ (감독·검사부서 통합) 감독·검사부서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One-stop 감독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
- ☐ (금융지주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제 구축) 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감독·검사를 일원화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제고
- ☐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민원처리기능을 통합하여 One-stop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
- ☐ (새로운 감독수요에 대응)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통법의 규제를 받는 부문(증권, 신탁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일원화
- ☐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 부서를 28개 → 25개(△3개, 11%감소)로 축소하고, 향후 3년간 정원의 10%(159명)를 감축

한 국 기 업 데 이 터

① 조직효율화 추진

-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SLIM화 및 업무효율화 추진
 - 조직개편 : 6본부 17팀 8평가지사 => 3본부 13팀 8평가지사
 - 유사기능 통폐합 : 마케팅기획팀 + DB기획팀 => 상품/DB개발팀
 경영기획팀 + 사업전략팀 => 경영기획팀
 인력개발팀 + 경영지원팀 => 인사/총무팀
 평가정책팀 + 평가운영팀 => 평가정책팀

② 예산 절감 추진

-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대폭적인 인력감축 단행
 - 2006년말 403명의 인원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266명으로 감축
 - ☞ 인건비 절감효과 14억원

■ 인력 감축 현황

구 분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6월말
상임임원	등기	3	3	4
	미등기	2	2	1
정규직원	1급	3	5	4
	2급	9	8	9
	3급	39	44	47
	4급	41	41	37
	5급	40	38	43
	전문직	—	10	26
비정규직원	계약직	266	145	95
합계		403	296	266

증 권 예 탁 결 제 원

□ 증권예탁결제원 인력개편 현황 및 계획

① 인력 개편 현황(07년, 08년 비교)

구 분	07년말		08년 8월말	
정 원	부장	18	D	51
	차장	33		
	과장	75	M	209
	대리	161		
	주무,서기	207	A	230
	서무원	16	서무원	10
	합계	510	합계	500
현 원	부장	16	D	44
	차장	28		
	과장	89	M	157
	대리	163		
	주무,서기	96	A	213
	서무원	10	서무원	10
	별정직	55	별정직	27
	합계	457	합계	451

* '08.1월 정원축소(510명 → 500명)

** D : 부장 · 차장, M : 과장 · 대리, A : 대리 · 주무 · 서기 급 직원

② 인력개편 계획

- 정원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축소하되, 우선 금
년 4/4분기에 480명으로 축소 예정

주 택 금 용 공 사

I. 조직개편 내역

개편일자	조 직 규 모	개 편 사 유	개 편 내 용
2007년말	5본부 12부 8실 2지원센터 14영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본부제로 변경 ○ 본부, 지원센터 영업점으로 조직구성 변경 ○ 부서 신설 및 통폐합 ○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팀제 실시 및 부서장이 임명하는 파트장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화·기금운영·경영기획·채권관리·연구지원 본부 ○ 고객지원센터, IT지원센터 ○ 성과평가실, 신탁채권실, 기금채권실, 업무지원실, IT지원센터 신설 ○ 비서실을 혁신기획실로 통합
2008.8월	5본부 12부 8실 2지원센터 16영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관리센터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익산채권관리센터 신설

II. 계정별 · 직급별 정원변동 내역

구 분		이사 대우	1급	2급	3급	4급	5급	별정직	합 계
'07년말	공 사	1	7	18	28	31	42	8	135
	주신보	1	3	12	38	68	96	-	218
	연금보증	-	1	2	6	7	13	-	29
	학신보	1	2	2	6	13	15	-	39
	계	3	13	34	78	119	166	8	421
'08.8월	공 사	1	7	18	30	34	49	11	150
	주신보	1	4	13	40	70	98	-	226
	연금보증	-	1	2	7	8	13	-	31
	학신보	1	2	2	7	13	16	-	41
	계	3	14	35	84	125	176	11	448

기업은행 및 산하기관

□ 기업은행 산하기관 인력개편 현황, 계획

	2007년도(A)		2008.8월 말(B)		대비증감(B-A)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임원	9	8	9	8	-	
일반직원	6,791	6,565	7,383	6,882	592	317
별정직원	92	-	-	-	-90	
합계	6,892	6,573	7,392	6,890	500	317

□ 기업은행 산하기관 인력개편 현황, 계획

구분		2007년		2008.8월 말		전년대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주)기은 캐피탈	임원	6	6	6	6	-	-
	직원	69	67	95	73	26	6
	계	75	73	101	79	26	6
(주)IBK 시스템	임원	3	3	3	3	-	-
	직원	293	292	337	312	44	20
	계	296	295	340	315	44	20
기은신용 정보(주)	임원	2	2	2	1	-	△1
	직원	43	38	48	44	5	6
	계	45	40	50	45	5	5

산업은행 및 산하기관

□ 산업은행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8	비고
임원	11	9	
S1-1급	80	78	
S1-2급	189	187	
S2-1급	510	544	
S2-2급	778	749	
S3급 이하	746	772	
비정규직 (계약직원)	93	112	

○ 인력운용계획

- 인력 수급(2007년)

- 비정규직 전환 : 유기계약직 131명 정규직으로 전환
- 인력충원 : S3급 100명, 계약직 57명 신규채용

- 인력 수급(2008년 8월 현재)

- 비정규직 전환 : 유기계약직 11명 정규직으로 전환
- 인력충원 : S3급 76명, 계약직 35명 신규채용

□ 산은캐피탈

○ 인력 현황

구 분		FY2007	FY2008	증 감	비 고
총 원		182	184	+2	
직 급 별 인 원	임원	5	5	.	
	G-4	12	13	+1	
	G-3	31	35	+4	
	G-2	46	41	-5	
	G-1	47	51	+4	
	전임직(A)	32	35	+3	
	전임직(B)	9	4	-5	
	계	182	184	+2	

※ 전임직(A) : 무기계약직, 전임직(B) : 유기계약직

○ 인력운용계획

- 인력 수급(FY2007)

- 비정규직 전환: 유기계약직 직원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인력충원 : G1등급 16명 신규 채용(대졸 10명, 고졸 6명)

- 인력 수급(FY2008)

- 비정규직 전환: 유기계약직 직원4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인력충원 : G1등급 5명 내외 신규채용 추진(대졸 5명 내외)

- 활용계획

- 회사 발전전략과 연계된 인력 운용
-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강화

□ 산은자산운용

○ 인력 현황

구 분		FY2007	FY2008	입사	퇴사	증감	비고
총 원		44	48	14	10	+4	
직 급 별 인 원	대표이사	1	1	·	·	·	
	비상임이사	2	2	·	·	·	
	상근감사	1	1	·	·	·	
	부장	13	12	1	2	-1	
	차장	7	10	3	·	+3	
	과장	5	5	2	2	·	
	대리	5	8	3	·	+3	
	사원	10	9	5	6	-1	
	계	44	48	14	10	+4	

○ 인력운용계획

- 핵심사업 부문 중심 전문인력 확충
 - 분야별 우수인력 외부영입 및 양성
 - 핵심 전문인력은 시장 지명도를 갖춘 인력의 우선 영입
- 경영 목표 및 성장도에 따른 탄력적 조직체계 운영
 - 수탁규모 및 상품구조에 따른 본부별 기능 분화 및 통합

코 스 콤

□ 코스콤 인력개편 현황 및 계획

(단위 : 명, '08.9월말 기준)

구분	정원	현원(연말)	채용계획	채용실적	계획대비 실적
2007년	545	489 ^{주1)}	10	8	80%
2008년	545	500 ^{주2)}	25	15 ^{주3)}	60%

주1) 신규 채용한 수습직원을 반영한 수치임(정식 발령은 '08.1월)

주2) 2년 이상 경과 기간제 직원(15명)의 정규직 전환을 반영

주3) 2008년 25명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경영효율화계획을 고려하여 15명으로

2. 금융위 출신 금융회사 이직 현황

성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금융기관	직위
유00	부위원장	'03. 3.21	산업은행	총재
박00	기획과장	'04. 5.28	코스닥증권시장	전무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부위원장	'07.12.21	중소기업은행	행장
이00	FIU원장	'08. 4. 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3. 금산분리(은행주식 보유규제 개선) 관련 액션플랜

- ☐ 10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금년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4. ‘신성장 금융산업 섬기는 금융행정’ 보고서 사본

☐ 동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람.

<첨부>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보고서 사본
: 별도제출

5.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실태, 민원처리 사례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설명하고 안내
-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 08.7월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 >

(’08.8.31 현재 기준)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 해 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05	24	326	16	125	796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08.8월말까지 총1701건의 일반 민원을 접수·처리

6. 최근 3개월 시장점검회의 회의록 사본 일체

- ☐ 금융위·금감원 일일상황점검회의는 일주일에 2~3번 오전 8:30분에 20~30분간 개최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 금융위·금감원 간부 20여명이 참석하여 Tele-Conference 방식으로 진행
- ☐ 전날 국내외 시장동향과 지표 그리고 언론동향 등을 확인하고 양측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 격의없이 전반적인 정책대응 방향을 협의하는 자리로서 회의 성격상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음

7. 이슬람금융 작업반 현황 및 활동 계획

- 금융회사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가하는 이슬람금융 작업반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 중
 -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 또한, '09.1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국제이슬람금융감독 기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므로
 - 이를 통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식 및 논의가 진전 되리라 생각함

8. 금융위 홈페이지 ‘신용회복제도 안내’ 오류 관련 해명, 후속 대책

- 한겨레신문 보도 당시(4.3일)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舊 금감위·재경부 금융정책국공자위 등이 금융위로 통합되어 조직을 정비하던 시기로서

※ 금융위 출범 : 2월 29일, 청사 이전 : 3월 15~16일

- 세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 통상 홈페이지의 구축·개편 작업은 2~3개월에 걸쳐 전문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바,

- 성격이 다른 세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시에 통합하기에는 물리적·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음

- 한겨레신문의 지적 내용은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일부 코너의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 금융위는 해당 코너에 대해 담당 부서 및 산하기관(금감원 등)의 확인을 거쳐 즉시 수정·보완하였으며,

- 이후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민원 코너를 통합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홈페이지 개편 후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국가기관 웹사이트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기록(연합뉴스 5. 26)

9. 최근 3년간 자산취득 현황

☐ 최근 3년간 자산취득현황 : 별도 제출

10. AML체계 도입 준비상황, 모니터링 자료, 인력충원계획

1. AML 체계 도입 준비상황

◇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ii)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iii) 감독·검사 시스템 개선, iv)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 중

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①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 방지체제 구축

- 테러자금의 혐의거래보고(STR) 보고체계 확립,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고시 등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 구축을 위하여 준비 중이며 '08.12 시행 예정
- 이를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

② 금융회사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08.12월 시행 추진

- 고객·거래 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효율과 실효성을 제고
- 이를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보고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금융회사 자율지침)의 개정을 추진중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 시행 준비상황 (붙임)

③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 추진

- 금년 12월부터 카지노사업자(17개)도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 이에 대한 세부규정과 보고체계를 마련
 - 이를 위해 실무작업반(협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 중

②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추진

-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선진국 협의체인 FATF 정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금년 11.3~14일 기간중 우리나라 제도를 심사(‘상호평가’)받을 예정
 - 이와 관련하여 FATF에 제출할 「권고사항 이행실태 보고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성 중
 -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관련 49개 권고사항 및 229개 세부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실태를 작성·보고
 - 향후 일정 : ‘08.11월 현지실사(11.3~14) → ‘09.6월 총회보고

③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검사 시스템 개선

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선

- 금융회사 등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시행 추진 중
 - 리스크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예: 강화된 고객확인 협의거래 유형 細분류), 내부 통제체제 구축, 교육훈련 실시, 구축 시스템에 대한 감사활동 등 내용을 구체·명확화

② 검사 매뉴얼·체크리스트 기준 마련 등 검사업무 개선

- 검사수탁기관의 검사 매뉴얼·체크리스트 운용을 개선
 - 검사 개시에서 종료까지 단계별 필수사항을 명시표준화, 체크리스트의 계량화중요도 분류 등 통해 운용을 객관화
 - 건별 미보고 적발위주의 양적 검사에서 시스템 구축 보고 체계 확립여부 등 질적 검사로 전환 추진

4]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테러자금 조달금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카지노 사업자의 제도이행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전국적인 순회교육, 금융전문 연수원 출강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내용을 지속 홍보
 - 실제 적발된 자금세탁 사례, 혐의거래보고서 작성기법 등에 대해 중점 교육 실시

② 대국민 홍보 강화

- 「자금세탁방지의 날(매년 11.28)」행사의 지속적 개최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 지속 추진

2. 모니터링 자료

① 심사분석 역량의 강화

- 보고건수 증가, 국제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심사분석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전문교육을 통한 분석지식 함양, 심사분석사례집 발간
심사분석 경험공유 등을 통하여 분석 역량을 강화

* 금융 관련 외부전문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초빙강연 등 추진

② 심사분석 효율성의 제고

- 「FIU정보시스템」의 첨단분석 틀*을 활용하여 접수·배정 단계에서부터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분석을 강화

* 법집행기관에서 既조치된 검증사례를 분석·유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STR의 혐의성 정도를 분석·제시하는 기법

- 아울러, 행정정보 입수기간*을 단축하고, 개별 분석건의 자금흐름·거래관계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빠른 시간안에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

* 현재 각 시·구청에서 문서로 받고 있는 가족관계부를 대법원에서 전산으로 직접 받는 방안 추진 등

③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상호협력을 강화

- 관련정보의 신속제공으로 혐의거래정보의 활용도 제고

■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강화

- 「법집행기관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

* 법집행기관의 협의거래정보 자체 D/B 구축도 유도

3. 금융정보분석원 인력충원 계획

- 협의거래 보고건수의 증가, 보고대상 기관의 확대(예 : 카지노 사업자) 등 정보 분석 및 검사감독 업무가 증가하는데 반해

- FIU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현 정부 인력여건상 FIU자체의 인력충원 계획은 없으며

- 금융회사의 AML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금융감독 기관의 역량 강화와
- FIU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FIU 업무효율성 제고,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응 중

< 붙임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 준비현황

가. 은행

□ 시중은행

- 은행간 시차를 두고 EDD(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
 - ① 씨티, 외환 : 07년에 모니터링시스템은 구축하였으며 KYC(고객신원 확인 및 검증)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일부 수정 중
 - ②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수협 : 현재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관련 업무 재설계는 완료단계이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은 착수
-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준비가 우수함

□ 특수·지방 은행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무지침에 대한 설명회 완(8.5)
- 대구, 부산 등 지방은행: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관련 업무 재설계를 추진 중

□ 외국계 은행

- SC제일은행, HSBC 등은 업무지침을 토대로 본점의 국제기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나. 증권사

- 증권업 협회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공통 업무지침」을 완료했으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
- 대형증권사(대신, 우리, 굿모닝 등 7개사)를 중심으로 위험기반 AML(Anti Money Laundering)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
-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굿모닝 신한 대신, 우리투자, 등 12개 사는 담당자의 이해수준이 높고 해당기관의 준비상황이 우수
- 소형증권사의 경우 증권업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이행 방법을 마련 중

다. 보험사

- 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공통 업무지침」을 완료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이행방안을 마련 중
- 대형 보험사(삼성생명 등)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위험기반 AML 시스템 구축을 추진
- 그외 보험사는 별도 외부사업 추진없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일부 변경해서 준비

라. 제2금융권

- 금융기관별 이행능력 부족 개별추진에 따른 비용과다 등을 감안,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가 공동추진
- 여신협회, 신탁업협회 등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11.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보고서 일체

☐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관련 보고서

○ 첨부 참조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 3 10



I.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III.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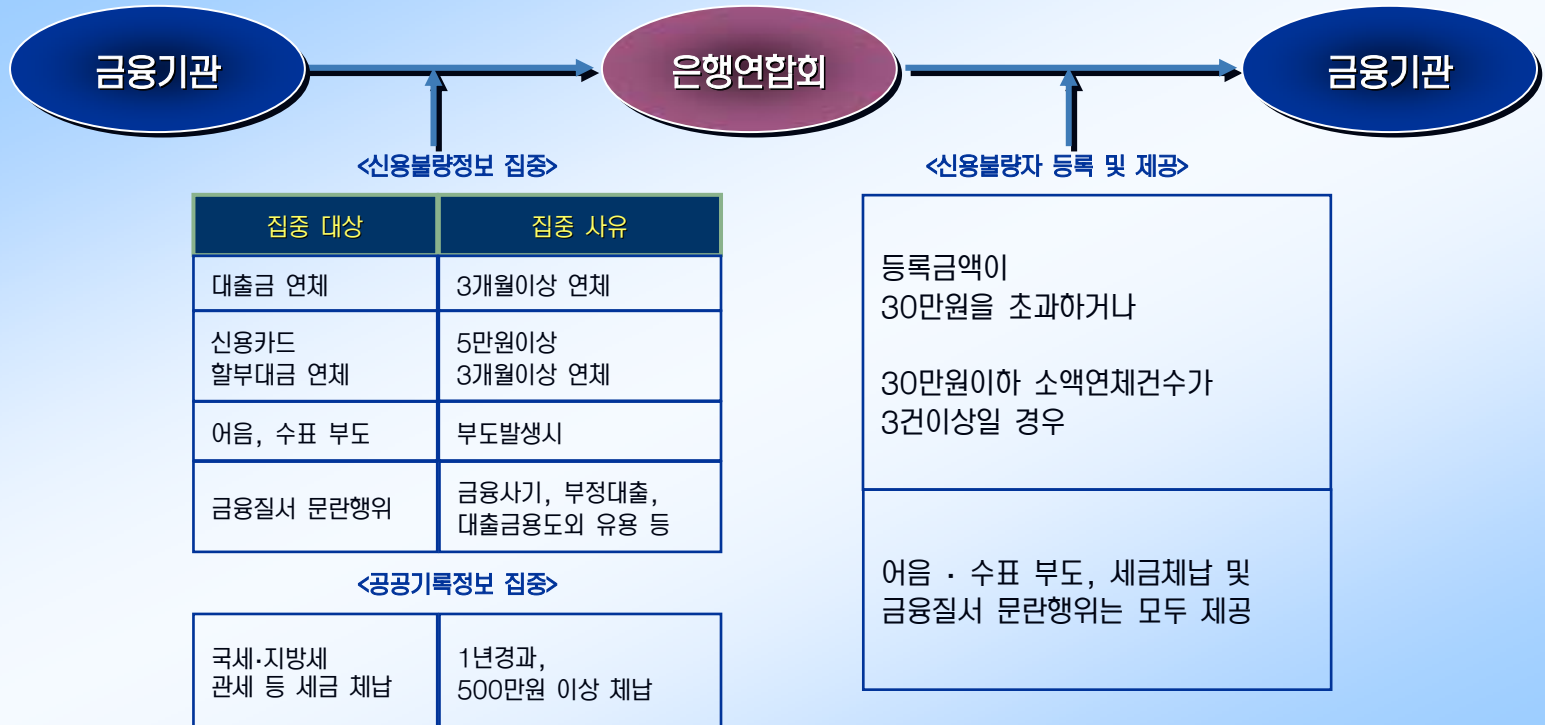




I.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

➤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



■ 연체금 등을 변제할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

■ 다만, 신용불량자에서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도

등록 금액·기간 등에 따라 최장 2년(단,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을 보존·관리

* 신용불량기록 해제후 기록보존중인 자는 신용불량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보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등록후 90일 이내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 대출금 연체(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연체(200만원 이하)를 해소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 신용불량등록후 90일 ~ 1년이내에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등록후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 부도거래처 	2년
· 금융사기, 서류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요청으로 해제한 경우	5년
· 연체금 변제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

■ 00년 이전 : 각 금융업권별 규약에서 각각 신용불량등록 및 제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

- 84~91년 : 황색, 적색, 신용카드 불량거래자
- 92~96년 :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
- 97~00년 :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주의 거래처	금융거래 신중	대출금 연체	1,500만원미만, 6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50만원 : 6개월이상 연체 50~500만원 : 3개월 이상 연체
황색 거래처	금융거래 신중 + 기존 여신관리 강화	대출금 연체	1,5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적색 거래처	금융거래 정지	대출금 연체	1,500만원이상, 6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00만원이상 6개월이상 연체

■ 01.1~02.6월 : 각 금융업권별 규약을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통합

주의·황색·적색 등의 분류를 신용불량자 개념으로 단일화(각 금융업권별 기준은 상이)

1개 범주(신용불량자)로 통합, 금융거래제재 수준은 금융기관별 자율 결정	대출금 연체	1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신용카드 연체	5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 02.7월이후 현재 : 금융업권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대출금, 카드 등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30만원 초과 연체시(3개월, 30만원 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 등록

■ 외국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규정·관리하고 있지 않음

-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 연체정보를 일반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며,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의 하나로 활용
-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

<신용불량자 제도 관련 외국의 운용현황>

	신용불량자 제도 및 법적 근거	연체 정보 등의 관리
한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등록·관리, 제공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도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미국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3대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일본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업권별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집중·제공하고, 업권간에도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영국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종합집중기관은 없으며, 민간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 수집·제공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 1.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 2.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

1.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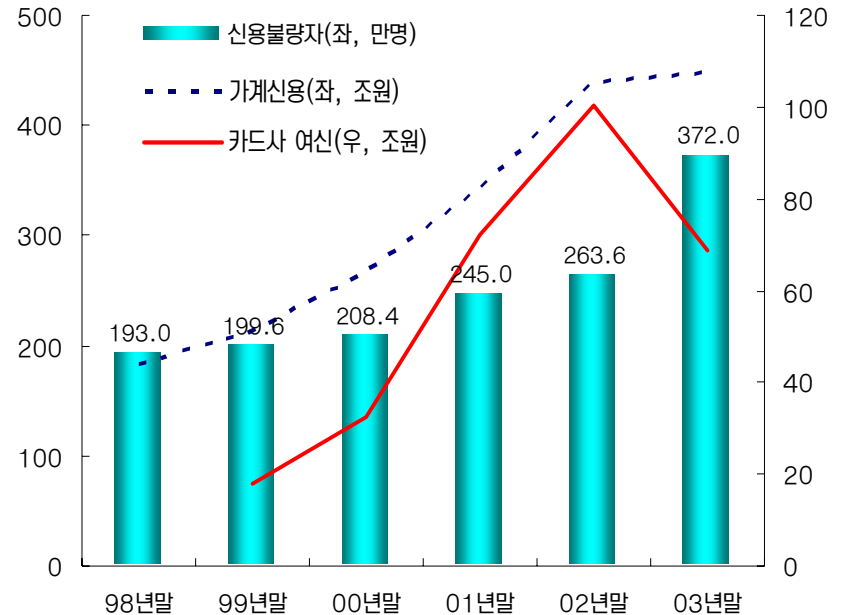
■ 경제위기직후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97년말 143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상승한 후, 00년까지 동 수준 유지

* 99~00년중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규모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경제구조가 최소한 220~2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KDI)

■ 01년중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가한 후, 02년말 260만명 수준으로 확대

■ 03년중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108만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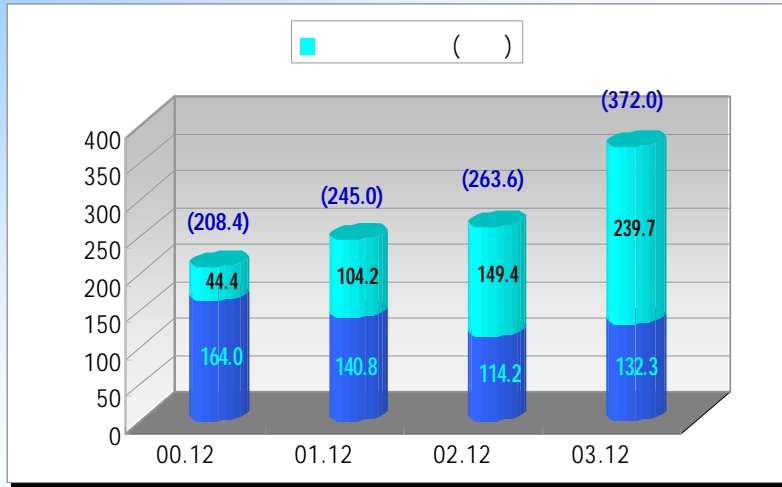
※ 108만명중 90만명이 신용카드 연체(3개월이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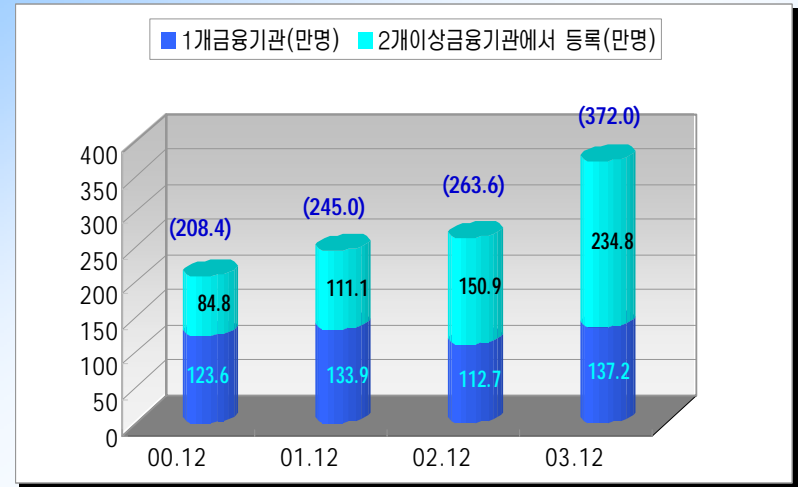
(단위 : 만명,조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신용불량자 (증감,만명)	193.0 (50.1)	199.6 (6.6)	208.4 (8.8)	245.0 (36.6)	263.6 (18.6)	372.0 (108.4)
가계신용 (증감,조원)	183.6 (-27.9)	214.0 (30.4)	266.9 (52.9)	341.7 (74.8)	439.1 (97.4)	447.6 (8.5)
카드사 여신 (증감,조원)	- (-)	18.1 (-)	32.3 (14.2)	72.0 (39.7)	100.3 (28.3)	68.6 (-31.7)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



■ 다중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증가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

(단위 : 만명)

	00.12말	01.12말	02.12말	03.12말	(구성비,%)
10대	0.27	1.2	0.65	0.45	(0.1)
20대	26.7	40.8	48.8	73.1	(19.7)
30대	65.5	70.4	75.9	113.3	(30.4)
40대 이상	115.9	132.6	138.2	185.2	(49.8)
계	208.4	245.0	263.6	372.0	(100)

■ 1,000만원미만 신용불량자가 47%를 차지

(단위 : 만명)

	00.12말	01.12말	02.12말	03.12말	(구성비,%)
500만원미만	91.5	106.3	90.8	119.3	(32.1)
500~1,000만원	29.9	36.3	43.5	57.1	(15.3)
1,000~2,000만원	29.6	36.0	44.4	64.0	(17.2)
2,000만원이상	57.4	66.4	84.9	131.6	(35.4)
계	208.4	245.0	263.6	372.0	(100)

신용불량자에 대한 심층 전화 인터뷰

- ▶ 조사대상 : 총 3,919명(국민은행,삼성카드,KAMCO 각 1,000명,신용회복위원회 919명)
- ▶ 표본추출방법 및 오차범위 : 성/연령별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법, $\pm 1.57\%$ (95%신뢰수준)
- ▶ 조사기간 : 04.1.29 ~ 2.26
- ▶ 조사기관 : Synovate(영국계 경제조사 전문기관)
- ▶ 조사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 정책반영에 대한 기대심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있음
 - 부채는 과대하게, 소득은 과소하게 응답했을 가능성
 -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
 -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에 한계

금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실태 설문조사

- ▶ 조사대상 : 총 1,510명(금융기관직원 970명, 채권추심회사직원 500명, 신용회복위원회 40명)
 - *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을 통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
- ▶ 조사기간 : 04.2.16 ~ 2.26
-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신용불량자의 고통·불이익 실태조사

- ▶ 조사대상 : 금감원 민원 제기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자 등을 통해 파악
- ▶ 조사기간 : 04.2.16 ~ 2.26
-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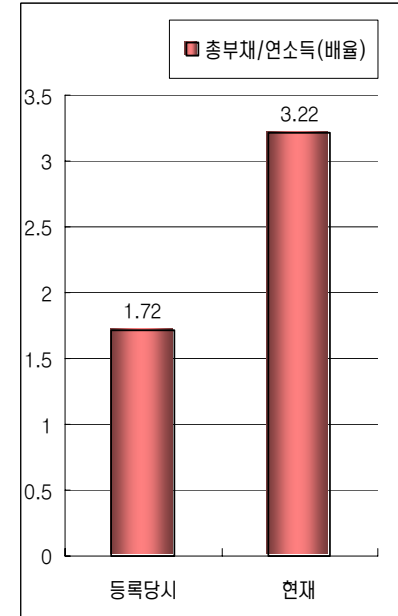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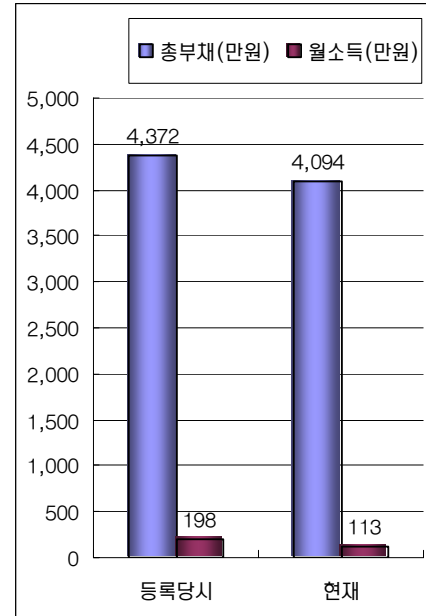
신용불량자의 부채·소득·직업 변화

▶ 1인당 부채규모는 등록 당시 4,372만원에서 4,094만원(등록 당시의 94%)으로 소폭 감소

▶ 월평균 소득은 등록 당시 198만원에서 113만원(등록 당시의 57%)으로 급감

* 연소득 대비 총부채는 등록당시 1.72배에서 3.22배로 크게 증가

▶ 직업별로는 자영업, 정규직이 감소하고, 임시직 및 무직자가 증가하는 등 직업 안정성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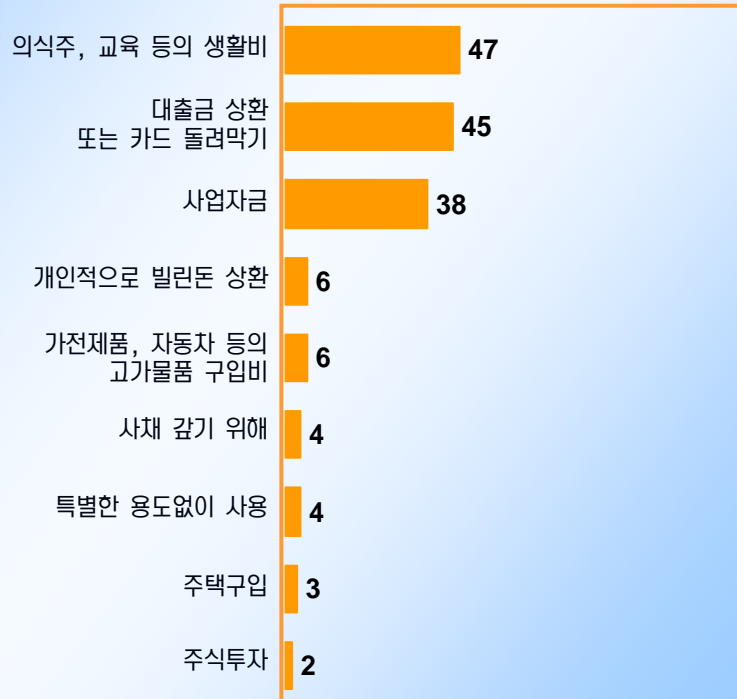
	등록시점(a)	현재(b)	비고(b/a)
총부채(평균)	4,372만원	4,094만원	94% 수준
월소득(평균)	198만원	113만원	57% 수준
총부채/연소득	1.72배	3.22배	-
직업	자영업 43% 정규직 31% 임시직 13% 주부 6% 학생 3% 무직 4%	자영업 21% 정규직 29% 임시직 27% 주부 7% 학생 1% 무직 15%	- 자영업, 정규직 감소 - 임시직, 무직 증가

■ 연체대출금 사용처

- ▶ 생활비(47%), 대출금 상환 또는
카드 돌려막기(45%), 사업자금(38%) 등에 사용

[복수응답, 단위:%]

전체 (N=3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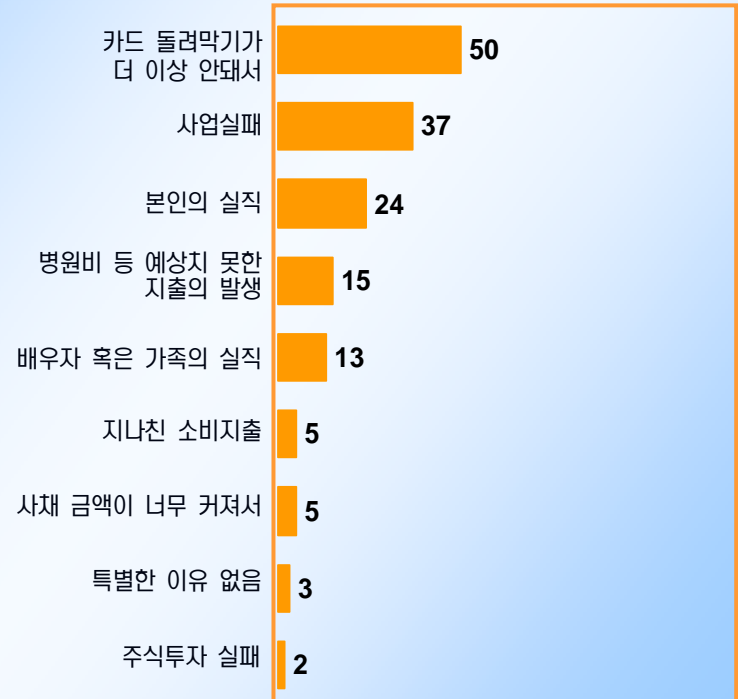


■ 신용불량자가 된 주 원인

- ▶ 카드 돌려막기 불가능(50%), 사업실패(37%),
실직(24%) 등이 주 원인이라고 응답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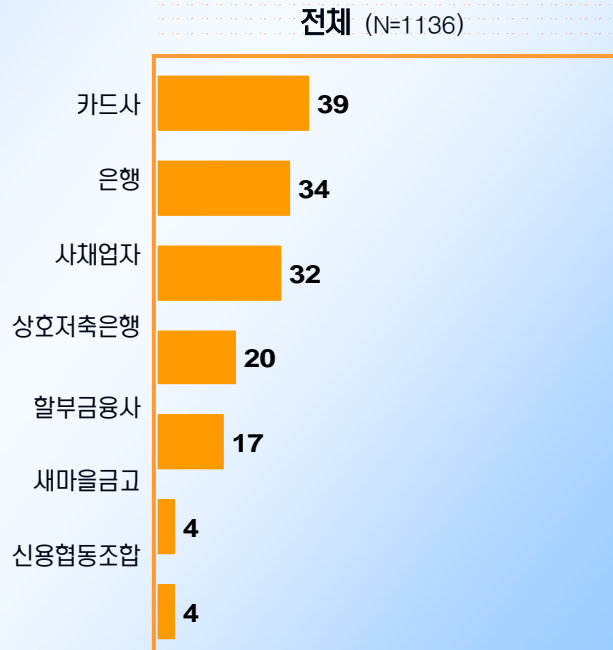
전체 (N=3919)



■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 이용 경험

- ▶ 전체 신용불량자의 29%가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회사 대출 또는 사채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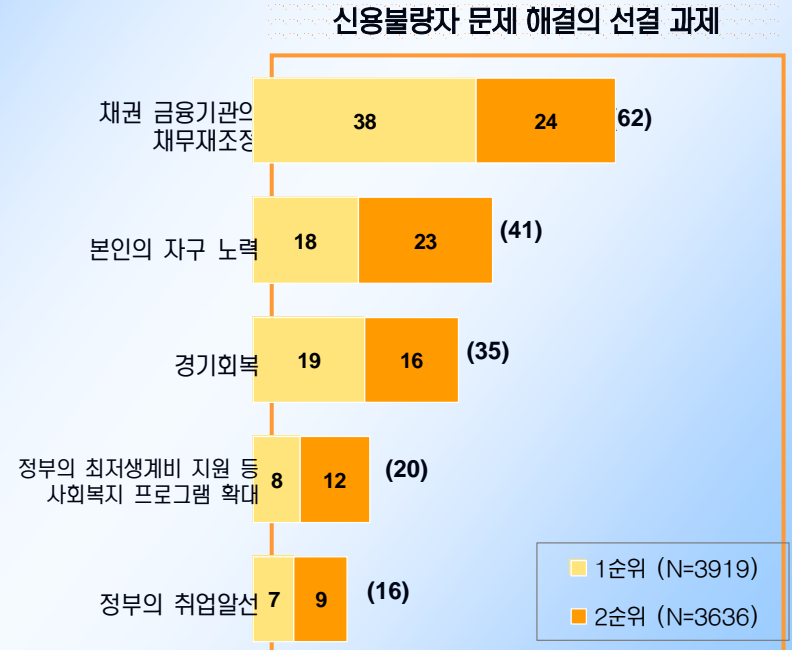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

-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본인 자구노력, 경기회복, 사회복지프로그램 확대, 취업알선 등의 순으로 응답

[단위:%]



■ 상환능력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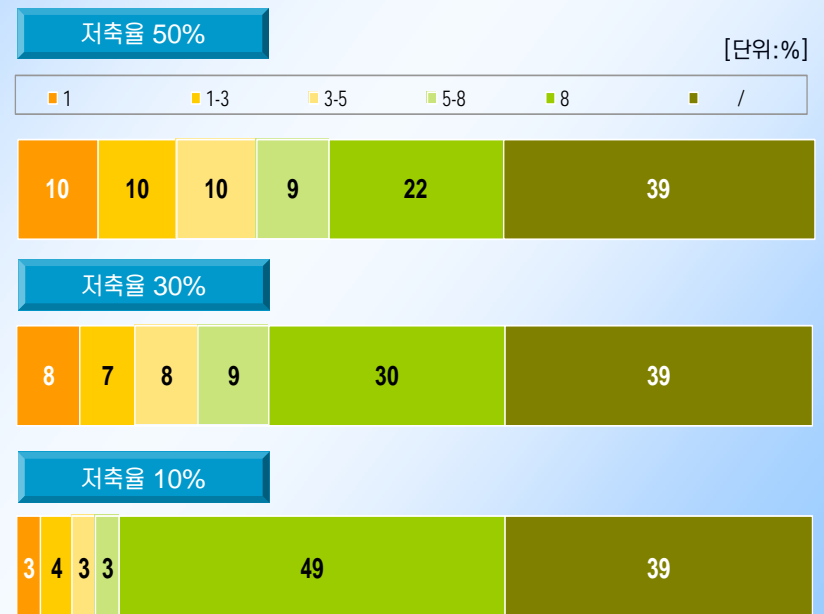
- ▶ 신용불량자중 19%만이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평가
- ▶ 63%는 채무재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받아야만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
- ▶ 12%는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하다고 응답
- ▶ 4%는 무응답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

■ 예상 상환 완료시점에 대한 주관적 판단

- ▶ 채무상환에 3년이상 소요 : 54%
- ▶ 1년이내 상환가능 : 18%
- ▶ 1년~3년 : 19%
- ▶ 무응답 또는 잘 모름 : 9%

■ 객관적 상환기간 추정 결과

- ▶ 총부채와 현재소득규모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신용불량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예상 상환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 소득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 1년이내(8%), 1~3년(7%), 3~5년(8%), 5~8년(9%), 8년이상(30%), 무응답(39%)으로 추정



■ 정규직 이외 신용불량자의 생활비 조달

[단위:%]

전체 (N=1510)



■ 신용불량자의 주거 형태

[단위:%]

전체 (N=1510)



■ 채무상환 가능성

[단위:%]

전체 (N=1510)



■ 채무재조정 요구 유형

[단위:%]

전체 (N=1510)



■ 채권회수(추심) 방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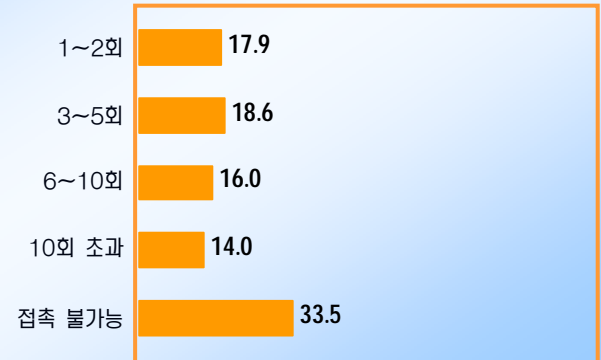
전체 (N=1510)



■ 신용불량자에 대한 접촉 가능성

[단위:%]

전체 (N=1510)



■ 신용불량자 도덕적 해이 형태

[단위:%]

전체 (N=1510)



■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에 대한 입장

[단위:%]

전체 (N=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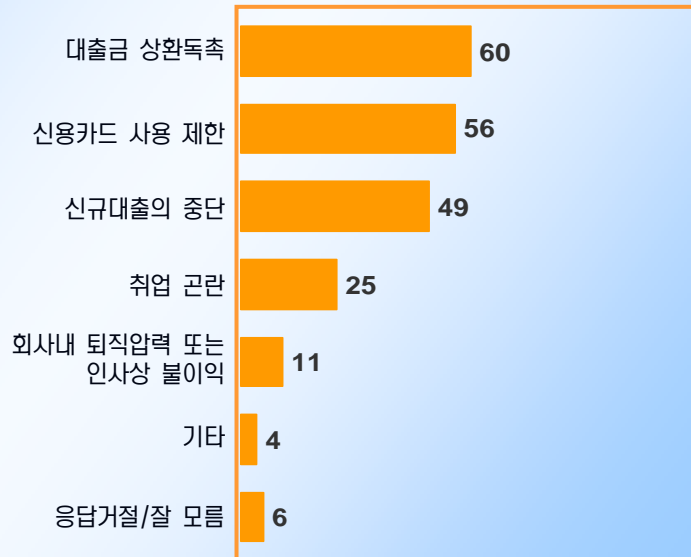


■ 신용불량자 고통·불이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독촉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
- ▶ 카드사용 제한, 신규대출 곤란 등 금융거래 제한도 상당수 응답
- ▶ 취업 곤란, 인사상 불이익 등도 일부 경험

[복수응답, 단위:%]

전체 (N=3919)



■ 금융기관 직원 등을 통한 조사 결과

- ▶ 가압류, 상환독촉 등으로 인한 정상생활 곤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
- ▶ 이혼, 가족과의 갈등도 상당수 차지
- ▶ 기타 실직, 취업곤란, 인사상 불이익 등의 순으로 파악하고 있음

[단위:%]

전체 (N=1510)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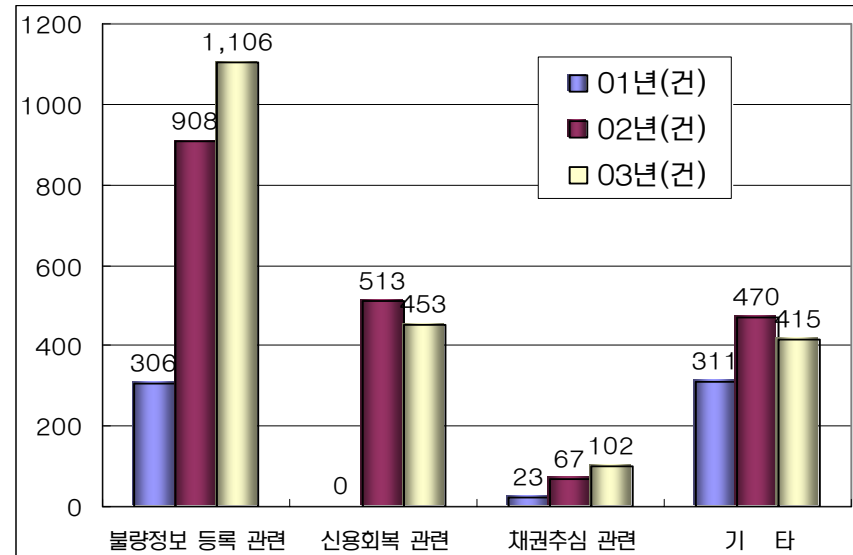
▶ 신용불량정보 등록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

- 대부분 불량정보 삭제 또는, 연체금 변제후에도 보존·관리되고 있는 불량정보 사후기록 삭제 등을 요청

▶ 신용회복지원 요청관련 민원도 상당수

-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 범위 확대, 신청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을 주로 요구

▶ 최근들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부당추심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



(단위 : 건, %)

	01년	02년	03년
신용불량정보 등록 관련	306 (47.8)	908 (46.4)	1,106 (53.3)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관련	-	513 (26.2)	453 (21.8)
채권추심 관련 (부당행위 시정 요구)	23 (3.7)	67 (3.4)	102 (4.9)
기 타 (신용정보업 인허가, 정책제안등)	311 (48.5)	470 (24.0)	415 (20.0)
계	640 (100)	1,958 (100)	2,076 (100)

※ () 는 비중

조사 결과

- 등록 당시보다 소득 대폭 감소
- 자영업 급감, 임시직 및 무직자 급증 등 직업 안정성 악화

-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가 가장 많음

-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상당수

-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채무자가 상당수

시 사 점

- 신용불량자들의 소득기반 취약
- 자영업자의 사업실패 증가

- 카드사 가게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신용불량자 급증의 주요한 원인

- 채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구제가 어려운 계층도 존재

-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수
- 거래금융기관에서 사태악화이전에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대 응 방 향

- 경기 활성화
- 취업알선 등 일자리 제공

- 만기연장 등 가게대출 연착륙 유도

-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되, 변제불가시 법원절차 활용

- 한계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용불량자화를 최소화

조사 결과

- 채무재조정 받으면 상환가능
 - 신용불량자중 61% 응답
 - 금융기관직원 33% 응답
- 자력상환 가능
 - 신용불량자중 19% 응답
 - 금융기관직원 35% 응답

- 신용불량자 부채 및 소득 분석결과,
 - 채무상환에 8년 이내 소요 : 52%
 - 8년 이상 소요 : 48%

-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으면서 직장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

- 금융기관 직원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인식
 - 이에 따라,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6%
 - * 신용불량자중 연락 불가능 : 34%

시 사 점

-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노력 미흡 반영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존재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다수로부터 추심을 받음에 따라 채무자의 추심압박 고통 심화
- 개별 추심에 따른 추심비용 과다

-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폐지는 신중히 결정

대 응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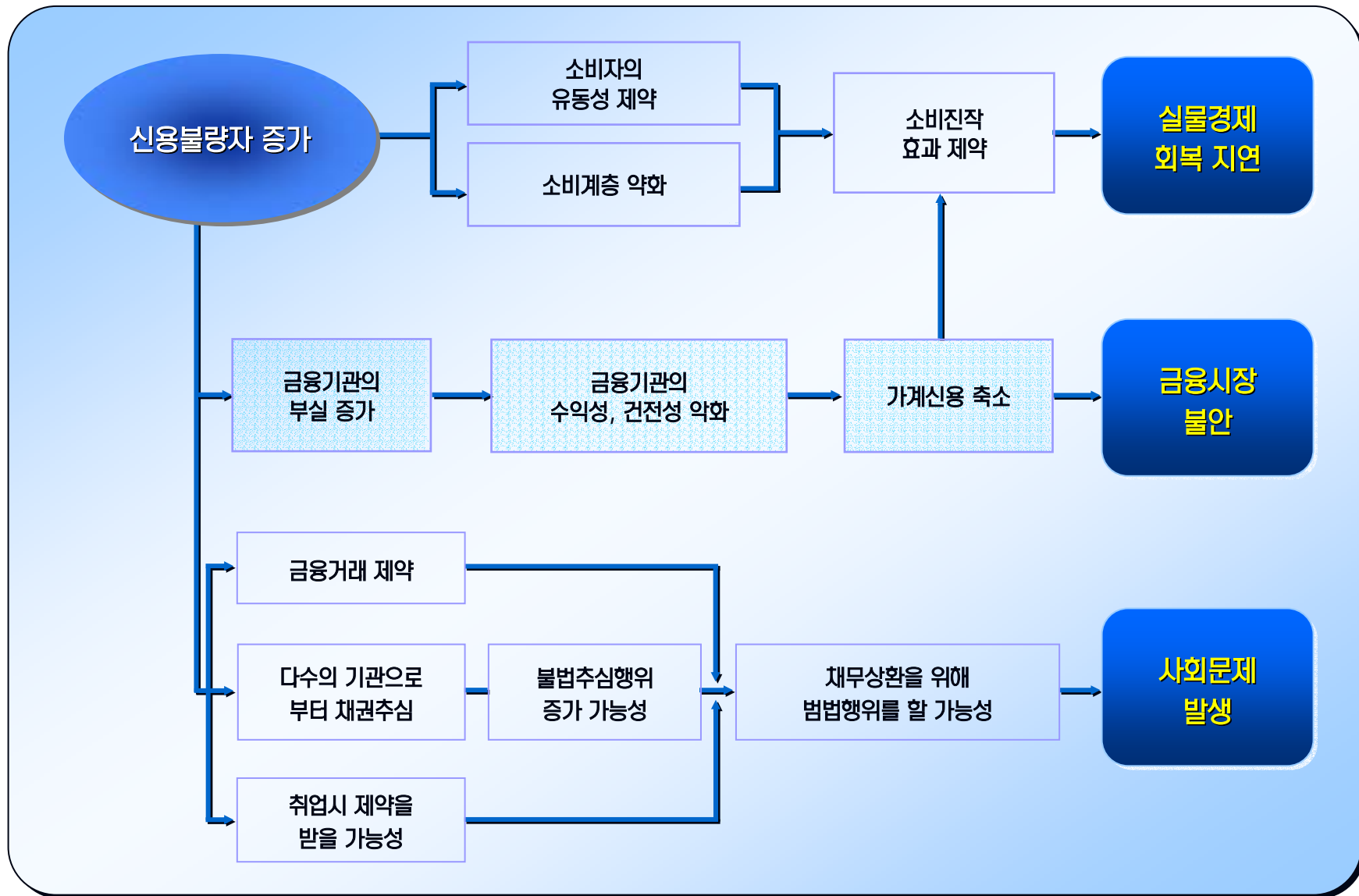
- 신용회복 기회를 충분히 제공
- 채무상환 내역정보관리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

-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충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심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 채무자 도덕적 해이, 금융권 연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제도 폐지시기 결정

(참고) 신용불량자 문제의 파급경로





III.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1. 기본방향

2. 대응방향

- 2.1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최소화**
- 2.2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 2.3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 2.4 추심부담 완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2.5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 2.6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

▶ 그러나, 경기회복을 통한 해결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적극 대응

■ 은행을 중심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최소화

■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

▶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단기 소액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 해소를 추진

▶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

■ 이상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채무상환능력 상실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게 신용정보 등을 관리

신용불량자 되기 이전의 한계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단기 소액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사전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

-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억제

※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체 심사기구 등을 통해 Review하는 절차를 운용토록 지도

가계대출의 연착륙 유도

▶ 가계상환부담을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경상성장을 범위내, 8%대)에서 증가하도록 유도

-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은행 가계대출(03년 82조원 → 04년 92조원)이 원활하게 만기연장되도록 유도

- 각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선제적·경쟁적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지도·점검

- 주택금융공사(3.2일 출범)를 통하여 3년만기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

* 주택대출(145조원)중 3년만기이하 일시상환 비중이 69%(03.9말)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137만명) →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강화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1,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105만명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강화
 - 만기연장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거치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
 - 고의적인 상환기피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향후 신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제외
 - 감독당국이 금융기관별 자체보유 신용불량자 축소대책 및 실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각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 다중 신용불량자(235만명) → 개인워크아웃,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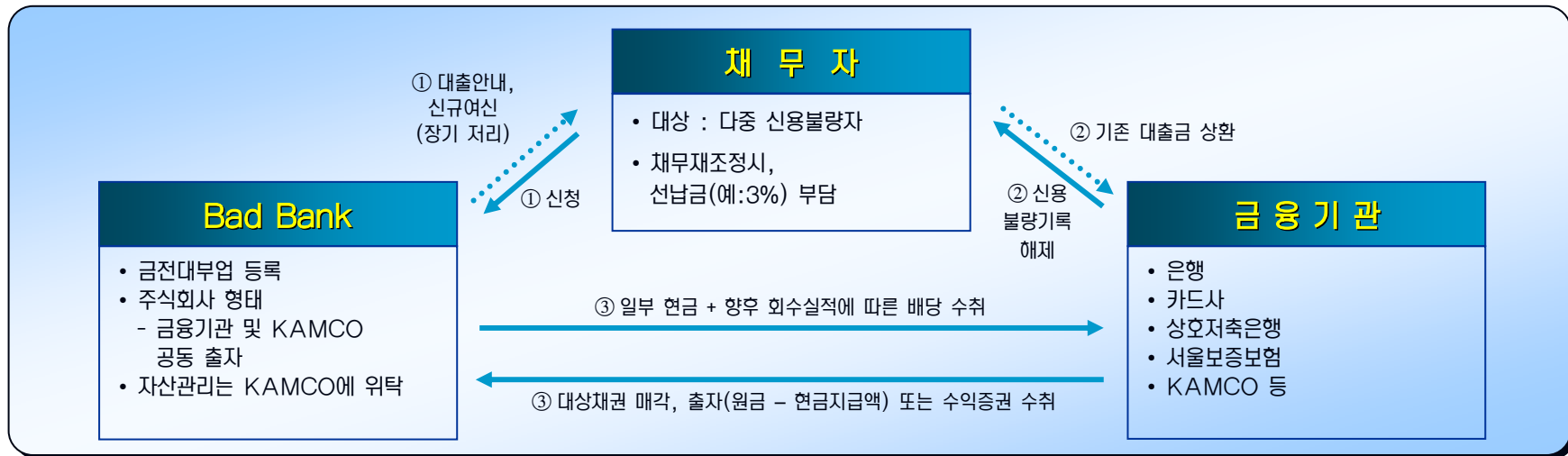
- 02.10월부터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지원
 - 04.2월말 현재까지 상담 31만명, 신청 91,904명(워크아웃진행자 49,400명)
 - ▶ 활성화 방안(→금년중 신용불량자 20만명 감축 목표)
 - 참여금융기관(현재 188개) 지속 확대
 - 지방사무소 추가 설치(현재 부산,대구,대전,울산,제주 설치·운영중)
 - 채무상환 이행실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 (예시) 일정기간 동안(예 : 2년 또는 3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및 원리금 부분 감면 지원하는 방안 검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 ▶ 10개 금융기관 참여(은행 5, 카드사 5)하에 85만명에 대한 채무를 집중하여
공동추심 또는 채무재조정 진행중
 - 04.2월말까지 36,650명이 채무재조정 신청
- ▶ 성실 이행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금년중 10만명 채무재조정 목표

■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전문 취급하는 Bad Bank 설립 추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자 : 일정기간(예 : 3개월, 6개월) 연체, 5천만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 ② Bad Bank는 KAMCO,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고, 대부업자로 등록 ③ Bad Bank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채무자를 확정 ④ Bad Bank는 대상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장기 저리로(최장 8년) 신규 여신을 지원
※ 원금의 일정부분(예 : 3%)은 채무자가 우선 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채무자는 Bad Bank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⑥ 채무자는 Bad Bank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
※ 성실 이행자에 대한 추가감면, 초기 유동성 부족자를 위한 상환 거치기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⑦ Bad Bank 보유 정보는 CB에 제공하여 활용 |
|--------------------------------------------------------------------------------------------------------------------------------------------------------------------------------------------------------------------------------------------------------------------------------------------------------------|-----------------------------------------------------------------------------------------------------------------------------------------------------------------------------------------------------------------------------------------------------|



- Bad Bank는 신규대출을 통해 기 발생된 신용불량자를 대량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가능
 - ▶ 금융기관과의 사전협약을 통해 대상 채무자를 사전에 확정하고, 대상 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채무 재조정 가능
 - ▶ 신규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일정부분을 선납금(예 : 원금의 3%)으로 받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간 분할상환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요건 등을 심사하고 채무재조정 여부를 결정
 - ▶ Bad Bank에 비해 대상 채무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신용회복위원회	Bad Bank(안)
대상자	다중 신용불량자	다중 신용불량자
대상요건	3억이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있는자(소득증빙 필요)	채무상환 의사가 있는 채무자로서, 5천만원 미만 채무자는 소득증빙 없이 가능 다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선납(예 : 원금의 3%)
참여금융기관	04.2월말 현재 188개	주요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참여
신속성 여부	변제계획안에 대한 금융기관 동의 필요 (채권액 기준 : 무담보 1/2, 담보 2/3)	금융기관 사전협약에 따라 사후동의절차 없이 대상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채무재조정 가능
존속기간	상설적 기구	한시적 운용(3개월 또는 6개월만 채무조정신청을 받음)

- 민간차원의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처리
 - ▶ 파산시보다 장기(최장 8년)분할 상환금이 많을 경우 → 개인회생제도
 - ▶ 변제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 개인파산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 ▶ 04.3.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공포후 6월)
 - 파산선고없이 장래 수입으로 최장 8년동안 채무를 분할상환
 - 변제계획 완료시, 잔여 채무는 면책
 - *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운영중(미국, 02년중 45만명이 개인회생제도 이용)
- ▶ 개인회생제도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파산시 변제액 < 회생제도에 의한 변제액]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채무상황에 사용
 - 재산은닉 등의 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CB에 제공

※ 개인회생제도는 잔여채무가 면책되는 준 파산제도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합의에 해결되는 것보다 당사자의 신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 ▶ 변제능력 상실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
 - * 파산자의 경우, 공무원 임용 불가·파산사실의 신원증명서 기재 등 제한을 받으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새출발 가능
 - * 파산결정(02년) : 미국 110만명, 일본 21만명

각 금융기관별로
일자리와 연계한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이 자체 또는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
- ▶ 각 금융기관별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

신용회복위원회
취업 알선기능 강화

- ▶ 신용회복위원회내 취업안내센터 운영을 활성화

※ 03.12월~04.2월중 구직신청 235명, 취업 36명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신용불량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서 발급

소액 신용불량자
취업제약요인 해소
(CB사 협의 의견)

- ▶ 청년층이 소액 연체로 인해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 신용정보업자가 고용목적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시,
소액(예:100만원 또는 200만원 미만) 신용불량정보의 제공을 한시적으로 유예

추심 부담
완화

- ▶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Bad Bank 등을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심을 전개함으로써 다중채무자의 추심압박 부담을 완화
- ▶ 채권추심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임직원 제재 규정 마련
- ▶ 금감원에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 신고센터 설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채무상환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빌린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규율을 확고히 정립하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
 -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상환의지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개인별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수집·관리하고, 개인신용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책임 이행 정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제재를 차별화
 - 1) 정상 상환, 채무재조정에 의한 경감, 법원에 의한 일부 면책, 파산에 따른 면책 등의 정보
 - 교과서에 금융소비자관련 내용 반영 등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현 황

- ▶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중
- ▶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담보대출 관행에 익숙하여 개인신용평가에 기초한 금리차등·대출한도차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 미흡

제고 방안

-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 개인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제고
-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활성화
 - 고용관련 정보(근로복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
- ※ 02년부터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2개사)가 약 1,000만건(계좌기준) 이상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인신용평점 서비스 등을 제공중

목 표

-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 및 한도·금리 등 금융거래 조건이 차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 ※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보유한 대형금융기관 :
자체 신용평가모델 + CB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금융거래 여부 및 금리·한도 등을 결정
- ※ 자체 모델 개발이 어려운 소형금융기관 : CB를 적극 활용하여 신용평가능력 보완

문 제 점

- ▶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금융권의 단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문제
 - 금융거래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
 -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

개편 방안 (금융회사 협의 의견)

- ▶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채납자 등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
 - ※ 금융권 연체없이 국세 등 세금채납만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14.5만명(03.12말)
- ▶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만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기 기초자료로 활용
 - 이를 통해 연체금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와 동일하게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해소
- ▶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 개인신용정보공유 확대, CB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신용에 따른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
 - 개편시기는 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도덕적 해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
 - ※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신용사면,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제도폐지시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이 자료는 3.23일(수) 오후 6시이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제목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 ◇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 개별금융기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97만명(추정)을 지원
 -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작년말에 폐지(금년 4.28일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취업알선, 불법추심행위 방지,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 신용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도 병행 추진
-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작년 6월이후 신용불량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
 - 다만, 소득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여전히 존재

◇ 따라서 서민경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

※ 일반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메타 커뮤니케이션에서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약 90%가 찬성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주요 대상자는

-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04.12말 15.5만명),
- 청년층 신용불량자중 학자금 연체자, 군복무자, 신용불량등록 당시 미성년자,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04.12말 15.3만명) 등임

※ 영세 자영업자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면세업자 등

○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나갈 계획

-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 1588-3570, www.kamco.or.kr)에서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 신청자에 대해 지원하되,
 - 이들의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는만큼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

-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을 유예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콜센터 02-6337-2000 www.ccrs.or.kr)로 하여 신청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지원
- 실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등의 경우에는 취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확보되면 원금을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연체이자+향후 발생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하면 면제
-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콜센터 02-6337-2000, www.ccrs.or.kr)로 하여 신청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지원
- 이들의 경우, 청년층과는 달리 소득원이 있는 계층이므로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중 최소한의 이자(연 5%)는 납부
- 유예기간후에는 최장 8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이자(연체이자+원금상환기간중 발생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하면 면제

· 영세자영업자는 소득흐름이 불안정하여 채무재조정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지원과 함께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은행별로 발표 예정)

- 한편,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상호 협조하에 원스톱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대상채무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

◇ 이러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공동추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중(4월중 가동 예정)이며,

○ 대상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지원 방식, 공동추심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 나갈 예정

◇ 한편, 개별 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에게 다양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

◇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관된 기본 방침아래 추진

-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동참
하에 추진
- 원금 탕감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개인CB 등 신용인프라
확충, 신용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금번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도 위와같은 기본 방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마련하였으며, 금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책으로서

- 금번 기회를 통해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추심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
- 금융기관도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가계금융을 정상화
하는 한편,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을 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별첨>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 공보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2005년 3월 2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목 차

- I.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평가**
- 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 분석**
- I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 IV.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운영 방안**
- V.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평가

1. 대책 추진현황

2. 평 가

3. 향후 대책방향

-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및 금융권의 의견 수렴,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① 신용불량자 특성별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여 04년중 97만명 지원(이중 7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추정)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지원	등록전 지원
단일기관 신용불량자	개별 금융기관에서 적극 대응	20만명 추정	22만명 추정
다중 신용불량자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 공동추진	17만명 26만명 12만명	
		75만명	22만명

②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 ▶ 개인회생제도 (04.9.23일부터 시행) : 9,058명 신청
- ▶ 개인파산제도 : 12,373명 신청

③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 ▶ 작년말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05.4.28일부터 시행 예정

④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 ▶ 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 ▶ 신용회복위원회 추천 신불자에 대해 신용보증서 발급(서울보증보험)

⑤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 ▶ 개인신용평가회사(CB)설립지원 등 신용인프라 확충

⑥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지

- ▶ 불법추심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지도
- ▶ 04.3.18일부터 불법추심행위 신고센터(금감원) 운영

■ 신용불량자 감소세로 전환

- 04.3월 신용불량자 대책 수립 이전에는 월평균 7만명 증가
- 연구기관 등에서는 04년중 월평균 5~8만명 수준 증가 예상
- 대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04.6월부터 감소추세로 반전

※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만명, 세금채납자·사망자 정비 등 특이요인 제외)
: (03) 9.0→(04.1/4) 6.6→(2/4) 0.9→(3/4) △0.9→(4/4) △1.2

<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 추이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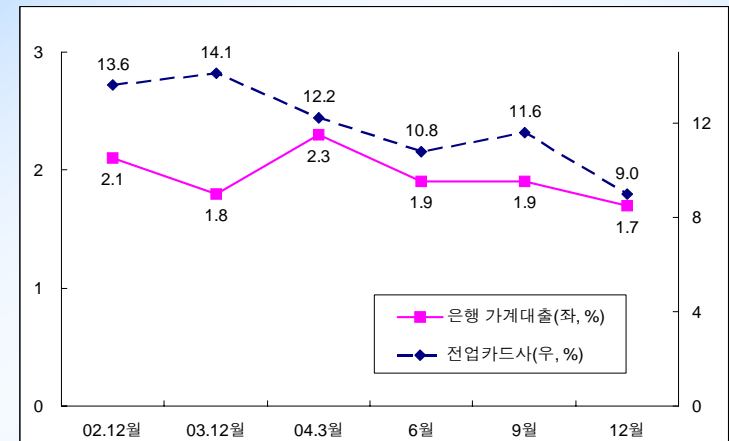


※ 세금채납자 제외(04.3월 15만명), 사망자 정비(04.5~12월중 12만명) 등 특이요인 제외

■ 도덕적 해이의 효과적인 차단

-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신용회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차단 → 금융권 연체율 하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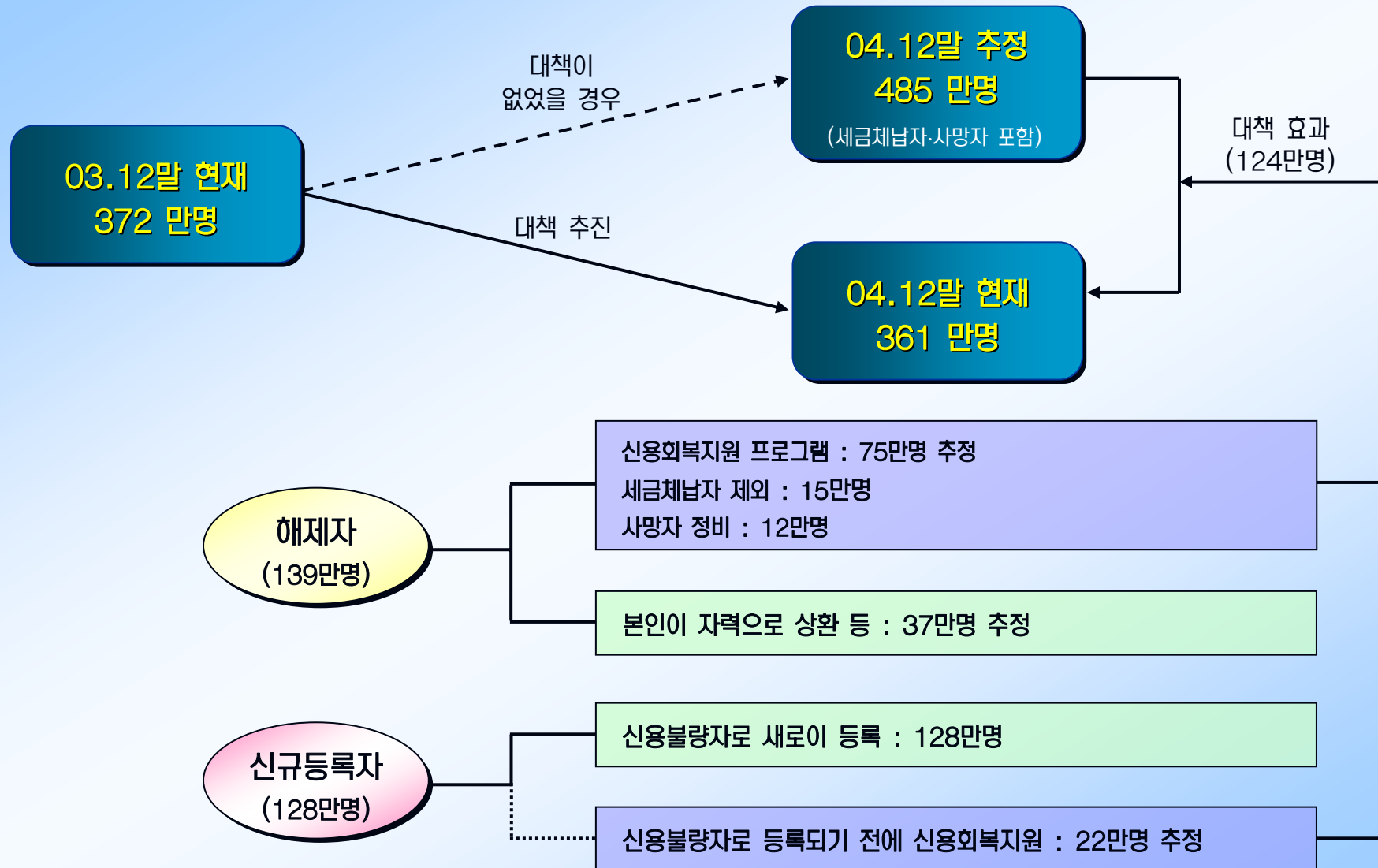
< 은행, 카드사 연체율 추이(%) >



■ 신불자문제 해결에 대한 금융권의 공감대 확산

- 620개 금융기관 참여하에 배드뱅크 설립·운영
- 신용회복위원회의 참여 금융기관 대폭 확대

※ (04.3.10일 대책이전) 185개 → (05.2.28일 현재) 3,586개



■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

- 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추진
- ② 다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한 공동추심 프로그램 방안 강구
- ③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금융채무 불이행자

- 추심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고

금융기관

-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가계금융의 정상화 계기 마련
-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을 하는 선진 금융관행 정립

국민 경제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
- 가계채무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기대



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 분석

- 1. 실태조사 개요**
- 2. 실태분석 결과**
- 3. 시 사 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 ① 보건복지부 및 은행연합회의 전산DB를 통해 부채규모 등 실태 파악
- ② Survey (05. 2. 5 ~ 2. 25)
 - 조사대상 : 총 1,073명 (신용불량자 573명, 비신용불량자 477명, 모름/무응답 23명)
 - 조사방법 : 시·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화·대면 등을 통해 직접 조사

청년층 신용불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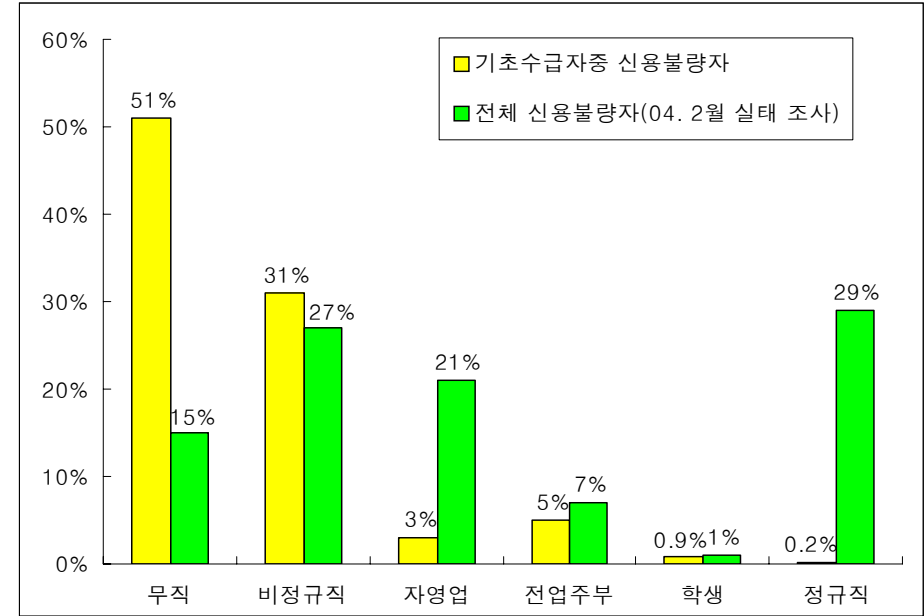
- ① 학자금 신용불량자 : 학자금 대출 취급중인 금융기관(25개사)을 통해 실태 파악
- ②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 :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태 파악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①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부채규모 등 실태 파악
- ②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Survey (05. 1. 27 ~ 2. 25)
 - 조사대상 : 총 2,540명 (표본추출 : 3개 은행 연체자 1,534명, 신용회복위원회 1,006명)
- ③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실태 Survey (05. 1. 25 ~ 2. 25)
 - 조사대상 : 총 1,000명 (금융기관 45개사의 일선 창구 직원)

1 대상자 규모 및 채무·직업 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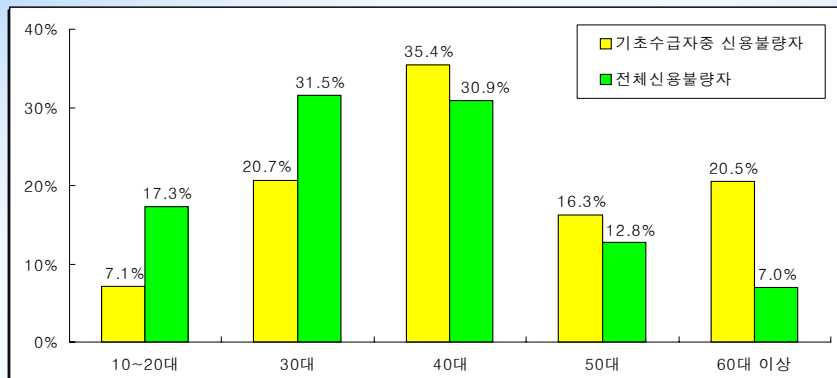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04.12말 142만명)중
신용불량자 15.5만명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2,332만원
- 직업별로는 무직, 비정규직, 주부, 학생 등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88%를 차지 (Survey)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04.2월 실태조사)
직업	<u>무 직</u> 51%	<u>무 직</u> 15%
	비정규직 31%	비정규직 27%
	<u>자영업</u> 3%	<u>자영업</u> 21%
	전업주부 5%	전업주부 7%
	학 생 0.9%	학 생 1%
	<u>정규직</u> 0.2%	<u>정규직</u> 29%
	무응답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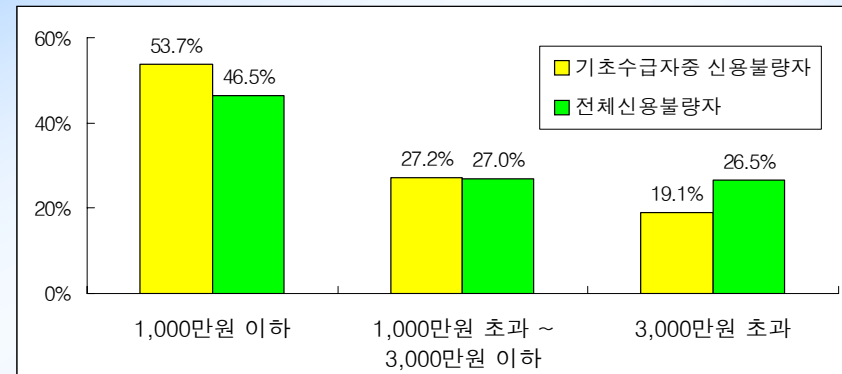
2 연령별 현황

- 10대~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3 채무구간별 현황

-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54% (전체 신불자 47%)
- 3,000만원 초과 고액 채무자도 19% (전체 신불자 27%)



4 거래금융기관 수 현황

- 1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채무자 42%(전체 신불자 35%)
- 2개 이상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는 58%(전체 신불자 65%)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1개 금융기관	41.8%	35.0%
다중 (2개 금융기관 이상)	58.2%	65.0%
평균 거래금융기관 수	2.8개	3.3개

5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 은행 22%, 서민금융기관 20%, 카드사 1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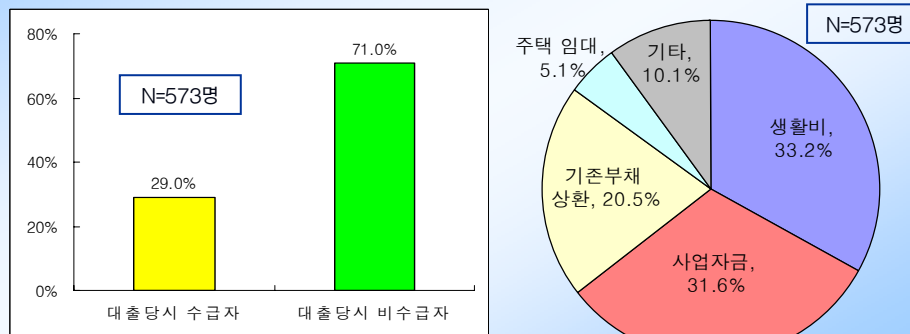
(업권별 중복 포함)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은행	22.2%	24.2%
카드사	14.7%	15.9%
서민금융기관*	19.9%	19.2%
보증보험사·할부금융사	22.5%	20.7%
KAMCO 등 기타	20.7%	20.0%

* 상호저축은행,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탁

⑥ 대출당시 기초수급자 여부 및 대출금 용도 (Survey)

- 대출당시 수급자 29%, 대출금은 생활비·사업자금 등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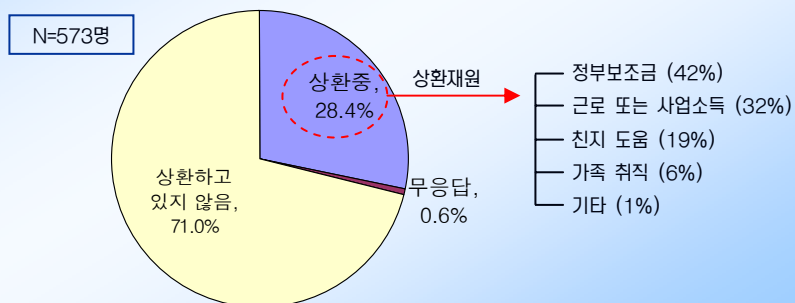


※ 00년에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초수급자가 급증(99년 54만명→00년 151만명)

⑦ 대출금 상환 여부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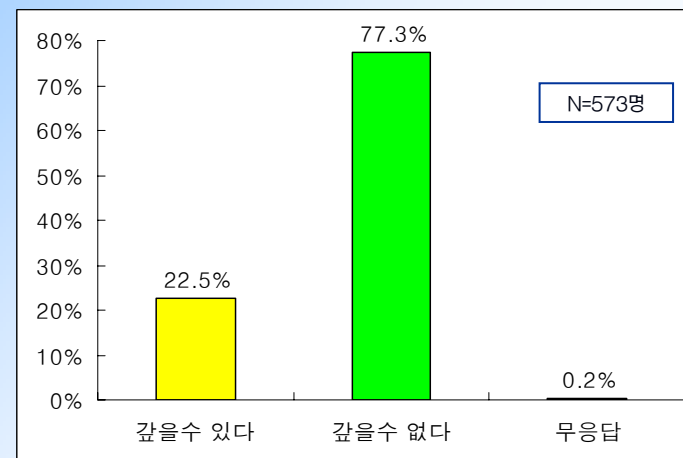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중 28%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중
- 상환자금은 정부보조금(42%), 근로소득(32%) 등으로 충당

※ 조사대상자중 23%는 정부보조금으로 채무상환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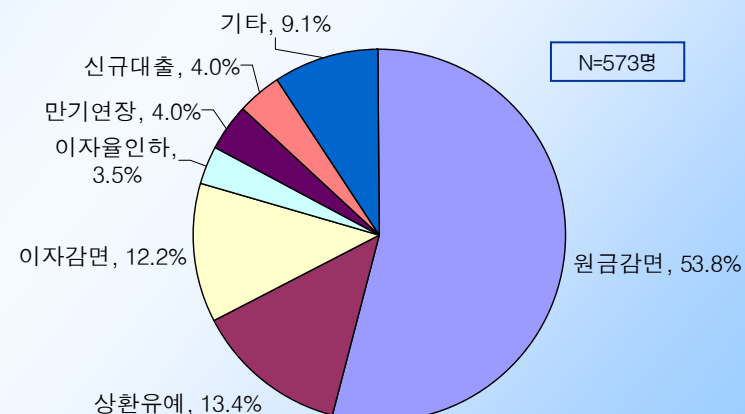


⑧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전망 (Survey)

- 조사대상자의 23%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



- 채무상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원금감면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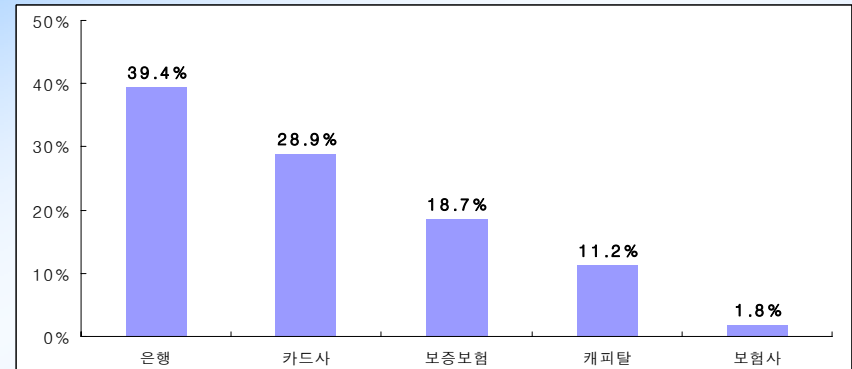
■ 학자금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①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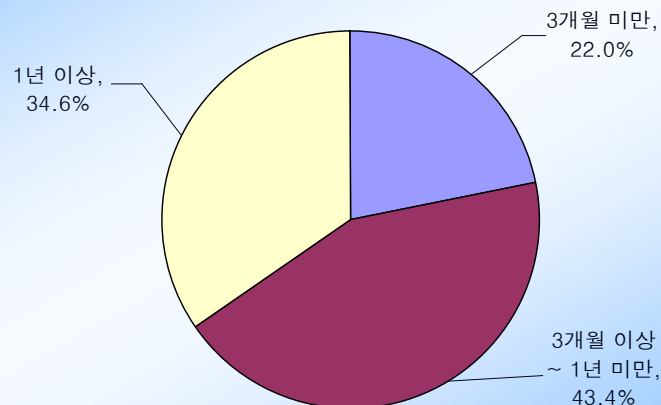
- 대상자 : 4.7만명 수준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228만원

②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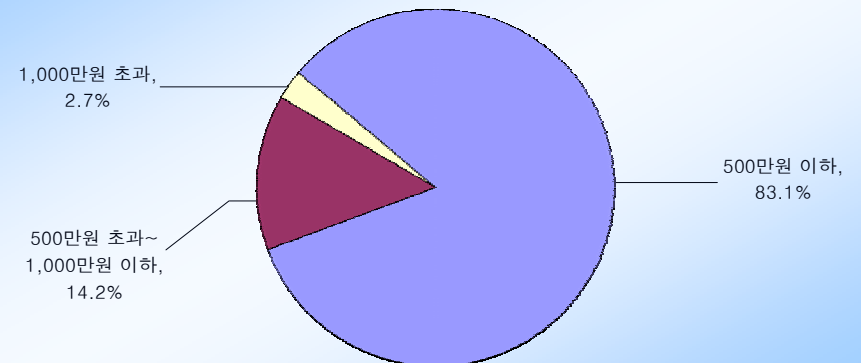
- 은행 39.4%, 신용카드사 28.9%, 보증보험 18.7% 등



③ 신용불량 등록기간 현황 : 1년 미만이 65.4%



④ 채무구간별 현황 : 500만원 이하가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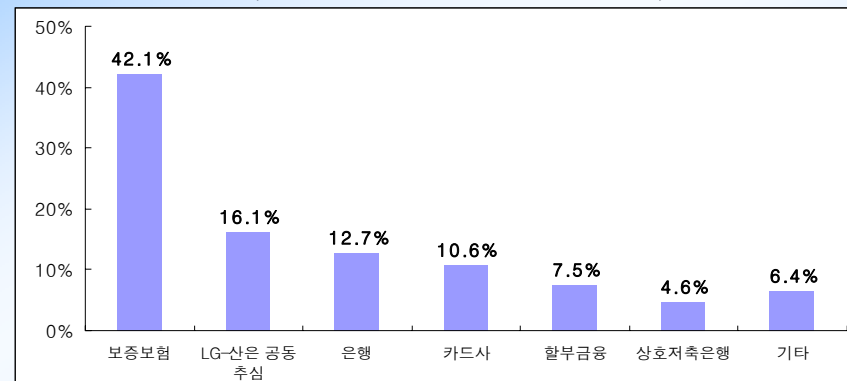
■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

1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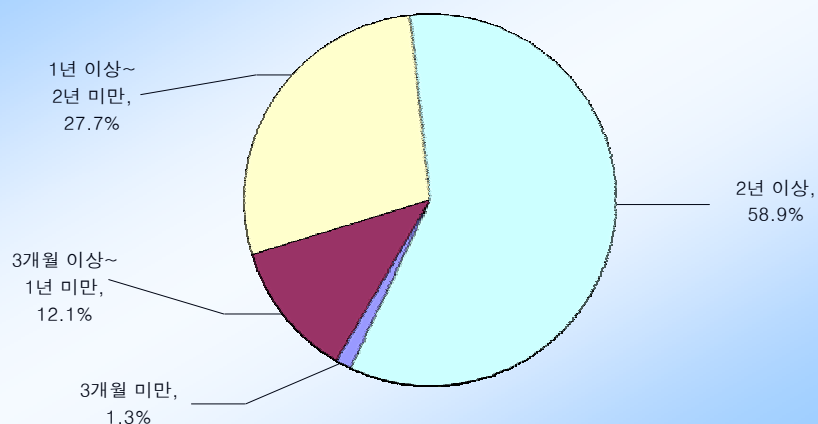
- 대상자 : 2.1만명 수준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합계 : 1인당 약 360만원

2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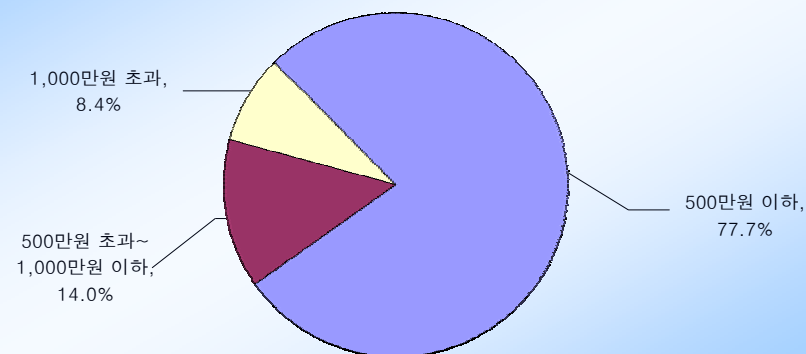
- 보증보험 42%, LG-산은 공동추심 16%, 은행 13% 등



3 신용불량 등록기간 현황 : 2년 이상이 58.9%



4 채무구간별 현황 : 500만원 이하가 77.7%



①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15.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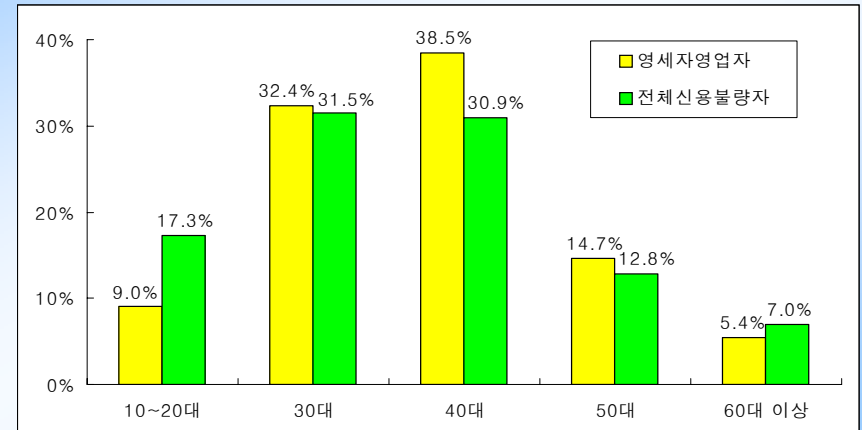
※ 영세자영업자 판단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 사업자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면세사업자 등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3,98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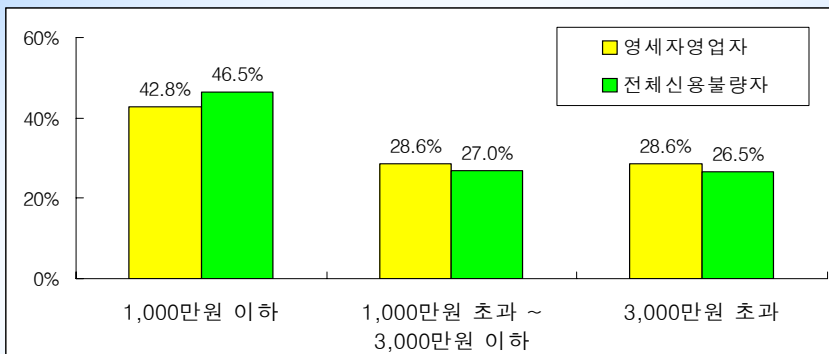
② 연령별 현황

- 경제활동의 중심인 30대~40대가 71%(전체 신불자 62%)



③ 채무구간별 현황

-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3% (전체 신불자 47%)
- 3,000만원 초과 고액 채무자 29% (전체 신불자 26%)



④ 거래금융기관 수 현황

- 영세자영업자중 1개 금융기관과 거래자는 32.7%
- 2개이상 다중 거래자는 67.3%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1개 금융기관	32.7%	35.0%
다중 (2개 금융기관 이상)	67.3%	65.0%
평균 거래금융기관 수	3.6개	3.3개

⑤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 영세자영업자는 은행, 서민금융기관, 카드사 등을 많이 이용

(업권별 중복 포함)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은행	24.4%	24.2%
카드사	18.3%	15.9%
서민금융기관*	23.0%	19.2%
보증보험사·할부금융사	18.4%	20.7%
KAMCO등 기타	15.9%	20.0%

* 상호저축은행,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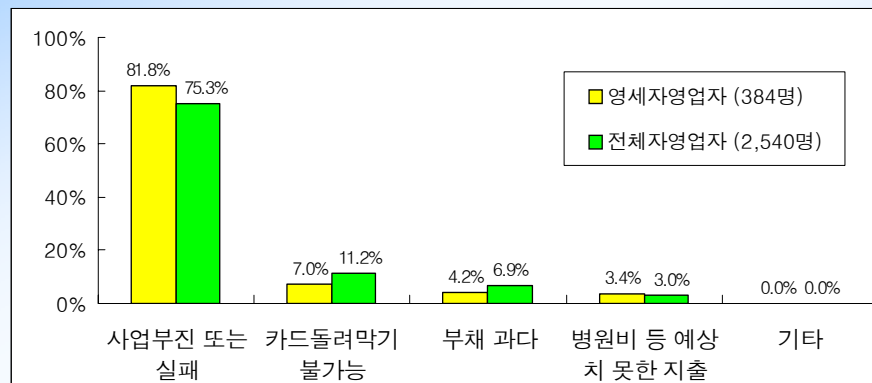
⑥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 (Survey)

- 점포는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72%
- 점포직원은 2인이하가 80%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이 68%

점포 임대형태	직원 수(본인 포함)	업종별
본인소유 15.9%	1명(본인) 49.5%	제조업 23.7%
전세 8.6%	2명 30.5%	도소매업 26.6%
월세 71.6%	3명 이상 20.1%	음식·숙박업 17.2%
기타 1.8%		건설·부동산·사업서비스 11.7%
		기 타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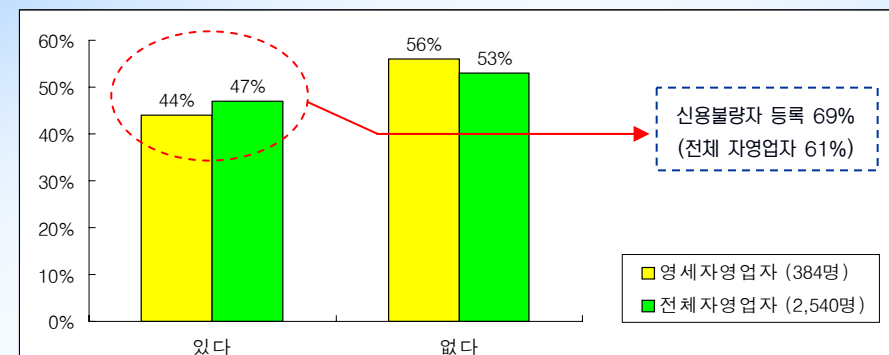
⑦ 대출금 연체 이유 (Survey)

- 사업부진, 카드돌려막기 불가능 등이 주요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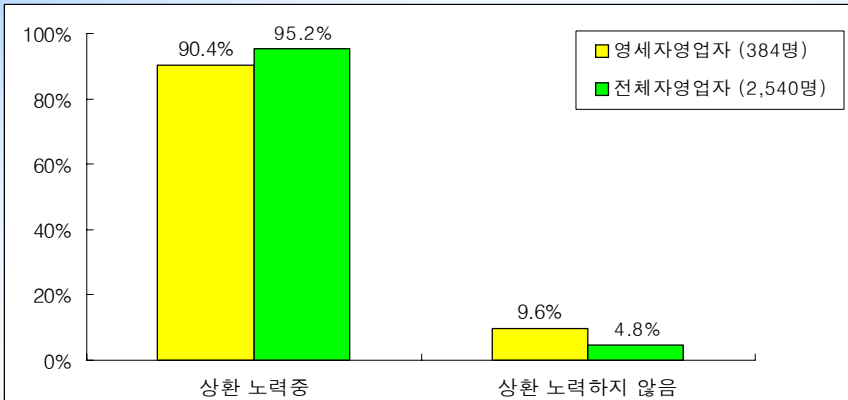
⑧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다른 가족의 대출 경험 (Survey)

- 경험이 있는 경우가 영세자영업자중 44% (전체 47%)
- 이로 인해 가족이 신불자가 된 경우는 69% (전체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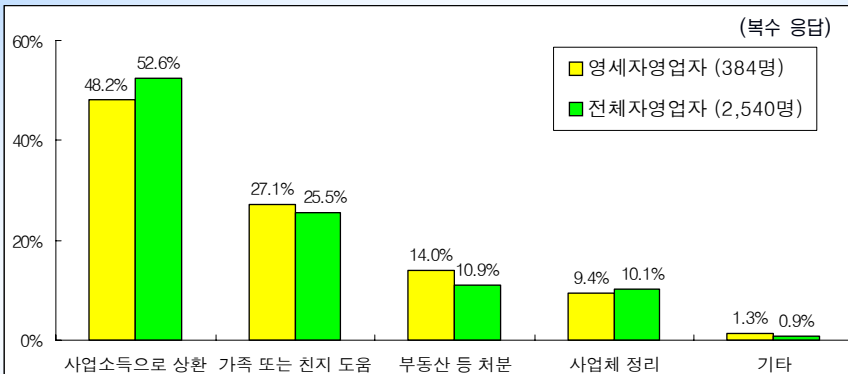
9 대출금 상환 여부 (Survey)

- 영세자영업자중 90%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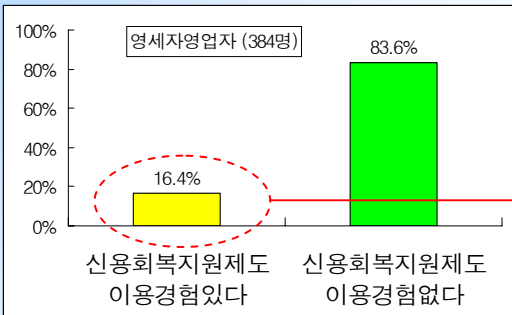
10 대출금 상환 노력 유형 (Survey)

-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자중 약 50%는 사업소득으로 상환
- 가족도움, 부동산 등 처분, 사업체 정리 등을 통해서도 상환



11 영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Survey)

- 영세자영업자중 16%만 이용
- 이용자의 6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혜택이 적다', '현행제도가 소득이 일정한 정기소득자 위주이기 때문' 이라고 주로 응답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 >

도움 O	도움 X
68.3%	31.7%

<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영세자영업자	금융기관 직원 대상 설문결과
혜택 적어서	35.0%	11.4%
정기소득자 위주	45.0%	45.5%
자격 제한	15.0%	14.9%
절차 복잡	0%	16.3%
기타	5.0%	11.9%

조사 결과	시 사 점	대 응 방 향
①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는 무직·비정규직 등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대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기간 채무상환 가능성 낮음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유예기간 이후에는 장기 분할 상환
② 청년층 신용불량자는 소액 채무자가 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은 소액임에도 실업·군복무 등으로 채무상환 곤란 ※ 청년층 실업률 : (05.1월)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 일자리 알선 등의 지원노력도 병행
③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족이 대출을 받아 가족이 신불자가 된 경우도 다수 - 상당수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중 - 사업부진이 대출금 연체의 주요 원인 ※ 현재의 채무부담에 변화가 없으면, 44%는 현재의 점포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가족 전체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 • 채무상환의지가 있음 • 경기회복이 최선의 해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사업개선 등 실질적인 워크아웃 방안도 함께 마련 • 일자리 알선 등 근로소득자로의 전환도 용이하도록 지원



III.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 2. 청년층 신용불량자**
- 3.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4.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04.12.31일 기준, 15.5만명)

■ 지원방식

① 대상자가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재조정 신청

②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KAMCO에서 매입

- 대상채권의 매입 소요 비용 : 추정 시장가격의 50%만 금융기관에 지급

※ 지급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저리자금 지원 추진

③ KAMCO에서 신청자의 채무를 재조정

원 금

-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 상환유예
-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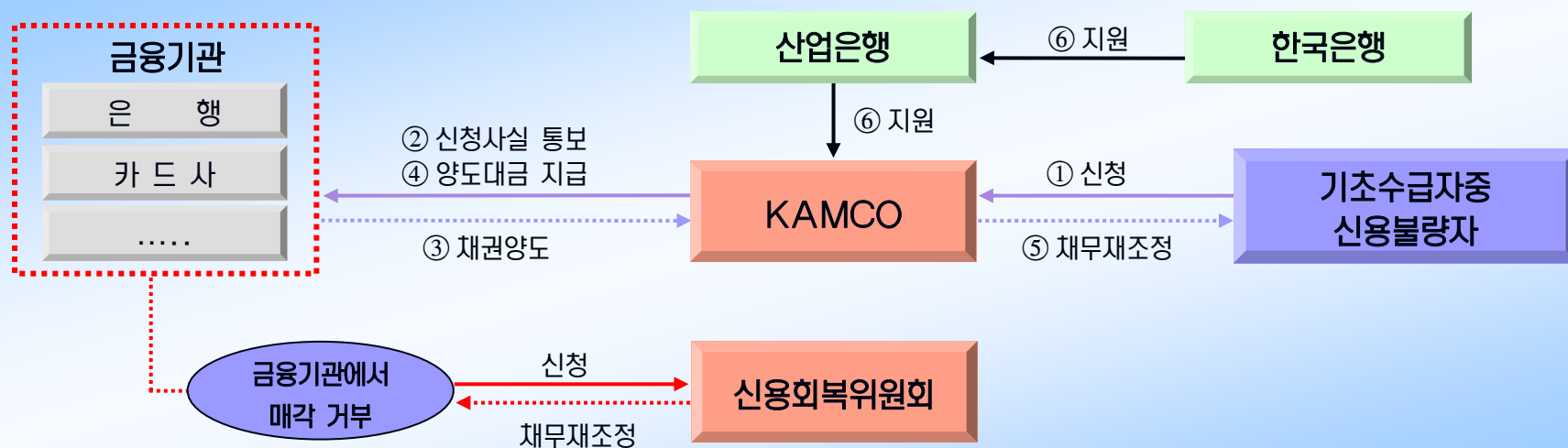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면제
- 향후 발생할 이자 : 면제

■ 대상자가 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상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지원 협약」을 마련하여 지원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채무재조정 내용

- 원금 : 상환유예없이 최장10년 분할상환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이자 : 면제

※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곤란



■ 기초수급자중 신불자는 아니지만 금융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 지원 방안 강구

■ 대상자(04.12.31일 기준 신용불량자)

- ① 학자금 대출 연체자, ② 군복무중인 자, ③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19세 이하),
- ④ 부모의 대출 등에 대해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예 :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 보증채무에 대해 이행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

■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별도로 마련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재조정 지원

원 금

- 최장 2년동안 상환유예 (실업기간중)
 - 상환유예는 최초 6개월 설정,
이후 6개월마다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
-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중 별도 유예
- 취업·창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확보하면,
상환유예를 중단하고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이 자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향후 발생할 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상환유예 기간중 발생이자(연 6%)
 - 분할상환 기간중 발생이자(연 6%)

■ 대상자

- 04.12.31일 현재 신용불량자인 영세 자영업자 (15.3만명 수준)

※ 영세자영업자 판단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 사업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면세사업자 등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에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별도로 마련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재조정 지원

원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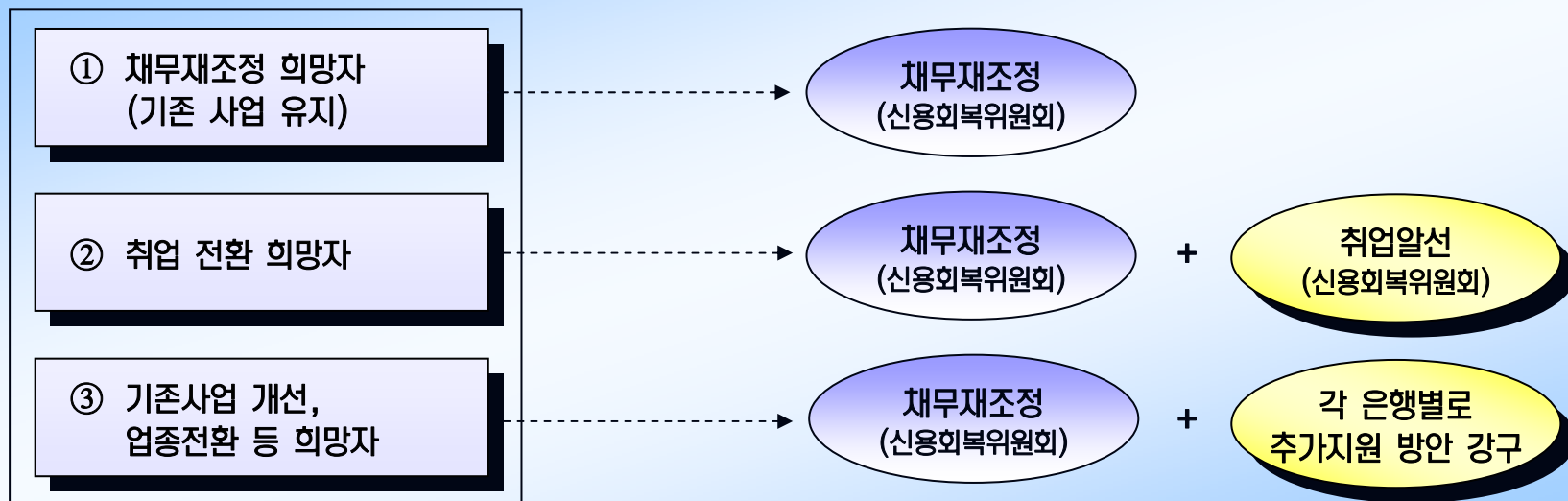
- 최장 1년동안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최초 6개월 설정,
6개월후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상환유예
- 상환유예후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 채무자 상황에 따라 체증식 방식도 적극 활용

이 자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상환유예기간중 발생 이자
: 연 5%로 납부
- 원금 상환기간중 발생이자(연 6%)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거래 사업자는 지원 곤란

-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재조정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예 : 원금탕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 지원과 함께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지원
- ▶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요건, 방법 등은 각 은행에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이후에 각 은행별로 자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



①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한정

-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실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② 원금탕감 없음

- 상환능력을 확보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

③ 한시적으로 운영

- 신청기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④ 기준 시점을 한정하여 대상자 및 대상채권 확정

- 04.12.31일 기준(예시)으로 대상자 선정
- 04.12.31일 이후 발생한 금융권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신용관리교육 병행

- 지원 확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

⑥ 신용정보관리

- 지원 확정자의 신용정보를 CB 등에 제공하여 개인신용정보평가자료로 활용



IV.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 대상자

- 2개이상 금융기관에 채무(5천만원이하)가 있는 신용불량자중 공동채권 추심 대상자

■ 지원 방식

① 04년 설립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

② 동 SPC에서 대상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

- 금융기관에는 일정 비율 현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추가 수익을 정산
- KAMCO는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 지급 소요재원을 조달 지원

※ KAMCO 자본금 확충을 위해 증자 추진(현재 자본금 1,4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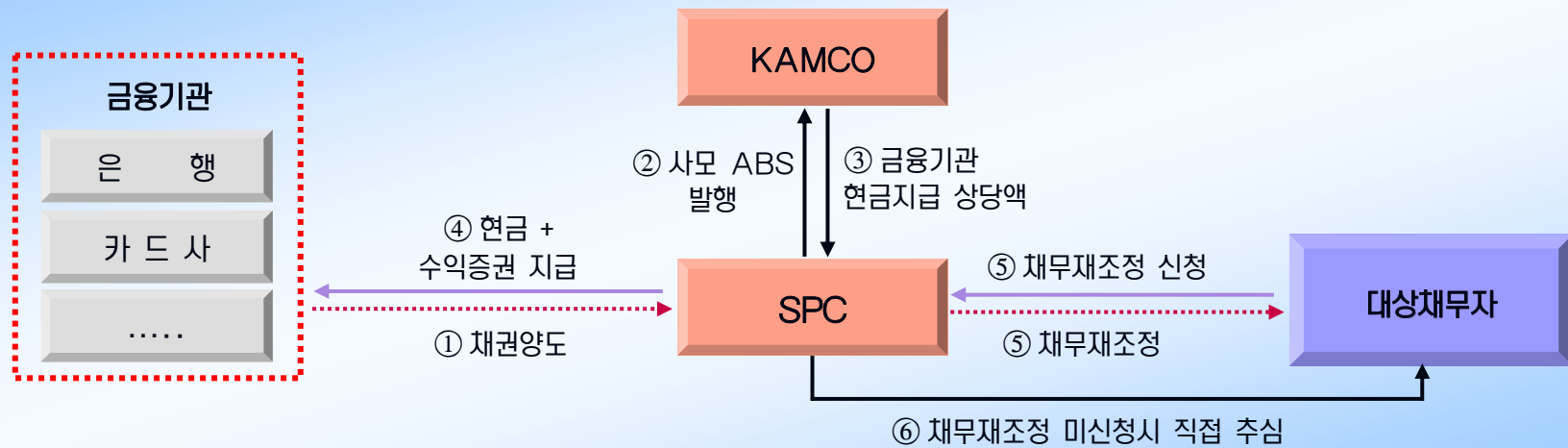
③ 매입대상자중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추진

< 예시 >

-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지원 방식(8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 종전 Bad Bank와 유사한 선납금 납부 방식
- 기타 채무자와 협의하는 채무조정 방식 등 활용

④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공동추심 진행

■ 지원 체계





V.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①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신용불량자 되기 이전의 한계채무자 및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각 금융기관의 실정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 특히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한계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연장(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거치 포함)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방지

※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상황을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지 반영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 참여 금융기관 지속 확대 (05.2.28일 현재 3,586개 가입)
- 지방사무소 확충 (현재 14개 주요도시에 설치·운영중)
-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현행 총채무액 3억원 이하 → 총채무액 5억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 등에서 운영 예산의 일부 지원

③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 금융기관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홍보 등 강화

이 자료는 2005.8.12(금요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5년 8월 12일
		생산부서	금융 정책국 은행제도과
		담당과장	김용범(2110-2420)
		담당자	성창훈(2110-2422)

題目：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p>□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12일(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05.3.23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책 마무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군복무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대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출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적극 지원 ○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순회접수 계속 (6월~) ○ 금번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 <p>※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군 복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신용관리교육 실시 - 교육부：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홍보강화 - 행자부：기초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역별 순회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접수창구 제공 및 홍보 강화 - 복지부：최대한 많은 수의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신용상담 역할 강화 - 국정홍보처：정부보유 매체(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를 통한 홍보 - 금감위：대상채무자가 많은 미 참여 서민금융기관(예,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기초수급자 지원협약 참여 유도

【 참고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 : 05.8.12(금) 07:30~, 정부중앙청사 2층 국무위원식당
- 참석 : 총 22명
 - 경제부총리(주재), 농림부 · 산자부 · 정통부 · 환경부 · 노동부 · 건교부 · 해수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공정거래위 · 금융감독위 위원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과기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화부 · 복지부 · 여성가족부 · 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교육부 차관보, 국방부 차관

<별첨>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2005. 8. 12

재 정 경 제 부

목 차

I. 추진배경

II. 추진현황 및 평가

III. 향후 계획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

I. 추진배경

□ 정부는 지난해 3월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시행

○ 그 결과, 04.4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

* 04.4월 382.5만명⇒6월 369.4만명⇒9월 366.1만명⇒04.12월 361.5만명

□ 다만, 소득이 매우 낮아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배드뱅크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여

○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 차원에서 지난 3.23일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마련·추진중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개요

지원대상(인원)	지원방안	대책기간
기초수급자 (15.5만명)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유예.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 10년 분할상환	05.5.9~11.8
청년층 (10만명)	-최장 2년간 상환유예(군복무기간 별도 유예)하고, 그 이후 원금 8년 분할상환	05.4.1~9.30
영세자영업자 (15.3만명)	-최장 1년간 상환유예하고, 원금 8년 분할 상환(단, 유예기간 동안은 연 5% 이자 납부) -개별 은행은 신규대출 프로그램 운영	05.4.1~9.30
배드뱅크 미신청자 (126만명)	-공동추심을 진행하되,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안의 채무재조정 지원	05.5.16~

II. 추진현황 및 평가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① 기초수급자의 활발한 채무재조정 신청에 힘입어 4~7월간 57,702명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신청현황

(단위: 명)

	기초 수급자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합계
		학자금	군복무	기 타	소계		
4월	9,266	1,520	164	52	1,736	1,665	12,667
5월	10,400	1,237	116	12	1,365	1,276	13,041
6월	17,451	1,271	92	3	1,366	953	19,770
7월	12,224	1,368	84	1	1,453	763	12,224
합 계	47,125	5,396	456	68	5,920	4,657	57,702

②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희망모아)을 통하여 17만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해제

- 또한 동 프로그램 개시이후 현재까지 89,104명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

③ 채무재조정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개별은행들의 신규 대출도 증가 추세

- 특히, 조흥은행은 사회연대은행(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통해 400여명에게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시행중(05.6월)

□ 한편, 대책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강구

○ 희망모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하여 희망모아 다중 채무자(109만명)의 원활한 채무재조정 지원(05.6월 기초치)

* 참여 금융기관: 희망모아 30개, 신용회복위원회 3,586개

○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금융기관 파산재단(274개)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8.1일)함에 따라

- 그동안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파산재단 채무자들(17.4만명)도 일반 채무자들과 동일한 신용회복지원(원금 8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특히 군복무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 신청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기초수급자와는 달리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홍보가 어려운데 주로 기인

□ 또한, 부실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에 소극적인 서민금융기관의 기초수급자 지원협약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

* 기초수급자중 지원협약 미참여 기관의 채무자는 상환유예 혜택이 없어 (원금만 10년 분할 상환),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협약참여기관 채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

<참고>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진행상황

□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도 활발하게 운영중

① 05.1~7월중 285,249명이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음

*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재조정 확정 실적(명)

	05.1/4	4월	5월	6월	7월	1~7월(A)
개별금융기관 지원	40,461	7,407	7,513	17,075	-	72,456
개인워크아웃	86,871	18,912	17,779	21,448	18,404	163,414
LG-산은 공동추심	20,802	8,473	5,678	7,809	6,617	49,379
합 계	148,134	34,792	30,970	29,257	25,021	285,249

②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도 최근 월 평균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1~7월중 신청실적은 04년중 전체 신청 실적(21,387명)보다 97.6% 증가한 42,253명에 이름

- 파산제도는 소득능력이 낮아 채무상환 가능성이 없어 원금 탕감이 불가피한 채무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파산신청(총인구대비, 02년): 미국 156만명(0.5%), 일본 21만명(0.1%), 영국 3만명(0.05%), 독일 2만명(0.02%), 한국(04년) 1.2만명(0.02%)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실적(명)

	04.1/4	2/4	3/4	4/4	04년누계	05.1/4	4	5	6	7	05.1~7월누계
개인회생신청	-	-	132	8,938	9,070	9,327	3,772	4,004	3,884	4,218	25,456
개인파산신청	1,802	1,957	3,011	5,547	12,317	6,080	2,372	2,636	2,843	2,866	16,797
합 계	1,802	1,957	3,143	14,395	21,387	15,407	6,144	6,640	6,727	7,084	42,253

주) 개인회생은 04.9.23일 시행


Ⅲ. 향후계획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

□ 3.23대책기간 동안(4.1~11.8일) 보다 많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 국방부,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군복무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대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출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적극 지원
-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순회접수 계속 (6월~)
- 금번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

- 국방부 : 군 복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신용관리교육 실시
- 교육부 :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홍보강화
- 행자부 : 기초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역별 순회접수가 가능 하도록 지자체에서 접수창구 제공 및 홍보 강화
- 복지부 : 최대한 많은 수의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신용상담 역할 강화
- 국정홍보처 : 정부보유 매체(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를 통한 홍보 협조
- 금감위 : 대상채무자가 많은 미 참여 서민금융기관(예,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기초수급자 지원협약 참여 유도

 금융위원회	<h1>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h2>2008. 3. 27(목) 배포즉시 보도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2156-9851)	
배 포 일	2008. 3. 2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4 매

제 목 :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 관련

- 3.25일(화)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발표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 2002년 10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활용하는 것임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561개(2007년말 현재)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는 채무조정 수준은 부양가족소득수준 등 채무자별 가계수지 상황에 따라
 - 연체이자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조정된 채무를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신복위에서 조정한 채무조정 내용은금융회사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현재 동의율 90% 이상)
- 또한, 신복위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이외에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되면
 - 신복위가 기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별 채무를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 채무자는 동 채무조정액을 국민연금 대여금을 활용하여 일시에 상환할 수 있게 됨
- 이때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받게 될 채권을 일시에 상환 받게 되므로 조정후 채무액을 현가로 환산하여 상환 받게 됨
- 따라서 금번 지원방안은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하면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추가 채무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 첨부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사례

첨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사례 (2건)

[사례 1]

1. 신청인 현황					
성 명	강00(남)	연 령	34세	거주지	남양주시
직 업	화물운송	월소득액	120만원		
2.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유 및 지원현황					
신청사유	신청인이 운영하는 화물운송 영업환경 악화로 운영비용 및 생활비를 금융기관 대여금 및 신용카드에 의존 영업환경 개선 지연으로 대여금 및 신용카드 대금 납입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				
지원현황	'06년 1월 4개기관 총채무액 1,585만원을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651만원으로 조정받음 채무조정 금액을 26개월간 분할상환기로 합의하고 현재22개월 동안 정상상환 중임				
채권기관수	4개 기관	조정 전 채무액	1,585만원	조정 후 채무액	651만원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2006.1	분할상환 개월수	26개월	납입개월수	22개월

[사례 2]

1. 신청인 현황					
성 명	송00(여)	연 령	25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직 업	회사원	월소득액	60만원		
2.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유 및 지원현황					
신청사유	<p>학자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에 의존</p> <p>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상환불능 상태에 빠짐</p> <p>현재 미용실 미용보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분할상환이 가능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p>				
지원현황	<p>'06년 2월 2개기관 총채무액 1,059만원을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540만원으로 조정받음</p> <p>채무조정 금액을 68개월간 분할상환기로 합의하고 현재22개월 동안 정상상환 중임</p>				
채권기관수	2개기관	조정 전 채무액	1,059만원	조정 후 채무액	540만원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2006.2	분할상환 개월수	68개월	납입개월수	22개월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27 (목) 16:00 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2156-9851)	
배 포 일	2008. 3. 27.(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1)	총 8 매

제 목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 ☐ 3.25일(화)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병주) 창립행사를 3.27일(목) 오후 4시 개최하였음
 - * 종로구 청진동의 삼공빌딩 1층 (소액서민금융재단 소재 빌딩)
- ☐ 이날 행사에는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 송월주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등 출연기관, 복지사업단체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음
- ☐ 또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에게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 앞으로 재단의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음

□ 동 재단은 ①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②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③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

□ 동 재단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출연하는 휴면예금 및 휴면 보험금을 주요 재원으로하여 수행할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음

- ①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②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③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④ 그 밖의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재단은 4월까지 복지사업 지원기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5월에는 복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 6월경부터는 재단이 선정한 복지사업자 등을 통해 직접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 할 예정임

□ 한편, 휴면 예금·보험금의 출연을 위한 출연협약 체결은

- 은행(17개사), 보험사(32개사)는 대부분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 저축은행(108개)도 60%가 체결이 완료된 상황임

□ 금융회사의 출연규모는 원권리자에 대한 출연통지후 찾아간 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또한, 재단은 출연된 후에도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 재단, 금융회사 및 소속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 예금 출연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지급 요청을 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임

※ 붙임: 1. 현재 마련중인 금융소외자 대책

2. 소액서민금융재단 개요

3. 소액서민금융재단 임원 명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 1	현재 마련중인 금융소외자 대책
------	------------------

□ 현재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중

① 현재 진행중인 사금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환승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② 신용정보의 내용 및 등급을 조속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 금융소외자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중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의 삭제를 추진

③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하여

- 악성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임

④ 또한,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중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 자활의지가 있는 금융소외자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1. 설립 근거

-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재단 구성

- ☐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임원: 무보수, 비상근직)

- 이사장(1) :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이 사(11) :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회장, 금융위 추천 1인, 복지부 추천 2인, 노동부 추천 1인 (금융위원회가 임명)

- 감 사(1) : 금융위원회가 임명

- ☐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둠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팀 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 예정

3. 재단 운용재원 및 규모

- ☐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

- 금융회사 출연규모(예상) : 약 2,000억원

【 출연협약 체결 진행 상황 】

- 재단과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협약체결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만간 협약 체결이 완료될 예정
- 실질적인 휴면예금의 출연시기는 4월초순부터 이루어지고, 출연규모도 이때 확정하게 됨

4. 재원 운용방향

- 소모형 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 지원에 자원 배분
-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5. 주요 사업

- ①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②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③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④ 저소득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기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⑤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의 지급
- ⑥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

6. 향후 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 복지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금신청 규모, 재단의 차년도 예상 운용수익 및 원권리자 상환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복지사업 지원계획을 확정 한 후

※ 복지사업자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08.4월)

복지사업자 자격심사 및 지원계획 수립('08.4~5월)

복지사업자 신청 접수·심사('08.5월)

복지사업자 지원('08.6월)

- 직접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재단이 선정한 복지사업자 등을 통해 금년 6월경부터 실시할 예정


☐ 원권리자 보호

- 출연직후부터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재단, 금융회사, 금융회사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출연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 휴면예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경우 본인확인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재단에서 휴면예금을 지급하게 됨

※ 원권리자 지급 절차 :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회사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금융회사가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이체

첨부 3	소액서민금융재단 임원 명단
------	----------------

임원	성명	직위	선출방식
이사장	김병주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이사장	임명직
감사	황덕남	법무법인 세계 변호사	임명직
이사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당연직
"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당연직
"	정종수	노동부 차관	당연직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당연직
"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당연직
"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당연직
"	김공진	휴면재단 설립위원장	임명직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명직
	최 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정책학 교수	임명직
"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임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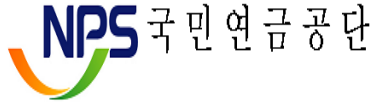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8. 5. 29(목) 조간 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2156-9851)	
배 포 일	2008. 5. 2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2 매

제 목 :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 ☐ 지난 3.25일(화)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의 신청·접수를 '08.6.2일(월)부터 개시할 예정
- ☐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07.12.31.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 * 신청 대상 : 약 29만명 추정
- ☐ 신청기간 : '08.6.2일부터 10.31일까지
- ☐ 신청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
- *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 동 방안 이용자는 국민연금 대여 즉시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 1년이상 성실 상환시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보 도 자 료 2008. 5. 29일 조간부터 취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작성부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팀	
작 성 자	팀장 김중식	
배 포 일	2008.5.28. 배포부서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신중호팀장(02-6362-0229)	

제 목 :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시행

< 주요내용 >

- ☐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08. 3. 25.(화)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2008. 6.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되면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을 조정·확정함

 -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
 - * 채무조정 수준은 채무자별 채무성격(연체이자 규모, 금융회사의 상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 동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나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동 조정된 채무를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
 - * 상환금액 예시는 첨부자료 참조

②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함

 -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여이자율은 연 3.4%(연체 이자율 연 12.0%)

※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③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동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임

* 29만명 정도로 추산됨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 중인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은 2008. 6. 2.부터 10.31. 까지임

○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채무자>

○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남

이에 따라 금융회사 거래 실적으로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등 원활한 금융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안내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 부실채권을 조기회수함으로써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및 자산건전성 제고 가능

- 금번 지원방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시장경제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 2008. 4. 30. 현재 3,554개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 한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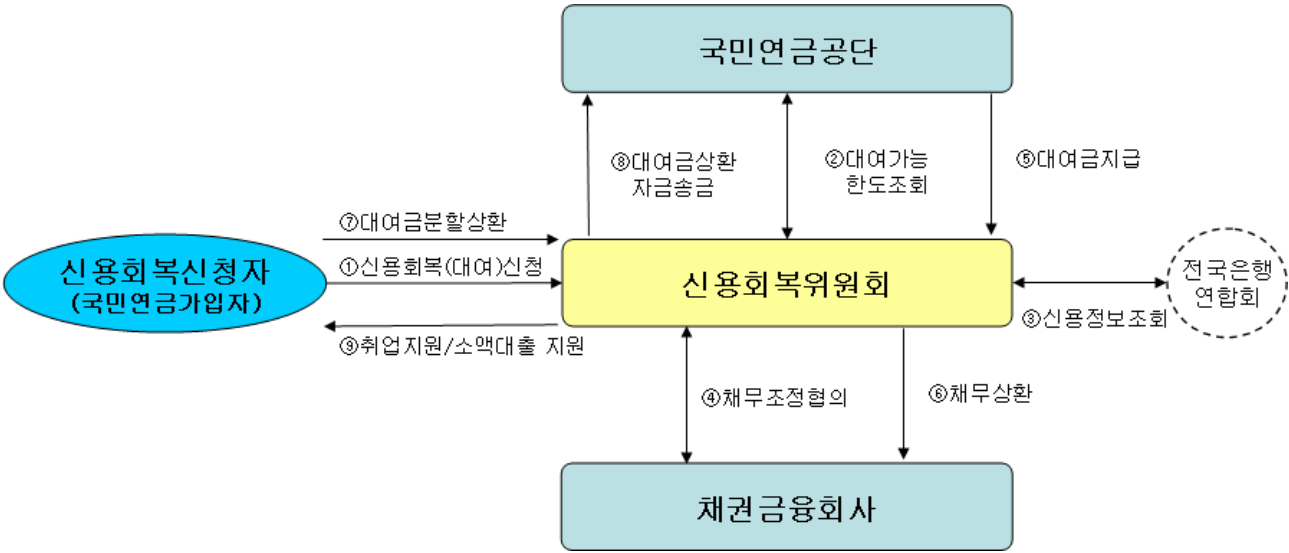
※ 첨부 : 주요내용 및 지원체계

※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신 청 기 간	▪ 2008. 6. 2. ~ 2008. 10. 31.																		
신 청 장 소	▪ 신용회복위원회 21개 상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신 청 서 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 청 대 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조정된 채무를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 - 조정 된 채무의 현재가치 환산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초과금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의 10%이내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채무조정기준	▪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 [채무조정예시] <div>(단위 : 천원)</div> <table><tr><th>구분</th><th>원 금</th><th>연체이자</th><th>합 계</th><th>비고</th></tr><tr><td>조정 전 채무액</td><td>5,000</td><td>5,000</td><td>10,000</td><td rowspan="3">현재가치 환산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68.54%임 (5,000×68.54%=3,427)</td></tr><tr><td>조정 후 채무액</td><td>5,000</td><td>-</td><td>5,000</td></tr><tr><td>현재가치 환산액 (채무상환금액)</td><td>3,427</td><td>-</td><td>3,427</td></tr></table> ▪ 국민연금대여가능액(국민연금보험료 납부총액×1/2 범위내)≥현재가치 환산액인 경우 지원가능 ▪ 단 현재가치 환산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이국민연금대여가능액의 1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 채무상환 금액은 채무자별 채무성격(연체이자 규모, 금융회사의 상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구분	원 금	연체이자	합 계	비고	조정 전 채무액	5,000	5,000	10,000	현재가치 환산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68.54%임 (5,000×68.54%=3,427)	조정 후 채무액	5,000	-	5,000	현재가치 환산액 (채무상환금액)	3,427	-	3,427
구분	원 금	연체이자	합 계	비고															
조정 전 채무액	5,000	5,000	10,000	현재가치 환산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68.54%임 (5,000×68.54%=3,427)															
조정 후 채무액	5,000	-	5,000																
현재가치 환산액 (채무상환금액)	3,427	-	3,427																
국민연금대여조건	▪ 이자율 :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후 국민연금대여 시 까지 소요기간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1 ~ 1.5개월																		
국민연금납부보험료 총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연금대여가능액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21개 상담소를 방문하면 즉시 확인 가능																		
기타 문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www.ccrs.or.kr, ☎1600-5500)																		

2. 지원체계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국민연금대여금 지급 시까지는 1 ~ 15개월이 소요됨


 금융위원회	<h1>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h2>2008. 6.2(월) 석간부터 보도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2156-9851)	
배 포 일	2008. 5. 30 (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1 매

제 목 : 신용회복지원 기록 삭제 행사 개최

- ☐ 금융위원회는 6.2일(월) 오전 10시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 기록 삭제 행사'를 개최하였음
 - 동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전광우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텔런트 전인화씨,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김병주 소액서민금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음
- ☐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제1호 접수자 및 신복위 직원들을 면담·격려하였음
- ☐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DB와 연결된 컴퓨터의 삭제 버튼을 직접 눌러
 -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 (약 24만명*)의 '신용회복지원중' 이라는 기록을 삭제하였음
 - *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상록수 프로그램 성실 이행자를 포함할 경우, 27만명 수준
- ☐ 이날 전인화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마스코트인 '희망 오뎅이'를 전달하면서
 - 앞으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h1>브 리 핑 자 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h2>2008. 6.2(월) 석간부터 보도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박주영 사무관(2156-9853)	
배 포 일	2008. 5. 30.(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제 목 :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추진

1. 추진 경과

- ☐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보유(최대 8년)하게 됨으로써
 -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취직·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 취직 또는 대출시에 기업 및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8.6.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에 있다는 기록을 삭제*하였음
 - * 연체기록정보 : 바젤II 협약에 따라 5년간 보유 필요(금번 삭제 대상에서 제외)
- ➡ 신용등급 등 산정시 2년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자와 동일”하게 간주
- ※ 수혜 대상 :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약 27만명
 - * 신복위, 희망모아, 상록수 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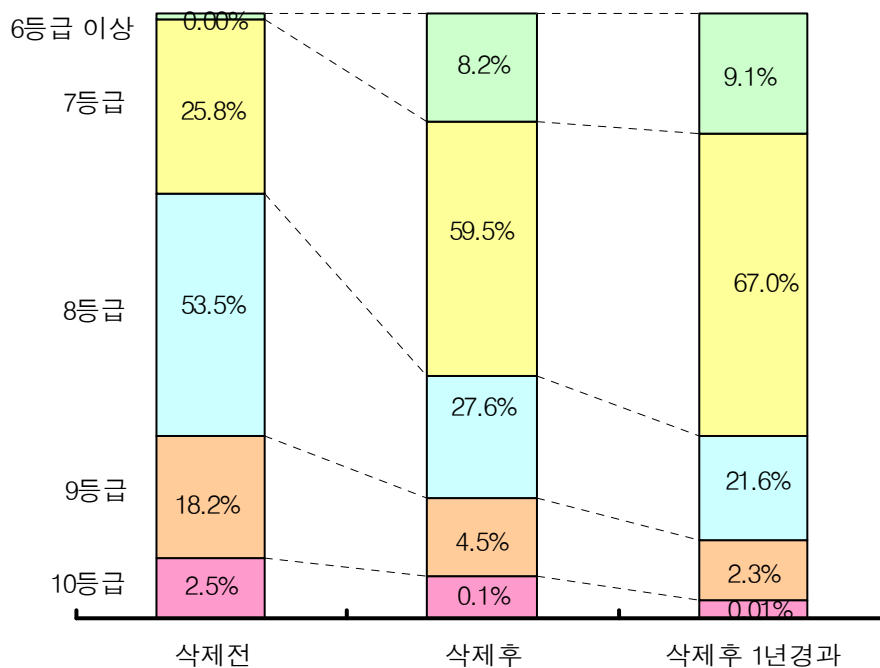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2. 기대 효과

① 신용등급 상향 효과

- “신용회복지원 중”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중인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정보 삭제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예시 : 은행 6등급 이상, 저축은행 7등급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용회복중이라는 기록삭제시 등급변동 예상>



(Korea Credit Bureau 등급 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② 대출시 편의 증대 효과

- 현재 “신용회복지원 중” 정보 등재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동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사실상 곤란
- 동 정보가 조기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삭제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과거 연체 기간 및 연체액 등에 따라 변동)
 -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이 증가하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③ 일상 생활시 불편 해소 효과

- 동 정보 삭제에 따라 신용조회서 등에 신용회복지원 중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취업활동이 용이*

※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 삭제 관련 사례 참고


3.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후에라도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3개월 이상 연체시)
 - “신용회복지원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

(참고)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 삭제 관련 사례

성 명	이 ○ ○	나이(성별)	30세(남)	직 업	할인점 일용직
□ 신청인 현황					
<p>○ 2003년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의 도움으로PC방을 개업하였으나 주변에 경쟁업체가 증가하여 매출이 부진하자 대출과 신용카드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함</p> <p>결국 2년 만에 폐업하고 취업을 모색하면서 시간제일용직 등으로 일함</p> <p>연체된 금융회사 채무45백만원(원금 30백만원, 연체이자 15백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4백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받아2005년 5월부터 월25만원씩 36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 중</p>					
□ 신용정보에 의한 불이익 경험					
<p>○ 2008년 2월 중견 전자회사의 영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하였고, 구인회사에서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한 후채용여부 회신을 기다리던 중 채용불가 통지를 받음</p> <p>구인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불합격 사유를문의한 결과 신용조회서에 기재된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 중 기록)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됨</p> <p>이에 따라 신용회복 채무를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였음에도 신용정보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아 경제적 희생 가능성에 회의가 들었음</p>					
□ 특수기록정보 삭제 결과					
<p>○ 금번 특수기록정보 삭제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취업 제한요인의 하나였던 것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면서 취업희망을 갖게 되었음</p>					
□ 신청인 근황					
<p>○ 현재 대형할인점에서 일용직으로취업하고는 있으나 원하는 취업분야인IT기업의 구인정보를 찾아 입사지원을 할 계획임</p>					

 금융위원회	<h1>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h2>2008. 6. 30(월) 11:00부터 보도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2156-9851)	
배 포 일	2008. 6. 27.(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3 매

제 목 :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은 지난 6.23일(월)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복지사업자 및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지원규모를 결정
- 지원대상 복지사업자는 총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총 200억원으로 결정
- * 신나는 조합(3억원), 사회연대은행(25억원), 신용회복위원회(60억원), 한마음 금융(60억원), 근로복지공단(32억원), 실업극복재단(20억원)
- **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복지사업자들에게 무이자 대출
- 복지사업자는 동 지원금을 창업·취업 지원, 신용회복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
- 이와 관련 6.30일(월) 오전 11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동 행사에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이사장(김병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복지사업자 대표, 출연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

- 7월부터는 저소득층이 창업·취업시 필요한 자금,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 또는, 신용회복지원* 중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이들 복지사업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대출자격,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은 이들 복지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해질 예정
- '08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9년부터 본격적인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세부 행사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05	5분	개회, 내빈소개	재단 사무처장
11:05 ~ 11:10	5분	인사말씀	이사장
11:10 ~ 11:20	10분	복지사업 지원금 교부	이사장, 복지사업자
11:20 ~ 11:25	5분	복지사업자 답사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이사장
11:25 ~		폐회	사무처장
11:30 ~		기념촬영	내외빈

※ 불임 : 복지사업자 현황 및 연락처 1부.

※ 동 보도참고자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도 동시에 배포하였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복지사업자 현황 및 연락처

사업분야	법인명	대표자	연락처
창업·취업지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신명호	(02)365-0330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02)2274-9637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1588-0075
신용회복지원	(사)신용회복위원회	홍성표	1600-5500
	한마음금융(주) (자산관리공사)	신충태	1588-3570
사회적기업지원	(재)실업극복재단	송월주	(02)338-0019
계	6개 기관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7.24 (목) 12:00부터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 (2156-9851)
배 포 일	2008. 7. 2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8 매

제 목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I. 추진 배경

- ☐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쳐진 계층이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감소 ⇒ 금융소외계층 확대 및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 ⇒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 이에 정부는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행태, 시장규모, 사금융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금번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저신용층 (신용등급 7~10등급, '08.5월말 현재) : 720만명 수준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만명)

- ('05말) 297.5 → ('06말) 279.6 → ('07말) 258.3 → ('08.5) 248.3

II.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반영

- ☐ 금융이용자의 사금융 이용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08.3월 ~ 5월)

<금번 대책의 토대가 된 주요 조사내용>

- ①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대부업체 이용 128만명, 사인간 거래 61만명)
-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대부업체 대출규모 : 10.0조원)
- ③ (채무 규모)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대부업체의 경우 약 783만원,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약 2,341만원
- ④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
* 무등록 대부업체 및 사인간 거래 포함
- ⑤ (상환의지) 사금융 이용자들의 84.0%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
- ⑥ (요구하는 정부대책)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 '생계비 대출', '불법채권 추심의 최소화', '취업기회의 제공' 순으로 나타남

Ⅲ.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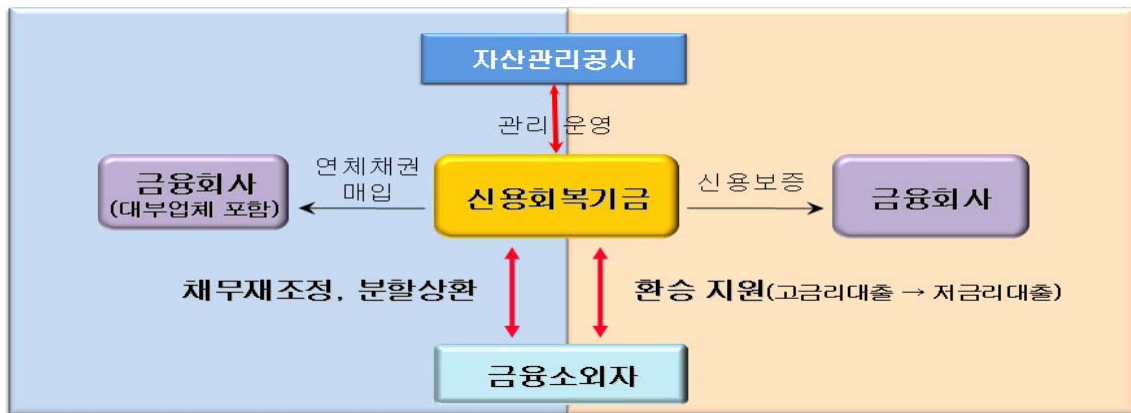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의 3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
- 2)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3)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



1. 신용회복기금 설치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09년중 지원규모 확대)

(1) 지원 방안



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대출회사(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12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운용 방식)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

* '신용회복지원중'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상환시 동 기록 삭제

②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을 지원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환승지원 실시

- (운용 방식) 금융회사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토록 추진
- ☐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08년 중에는 KAMCO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정부 소유 은행 배분금이 투입되는 대로 우선 상환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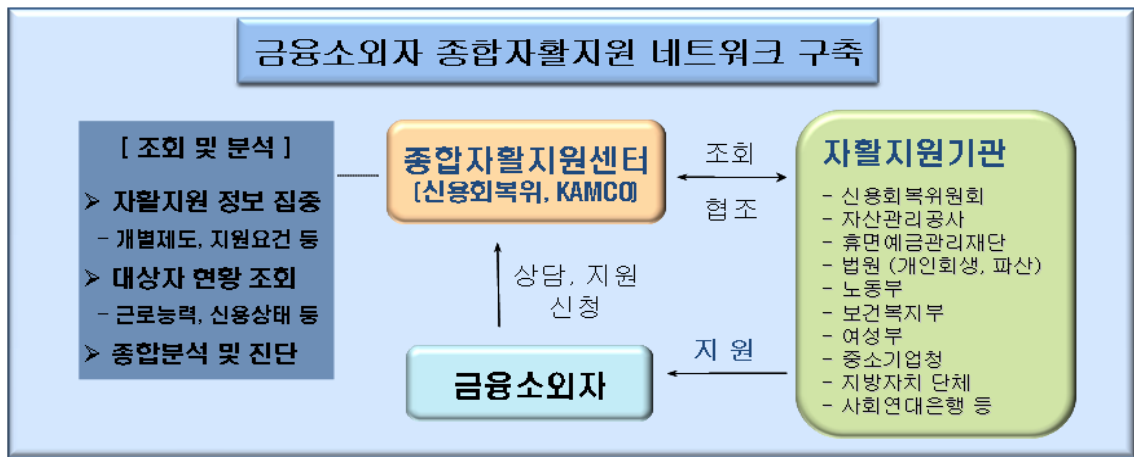
-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대상자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08년에는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2.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08년 하반기 구축 개시, '09년중 본격 가동)

◇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

⇒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①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 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에 대한 분석
 - ② 금융소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을 종합 조회
 - ③ 금융소외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3.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09년중)

- ☐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 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재원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

*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포함시켜 상설 운영을 추진

4.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검토 ('09년중)
- ② 휴면예금의 기부절차 마련 ('08년 하반기)
- ③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한도 제공 체크카드 발급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 방안 검토 ('08년 하반기)
- ④ 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08년 하반기)

5.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 채권추심행위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

* 현재 채권 추심관련 규제는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상이한 내용으로 산재

<별첨> 신용회복기금 유형별 지원 사례(예시)

사례 1. 재기 기회를 찾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


성 명(연령)	A○○(40세)	직 업	임시직(청소용역)
채 무 현 황	00카드 1천2백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80만원(불안정) 기초수급자
<p><현 황></p> <p>□ A씨는 2001년경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병마에 시달리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곤궁한 생활 끝에 2003년 정부의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을 키우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느 순간 빚이 급증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안정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늘어나는 카드빚을 도저히 갚기 어려운 상태 			
<p><지원 내용></p> <p>□ A씨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남에 따라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원금에 대해 5년에 걸쳐 납부기로 함 ○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긴급 생활 자금을 조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이 회복됨 ○ 현재 직장에서 5년 넘게 청소용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자활네트워드를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받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업무 전문화 교육을 알선받아 정식으로 청소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됨 			

사례 2.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B씨

성 명(연령)	B○○(27세)	직 업	방문교사
채 무 현 황	저축은행 4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100만원
<p><현 황></p> <p>□ B씨는 대학 재학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4곳에서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연체 경력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게 되었음 ○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갚고,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음 ○ 어렵게 방문교사로 취직을 하여 연체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으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는 늘어난 연체이자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업체로부터의 야간 추심, 아내에 대한 채무 통보,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음 ○ 어쨌든 채무를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대부업체 채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신용회복을 포기한 상태임 			
<p><지원 내용></p> <p>□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자에만 국한되었으나 금번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B씨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씨는 본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를 인수한 신용회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매월 20만씩 40개월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갚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또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가 가능해짐 			

사례 3. 환승론을 통해 딸아이의 교육비를 되찾은 C씨

성 명(연령)	C○○(35세)	직 업	직장인
채 무 현 황	캐피탈 1,500만원 대부업체1,0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200만원
<p><현 황></p> <p>□ C씨는 6살짜리 딸 및 가정주부인 아내와 함께 살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씨는 캐피탈사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 급전이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로 추가 대출이 거부되어 할 수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음 ○ 캐피탈사의 대출에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자 C씨는 한 달에 7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여야 하기에 선택적으로 딸아이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음 			
<p><지원 내용></p> <p>□ C씨는 종합 자활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환승론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기금은 C씨의 캐피탈 및 대부업체 채권 2,500만원에 대한 부분 보증을 지원하여 협약을 맺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70여만원의 이자가 50여만원으로 줄어들음에 따라 차액분으로 딸아이의 추가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참 고 자 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 (2156-9851)
배 포 일	2008. 7. 2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1 매

제 목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 금융위원회는 금일(08.7.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① 신용회복기금 설치
- ②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 ③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 ④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 ⑤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 상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08.7.25일(금) 오전 9시부터 콜센터 (1577-9449)를 운영할 계획이오니 이용자 문의사항은 동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20. 허태열 의원

1.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시 신용조회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 대부업체의 신용조회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대출시 신용도 판단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어음·수표 등에 대한 부도 정보 등만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대출액, 현금서비스 사용액, 보증내역 등은 대부업체 제공 불가

□ 또한 정부는 고객의 정보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08.7.24 입법예고)

2. 손해보험 중복가입 방지대책

□ 개인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03.10월부터 “의료비보험 계약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중복가입을 방지하여 왔음

○ 생보사의 개인의료실손보험 판매에 따라 08.5월 생명보험 협회도 “의료실손보험 중복계약조회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두 시스템은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단, 생명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03.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에는 교환할 실손의료보험정보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는 03.10월이전의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정보는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그 밖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주로 가입

○ 이들은 자신의 보험가입현황을 소상히 인지하여 중복 가입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중복가입방지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향후 보험정보의 집중과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중복계약조회시스템의보험정보의 범위를 넓히도록 유도할 예정

3.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이행조치 관련

-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이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과 관련한 이행조치 실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최근 3년간 금융위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성 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업체	직 위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안00	서기관	06. 2.27	한동대	교수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금감원	감사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위원장	07. 8. 3	-	-
윤00	부위원장	07.12.21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박00	상임위원	08.1.2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00	위원장	08.3.5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이00	FIU원장	08. 4. 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김00	혁신행정과장	08. 5. 1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5. 4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현황 및 인적사항

□ 최근 3년간 4급이상 퇴직자 현황

성명	퇴직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현 직위
이○○	서기관	05. 7.11	금융감독원 실장
이○○	상임위원(1급상당)	05.12. 9	금융감독원 부원장
석○○	기획행정실장(1급)	06. 2.15	하나금융지주 감사
안○○	서기관	06. 2.27	한동대 교수
양○○	부위원장(차관급)	06. 9.11	-
문○○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7. 2.28	금융감독원 감사
송○○	일반계약직4호	07. 6. 7	-
정○○	기획행정실장(고위공무원)	07. 7.27	보험개발원장
윤○○	위원장(장관급)	07. 8. 4	-
윤○○	부위원장(차관급)	07.12.21	중소기업은행장
박○○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8.1. 2	예금보험공사사장
김○○	위원장(장관급)	08. 3. 5	-
이○○	부위원장(차관급)	08.3.13	-
이○○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	08.3.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FIU제도운영과장(4급)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김○○	혁신행정과장(3급)	08.5.15	법무법인 태평양
최○○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08.9.2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6. 모기지 보험 관련 현황, 운용방안 및 향후 계획

- 모기지 보험(MI: Mortgage Insurance)은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05.8.31)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한 제도임

*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내 85㎡(25.7평형) 이하 주택구입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LTV 비율 상향(60%→80%) 적용

- 07년 말부터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젠워스보험에서 상품을 취급중이며 계약실적은 계속증가 중

<모기지 보험(MI) 계약실적>

(단위 : 억원, 수입보험료 기준)

07.1월	08.1월	08.2월	08.3월	08.4월	08.5월	08.6월
0.15	1.08	1.88	3.60	2.64	4.02	6.37

- 모기지 보험의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 취급 금지 등 많은 제한이 있고 모기지신용보험(MCI : Mortgage Credit Insurance)*라는 성격이 유사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임

* LTV 산출방식에 따라 차감되어야 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험 또는 보증을 근거로 은행이 추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상품

<모기지 신용보험(MCI) 계약실적>

(단위 : 억원, 수입보험료 기준)

07.1월	08.1월	08.2월	08.3월	08.4월	08.5월	08.6월
53.60	54.39	35.26	47.75	69.17	71.37	55.98

- ☐ 부동산시장이 진정되면서 모기지보험의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음

* 08.6.27 감독규정개정으로 모기지보험으로 인한 LTV비율 상향한도를
80%에서 85%로 조정

7. 공직자 재취업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재취업 현황

☐ 별첨 참조

<별첨>

성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기관	직책
이00	위원장	00. 1.12	재정경제부	부총리
김00	상임위원	00. 2.26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00	서기관	00. 2.29	-	-
이00	위원장	00. 8. 9	-	-
정00	부위원장	01. 4. 2	산업은행	총재
연00	상임위원	01. 4.20	금융감독원	감사
남00	감독정책1국장	01. 5. 1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실	비서관
박00	기획과장	01. 6.28	코스닥증권시장	전무이사
강00	상임위원	02. 1.17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00	기획행정실장	02. 5.22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00	위원장	03. 3.17	-	-
유00	부위원장	03. 3.21	산업은행	총재
이00	상임위원	03. 5.10	금융감독원	감사
박00	기획과장	04. 5.28	코스닥증권시장	전무이사
이00	위원장	04. 8. 3	-	-
정00	서기관	04. 8.31	주택금융공사	팀장
이00	부위원장	04. 9. 3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00	기획행정실장	04.10.15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이00	서기관	05. 7.11	금융감독원	팀장
이00	상임위원	05.12. 9	금융감독원	부원장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안00	서기관	06. 2.27	한동대	교수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금융감독원	감사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위원장	07. 8. 3	-	-
윤00	부위원장	07.12.21	중소기업은행	행장
박00	상임위원	08.1.2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00	위원장	08.3.5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이00	FIU원장	08.3.28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김00	혁신행정과장	08.5.1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8. 9. 10.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등

☐ 별첨 참조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등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처분요구 내용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펀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12.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일지, 추진 경과, 향후 추진 일정

☐ 별첨 참조

① '03.8.30일 금융소비자 편익 및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1단계(03.8.30~)	2단계(05.4.1~)	3단계(07.4.1~)
생보	개인저축성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그 외 모든 생명보험
손보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단체상해 제외)	개인보장성 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그 외 모든 손해보험

② '05.2.17일 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방카슈랑스 추진 과정
에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고려
하여 당초 일정을 일부 연기

	1단계 (03.8~)	2단계 (05.4~)	3단계 (06.10~)	4단계 (08.4.1~)	허용유보
생보	개인저축성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순수보장성 제3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중 만기환급형 제3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전체	단체보험 기업보험
손보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 (단체상해 제외)	개인보장성 보험 중 순수보장성 제3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중 만기환급형 제3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기업보험

- ① 보장성 보험 : 납입한 보험료가 만기에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보다 큰 보험
 · 순수보장성 : 보장성 보험 중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 0
 · 만기환급형 : 보장성 보험 중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 0
 ② 저축성 보험 : 납입 보험료가 만기에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보다 작은 보험
 ③ 제3보험 :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③ '08.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08.4.1일 이후
시행예정이던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

* '08.3.28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향후 별도 추진 일정 없음

13.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접수한 의견 및 건의내용, 조치사항

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계 의견

※ 별첨 참조

② 조치 사항

- '08.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험업계 등의 입장을 검토한 후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 '08.3.28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 별첨 :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계 의견 >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관련 건의문

2007. 6

존경하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보험업계는 200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 요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3년 8월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의 Triple-win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취지하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소비자 혜택 미미,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심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전면 개방 일정이 연기 조정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당국에서는 이러한 폐해들을 시정함으로써 방카슈랑스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하여 우리 보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 존립의 기반이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개개인에게는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리 보험업계는 더욱 절박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

방카슈랑스는 외견상 고객의 편의와 선택기회를 증진하고 보험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개선’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화로 인해 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은행·보험 산업간 상호동시 시장개방이나 10여년 이상의 시장순응 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와도 대비되는 정책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강압판매로 인한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 되는 등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고객피해 우려입니다

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제한적인 개방하에서도 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실적위주의 무리한 영업에 따른 대출고객 강압판매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8단계에 걸친 고객과의 만남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전문적인 컨설팅과 언더라이팅,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장성보험이 추가 개방될 경우 보험가입 본연의 목적인 보장혜택이 부실해지거나 아예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판매는 보험계약의 조기해지를 유발하고 해약환급금 과소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는 한 단순히 규제나 감독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의 피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보험의 은행종속화 등 금융산업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종합금융기관화 등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권내 은행의 자산비중은 2006년 71% 수준으로 급성장 하였고 연간 13조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은행자산비중 : 97년 38.5 → 06년 71.2% (↔ 美 26%, 日 25%)

보험권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 확대의 제한, 저금리에 따른 보유계약 부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 유사보험과 외자계의 경쟁격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보험회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은행종속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이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계약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율 증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Compliance Risk 증가 등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불공정 경쟁환경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탈락과 실업 급증도 우려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판매주력상품이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은행에 개방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즉, 은행이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인 가격덤핑 정책을 펼칠 경우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설계사 및 대리점의 상당수가 영업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결국 고객이탈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대량탈락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측에서 보험료를 10~15% 가격인하 시킬 경우 설계사의 약 45%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상 탈락규모는 9만4천여명 수준 (전체설계사 21만여명)

설계사 및 대리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가 여성 가장으로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노동인력의 대량실업 문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정책에 배치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 전체 서비스·판매직 여성중 설계사는 8.5%占 (05年, 통계청)

넷째, 중소형사의 경우 높은 은행 편중도로 경영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4大 은행이 전체 방카슈랑스 매출의 7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가 주력채널화 되어 있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고금리 상품요구, 변칙적인 수수료 요구 등을 생존전략 차원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매 제휴를 중단할 경우 경영효율화는 커녕 급격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제휴중단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 직전까지 간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 Abbey National Bank와 Friends Provident Life의 결렬사례

Standard Life와 Halifax Bank '92년 제휴 결렬로 경영위기

다섯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판매전문 인력도 완전판매를 위해 단계별 판매 프로세스를 통해야 하는 전문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전문금융상품을 비전문 판매인력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도 은행원의 보험판매는 허용치 않고있는 실정이며,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은행에서 의 보장성보험 판매는 1~2%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보장성보험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금융상품이므로, 은행판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결과이며 더불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의한 고객피해를 근절 하기위한 강력한 규제조치 실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전무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시장의 재분배를 위한 단순한 판매채널의 추가일 뿐 신규시장 창출 효과는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제도 보완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보험산업의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종신, CI 등 보험 본연 기능에 충실한 상품과 연금 등 장기투자 상품의 적정 배분으로 보유계약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반면 은행은 판매가 용이하고 수수료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고이율상품·투자형상품 및 저가보장성 상품으로 시장을 왜곡 시키는 물론 향후 금리하락 및 주식시장 침체시 고객피해는 물론 보험사의 경영악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 본인보호 뿐 아니라 제3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강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수료 수입확대를 목적으로 철저한 계약심사 없이 불량물건의 일괄인수를 강요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을 높여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더욱 높습니다.

3. 건의사항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추가 개방될 경우 발생할 소비자 피해와 금융업권간 공정경쟁 환경 저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창구 판매에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우려가 높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불완전 판매 예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 이익증대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아무런 Risk 부담 없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취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는 은행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의 유지·관리를 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Compliance Risk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산업의 은행 편중도는 확대되는 반면 보험산업은 점차 위축되는 불공정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보험사의 은행 종속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세계 7위의 경쟁력과 자산 266조의 규모, 직접 종사자수만 30만명에 달하는 보험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업계는 2008.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장정보
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개방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차제에 금융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충분한 연
구와 논의과정을 거쳐 보험업계와 금융산업 전반이 모두 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6.

생명보험협회 회장 남 공 훈

손해보험협회 회장 안 공 혁

14. 최근 3년간 타 기관 및 업체파견자 현황

☐ 별첨 참조

□ 최근 3년간 타 기관 파견 현황

구분	파견 기관명	성명	직급
2006	금융정보분석원	전○○	서기관
	금융정보분석원	전○○	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김○○	사무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최○○	서기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변○○	서기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이○○	서기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	사무관
2007	금융정보분석원	전○○	고위공무원
	금융정보분석원	전○○	서기관
	금융정보분석원	이○○	서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박○○	서기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남○○	서기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이○○	사무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	서기관
200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김○○	고위공무원
	미래기획단	신○○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김○○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	서기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이○○	서기관
	미래기획단	이○○	사무관
	대통령실	김○○	서기관
	대통령실	배○○	서기관
	대통령실	강○○	행정주사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관	남○○	서기관

15. 최근 3년간 타기관, 타 업체로부터 금융위에 파견
근무자 현황 및 법적 근거

☐ 별첨 참조

□ 타 기관, 타 업체로부터 금융위에 파견 근무자 현황 및 법적근거

1. 금융위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최근 3개년)

가. 2008. 8. 31 현재(금융위)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 (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자문관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08.4.7 ~ 09.4.6 (1년)	금융위 주요정책 관련 위원장자문업무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08.4.21 ~ 09.4.20 (1년)	경제동향파악 자료 수집, 세미나자료작성
"	"	"	한○○	08.5.15 ~ 09.5.14 (1년)	경제동향파악 자료 수집, 세미나자료작성
법률자문관실	"	"	장○○	08.6.23 ~ 09.6.15 (1년)	경제동향파악 자료 수집, 세미나자료작성
"	자산관리공사	대리	이○○	08.4.21 ~ 09.4.20 (1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혁신행정과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정○○	"	정부업무평가 혁신 업무수행
"	자산관리공사	과장	오○○	"	과징금, 과태료 징수 및 관리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조○○	"	법률자문, 유권해 석검토, 소송수행
"	예금보험공사	과장	장○○	"	법률자문, 유권해 석검토, 소송수행
의사운영정보팀	금융결제원	과장	박○○	"	금융분야정보보안
"	예금보험공사	과장	박○○	"	정보시스템운영
금융정책과	중소기업은행	대리	이○○	"	금융회사 여신전반 에 대한 통계
"	한국증권금융	과장	정○○	"	외환 및 자본시장 관련 통계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 (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금융시장분석과	농협중앙회	"	황○○	08.4.21 ~ 09.4.20 (1년)	금융시장 동향예측
"	한국증권금융	대리	이○○	"	주식시장 동향분석
산업금융과	산업은행	과장	박○○	"	국책은행 민영화 관련 업무
금융구조개선과	예금보험공사	과장	김○○	"	공적자금 및 예보 관련 업무
"	"	주임	황○○	"	공적자금 및 예보관련 업무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08.6.23 ~ 09.6.15 (1년)	금융회사 진·출입 지원
"	산업은행	과장	이○○	08.4.21 ~ 09.4.20 (1년)	금융클러스터 지원
은행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윤○○	08.6.23 ~ 09.6.15 (1년)	은행산업동향 파악
"	예금보험공사	주임	한○○	08.4.21 ~ 09.4.20 (1년)	금융시장 동향 파악
보험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	보험산업, 보험시장 관련 업무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정○○	"	상호저축은행 관련 업무
"	"	"	장○○	08.6.23 ~ 09.6.15 (1년)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
자본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이○○	08.4.21 ~ 09.4.20 (1년)	유가증권·코스닥규 정제·개정
"	증권업협회	과장	허○○	"	증권산업자율규제
자산운용과	증권예탁 결제원	과장	신○○	"	자산운용업 통계조사 및 관리
공정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박○○	"	증조심안건 검토, 시 감위험안 검토
"	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	전○○	"	회계감사기준 검토, 회계법인등록
FIU 제도운영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08.6.23 ~ 09.6.15 (1년)	금융감독기구 검사 지원 및 사후관리
FIU 심사기획팀	"	수석검사역	이○○	08.4.21 ~ 09.4.20 (1년)	금감위·금감원 요청 거래 분석

나. 2007. 12. 31 현재(금감위)

근무부서	과 건 근 무 자			과건기간	과건필요성(담당업무)
	원 소속	직위(급)	성 명		
부위원장실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 ○	06.5.29~08.5.28 (2년)	일정관리, 회의자료준비
자문관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 ○	07.8.13~08.8.12 (1년)	경제 및 금융정책 자문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 ○	07.9.10~ 08.9.9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	김 ○ ○	07.4.11~08.4.10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사무원	주 ○ ○	06.4.27~08.4.26 (2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법률자문관실	"	조사역	최 ○ ○	06.4.27~08.4.26 (2년)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	"	사무원	정 ○ ○	06.9.1~ 08.8.31 (2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홍보관리관실	"	"	서 ○ ○	07.4.11~08.4.10 (1년)	"
정책홍보팀	증권선물 거래소	사원	김 ○ ○	07.12.31~08.12.30 (1년)	전산시스템 지원
"	"	과장	이 ○ ○	07.7.31~08.7.30 (1년)	전산시스템 지원 전산보안
기획행정실장실	금융감독원	사무원	임 ○ ○	06.1.5~ 08.1.4 (2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혁신행정과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배 ○ ○	06.2.23~ 08.2.22 (2년)	과징금 징수, 소송
"	"	선임조사역	정 ○ ○	07.8.13~ 08.8.12 (1년)	정부업무평가
"	"	조사역	이 ○ ○	07.4.11~ 08.4.10 (1년)	혁신과제 추진, 민원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기획과	"	선임조사역	홍○○	06.4.27~ 08.4.26 (2년)	금융규제합리화
"	"	조사역	김○○	07.4.11~ 08.4.10 (1년)	국무회의, 차관회의
"	증권선물 거래소	대리	정○○	06.6.13~ 08.6.6 (2년)	정보의제관리
"	자산관리공사	주임	조○○	07.2.12~ 08.2.11 (1년)	대내외 회의자료 검토
국제협력과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	07.4.11~ 08.4.10 (1년)	정보화 업무 전산
"	수출입은행	과장	박○○	07.1.25~ 08.1.24 (1년)	국제협력 업무
의사운영팀	금융감독원	조사역	이○○	07.4.11~ 08.4.10 (1년)	금감위 회의 운영
감독정책과	자산관리공사	주임	전○○	07.7.9~ 08.7.8 (1년)	공적자금 관련업무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07.4.11~ 08.4.10 (1년)	금융, 기업 구조 조정
"	"	선임조사역	조○○	07.4.11~ 08.4.10 (1년)	법제업무
"	자산관리공사	과장	김○○	05.7.29~ 07.7.28 (2년)	공적자금 관련업무
"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서○○	07.7.31~ 08.7.30 (1년)	금융시장 모니터링
은행 감독과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	06.4.27~ 08.4.26 (2년)	은행 인·허가
"	"	"	최○○	07.4.11~ 08.4.10 (1년)	특수은행 감독

근무부서	과 건 근 무 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 소속	직 위(급)	성 명		
은행감독과	자산관리공사	과장	이○○	07.2.12~ 08.2.11 (1년)	신용정보업
비은행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정○○	06.4.27~ 08.4.26 (2년)	상호저축은행 감독
〃	〃	〃	조○○	06.5.2~ 08.5.1 (2년)	상호금융, 여전업 감독
〃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과장	변○○	06.7.4~ 08.6.30 (2년)	상호저축은행 감독
복합금융감독과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	07.4.11~ 08.4.10 (1년)	금융시장동향
복합금융감독과	증권선물 거래소	조사역	금○○	07.9.10~ 08.9.9 (1년)	기업자금조달시장점검
〃	산업은행	과장	노○○	07.3.14~ 08.3.13 (1년)	파생금융감독 업무
〃	한국은행	조사역	서○○	07.3.12~ 08.3.11 (1년)	외국환업무 감독
감독정책 2국장실	금융감독원	사무원	한○○	07.8.7~ 08.8.6 (1년)	일정관리, 회의자료준비
증권감독과	〃	수석조사역	김○○	06.2.23~ 08.2.22 (2년)	발행 및 공시감독
〃	〃	선임조사역	박○○	07.4.11~ 08.4.10 (1년)	증권사인·허가
〃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김○○	07.7.11~ 08.7.10 (1년)	유가증권 시장감독
〃	〃	과장	정○○	07.2.14~ 08.2.13 (1년)	코스닥 시장감독
〃	〃	차장	김○○	07.3.14~ 08.2.13 (1년)	선물, 파생시장 감독

근무부서	과 건 근 무 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 소속	직 위(급)	성 명		
증권감독과	증권예탁 결제원	과장	박○○	07.3.5 ~ 08.3.4 (1년)	채권시장, 신용평가업 감독
"	증권업협회	"	허○○	07.4.11 ~ 08.3.25 (1년)	증권산업동향
"	한국증권금융	과장	이○○	07.10.9 ~ 08.10.8 (1년)	시장동향분석, 종금사
보험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07.4.11 ~ 08.4.10 (1년)	손해보험감독
"	"	조사역	윤○○	"	생명보험감독
"	"	"	박○○	"	생명보험감독
"	보험개발원	과장	정○○	07.5.17 ~ 08.5.16 (1년)	보험산업감독
자산운용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07.4.11 ~ 08.4.10 (1년)	자산운용산업분석
"	증권예탁 결제원	과장	신○○	07.9.8 ~ 08.9.7 (1년)	리츠·선박펀드 등 감독
"	한국증권금융	과장	홍○○	07.3.15 ~ 08.3.14 (1년)	해외시장 모니터링
"	자산운용협회	과장	노○○	07.8.23 ~ 08.8.22 (1년)	수탁, 채권 평가 등
시장감독과	증권선물 거래소	차장	박○○	07.2.12 ~ 08.2.11 (1년)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등
"	"	"	방○○	07.3.14 ~ 08.3.13 (1년)	시 감 위 규 정 등
"	증권선물 거래소	"	장○○	07.2.12 ~ 08.2.11 (1년)	불공정관련 법령 등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시장감독과	증권선물거래소	대리	이○○	07.3.14~ 08.3.13 (1년)	불공정조치 관련 업무
〃	〃	과장	채○○	07.2.12~ 08.2.11 (1년)	증조심운영 불공정제재
〃	증권예탁결제원	과장	유○○	07.3.14~ 08.3.1 (1년)	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	차○○	07.2.23~ 08.2.22 (1년)	감리위원회 안전검토
〃	회계기준원	연구원	양○○	07.6.1~ 08.5.31 (1년)	회계감독

다. 2006. 12. 31 현재(금감위)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부위원장실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06. 5.~	일정관리, 회의자료준비
자문관	〃		이○○	05. 2.~	경제 및 금융정책 자문
자문관실	〃	선임조사역	변○○	06. 7.~	경제동향, 자료수집
〃	〃	〃	이○○	04. 4.~	자문관 보좌
〃	〃	사무원	주○○	06. 4.~	자문관 보좌
법률자문관실	〃	조사역	최○○	06. 4.~	자문관 보좌
〃	〃	〃	정○○	06. 9.~	자문관 보좌

근무부서	과 건 근 무 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 소속	직 위(급)	성 명		
홍보관리관실	금융감독원	사무원	임○○	06. 1.~	관리관 보좌
정책홍보팀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오○○	06. 1.~	홈페이지 관리
혁신행정과	금융감독원	사무원	조○○	04.10.~	실장 보좌
〃	〃	수석조사역	배○○	06. 2.~	과징금, 소송
〃	〃	선임조사역	정○○	05. 2.~	정부업무평가
〃	〃	조사역	강○○	06. 4.~	혁신과제추진
기획과	〃	〃	김○○	06. 4.~	국회 업무
〃	〃	〃	홍○○	06. 4.~	규 제 합 리 화
〃	자산관리공사	과장	소○○	06. 2.~	경제정책추진점검
〃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정○○	06. 6.~	정보의제 관리
의사국제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06. 4.~	금감위 의사
〃	〃	〃	김○○	06. 4.~	정보화 업무
〃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박○○	05. 8.~	증선위 의사
〃	수출입은행	〃	임○○	06. 1.~	국제 협력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국○○	04. 4.~	기업구조조정
〃	〃	〃	정○○	06. 4.~	법제업무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	사무원	이○○	01. 2. ~	국장보좌
"	자산관리공사	과장	김○○	05. 7. ~	공적자금
"	증권선물 거래소	"	신○○	05. 8. ~	금융시장동향
은행감독과	금융감독원	조사역	장○○	06. 4. ~	은행감독
"	"	"	김○○	06. 4. ~	은행감독
"	자산관리공사	과장	이○○	06. 2. ~	신용정보
비은행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조○○	06. 5. ~	여신전문 등
"	"	"	정○○	06. 4. ~	서민금융
"	저축은행 중앙회	과장	변○○	05. 7. ~	상호저축은행
증권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황○○	05. 2. ~	증권법령, 인가
"	"	"	김○○	06. 2. ~	발행, 공시
"	"	"	이○○	04. 4. ~	국장보좌
"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소○○	05. 7. ~	유가증권시장
"	"	"	안○○	06. 2. ~	선물시장
"	"	"	이○○	05. 2. ~	코스닥시장
"	증권예탁 결제원	"	조○○	05. 3. ~	채권, 신용평가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파견기간	파견필요성(담당업무)
	원소속	직위(급)	성명		
증권감독과	증권금융	과장	박○○	06.10.~	시장동향, 종금
"	증권업협회	"	이○○	05.10.~	규제개혁, 협회
보험감독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05. 2.~	보험법규
"	"	"	손○○	06. 4.~	생명보험
"	"	"	김○○	06. 4.~	손해보험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협회	과장	조○○	06. 8.~	자산운용관련업무
"	증권예탁 결제원	"	신○○	06. 9.~	자산운용관련업무
시장감독과	증권선물 거래소	"	성○○	05. 2.~	불공정거래제도
"	"	"	방○○	06. 3.~	시장감시 규정
"	"	"	정○○	05. 2.~	공시위반 제도
"	"	"	엄○○	05. 2.~	불공정 거래
"	"	"	이○○	06. 3.~	증조심 운영
"	증권예탁 결제원	"	유○○	06. 3.~	외부감사 제도
"	공인회계사회	위원	한○○	05. 2.~	회계감리 제도

2. 파견 필요성

□ 금융위는 금융정책감독분야의 총괄부서로서 금융산업의 대형화 개방화·복합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금융수요자 보호 등 소관 업무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금융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정원이 통합이전 인원에 비해 오히려 20명 축소*되는 등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 금융위 정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

* △20명 = 229명(舊금감위 81, 舊재경부 금융 148) - 209명(금융위)

□ 따라서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관련분야 업무를 지원하고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3. 파견근거

□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 민간전문가 파견 가능

○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금감원의 업무범위중 금융위에 대한 업무지원이 명시

○ (기타기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서 국가적 사업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국가기관의 단체 등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법률 별첨

<별첨> 관련 법률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16.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 관련
금감위, 금감원의 그간 경과 및 논의내용. 재
정부 및 기타 기관과 협의진행 및 협의내용(업
무협조 등 관련 문서 사본), 향후 계획

-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는 보험사가 취급중인 신용
보험과 유사하므로 보험업법내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
할 필요
 - 보험업법·령을 개정('08.12)하여 DCDS 서비스를 보험
상품 범위에 포함할 예정
 - 다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촉진
등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동 서비스를 신용카드회사에
허용하기로 함
- 신용카드사가 DCD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DCDS 서비스를 전업·겸영 카드회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 DCDS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재 마련된DCDS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
(‘08.12)할 계획임

17. 최근 3년간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및 잡익 처리 현황

□ 최근 3년간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휴면보험금 잡익처리 현황

- 현재 보험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보험금을 출연중이므로 잡익처리 현황은 없음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원권리자의 지급 요청시 지급
- 향후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예정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11.6	56.2	10.6	99.8	21.3	175.2
알리안츠	110.4	130.5	78.1	132.3	47.8	160.6
삼성	293.0	4821.0	208.0	1757.0	179.0	3498.0
흥국	57.2	92.8	50.6	83.0	45.7	176.1
교보	328.7	1468.2	209.8	1361.0	176.0	5919.6
우리아비바	5.6	11.5	3.6	10.8	4.6	9.3
미래에셋	62.4	128.0	57.8	112.1	64.1	127.3
금호	28.9	44.1	29.3	39.4	39.4	48.2
동부	5.5	16.9	4.0	11.0	6.0	12.6
동양	77.0	57.0	54.0	87.0	52.3	262.0
메트라이프	54.7	39.9	27.4	35.1	35.5	45.7
푸르덴셜	12.1	10.5	13.5	16.6	11.5	20.9
신한	113.0	96.0	77.0	72.0	58.0	65.0
PCA	3.1	1.8	3.0	2.8	3.9	3.8
뉴욕	1.4	2.2	1.7	2.9	1.2	3.1
ING	23.7	43.3	23.8	54.9	25.8	66.0
SH&C	—	—	0.4	0.8	1.4	10.4
녹십자	8.0	19.1	4.3	24.6	3.6	21.3
라이나	119.0	37.2	97.0	36.1	100.0	40.6
AIG	46.7	34.1	58.9	41.4	66.1	45.3
하나HSBC	0.6	0.0	2.5	0.8	4.1	2.0
KB	1.8	4.2	0.6	3.7	1.1	7.4
총 계	1,364.4	7,114.5	1,015.9	3,985.1	948.5	10,720.5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4.9	30.4	4.7	31.2	14.5	83.4
한화	4.8	18.8	5.0	17.1	5.1	18.3
롯데	3.6	14.0	2.7	9.9	2.0	9.5
그린	2.0	8.0	2.0	6.0	2.0	6.0
흥국쌍용	15.4	18.8	9.6	14.6	7.3	12.4
제일	9.0	24.0	4.8	16.0	4.0	15.0
삼성	101.6	446.0	66.2	380.0	65.8	733.0
현대	22.0	78.0	17.0	58.0	17.0	46.0
LIG	21.7	90.1	17.9	71.3	22.9	93.0
동부	27.0	75.0	20.0	60.0	26.0	78.0
총 계	212.5	803.4	149.9	664.1	165.8	1,094.8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18. 각 시도별 대부업자 관리 현황(관리부서, 직급, 인원 등)

□ 각 시도별 대부업 담당공무원의 부서 직급 및 인원은 아래와 같음

시도	국명	과명	담당자 직급 및 인원				
			5급	6급	7급	8급	계
서울	금융도시담당관실	경제정책과	1		1		2
부산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1	2			3
대구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1	1			2
인천	경제통상국	경제고용과		1		1	2
광주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1		1	2
대전	경제과학국	경제정책과		1	1		2
울산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1	1			2
경기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1			1	2
강원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1		1		2
충북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1	1			2
충남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1	1			2
전북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		1	1		2
전남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		1	1		2
경북	경제과학진흥본부	경제기획팀	1	1			2
경남	남해안경제실	경제정책과	1		1		2
제주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1	1		2
계			10	13	7	3	33

19.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십만원, 억원)

은행명	2005년		2006년		2007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0.21	7.17	0.20	7.68	0.23	4.88
농협중앙회	21.98	289.42	9.29	153.49	8.77	151.97
신한은행	12.85	153.66	8.61	201.97	5.35	107.21
우리은행	9.23	105.83	11.45	127.96	5.94	107.01
SC제일은행	6.21	84.14	9.73	92.60	2.18	51.10
하나은행	6.15	93.91	2.81	88.53	3.61	90.40
기업은행	4.76	59.71	4.37	61.40	4.23	73.13
국민은행	20.26	302.64	15.60	115.15	12.99	71.93
외환은행	7.42	86.04	6.37	69.36	5.38	75.55
한국씨티은행	2.70	18.03	5.58	57.56	1.81	19.77
수협중앙회	0.45	6.96	0.55	10.26	0.41	10.09
대구은행	0.98	25.82	1.01	30.57	0.72	2,7.48
부산은행	5.08	29.91	2.64	27.65	2.46	31.03
광주은행	—	—	2.34	13.54	—	—
제주은행	0.07	.33	0.10	0.47	0.09	0.39
전북은행	0.97	11.10	0.84	11.74	0.78	9.66
경남은행	1.28	9.16	1.03	6.55	1.29	9.55
총 계	100.60	1,283.83	82.52	1076.48	56.24	841.14

주 1) 2008. 2. 4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자료임

주 2)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첨부 2>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11.6	56.2	10.6	99.8	21.3	175.2
알리안츠	110.4	130.5	78.1	132.3	47.8	160.6
삼성	293.0	4821.0	208.0	1757.0	179.0	3498.0
흥국	57.2	92.8	50.6	83.0	45.7	176.1
교보	328.7	1468.2	209.8	1361.0	176.0	5919.6
우리아비바	5.6	11.5	3.6	10.8	4.6	9.3
미래에셋	62.4	128.0	57.8	112.1	64.1	127.3
금호	28.9	44.1	29.3	39.4	39.4	48.2
동부	5.5	16.9	4.0	11.0	6.0	12.6
동양	77.0	57.0	54.0	87.0	52.3	262.0
메트라이프	54.7	39.9	27.4	35.1	35.5	45.7
푸르덴셜	12.1	10.5	13.5	16.6	11.5	20.9
신한	113.0	96.0	77.0	72.0	58.0	65.0
PCA	3.1	1.8	3.0	2.8	3.9	3.8
뉴욕	1.4	2.2	1.7	2.9	1.2	3.1
ING	23.7	43.3	23.8	54.9	25.8	66.0
SH&C	—	—	0.4	0.8	1.4	10.4
녹십자	8.0	19.1	4.3	24.6	3.6	21.3
라이나	119.0	37.2	97.0	36.1	100.0	40.6
AIG	46.7	34.1	58.9	41.4	66.1	45.3
하나HSBC	0.6	0.0	2.5	0.8	4.1	2.0
KB	1.8	4.2	0.6	3.7	1.1	7.4
총 계	1,364.4	7,114.5	1,015.9	3,985.1	948.5	10,720.5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첨부 3>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4.9	30.4	4.7	31.2	14.5	83.4
한화	4.8	18.8	5.0	17.1	5.1	18.3
롯데	3.6	14.0	2.7	9.9	2.0	9.5
그린	2.0	8.0	2.0	6.0	2.0	6.0
흥국쌍용	15.4	18.8	9.6	14.6	7.3	12.4
제일	9.0	24.0	4.8	16.0	4.0	15.0
삼성	101.6	446.0	66.2	380.0	65.8	733.0
현대	22.0	78.0	17.0	58.0	17.0	46.0
LIG	21.7	90.1	17.9	71.3	22.9	93.0
동부	27.0	75.0	20.0	60.0	26.0	78.0
총 계	212.5	803.4	149.9	664.1	165.8	1,094.8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20.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현황

- '07년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는 약 710만명 수준
(신용등급 산정이 가능한 전체인구의 약20%)

(단위 : 만명)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저신용자(7~10등급) (비중, %)	710.3 (21.40%)	695.9 (20.54%)	702.5 (20.17%)	710.6 (19.99%)
전체 등급자 (1~10등급)	3,318.5	3,388.7	3,482.6	3,554.4

(자료 : 한국신용정보)

- 제도권 금융기관의 총대출중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비중은 '07년말 기준 17.6% 수준

《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신용층(7~10등급) 대출 비중 추이 》

(단위 : %)

	'05.12	'06.12	'07.12
은행	12.2	10.7	10.2
카드사	67.2	56.9	37.1
기타 여전사	33.1	32.2	31.4
저축은행	62.5	62.2	56.6
상호금융기관	27.4	30.0	29.3
제도권 계	19.4	18.4	17.6

* 자료: 한국신용정보

□ 비제도권(사금융)의 경우,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08.3-5월)에 따르면

- 약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16.5조원 (1인당 평균 873만원)으로 추정
- 이들 중에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으로 추정됨 (127.6만명×783만원)

21. 서민금융활성화 T/F조직 구성 내역

소속(민간 위원)	성명	소속(관계부처)	성명
KDI 부원장	김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찬우	재경부 보험제도과장	박영춘
서울여대 경제과 교수	이종욱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이병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의식	행자부 지역경제공기업팀장	이종성
KDI 연구위원	박창균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허태웅
국민은행 경제연구소장	김장희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선원표
예금보험공사 부장	최명수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	정경실
금융감독원 국장	원우종	중기청 금융지원팀장	강시우

23.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요구 강압적인 추심 등 불법행위 만연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

- 정부는 '07.12.27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대부업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①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 ②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③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 적용 등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향후 (가칭)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22.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 '08.4월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

○ 사회연대은행 등 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활지원 (현재 6개 지정·운용 중)

**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소액대출 250억, 마이크로보험 30억) 규모

○ 대안금융기관 운영자금 지원 확대 검토 ('09년중)

- 민간주도의 대안금융기관의 우수한 상담인력의 확보, 지원대상자의 발굴 능력을 제고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 확대 검토

○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상설화 추진 ('09년중)

* '09년중 금융연수원 등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포함시켜 상설 운영 추진

24.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 최근 3년간(06년 ~ 08년 8월말 현재)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2006년	29	10,082	
2007년	50	9,557	
2008년 현재	26	4,223	

25. 07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 연구용역 내역은 첨부과 같음

- 07년 용역내역은 舊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의 연구용역을 취합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8년 3월 출범

□ 2007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 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관 (연구자)	계약방식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 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 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경쟁입찰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 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8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제)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 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산학 협력단 (신인석)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7	뉴욕,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 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 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 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 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성케이피엠지 어드바이저리 (강동원)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07.12. .20	38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안형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2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경쟁입찰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경쟁입찰
14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07.30~07.12. .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5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엘에스 (주) (위명숙)	경쟁입찰
16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07.24~07.10. .08	22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7	어음제도 개선방안	07.02.01~07.04. .30	14.25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 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관 (연구자)	계약방식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 08.10. 3	3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 태 연구용역	08.7.21 ~ 08.12.20	40	아주대학교 (이진국)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 08.12.24	40	법무법인(유)태 평 양 (정의종)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 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08.8.13 ~ 08.12.12	37	언스트앤영어브바 이저리(주) (정태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흠)	경쟁입찰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경쟁입찰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08.7.28 ~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김영도)	경쟁입찰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11~8.29	19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윤덕용)	경쟁입찰

26. ‘07년-08년 8월말 현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

- 사건명, 사건내용, 승패소(일부 승·패소 구분), 담당 법무 법인명 및 변호사명, 소송비용 명기요망

☐ 첨부 참조

<첨부>

□ '07년-'08.8말 소송제기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연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승·패소	범무법인 (소송비용)
2007	손해배상	투자자인 정OO가 금융위의 (주)대호에 대한 주금납입 확인의무 위배 주장 (2007가합11281)	승소(종료)	금감원 범무실 (비용없음)
2007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개정규정안) 승인취소	정OO외 10명이 생보사 상장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취소를 주장(2007구합25961)	승소(종료)	"
2007	불합격처분취소	공OO외 10명이 공인회계사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2007구합44351)	승소(종료)	"
200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에이디칩스가 과징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것을 주장	화해권고 결정 (종료)	범무법인 태평양 (300만원)
200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범무법인 세종 (900만원)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1심: 진행 중	금감원 범무실 (비용없음)
2007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범무법인 세종 (600만원)
2007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중	금감원 범무실 (비용없음)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1심: 진행 중	"
2007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

2008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취소	김OO이 자신이 대량 매집한 오양수산주) 주식에 대한 매각처분 명령이 개인의 권리침해라고 주장(2008구합13958)	소송 취하 (종료)	"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박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1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8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파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1심: 진행 중	"
200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1심: 진행 중	"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1심: 진행 중	"

27. ‘08.8월말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 현황
(사건명, 사건내용, 담당법무법인명 및 변호사명, 진행내역)

☐ 첨부 참조

<첨 부>

□ '08.8말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담당 (소송비용)	진행 내역
1	손해배상	동아정기 발행주식에 투자한 권OO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2004가합2964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플래닛팰이가 제재 과중을 주장 (2006구합13961)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진행 중
3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외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2006구합15684)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4	부당이득금반환 등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채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2006가합4250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5	손해배상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2006가합49593)	"	1심: 진행 중
6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처분 과중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6구합29270)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법무법인 세종 (9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9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10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	1심: 진행 중
12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13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4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5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박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17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파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	1심: 진행 중
1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	1심: 진행 중
1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	1심: 진행 중

28.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관련예산, 주요활동내역, 위원 인적사항)

☐ 첨부 참조

<첨부>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예산	주요활동내역
공적자금 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관리 심의	공적자금상환기금 법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 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법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
대부업 정책협의회	대부업 관련 정책, 감독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	대부업 정책협의 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불법사금융 단속 등
시장효율화 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관련된 사항 심의	증권선물거래소 법 제25조제1항	-	증권/선물시장의 수수료 변경 및 전산설비투자 관련 사항 심의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 요사항을 심의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공인회계사시험 의 선발인원 결 정 등 심의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징계사유(감사 또 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 등)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29. 07년-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회의개
최내역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 첨부 참조

<첨부>

□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공적자금 기금운용심의회	07.2. 0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심의 07.6 08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08.2. 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심의 08.6 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 08.4.30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및 간담회 · 08.6.30 : 금융중심지3개년기본계획 등 논의 · 08.7.30 :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등 논의(서면)	—
대부업 정책협의회	06.12.26, 07.6.5, 07.11.5, 08.1.29, 08.6.3, 08.9.9 :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논의관련 정 책, 감독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
시장효율화 위원회	07.2.2 : 거래소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심의 07.8.1 : 거래소 차세대 전산실 구축 관련 심의 07.9.21 : 거래소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심의를 위한 기술소위원회 구성 07.11.6 : 거래소 차세대시장시스템 추진계획 심의(시장관리시스템, 전산실 구축 등) 08.2.20 : 10년국채선물 수수료 심의 08.5.2 :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심의 08.7.9 : 돈육선물 수수료 심의 07.9.17 :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심의	—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	·08.1.4 : 공인회계사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의 심의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07.3.7 :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의결 ·07.12.6 :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의결	-

30.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내부규정

☐ 별도규정 없음

31. 05년 ~ 08년 8월말 현재, 임직원 훈포상 내역 (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훈포상규정

□ 임직원 훈포상 내역(05년 ~ 08년 8월말 현재)

(2008. 8. 31 현재)

포상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2005.12.30	김용범	금융채무불이행자대책유공	근정포장
2005.12.31	김용환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5.12.31	이경하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5.12.31	유재수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05.12.31	김동환	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02.07	고승범	업무유공	대통령표창
2006.02.07	이동훈	업무유공	국무총리표창
2006.06.23	김세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08.02	송현도	업무유공	대통령표창
2006.12.31	이정하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06.12.31	이홍민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12.31	김종락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12.31	정채웅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7.05.16	윤창호	규제개혁유공	대통령표창
2007.06.30	김동희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김주현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7.12.31	이미희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조미남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박성진	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8.06.20	최윤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8.06.20	송동식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 별첨 : 훈포상규정(상훈법령, 정부표창규정)

32. 06-08년 8월말 현재, 여론조사 내역

- 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관, 계약방식

□ 06-08년 8월말 현재 여론조사 내역

용역명	용역기관	금액 (천원)	용역 기간	계약방식
2006년 상반기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2,000	06.8.9~ 10.9	수익계약
2006년 상반기 정책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8,800	06.8.9~ 10.9	수익계약
2006년 하반기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2,000	06.11.14 ~12.1	수익계약
2006년 하반기 정책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8,800	06.11.14 ~12.15	수익계약
2007년 상반기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2,000	07.8.22 ~9.21	수익계약
2007년 상반기 정책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8,800	07.8.24 ~10.10	수익계약
2007년 하반기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5,000	07.11.30 ~12.28	수익계약
2007년 하반기 정책 만족도조사	(주)현대리서치	8,000	07.11.30 ~12.28	수익계약

33.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 첨부 참조

<첨부>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07년도	161	82	55	9	18	-	79
'08년8월말 현재	126	73	46	7	20	1	52

*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된 건수 포함

21. 현경병 의원

1. '07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처리결과

- ☐ 붙임 문서와 같이 '07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별도 제출

2. 08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및 그 실적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II.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III.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새 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 금융산업은 新성장동력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금융시장 안정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한 섬기는 금융행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금융시장 동향

- 작년 중순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먼 등 주요 IB 도산과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시장 불안 수시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조정

*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 4,000억~5,000억불 추정(Fitch 4,010억~5,500억불, IMF 9,450억 불)

-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최근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1,300대 후반까지 조정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도 연중 최저치 4.88%(4.30일)를 기록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82bp 상승(10.2일 5.7%)

정책적 대응

- 서브프라임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금감원·금융회사 등과 시장상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흐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금융위·금감원 합동 conference call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로 점검

-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제도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정책협의회(17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11회) 등

□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및 감독 강화로 시장 불안을 완화

○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장내불안 심리의 무분별한 확산 차단

* 例 : KIKO 거래현황(8.1), 9월 위기설 관련 기자 간담회(9.2), 리먼 · 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 파악(9.15) 외화유동성등 금융현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10.6) 등

○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시장에서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 방향 수립 · 발표(7.15일) 등

□ 주요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제 가동과 조기 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상시 점검

○ 중점 리스크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재정부, 금감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워크샵(7.15) 개최, 금융위 · 금감원간 하반기 리스크 점검(7.25)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 대응방안 모색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 例 : 공매도 금지(10.1)

□ 규제금융법안 하원 통과에도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리스크 요인별 금융위험의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②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추진 실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총 14인 : 민간 전문가 11인,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 (단장 : 민간전문가)

<주요 개선사항>

- 금융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총무·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 70억원이상 → 자산100억원 이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 은행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등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내년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또한,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
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

* 과징금제도 확대

③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추진 실적

-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금융섹터 **Global Player**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을 발표('08.6.3)하여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
 - * 추진일정 : 산은법 개정 및 KDF 설립 입법안 마련('08.8) → 산은의 기업분할('08.12)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2009~2010)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2011~2012)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또한 신설되는 KDF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On-lending**방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향후 조치계획

- 연내에 산은법 개정과 KDF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내 지배지분 매각 및 민영화 완료

4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 ※ 8개 증권회사 및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
- 자본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09.2 시행)을 위하여
 - 기존 투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갱신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완료(08.8.4)
 - 자통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9편 442개 조문)을 조기에 제정(08.8.4)하여 업계 사전준비를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재인가·재등록업무(450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 금융위·금감원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전담 T/F구성·운영, One-stop 서비스로 처리
- 자통법에 따라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통합(09.2.3까지)하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

< 주요국 자본시장 현황 >

(07년 말 기준, 조, 개)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사 (수)	기업공개 규모(신규)	유상증자 규모	채권시장**			
					국채	금융채	회사채	총계
한국	1,051.7	1,767	2.3	14.3	404	377	112	893
미국	18,690.8	5,965	71.9	71.9	5,930	13,267	2,671	21,868
영국	3,613.9	3,307	46.9	30.8	824	393	22	1,239
일본	4,374.8	3,870	0.8	17.2	6,436	841	643	7,967

* 한국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미국 : NYSE+NASDAQ+AMEX / 일본 : TSE+JASDAQ+OSAKA

** 국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ABS 포함)

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실적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중
 - 다양한 투자·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주식선물(15종목)을 상장(5.6)하고 돈육선물 상장(08.7.21)
 - * 돈육선물의 상장초기 양돈농가 등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강화
-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08.9월)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펀드상품 유형별로 펀드 판매보수·수수료의 비교공시(자통법시행령) 의무화
 -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자율적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유도
 - * 수수료 20% 인하(08.5.13, 인하효과 1,110억원), 수수료 면제(9.22~12.31, 면제효과 1,026억원)

향후 조치계획

- 자통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단계적(09하반기부터)으로 도입(금년중 개정법안 국회 상정 예정)
- 중요 불공정사건은 공동조사(금감원·거래소간)를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강화하는 등 금년중 불공정거래·공시제도 개선

⑥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추진 실적

-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신정부 출범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 신용등급 7~10등급(약 720만명) + 사금융만 이용하는 자(약 57만명)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

* 08년 하반기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200억원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 30.7만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

- 대출기관 채무자의 채무재조정과 사금융 채무자의 저금리 환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발표(7.24)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의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 (약 7,000억원)

향후 조치계획

- '08년 하반기중 신용회복기금 시범사업(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실시하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개시
- 악성 추심행위 근절, 서민금융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도 연내 국회 제출 예정법무부와 공동발의

7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추진 실적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9.30 현재)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 해 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17	36	370	34	169	926

향후 조치계획

□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예시)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

8]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추진 실적

- 금융위원장은 美國 **FRB · 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 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
 - 또한, 증권분야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및 정보교환 확대 등을 결정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으로 선출
- ※ IOSCO APRC 의장국 진출로 국제금융계에서의 한국정부의 발언권 제고 기대
- 지난 '08.5월 대통령 訪中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 중국방문 (6.12~13)시 양국 금융당국간 금융협력방안 구체화
 - 중국 해외투자자격 은행(**QDII***)의 對韓 투자를 허용하는 협약체결 및 한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자(**QFII****) 승인
 - *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내국인 거래전용의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중국 적격 은행의 투자허용으로 중국 자본자본 총유입액은 향후 2~3년간 60억달러로 전망(국제금융센터 추정)되고, QFII 승인(미래에셋 : 8.1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향후 조치계획

- IOSCO APRC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 적극 추진
-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
- 금융당국간 정례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확대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과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⑨ 에그몽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추진 실적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부패 방지를 위한 FIU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IU) 협의체
- * 2008.5.25(일)~5.29(목),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91개국·262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역대 가장 성공적 총회' 평가(그룹 의장)

①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의지 대내외 천명

- * 총리님의 개회식 참석과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 * 금융위원장, FIU 원장 등의 언론기고(동아, 한경, 매경),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③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IT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홍보

- * 터키, 싱가포르 등이 공유 요청, 자금세탁방지 IT시스템 견학

④ 우리나라의 FATF가입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 및 문화·사교행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향후 조치계획

- 에그몽 총회 개최를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자금 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11월 중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심사 예정

① 은행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현황

- ①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
 - ①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②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
- ③ 동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진행중

향후 계획

-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②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추진 현황

- 그동안 신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5.23발표)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 정비

③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추진 현황

-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 시장을 활용한 中企자금지원방안*(6.11)의 차질 없는 추진
 - * 합성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펀드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 ☐ 중소기업 지원TF를 구성(08.5월)·운영하여 개편방안 논의
 - KDF 신설 및 보증부문 운영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선의일부 내용을 발표
 - “산은 민영화 및 KDF 신설방안(6.2)”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F의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6.11)”에서 4대 부문 18개 과제를 설정·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진 중
 - KDF 신설 등에 따른 신·기보 등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 (7.28, 8.12)

향후 계획

- ☐ 추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
 - ※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 등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 또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 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4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현황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법을 제정·시행('08.3)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 두차례(6.30, 7.28) 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및 금융중심지 평가기준 등 마련 지자체 통지
- '08.9월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 제공

향후 계획

-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월중)하면 금년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지역 선정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의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08.11월 지자체 신청전)
- 금융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내 입주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시행('09년이후)
 - 금융중심지의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⑤ 금융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 추진

추진 현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 현재 상반기중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금융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

향후 계획

- '08년 하반기중 21개 관련 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계획
 - 제정 : 한국개발펀드법(KDF 조직 및 업무 등), 불법추심방지법 (심야방문 및 전화 금지 등,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등 3개
 -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한국산업은행법 (대외채무 자금보증 근거 등), 은행법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등 18개

〈입법추진 대상 21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법,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불법추심방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3. 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주요정책과제

- 2009년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는“2009년도 성과계획서(안)”에 제시되어 있음
- 다만, 동 성과계획서(안)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내년도 최초 정무위에서 보고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9년도 성과계획서 : 별도제출

4.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 별첨 참조

<별 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6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08.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4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08. 3. 18	베어스턴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 평가 및 대응
08. 3. 18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08. 3. 20	[참고자료]한경미래포럼 강연자료
08. 3. 20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08. 3. 21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08. 3. 24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08. 3. 24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08. 3. 2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보도일자	제 목
08. 3.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08. 3. 26	텔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08. 3. 2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08. 3. 2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08. 3. 31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08. 3. 3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환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08. 4. 2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4. 3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08. 4. 3	금융산업에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08. 4. 4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08.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08. 4. 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08. 4. 10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보도일자	제 목
08. 4. 1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11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처리안 의결
08. 4. 17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08. 4. 17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08. 4.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
08. 4. 24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08. 4. 25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08. 4. 28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08. 4. 29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08. 4. 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08. 4. 3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08. 5.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5. 2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5. 6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08. 5. 7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산임 심사 결과
08. 5. 9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08. 5. 9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보도일자	제 목
08. 5. 15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 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08. 5. 19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08. 5. 19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08. 5. 20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08. 5. 2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IB 대상"축사
08. 5. 21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08. 5. 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5.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WSBI(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최축사
08. 5. 22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08. 5.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08. 5. 23	대한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겸영 인가
08. 5. 23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08. 5. 23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5. 26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08. 5. 26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08. 5. 2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자	제 목
08. 5. 27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출
08. 5. 29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08. 5. 2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08. 5. 29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08. 5. 29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6차 에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08. 5. 3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08. 5. 30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08. 5. 3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08. 6. 2	전광우 금융위원장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개최
08. 6. 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2	산은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및 공기업 인사쇄신의 계기를 마련
08. 6. 2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08. 6. 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08. 6. 3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6. 4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08. 6. 4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08.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 개선사항

보도일자	제 목
08. 6. 5	단위 신탁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08. 6. 5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08. 6. 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조연설
08. 6. 9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08. 6. 10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08. 6. 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컨퍼런스 축사
08. 6. 1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08. 6. 12	영진약품공업(주)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08. 6. 12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08. 6. 12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08. 6. 12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08. 6. 12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08. 6. 12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08. 6. 12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국 거래소 상장을 제안

보도일자	제 목
08. 6. 13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08. 6. 13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키로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합의
08. 6. 1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08. 6. 16	홍국생명보험(주)의 홍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16	애플러스자산운용(주)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6. 16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6. 17	전광우 금융위원장 IAI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08. 6. 17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08. 6. 17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08. 6. 18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08. 6. 19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08. 6. 2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08. 6. 20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08. 6. 20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08. 6.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08. 6. 24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 방안
08. 6. 24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보도일자	제 목
08. 6.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08. 6. 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6. 2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08. 6. 2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08. 6. 26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 사항
08. 6.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08. 6. 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08. 6. 27	기업은행 감사 임명
08. 6. 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7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27	(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08. 6. 30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30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08. 7. 1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08. 7. 1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08. 7. 2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도일자	제 목
08. 7.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08. 7. 11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08. 7. 11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08. 7. 11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08. 7. 11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7. 14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8. 7. 15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08. 7. 15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08. 7. 17	은행장간담회 개최
08. 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08. 7. 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08. 7.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8. 7. 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7. 23	아이메카(주)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08. 7. 24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08. 7. 2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일자	제 목
08. 7. 25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08. 7. 25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
08. 7. 25	증권업 및 선물업 겸영허가안 의결
08. 7. 25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08. 7. 25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08. 7. 25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08. 7. 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08. 7. 28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08. 7. 31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08. 8. 1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08. 8. 4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8. 6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08. 8. 7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08. 8. 12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08. 8. 13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08. 8. 1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08. 8. 14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08. 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8. 8. 19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보도일자	제 목
08. 8. 20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08. 8. 2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8. 21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08. 8. 2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08. 8. 25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08. 8. 2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8. 26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IR 개최
08. 8. 26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08. 8. 26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8. 8.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축사
08. 8. 2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08. 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08. 9. 2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08. 9. 2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08. 9. 5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영현황
08. 9. 5	코스피 200선물 24시간 거래 추진(선물거래 야간시장 개설)
08. 9. 8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08. 9. 9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보도일자	제 목
08. 9.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8. 9.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08. 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8. 9.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08. 9. 9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08. 9. 10	메디에스앤피(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08. 9. 11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08. 9. 11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08. 9.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08. 9. 12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15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08. 9. 16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
08. 9. 16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08. 9. 18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08. 9. 19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08. 9.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보도일자	제 목
08. 9. 22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2차)
08. 9. 24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08. 9. 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9. 26	(가칭)(주)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
08. 9. 26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08. 9. 26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26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08. 9. 29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08. 9. 3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08. 9. 30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2.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24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08. 3. 25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3. 26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08. 3. 31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7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보도 관련
08. 4. 22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희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22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08. 4. 25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08. 5. 2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08. 5. 7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 ‘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5. 7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08. 5. 7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보도일자	제 목
08. 5. 9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13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08. 5. 16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포이즌필'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08. 5. 19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08. 5. 20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멎는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제2의 승례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3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 (‘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5. 26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28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6. 4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08. 6. 4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12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보도일자	제 목
08. 6. 24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땐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27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1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3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08. 7. 24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8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9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30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08. 7. 30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08. 8. 13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08. 8. 19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보도일자	제 목
08. 8. 25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8. 26	08. 3. 24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 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08. 9. 2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08. 9. 4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냐
08. 9. 9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병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08. 9. 9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08. 9. 16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08. 9. 23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08. 9. 26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9. 29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5. 최근 3년간 자체 인사징계위원회 개최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최근 3년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 첨부 참조

◇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내역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지적 사항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펀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7. ‘06년도 이후 3급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 연도별 퇴직자수와 재취업자 수
- 퇴직 직전직위와 담당업무, 재취업 업체 및 직위

□ ‘06년도 이후 3급이상 연도별 퇴직자와 재취업자수

연도	퇴직자수	재취업자수
‘06년	3	3
‘07년	4	3
‘08년	2	2

□ 퇴직 직전직위와 담당업무, 재취업 업체 및 직위

성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업체	직위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안00	서기관	06. 2.27	한동대	교수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금감원	감사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위원장	07. 8. 3	-	-
이00	FIU원장	08. 4. 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김00	혁신행정과장	08. 5. 1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8. 08년 민원접수현황(접수일, 내용, 처리결과 등 포함)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08.8월 말까지 총 1701건의 일반 민원을 접수·처리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327건	136건	368건	1074건	1905건

9. '08년도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 ‘ 제출자료 일체

- 불임 문서와 같이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말씀과 보고 안건을 보내드립니다

(불임1) 금융위원장 인사 말씀('08.7.28일)

(불임2)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08.7.28일 보고)

(불임3) 금융위원장 인사 말씀('08.8.12일)

(불임4)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08.8.12일 보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인 사 말 씀

2008. 7. 28.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공기업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의 확립,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
기관입니다.

이들은 준정부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원칙의 큰 틀 안에서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째, 경쟁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 직접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6월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이 심화되는
등 이제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때
입니다.

민영화를 통해 산업은행이선도적 투자은행
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의 매각대금 및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여 중소
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기능을 조정하고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합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순수 공적기능 또는 정책금융으로
시장보완기능을 수행하여 존치되는 금융공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조직·예산 측면에서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19개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
었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회사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매각과정에서
는 매각대상 기업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여건 등을 고려, 물량을 적절히 분산시킴
으로써 매각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
함에 있어 가능한 한 공개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구축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가 이상과 같은 선진화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
으로 임승태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부위원장입니다.

임승태 사무처장입니다.

조인강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입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입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입니다.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2008. 7. 28



금융위원회

— < 목 차 > —

I.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II.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

III.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IV.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기본방향

2.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3.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

4. 14개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I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사

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이상인 공공기관

②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6개사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미만인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미약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 수행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의 업무 수행

③ 『기타공공기관』은 국책은행 및 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이에 해당되며, 금융위 소관은 13개사

-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동 자회사들은 중소기업자 등 산업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 어음할인, 외화차입 등의 업무 수행

※ 그 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금융위원회 소관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은 총 14개사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경영권 매각대상인 되는 우리금융, 서울보증, 하이닉스 등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현재 정부관련 공공기관은 총 305개이며, 공공성 등 기관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

분류	지정요건	전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24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7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20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산은)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 (기은)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시스템 ■ (신보)한국기업데이터 ■ (예보)정리금융공사 ■ (자산공사)한국자산신탁 ■ (기타)코스콤, 기보캐피탈
소계		305	19	
정부소유 구조조정기업	공적자금 투입기관, 산은 지분보유 기관	—	14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Ⅱ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

◇ 공석 중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금융위원회 산하 총 8개 금융 공공기관(금감원 제외) 기관장 중

- 예보, 자산공사, 기은 등 3개 기관장은 재신임,
- 나머지 5개 기관은 후임자 선임 추진
- 산은 등 3개 기관은 선임 완료, 2개 기관은 선임절차 진행중

① 선임 완료 : 3개 기관

기관명	직위	성명	임명일자	주요경력
산업은행	총재	민유성	'08.6.11	리먼브라더스 한국지점 대표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모건스탠리 증권 서울사무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안택수	'08.7.18	15, 16, 17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정이사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주재	'08.7.18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총무국장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② 선임절차 진행중 : 2개 기관

기관명	직위	공모기간	서류심사	면접심사	비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차 : '08.5.20~6.4	'08.6.9	'08.6.12	
		2차 : '08.7.1~7.15	'08.7.18	'08.7.23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08.5.29~6.11	'08.6.12	'08.6.18	'08.7.25 임명제청

Ⅲ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국제 금융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은 실물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용위험이 재부각 되었으나, 유가하락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

- ① 금융부실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레버리지 축소 등 시장 불안이 심화
- 신용위험 확대로 대출심사 요건 강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 위험 성향의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
 - 페니매프레디맥 등 미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재확산 되었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시장 변동성 다소 완화

< 주요 국제금융시장 지표 추이 >

	'06말	'07말	'08.4월말	5월 말	6월 말	7.24	6월말대비
미국(다우)	12,463	13,265	12,820	12,638	11,350	11,349	△ 1
영국(FTSE100)	6,221	6,457	6,087	6,054	5,626	5,362	△ 264
유로/달러	1.3199	1.4580	1.5624	1.5554	1.5755	1.5677	△ 0.0078
WTI(달러/배럴)	61.05	95.98	113.46	127.35	140.00	125.49	△ 14.51

- ②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8월까지 美 어닝시즌 진행 ⇒ 증시 변동성 확대
 - * S&P500 업체들의 실적발표가 7월 349개(금융 75), 8월 128개(금융 10)가 예정되어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미 주택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고 모기지 관련 주요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상존 ⇒ 글로벌 신용경색 재발 소지

< 美 금융시장 변동성 지수 동향(%) >

	'06말	'07말	'08.4월말	5월말	6월말	7.24	6월말대비
금융시장변동성 지수(VIX)	11.56	22.50	20.79	17.83	23.95	23.44	△ 0.51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국면 진입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확대

① [시중금리] 장기금리(국고채 3년)는 최근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급등

○ 4월중 연중 최저치(4.88%)를 기록한 이후 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최근 상승세가 둔화

* 단기금리(CD 91일물)는 6월중에는 정책금리 동결기조 유지로 안정적이었으나, 7월 들어 장기금리 상승세와 연계되면서 급등세 지속

< 채권시장 동향(%) >

	'07말	'08.2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25	6월말대비
국고 3년	5.74	4.97	4.88	5.46	5.90	5.77	△0.13
국고 5년	5.78	5.08	4.96	5.54	5.98	5.83	△0.15
CD(91일)	5.82	5.18	5.36	5.36	5.37	5.63	+0.26

②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美 경기침체 가시화로 인한 글로벌 증시 조정과 유가 급등 등으로 큰 폭 하락

○ 5.18일 연중 최고치(1,889p)를 기록한 이후 반락하여 1,500대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재차 반등하면서 1,500대 후반까지 상승

○ 외국인은 33영업일 연속 순매도(△9.0조원)를 기록하는 등 매도 추세 지속(외국인은 08년중 22.0조원, 월평균 3.14조원 매도)

< 주식시장 동향 >

	'07말	08.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25	6월말대비
코스피	1,897.13	1,703.99	1,825.47	1,852.02	1,674.92	1,597.93	△76.99

③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7.4일 1,050까지 상승 후 5일만에 1,000대 초반으로 급락 후 최근 1,000대 후반 유지(7.25일 1,009.2)

- 7.7일 이후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율 안정의지 표명 및 매도 개입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외환당국 시장안정화 조치(7.14) : 공기업 해외차입 허용, 외은지점 본점 차입금 이자의 손비인정 한도 확대(3→6배), 차액선물환(NDF) 매수 포지션 한도 폐지 등

- 7~8월 2분기 美 어닝 시즌 여파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이 잔존하지만,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상승에 제한 요인

< 외환시장 동향 >

	'07말	08.3월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7.25*	6월말대비
달러/원	936.10	990.40	1,002.60	1,030.10	1,046.00	1,009.2	△36.8
달러/엔	111.71	99.69	103.91	105.51	106.21	106.79	+0.58
엔/원	828.6	992.9	965.6	978.2	984.8	945.03	△39.77
달러/위안	7.30	7.01	7.00	6.94	6.85	6.8228	△0.0272

* 동경 15시 기준

④ [종합평가] 금융산업 건전성 및 금융시장 충격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고유가, 인플레이,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 중기대출·가계대출 부실화 문제, 저축은행 PF 대출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대내외 여건 추가 악화에 대비한 금융회사 자체의 단계별 대응책 수립 유도

Ⅳ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기본방향

<공기업 선진화 기본원칙>

◆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전반의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 선진화의 기본방향 수립

- 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 ② 기관별 특성을 고려, 투명하게 추진
- ③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 ④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고용승계, 인력조정 최소화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방향>

◆ 상기 원칙을 준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정책금융 합리화, 공적자금관리기능 효율화 등 금융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추구

- ① 민간과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민영화 추진
- ②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순수 공적기능 또는 시장보완기능을 하는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 추진
- ③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조정,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 등 검토
- ④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등 14개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분매각
- ⑤ 금융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모멘텀 부여

2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가. 민영화 필요성

① 정책금융기능이 축소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산은의 역할재정립은 불가피한 측면

- 정책금융을 저리의 정책성자금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그 규모는 1.4조원, 총자금공급 대비 5.1% 수준('07년)

< 산은의 저리 정책자금 공급 현황 >

(억원)

	총공급	저리의 정책자금*			
		정책성자금	재정·기금	계	총공급 대비 비중
'06년	245,097	4,623	7,329	11,952	4.9%
'07년	272,260	8,045	5,712	13,757	5.1%

* 재정·기금 및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우대금리 자금

②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접 금융지원방식의 확립과 산은의 조속한 민영화
가 필요

- 현재 산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쏠 영업분야에서 시장마찰 소지
- 특히, 회사채 인수주선 업무*가 대표적

* 다만, 회사채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산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영업이익 대비 비중 : '05년 9% → '07년 1%)

< 회사채* 주선 실적 >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85,960	22.3	32,300	9.8	28,81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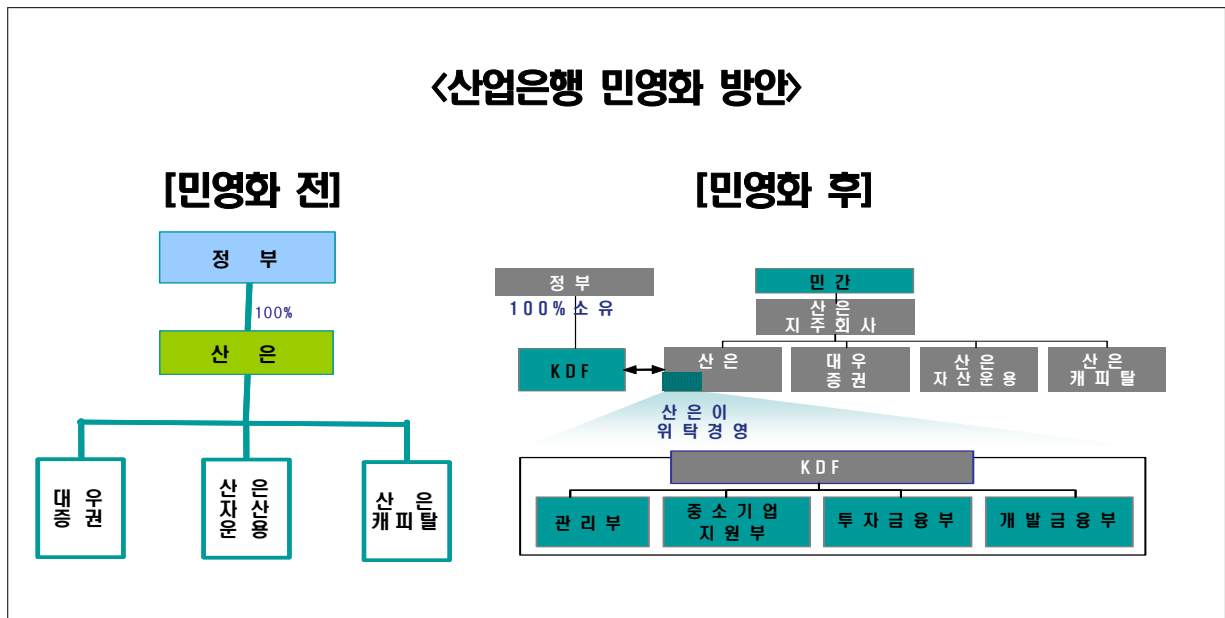
* 일반채권 및 ABS

나. 추진방안

- ◇ 정부는 지난 6.2일,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육성 발판 마련 및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

① 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 '08년 민영화의 준비단계로 산은을 기업 분할하여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를 설립
 - * KDF설립 직후 산은지주사 주식 49%를 KDF에 현물 출자
- '09년 산은지주 매각절차 및 KDF 중소기업 지원 착수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정부 지분 49% 매각, 2012년까지 산은지주회사 지배지분 매각 추진



② 산은 민영화에 따른 대외채무 처리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 채무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항(산은법 §44)은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 유지기간 동안 존속

-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 추진

* 기존채무의 차환 등 일정용도 및 한도내 발행허용(국회동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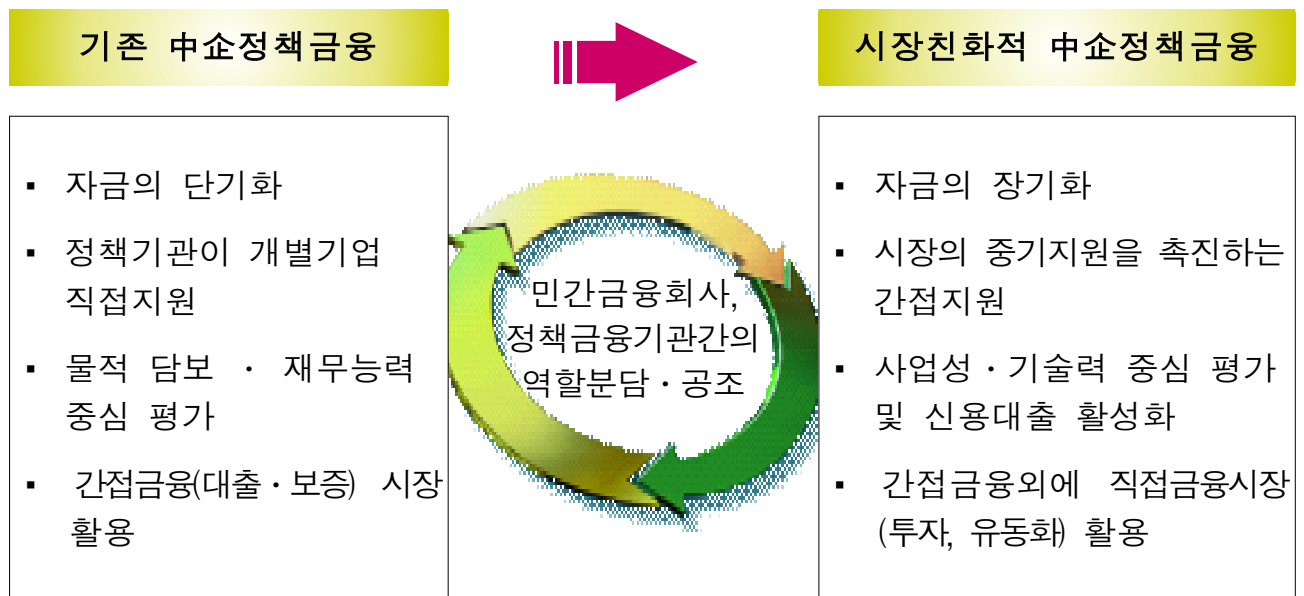
③ 산은지주사의 투자은행화 전환

- 산은지주회사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은행 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
- 업무계획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구불예금 수취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업무제한 완화 추진
- 성공적인 민영화에 연계된 인센티브 보상을 활용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

④ 한국개발펀드(KDF) 운영 방안

-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조직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
- 中企지원은 간접적인 On-lending 방식을 통해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 기능을 활용

* 운영재원은 산은지주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 주식 매각자금 등을 활용



-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종래 산은이 담당하던 여타 정책금융기능 수행

다. 향후 계획

① 관련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

- 마련된 민영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마련,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제출('08.9~10) 추진

② 법률안 국회 통과 후 산은을 인적분할하여 산은지주사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08년 말~'09년초)

3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

가. 기업은행

(1) 주요업무 추진실적

① 기업은행은 그간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경기조정자 역할을 수행

- 경기가 어려웠던 '04~'05년 기간 중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 기은의 중기대출 순증액(조원) : 4.4(04) → 6.6(05) → 10.2(06) → 9.0(07)

· 4대 시중은행 중기대출 순증액(조원) : 0.9(04) → 0.8(05) → 23.1(06) → 37.9(07)

② '08년에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목표(24조원)를 차질없이 이행중

<총대출(자금종류별) 공급>

(억원, %)

구 분	2008년도		계획대비 달 성 률
	계 획	실적(6월말)	
－ 금융자금	207,000	115,486	55.8
－ 재정기금	22,000	12,218	55.5
－ 차관외화	11,000	9,280	84.4
총대출	240,000	136,984	57.1

(2) 향후 추진계획

①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

- 특히 하반기에 제기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 그간 영세소기업에 2.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0.5조원 지원

- 景氣 조정적 금융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시 탄력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
-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여신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

②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
- 다만, 산은 민영화계획 발표에 따라 KDF 설립 등 정책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존 민영화는 시점을 조절할 필요
- 지배지분 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③ 민영화에 대비한 기은의 경쟁력 제고

- IBK 투자증권('08.7 영업개시)의 조기 정착등 향후 민영화에 대비한 사업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① (목적·기능)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 신용보험, 경영지도 등 수행

- 기보는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술보증, 기술평가,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수행

- ② (업무 현황)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07년 39.8조원이며, '08년 계획은 39조원 수준임

- 그동안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기보 통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신용보증잔액 추이(조원) >

	‘01	‘02	‘03	‘04	‘05	‘06	‘07	‘08(계획)
보증잔액	28.9	39.8	42.8	43.9	40.7	39.6	39.8	39.0
-신용보증기금	17.9	25.7	28.4	30.5	29.2	28.5	28.5	28.0
-기술신용보증기금	11.1	14.1	14.4	13.4	11.5	11.2	11.2	11.0

③ (향후 계획) 8월중 통합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

< 주요 경과 >

일 시	주관부서	주요 대책 및 논의내용
‘04.7	재경부	<p><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보증기관 전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일반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기관 ■ 기보 : 기술기업 등 기술평가전문 신용보증기관 (기보 일반보증 지원 중단)
‘05.4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 통합 여부는 ‘07년 기금존치평가 시점까지 유보
‘05.6	재경부	<p><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관별 기능 특화 및 연계운용 강화 ■ 신·기보간 업무협약(‘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일반보증 전담 - 기보 : 벤처·이노비즈 기업 전담
‘07.5	예산처	<p><기금존치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존치 ■ 기보 : 조건부 존치(이행조건 : 기금의 재정 안정화 와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다. 예금보험공사

① (목적기능)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기금 관리,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수행

② (업무 현황)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예금을 보호

(‘08.6월말 현재)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 계
금융회사수(개)	56	53	22	21	2	108	262
부보예금(조원) 1)	485.4	15.0	214.6	36.0	0.7	49.4	801.2
예금보험료율(%)	0.1	0.2	0.3	0.3	0.3	0.3	—
예금보험료(억원) 2)	5,027	256	3,654	801	22	1,306	11,066

주 : 1) ‘07년말 현재 잔액 기준 2) ‘07년도 연간실적

○ ‘97년말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517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110.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40.8조원을 회수

(단위 : 조원, ‘08.6월말 현재)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합 계
지 원	50.8	18.6	30.3	11.0	110.7
회 수	16.3	3.1	14.5	6.9	40.8

○ 예금보험 수입이 목표치에 이르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목표기금제의 차질없는 시행 추진

③ (향후 계획)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① (목적·기능)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및 부실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 ② (업무 현황) IMF 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채권 105.7조원을 38.6조원에 인수('97~'02)하여, '08.6월 현재 77.1조원을 정리하고 42.0조원을 회수(매입액 대비 3.4조원 초과 회수)

< 인수 및 정리 현황 > (단위 : 조원, '08.6월말)

인 수		정리 및 회수		보 유	
채 권액	매 입액	채 권액	회 수액	채 권액	매 입액
105.7	38.6	77.1	42.0	28.6	7.7

- '06.6월말 기준 기금의 잉여금이 약 9조원(잠정)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재정)에 3조원을 배분하고, 금융기관에도 약 1조원을 배분할 계획
 - * '07.2월 재정에 3조원 기배분
 - M&A 대상자산(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등) 등 기금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노력
 - Bad Bank 운영, 자체 채무조정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08.6월말까지 90.6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
- ③ (향후 계획) 자산관리공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 정리 계획

4 14개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가. 대상기업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경영권 매각대상이 되는 기업

지분보유정부기관	기업명
예금보험공사(2)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3)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한국산업은행(9)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중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

* 대우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나. 매각원칙

- ① 산은 보유지분의 경우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서 정부주관 하에 매각 추진
 - ※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한전,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이관하되 매각않음
- ② 경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잠재인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극대화 추진
- ③ 산업구조 발전,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각추진
 - ※ 매각가치 추가상승이 예상되거나 실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여건을 보아가며 매각 추진

위원장 인사말씀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입니다.
- 존경하는 이석현 공기업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금융부문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

- 특히, 경제관련 최고의 전문가이신 의원님들과
금융 공기업 부문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명하신 정책적 조언을 듣게 되어 영광
- 앞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 공기업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마찰을 최소화하여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 유사한 부문에서 중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대폭 제고시킬 계획

- 8.11 공기업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부실신탁회사 처리를 위해 설립되었던
한국자산신탁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통해
조기에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

- 그리고, 조만간 보증기관의 운영효율성 제고와
중소기업금융지원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 공기업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아직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과 보다 빨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드립니다
 - 앞으로 동 과제들을 하나 하나 확정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별도로 심도있는 협의를 약속드립니다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2008. 8.



금융위원회

— < 목 차 > —

I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II .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1. 예금보험공사

2.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3. 자산관리공사

4. 한국자산신탁

5.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

I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사
- ◆ 그 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금융위원회 소관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은 총 14개사

1. 공운법상 공공기관

- *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

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이상인 공공기관

②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6개사

-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미만인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미약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 수행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의 업무 수행

③ 『기타공공기관』은 금감원, 국책은행(자회사 포함) 및 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이에 해당되며, 금융위 소관은 13개사

-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동 자회사들은 중소기업자 등 산업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 어음할인, 외화차입 등의 업무 수행

2. 예보 등 소유 구조조정 기업

-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회사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경영권 매각대상이 되는 우리금융, 서울보증, 하이닉스 등 14개사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 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현재 정부관련 공공기관은 총 305개이며, 공공성 등 기관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

분류	지정요건	전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24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7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20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산은)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 (기은)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시스템 ■ (신보)한국기업데이터 ■ (예보)정리금융공사 ■ (자산공사)한국자산신탁 ■ (기타)코스콤, 기보캐피탈
소계		305	19	
예보 등 소유 구조조정기업	예보, 자산관리공사, 산은 지분보유 기업	—	14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Ⅱ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1 예금보험공사

1. 일반 현황

㉠ (목적기능)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기금 관리,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수행

㉡ (업무 현황)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예금을 보호

(‘08.6월말 현재)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 계
금융회사수(개)	56	53	22	21	2	108	262
부보예금(조원) 1)	485.4	15.0	214.6	36.0	0.7	49.4	801.2
예금보험료율(%)	0.1	0.2	0.3	0.3	0.3	0.3	—
예금보험료(억원) 2)	5,027	256	3,654	801	22	1,306	11,066

주 : 1) ‘07년말 현재 잔액 기준 2) ‘07년도 연간실적

- 공적자금관리기구로서 ‘97년말 이후 517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110.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40.8조원을 회수

(단위 : 조원, ‘08.6월말 현재)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합 계
지 원	50.8	18.6	30.3	11.0	110.7
회 수	16.3	3.1	14.5	6.9	40.8

2. 선진화 기본방향

-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 (신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기보)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주요 기능

- (신보)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
- (기보) 기술보증, 기술평가, 경영 및 기술지도 등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07년 39.8조원이며, '08년 계획은 39조원 수준임

< 신용보증잔액 추이(조원) >

	'01	'02	'03	'04	'05	'06	'07	'08 (계획)
보증잔액	28.9	39.8	42.8	43.9	40.7	39.6	39.8	39.0
-신용보증기금	17.9	25.7	28.4	30.5	29.2	28.5	28.5	28.0
-기술신용보증기금	11.1	14.1	14.4	13.4	11.5	11.2	11.2	11.0

2. 선진화 기본방향

- 보증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KDF 설립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 최종방안 마련
 - 8~9월중 통합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

1. 일반 현황

- ① (목적·기능)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 ② (업무 현황) 자산관리공사 업무는 3가지로 구분

- (부실채권) IMF 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해 옴

< 인수 및 정리 현황 >

(단위 : 조원, '08.6월말)

구 분	인 수		정리 및 회수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기 금	105.7	38.6	77.1	42.0	28.6	7.7
고유계정	10.2	3.4	5.7	2.9	4.5	1.1

- (신용회복 지원) Bad Bank 운영, 자체 채무조정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08.6월말까지 90.6만명의 신용회복 지원
-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매각, 저활용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

2. 선진화 기본방향

- 자산관리공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 정리 계획

1. 일반 현황

- ☐ (목적·기능) 부실신탁회사 처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01.3)한 후 금감위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음('01.4)
 - IMF 위기시 2개 부실신탁회사(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로부터 신탁사업을 양수받아 이를 처리
- ☐ (업무 현황) 부실신탁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탁사업 처리 및 부동산 개발·관리 등 신탁업법상 신탁업 등
 - (양수받은 신탁사업 처리) 부실신탁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탁사업 중 잔여사업 처리
 - (신탁업무)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수수료 수취

2. 선진화 방안(안)

- ☐ 수행 중인 금융기능이 민간에서 기 활성화 된 점을 감안, 민영화(8.11,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3. 추진일정

- ☐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매각 착수

1. 대상 기업

-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게된 회사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중 경영권 매각대상이 되는 기업

지분보유정부기관	기업명
예금보험공사(2)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3)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한국산업은행(9)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중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

* 대우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2. 매각 원칙

- 외환위기사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기업 등으로 조속히 지분 매각 추진
-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
 - 여타 기업도 채권단 주관으로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
 - (i) 산은 보유지분의 경우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KDF로 넘겨서 매각 추진
 - ※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한전,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이관하되 매각않음
 - (ii) 경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잠재인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극대화 추진
 - (iii) 산업구조 발전,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각추진

22. 홍재형 의원

1. 2007년 6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2. 2008년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내역 및 의사록 사본
3. 코디너스, 아이에스하이텍, 엔디코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사본

☐ 의사록 사본 : 별도제출

2007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의결 안건	138	롯데관광개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39	케이알선물(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40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 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141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 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14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43	미주제강(주) 등 7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대한 심사결과 조 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144	에스와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45	오스템임플란트(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46	SK케미칼(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47	(주)골든프레임네트웍스 등 7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 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148	(주)에쎄테크 등 7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49	대주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50	(주)네티션닷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51	(주)레드캡투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2	케이엠에이치(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3	(주)비에이치케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4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6월20일	제10차		155	위디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6	(주)오디코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7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8	소프트포럼(주) 및 (주)더존비즈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59	(주)극동유화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60	(주)케이디이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61	삼성생명보험(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62	거동건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3	(주)유래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4	(주)나스미디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5	(주)제일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6	(주)아이엠에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7	(주)새한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8	(주)정우종합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69	(주)아성화학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170	대창기계기술(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보고 안건	12	경남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회계감독1국	
			14	일신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회계감독2국	
			15	제일창업투자(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시장감독과	조사1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7월4일	제11차	의결 안건	17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17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173	(가칭)현대해상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74	녹십자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75	대한투자신탁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보고 안건	16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등 개정) 보고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2007년7월18일	제12차	의결 안건	176	(주)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77	랜드마크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78	(가칭)마이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7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증권감독과	공시감독국
			180	키움증권(주)의 한국아이티벤처투자(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18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8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증권감독과	조사1국 증권감독국
			1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증권감독과	조사1국 증권감독국
			184	2006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185	(주)대아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86	대원상호저축은행(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87	(주)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88	(주)강원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189	(주)모나리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90	(주)다스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91	S&T모터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92	(주)우성넥스티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93	태광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94	CJ투자증권(주) 직원의 면직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195	대신벤처캐피탈(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96	(주)세우글로벌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97	(주)엔피케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98	나노트로닉스(주) 전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보고 안전	17	2007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조사1국 조사2국	
			19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00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01	(주)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02	마이어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03	월드조인트(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04	(주)루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05	(주)파인디지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06	동아G&L(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8월22일	제13차	의결 안전	207	(주)굿이엠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08	(주)도너츠미디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09	(주)세안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0	(주)디지털디바이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1	(주)엑티패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2	(주)IB스포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3	(주)코아브리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4	제이에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5	(주)코스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6	에스인포텍(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7	(주)휴바이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8	케이디씨정보통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19	(주)조이토토 과징금 부과 및 前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20	(주)대유베스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1	(주)다우데이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2	동양매직(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3	삼릉물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4	우리조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5	제이씨현시스템(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26	화이델SNT(주) 등 3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7	(주)시큐어소프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8	(주)가비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29	(주)삼화네트웍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30	(주)에너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31	(주)비티씨정보통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32	(주)나노엔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3	마틴미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4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5	(주)제이엠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6	AP우주통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7	(주)모델라인이엔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8	(주)모라리소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39	(주)티에스엠홀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40	한국창업투자(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41	월드조인트(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42	(주)모티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43	(주)카프코씨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44	(주)솔빛텔레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45	(주)레드캡투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007년9월5일	제14차	의결 안건	246	(주)디유뱅크[구 (주)포레스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47	(주)영원무역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48	(주)좋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49	(주)한중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50	(주)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51	(주)솔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52	한국기술산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53	동아지앤엘(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54	동부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55	서울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5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57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보고 안건	18	2007년도 제2차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결과 보고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19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보고	회계감독1국	
			258	(주)헬리아텍 등 3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176	(주)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59	(가칭)한신정평가(주)의 신용평가업 허가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60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아이엔지자산운용(주)의 합병인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9월19일	제15차	의결 안전	261	'07 2/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262	우수씨엔에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3	(주)텍트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4	아이에스하이텍(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5	(주)굿이엠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6	(주)보더스티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7	(주)유티엑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8	(주)토비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69	(주)에스씨에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70	(주)디유하이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71	(주)대우인터내셔널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 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272	유씨아이콜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3	(주)한국외환은행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4	진양화학(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5	(주)젠컴이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6	(주)리노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7	엔빅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8	(주)세종로봇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79	(주)엠피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10월10일	제16차	의결 안건	280	(주)나노엔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81	화우테크놀로지(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82	(주)다스텍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2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8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8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증권감독과	조사1국 증권감독국
			28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증권감독과	조사1국 증권감독국
			287	(주)씨앤중공업[舊 (주)진도]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88	(주)코아크로스[舊 (주)매커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89	한국창업투자(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0	동보중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1	(주)무등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2	(주)중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3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4	신우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5	서일경영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6	충정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7	현대정보기술(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98	(주)텔레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99	(주)유비스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007년10월24일	제17차	의결 안건	300	(주)마스타테크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1	대한뉴팜(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2	동양철관(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3	한양디지텍(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4	(주)코어세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5	엔토리노(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6	(주)자강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07	(주)케이앤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08	(주)삼호F&G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09	(주)조이토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0	(주)이엔쓰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1	(주)국동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2	(주)디아만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3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4	한국화인케미칼(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5	(주)세안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16	(주)젠컴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317	(주)나노엔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318	(주)엔터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319	(주)디엠에스플렉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320	(주)월텍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20	2007년도 3/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조사1국 조사2국	
2007년 11월 21일	제18차	의결 안건	321	(주)한진중공업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2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23	블리스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324	'07 3/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304	(주)코어세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5	(주)삼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6	(주)에이엠에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7	(주)케이알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8	(주)마스타테크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29	(주)케드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30	이레전자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31	(주)나노엔텍 前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32	(주)나리지*온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33	(주)삼화네트웍스 과징금 부과 및 前 이사 이규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34	(주)에이에스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 11월 21일	제18차		335	(주)이앤이시스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36	(주)텔레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37	(주)케이씨티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38	(주)대한바이오링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39	(주)쓰리소프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40	(주)해인아이앤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41	(주)나래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42	(주)인티큐브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43	(주)나래원(舊 디지털웨이브테크놀러지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44	(주)경북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45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46	(주)아시아디벨로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47	(주)키이스트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348	샘표식품(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007년 12월 5일	제19차	보고 안건	21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개정) 보고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의결 안건	3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공시감독국
			3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공시감독국
			351	서울증권(주)과 서울자산운용(주)의 (가칭)서울자산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증권감독과 자산운용감독과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352	(가칭)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353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354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355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356	태화일렉트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57	오양수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58	넥서스투자(주) 등 2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5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360	한화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1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2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367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공시감독국
			368	(주)엔터원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369	(주)자연과환경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370	2007년 1/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감독국
			371	(주)신지소프트의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7년12월18일	제20차	의결 안건	372	(주)시큐리티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373	케이앤웨이브(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공시심사실
			321	(주)한진중공업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4	(주)엠앤에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5	(주)신명비앤에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6	(주)팬택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7	(주)엔블루와이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8	아이에스하이텍(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79	시큐리티코리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80	(주)포넷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81	(주)보더스티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82	한국화인케미칼(주)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시장감독과	조사1국
			383	(주)샤인시스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4	(주)디에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5	(주)엠파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6	KG케미칼(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7	(주)카이시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8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89	(주)큐리어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390	(주)카프코씨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조사2국
			391	(주)한신디앤피[舊 (주)아이브릿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2	(주)삼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3	세신(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4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5	에쓰-오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6	(주)고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97	(주)가로수닷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48	샘표식품(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398	(주)한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399	(주)삼화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400	산양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401	(주)코리아와이즈넷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402	회계감사기준 일부개정 승인안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보고 안건	22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일부개정 보고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2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24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	시장감독과	회계제도실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2008년1월30일	제1차	의결 안건	1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주) 지배주주변경 승인안	증권감독국	증권감독과
			2	에스엠엔파트너스제일차유한회사의 케이시아이증권(주) 지배주주 변경승인안	증권감독국	증권감독과
			3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주식선물업 겸영허가안	증권감독국	증권감독과
			4	(주)넷웨이브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1국	시장감독과
			5	네오웨이브(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1국	시장감독과
			6	(주)나자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1국	시장감독과
			7	(주)미광콘택트렌즈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1국	시장감독과
			8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전 직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	조사1국	시장감독과
			9	(주)이지에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0	(주)한글과컴퓨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1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2	(주)로케트전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3	(주)에너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4	코스피200 선물 0612월물 등과 그 대상자산간의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5	(주)이노비츠아이엔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16	(주)큐로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조사2국	시장감독과
		보고	1	2007년도 4/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조사1국, 조사2국	

2008년2월20일	제2차	안건	2	2007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조사1국, 조사2국, 공시심사실	
		의결 안건	17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8	(가칭)DH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19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 부개정세칙 승인안	자산운용감독과	자산운용감독국
			21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2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3	(주)포넛의 한맥선물(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유예안	증권감독과	증권감독국
			24	교보악사자동차보험(주)[舊 교보자동차보험(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 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5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6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7	(주)대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8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29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0	다산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1	인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1국
			32	(주)케드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 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33	(주)에코솔루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34	공인회계사 권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시장감독과	회계감독2국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부서	
			1	한국석유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2	(주)유니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3	케이엠에이치(주) 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 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운영정보팀	
			5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6	(가칭) 엘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7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8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9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0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2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4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 영인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 영인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16	(주)하나투어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08년 3월 26일

제1차

의결
안건

17	(주)에이블씨엔씨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18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19	2007년 2/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20	2007년 4/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21	페이퍼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2	동신건설(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3	(주)세라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4	시큐리티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5	(주)에당온라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6	세기상사(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7	(주)씨티엘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8	(주)모나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29	(주)에너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30	한성기업(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31	엠텍반도체(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32	(주)한솔교육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33	(주)메타바이오메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심사실
34	우리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35	(주)유아이에너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36	(주)바이오매스코리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37	(주)네티션닷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38	(주)청람디지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39	(주)파인디지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40	대한은박지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41	(주)파로스이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42	오양수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43	현대자동차(주) 이사 김동기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44	(주)오엘케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45	동화약품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46	(주)에이치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47	아이메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48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49	(주)조이토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0	(주)젠트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1	에버렉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2	(주)엔빅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3	선물거래법 제51조(해외선물거래)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4	현대상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5	(주)PW제네텍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6	(주)선우에스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7	(주)C&상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8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59	오양수산(주) 전 대표이사 김명환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공정시장과	회계제도실
08년 4월 8일	제2차	의결 안건	60	(주)한신디앤피 및 (주)한텔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61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62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63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08년 4월 23일	제3차	의결 안건	64	(주)삼화네트웍스 감리조치 관련 삼덕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이용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65	(주)미광콘택트렌즈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66	동아G&L(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67	(주)에스티씨라이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68	(주)에당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69	(주)다원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70	써니전자(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71	해원에스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72	(주)케이디미디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08년5월7일	제4차	의결 안건	2	삼성전자(주)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조치보고	공정시장과	
			3	2008년도 1/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공정시장과	조사1국
			73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정시장과	
			7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정시장과	
			7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규정(3개) 일부개정규정안	공정시장과	
			76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77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78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79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0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1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2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3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4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5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6	(가칭)한맥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한맥선물(주)의 (가칭)한맥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7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88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 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8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넷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08년5월21일	제5차	의결 안건	9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9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자본시장과	증권감독국
			92	(주)코어세스 등 6사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 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9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94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95	마이어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96	(주)에스씨에프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공시감독국
			97	성원건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98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99	(주)고려포리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100	(주)신지소프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101	(주)나리지*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102	(주)팬택앤큐리텔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103	(주)케드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1국
			104	현대5032KOSPI200푼트워드 등 34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 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05	엔디코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06	(주)BHK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07	대신벤처캐피탈(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08	(주)모헨즈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09	파라웰빙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10	(주)소리바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11	(주)디아만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12	(주)플러스프로핏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조사2국
			113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공정시장과	회계제도실
			114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안	공정시장과	회계제도실
		보고 안건	4	2007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회계제도실	
			115	(가칭)엠펙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감독국)	
			11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감독국)	
			117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감독국)	
			118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감독국)	
			119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0	(주)홍익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1	(주)양풍(舊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2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3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4	(주)도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5	(주)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126	(주)조이토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08년6월11일	제6차	의결 안건	127	오펜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28	(주)셀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29	(주)에이트픽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0	(주)래미안관광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1	대성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2	(주)지우아이앤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3	(주)강원레저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4	한옥초자(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5	삼협종합건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6	용마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7	강희건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8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39	(주)스마트시티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40	서도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41	(주)세종아이앤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42	(주)구미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143	경희강재(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보고	5	2008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공정시장과	회계감독2국

08년6월25일	제7차	안건	7	(주)학산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8	(주)이트로닉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공정시장과	회계감독1국
		의결 안건	144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45	현대피앤씨(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46	선물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과	
			1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과	
			1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과	
			149	증권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과	
			150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151	(주)엘로우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2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3	(주)비앤지스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4	(주)와이지-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5	대한은박지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6	울트라건설(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57	(주)오디코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58	엠텍반도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59	(주)쌍용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60	(주)코디너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61	롯데손해보험(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62	(주)유아이에너지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63	(주)만인에미디어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64	(주)엠피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65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66	(주)큐리어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67	위디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68	제이에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69	(주)나래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70	(주)파로스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71	(주)에코솔루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72	(주)코스모스피엘씨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73	(주)케이디이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174	엔디코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의결 안건	175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 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 (주)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서비스국
			176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서비스국
			177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서비스국
			178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서비스국

08년 7월 9일	제 8 차		179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서비스국
		보고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보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보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11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보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180	(주)코스모스피엘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81	아이메카(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1국
			182	(주)레드캡투어 및 에스넷시스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2국
			183	한국통신데이터(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2국
			145	현대피앤씨(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84	(주)에너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85	(주)글로포스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86	(주)브이에스에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2국
			187	동국실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88	(주)유성티에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89	(주)에이로직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90	S&T모터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 조사1국
			191	2007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제도실

08년7월23일	제9차	의결 안건	192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산운용과
			193	(가칭)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4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5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6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7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8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199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200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201	금융투자업규정안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2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4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선물업 허가 및 (가칭)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5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6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8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09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10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11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12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13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21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보고 안건	12	2008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자본시장조사1국 자본시장조사2국	
		의결 안건	215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공정시장과	
			216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공정시장과	
			217	한국선재(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18	(주)배명금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19	일진디스플레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20	(주)코어세스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21	(주)세라온홀딩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2국
			222	(주)바이오랜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2국
			223	(주)청람디지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24	(주)도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25	(주)코디너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26	(주)모빌탑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27	(주)해인아이앤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28	(주)에스피코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08년8월20일	제10차		229	(주)유성티에스아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0	아이메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1	(주)소예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2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3	(주)코리아토바코컴퍼니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4	STX엔파코(주)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5	월드파워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6	(주)비엔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7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8	(주)모코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39	(주)필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240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보고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14	2007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회계서비스1국장	
			241	(주)씨앤중공업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제도실
			242	(주)분당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1국
			243	메디에스앤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2국
			244	(주)에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2국

08년9월10일	제11차	의결 안건	245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회계서비스2국
			24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공정시장과	
			2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공정시장과	
			2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공정시장과	
			2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자본시장과	
			2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자본시장과	
			25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자본시장과	
			252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자산운용과(자산운용서비스국)	
08년9월24일	제12차	의결 안건	253	(주)다우데이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2국
			254	해외증권 발행 관련 83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2국
			255	대우6009 삼성전자 콜워런트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2국
			256	2008년 상반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제도실
			257	롯데관광개발(주)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기업공시제도실
			258	우수씨엔에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59	(주)도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0	태창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1	(주)엠피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2	(주)한신디앤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3	(주)비엔디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4	(주)이테크건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5	(주)신지소프트 주식에 대한 과징금 분납요청 처리안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 1국
		266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산운용과(금융지주서비스국)	
		267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금융지주서비스국)	
		268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서비스국)	

<첨부> 3-1.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07. 9. 1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 09:45 ~ 12:20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위 원 장 윤 용 로

 위 원 김 용 환

 위 원 최 혁

 위 원 김 문 철

4. 결석위원 위 원 송 용 순

- 의결안건 제262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263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264호 『아이에스하이텍(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265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266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안건내용을 설명함

제265호 관련

- 제258호 안건과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제258호 안건보다도 내용이 조잡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하여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공시하였다고 답변)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첨부> 3-2.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08. 5. 2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4:10~16: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위 원 장 이 창 용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최 혁

위 원 김 문 철

위 원 조 인 호

나.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04호 『○○○○ 등 34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조치안』, 제105호 『엔디코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106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107호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국장이 안건 내용을 설명함

제 104호 안건중에서

- 가장매매와 관련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가 여부를 질의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상장초기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편취하겠다는 목적성이 낮아 조치 수준을 낮추었다고 답변)

- 오히려 LP도입 초기 시스템이 완비가 안되어 이런 가장매매가 생긴 일로 이런 경우 처벌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 하겠다고 계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혐의를 제외하였지만 ○○씨의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이런 거래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초기에 비록 부당이득을 얻겠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매매거래의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장 심한 △△증권의 경우만 수사기관 통보를 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경고조치 수준으로 하였다고 답변)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첨부> 3-3.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08. 6. 2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14:00 ~ 17: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위 원 장 이 창 용

위 원 권 혁 세

위 원 김 문 철

위 원 조 인 호

□ 의결안건 제160호 『(주)코디너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161호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제162호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제163호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안건 내용을 설명함

제161호 안건중에서

- 단기차익 대상 직원들 범위에 운전수 서비스 센터 직원 등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과거 판례에서는 내부정보를 명백하게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단기매매차익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이 경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현재 단차제도는 원칙적으로 증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은 구분하지 않고 해당이 되면 모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은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4. 신용회복기금의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방안 및 향후 운용 계획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08.7.24)에 따라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2)하여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을 시행할 계획
 - '08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9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보와 관련
 - '08년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2천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SPC)에 대여한 자금으로 조달키로 확정('08.9.26)하였고,
 - '09년도 사업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게 될 경우, 동 잉여금을 금융회사로부터 기부 또는 출연을 유도하여 조달할 예정
- * 금년 정기국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자산을 금융회사에 배분토록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의될 예정

'07년 이후 신설된 증권사 내역을 요청(설립일, 자본금, 주요주주, '08.8말 영업현황, 최근일 재무제표)

□ 07년 이후 신설 증권사는 총 8개사로 모두 08.7.25일 금융위에서 승인되었으며, 요청하신 자본금 등 현황 일체를 제출합니다.

○ 다만, 요청자료 중 신설 증권사 재무제표는 아직 작성시점이 도래되지 않아* 기작성된 재무제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개시(08.7말) 후 영업분기 종료(08.9말) 및 분기보고서 제출기한(08.10월중)이 도래되지 않았음.

5.

07년 이후 신설증권사 현황

1. 신설 증권사 개황

(2008년 8월말 기준)

No.	증권회사명	인가일	자본금(백만원)	최대주주	임직원수	점포현황			해외 사무소
						서울	지방	계	
1.	아이비케이투자	08.7.25일	300,000	중소기업은행 100%	263	4	1	5	-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	08.7.25일	300,000	SC제일은행 100%	72	1	-	1	-
3.	케이티비투자	08.7.25일	352,984	권성문 10%	161	2	1	3	3
4.	엘아이지투자	08.7.25일	80,000	LIG손해보험(주) 100%	76	1	-	1	-
5.	토러스투자	08.7.25일	30,000	손복조 10%	87	2	2	4	-
6.	바로	08.7.25일	10,000	박준형 15%	23	1	-	1	-
7.	애플투자	08.7.25일	12,000	승은호, 코린교역 등 26%	40	2	-	2	-
8.	아이엔지	08.7.25일	15,555	ING Bank N. V. 100%	18	1	-	1	-
	합계		1,100,539		740	14	4	18	3

2. 신설 증권사 영업현황

No.	증권회사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	아이비케이투자	4	-	-	-	-	-	-	1	-	-	-	-	-	-	-	-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	1	-	-	-	-	-	-	-	-	-	-	-	-	-	-	-
3.	케이티비투자	2	1	-	-	-	-	-	-	-	-	-	-	-	-	-	-
4.	엘아이지투자	1	-	-	-	-	-	-	-	-	-	-	-	-	-	-	-
5.	토러스투자	2	2	-	-	-	-	-	-	-	-	-	-	-	-	-	-
6.	바로	1	-	-	-	-	-	-	-	-	-	-	-	-	-	-	-
7.	애플투자	2	-	-	-	-	-	-	-	-	-	-	-	-	-	-	-
8.	아이엔지	1	-	-	-	-	-	-	-	-	-	-	-	-	-	-	-
	합계	14	3	-	-	-	-	-	1	-	-	-	-	-	-	-	-

3. 신설 증권사 재무재표 : 신설사 영업개시 후 아직 영업분기가 종료(9월말, 공시는 10월 중순경)되지 않았음.

[illegible]

6.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추진과 관련한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의 공식적인 회의개최 여부 및 일시, 회의록 사본

- ☐ 산은으로부터 몇 차례 협의 진전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나,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의 공식적인 회의는 개최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 2009년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협회” 설립관련

- 설립위원회 구성내역(위원명단, 주요경력 등)
- 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절차, 용역금액, 선정결과 등 일체

< 설립위원회 구성내역 >

- 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 위원은 자통법 시행령부칙§4)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추천한2인,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가 추천한 각 1인(3인) 등 5인으로 구성(08.8.4)하였음

추천기관	위 원	주요 경력
금융위원장	윤계섭(63세)	現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前 금개위 위원
	김건식(53세)	現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前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증권업협회	최운열(58세)	現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前 증권협회 공익이사
자산운용협회	최흥식(56세)	現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前 금융연구원장
선물협회	황선웅(57세)	現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 前 선물협회 공익이사

<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관련 >

- 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2개부문 [①회계(자산실사) 및 법무 부문 ②통합협회 운영체계 설계 부문] 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 용역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일반공개입찰 통합대상협회와 기 용역계약 체결 업체 배제 설립위원회 위원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것으로 알고 있음

< 용역업체 선정결과 및 용역금액 >

용역분야	선정업체	용역금액
회계(자산실사)· 법무 부문	법무법인태평양, 안진회계법인(컨소시움)	365백만원
통합협회 운영체계 설계 부문 (지배구조, 조직, 비전 등)	Deloitte Consulting	599.5백만원

* 자료원 : 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허태열 의원	32. 06-08년 8월말 현재, 여론조사 내역 - 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관, 계약방식	795
	33.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796
현경병 의원	1. '07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처리결과	801
	2. 08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802
	3. 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주요정책과제	821
	4.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822
	5. 최근 3년간 자체 인사징계위원회 개최현황	840
	6. 최근 3년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841
	7. '06년도 이후 3급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 연도별 퇴직자수와 재취업자 수 - 퇴직 직전직위와 담당업무, 재취업 업체 및 직위	844
	8. 08년 민원접수현황(접수일, 내용, 처리결과 등 포함)	845
	9. '08년도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제출자료 일체	846
홍재형 의원	1. 2007년 6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891
	2. 2008년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내역 및 의사록 사본	891
	3. 코디너스, 아이에스하이텍, 엔디코프 관련 증권선 물위원회 의사록 사본	891
	4. 신용회복기금의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방안 및 향후 운용 계획	935
	5. '07년 이후 신설된 증권사 내역을 요청(설립일, 자 본금, 주요주주, '08. 8월말 영업현황, 최근일 재무제표)	936
	6.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추진과 관련한 금융 위원장과 산업은행장의 공식적인 회의개최 여부 및 일시, 회의록 사본	939
	7. 2009년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협회” 설립관련 - 설립위원회 구성내역(위원명단, 주요경력 등) - 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 절차, 용역금액, 선정결과 등 일체	940